2026.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부처별 V)

보 건 복 지 위 원 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성 평 등 가 족 위 원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http://budget.na.go.kr

2026.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부처별 Ⅴ)

보 건 복 지 위 원 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성 평 등 가 족 위 원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http://budget.na.go.kr

CONTENTS

보 건 복 지 위 원 회

❖ 보건복지부

Ⅰ. 개　관 ····· 3

1. 결산 개요 ····· 3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 9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0

Ⅱ. 사업별 검토 ····· 12

【총　괄】

1.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기금화를 통한 재정 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필요 ····· 12

【일반회계】

<세　입> ····· 30

2. 기타재산이자수입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의 연례적인 반납 지연 개선 필요 ····· 30

<세 출> ····· 34

3.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2회계연도 연속 예비비 배정 지양 필요 ····· 34

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지원 사업: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 미편성 지양 필요 ····· 38

5.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R&D) 사업: 철저한 사업 계획 수립으로 예산 낭비 방지 필요 ····· 42

6.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사업: 보조금 교부 시 면밀한 사전 검토 필요 ····· 47

7.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 「국가재정법」에 반하는 예비비 이월 지양 필요 ····· 49

8. 기초연금 지급 사업: 타 사업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연례적 이·전용 방지 필요 ····· 52

9.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및 개도국개발협력(ODA) 사업: 출연금 집행잔액의 연례적 과다 발생 방지 필요 ····· 55

10. 발달·중증장애인 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 사업: 교부된 보조금의 다년도 이월(재재재이월) 지양 필요 ····· 59

11.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 의료취약지 및 주요 진료과목에 대한 집중 지원 필요 ····· 63

12.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 사업: 연례적 이용을 통한 사업비 조달 방지 필요 ····· 67

13. 의료급여 사업: 미지급금 발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 7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 출> ····· 76

14. 긴급돌봄 지원 사업: 지방비 확보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추경 편성으로 인한 추경 증액분 전액 불용 지양 필요 ····· 76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손익계정)】

<세 입> ····· 79

15. 전년도세계잉여금: 세계잉여금 과소 계상에 따른 일반회계전입금 과다 수납 방지 필요 ····· 79

<세 출> ····· 82

16. 국립정신건강센터 수입대체경비 사업: 초과수입으로 지출이 불가능한 인건비성 경비 집행 지양 필요 ····· 82

17. 국립재활원 연구, 교육 및 실습 사업: 연례적 초과지출승인 규모 과다 발생 방지 필요 ····· 86

18. 국립나주병원 교육 및 실습 수입대체경비 사업: 예산 미편성 사업 수행 개선 필요 ····· 89

【국민건강증진기금】

<지 출> ····· 92

19. 혈액원 현대화 지원 사업: 부적절한 보조금 교부로 인한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방지 필요 ····· 92

【응급의료기금】

<지 출> ····· 95

20.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 보조사업 수행 여건에 대한 검토 미흡으로 인한 사업 지연 방지 필요 ····· 95

21.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 권역외상센터의 법령상 인력기준 미충족 문제 개선 필요 ····· 98

22.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 사업: 응급원격협진망 앱의 폐기 등 재검토 필요 ····· 103

【기 타】

23.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 108

❖ 식품의약품안전처

Ⅰ. 개 관 ····· 110

1. 결산 개요 ····· 110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 114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15

Ⅱ. 사업별 검토 ····· 116

【일반회계】

<세 입> ····· 116

1. 과태료 및 가산금: 재산조사 및 체납처분 등 적극적인 징수 노력 필요 ····· 116
2. 기타재산이자수입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의 연례적인 반납 지연 개선 필요 ····· 120

<세 출> ····· 124

3. 스마트 HACCP 선도모델 개발 사업: 스마트 HACCP 등록률 제고를 위한 다각적 유인책 마련 필요 ····· 124
4. 의약품등 현지실사 사업: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지출승인 규모 최소화 필요 ····· 128

5.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사업: HACCP 인증 수수료 수입의 국고 납입 등 개선 필요 ····· 131
6.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기술지원 및 기능성원료 재평가 사업: 스마트 GMP 구축 실적 제고 필요 ····· 135
7. 송무업무지원 사업: 소송 패소율 증가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필요 ····· 138
8.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 사업: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 활성화 필요 ····· 141

【기 타】

9.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 145

❖ 질병관리청

Ⅰ. 개 관 ····· 146

1. 결산 개요 ····· 146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 150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51

Ⅱ. 사업별 검토 ····· 152

【일반회계】

<세 출> ····· 152

1.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 연내 집행 가능성을 감안한 보조금 교부 필요 ····· 152
2.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R&D) 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한 예산 편성 필요 ····· 156

【응급의료기금】

<지 출> ····· 160

3.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관리 사업: 다인 병실의 1인 병실전환 필요 ····· 160

【국민건강증진기금】

<지 출> ····· 165

4. 국가결핵예방 사업: 시험연구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개선 필요 ····· 165

5. 암 역학조사 사업: 사업 실적 전무에 따른 사업 체계 개편 필요 ····· 171

6. CJD 부검센터 운영 사업: 유가족의 부검 동의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175

7.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 사업: 실수요를 감안한 계획 수립 필요 ····· 179

【기 타】

8.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18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부

Ⅰ. 개 관 ····· 187

1. 결산 개요 ····· 187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 192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94

Ⅱ. 사업별 검토 ····· 196

【총 괄】

1. 기타경상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정산액의 조속한 수납 필요 ····· 196
2. 연구개발비 제재부가금 및 정산금: 미수납 제재부가금 및 정산금의 조속한 수납 필요 ····· 200
3. 추가경정예산 사업: 연내 집행을 위한 관리 강화 필요 ····· 204
4.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재이월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 208
5. 에너지 관련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소관 변경 후 미정비 규정의 조속한 정비 필요 ····· 213
6. 공공기관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공공기관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의무설치규정 준수 여부 관리 강화 필요 ····· 216
7. 수자원공사 출자 수도사업: 수도사업의 출자 분담비율 준수 필요 ····· 219

【일반회계】

<세 출> ····· 223

8. 치수연구개발: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하천법」상 기한 준수 필요 ····· 223
9.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 필요 ····· 226

【환경개선특별회계】

<세 출> ····· 229

10. 세입징수비용교부금: 법령상의 시기 및 액수를 준수한 세입징수비용 교부 필요 ····· 229
11.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 국제협상 대응: 선행용역의 수행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후행용역 예산 편성 필요 등 ····· 233
12. 국립공원공단 출연: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된 대형헬기 도입 지연 문제 등 ····· 237
13.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운영: 비공동주택 층간소음 지원의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등 ····· 243
14. 미세먼지 대응 국제협력: 내역사업에 부합하는 고용부담금 집행 필요 ····· 248
15. 대기환경연구소 확충: 시설 용도 사전 확인 후 사업 추진 필요 ····· 251
16. 환경연구정보화기반구축(정보화): 필수 소요 예산 미편성에 따른 연례적 예산 조정 부적절 ····· 255
17.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보조금 재이월 방지를 위한 관리 필요 ····· 259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투자계정)】

<세 출> ····· 262

18. 무공해차 보급 사업: 연례적 집행부진 해소를 위한 사업 관리 강화 필요 등 ····· 262

19.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집행부진 해소를 위한 사업 관리 강화 필요 등 ····· 270

20.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 조속한 장비 도입을 통한 실질적인 센터의 업무수행 필요 ····· 280

【전력산업기반기금】

<지 출> ····· 286

21.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 계획에 따른 발전원별 보급을 위한 관리 강화 필요 ····· 286

22.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사업: 발전원별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필요 ····· 293

23. 풍력 현장기술 인력양성 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규정의 적시 마련 필요 ····· 296

【기후대응기금】

<수 입> ····· 300

24. 기타재산이자외수입: 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수입 확보 노력 필요 ····· 300

<지 출> ····· 304

25. 녹색정책금융활성화사업: 이차보전사업 취지에 부합한 예산 편성 및 집행 필요 ····· 304

【기 타】

26.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 306

❖ 기 상 청

Ⅰ. 개 관 ····· 308

1. 결산 개요 ····· 308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 312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312

Ⅱ. 사업별 검토 ····· 313

【총 괄】

1. 기상청 인건비: 총액인건비 관련 지침의 취지에 부합한 집행 필요 ····· 313

【일반회계】

<세 출> ····· 318

2. 슈퍼컴 구축 및 유지관리: 도입 지연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필요 ····· 318
3. 도로기상관측망 운영: 도로기상관측장비의 장애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필요 ····· 322
4.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실제 운영 현황을 반영한 공공요금 편성 필요 ····· 325
5.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기상청)(R&D): 위성개발계획 관리 강화 필요 ····· 328
6. 항공항행 기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실제 집행 상황을 반영한 항공기 관측자료 수집비용 편성 필요 ····· 330

【기 타】

7.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333

❖ 고용노동부

Ⅰ. 개 관 ····· 334

1. 결산 개요 ····· 334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 339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341

Ⅱ. 사업별 검토 ····· 342

【일반회계】

<세 출> ····· 342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집행 저조 등 ····· 342
2. 내일배움카드(일반): 훈련기관의 수도권 집중 개선 필요 ····· 349
3.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국가자격검증시험 관리 미흡 등 ····· 352
4. 숙련기술장려사업: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건립 사업관리 강화 필요 ····· 357
5.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중 청년 및 건설업 퇴직자 분야 사업 관리 미흡 등 ····· 360
6.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운영지원: 고용노동교육 관리 강화 필요 ····· 367
7.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 외국인근로자 공공주거시설 지원 사업 관리 강화 필요 ····· 369
8. 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 송무수행 경비의 연례적 전용 문제 ····· 372

【고용보험기금】

<지 출> ····· 374

9.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연례적 불용액 과다 문제 ····· 374
10.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실근로시간 단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및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제도개선 모색 필요 ····· 378

11.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383

【근로복지진흥기금(중소복지계정)】

<지 출> ····· 387

12.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내실 있는 융자 사업을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 387

【근로복지진흥기금(신용보증사업계정)】

<지 출> ····· 392

13.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 대위변제 후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 필요 ····· 39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지 출> ····· 397

14. 산재보험급여: 업무상 질병의 평균 승인 처리기간 개선 필요 ····· 397

15. 산재병원지원: 경영성과 개선 노력 필요 ····· 400

16. 산재보험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 국가핵심정보시스템 재해복구센터 구축 지연에 따른 사업관리 강화 필요 ····· 404

17.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 온열질환 예방장비 설치지원 사업의 관리 미흡 ····· 407

18. 산재예방시설 건립 사업: 공공안전체험교육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 노력 필요 ····· 411

【임금채권보장기금】

<지 출> ····· 414

19. 대지급금 지급 사업: 대지급금 회수율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414

20. 체불청산지원 융자 사업: 체불사업주 미상환 융자금 회수율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41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수 입> ····· 421

21. 장애인고용기금: 장애인 고용 지원 정책 확대 필요 ····· 421

【기 타】

22.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 42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 국토교통부

Ⅰ. 개 관 ····· 427

1. 결산 개요 ····· 427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 432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434

Ⅱ. 사업별 검토 ····· 436

【총 괄】

1.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검토 - 기술료 수입이 없는 R&D기술의 활용 가능성 점검 및 연구중단 과제 발생 방지 필요 등 ····· 436

【일반회계】

<세 입> ····· 443

2.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재산이자수입: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집행 잔액의 조속한 정산 및 수납 필요 ····· 443

<세 출> ····· 448

3. 주거급여지원 사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정산금 처리 시정 필요 등 ····· 448
4.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센터 운영지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무위탁 사업: 분쟁조정절차의 법정 처리기간 준수 필요 등 ····· 454
5. 주택 및 주거동향조사, 주택공시가격조사 사업: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추진 과정에서 주택가격 격차 문제를 고려할 필요 ····· 460

6. 산악벽지용친환경전기열차기술개발(R&D) 사업: 연구 기획 부실과 사업대상지의 환경성 검토 미흡으로 인한 연구개발사업 중단과 예산 낭비 주의 필요 ····· 466
7. 국토안전관리원출연 사업: 도로지반조사장비의 교체 소요를 고려한 예산 운용 효율성 제고 필요 ····· 474
8. 건설 및 지하안전관리 사업: 지반탐사 실적과 지반침하 사고현황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 시정 필요 ····· 477
9. 건설공사 사후평가지원센터 운영 사업: 공공기관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이행조치 실적 제고 필요 ····· 479
10.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 도시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스마트 솔루션 발굴·확산 필요 ····· 483
11. 제로에너지건축 신산업 육성 사업: 민간부문 건축물의 인증 실적 제고 필요 ····· 486
12. 국토교통 혁신펀드 사업: 혁신펀드 1차년도 투자집행률 개선 필요 ····· 490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세 출> ····· 493

13. 고속도로건설 사업: 세종-청주고속도로, 울산외곽고속도로, 계양-강화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연도 중 과도한 예산 감액을 지양할 필요 ····· 493
14. 일반국도건설 사업: 반복되는 집행 부진 및 과다한 전용·내역변경 시정 필요 ····· 497

【교통시설특별회계(철도계정)】

<세 출> ····· 500

15.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 철도용량 확충 효과와 관련된 과주여유거리 문제의 조속한 해결 필요 ····· 500

16. GTX 운영지원 사업: 손실보전금 최소화를 위한 GTX-A 철도 공정관리 강화 필요 ····· 504

【교통시설특별회계(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세 출> ····· 507

17. 수송차량구입, 도시철도노후차량개선지원 사업: 철도차량 납품 관리 개선 필요 ····· 507

【교통시설특별회계(공항계정)】

<세 출> ····· 511

18.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미흡한 사업 계획과 입찰 준비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및 공사비 증가 문제 개선 필요 ····· 511

19.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운영 사업: 사업 추진 경과를 고려한 적정 공단 조직 규모 관리 필요 ····· 516

【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체계관리계정)】

<세 출> ····· 520

20.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대중교통 이용 촉진 효과 확인 및 점검 필요 ····· 52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 출> ····· 524

21.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공실 문제에 대한 선제적 조치 필요 ····· 524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

<수 입> ····· 528

22. 정부출자주식매각대: 출자금 회수 실적 제고 필요 ····· 528

<지 출> ····· 530

23.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사업: 공사의 적정 보증실적 등을 고려한 출자 필요 ····· 530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지 출> ····· 533

24. 주택정비사업(융자): 정비사업 수요를 반영한 융자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533

【기 타】

25.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 538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Ⅰ. 개 관 ····· 540

1. 결산 개요 ····· 540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 543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544

Ⅱ. 사업별 검토 ····· 54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세 출> ····· 545

1. 기본경비(비총액) 사업: 기본경비 목적에 부합하는 용역과제 추진 필요 ····· 545
2.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사업: 사업 추진 경과를 반영한 예산 편성 필요 등 ····· 548
3.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사업: 조속한 사업 내용 확정 필요 ····· 553
4.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과의 연계성 확보 필요 ····· 558

【기 타】

5.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 563

❖ 새만금개발청

Ⅰ. 개 관 ····· 564

1. 결산 개요 ····· 564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 568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569

Ⅱ. 사업별 검토 ····· 570

【일반회계】

<세 입> ····· 570

1. 토지대여료: 입주기업 경영악화로 발생하는 미수납 문제 해소 필요 ····· 570

<세 출> ····· 574

2. 국립새만금 간척박물관 운영 사업: 예산 전용을 통한 간척박물관 사업비 집행을 지양할 필요 ····· 574
3. 새만금산단 기업성장센터 건립 사업: 사업 추진경과를 고려한 적정 예산 편성 검토 ····· 578

【기 타】

4.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582

성 평 등 가 족 위 원 회

❖ 성평등가족부

Ⅰ. 개 관 ····· 587

1. 결산 개요 ····· 587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 592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593

Ⅱ. 사업별 검토 ····· 594

【총 괄】

1. 기타경상이전수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의 신속한 수납 및 세입추계 보완 필요 ····· 594

【일반회계】

<세 출> ····· 597

2. 성별영향평가 운영: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관리 및 특정성별영향평가 환류체계 강화 필요 ····· 597

【일반회계】

<세 출> ····· 602

3. 생리용품 지원 사업: 신청률 중심 성과관리 보완 및 실제 이용성과 제고 필요 ····· 602

4.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사업: 미디어 과의존 치료·치유서비스 연계 강화 필요 ····· 605
5. 아이돌봄 지원 사업: 아이돌보미 공급·연계관리 및 영아종일제 집행관리 강화 필요 ····· 609
6.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사업: 사업출연금 실집행 및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관리 강화 필요 등 ····· 61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 출> ····· 620

7. 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 직업교육훈련 취업성과 및 새일여성인턴 고용유지 관리 강화 필요 ····· 620

【양성평등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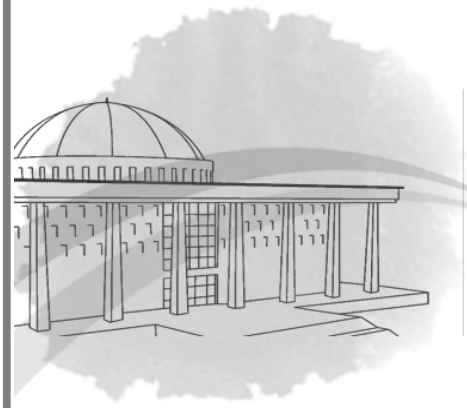
<지 출> ····· 625

8.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사업: 부정수급 환수율 제고 및 수급 자격변동 관리 강화 필요 ····· 625
9.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다문화가구 자녀 연령 변화에 따른 서비스 구조 점검 필요 ····· 628

【기 타】

10.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632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10조 2,468억 9,700만원(10.2%)이 많은 111조 47억 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조 6,602억 4,200만원(2.5%)이 증가됨.[1)]

[2025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057,628	1,057,628	1,126,096	68,468	1,395,718	1,395,718	1,059,061	△336,657	△67,035
기 금	91,316,163	91,316,163	107,218,369	15,902,206	99,362,092	99,362,092	109,945,645	10,583,553	2,727,276
총수입	92,373,791	92,373,791	108,344,465	15,970,674	100,757,810	100,757,810	111,004,707	10,246,897	2,660,242

2025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1,213억 500만원(0.1%)이 많은 126조 5,771억 9,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조 9,132억 400만원(4.8%)이 증가됨.

문의: 02-6788-5691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5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74,179,358	74,179,358	72,180,135	△1,999,223	72,368,032	72,034,725	72,306,144	271,419	126,009
기 금	48,198,563	48,668,481	48,483,856	△184,625	53,122,912	54,421,165	54,271,052	△150,113	5,787,196
총지출	122,377,921	122,847,839	120,663,991	△2,183,848	125,490,944	126,455,890	126,577,196	121,305	5,913,204

나.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조 5,544억 3,300만원으로, 1조 7,173억 7,3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조 2,151억 6,900만원이 수납(수납률 70.8%)되고, 5,022억 4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5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1,279,754	1,279,754	-	1,279,754	1,371,885	936,447	435,438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755	755	-	755	1,553	1,553	-	-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755	755	-	755	1,553	1,553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	-	-	791	168	624	-
- 투자계정	-	-	-	-	791	168	624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3,205	73,205	-	73,205	151,514	88,562	62,953	-
- 지역지원계정	73,205	73,205	-	73,205	102,737	56,162	46,575	-
- 지역자율계정	-	-	-	-	48,303	31,926	16,377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	-	-	362	361	-	-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	-	-	113	113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재활원)	59,818	59,818	-	59,818	57,624	57,401	222	-
- 손익계정	55,521	55,521	-	55,521	50,901	50,678	222	-
- 자본계정	4,297	4,297	-	4,297	6,723	6,723	-	-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정신건강센터)	53,577	53,577	-	53,577	51,332	50,033	1,299	-
- 손익계정	52,426	52,426	-	52,426	50,079	48,780	1,299	-
- 자본계정	1,151	1,151	-	1,151	1,252	1,252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공주병원)	19,124	19,124	-	19,124	18,416	18,102	314	-
- 손익계정	18,312	18,312	-	18,312	17,530	17,216	314	-
- 자본계정	812	812	-	812	886	886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나주병원)	26,200	26,200	-	26,200	27,249	26,462	787	-
- 손익계정	25,093	25,093	-	25,093	26,066	25,280	787	-
- 자본계정	1,107	1,107	-	1,107	1,183	1,183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부곡병원)	23,530	23,530	-	23,530	19,733	19,324	409	-
- 손익계정	22,512	22,512	-	22,512	19,323	18,914	409	-
- 자본계정	1,018	1,018	-	1,018	410	410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춘천병원)	18,470	18,470	-	18,470	17,277	17,118	159	-
- 손익계정	16,043	16,043	-	16,043	14,000	13,841	159	-
- 자본계정	2,427	2,427	-	2,427	3,277	3,277	-	-
합 계	1,554,433	1,554,433	-	1,554,433	1,717,373	1,215,169	502,204	-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73조 279억 7,000만원으로, 72조 7,684억 4,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6%)되고 216억 4,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378억 8,2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71,004,819	70,661,163	5,827	-	514,160	71,181,150	70,953,788	19,187	208,17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623,360	1,633,709	994	-	1,908	1,636,611	1,632,493	40	4,078
- 지역지원계정	1,013,283	1,023,632	994	-	1,908	1,026,534	1,022,416	40	4,078
- 지역자율계정	594,457	594,457	-	-	-	594,457	594,457	-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3,121	3,121	-	-	-	3,121	3,121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12,499	12,499	-	-	-	12,499	12,499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재활원)	59,818	59,818	3,049	3,383	-	66,250	57,120	1,950	7,180
- 손익계정	55,521	55,521	344	3,383	-	59,248	50,543	1,790	6,915
- 자본계정	4,297	4,297	2,705	-	-	7,002	6,577	160	26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정신건강센터)	53,577	53,577	397	1,187	-	55,160	49,217	234	5,709
- 손익계정	52,426	52,426	397	1,187	-	54,009	48,190	175	5,645
- 자본계정	1,151	1,151	-	-	-	1,151	1,027	59	6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공주병원)	19,124	19,124	108	-	-	19,232	17,209	-	2,024
- 손익계정	18,312	18,312	-	-	-	18,312	16,358	-	1,954
- 자본계정	812	812	108	-	-	920	850	-	70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나주병원)	26,200	26,200	174	214	-	26,587	24,330	206	2,052
- 손익계정	25,093	25,093	-	214	-	25,307	23,317	-	1,990
- 자본계정	1,107	1,107	174	-	-	1,281	1,013	206	62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부곡병원)	23,530	23,530	214	77	-	23,821	18,806	16	4,999
- 손익계정	22,512	22,512	19	77	-	22,608	18,485	-	4,123
- 자본계정	1,018	1,018	195	-	-	1,213	321	16	876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춘천병원)	18,470	18,470	688	-	-	19,158	15,485	8	3,665
- 손익계정	16,043	16,043	-	-	-	16,043	12,933	8	3,102
- 자본계정	2,427	2,427	688	-	-	3,115	2,552	-	563
합 계	72,828,898	72,495,591	11,451	4,860	516,068	73,027,970	72,768,448	21,641	237,882

주) 총계 기준

다. 기금 결산

2025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182조 7,579억 9,800만원으로, 243조 4,945억 6,7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243조 2,381억 8,4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9%)되고, 2,559억 6,000만원은 미수납되어 4억 2,2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				
국민연금기금	177,569,451	177,569,451	238,371,796	238,320,164	51,210	422
국민건강증진기금	4,540,531	4,548,486	4,513,950	4,314,445	199,504	-
응급의료기금	640,061	640,061	608,821	603,576	5,245	-
합 계	182,750,043	182,757,998	243,494,567	243,238,184	255,960	422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182조 7,763억 300만원으로, 243조 2,381억 8,400만원이 지출(집행률 133.1%)되고 92억 1,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4,932억 1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국민연금기금	177,569,451	177,569,451	15,985	177,585,436	238,320,164	4,574	17,988
국민건강증진기금	4,540,531	4,548,486	1,685	4,550,171	4,314,445	4,329	234,598
응급의료기금	640,061	640,061	634	640,695	603,576	308	240,615
합 계	182,750,043	182,757,998	18,305	182,776,303	243,238,184	9,211	493,201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5회계연도 말 기준 보건복지부 자산은 전년 대비 244조 1,273억 9,300만원이 증가된 1,463조 1,213억 5,100만원으로, 이는 금융자산이 244조 2,230억 7,900만원 증가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4,763억 8,600만원 감소된 6조 8,592억 7,400만원으로 차입부채 4,246억 5,100만원의 감소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244조 6,037억 7,900만원이 증가된 1,456조 2,620억 7,700만원임.

2025회계연도 보건복지부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138조 7,476억 2,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조 9,191억 3,600만원 증가되었으며, 재정운영결과는 32조 2,639억 7,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조 3,394억 500만원 감소됨.

[2025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 (A)	2024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1,463,121,351	1,218,993,958	244,127,393	20.0
		금융자산	1,459,173,814	1,214,950,735	244,223,079	20.1
		유·무형자산	3,275,521	3,323,154	△47,633	△1.4
		기타자산	672,016	720,069	△48,053	△6.7
	부 채		6,859,274	7,335,660	△476,386	△6.5
		차입부채	6,822,716	7,247,367	△424,651	△5.9
		충당부채	-	51,735	△51,735	△100.0
		기타부채	36,558	36,558	-	-
	순자산		1,456,262,077	1,211,658,298	244,603,779	20.2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138,747,626	136,828,490	1,919,136	1.4
	재정운영순원가		99,024,441	99,288,867	△264,426	△0.3
	재정운영결과		32,263,972	34,603,377	△2,339,405	△6.8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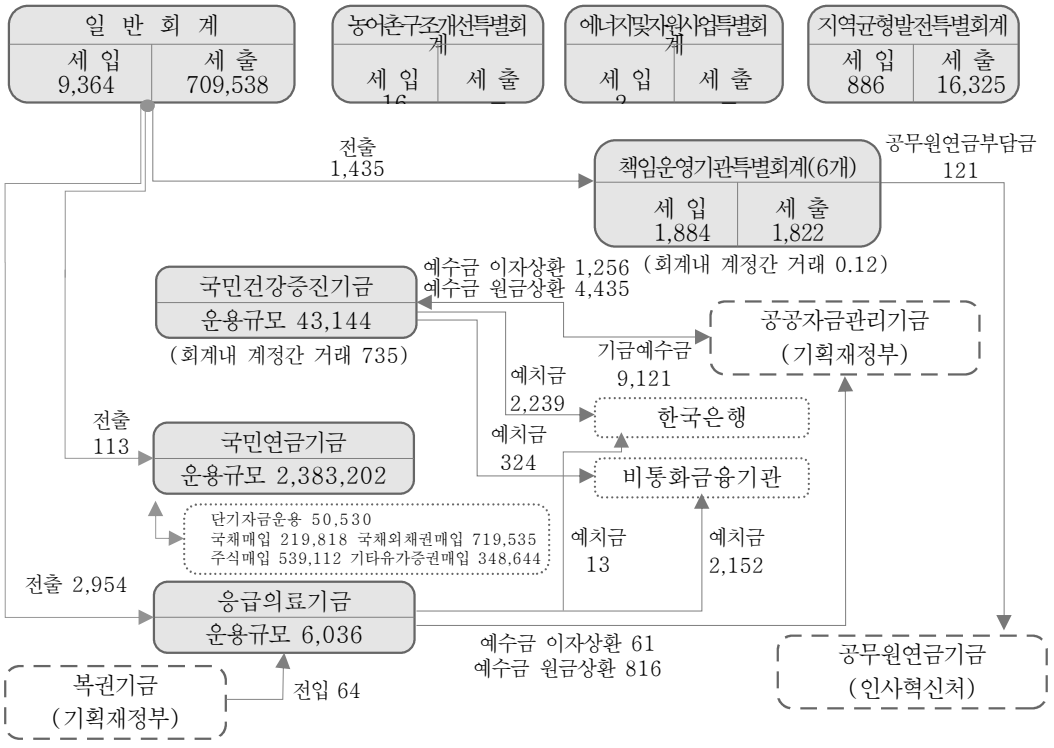
2025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재정은 일반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등 5개 회계와 국민연금기금·국민건강증진기금 및 응급의료기금 등 3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1,435억원, 국민연금기금으로 113억원, 응급의료기금으로 2,954억원이 각각 전출되었고,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121억원이 전출되었음.

다음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9,121억원이 예수되었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수금 원금 4,435억원, 이자 1,256억원이 상환되었음. 또한 복권기금에서 응급의료기금으로 64억원이 전입되었으며, 응급의료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수금 원금 816억원, 이자 61억원이 상환되었음.

[2025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재정흐름도]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기본 생활보장 강화,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통한 장애인 자립역량 강화,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지역사회 돌봄 등 복지 기반 강화, 의료보장 체계 및 건강정책 기반 구축 등을 2025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총 486개의 세부사업에서 아동·노인·장애인·저소득층 지원, 국민의 평생건강 지원, 의료보장 확대 등을 수행하였음.

202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그 재원이 준조세 성격의 보험료 수입과 정부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관련 주요 의사결정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민주적 통제 및 책임성 확보에 미흡하므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기금화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둘째, 보건복지부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 및 시범사업 등 각종 정부 정책을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 보장이라는 건강보험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재정 지출의 일관성과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므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셋째,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예산에 이어 2025년도 예산에도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고 연초 예비비 배정 등을 통해 사업비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예비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예산 운용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넷째, 보건복지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것을 전제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지원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아 예비비와 이용 등을 통해 관련 사업비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부적절한 사례이므로, 법률 개정을 전제로 관련 사업비를 계상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의사과학자 글로벌 공동연구지원 등 적정성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므로, 보건복지부는 보다 철저한 사업 계획 수립으로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

의할 필요가 있음.

여섯째, 보건복지부는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의 예비비 422억 2,000만원 중 집행잔액 108억 8,300만원을 「국가재정법」에 반하여 이월하였으므로,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한 사업비 관리가 필요함.

일곱째, 시니어의사의 33.3%는 의료취약지가 아닌 지역에서 근무하고 시니어의사의 52.4%가 주요 진료과목 이외의 진료과목을 진료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므로, 보건복지부는 지역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사업 목적에 보다 부합하도록 의료취약지 및 주요 진료과목에 대한 집중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여덟째, 보건복지부는 사업연도 중간에 모자의료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사전절차 이행과 지방비 부담 가능성 등 보조사업 수행 여건에 대한 검토 미흡으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비 대부분을 집행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반하는 부적절한 사례이므로, 철저한 사업 계획 수립과 엄격한 사전 검토를 통해 보조금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홉째, 17개 권역외상센터 중 법령상 인력기준 미충족 센터가 4개소이고 이 중 3개소는 2년 이상 그 기준에 미달함에도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률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시정명령 등 재재조치를 실시하고 외상환자 진료 역량 확보를 위한 권역외상센터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열째, 취약지 응급원격협진망을 사용하는 응급의료기관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응급원격협진망 앱을 통한 협진 실적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므로, 보건복지부는 응급원격협진망 활성화를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활용도가 저조한 응급원격협진망 앱은 타당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폐기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기금화를 통한 재정 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필요

가. 개 요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 및 건강 증진 등을 위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사회보험제도이고,[2]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사회보험제도임.[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4]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5]을 근거로 건강보

2)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제13조(보험자)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업무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2.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부과·징수
5.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장기요양보험) ②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
③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하 “장기요양보험가입자”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하여 보험급여 및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있음.

건강보험의 주요 수입·지출 구조를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보수월액의 7.19%(2026년 기준)를 보험료로 징수하고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정부지원금을 받아 보험급여비 및 관리운영비로 지출하고 있음.

[건강보험의 주요 수입·지출 구조]

구 분		주요 내용
수입	보험료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보험료 (보수월액 대비 건강보험료율: 2025년 7.09%, 2026년 7.19%)
	정부지원금	- 일반회계: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 국민건강증진기금: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 (단, 당해연도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 한도)
지출	보험급여비	의료행위, 치료재료 등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분
	관리운영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관운영비 등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의 주요 수입·지출 구조를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의 13.14%(2026년 기준)를 보험료로 징수하고 일반회계에서 정부지원금을 받아 장기요양급여비 및 관리운영비로 지출하고 있음.

제8조(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①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는「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료”라 한다)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장기요양보험의 주요 수입·지출 구조]

구 분		주요 내용
수입	보험료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보험료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2025년 12.95%, 2026년 13.14%)
	정부지원금	- 국고지원금(일반회계): 당해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 의료급여부담금(일반회계): 인정자수, 이용률, 1인당 급여비 등 기준 산정
지출	장기요양 급여비	장기요양 수급자의 재가급여, 시설급여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재정 부담분
	관리운영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관운영비 등

주 1) 정부지원금: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급여부담금 포함
2) 의료급여부담금: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노숙인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2025년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출이 수입을 초과함에 따라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하였고, 2021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병원 이용 감소 등의 영향으로 당기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이후 흑자 규모가 2023년까지 증가하다가 2024년부터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2016~2025년 건강보험 재정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수 입	557,195	579,990	621,159	680,643	734,185	804,921	887,773	949,113	990,870	1,028,585
- 보험료	473,065	500,099	536,415	587,428	624,849	692,270	765,538	815,180	839,520	872,776
(증가율)	(7.4)	(5.7)	(7.3)	(9.5)	(6.4)	(10.8)	(10.6)	(6.5)	(3.0)	(4.0)
- 정부지원금	70,974	67,839	70,802	77,803	92,283	95,720	104,992	109,702	121,658	124,913
(정부지원율)	(15.0)	(13.6)	(13.2)	(13.2)	(14.8)	(13.8)	(13.7)	(13.5)	(14.5)	(14.3)
- 기 타 수 입	13,156	12,052	13,942	15,412	17,053	16,931	17,243	24,231	29,692	30,896
총 지 출	526,339	572,913	622,937	708,886	737,716	776,692	851,482	907,837	973,626	1,023,589
- 보험급여비	510,541	555,374	605,896	690,429	709,524	766,021	831,662	887,961	937,685	1,016,650
(증가율)	(9.8)	(8.8)	(9.1)	(14.0)	(2.8)	(8.0)	(8.6)	(6.8)	(5.6)	(8.4)
- 선지급					8,767	△8,756	△2		14,844	△14,844
- 기타사업비 등	15,798	17,539	17,041	18,457	19,425	19,427	19,822	19,876	21,097	21,783

(단위: 억원,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수지	- 당기	30,856	7,077	△1,778	△28,243	△3,531	28,229	36,291	41,276	17,244	4,996
	- 누적	200,656	207,733	205,955	177,712	174,181	202,410	238,701	279,977	297,221	302,217
	(지급가능월수)	(4.7개월)	(4.5개월)	(4.1개월)	(3.1개월)	(2.9개월)	(3.2개월)	(3.4개월)	(3.8개월)	(3.8개월)	(3.5개월)

보험료율	6.12	6.12	6.24	6.46	6.67	6.86	6.99	7.09	7.09	7.09
(인상률)	(0.9)	(-)	(2.04)	(3.49)	(3.2)	(2.89)	(1.89)	(1.49)	(-)	(-)
수가인상률	1.99	2.37	2.28	2.37	2.29	1.99	2.09	1.98	1.98	1.96

주 1) 현금흐름 기준
2) 정부지원율: 실제 보험료 수입 대비 정부지원율
3) 기타수입: 이자수입 등
4) 선지급: 2020년 코로나19 확산, 2024년 전공의 이탈로 인한 요양기관 경영난 완화 목적의 선지급
5) 기타사업비 등: 요양급여비용 심사 등을 위한 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부담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비 등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2025년 장기요양보험 재정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지출이 수입을 초과함에 따라 당기수지 적자 규모가 증가하였고,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인상 및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당기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이후 흑자 규모가 2022년까지 증가하다가 2023년부터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음.

[2016~2025년 장기요양보험 재정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수 입	46,635	50,846	60,657	74,977	94,001	115,414	136,605	150,721	161,296	169,733
- 보험료	30,506	32,328	38,474	48,506	61,605	77,314	91,688	102,266	106,696	111,485
(증가율)	7.1	6.0	19.0	26.1	27.0	25.5	18.6	11.5	4.3	4.5
- 국고지원금	5,525	5,822	7,107	8,912	12,414	15,186	18,014	19,916	22,268	22,679
(국고지원율)	18.1	18.0	18.5	18.4	20.2	19.6	19.6	19.5	20.9	20.3
- 의료급여부담금	9,773	12,069	14,385	16,986	19,552	22,473	26,179	27,215	30,321	33,018
- 기 타 수 입	831	627	691	573	430	441	724	1,324	2,011	2,551
총 지 출	47,067	54,139	66,758	81,579	93,436	105,668	119,941	136,966	152,937	167,703
- 보험급여비	44,120	51,127	63,521	78,127	89,706	101,840	115,971	132,778	148,953	163,377
(증가율)	11.0	15.9	24.2	23.0	14.8	13.5	13.9	14.5	12.2	9.7
- 기타지출	2,947	3,012	3,237	3,452	3,730	3,828	3,970	4,188	3,984	4,326

(단위: 억원,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수지	- 당기	△432	△3,293	△6,101	△6,602	565	9,746	16,664	13,755	8,359	2,030
	- 누적	21,773	17,684	10,996	4,136	4,475	13,563	28,062	41,699	49,897	52,289
	(지급가능월수)	(7.0개월)	(5.0개월)	(2.5개월)	(0.8개월)	(0.7개월)	(1.9개월)	(3.5개월)	(4.6개월)	(4.9개월)	(4.7개월)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6.55	6.55	7.38	8.51	10.25	11.52	12.27	12.81	12.95	12.95
(인상률)		(-)	(-)	12.7	15.3	20.45	12.39	6.51	4.4	1.09	(-)
평균 수가인상률		0.97	4.08	11.34	5.36	2.74	1.37	4.32	4.7	2.92	3.93

주 1) 현금흐름 기준
2) 총재정(장기요양보험 재정+의료급여 재정) 기준
3) 국고지원율: 실제 보험료 수입 대비 국고지원율
4) 기타수입: 이자수입 등
5) 기타지출: 관리운영비 등
6) 당기수지: 총재정(장기요양보험 재정+의료급여 재정) 기준
7) 누적수지: 의료급여 재정을 제외한 장기요양보험 재정 기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재정부의 「2025~2065 장기재정전망」(2025년 9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수지 중기재정전망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26년에 적자로 전환된 이후 적자 규모가 매년 증가하여 2033년에 준비금이 소진될 전망임. 이는 인구 고령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한 정책 추진이 확대될 경우 준비금 소진은 가속화될 수 있음.[6)]

[건강보험 재정수지 중기재정전망]

(단위: 조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2033년	2034년
수 입	110.6	118.0	124.5	131.2	137.9	144.7	148.8	152.6	156.4
지 출	112.1	119.2	126.3	134.0	141.8	150.0	158.4	167.2	176.2
재정수지	△1.5	△1.2	△1.7	△2.8	△3.9	△5.3	△9.6	△14.6	△19.8
준비금	28.3	27.1	25.3	22.6	18.6	13.3	3.7	△10.8	△30.6

주 1) 기획재정부의 「2025~2065 장기재정전망」(2025년 9월)에 따른 전망치임
2) 수입·지출의 주요 변수 가정
- 보험료율: 2025년 7.09% 이후 매년 2.01% 증가 및 2032년부터 8%(법정 상한) 유지
- 정부지원율: 보험료 수입의 14.4%
- 수가인상률: 매년 1.98% 증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6) 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사회보험」, 386~387p

기획재정부의 「2025~2065 장기재정전망」(2025년 9월)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도 2026년에 적자로 전환된 이후 적자 규모가 매년 증가하다가 2030년에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

[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 중기재정전망]

(단위: 조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2033년	2034년
수입	18.5	19.8	21.0	22.4	23.5	24.8	25.8	26.8	27.8
지출	18.8	20.6	22.5	24.7	26.1	28.1	30.3	32.8	35.4
재정수지	△0.3	△0.8	△1.4	△2.3	△2.6	△3.3	△4.6	△6.0	△7.6
준비금	5.6	4.9	3.4	1.1	△1.4	△4.8	△9.3	△15.4	△23.0

주 1) 기획재정부의 「2025~2065 장기재정전망」(2025년 9월)에 따른 전망치임
2) 수입·지출의 주요 변수 가정
- 보험료율: 건강보험료의 12.95%
- 정부지원율: 보험료 수입의 20.0%
- 수가인상률: 매년 3.88% 증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나. 검토의견

첫째,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그 재원이 준조세 성격의 보험료 수입과 정부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관련 주요 의사결정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민주적 통제 및 책임성 확보에 미흡하므로, 정부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도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기금화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국민건강보험법」[7]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8]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

7)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각 호에서 정한 자가 납부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사용자.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2.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민은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법률상 조세는 아니지만, 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의무적이고 보험료 미납 시 압류 등 국세 체납처분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조세와 매우 유사한 준조세의 성격을 갖고 있음.

우리나라 5가지 사회보험제도는 역선택 방지와 소득 재분배 등을 위해 강제성을 띠는 준조세에 기반하여 재정을 운용하는 특징이 있는데, 국민연금·고용보험 및 산업

---

③ 사용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공제액을 알려야 한다.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공단은 제57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의2, 제101조 및 제101조의2에 따라 보험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 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보험료등의 체납 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하거나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직접 공매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장기요양보험) ③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하 "장기요양보험가입자"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제8조(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①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료"라 한다)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취득·상실, 장기요양보험료 및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장기요양보험료등"이라 한다)의 납부·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로, "보험료등"은 "장기요양보험료등"으로,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으로,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본다.

재해보상보험은 각각 별도로 설치된 기금을 통해 그 수입과 지출을 국회가 심의하고 있지만,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자체 회계로 운용되고 있어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있음.[9)]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국회 심의 현황]

구 분	도입 연도	근거 법률	재정 구조	국회 심의
국민연금	1988	「국민연금법」	국민연금기금	기금 심의
고용보험	1995	「고용보험법」	고용보험기금	기금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196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기금 심의
건강보험	1977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자체 회계	없음
장기요양보험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자체 회계	없음

건강보험 재정의 의사결정 구조를 살펴보면,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모든 수입과 지출의 의사결정 주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인데, 보건복지부차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임명·위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10)]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9) 정부지원금 등 일부 예산은 국회의 심의를 받고 있으나, 정부지원금은 법률로 정해져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국가의 부담)에 따라 건강보험은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장기요양보험은 당해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10)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의결은 제외한다)
2.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3.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4.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5.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5의2. 보험료 부과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의결은 제외한다)
가. 건강보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 파악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 가입자의 소득 파악 및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단체,

재정 관련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건강보험 재정의 의사결정 구조]

구 분		의사결정 주체	근거 규정
수입	보험료율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후 대통령령으로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정부지원금	- 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 국회: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에 연동)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
지출	정책 수립	- 보건복지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
	개별 의사결정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요양급여 기준 등 심의·의결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임명·위촉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산·결산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산 승인 및 결산 점검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제39조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경우에도 건강보험 재정과 유사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차관이 장기요양위원회의 위원장이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위원회의 위원을 임명·위촉하고 있어[11]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모든 수입과 지출의 의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3.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명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8명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
다.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
⑤ 심의위원회 위원(제4항제4호가목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의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심의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기요양위원회를 둔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
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기준
3. 제39조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
제46조(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 ① 장기요양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사결정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의사결정 구조]

구 분		의사결정 주체	근거 규정
수입	보험료율	-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정부지원금	- 정부: 예산안 편성 - 국회: 예산안 심사 (당해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에 연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제58조
지출	정책 수립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시행 (기본계획 수립 후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
	개별 의사결정	- 장기요양위원회: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
장기요양위원회 구성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임명・위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산・결산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산 승인 및 결산 점검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제39조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지원금은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에 연동되어 있는데 보험료율 결정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장기요양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해 보면, 정부지원금 역시 보건복지부의 재정 운용에 따라 그 규모가 영향을 받는 구조임.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는 준조세 성격의 보험료 수입과 정부지원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및 재정 운용의 책임성 확보에 미흡한 측면이 크고, 정부지원금 규모의 증가는 일반 국민의 조세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정부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도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기금화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국가재정법」[12]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

②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각각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또는 자영자단체를 대표하는 자
2.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장기요양에 관한 학계 또는 연구계를 대표하는 자,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리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정부지원금 등 일부 예산만 반영되어 우리나라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정규모 및 총지출 규모가 과소 산정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재정으로 편입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둘째, 보건복지부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와 시범사업 등 각종 정부 정책을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 보장이라는 건강보험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재정 지출의 일관성과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므로,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하여 국회의 심의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12)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및 그 이행방안
2. 중기 재정전망 및 근거
3.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4. 재정규모증가율 및 그 근거

4의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4의3. 재량지출(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한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의4. 세입·세외수입·기금수입 등 재정수입의 증가율 및 그 근거

5.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6.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망과 관리계획. 다만,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되는 기금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삭제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관리계획 및 이행실적 등에 대한 평가·분석보고서
2. 제73조의4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3. 제91조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
4. 「국세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5. 제4항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 결과

제73조의4(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① 연금급여 및 보험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 또는 채권을 발행하는 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관리주체는 소관 기금에 관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이하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환자의 안전과 의료질,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 6개 영역을 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를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고 있음.

2021~2025년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약 8,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었고, 전체 지급액 중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지급액 비율이 약 70%에 달함.

[2021~2025년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 현황]

(단위: 억원, 개, %)

연 도	총지급액(A)	종별 구분	기관수	지급액(B)	비율(B/A)	기관당 평균지급액
2021년	8,036	상급종합병원	42	5,767	71.8	137
		종합병원	297	2,269	28.2	8
2022년	8,245	상급종합병원	45	6,204	75.2	138
		종합병원	301	2,041	24.8	7
2023년	8,852	상급종합병원	45	6,456	72.9	143
		종합병원	314	2,397	27.1	8
2024년	7,948	상급종합병원	45	5,425	68.3	121
		종합병원	318	2,524	31.7	8
2025년	7,990	상급종합병원	47	5,745	71.9	122
		종합병원	318	2,245	28.1	7

자료: 보건복지부

이러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는 당초 선택진료제도의 단계적 축소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익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도입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 보장이라는 건강보험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지급 편중 현상은 의료기관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또한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확충,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첩약[13] 건강보험 적용 등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14]

13) 첩약: 한의사가 한약재를 배합해 달인 액상 형태의 탕약

14) 「보건의료기본법」

2021~2025년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한 시범사업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2021~2025년 동안 총 11조 2,593억 3,900만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었는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15] 등 일부 시범사업은 복지정책에 가깝고, 대규모 사업의 경우 「국가재정법」 상 예비타당성조사[16]를 거치지 않아 사업의 타당성 검증이나 적정 예산 투입 규모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2021~2025년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한 시범사업 실시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시범사업명	집행액
2021~2025년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1,538,200
2021~2025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5,263,300
2021~2025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 시범사업	53,200
2021~2025년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2인 의사 입원진단을 위한 수가 시범사업 (정신과 비자의 입원 시범사업)	7,400
2021~2025년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18,200
2021~2025년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1,773
2021~2025년	요양병원 호스피스 수가 2차 시범사업	43,540
2021~2025년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44,500
2021~2025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169,500
2021~2025년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240,620
2021~2025년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1,501
2021~2025년	아동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2,450
2021~2025년	건강실천생활지원금제 시범사업	4,620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15)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국민에게 걷기 같은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 개선 정도를 평가해 포인트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적립한 포인트는 병·의원 진료비 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음.

16)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4. 그 밖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서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단위: 백만원)

연 도	시범사업명	집행액
2021~2025년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111,800
2021~2025년	의·한협진 5단계 시범사업	12,900
2021~2025년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320,800
2021~2025년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5,660
2021~2025년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28,600
2021~2025년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2,789
2021~2025년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	248,600
2021~2025년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41,300
2021~2025년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1,306
2021~2025년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11,097
2021~2025년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1,764
2021~2025년	암환자(장루) 재택의료 시범사업	1,052
2021~2025년	암환자(요루) 재택의료 시범사업	58
2021~2025년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16,128
2021~2025년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3,173
2021~2025년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292
2021~2025년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2,902
2021~2025년	치매안심병동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370
2021~2025년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4,902
2022~2025년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87,100
2022~2025년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1,710
2023~2025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114,900
2023~2025년	중증소아 단기입원 서비스 시범사업	4,280
2023~2025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및 모자의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153,900
2023~2025년	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AI) 건강보험 임시등재 시범사업	3
2024~2025년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498
2024~2025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 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	19,760
2024~2025년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시범사업	22,100
2024~2025년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9,430

(단위: 백만원)

연 도	시범사업명	집행액
2024~2025년	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정책가산금 지원	1,050
2024~2025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2,335,695
2024~2025년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ASP) 시범사업	72,900
2025년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30,600
2025년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9,500
2025년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181,716
2025년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2,800
2025년	국립중앙의료원 필수의료 특성화기능보상 시범사업	4,000
2025년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3,100
합 계	-	11,259,339

자료: 보건복지부

특히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17]이 일반병상 감축을 통해 중등증 이하 진료량을 줄이고 중증·응급 진료 기능을 강화하도록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2024년 10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총 9조 9,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상급종합병원에 집행할 예정임.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 대비 5%p 높은 요양급여 종별 가산율을 적용받게 되는데,[18] 상급종합병원 급여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전체 요양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급여비 비율은 17.4%임.

17)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8) 요양급여 종별 가산율: 병원 5%, 종합병원 10%, 상급종합병원 15%

[상급종합병원 급여비 지급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

구 분	상급종합병원 수	연 도	급여비		
			상급종합병원(A)	전체 요양기관(B)	상급종합병원 비율(A/B)
제1기	44	2012년	5,836,190	35,714,596	16.3
	43	2013년	6,416,833	38,124,824	16.8
		2014년	6,734,452	40,792,084	16.5
제2기	43	2015년	7,541,155	43,972,242	17.1
		2016년	8,642,229	48,731,225	17.7
		2017년	9,647,175	52,975,309	18.2
제3기	42	2018년	10,731,328	58,748,995	18.3
		2019년	11,937,249	64,888,129	18.4
		2020년	12,329,608	65,291,607	18.9
제4기	45	2021년	14,180,884	71,556,874	19.8
		2022년	15,001,675	79,509,908	18.9
		2023년	15,850,344	83,092,485	19.1
제5기	47	2024년	15,196,235	87,577,443	17.4

주 1)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른 것으로 2025년 통계연보는 2026년 4분기경 산출 예정
2) 상급종합병원은 3년마다 지정됨
3) 2013년 1월 31일 춘천성심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서를 자진 반납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는 2026년 12월 제6기(2027~2029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앞두고 상급종합병원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19]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의료질평가지원금 편중 현상,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 상급종합병원의 높은 요양급여 가산율 등을 고려해 볼 때, 상급종합병원의 확대는 건강보험 재정에 추가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건강보험의 재정 지출은 대부분 정부 정책

19) 병원신문, “내년 국내 상급종합병원 50곳 이상 지정된다”(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2026. 4. 8.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 2026. 4. 9.
(https://www.k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4266)

방향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 보장이라는 건강보험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재정 지출의 일관성과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므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통해 재정 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전 국민 단일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재정 지출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적절한 수준에서 건강보험의 재정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할 경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안의 변경,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기금운용의 평가 등 「국가재정법」 상 다양한 제도를 통해 기금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므로,[20]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으로 운영할 경우 이해당사자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고, 단기적 변동성이 큰 의료비 지출의 특성상 다른 사회보험과는 달리 현행 방식대로 신축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이 일반적인 국가 재정의 틀 속에서 논의될 경우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보장성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21]

그러나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건강보험 제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건강보험 재정을 심의하는 것이 오히려 이해당사자의 자율성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고, 기금의 경우 예산과 달리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인 경우 국회의 심의 없이 자체변경[22]할 수 있는 등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되어 단기적 변동성에 적시 대응도 가능함. 또한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특정 자금을 운용하는 기금 제도의 특성상 다른 국가 정책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

20) 「국가재정법」
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 ① 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21)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이 타 사회보험(현금급여, 정부-가입자)과 달리 현물급여·제3자 계약방식(보험자-가입자-공급자)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의료행위 및 신약 등의 급여 여부·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전문성과 자율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22)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예산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은 낮고, 기금화할 경우 여타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매년 자산운용체계, 자산운용 정책, 자산운용 위험 및 성과관리 등에 관한 기금운용평가[23]를 통해 보다 엄밀한 재정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3) 「국가재정법」
제82조(기금운용의 평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실태를 조사 · 평가하여야 하며,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실태의 조사 · 평가와 기금제도에 관한 전문적 · 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기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제61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반회계】

〈세 입〉

2. 기타재산이자수입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의 연례적인 반납 지연 개선 필요

가. 개 요

‘기타재산이자수입’ 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등을 계상하는 비목으로, 2025년도 징수결정액 612억 1,200만원 중 449억 9,100만원이 수납(수납률 73.5%)되고 미수납액 162억 2,100만원이 발생하였음.[24)]

‘기타경상이전수입’ 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금 등을 계상하는 비목으로, 2025년도 징수결정액 1조 1,679억 8,700만원 중 8,604억 8,600만원이 수납(수납률 73.7%)되고 미수납액 3,075억 100만원이 발생하였음.[25)]

[2025년도 기타재산이자수입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기타재산 이자수입	15,149	15,149	61,212	44,991	16,221	-	73.5	29,632
기타경상 이전수입	1,240,534	1,240,534	1,167,987	860,486	307,501	-	73.7	1,240,534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4) 일반회계-기타재산이자수입(54-546)(운영지원과)

25) 일반회계-기타경상이전수입(59-596)(운영지원과)

나. 검토의견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에 대한 반납이 매년 지연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징수체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반납 지연을 방지하고 수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021~2025년 기타재산이자수입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 현황을 살펴보면, 연도별 기타재산이자수입의 미수납액은 50억~180억원 수준으로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고, 연도별 기타경상이전수입의 미수납액은 2,870억~4,700억원 수준으로 수납률이 70% 내외를 유지하고 있음.

[2021~2025년 기타재산이자수입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 도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	수납률(B/A)
기타재산이자수입	2021년	28,119	9,332	**18,787**	**33.2**
	2022년	28,129	22,872	**5,257**	**81.3**
	2023년	32,397	20,623	**11,774**	**63.7**
	2024년	49,211	35,024	**14,187**	**71.2**
	2025년	61,212	44,991	**16,221**	**73.5**
기타경상이전수입	2021년	1,120,275	760,852	**359,424**	**67.9**
	2022년	1,284,044	933,437	**350,607**	**72.7**
	2023년	1,545,536	1,066,247	**479,288**	**69.0**
	2024년	1,280,377	993,307	**287,070**	**77.6**
	2025년	1,167,987	860,486	**307,501**	**73.7**

자료: 보건복지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경 편성 시기가 상이하고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추경 편성 누락 등으로 인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한 반납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추경 편성 협조 요청, 매월 납부 독촉 및 분할납부 안내, 분기별 10억원 이상 미반납액 집중 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기타재산이자수입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이전에 징수결정되었으나 미수납된 금액이 기타재산이자수입은 26억 7,400만원, 기타경상이전수입은 346억 5,200만원으로, 300억원이 넘는 금액이 보조사업 완료 후 2년이

경과하도록 수납되지 못하였음.

[기타재산이자수입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건)

구 분		미수납액	미수납건
기타재산이자수입	**2025년 이전 징수 결정**	**2,674**	**154**
	2025년 징수 결정	13,547	767
기타경상이전수입	**2025년 이전 징수 결정**	**34,652**	**806**
	2025년 징수 결정	272,849	1,224

주) 2025년 12월 31일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26]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등을 반납받아야 하고, 반납기한은 반납금액과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함.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중앙부처가 반납금을 고지한 즉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되, 예산에 반납액이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산 후 최초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반납금을 반드시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

보건복지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7]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28]에 따

26)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받아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28)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7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집행점검 결과 정당한

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은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보조금 추가 교부 중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반납 지연을 방지하고 수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보조금 교부 단계에서부터 연내 집행 가능성, 사업 집행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이 과다 교부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사유 없이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정산 후 집행잔액 등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해당 보조사업과 관련된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보조사업 집행점검) ① 중앙관서의 장은「보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등의 수행상황을 점검하며 다음 각 호의 보조사업 등을 주요점검대상으로 한다.

4. 2회계연도 이상 정산을 완료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산 후 집행잔액 등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은 보조사업의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는 조사개시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현장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조금 반환 결정은 검찰의 공소제기 시까지 하여야 한다.

제33조(보조사업점검평가단) 중앙관서의 장은 제32조의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위하여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운영하며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점검실적은 연1회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세 출〉

3.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2회계연도 연속 예비비 배정 지양 필요

가. 개 요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진료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의료기관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165억 1,900만원 중 1,161억 5,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7%)되고 3억 6,100만원이 불용되었음.[29)]

[2025년도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비비 (D)	예산현액 (A+B+C+D)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	-	38	106,713	9,768	116,519	116,158	-	361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예산에 이어 2025년도 예산에도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고 연초 예비비 배정 등을 통해 사업비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예비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예산 운용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부는 2024년 의정갈등[30)] 직후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2024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을 신설하면서 예비비 배정과 이용을 통해 사업비를 마련하여 집행하였는데, 2025년에도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 배정과 이용을 통해 사업비 전액을 조달하여 집행하였음.

29) 일반회계-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2740-312)(보건의료정책실)

30) 시작일: 2024년 2월 6일(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종료일: 2025년 10월 20일(정부가 발령한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 및 비상진료체계 공식 해제)

[2024년과 2025년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 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24년	-	-	-	226,590 △27,894	189,066	387,762	381,332 (380,516)	38	6,392
2025년	-	-	38	106,713	9,768	116,519	116,158 (33,557)	-	361

자료: 보건복지부

2025년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예비비 배정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 24일 비상진료 대체인력 등을 지원하기 위해 목적 예비비(재해대책비)[31] 97억 6,800만원을 배정받아 97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5년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예비비 배정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배정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배정일	배정 사유
목적 예비비 (사회재난)	9,768	9,737	-	31	1월 2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비상진료 대체인력 등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2025년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이용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 21일과 12월 19일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과 기초연금 지급 사업으로부터 총 1,067억 1,300만원을 이용(증)하여 사업비를 마련하였음.

31)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2025년도 예산총칙 제12조에 따른 예비비(목적 예비비)의 지출요건 중 '재해'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자연재해대책법」제2조 및「농어업재해 대책법」제2조에 규정된 '재난' 또는 '재해'를 의미하는데, 보건복지부는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공백이「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국가핵심기반의 마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목적 예비비를 신청하여 배정받음.

[2025년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이용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용 사유
	세부사업 (사업코드)	세목		세부사업 (사업코드)	세목	
이용 (3월 21일)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4331-300)	민간경상 보조	19,541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2740-312)	일용임금 국내여비 민간위탁 사업비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현장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운영
이용 (12월 19일)	기초연금 지급 (2131-300)	자치단체 경상보조	23,272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2740-312)	민간위탁 사업비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현장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운영
이용 (12월 19일)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4331-300)	민간경상 보조	63,900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2740-312)	민간위탁 사업비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현장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운영
합 계			106,713	-		

자료: 보건복지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예산 편성 시 의정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여 본예산에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의정갈등이 계속됨에 따라 예비비와 이용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였다고 설명함.

「대한민국헌법」[32]에 따르면,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도록 하면서 정부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가재정법」[33]에서는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요건으로 사회재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공백이

32) 「대한민국헌법」
제5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33)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②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사회재난(국가핵심기반의 마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34] 본예산 확정 이후 추가경정예산안[35]을 활용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었으나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예비비와 이용만으로 사업비를 마련하였음.

보건복지부는 예산 편성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경비라고 하나, 회계연도 개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비를 신청하여 배정받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의정갈등 상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았다고 보기 어렵고,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예산 편성 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경비라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이·전용을 통해 충당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연초에 예비비를 신청하여 사업비를 조달한 것은 엄격한 요건(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보충성 등) 하에 재원 마련의 최후 수단으로 기능하는 예비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예산 운용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34) 보건복지부는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공백이 사회재난(국가핵심기반의 마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목적 예비비(재해대책비)를 신청하여 배정받은 바 있음.

3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 4월 21일 정부 제출, 2025년 5월 1일 국회 의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 6월 23일 정부 제출, 2025년 7월 4일 국회 의결

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지원 사업: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 미편성 지양 필요

가. 개 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지원’ 사업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총괄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사무처의 운영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소통 및 기본계획 홍보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64억 7,700만원 중 57억 8,700만원이 집행(집행률 89.4%)되고 6,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6억 2,300만원이 불용되었음.[36]

[2025년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비비 (D)	예산현액 (A+B+C+D)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지원	-	4,980	-	125	1,372	6,477	5,787	67	623	9,055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보건복지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것을 전제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지원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아 예비비, 이용 등을 통해 관련 사업비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부적절한 사례이므로, 법률 개정을 전제로 관련 예산을 계상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기존의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확대·개편한 기구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37]에 의해 2005년 9월에 설치된 대통령 소속의 법정기

36) 일반회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지원(2537-302)(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3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관이며,[38]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39]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40]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하는 지원 조직임.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41]이 국회에서 의결될 것을 전제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지원 사업을 편성하지 않았음.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으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운영을 위해 시급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1월 9일 13억 7,200만원의 예비비를 신청하여 배정받음.

---

1.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제5항의 간사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고령화 및 저출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2인을 두며, 간사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제4항제2호의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8)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2026년 9월 10일 「인구전략기본법」(2026년 5월 7일 국회 의결, 2026년 9월 10일 시행)으로 개편됨에 따라 현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인구전략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위원회의 정책 범위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반으로 확대되고 위원회의 기획·조정 권한이 강화될 예정임.

3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의2(위원회의 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9조(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삭제

④ 사무기구의 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기구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41)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하는 기획 부처로서 인구전략기획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대표발의, 2024년 7월 11일 발의)이 2024년 9월 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4년 9월 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되어 한 차례 심사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는 소위원회에 계속 계류 중임.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지원 사업의 예비비 배정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배정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배정일	배정 사유
일반 예비비	1,372	1,307	-	65	1월 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의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등 예산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예비비로 확보하지 못한 기타직보수, 상용임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42] 2025년 3월 24일 아동발달계좌 지원 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에서 1억 2,500만원을 이용(증)하여 추가로 사업비를 마련하였음.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지원 사업의 이용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용 사유
	세부사업 (사업코드)	세목		세부사업 (사업코드)	세목	
이용 (3월 24일)	아동발달계좌 지원 (1335-302)	자치단체 경상보조	107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사무처지원 (2537-302)	기타직 보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건비 부족분 마련
이용 (3월 24일)	아동발달계좌 지원 (1335-302)	자치단체 경상보조	18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사무처지원 (2537-302)	상용임금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43] 편성 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지원 사업의 부족한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49억 8,000만원이 증액 의결되었음.

법률안에 대한 심사는 국회의 고유 권한[44]이며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되는 경우에도 「국가재정법」 상의 예산 이체[45]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42) 2025년 기타직보수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인원은 12명(전문임기제 10명, 상근직 2명), 상용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인원은 6명임.

4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 4월 21일 정부 제출, 2025년 5월 1일 국회 의결

44) 「대한민국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본예산 확정 이후에는 추가경정예산[46]을 편성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법률 개정을 전제로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예비비와 이용을 통해 사업비를 마련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부적절한 사례라고 보이므로[47]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45)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

46)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②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47) 「대한민국헌법」
제5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5.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R&D) 사업: 철저한 사업 계획 수립으로 예산 낭비 방지 필요

가. 개 요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R&D)’ 사업은 의사과학자(M.D.-Ph.D)[48]의 연구활동과 글로벌 연수 및 공동연구 등을 지원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768억원 중 765억 9,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7%)되고 2억 600만원이 불용되었음.[49]

[2025년도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R&D)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R&D)	76,800	76,800	-	76,800	76,594	-	206	101,384
의사과학자 박사후 연구성장지원	44,000	44,000	-	44,000	43,800	-	200	63,334
의사과학자 글로벌 연수지원	6,300	6,300	-	6,300	6,294	-	6	8,300
의사과학자 글로벌 공동연구지원	22,500	22,500	-	22,500	22,500	-	-	28,750
의사과학자 양성 사무국운영	4,000	4,000	-	4,000	4,000	-	-	1,000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내역사업인 **‘의사과학자 박사후 연구성장지원’**은 국내 의사과학자 수 저조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과학자의 연구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의사 면허와 박사 학위를 모두 취득한 의사과학자가 독립적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체계적 연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440억원 중 438억원이 집행(집행률 99.5%)되고 2억원이 불용되었음.

의사과학자 박사후 연구성장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에 따라 신진 단계, 심화 단계,

48) 의사과학자(M.D.-Ph.D): 의사 면허(M.D.)와 박사 학위(Ph.D.)를 모두 소지한 의과학 융합연구자

49) 일반회계-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R&D)(3031-382)(보건산업정책국)

리더 단계 등 3단계로 나뉘는데, 신진 단계는 박사학위 취득 이후 5년 이하인 의사과학자를 대상으로 하고, 심화 단계는 박사학위 취득 이후 10년 이하인 의사과학자를 대상으로 하며, 리더 단계는 박사학위 취득 이후 15년 이하인 의사과학자를 대상으로 함.

내역사업인 **‘의사과학자 글로벌 연수지원’**은 보건산업 질환 분야의 기술 수준 향상과 의사과학자의 융합 연구 활성화를 위해 선도기술을 보유·연구 중인 해외연구기관 등의 방문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63억원 중 62억 9,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600만원이 불용되었음.

내역사업인 **‘의사과학자 글로벌 공동연구지원’**은 노벨생리의학상 수상, 의학·보건학 과학자 Top 100 진입 등 글로벌 대형 성과 창출을 위해 국내·외 의사과학자 중심의 다학제 공동 연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25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

내역사업인 **‘의사과학자 양성 사무국운영’**은 의사과학자 양성 정책 및 제도 기획, 의사과학자 글로벌 협력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등 전주기 사업 관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40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

나. 검토의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의사과학자 글로벌 공동연구지원 등 적정성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므로, 보건복지부는 보다 철저한 사업 계획 수립으로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부는 2022년 K-Medi 융합인재 양성(R&D) 사업[50]을 신규로 추진한 후 2024년 사업명과 내역사업 등을 재편하여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R&D) 사업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로 증가함에 따라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51]를 받음.

---

50) K-Medi 융합인재 양성(R&D) 사업은 신진 의사과학자의 연구 지원, 해외 연수를 통한 현장수요 연계형 글로벌 인재 육성, 국내 산·학·연과 해외 우수 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2022년 48억 1,500만원, 2023년 132억 1,000만원이 집행됨.

51)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3조(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타당성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재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 적정 사업규모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총사업비는 당초 계획(8,066억 5,000만원) 대비 36.1% 감액된 5,153억 5,000만원으로, 의사과학자 박사후 연구성장지원 사업의 리더 단계, 의사과학자 글로벌 연수지원 사업, 의사과학자 글로벌 공동연구지원 사업, 의사과학자 양성 사무국운영 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 대비 약 40~70% 감액되었음.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R&D)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총사업비 조정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당초 계획(A)	재검토 결과(B)	증감 (B-A)	증감률 ((B-A)/A)
의사과학자 박사후 연구성장지원 사업	신진 단계	1,116	1,116	-	-
	심화 단계	924	1,284	360	39.0
	리더 단계	1,665	990	△675	**△40.5**
	소 계	3,705	3,390	△315	△8.5
의사과학자 글로벌 연수지원 사업		534	249	△285	**△53.4**
의사과학자 글로벌 공동연구지원 사업		3,415.5	1,387.5	△2,025	**△59.3**
의사과학자 양성 사무국운영 사업		415	127	△288	**△69.4**
합 계		8,066.5	5,153.5	△2,913	**△36.1**

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사업기간은 2024~2032년으로 당초 계획과 동일함
자료: 보건복지부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보고서」[52]의 감액 사업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사과학자 박사후 연구성장지원 사업은 의사과학자가 독립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지원 트랙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리더 단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았고, 의사과학자 글로벌 연수지원 사업은 당초 의사가 아닌 의과학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원 대상을 의사과학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의사과학자 글로벌 공동연구지원 사업은 별도 지원 필요성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였고, 의사과학자 양성 사무국운영 사업은 연구관리전문기관 내 별도 조직으로 추진단을 구성할 필요성이 불분명하여 기존 K-Medi 융합인재 양성(R&D) 사업의 해외연수 지원 및 관리를 위한 혁신인재육성지원센터 예산만 인정하였음.

2.「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제4호의 기타 재정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로 증가한 사업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5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보고서」, 2025. 9.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보고서」의 감액 사업별 주요 내용]

사 업	감액 관련 주요 내용
의사과학자 박사후 연구성장지원 사업(리더 단계)	- 국내 의사과학자 배출 양적 규모 저조 문제는 의사과학자 배출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해결할 사안으로 이 사업과 직접적 연관성이 미흡함 - 이 사업은 연간 의과대학 입학정원 대비 의사과학자 배출 비중을 높이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음 - 의사과학자의 연구생태계를 조성하는 측면에서 의사과학자 배출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있으나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움 - 지원 과제 수, 연간 지원액, 지원 기간 도출 근거에 미흡함이 존재함 **- 이 사업은 신진-심화-리더 단계별 지원하는 계획을 제시하였는데, 의사과학자가 독립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지원 트랙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심화' 단계까지의 필요성이 확인됨**
의사과학자 글로벌 연수지원 사업	- 보건산업 질환 분야의 기술 수준 향상과 이 사업에서 지원하는 해외 연구기관 방문 연수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움 - 이 사업이 보건산업 질환 분야의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적접적이고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의문시됨 - 기존 유사 해외연수 지원 대비 기간 등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할 당위성의 제시가 미흡함 -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국내 타 사업 대비 이 사업의 지원 규모는 과다하게 산정됨 **-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기존 지원자의 다수는 의사과학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음**
의사과학자 글로벌 공동연구지원 사업	- 지난 20여년(2004~2024년)간 발표된 24건의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 분석 결과, 국내 의사과학자와 국외 연구자로 구성된 컨소시엄 대상의 공동연구 지원이 글로벌 대형 성과 창출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고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미흡함 - 개별 연구자에 의존하는 소규모, Bottom-up 지원 방식 대비 이 사업 방식이 글로벌 대형 성과 창출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함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될 국제공동연구와 의학·보건학 과학자 Top 100 진입 사이 연관성은 알 수 없음 **- 의사과학자 중심의 국제공동연구 별도 지원 필요성이 불분명하며, 지원 과제 수의 적정성을 판단할 근거가 미흡하고, 지원 규모가 과다함**
의사과학자 양성 사무국운영 사업	- 연구관리전문기관 내 별도의 조직으로 추진단을 구성해야 할 필요성과 추진단 구성 규모가 적절하게 제시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사무국 운영비에 혁신인재육성지원센터 위탁비가 포함되었는데, 혁신인재육성지원센터와 추진단의 역할 중첩이 우려됨 - 혁신인재육성지원센터 예산과 관련하여 '성과교류회 및 국제행사 개최'를 신규 사업으로 설명하였으나, 기존 내용에 포함되었기에 신규 추진으로 보기 어렵고, 매년 동일한 규모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움 - 연구관리전문기관 내 별도 조직으로 '의사과학자 양성 추진단'을 구성할 필요성이 불분명하고, 추진단 구성 규모에 대한 근거, 추진단을 통해 추가로 수행할 역할 등이 불분명함 **- 연구관리전문기관 내 별도 조직으로 '의사과학자 양성 추진단'을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아 2029년까지의 혁신인재육성지원센터 예산만 반영함**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보고서」, 2025. 9.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6년부터 의사과학자 박사후 연구성장지원 사업의 리더 단계, 의사과학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사과학자 글로벌 연수지원 사업, 의사과학자 글로벌 공동연구지원 사업의 신규과제 선정을 중단하였음.

그러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가 도출되기 이전에 이미 연구개발과제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협약에 명시한 연구개발기간 동안 연구개발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부적정 사업의 계속과제 연구개발비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172억원, 2025년 412억원이 집행되었고 2026년 532억 3,400만원, 2027년 544억원, 2028년 520억원, 2029년 260억원이 집행될 예정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부적정 사업의 계속과제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 계
의사과학자 박사후 연구성장지원 사업	단계: 리더 단계	5,350	16,500	21,084	22,000	22,000	11,000	97,934
의사과학자 글로벌 연수지원 사업	지원 대상: 의사과학자가 아닌 자	600	2,200	3,400	2,400	-	-	8,600
의사과학자 글로벌 공동연구지원 사업		11,250	22,500	28,750	30,000	30,000	15,000	137,500
합 계		17,200	41,200	53,234	54,400	52,000	26,000	**244,034**

자료: 보건복지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지원 필요성이 낮은 부적정 사업에 총 2,440억 3,400만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는 한정된 국가 재정의 낭비와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는 부적절한 사례이므로 보건복지부는 철저한 사업 계획 수립으로 이러한 예산 낭비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 사업 규모와 대안 도출을 위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재검토 결과가 도출되기 이전에는 예산 편성 및 사업비 집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6.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사업: 보조금 교부 시 면밀한 사전 검토 필요

가. 개 요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사업은 장애인의 고령화, 중증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돌봄 및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주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및 건강 제약이 큰 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5억 5,8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53][54]

[2025년도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690,308	690,308	-	-	690,308	690,122	31	155	735,519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558	558	-	-	558	558	-	-	729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사업 준비 부족 및 집행 관리 미흡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의 기능보강 및 인력 충원이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교부액 대부분이 연내 집행되지 못하였으므로, 보건복지부는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는 등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임.

2025년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사업 실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교부액 1억 5,800만원 중 900만원이 실집행(실집

53) 일반회계-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1536-302)(장애인정책국)

54)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이며, 국비지원율은 50%임.

행률 5.7%)되고 1억 4,9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비) 교부액 4억원이 전액 이월되었음.

[2025년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사업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세 목	보건복지부			대전광역시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A)						교부 현액	집행액 (B)			
자치단체 경상보조	158	158	158	158	-	158	9	158	9	-	149	5.7
자치단체 자본보조	400	400	400	400	-	400	-	400	-	400	-	-

자료: 보건복지부

사업 대상 기관(대전광역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포도원)이 2025년 7월 30일에 선정된 이후 사업계획서 수정, 설계용역 업체 선정 지연, 지방자치단체의 추경예산 일정 지연 등에 따라 기능보강비가 전액 집행되지 못하였고, 당초 10명분의 인건비가 편성되었으나 실제로는 간호사 1명, 생활지도원 3명만 채용되면서 인건비 대부분이 불용되었음.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당해 연도내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55] 및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지방비 부담능력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 검토를 하도록 하면서 특히 연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사업 준비 부족으로 사업 대상 기관 선정 및 사업계획서 수정에 약 8개월이 소요되었고 인력 충원 계획도 실제와 큰 차이를 보였으며 지방비 부담능력에 대한 사전 검토 미흡으로 교부액 대부분이 이월되거나 불용되었으므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을 감안한 보조금 예산 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보임.

55)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 「국가재정법」에 반하는 예비비 이월 지양 필요

가. 개 요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첫째 출생아동에게는 200만원, 둘째 이후 출생아동에게는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바우처)[56]을 지급하는 것으로,[57] 2025년도 예산현액 4,015억 1,600만원 중 3,906억 3,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3%)되고 108억 8,300만원이 이월되었음.[58][59]

[2025년도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비비 (D)	예산현액 (A+B+C+D)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첫만남이용권 지원	359,296	359,296	-	-	42,220	401,516	390,633	10,883	-	411,120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보건복지부는 예비비 422억 2,000만원 중 집행잔액 108억 8,300만원이 「국가재정법」의 이월 가능 경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월하였으므로,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게 사업비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부는 2025년 출생아 실적이 당초 전망치를 상회한다는 이유로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비 422억 2,000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배정받아 그 중 313억 3,700만원을 집행(집행률 74.2%)하고 108억 8,300만원을 이월하였음.

---

56) 5개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유흥·사행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함.

57)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2022년과 2023년에는 모든 출생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였고 2024년부터 첫째 출생아동에게는 200만원, 둘째 이후 출생아동에게는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음.

58) 일반회계-첫만남이용권 지원(2533-306)(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59)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이며, 국비지원율은 서울 35%, 서울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65%임.

[2025년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의 예비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배정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배정일	배정 사유
일반 예비비	42,220	31,337	**10,883**	-	9월 19일	2025년 출생아 실적이 당초 전망치(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상회함에 따라 대상자 추가 지원 필요

자료: 보건복지부

예비비를 배정받은 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지방비 확보가 늦어지고 자치단체별 정확한 출생아 통계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예비비를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108억 8,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보건복지부는 의무지출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집행잔액을 모두 이월하였다고 설명함.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 집행 시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예비비 소요는 효율적인 예비비 집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가재정법」 제48조에 따라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가재정법」 제48조[60]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월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연도 내

60)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비의 연도별 연부액 중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까지 계속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한 경우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다음 연도의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⑥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출예산 이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세입에 우선적으로 이입하여야 한다.

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등 예외적으로 이월이 가능한 경비를 열거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국가재정법」에 반하여 전액 이월하였음.

「국가재정법」에서는 재정 통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61]을 규정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월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이에 반하는 이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예비비 신청 시 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실소요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비비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⑦ 기획예산처장관은 세입징수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월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1)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8. 기초연금 지급 사업: 타 사업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연례적 이·전용 방지 필요

가. 개 요

‘기초연금 지급’ 사업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 조건을 만족하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1조 3,514억 4,200만원 중 21조 2,028억 2,0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3%)되고 1,486억 2,100만원이 불용되었음.[62][63]

[2025년도 기초연금 지급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기초연금 지급	21,814,577	21,421,915	80	△70,553	21,351,442	21,202,820	-	148,621	23,137,815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기초연금법」[64]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 사업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법정 의무지출 사업으로,[65] 보건복지부장관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고 있음.[66]

---

62) 일반회계-기초연금 지급(2131-300)(사회복지정책실)

63)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이며, 국비지원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노인 인구 비율 등을 기준으로 최소 40%에서 최대 90%로 차등 적용됨.

64)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65) 2025년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노인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 기준 월 364만 8,000원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임.

66)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는 전체 65세 이상인 사람 중 65.3%에 해당하는 706만 6,000명이고, 2025년 월 최대 수급액은 단독가구 34만 2,510원, 부부가구 월 54만 8,000원임.

나. 검토의견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 사업 예산을 연례적으로 과다 편성하고 반복적인 대규모 이·전용을 통해 다른 사업의 예산 부족분 충당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재정법」 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 취지에 반하고 예산 운용의 투명성 저하를 초래하므로, 예산 편성 시 면밀한 사업 수요 예측으로 적정 수준의 예산을 계상하여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023~2025년 기초연금 지급 사업의 이·전용 현황을 살펴보면, 연례적으로 다른 사업에서 예산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 사업 예산을 이·전용하여 그 부족분을 충당하였음.

기초연금 지급 사업의 이·전용 금액은 전체 예산액 대비 1.0% 이하에 불과하지만 기초연금 지급 사업은 연간 예산액이 약 20조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으로, 이·전용 규모 역시 2023년 97억 8,600만원, 2024년 2,024억 8,600만원, 2025년 705억 5,300만원에 달하는 등 연간 약 100억~2,000억원의 이·전용이 발생하였음.

[2023~2025년 기초연금 지급 사업의 이·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예산액	이·전용	불용액	이·전용 사유
2023년	18,530,432	△9,786 (이용 △8,652)	330,582	-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비용 및 행정비용 부족분 등 - 노인의 날 기념, 100세 어르신 증정 장수지팡이 지급 대상자 증가 등에 따른 예산 부족분 - 2023년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단가 인상에 따른 예산 부족분
2024년	20,201,456	△202,486 (이용 △201,326)	390,441	- 공보의 파견수당 등 의료집단행동에 따른 진료공백 대응 -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 - 경로당 식사 제공 단계적 확대 및 냉방비 지원단가 인상 등에 따른 부족분 충당 - 공보의 파견수당 등 의료집단행동에 따른 진료공백 대응 - 엘리엇 소송 관련 영국법원 기각 결정에 따른 정부배상금 지급
2025년	21,421,915	△70,553 (이용 △70,553)	148,621	- 장애인연금 부족분 - 정부대리로펌 계약금액 부족분 - 부모급여 부족분 - 의료공백 해소 및 비상진료체계 대응

주) 예산액은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이러한 이·전용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파악한 예산 불용액 규모가 이·전용 요청 금액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전용을 실시하더라도 기초연금 지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전용하였다고 설명함.

예산의 이용[67]과 전용[68]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69]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 집행잔액은 불용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반복적인 대규모 이·전용을 통해 다른 사업의 예산 부족분 충당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재정 통제력의 약화와 예산 운용의 투명성 저하를 초래하는 부적절한 사례임.

보건복지부는 예산 편성 시 보다 정밀한 사업 수요 예측으로 적정 수준의 예산을 계상하여 기초연금 지급 사업 예산이 다른 사업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활용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67)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및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2. 환율변동 · 유가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3.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8)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69)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9.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및 개도국개발협력(ODA) 사업: 출연금 집행잔액의 연례적 과다 발생 방지 필요

가. 개 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사업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수행하는 북한, 재외동포, 외국인 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기관운영 등을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20억 2,800만원 중 120억 2,0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800만원이 불용되었음.[70][71]

‘개도국개발협력(ODA)’ 사업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보건의료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 현액 608억 3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됨.[72]

[2025년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및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12,218	12,218	-	△190	12,028	12,020	-	8	14,477
개도국개발협력(ODA)	60,803	60,803	-	-	60,803	60,803	-	-	49,240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출연금 집행잔액이 연례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 집행잔액은 모두 이월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예산 편성 시 향후 여건변화 및 실수요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여 적정 소요를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70) 일반회계-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7035-305)(기획조정실)

71) 2025년도 한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사업 예산현액 120억 2,800만원 중 120억 1,800만원은 출연금(기관운영 출연금, 사업출연금)이고 나머지 1,000만원은 일반수용비(ODA관리체계 구축비)임. 일반수용비 1,000만원 중 200만원이 집행(집행률 20%)되고 800만원이 불용되었음.

72) 일반회계-개도국개발협력(ODA)(7035-306)(기획조정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73]에 의해 2006년 8월 18일 설립된 기타공공기관으로, 출연금과 기부금품 등을 재원으로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2023~2025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의 출연금(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사업, 개도국개발협력(ODA) 사업)이 주된 수입원으로 2023년 502억 1,700만원, 2024년 643억 8,700만원, 2025년 728억 2,100만원의 출연금을 교부받았는데, 전년도 사업비(출연금)의 집행잔액이 매년 전액 이월되어 2023년 262억 5,500만원, 2024년 151억 6,300만원, 2025년 114억 7,500만원의 이월금이 자체수입으로 처리되었음.

---

73)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여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북한 등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보건의료시설의 지원 및 현대화
나. 의료물품 및 의약품 등의 지원
다. 보건의료 인력의 초청 및 연수
라. 보건의료 인력의 파견
마. 보건의료 분야의 관련 원조단체 및 기관에 대한 지원
바. 재해 또는 재난 발생에 따른 의료인력, 의료장비 및 의약품 등의 긴급지원
사. 그 밖에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2.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등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진료 및 질병예방서비스 등의 지원
나. 관련 원조단체 및 기관에 대한 지원
다.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제도개발
3. 보건의료 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을 위한 각종 행사의 주관·지원 및 참가
나.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을 위한 인사의 파견 및 초청
다. 보건의료의 국제협력에 관한 조사·연구 및 결과의 보급
라. 그 밖에 보건의료분야의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인류의 건강증진과 질병퇴치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한 기념사업
6.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따른 교육, 홍보 및 그 밖의 부대사업
제16조(운영재원) 재단은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품,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제17조(출연금) ①정부는 재단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3~2025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수입	2024년 수입	2025년 수입
정부지원	출연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사업(기관운영출연금 및 사업출연금)	12,263	12,170	12,018
		개도국개발협력(ODA) 사업(사업출연금)	37,954	52,217	60,803
	보조금		140	-	-
	합 계		50,357	64,387	72,821
자체수입	**이월금**		**26,255**	**15,163**	**11,475**
	후원금		1,710	1,334	939
	이자수익 등		826	538	1,107
	합 계		28,791	17,035	13,522

주 1) 출연금: 정부예산 확정액
2) 이월금: 전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3) 후원금: 당해연도 발생액
4) 이자수익 등: 당해연도 발생액

자료: 보건복지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제12조[74]에 따라 매년 결산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이월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데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다음연도로 이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그러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교부된 출연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보건의료지원사업 등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으로, 집행잔액과 그 이자는 결산 잉여금[75]이 아닌 정산과 반납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출연금 교부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임.[76]

약 100억원의 출연금 집행잔액을 이월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출연금 예산안 심의 시 사업비의 적정 규모를 파악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지출원인행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행

74)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제12조(잉여금의 처리) 재단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데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해로 이월하여야 한다.

75) 결산 잉여금은 정산 결과가 아닌 기관 전체의 결산 결과 발생한 총수익이 총지출을 초과하여 남은 금액임.

76) 후원금 집행잔액은 모두 반납하고 있음.

잔액과 그 이자는 모두 국고에 반납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77)78)]

또한 보건복지부는 향후 여건변화 및 실수요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제6조[79)]에 따라 사업수행 실적과 예산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출연금을 교부함으로써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77)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이자수익 등을 활용하여 퇴직급여적립 부족분을 적립하고 있음.

78)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경우 매년 출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있는데, 2025년 예산액 91억 6,900만원 중 89억 4,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 2,500만원은 반납함.

79)「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제6조(출연금의 교부) ① 재단은 출연금을 교부받으려면 그 분기가 시작되기 15일 전까지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교부 신청에 대하여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분기별 사업수행 실적 및 예산집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발달·중증장애인 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 사업: 교부된 보조금의 다년도 이월(재재재이월) 지양 필요

가. 개 요

‘발달·중증장애인 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 사업은 장애인 가족의 상시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과 그 가족의 휴식과 소통 공간을 제공하여 가족 해체를 방지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장애인 가족 힐링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46억 8,1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80]

[2025년도 발달·중증장애인 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8,655	28,655	-	-	28,655	26,083	-	2,572	28,832
발달·중증장애인 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	4,681	4,681	-	-	4,681	4,681	-	-	4,016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발달·중증장애인 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 사업은 총 사업비가 289억 2,700만원으로 이 중 137억 9,000만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지원할 계획임.

[발달·중증장애인 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 사업 개요]

- 목적: 장애인 가족의 상시 돌봄 부담 경감 및 장애인과 그 가족의 휴식 공간 제공
- 위치: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 18-1(도유지 30,000㎡)
-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6,542㎡(연면적)
- 사업기간: 2021~2027년
- 총 사업비: 289억 2,700만원(국비 137억 9,000만원)
- 주요시설: 실내 물놀이장, 객실(24실, 106명), 찜질방, 프로그램실 등

80) 일반회계-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1536-300)(장애인정책국)

나. 검토의견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률 미숙지로 발달·중증장애인 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을 위해 교부한 보조금을 매년 이월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반하는 다년도 이월이므로,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조사업 관리·감독 및 집행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21~2025년 발달·중증장애인 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 사업 실집행내역을 살펴보면, 5년간 총 100억 7,500만원의 국비가 편성되어 충청남도에 전액 교부되었고 교부된 보조금은 대부분 해당연도에 실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고 있는데, 2022년에 교부된 48억 9,400만원[81]은 매년 이월 집행되면서 집행잔액이 2026년도까지 이월되었음.[82]

[발달·중증장애인 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 사업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연 도	보건복지부			충청남도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A)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 경							
2021년	500	500	500	500	-	500	25	475	-
2022년	4,894	4,894	4,894	**4,894**	475	5,369	**481**	**4,888**	-
2023년	-	-	-	-	-	4,888	**400**	**4,488**	-
2024년	-	-	-	-	4,488	4,488	**173**	**4,315**	-
2025년	4,681	4,681	4,681	4,681	4,315	8,996	**1,611**	**7,385**	-

자료: 보건복지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발달·중증장애인 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 사업이 「국가재정법」 제23조[83]에 따른 계속비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48조제3항[84]에 따

81) 2022년 예산 편성내역: 설계비 97억 8,000만원 × 50%(국비지원율) = 48억 9,400만원

82) 주요 추진 경과: 2022년 2월 설계 공모 및 선정
2022년 3월 설계 착수
2022년 10월 조달청 계획설계 적정성 검토 완료
2023년 9월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완료
2024년 4월 조달청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완료
2024년 7월 조달청 감리비 검토 완료 및 분할측량 완료
2025년 9월 공사 계약 및 착공
2027년 5월 공사 준공 예정

83) 「국가재정법」

라 완성연도까지 계속 이월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발달·중증장애인 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은 바가 없는데,[85] 보건복지부는 계속비사업에 대한 개념을 혼동하여 집행잔액을 불용 처리하지 않고 계속 이월하여 집행하고 있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86]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보조금 이월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월과 재이월만을 허용하고 있고, 「국가재정법」[87]에서는 회계

제23조(계속비) ① 완성에 수년이 필요한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2항의 지출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84)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비의 연도별 연부액 중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까지 계속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85) 중앙정부는 2022년 이후 계속비를 편성하고 있지 않음.

86)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월을 위해서는 보조사업자는 해당연도 교부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중 이월이 필요한 금액 및 반납금액을 포함한 이월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연도 말까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의 이월 승인 시 제17조제2항을 준용하여 이월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⑥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25조의2(보조사업비의 재이월) ① 제25조에 따라 이월한 경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이월한 경비
2. 제25조제2항제3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이월한 경비 중 이월한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월한 경비 중 이월한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입찰공고 후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재이월의 경우 제25조제3항 내지 제4항, 제6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87)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다년도 이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조사업 관리·감독 및 집행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1.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 의료취약지 및 주요 진료과목에 대한 집중 지원 필요

가. 개 요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은 시니어의사[88] 채용지원금[89] 지급 등을 통해 지역 필수 의료 분야의 진료 공백 최소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2억 500만원 중 29억 6,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2.6%)되고 2억 3,600만원이 불용되었음.[90]

[2025년도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4,243	4,243	-	-	4,243	3,872	-	371	16,280
시니어의사 지원	3,205	3,205	-	-	3,205	2,969	-	236	7,225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91]과 민간위탁사업[92]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시니어의사를 채용하는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채용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전문성이 풍부한 시니어의사가 지역사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2024년부터 국비가 지원되고 있음.[93]

88) 시니어의사는 전문의 취득 이후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10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거나 일반의 면허 취득 이후 20년 이상 임상 경력(병원급 이하 포함)이 있는 60세 이상 의과 의사를 말하며, 2025년에 84명이 선정되었음.

89) 시니어의사를 채용한 의료기관 등에 고용장려금 성격의 채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전일제(주당 30시간 이상) 근무의 경우 월 1,10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하고, 시간제(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근무의 경우 월 40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함.

90) 일반회계-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2750-303)(보건의료정책실)

91) 국비지원율은 50%임.

92) 국비지원율 100%로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93) 2024년에 예비비 13억 9,000만원을 편성하여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설치함.

나. 검토의견

시니어의사의 33.3%는 의료취약지가 아닌 지역에서 근무하고 시니어의사의 52.4%가 주요 진료과목 이외의 진료과목을 진료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보건복지부는 지역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사업 목적에 보다 부합하도록 의료취약지 및 주요 진료과목에 대한 집중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의 채용지원금 실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총 10개 지방자치단체에 27억 6,400만원이 교부되어 23억 6,700만원이 실집행(실집행률 85.6%)되었는데, 충청남도·경상북도는 5억원 이상 실집행이 이루어진 반면, 충청북도·전라남도·경상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실집행액이 1억원 이하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94] 유일한 광역시인 부산의 경우 2,300만원이 실집행되었음.

[2025년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의 채용지원금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지방자치단체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부산광역시	24	23	95.8
경기도	453	453	100.0
강원특별자치도	465	353	75.9
충청북도	78	66	84.6
충청남도	609	553	90.8
전북특별자치도	232	172	74.1
전라남도	177	87	49.2
경상북도	561	561	100.0
경상남도	99	33	33.3
제주특별자치도	66	66	100.0
합 계	2,764	2,367	85.6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시니어의사의 근무 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총 84명의 시니어의사가 선정되어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56명(66.7%)이고 의료취약지 이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28명(33.3%)이며,

94)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에서 실집행률이 낮은 사유는 인력 미채용, 채용기간 변경 등임.

부산과 충북의 경우 모든 시니어의사가 의료취약지 이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음.

[시니어의사의 근무 지역 현황]

지방자치단체	의료취약지	의료취약지 이외 지역
부산(2명)	-	부산광역시의료원(2명)
경기(13명)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2명), 이천시보건소(1명)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1명), 성남시의료원(1명),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1명),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3명),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1명),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2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1명)
강원(15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의료원(2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의료원(3명), 속초시보건소(1명), 영월군보건소(1명), 정선군보건소(1명), 고성군보건소(1명), 평창군보건의료원(2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의료원(3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의료원(1명)
충북(2명)	-	충청북도 충주의료원(2명)
충남(19명)	충청남도 공주의료원(4명), 충청남도 홍성의료원(4명), 청양군보건의료원(2명), 태안군보건의료원(2명), 충청남도 서산의료원(4명), 서산시보건소(1명)	충청남도 천안의료원(2명)
전북(9명)	전라북도 남원의료원(2명), 정읍아산병원(1명), 정읍시보건소(1명), 부안군보건소(1명), 남원시보건소(1명), 장수군보건의료원(1명)	전라북도 군산의료원(2명)
전남(5명)	전라남도 강진의료원(1명), 구례군보건의료원(1명), 해남군보건소(1명), 영암군보건소(1명), 신안군보건소(1명)	-
경북(16명)	울진군의료원(1명), 영주적십자병원(4명), 상주적십자병원(3명), 경상북도 김천의료원(2명)	경상북도 포항의료원(3명), 경상북도 안동의료원(1명), 동국대학교의과대학 경주병원(2명)
경남(1명)	거창적십자병원(1명)	-
제주(2명)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2명)	-
합계(84명)	56명(**66.7%**)	28명(**33.3%**)

주) 의료취약지: 사업대상기관 소재지가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보고서」의 2차 의료기관 취약 지수 50점 이상 시·군·구 또는 의료취약도 점수 50점 이상 시·군·구인 경우를 말함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시니어의사의 진료과목 현황을 살펴보면, 주요 진료과목을 진료하는 시니어의사는 40명(47.6%)이고 확대 진료과목 및 기타 진료과목을 진료하는 시니어의사는 44명(52.4%)으로, 주요 진료과목 보다 주요 진료과목 이외의 진료과목을 더 많이 진료하고 있음.

[시니어의사의 진료과목 현황]

구 분	주요 진료과	확대 진료과 및 기타 진료과
진료과목 및 인원	- 내과 12명, 외과 9명, 산부인과 4명, 소아청소년과 3명, 정형외과 10명, 가정의학과(보건의료원) 2명	- (확대 진료과) 신경과 3명, 신경외과 4명, 비뇨의학과 5명, 마취통증의학과 8명, 영상의학과 4명, 안과 1명, 이비인후과 2명 - (기타 진료과) 가정의학과(병원) 1명, 성형외과 1명, 병리과 2명, 방사선종양학과 1명, 피부과 1명, 일반의(보건소) 11명
합계(84명)	40명(**47.6%**)	44명(**52.4%**)

주) 진료과 구분은 보건복지부의 「2024년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보고서」에 따른 것임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의료취약지 이외 지역에서 근무하거나 주요 진료과목 이외의 진료과목을 진료하는 경우 만성적인 의사 구인난 해소와 다양한 의료 수요 충족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의 핵심 취지가 지역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 공백 최소화인 점을 고려해 볼 때, 한정된 국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거나 주요 진료과목을 진료하는 경우에 비해 사업 효과성은 낮다고 보임.

시니어의사의 33.3%는 의료취약지가 아닌 지역에서 근무하고 시니어의사의 52.4%가 주요 진료과목 이외의 진료과목을 진료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보건복지부는 의료취약지 근무 여부 및 주요 진료과목 진료 여부에 따라 채용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수도권이나 대도시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주요 진료과목 진료에 국가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고, 도심에 위치한 부산광역시의료원[95]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니어의사의 경우 계속 지원의 직절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95)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12.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 사업: 연례적 이용을 통한 사업비 조달 방지 필요

가. 개 요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 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보건의료 분야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입주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96]의 시설 관리, 청사 보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472억 8,000만원 중 468억 6,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1%)되고 4억 1,700만원이 불용되었음.[97]

[2025년도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오송보건의료행정 타운관리운영	41,540	41,540	370	5,370	47,280	46,863	-	417	44,581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보건복지부는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의 공공요금이 당초 예산 대비 매년 부족하여 연례적 이용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행은 이용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예산 운용의 투명성 저하를 초래하는 부적절한 예산 변경이므로, 예산 편성 시 과거 집행실적 등을 반영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계상함으로써 이용 제도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 사업의 이·전용 등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이용, 전용, 세목조정 등을 통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부족분이 충당되었는데, 특히 공공요금 부족분을 조달하기 위해 본부 인건비 사업 및 보건복지 상담 센터 사업

96)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보건의료 종합 행정·연구 단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등 6개 보건의료 기관이 입주해 있음.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의 시설 안전 및 전반적인 관리·운영은 보건복지부 소속의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음.

97) 일반회계-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3035-300)(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에서 총 53억 7,000만원이 이용(증)되어 전액 집행되었음.

[2025년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 사업의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사업코드)	세목		세부사업 (사업코드)	세목	
세목 조정 (6월 30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 (3035-300)	임차료	44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 (3035-300)	일반수용비	일반수용비 가용예산 부족
		시설장비 유지비	250		유류비	유류비 가용예산 부족
		관리용역비	198		재료비	재료비 가용예산 부족
전용 (8월 12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 (3035-300)	상용임금	500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 (3035-300)	공공요금 및 제세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
		일용임금	19			
		고용부담금	130			
		공사비	500			
		무형자산	90			
이용 (9월 9일)	**본부 인건비 (7001-100)**	**기타직보수**	**4,500**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 (3035-300)**	**공공요금 및 제세**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
세목 조정 (12월 1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 (3035-300)	특근매식비	13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 (3035-300)	일반수용비	일반수용비 가용예산 부족
		임차료	10			
전용 (12월 12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 (3035-300)	고용부담금	90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 (3035-300)	상용임금	공무직 인건비 집행계획 변동
이용 (12월 15일)	**보건복지 상담 센터 (2633-300)**	**공공요금 및 제세**	**470**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 (3035-300)**	**공공요금 및 제세**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
	본부 인건비 (7001-100)	**기타직보수**	**400**			
세목 조정 (12월 22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 (3035-300)	관리용역비	23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 (3035-300)	공공요금 및 제세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

자료: 보건복지부

2023~2025년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 사업의 이용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요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약 50~70억원이 다른 사업에서 이용(증)되어 집

행되었음.

[2023~2025년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 사업의 이용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용 사유
		세부사업 (사업코드)	세목		세부사업 (사업코드)	세목	
2023년	이용 (8월 20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건비 (7006-100)	보수	350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 (3035-300)	공공요금 및 제세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
	이용 (9월 14일)	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보험료 (4934-300)	고용 부담금	6,400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 (3035-300)	공공요금 및 제세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
	이용 (12월 22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기본경비(총액) (7022-200)	복리후생비	4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 (3035-300)	공공요금 및 제세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
			직책수행경비	1			
2024년	이용 (9월 11일)	기초연금지급 (2131-300)	자치단체 경상보조	2,400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 (3035-300)	공공요금 및 제세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
	이용 (10월 16일)	생계급여 (1131-300)	자치단체 경상보조	3,500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 (3035-300)	공공요금 및 제세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
2025년	이용 (9월 9일)	본부 인건비 (7001-100)	기타직 보수	4,500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 (3035-300)	공공요금 및 제세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
	이용 (12월 15일)	보건복지 상담 센터 (2633-300)	공공요금 및 제세	470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 (3035-300)	공공요금 및 제세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
		본부 인건비 (7001-100)	기타직 보수	400			

자료: 보건복지부

입법과목인 장·관·항 간에 상호 융통하는 이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98]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 「국가재정법」[99]에서는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산 집

98)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99)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행 중 발생한 사정 변경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매년 공공요금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관련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이용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하는 관행은 이용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예산 운용의 투명성 저하를 초래하는 부적절한 예산 변경이므로, 예산 편성 시 과거 집행실적 등을 반영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계상함으로써 이용 제도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및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2. 환율변동 · 유가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3.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3. 의료급여 사업: 미지급금 발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가. 개 요

‘의료급여’ 사업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노숙인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8조 8,223억 9,400만원 중 8조 8,222억 6,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7,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400만원이 불용되었음.[100]

[2025년도 의료급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의료급여	8,688,201	8,822,328	66	-	8,822,394	8,822,263	77	54	10,122,834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의료급여 1종 및 2종 수급권자[101]를 대상으로 기관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급여 대상 본인부담금 중 조건을 충족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음.[102]

나. 검토의견

추경을 통해 의료급여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음에도 2,244억 4,900만원의 의료급여

100) 일반회계-의료급여(1132-302)(사회복지정책실)

101)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1종 수급권자와 근로능력이 있는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됨.
-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만으로 구성된 가구, 의사상자·국가유공자 등 다른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만으로 구성된 가구, 이재민, 노숙인
-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다른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102)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국비지원율은 서울 50%, 나머지 자치단체 80%임.

미지급금이 발생하였는데, 의료급여 예산 소요 추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예산 부족으로 인한 미지급금 발생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예산 편성 시 사업 수요 증가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법정의무지출 항목의 부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021~2025년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152만명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4년 155만 9,922명, 2025년 162만 7,778명으로 2023년 이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음.

[2021~2025년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기초1종	1,057,446	1,080,804	1,090,617	1,136,323	1,191,482
기초2종	372,128	357,625	346,313	345,335	357,171
타 법	86,951	83,863	80,111	78,264	79,125
합 계	1,516,525	1,522,292	1,517,041	1,559,922	1,627,778

주 1) 기초1종:「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구성원
2) 기초2종:「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의 구성원
3) 타법: 다른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
4) 각 연도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2021~2025년 의료급여 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실집행액이 2021년 7조 6,486억 9,1000만원에서 2025년 8조 8,000억 8,200만원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2025년에 본예산 부족을 이유로 추경[103]을 통하여 1,341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10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5년 6월 23일 정부 제출, 7월 4일 국회 의결)

[2021~2025년 의료급여 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본예산액	7,678,691	8,121,437	9,096,067	8,935,505	8,686,067	9,837,767
추경예산액 (증액분)	7,678,691	8,121,437	9,096,067	8,935,505	8,820,194 (+ 134,127)	10,120,604 (+ 282,837)
이・전용	△30,000	△239,183	△36,052	-	-	-
불용액	-	-	700,000	500,000	-	-
실집행액	7,648,691	7,882,254	8,360,015	8,435,505	8,800,082	-

주) 2025년의 경우 추경액 8조 8,201억 9,400만원이 전액 교부되었으나, 서울시의 지방비 미확보(분담비율 50%)로 인해 201억 1,200만원이 실집행되지 못하였음

자료: 보건복지부

2018~2025년 의료급여 미지급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6,695억 4,300만원, 1,898억 5,100만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한 데 이어 2025년에도 의료급여 예산 부족으로 2,244억 4,900억원이 지급되지 못하였음.

[2018~2025년 의료급여 미지급금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669,543	189,851	55,296	11,493	-	-	-	224,449

주 1) 2018년, 2019년, 2025년의 미지급금은 예산 부족으로 인한 것이고, 2020년과 2021년의 미지급금은 연말 지급을 위한 전산처리 이후 차년도 지급(행정처리기간 소요)으로 인한 것임

2) 국비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의료급여비용은 시・도에 설치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데[104] 이러한 기금은 예산이 실제 집행액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 그 차이를 적립하거나 보전하여 안정적으로 의료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의료급여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적정 수준을 보유할 필요가 있으나 2025년 의료급여 예산 부족으로 의료급여기금의 적립금이 모두 소진되었음.

104) 「의료급여법」

제10조(급여비용의 부담) 급여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021~2025년 의료급여기금 적립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수 입	7,648,691	7,882,254	8,360,015	8,435,505	8,800,082
지 출	7,332,509	7,689,033	8,222,287	8,846,257	9,525,200
적립금	316,182	193,221	137,728	- (△410,752)	- (△725,118)

주) 국비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본예산 부족을 이유로 추경[105]을 통해 2,828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106] 2026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된 의료급여 수급자 수가 165만 7,251명인데 비해 2026년 4월 기준 실제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166만 2,518명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이미 추경 편성 기준 인원을 초과하였음.

[2026년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2026년 추경 편성 기준 수급자 수	실제 수급자 수			
		2026년 1월	2026년 2월	2026년 3월	2026년 4월
기초1종	1,218,421	1,195,664	1,201,552	1,207,896	1,216,547
기초2종	359,949	357,179	358,392	363,298	366,878
타 법	78,881	78,987	78,944	78,897	79,093
합 계	1,657,251	1,631,830	1,638,888	1,650,091	1,662,518

주 1) 기초1종:「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구성원
2) 기초2종:「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의 구성원
3) 타법: 다른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
자료: 보건복지부

의료급여는「의료급여법」에 따라 국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수급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의무지출 항목으로, 미지급금이 발생하면 중소병원 등이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를 기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중요함.

10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2026년 3월 31일 정부 제출, 4월 10일 국회 의결)

106) 반복적으로 추경을 통해 증액 편성하는 것은 본예산의 부처별 지출한도를 우회적으로 초과한 것으로 최소화될 필요가 있음.

의료급여 예산 소요 추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107] 예산 부족으로 인한 미지급금 발생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예산 편성 시 전년도 진료 청구액, 고령화 추이, 물가상승률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는 한편, 재가 의료급여 사업[108] 등을 통해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지하고 과다한 의료 이용자를 관리하는 등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차단하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107)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2016회계연도 결산, 2017회계연도 결산, 2019회계연도 결산 심의과정에서 국회의 시정조치요구사항이 있었음.

108)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의료적 필요가 낮고 퇴원 시 주거가 있거나 주거 연계가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집에서도 불편함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등의 재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 중임.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전체적인 사업 평가, 운영 지침 마련, 현장 담당자(사례관리사) 교육 등을 담당하는 의료급여사례관리지원단(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을 지원(2026년 예산액 11억 1,600만원)하고 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 출〉

14. 긴급돌봄 지원 사업: 지방비 확보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추경 편성으로 인한 추경 증액분 전액 불용 지양 필요

가. 개 요

‘긴급돌봄 지원’ 사업은 주 돌봄자의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사람에게 한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41억 4,800만원 중 39억 2,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4.6%)되고 2억 2,500만원이 불용되었음.[109)]

[2025년도 긴급돌봄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39,090	49,439	-	-	49,439	48,711	-	728	53,524
긴급돌봄 지원	3,500	4,148	-	-	4,148	3,923	-	225	5,107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 사업은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차등화되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110)]은 면제되고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을 기본원칙으로 지방자치단체별 본인부담률이 차등 설정되어 있음.[111)]

10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2635-305)(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110) 차상위계층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잠재적 빈곤층을 말함.

111)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는 본인부담률이 10%이고,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이면서 160% 이하자는 본인부담률이 20~25%임.

주된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기본돌봄 서비스(재가돌봄, 가사·이동 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서비스 신청자가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를 지급받아 결제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2026년 현재 15개 시·도[112] 및 164여개 시·군·구에서 참여하고 있음.[113]

나. 검토의견

보건복지부는 추경을 통해 긴급돌봄 지원 사업비 6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미확보로 인해 추경 증액분 전액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확보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미흡으로 발생한 부적절한 사례이므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및 지방비 확보 가능성을 감안한 보조금 예산 편성이 필요함.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114]에 긴급돌봄 지원 사업을 편성하면서 돌봄 서비스 계획 대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돌봄 지원이 필요한 국민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본예산(35억원) 대비 6억 4,800만원(18.5%) 증액한 4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음.

2025년 긴급돌봄 지원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41억 4,800만원 중 39억 2,300만원이 교부되고 2억 2,500만원은 불용되었으며, 교부된 39억 2,300만원 중 33억 3,400만원이 실집행되고 나머지 5억 8,900만원은 불용되었음.

112)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유사한 자체 사업이 있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고 있음.

113)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사업비 분담비율은 국가 70%, 시·도 15%, 시·군·구 15%로, 성장촉진지역(8개 시·도의 70개 시·군·구)의 경우 국가 80%, 시·도 10%, 시·군·구 10%임.

11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 6월 23일 정부 제출, 7월 4일 국회 의결

[2025년 긴급돌봄 지원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본예산액	추경액	집행액	불용액	실집행액	불용액	불용액 발생 사유
3,500	4,148 (648 증액)	3,923	225	3,334	589	국비 추경 확보 이후 지방비 추경 및 교부 절차 등을 거쳐 실제 예산 집행까지의 시차 발생에 따른 집행 지연

주) 총 불용액은 8억 1,400만원(보건복지부 불용액 2억 2,500만원, 지방자치단체 불용액 5억 8,900만원)임.
자료: 보건복지부

2025년 긴급돌봄 지원 사업의 총 불용액은 8억 1,400만원인데 이는 추경 증액분 6억 4,800만원보다 많은 규모로, 보건복지부는 추경을 통해 증액한 예산을 전액 사용하지 못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액은 본예산액에도 미치지 못하였음.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30%(성장촉진지역은 20%)의 사업비를 부담하는 사업의 특성상 추경을 통해 국비가 증액된 비율만큼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비 증액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기 때문임.

긴급돌봄 서비스의 특성상 신속하고 시의성 있는 서비스의 제공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추경을 통해 충분한 돌봄 지원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은 있었다고 보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확보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미흡으로 추경 증액분을 전액 불용한 것은 긴급한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하려는 추경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부적절한 사례임.

또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주로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였는데 재원 마련을 위한 조달비용이나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추경 증액분의 전액 불용은 재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므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부는 2026년에도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돌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추경[115]을 통해 8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및 지방비 확보 시간을 고려하여 보조금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1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 3월 31일 정부 제출, 4월 10일 국회 의결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손익계정)】

〈세　입〉

15. 전년도세계잉여금: 세계잉여금 과소 계상에 따른 일반회계전입금 과다 수납 방지 필요

가. 개　요

‘전년도세계잉여금’은 국립나주병원의 전년도 세입 대비 세출 잔액의 다음연도 세입 이입액을 계상하는 비목으로, 2025년도 징수결정액 21억 8,200만원이 전액 수납(수납률 100.0%)되었음.[116]

[2025년도 전년도세계잉여금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전년도세계잉여금	1,929	1,929	2,182	2,182	-	-	100.0	94

주 1) 국립나주병원(책임운영기관)의 전년도세계잉여금임
2)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보건복지부는 전년도세계잉여금을 연례적으로 과소 계상함에 따라 일반회계전입금을 과다하게 편성하고 있으므로, 세입 예산 편성 시 수입 규모, 지출 수요 등을 보다 면밀하게 추계하여 적정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117]에 따르면,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116)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나주병원 손익계정)-전년도세계잉여금(89-893)(국립나주병원)

117)「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운영 관련 수입

세입은 사업의 운영 관련 수입, 전년도 이월금,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하고,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중에서 결손 부분을 보충하도록 하고 있음.

2021~2026년 국립나주병원의 전년도세계잉여금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매년 예산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2026년의 경우 9,400만원이 예산으로 계상되었으나 실제로는 19억 6,300만원이 수납되어 예산액 대비 수납률이 2,088.3%에 달함.[118]

[2021~2026년 국립나주병원의 전년도세계잉여금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 도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A)			
2021년	1,464	1,464	1,948	1,948	**133.1**
2022년	606	606	2,005	2,005	**330.9**
2023년	864	864	3,224	3,224	**373.2**
2024년	1,450	1,450	3,003	3,003	**207.1**
2025년	1,929	1,929	2,182	2,182	**113.1**
2026년	**94**	**94**	**1,963**	**1,963**	**2,088.3**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119]에 따라 책임운영기관특

2. 전년도 이월금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비용 부담금
5. 일시 차입금
6. 그 밖에 사업과 관련된 수입

제38조(이익 및 손실의 처분) ① 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중에서 결손 부분을 보충한다.

② 특별회계 결산의 결과 기관장의 경영능력으로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심의회 또는 제49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가 인정한 이익금은 사업운영계획 기간 중 그 계획에 정하여진 용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 결산의 결과 생긴 결손이 이익잉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은 이월 결손으로 정리한다.

118) 이에 보건복지부는 기관장 공석에 따른 인건비 미지급, 정년퇴직 직원 공로 연수 기간 축소 운영, 신규직원 미채용 등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함.

별회계의 세출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전입금 예산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해당 회계연도 세출예산에서 자체수입 예산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되므로[120] 자체수입 중 하나인 전년도세계잉여금 예산이 과소하게 편성될 경우 일반회계전입금 예산은 과다 편성됨.

2021~2026년 국립나주병원의 일반회계전입금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전입금은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26년도 예산액은 190억 2,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7,700만원 증가함.

[2021~2026년 국립나주병원의 일반회계전입금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 도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A)			
2021년	13,114	13,114	13,114	13,114	100.0
2022년	14,658	14,658	14,658	14,658	100.0
2023년	15,049	15,049	15,049	15,049	100.0
2024년	16,521	16,521	16,521	16,521	100.0
2025년	17,152	17,152	17,152	17,152	100.0
2026년 (7월 8일 기준)	19,029	19,029	19,029	12,217	64.2

자료: 보건복지부

전년도세계잉여금의 연례적 과소 계상으로 인하여 일반회계전입금이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으므로, 세입 예산 편성 시 보다 정확한 추계로 전년도세계잉여금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계상할 필요가 있음.

---

119)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 수입만으로는 운영이 곤란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평가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상적(經常的) 성격의 경비를 일반회계 등에 계상하여 특별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120) 2026년도 일반회계전입금 예산 산출내역: 일반회계전입금 190억 2,900만원 = 세출예산 262억 2,300만원 - 자체수입 71억 9,400만원

〈세 출〉

16. 국립정신건강센터 수입대체경비 사업: 초과수입으로 지출이 불가능한 인건비성 경비 집행 지양 필요

가. 개 요

‘국립정신건강센터 수입대체경비’ 사업은 정신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재활 훈련, 정신재활치료 의료인력(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양성을 위한 임상실습, 정신건강 관련 외부수탁연구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2억 4,900만원 중 11억 9,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4%)되고 2,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800만원이 불용되었음.[121]

[2025년도 국립정신건강센터 수입대체경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립정신건강센터 수입대체경비	62	62	-	1,187	1,249	1,191	20	38	137

주 1)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 이·전용 등 금액은 초과지출승인액임

2025년도 국립정신건강센터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세입 예산액은 6,200만원이고 수납액은 13억 8,700만원임.

[2025년도 국립정신건강센터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세입·세출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세 입		세 출		
	예산액	수납액	예산액	초과지출승인액	집행액
2025년	62	1,387	62	1,187	1,191

주 1) 예산액은 추가경정예산 기준
2) 세입은 기타 잡수입임
자료: 보건복지부

121)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정신건강센터 손익계정)-국립정신건강센터 수입대체경비(3731-650)(국립정신건강센터)

나. 검토의견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지출승인액으로 외부수탁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원 등 기간제근로자에게 인건비성 경비를 집행하였는데, 이는 법령과 지침에 반하는 부적절한 사례이므로, 보건복지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초과수입의 지출가능 범위 내에서 엄격히 집행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025년 국립정신건강센터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초과지출승인액으로 집행한 인건비성 경비 현황을 살펴보면, 일용임금으로 기간제근로자 6명에게 2억 200만원이 집행되었고, 시험연구비로 기간제근로자(연구원) 8명에게 3억 9,600만원이 집행되었음.

[2025년도 초과지출승인액으로 집행한 인건비성 경비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세목	근무형태	인원	집행액			
			임금	퇴직금	4대 보험료	합 계
일용임금	기간제근로자	6	182	-	20	202
	현장훈련생	12	8	-	-	8
시험연구비	기간제근로자(연구원)	8	331	32	33	396

주) 현장훈련생은 정신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재활 훈련 중 바리스타 과정 및 그린 코디네이터(식물을 활용한 인테리어 등 전문가) 과정의 훈련생임

자료: 보건복지부

2025년 국립정신건강센터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초과지출승인액으로 집행한 인건비 지급 대상 기간제근로자의 근무 현황을 살펴보면, 주차장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는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였고, 외부수탁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원 중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자는 4명, 2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자는 1명, 3년 이상 4년 미만 근무자는 2명임.

[2025년도 초과지출승인액으로 집행한 인건비 지급 대상 기간제근로자의 근무 현황]

(단위: 명)

세목	업무	근무연수 / 근무형태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합계
일용임금	주차장 관리	기간제근로자	-	1	-	-	1
	정신건강 전문요원 보수교육 지원	기간제근로자	1	-	-	-	1
	학교방문 사업	기간제근로자	4	-	-	-	4
시험연구비	외부수탁연구과제 수행 (연구원)	기간제근로자	1	4	1	2	8

주) 2026년 6월 18일 현재 주차장 관리 및 정신건강 전문요원 보수교육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는 없음(퇴직후 미채용)

자료: 보건복지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122]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123]에서는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수입금을 일시적인 업무 급증으로 사용한 일용직 임금, 초과수입 증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 등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일용임금 및 보상적 경비 이외의 인건비성 경비[124]는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수입으로 지출이 불가능함.

그러나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지출승인액으로 외부수탁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원 등 기간제근로자에게 인건비성 경비를 집행하였는데, 이는 이러한 법령과 지침에 반하는 부적절한 사례임.[125]

12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① 기관장은 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측되는 수입(이하 "초과수입금"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금을 해당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와 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접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12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초과수입금의 직접 사용)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접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 국내 여비, 시설유지비 및 보수비
2. 일시적인 업무 급증으로 사용한 일용직 임금
3. 초과수입 증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
4. 그 밖에 초과수입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
② 초과수입금의 사용경비별 집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124)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인건비성 경비라 함은 예산과목에 관계 없이 고용관계에 있는 소속 직원에게 고유직무수행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비를 말하되 실비변상적 경비는 제외함.

보건복지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초과수입의 지출가능 범위 내에서 엄격히 집행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는 일용임금[126]과 시험연구비[127]가 아닌 상용임금[128]으로 집행해야 할 성질의 경비이므로 예산 편성 시 상용임금에 계상하여 예산이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129]

125) 이에 대해 국립정신건강센터는 향후 예산 편성 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는 상용임금에 계상하겠다고 함.

126) 일용임금: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127) 시험연구비: 국가시험연구기관의 시험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비로, 일용임금,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임차료, 유류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여비, 고용부담금 등 10개 경비가 통합된 비목

128) 상용임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20.)」에 의한 무기계약직 및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포함)에 대한 보수

129)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17. 국립재활원 연구, 교육 및 실습 사업: 연례적 초과지출승인 규모 과다 발생 방지 필요

가. 개 요

‘국립재활원 연구, 교육 및 실습’ 사업은 재활 관련 임상실습, 지역사회 중심 재활교육, 외부수탁연구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6억 3,100만원 중 34억 3,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4.7%)되고 8,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 300만원이 불용되었음.[130]

[2025년도 국립재활원 연구, 교육 및 실습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립재활원 연구, 교육 및 실습	226	226	22	921 △921 3,383	3,631	3,439	89	103	1,584

주 1)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 이·전용 등 금액 중 33억 8,300만원은 초과지출승인액임

나. 검토의견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지출승인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세입·세출 예산 편성 시 전년도 수입 수납실적·향후 여건변화 및 집행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있음.

국립재활원 연구, 교육 및 실습 사업은 물리치료·간호 및 재활체육 등 관련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실습, 전국 보건소 및 민간재활의료기관의 재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국립재활원 내 재활병원부 및 재활연구소가 국가행정기관·정부출연기관 및 민간기관 등으로부터 연구사업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수탁연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입대체경비로 운영되고 있음.

130)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재활원 손익계정)-국립재활원 연구, 교육 및 실습(수입대체경비)(1851-651)(국립재활원)

2021~2025년 국립재활원 연구, 교육 및 실습 사업의 초과수입 및 초과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초과지출승인액은 2021년 24억 5,300만원, 2022년 28억 5,000만원, 2023년 37억 3,800만원, 2024년 31억 4,700만원, 2025년 33억 8,3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2021년 845.6%, 2022년 904.7%, 2023년 1,241.8%, 2024년 1,427.2%, 2025년 1,521.7%에 달함.

[2021~2025년 국립재활원 연구, 교육 및 실습 사업의 초과수입 및 초과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연 도	세 입				세 출			
	예산액 (A)	수납액 (B)	초과수입액 (B-A)	수납률 (B/A)	예산액 (C)	초과지출 승인액	집행액 (D)	집행률 (D/C)
2021년	298	2,508	2,210	703.0	298	**2,453**	2,520	**845.6**
2022년	406	2,854	2,448	703.0	301	**2,850**	2,723	**904.7**
2023년	514	3,630	3,116	706.2	297	**3,738**	3,688	**1,241.8**
2024년	524	3,281	2,757	626.1	224	**3,147**	3,197	**1,427.2**
2025년	224	3,596	3,372	1,605.4	226	**3,383**	3,439	**1,521.7**

주 1) 예산액은 추가경정예산 기준
2) 세입은 기타 잡수입임
자료: 보건복지부

수입대체경비는 예견하기 어려운 행정 서비스 수요 급증 시 해당 세입으로 즉시 경비를 충당함으로써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나, 「국가재정법」[131]에 따른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이를 남용할 경우 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용될 필요가 있음.

수입대체경비 예산을 과소계상할 경우 부처의 지출한도 내에서 타 사업 예산 확보가 용이하고 국회 사전심의를 받지 않는 초과지출을 통해 집행의 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는데, 이러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관행은 수입대체경비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도 수입대체경비의 연례적 과소계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

131)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점을 감안해 볼 때, 예산 편성 시 전년도 수입 수납실적, 향후 여건변화,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초과지출승인 규모가 최소화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18. 국립나주병원 교육 및 실습 수입대체경비 사업: 예산 미편성 사업 수행 개선 필요

가. 개 요

‘국립나주병원 교육 및 실습 수입대체경비’ 사업은 간호학생에 대한 임상실습, 재원환자 직업재활 교육훈련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억 7,300만원 중 2억 2,200만원이 집행(집행률 81.4%)되고 5,100만원이 불용되었음.[132]

[2025년도 국립나주병원 교육 및 실습 수입대체경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립나주병원 교육 및 실습 수입대체경비	59	59	-	214	273	222	-	51	59

주 1)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 이·전용 등 금액은 초과지출승인액임

나. 검토의견

보건복지부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게임과몰입 힐링센터 운영 사업, 대안교육위탁기관 운영 사업 등을 수입대체경비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수입대체경비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해당 사업비를 계상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음.

2025년 국립나주병원 교육 및 실습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세입 및 세출 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게임과몰입 힐링센터 운영 사업, 직장인 정신건강 사업 운영 사업,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 사업을 수입대체경비로 수행하면서 각각 3,000만원, 1,300만원, 1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음.

132)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나주병원 손익계정)-국립나주병원 교육 및 실습 수입대체경비(3831-650)(국립나병원)

[2025년 국립나주병원 교육 및 실습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세입 및 세출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세 입			세 출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예산액	초과지출 승인액	집행액
직업재활훈련	39	69	69	39	28	59
임상실습	20	28	28	20	-	10
게임과몰입 힐링센터 운영	**-**	**31**	**31**	**-**	**31**	**30**
직장인 정신건강사업 운영	**-**	**30**	**30**	**-**	**28**	**13**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	**-**	**110**	**110**	**-**	**127**	**110**

주 1) 예산액은 추가경정예산 기준
2) 세입은 기타 잡수입임
자료: 보건복지부

국립나주병원은 2014년 게임문화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남·광주 지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게임과몰입 상담 및 치유를 지원하는 게임과몰입 힐링센터 운영 사업을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고, 2015년 나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 등과 업무협약을 맺은 후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안심클리닉 등 직장인 정신건강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치료나 심리·정서적 어려움으로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2016년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 관련 사업을 추진 중임.

국립나주병원은 이러한 사업들을 약 10년 동안 수행하면서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초과지출승인을 통해 사업비를 전액 조달하고 있는데, 수입대체경비는 세입 예산을 초과하는 수입이 있는 경우 그 초과수입금을 그 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경비 등에 초과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133] 당초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

133)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① 기관장은 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측되는 수입(이하 “초과수입금”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금을 해당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와 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접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되어 있지 않은 사업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수입대체경비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예산 미편성 사업을 장기적으로 수행할 경우 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게임과몰입 힐링센터 운영 사업, 직장인 정신건강 사업 운영 사업,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음.

【국민건강증진기금】

〈지　출〉

19. 혈액원 현대화 지원 사업: 부적절한 보조금 교부로 인한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방지 필요

가. 개　요

‘혈액원 현대화 지원’ 사업은 국가핵심기반인 혈액원이 비상사태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국가혈액사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혈액원 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13억 5,8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134)135)]

[2025년도 혈액원 현대화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혈액안전관리	10,912	10,912	66	10,978	10,561	391	26	12,077
혈액안전관리체계 구축	7,103	7,103	-	7,103	7,103	-	-	8,514
혈액원 현대화 지원	1,358	1,358	-	1,358	1,358	-	-	3,075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한마음혈액원의 중부혈액원 건립을 위한 용지구입비 및 건축공사비는 연내 집행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았음에도 보건복지부는 관련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였고 교부된 보조금은 전액 실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었는데, 이러한 보조금의 전액 이월이 2024년과 2025년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향후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전

134) 국민건강증진기금-혈액안전관리(2734-302)(보건의료정책실)

135) 민간자본보조사업이며, 국비지원율은 50%임.

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2024년 및 2025년 한마음혈액원[136] 중부혈액원 건립[137] 사업 실집행내역을 살펴보면, 한마음혈액원의 중부혈액원 건립을 위해 2024년 설계비 4억원, 2025년 용지구입비 및 건축공사비 13억 5,800만원이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었으나 모두 당해 연도에 실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전액 이월되었음.

[2024년 및 2025년 한마음혈액원 중부혈액원 건립 사업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연 도	보건복지부			한마음혈액원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당초	수정 (A)						교부 현액	집행액 (B)			
2024년	400	400	400	400	-	400	-	400	-	400	-	-
2025년	1,358	1,358	1,358	1,358	400	1,758	400	1,358	-	1,358	-	-

자료: 보건복지부

사업부지가 있는 옥천군의 지형도면 고시[138] 및 분양공고가 지연되면서 2025년 9월 26일에 설계업체와 설계용역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사업 지연 상황에서 2025년 9월 24일과 10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계획액(용지구입비 및 건축공사비) 13억 5,800만원 전액을 교부하였음.[139]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140] 및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

136) 한마음혈액원은 직장 건강검진을 담당하는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혈액원으로, 대한적십자사와 별도로 운영되는 민간 혈액원임.

137) 목적: 중부권 거점 혈액 공급망 확보
위치: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안리 12, 124번지 일원(대지 3,300㎡)
규모: 건물 2,600㎡(연면적)
사업기간: 2024~2027년
총 사업비: 103억 740만원(국고 51억 5,370만원)

138) 지형도면 고시: 행정청이 용도지역·지구 등의 토지 이용 규제를 지도 위에 명확히 표시하여 효력을 발생시키는 법적 절차

139) 2025년 9월 24일 교부액: 6억 7,900만원
2025년 10월 24일 교부액: 6억 7,900만원

140)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

르면,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설계업체의 기본설계가 2025년 10월에 시작된 점을 감안해 볼 때, 보건복지부가 9월과 10월에 교부한 용지구입비 및 건축공사비는 연내 집행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보건복지부는 향후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응급의료기금】

〈지　출〉

20.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 보조사업 수행 여건에 대한 검토 미흡으로 인한 사업 지연 방지 필요

가. 개　요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은 고위험 산모・신생아의 진료를 위해 중증모자의료센터, 권역모자의료센터, 지역모자의료센터 등을 지원하고 모자의료 전원・이송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142억 6,600만원 중 139억 4,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7%)되고 2,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억원이 불용되었음.[141)142)]

[2025년도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12,434	14,196	70	14,266	13,944	21	300	15,388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보건복지부는 사업연도 중간에 모자의료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사전 절차 이행, 지방비 부담 가능성 등 보조사업 수행 여건에 대한 검토 미흡으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비 대부분을 집행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반하는 부적절한 사

141) 응급의료기금-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2833-319)(보건의료정책실)

142) 중증모자의료센터, 권역모자의료센터, 지역모자의료센터 등에 대한 지원은 국비지원율이 50%(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이고, 모자의료 전원・이송체계 구축은 국비지원율이 100%(국립중앙의료원 민간경상보조사업)임.

레이므로, 철저한 사업 계획 수립과 엄격한 사전 검토를 통해 보조금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부는 2025년 5월 산모와 신생아가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기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및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중증모자의료센터, 권역모자의료센터, 지역모자의료센터로 재구성하고 모자의료 전원·이송 전담팀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모자의료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함.

[모자의료 전달체계 개편 개요]

개편 전 2단계 구조	개편 후 3단계 구조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중증 질환, 고령 산모, 다태아 출산 등 고위험 임산부와 태아를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최상위 거점 센터 -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 집중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신생아를 위해 신생아중환자실(NICU)을 운영하는 전문 지역 센터	- 중증모자의료센터 ·2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최중증 산모·신생아 진료 담당 - 권역모자의료센터 ·기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전환하거나 신규 설치하여 권역 거점센터 역할 수행 - 지역모자의료센터 ·기존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에 산과 기능을 강화·연계하여 지역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 담당

이에 따라 2025년 5월 30일 중증모자의료센터로 서울특별시 2개 기관(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2025년 8월 19일 권역모자의료센터로 서울특별시 1개 기관(서울성모병원)과 제주특별자치도 1개 기관(제주대학교병원)을 신규로 선정하고 서울특별시에 15억원, 제주특별자치도에 5억원을 교부함.[143]

또한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144]을 통해 당초 계획에 없던 모자의료 전원·이송 체계 구축 사업비 10억 1,200만원을 계상하여 국립중앙의료원에 교부함.[145]

2025년 모자의료 전달체계 개편 관련 사업 실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에 교부된 15억원과 제주특별자치도에 교부된 5억원은 모두 이월되었으며, 국립중앙의료

143) 서울특별시 교부일: 2025년 10월 30일(10억 5,000만원), 2025년 11월 3일(4억 5,0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 교부일: 2025년 10월 21일(3억 5,000만원), 2025년 10월 24일(1억 5,000만원)

144) 정부 제안일: 2025년 6월 23일
국회 의결일: 2025년 7월 4일

145) 국립중앙의료원 교부일: 2025년 8월 26일(7억 5,900만원), 2025년 10월 31일(2억 5,300만원)

원에 교부된 10억 1,200만원 중 2억 5,200만원이 실집행(실집행률 24.9%)되고 7억 3,500만원은 이월되었음.

[2025년 모자의료 전달체계 개편 관련 사업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주체	보건복지부			사업시행주체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당초	수정 (A)						교부 현액	집행액 (B)			
서울특별시	1,500	1,500	1,500	1,500	-	1,500	-	1,500	-	**1,500**	-	-
제주특별자치도	500	500	500	500	-	500	-	500	-	**500**	-	-
국립중앙의료원	-	1,012	1,012	1,012	-	1,012	252	1,012	252	**735**	25	24.9

자료: 보건복지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연초 계획에 없던 사업을 사업연도 중간에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사전 협의 부족으로 지방비 확보가 어려워 사업기간 내 집행이 불가능하였고, 기금운용계획변경 이후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의 사전검토 등 절차 이행에 약 4개월이 소요되어 집행 지연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함.

보건복지부는 사업연도 중간에 모자의료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사전 절차 이행, 지방비 부담 가능성 등 보조사업 수행 여건에 대한 검토 미흡으로 당해연도 내에 사업비 대부분을 집행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146] 및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147]에 반하는 부적절한 사례이므로, 철저한 사업 계획 수립과 엄격한 사전 검토를 통해 관련 사업비를 연초 계획에 반영하고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당해연도 내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보조금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46)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는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음.

147)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는 사전절차이행 등 보조사업 수행여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사업비를 반영하고, 지방비 부담 가능성을 검토하여 자치단체가 당해 연도 내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련 사업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21.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 권역외상센터의 법령상 인력기준 미충족 문제 개선 필요

가. 개 요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은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권역외상센터에 전담인력 인건비, 시설·장비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675억 800만원 중 668억 6,0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0%)되고 3,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6억 1,400만원이 불용되었음.[148]

[2025년도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66,370	67,238	270	67,508	66,860	34	614	82,600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17개 권역외상센터 중 법령상 인력기준 미충족 센터가 4개소이고 이 중 3개소는 2년 이상 그 기준에 미달함에도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률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시정명령 등 재재조치를 실시하고 외상환자 진료 역량 확보를 위한 권역외상센터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149]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외상환자의 진료, 외상의료에

148) 응급의료기금-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2833-317)(보건의료정책실)

14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상환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외상환자의 진료
2. 외상의료에 관한 연구 및 외상의료표준의 개발
3. 외상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의 교육훈련
4. 대형 재해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전국 17개소의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하고,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권역외상센터의 전담인력 인건비·당직비·교육훈련비 및 노후장비 교체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권역외상센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150]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51]에 따라 일정한 요건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인력기준을 살펴보면 외과, 심장혈관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7개 진료과목의 외상환자 전담 전문의를 각 1명 이상 두되, 응급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3개 진료과목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내 해당과의 전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외상의료 관련 업무

제30조의4(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 외상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효과적인 외상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5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지정) ② 권역외상센터는 외상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응급의료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구체적인 요건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외상환자 전용 중환자 병상 및 일반 병상
2. 외상환자 전용 수술실 및 치료실
3. 외상환자 전담 전문의
4. 외상환자 전용 영상진단장비 및 치료장비
5. 그 밖에 외상환자 진료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③ 그 밖에 권역외상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5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요건 및 지정기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도별로 1개소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의 생활권, 외상환자의 발생 수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권역외상센터의 요건과 지정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③ 권역외상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권역외상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권역외상센터시설의 도면 1부
2. 권역외상센터 시설·인력·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중증외상환자(이하 “중증외상환자”라 한다)의 이송체계 구축계획서 1부
4. 중증외상환자 진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1부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외상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별표 7의2의 요건과 지정기준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그 요건과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권역외상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7개 권역외상센터별 전문의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법령상 인력기준을 충족한 센터는 13개소이고, 목포한국병원, 울산대병원, 원광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등 4개 센터는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목포한국병원, 울산대병원, 원광대병원 등 3개 센터는 2년 이상 인력기준에 미달하고 있음.

[17개 권역외상센터별 전문의 운용 현황]

(단위: 명, 개)

센 터	외상환자 전담 전문의 수							법령상 인력기준	
	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충족 여부	미충족 진료과목수
목포한국병원	-	2	-	-	3	-	-	x	3
길병원	13	2	1	3	1	1	-	o	-
단국대병원	7	4	1	1	-	-	-	o	-
원주기독병원	2	1	2	1	1	-	-	o	-
울산대병원	7	2	-	1	2	-	-	x	1
전남대병원	5	1	1	2	1	-	-	o	-
부산대병원	7	2	3	5	1	-	-	o	-
대전을지대병원	4	1	1	1	-	-	-	o	-
아주대병원	11	2	5	1	1	3	1	o	-
충북대병원	3	3	2	2	-	-	-	o	-
의정부성모병원	5	1	1	1	-	1	-	o	-
안동병원	2	3	2	3	-	-	-	o	-
경북대병원	5	2	2	1	-	-	-	o	-
원광대병원	1	-	-	1	1	-	-	x	2
제주한라병원	4	2	1	1	4	1	-	o	-
국립중앙의료원	5	2	1	1	-	3	-	o	-
경상국립대병원	1	-	1	1	-	-	-	x	1

주 1) 2026년 4월 30일 기준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의2(권역외상센터의 요건과 지정기준)의 인력기준에 따르면, 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의 외상환자 전담 전문의를 각 1명 이상 두어야 하고, 응급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의 전문의(종합병원 내 해당과의 전문의 업무 수행 가능)를 각 1명 이상 두어야 함

자료: 보건복지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비수도권의 경우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구인난 및 이로 인해 가중되는 잦은 당직 등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해 법령상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센터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152]에 따르면, 권역외상센터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권역외상센터 지정 취소 및 재정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령상 인력기준에 미달한 권역외상센터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실시하여 외상환자 진료 역량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와 함께 외상환자 전담 전문의는 외상환자의 응급의료를 위한 핵심적인 사항인 점을 감안하여, 권역외상센터에 지원되는 인건비가 7개 진료과목의 부족한 외상환자 전담 전문의 충원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교부 조건을 명시하는 한편, 외상환자 전담 전문의 인력기준 충족 여부 및 충족 기간 등을 권역외상센터 평가[153] 시 중요 평가 항목으로 재설정하여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평가보조금)[154]의 차등 지급을

15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지역외상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중 해당 지정권자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지역외상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 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6조제1항, 제17조제4항 및 제30조의4에 따른 재정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지역외상센터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23조에 따른 응급의료수가를 차감할 수 있다.

15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등의 시설·장비·인력, 업무의 내용·결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대상이 되는 응급의료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를 위하여 해당 응급의료기관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방법, 평가주기, 평가결과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154) 2025년 평가보조금의 경우 2024년 권역외상센터 평가 결과에 따라 A등급은 5억원, B등급은 2억원을 지급하고 C등급은 평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음. 길병원, 단국대병원, 부산대병원, 아주대병원이 A등급으로 5억원을 지급받았고, 원주기독병원, 울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북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안동병원, 경북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이 B등급으로 2억원을 지급받았음.

22.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 사업: 응급원격협진망 앱의 폐기 등 재검토 필요

가. 개 요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 사업은 취약지 응급환자의 처치·전원 및 영상판독 등 자문을 위하여 거점병원과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7억 4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155]

[2025년도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22,810	22,810	-	22,810	22,592	-	218	42,446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	754	704	-	704	704	-	-	754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취약지 응급원격협진망을 사용하는 응급의료기관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응급원격협진망 앱을 통한 협진 실적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므로, 보건복지부는 응급원격협진망 활성화를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활용도가 저조한 응급원격협진망 앱은 타당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폐기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부는 2015년 응급원격협진망[156]을 개발하여 대도시 거점병원의 전문 인력(응급의학과 및 배후 진료과 전문의)과 농어촌 등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의

155) 응급의료기금-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2833-316)(보건의료정책실)

156) 응급원격협진망: 응급환자의 기본정보 및 CT 등 영상정보의 실시간 전송·공유가 가능한 응급원격협진 시스템(PC 웹 및 모바일 앱)으로 2017년에 전원 기능이 추가되어 응급전원협진망으로 개편됨.

사 간 응급원격협진을 지원하고 있음.

응급원격협진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뢰기관(취약지 응급의료기관)과 자문기관(거점병원)은 취약지 응급원격협의진찰 협약을 체결한 후 해당 시·도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중앙의료원)에 등록함으로써 취약지 응급원격협진망을 사용하게 되는데, 7개 지역에서 75개소의 의뢰기관이 등록되어 있음.

[취약지 응급원격협의진찰 협약 체결 현황]

지역	거점병원 (자문기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의뢰기관)
인천	가천대길병원	강화병원, 비에스종합병원, 백령병원, 연평보건지소, 덕적보건지소 등 5개소
	인하대학교병원	백령병원
강원	춘천성심병원	온재병원, 홍천아산병원, 인성병원, 양구성심병원, 인제고려병원 등 5개소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삼척의료원, 평창군보건의료원, 속초의료원, 영월의료원, 제천서울병원, 명지병원, 원주의료원, 세종여주병원, 충주의료원, 건국대학교충주병원 등 10개소
충북	충북대병원	보은한양병원, 중앙제일병원 등 2개소
충남	단국대병원	태안군보건의료원, 홍성의료원, 서산중앙병원 등 3개소
전남	목포한국병원	강진의료원, 영광종합병원, 영광기독병원, 진도한국병원, 무안병원, 신안대우병원, 해남우리종합병원, 해남한국병원, 목포시의료원, 완도대성병원, 해남종합병원, 흑산면보건지소, 가거도보건지소, 홍도보건지소, 암태면보건지소, 하의면보건지소, 완도군노화읍보건지소, 조도보건지소, 신의면보건지소, 장산면보건지소, 영암한국병원 등 21개소
	성가롤로병원	벌교삼호병원, 고흥종합병원, 녹동현대병원, 고흥윤호21병원, 광양사랑병원, 구례병원, 여천전남병원, 여수전남병원, 여수제일병원 등 9개소
경북	안동병원	울진군의료원, 영덕아산병원, 안동의료원, 상주적십자병원, 상주성모병원, 영양병원, 청송군보건의료원, 봉화해성병원, 예천권병원, 영주기독병원, 성누가병원, 명품회복병원, 영남제일병원, 문경중앙병원, 영주적십자병원, 영주자인병원 등 16개소
제주	제주한라병원	혜인의료재단한국병원, 서귀포열린병원, 서귀포의료원 등 3개소
총 10개소		총 75개소(중복 1개소 포함)

주) 2026년 5월 1일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보건복지부고시)에 따르면,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지역은 대구·인천·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및 제주 등 11개 지역으로,[157] 대구·경기·전북 및 경남 등 4개 지역은 취약지 응급

원격협진망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 사업이 개시된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취약지 응급원격협진망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해당연도에 1건 이상 응급원격협진망을 사용한 응급의료기관 비율은 2015년 80.8%에서 2025년 19.7%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20215~2025년 취약지 응급원격협진망 사용 현황]

(단위: 개소, %)

연 도	응급원격협의진찰 협약 체결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수(A)	응급원격협진망 사용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수(B)	응급원격협진망 사용 기관 비율(B/A)
2015년	26	21	**80.8**
2016년	74	39	**52.7**
2017년	67	39	**58.2**
2018년	71	30	**42.3**
2019년	74	49	**66.2**
2020년	74	39	**52.7**
2021년	76	32	**42.1**
2022년	76	21	**27.6**
2023년	76	18	**23.7**
2024년	74	15	**20.3**
2025년	76	15	**19.7**

주) 응급원격협진망 사용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수: 해당연도에 1건 이상 사용 실적이 있는 응급의료기관 수
자료: 보건복지부

157)「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의료취약지의 지정·고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주기적으로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의 분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분석하여야 한다.
1. 인구 수, 성별·연령별 인구 분포, 소득 등에 따른 지역 내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2. 의료인력 · 의료기관의 수 등 지역 내 의료공급에 관한 사항
3.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의료기관 접근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 공급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분석 결과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료취약지를 지정할 때에는 부족한 의료서비스의 대상 및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의료취약지(이하 "의료취약지"라 한다)에 대하여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의료 인력의 공급에 대한 지원
2.「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의 보조 등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취약지 지정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응급원격협진망 시스템은 PC 웹과 모바일 앱으로 구분되는데, 2015~2025년 취약지 응급원격협진망 시스템별 의뢰 현황을 살펴보면, 모바일 앱을 통한 의뢰는 저조한 수준으로 2025년에는 2건에 불과하였음.

[2015~2025년 취약지 응급원격협진망 시스템별 의뢰 현황]

(단위: 건)

연 도	협진 의뢰			전원 의뢰		
	시스템 구분		전체 의뢰건수	시스템 구분		전체 의뢰건수
	PC 웹을 통한 의뢰건수	모바일 앱을 통한 의뢰건수		PC 웹을 통한 의뢰건수	모바일 앱을 통한 의뢰건수	
2015년	203	1	204	-	-	-
2016년	645	3	648	-	-	-
2017년	910	26	936	362	73	435
2018년	1,013	14	1,027	1,063	154	1,217
2019년	1,717	81	1,798	1,446	6	1,452
2020년	1,648	58	1,706	501	280	781
2021년	1,266	50	1,316	304	106	410
2022년	717	26	743	1,250	10	1,260
2023년	1,158	5	1,163	357	5	362
2024년	971	-	971	921	-	921
2025년	1,256	2	1,258	985	-	985

주) 2017년부터 응급원격협진망에 전원 의뢰 기능이 추가됨
자료: 보건복지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과 거점병원 간 협진·전원 의뢰가 전화나 소셜 미디어·전용 메신저 등 기존 연락체계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동성, 연결 용이성, 신속성, 의사소통 가능성 등이 뛰어난 기존 수단을 넘

어설 수 있을 정도의 기술적 편리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활용 실적이 극히 미미한 모바일 앱[158]은 타당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폐기하거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159]

158) <2015~2025년 취약지 응급원격협진망 앱 구축 및 유지관리 등 관련 경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집행액	용 도
2015년	68	앱 구축
2016년	37	앱 구축
2017년	63	앱 구축
2018년	32	앱 시스템 개선
2019년	30	앱 운영 및 유지관리
2020년	20	앱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2021년	20	앱 운영 및 유지관리
2022년	24	앱 운영 및 유지관리
2023년	30	앱 운영 및 유지관리
2024년	28	앱 운영 및 유지관리
2025년	24	앱 운영 및 유지관리

자료: 보건복지부

159)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23조(모바일 앱의 정비) ①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제22조에 따라 운영성과 측정이 완료된 모바일 앱 중 성과가 저조한 앱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기준에 따라 폐기, 보완대책 시행 등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앱에 대해서는 운영성과가 저조하여도 폐기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제협약 또는 법령에 구축 · 운영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2. 국민 생명의 위험이 발생하거나 국가 차원의 안보 · 치안의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3. 국가경제의 심각한 손실이나 국민생활의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4. 대국민 서비스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5. 이용자가 사회적 약자로서 생활 편의에 도움이 되는 경우
6.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폐기가 곤란하다고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5조에 의한 성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② 모바일 대민서비스 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비해야 한다.

1. 성과측정 결과, 총점 60점 미만의 서비스는 폐기
2. 성과측정 결과, 총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의 서비스는 폐기하거나, 활성화 및 기능고도화 방안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폐지 권고를 받거나, 이전 년도 2회 연속 제2항제1호에 해당된 서비스에 대하여는 성과측정 결과와 상관없이 폐기

③ 모바일 행정서비스 앱의 성과측정 결과, 총점 60점 미만의 서비스는 타당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폐기 여부를 결정하고, 계속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활성화 및 기능고도화 방안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기　타】

23.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보건복지부에 대해 시정요구 128건(중복 5건 포함)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주의 19건·제도개선 114건이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	16	111	5	122
예비비	-	-	-	3	3	-	6
합계	-	-	-	19	114	5	128

보건복지부는 시정요구사항 128건에 대해 97건을 조치완료(조치율 75.8%)하고 31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122	91	74.6	31
예비비	6	6	100.0	-
합계	128	97	75.8	31

국회가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면서 채택한 부대의견 중 보건복지부 2025회계연도 결산 관련 부대의견은 아래와 같음.

[보건복지부 관련 2025년도 예산안 등 부대의견]

구분	부대의견
2025년도 본예산	(17) 보건복지부는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일차 의료를 적극 강화해가며, 이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등을 추진 시 ‘제주형 건강주치의제’ 등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의 의견을 반영한다.
	(28)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원이 국공립시설 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민간기피시설 대상인 우선위탁 비중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30) 보건복지부는 5·18 보상법 개정으로 의료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된 5·18 훈방자에 대해서도 의료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예산을 집행한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19) 보건복지부는 AI 모델을 활용한 항체 바이오베터 개발 및 실증(R&D) 사업이 사업 기간인 3년 이내에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사업 기획과 집행관리를 면밀히 하도록 한다.
2024회계연도 결산	(7)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인 점을 고려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독립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회계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1억 3,900만원(0.3%)이 많은 429억 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9억 4,100만원(22.7%)이 증가됨.[1)]

[2025회계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37,582	37,582	35,040	△2,542	42,842	42,842	42,981	139	7,941
총수입	37,582	37,582	35,040	△2,542	42,842	42,842	42,981	139	7,941

문의: 02-6788-5691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5회계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147억 3,200만원(△2.0%)이 적은 7,341억 8,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8억 8,000만원(4.7%)이 증가됨.

[2025회계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718,215	718,215	701,304	△16,911	748,916	750,224	734,184	△14,732	32,880
총지출	718,215	718,215	701,304	△16,911	748,916	750,224	734,184	△14,732	32,880

나.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428억 4,200만원으로, 477억 2,5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429억 8,100만원이 수납(수납률 90.1%)되고, 46억 100만원은 미수납되어 1억 4,3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42,671	42,671	-	42,671	47,624	42,881	4,600	14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6	16	-	16	16	16	-	-
- 구조개선사업계정	16	16	-	16	16	16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55	155	-	155	85	84	1	-
- 지역지원계정	152	152	-	152	82	81	1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3	3	-	3	3	3	-	-
합 계	42,842	42,842	-	42,842	47,725	42,981	4,601	143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7,547억 5,400만원으로, 7,341억 8,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3%)되고 22억 6,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83억 1,1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초과지출	예비비				
일반회계	745,075	746,383	3,539	235 △235	992	-	750,913	730,343	2,260	18,31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841	3,841	-	-	-	-	3,841	3,841	-	-
- 지역지원계정	3,730	3,730	-	-	-	-	3,730	3,730	-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111	111	-	-	-	-	111	111	-	-
합 계	748,916	750,224	3,539	235 △235	992	-	754,754	734,184	2,260	18,311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5회계연도 말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산은 전년 대비 99억 2,900만원이 증가된 3,045억 8,900만원으로, 이는 금융자산, 유·무형자산, 기타자산이 각각 32억 4,800만원, 53억 5,800만원, 13억 2,300만원 증가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500만원 감소된 7억 1,600만원으로 차입부채 500만원 감소에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99억 3,400만원이 증가된 3,038억 7,300만원임.

2025회계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프로그램 순원가는 4,812억 7,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1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정운영결과는 7,198억 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99억 4,400만원이 증가됨.

[2025회계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재무제표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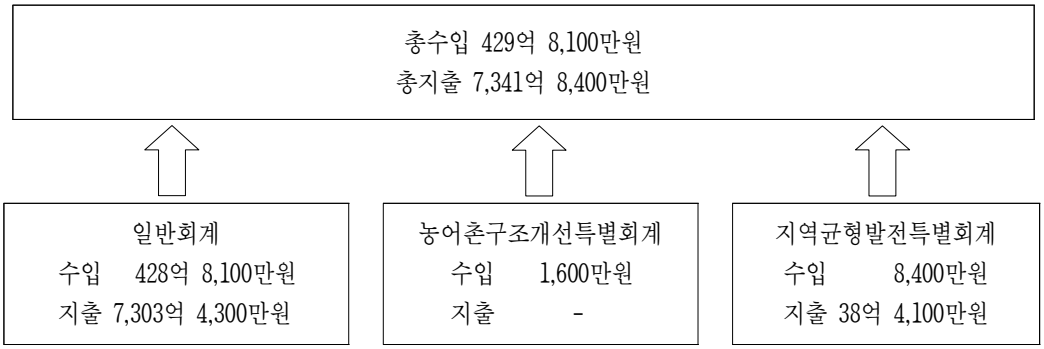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 (A)	2024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304,589	294,660	9,929	3.4
		금융자산	19,786	16,538	3,248	19.6
		유·무형자산	280,506	275,148	5,358	1.9
		기타자산	4,297	2,974	1,323	44.5
	부 채		716	721	△5	△0.7
		차입부채	716	721	△5	△0.7
		충당부채	-	-	-	-
		기타부채	-	-	-	-
	순자산		303,873	293,939	9,934	3.4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481,278	445,128	36,150	8.1
	재정운영순원가		719,824	679,880	39,944	5.9
	재정운영결과		719,824	679,880	39,944	5.9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2025회계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재정은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3개 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 간 거래는 없음.

[2025회계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재정흐름도]



주) 총계 기준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과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컨트롤 타워로서 기본이 단단한 국민 안전, 모두가 함께 누리는 안심 일상을 2025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총 124개 세부사업에서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의약품안전 감시 및 대응 등을 수행하였음.

2025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과태료 및 가산금 수납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하므로,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재산조사 및 강제징수 등 보다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함.

둘째, 의약품등 현지실사 사업(수입대체경비)의 초과지출승인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세입·세출 예산 편성 시 전년도 수입 수납실적과 향후 여건변화 및 집행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규모의 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있음.

셋째,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 사업의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가 2016년 이후 현재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홍보 활동 강화와 행정절차 간소화 등 보다 적극적인 제도 확산 정책이 필요함.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입〉

1. 과태료 및 가산금: 재산조사 및 체납처분 등 적극적인 징수 노력 필요

가. 개　요

‘과태료’ 는 식품의약품 분야 관계 법령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수납되는 비목으로, 징수결정액 29억 3,100만원 중 8억 9,300만원이 수납(수납률 30.5%)되고 미수납액 20억 3,500만원, 불납결손액 300만원이 발생하였음.[2)]

‘가산금’ 은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가산금이 수납되는 비목으로, 징수결정액 2억 8,100만원 중 2,000만원이 수납(수납률 7.1%)되고 미수납액 2억 5,900만원, 불납결손액 200만원이 발생하였음.[3)]

[2025년도 과태료 및 가산금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과태료	520	520	2,931	893	2,035	3	30.5	680
가산금	4	4	281	20	259	2	7.1	6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 일반회계-과태료(56-563)(기획조정관)

3) 일반회계-가산금(58-581)(기획조정관)

나. 검토의견

과태료 및 가산금 수납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한데 이는 행정 제재의 실효성 저하, 법질서 준수 의식 약화, 국가재정 손실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재산조사 및 강제징수 등 보다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통해 수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021~2025년 과태료 수납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수납률이 5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징수결정액이 29억 3,100만원이나 수납액은 8억 9,300만원으로 수납률이 30.5%에 불과함.

[2021~2025년 과태료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

연 도	예산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B/A)
2021년	370	1,081	371	703	7	**34.3**
2022년	370	1,427	562	864	1	**39.4**
2023년	377	1,680	627	1,050	2	**37.3**
2024년	426	2,702	1,244	1,438	20	**46.0**
2025년	520	2,931	893	2,035	3	**30.5**

주) 2025년 12월 31일 기준 5년 경과 미수납액은 5억 9,100만원임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과태료 미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 역시 저조한 수납률을 보이고 있는데, 2021년 이후 가산금 수납률은 10% 미만으로 징수결정액의 대부분이 수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021~2025년 가산금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

연 도	예산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B/A)
2021년	6	177	5	167	4	**0.3**
2022년	6	174	1	172	1	**0.7**
2023년	6	202	6	195	1	**3.0**
2024년	6	228	12	207	9	**5.3**
2025년	4	281	20	259	2	**7.1**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태료 및 가산금 체납자가 주로 식품수입·판매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이고 분야별 교육 미이수, 생산(수입) 실적 미보고 등의 사유로 부과되고 있는데, 소규모 영세업자의 경우 폐업 및 소재불명 등으로 수납이 어렵다고 설명함.

[2025년도 과태료 및 가산금 부과 규정별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관련 법률	부과 규정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B/A)
과태료	식품위생법	제101조	362	54	306	2	14.9
	수입식품법	제46조	1,010	252	757	1	24.9
	건강기능식품법	제47조	14	2	12	-	14.5
	식품표시광고법	제31조	26	25	1	-	97.3
	위생용품관리법	제34조	89	33	56	-	37.3
	약사법	제98조	289	84	205	-	29.2
	마약류관리법	제69조	107	95	12	-	88.8
	화장품법	제40조	811	275	536	-	33.9
	인체조직법	제37조	1	1	-	-	100.0
	의료기기법	제56조	218	68	150	-	31.2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33조	-	-	-	-	-
	실험동물법	제33조	2	2	-	-	100.0
	시험검사법	제30조	2	2	-	-	100.0
가산금	식품위생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70	1	68	1	1.4
	수입식품법		72	11	60	1	15.3
	건강기능식품법		5	-	5	-	-
	위생용품관리법		6	2	4	-	33.3
	약사법		37	2	35	-	5.4
	마약류관리법		3	-	3	-	-
	화장품법		75	3	72	-	4
	의료기기법		13	1	12	-	7.7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과태료 및 가산금의 수납률 저조는 행정 제재의 실효성 저하, 법질서 준수 의식 약화,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 국가재정 손실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재산조사 및 강제징수 등 보다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4]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관허사업의 제한, 종합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자료제공의 요청)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체납자료 제공, 체납자 감치 신청 등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연례적인 수납률 저조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52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행정청은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

②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당해 주무관청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을 취소하거나 주무관청에 대하여 그 요구를 한 후 당해 과태료를 징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나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행정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신용정보의 제공 등) ①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110조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110조를 준용할 때 “체납자”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로, “체납자료”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로 본다.

②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1항의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③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게 그 제공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4조(고액 · 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② 행정청은 과태료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과태료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하여 재차 감치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기타재산이자수입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의 연례적인 반납 지연 개선 필요

가. 개 요

‘기타재산이자수입’ 은 국고보조금 및 용역연구비의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등을 계상하는 비목으로, 징수결정액 12억 4,900만원 중 10억 1,700만원이 수납(수납률 81.4%)되고 미수납액 2억 3,200만원이 발생하였음.[5)]

‘기타경상이전수입’ 은 급여 등 과오지급 환수금, 국고보조금 및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반납금 등을 계상하는 비목으로, 징수결정액 62억 3,000만원 중 58억원이 수납(수납률 93.1%)되고 미수납액 4억 3,000만원이 발생하였음.[6)]

[2025년도 기타재산이자수입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기타재산 이자수입	849	849	1,249	1,017	232	-	81.4	673
기타경상 이전수입	3,056	3,056	6,230	5,800	430	-	93.1	3,948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의 반납이 매년 지연되고 있으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징수체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반납 지연을 방지하고 수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021~2025년 기타재산이자수입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 현황을 살펴보면, 기타재산이자수입의 미수납액은 2021년 700만원에서 2025년 2억 3,2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기타경상이전수입의 미수납액도 2021년 3억 1,800만원에서 2025년 4억 3,000만원으로 증가하였음.

5) 일반회계-기타재산이자수입(54-546)(기획조정관)

6) 일반회계-기타경상이전수입(59-596)(기획조정관)

[2021~2025년 기타재산이자수입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 도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	수납률(B/A)
기타재산이자수입	2021년	346	339	**7**	98.0
	2022년	208	192	**17**	92.1
	2023년	938	849	**88**	90.5
	2024년	1,232	979	**254**	79.5
	2025년	1,249	1,017	**232**	81.4
기타경상이전수입	2021년	2,213	1,894	**318**	85.6
	2022년	3,691	3,043	**646**	82.5
	2023년	4,786	4,230	**556**	88.4
	2024년	5,082	4,655	**427**	91.6
	2025년	6,230	5,800	**430**	93.1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2025년 기타재산이자수입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기타재산이자수입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2025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이자 미수납액이 2억 3,100만원이고, 기타경상이전수입 중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미수납액은 8,800만원임.

[2021~2025년 기타재산이자수입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기타재산 이자수입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이자**	**6.6**	**16.3**	**88**	**254**	**231**
	기 타	0.3	0.3	0.06	0.01	1
	합 계	7	17	88	254	232
기타경상 이전수입	소송비용 금액 환수	157	190	249	236	296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98**	**255**	**148**	**164**	**88**
	급여 환수금 등	62	201	160	27	46
	합 계	318	646	556	427	430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7]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7)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받아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

보조금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등을 반납받아야 하고 반납기한은 반납금액과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함.

그러나 2021~2025년 지방자치단체별 기타재산이자수입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연도 내에 국고보조금 이자 및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021~2025년 지방자치단체별 기타재산이자수입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지방자치단체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기타재산 이자수입	**서울특별시**	**5.6**	**5.8**	**23.4**	**44.5**	**44.4**
	부산광역시	-	-	-	0.3	-
	인천광역시	-	2.9	-	0.2	-
	광주광역시	0.8	1.8	9.6	21.3	0.3
	대전광역시	-	-	-	-	-
	울산광역시	0.1	-	-	0.2	-
	세종특별자치시	-	-	-	-	-
	강원특별자치도	-	-	**0.7**	**20.8**	**26.4**
	충청북도	-	2	-	-	-
	충청남도	0.1	0.2	20	39.7	3.6
	전북특별자치도	-	-	**14.2**	**26.8**	**34.3**
	전라남도	-	**0.1**	**19.8**	**53.5**	**70.3**
	경상북도	-	**3.4**	**0.3**	**46.6**	**51.8**
	경상남도	-	-	-	0.1	-
기타경상 이전수입	**서울특별시**	**57.7**	**102.9**	**59.7**	**45.7**	**21**
	부산광역시	-	-	0.9	0.2	-
	인천광역시	1.3	33.7	-	3.3	-
	광주광역시	11.7	-	-	0.2	2
	대전광역시	1.3	1.3	-	0.4	0.2
	울산광역시	-	-	-	4.3	-
	경기도	-	-	-	-	6.6
	강원특별자치도	-	-	**29.5**	**27.2**	**24.7**
	충청북도	2.9	50.3	2.6	-	-
	충청남도	-	4.4	6.9	10.6	3.7
	전북특별자치도	0.3	0.3	1.2	1.3	1.2
	전라남도	**3.6**	**12.5**	**43.9**	**48.3**	**10.1**
	경상북도	**16.4**	**50.6**	**4.2**	**22.2**	**18.5**
	제주특별자치도	3.2	-	-	-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중앙부처가 반납금을 고지한 즉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되, 예산에 반납액이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산 후 최초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반납금을 반드시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8]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9]에 따라 국고보조금 이자 및 집행잔액을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은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징수체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반납 지연을 방지하고 수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9)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7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집행점검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정산 후 집행잔액 등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해당 보조사업과 관련된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보조사업 집행점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등의 수행상황을 점검하며 다음 각 호의 보조사업 등을 주요점검대상으로 한다.
4. 2회계연도 이상 정산을 완료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산 후 집행잔액 등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은 보조사업의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는 조사개시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현장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조금 반환 결정은 검찰의 공소제기 시까지 하여야 한다.
제33조(보조사업점검평가단) 중앙관서의 장은 제32조의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위하여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운영하며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점검실적은 연1회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세 출〉

3. 스마트 HACCP 선도모델 개발 사업: 스마트 HACCP 등록률 제고를 위한 다각적 유인책 마련 필요

가. 개 요

‘스마트 HACCP 선도모델 개발’ 사업은 HACCP[10] 관리 전(全) 공정을 디지털화하기 위한 스마트 HACCP 모델을 개발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9억원 중 8억 7,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1%)되고 2,600만원이 불용되었음.[11]

[2025년도 스마트 HACCP 선도모델 개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HACCP제도 활성화	6,268	6,268	-	5 △5	6,268	6,212	-	56	5,565
스마트 HACCP 선도모델 개발	900	900	-	-	900	874	-	26	1,200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스마트 HACCP은 식품제조 공장에 IoT[12] 등 기술을 활용하여 식품 안전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중요관리점(CCP: Critical Control Point)[13] 모니터링을 자동화하는 등 HACCP 관련 데이터 수집·관리·분석을 총망라한 디지털 기반 HACCP 종합 관리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으로, 2020년에 최초 도입되었음.

스마트 HACCP은 HACCP 운영 관련 각종 기록을 자동화·전산화함으로써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기록·관리 및 확인·저장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하려는 것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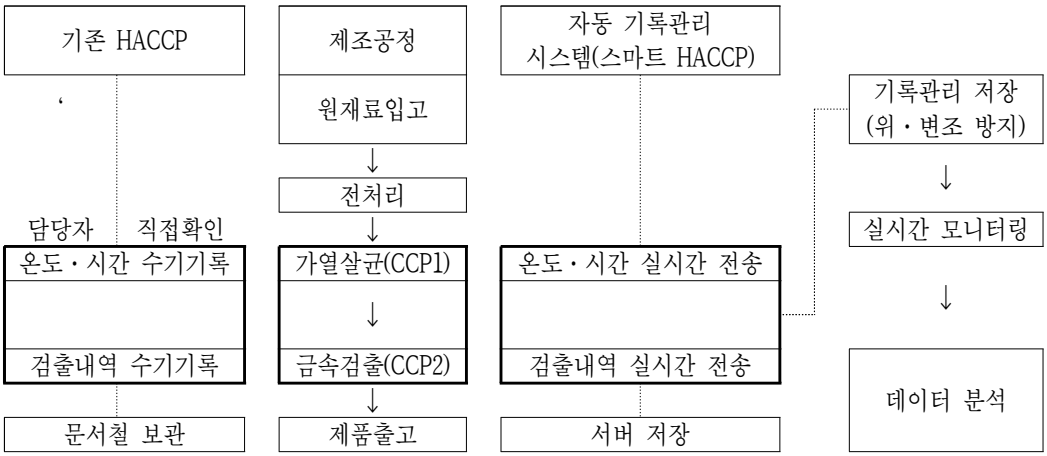
10) HACCP(해썹,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zard Analysis(위해요소분석) + Critical Control Point(중요관리점)

11) 일반회계-HACCP제도 활성화(1032-300)(식품안전정책국)

12)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센서와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물리적 기기들이 인터넷을 통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

13) 중요관리점(CCP): 식품의 위해요소 제어 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요 공정

[기존 HACCP과 스마트 HACCP 주요 내용 비교]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나. 검토의견

스마트 HACCP 등록업체 수가 전체 HACCP 인증업체 수 대비 2.5%에 불과한데, 이는 스마트 HACCP 적용을 위한 시설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소규모업체들이 스마트 HACCP 등록을 기피하기 때문이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마트 HACCP 등록률 제고를 위한 다각적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3월 스마트 HACCP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후,[14]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스마트 HACCP 선도모델 개발 및 스마트 HACCP 구축 보급 지원[15]을 위하여 46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음.

---

14)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이란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 · 관리 및 확인 · 저장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의 위 · 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하며, 이 시스템을 적용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스마트 해썹"이라 한다.
제11조의2(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등록 등) ①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 소규모업체를 대상으로 스마트 HACCP 도입에 필요한 비용(8억원)을 지원(국비 50%, 업체 자부담 50%)하였음.

스마트 HACCP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이후 전체 HACCP 인증업체 수 대비 스마트 HACCP 등록업체 수 비율은 3% 미만의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스마트 HACCP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범용 프로그램과 공정 설비 간 연동을 위한 전송·관리 비용 등 초기 구축 비용[16]과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는데, 소규모업체들이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스마트 HACCP 등록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임.

[스마트 HACCP 등록 현황]

(단위: 개소,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체 HACCP 인증업체(A)	13,994	16,743	18,606	19,739	21,180	22,035
스마트 HACCP 등록 업체(B)	52	111	226	345	452	560
비율(B/A)	0.4	0.7	1.2	1.8	2.1	2.5

주) 각 연도말 누적 기준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규모업체가 보다 쉽게 스마트 HACCP을 도입할 수 있도록 식품 유형별 선도모델 범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으나,[17] 스마트 HACCP 선도모델 범용 프로그램 다운로드 신청 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빵류 11개소, 김치류 9개소, 과자류 11개소, 냉동식품 29개소 등 소수의 업체만 이를 도입하였음.

[스마트 HACCP 선도모델 범용 프로그램 다운로드 신청 업체 현황]

(단위: 개소)

연 도	빵류	김치류	과자류	냉동식품
2022년	3	-	-	-
2023년	20	2	-	-
2024년	11	7	5	-
2025년	11	9	11	29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재 스마트 HACCP 등록업체에 제공하고 있는 우대조치는 HACCP 정기 조사·평가(현장) 면제(자체평가 전환), 스마트 HACCP 심벌 표시 또는 광고 허용, HACCP 연

1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제조업체 규모에 따라 약 2,000만원에서 수억원의 투자가 필요함.

1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유형별 선두기업을 대상으로 선도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후발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범용 프로그램을 개발·보급(무상)하는 사업(2025년 집행액 8억 7,400만원)을 실시하고 있음.

장심사 시 가점 부여, 이물조사 간소화 적용(시범사업) 등임.[18]

스마트 HACCP은 중요관리점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자의 부주의, 데이터 미기록 및 위·변조 등의 문제를 예방함으로써 식품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식품안전관리 수준의 실질적 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제도 확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임.

시스템 구축 및 유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스마트 HACCP 활성화에 가장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상쇄할 만큼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제도적 유인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스마트 HACCP에 대한 정책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스마트 HACCP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및 이해도 제고가 스마트 HACCP 제품의 매출액 상승으로 이어지도록 온라인 매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1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가피한 사유로 중요관리점(CCP) 공정 모두를 스마트 HACCP으로 등록하기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는 중요관리점(CCP) 60% 이상을 스마트 HACCP으로 등록한 경우까지 우대 조치를 확대하고 있음.

4. 의약품등 현지실사 사업: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지출승인 규모 최소화 필요

가. 개 요

‘의약품등 현지실사’ 사업은 해외 의약품 등 현지 제조소의 시설·제조 및 품질관리 등 실태 평가를 수행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8억 700만원 중 17억 9,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3%)되고 1,300만원이 불용되었음.[19]

[2025년도 의약품등 현지실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인허가 심사지원 등(수입대체경비)	28,567	28,567	-	992	29,559	26,430	-	3,129	34,855
의약품등 현지실사	815	815	-	992	1,807	1,794	-	13	815

주 1)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 이·전용 등 금액은 초과지출승인액임

나. 검토의견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지출승인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입·세출 예산 편성 시 전년도 수입 수납실적, 향후 여건변화, 집행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규모의 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있음.

의약품등 현지실사 사업은 국내로 수입되는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 제조소에 대한 품목별 사전 GMP[20]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현지실사 국외출장 경비를 수익자(품목허가 신청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수입대체경비임.[21]

19) 일반회계-인허가 심사지원 등(수입대체경비)(7037-650)(의약품안전국)

20)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등의 제조·품질관리 전반에 걸쳐 안전성과 고품질을 보증하는 ‘우수 제조·품질관리 기준’

21)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① 민원인의 품목허가 신청 ② 항공운임, 일비 등 산정된 여비 납입고지서 발부

2021~2025년 의약품등 현지실사 사업의 세입·세출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이후 해외 현지실사가 전면 재개·확대됨에 따라 2024년부터 초과지출승인이 발생하고 있는데, 2025년 초과지출승인액은 9억 9,200만원으로 2025년 예산액(8억 1,500만원)의 121.7%에 달함.

[2021~2025년 의약품등 현지실사 사업의 세입·세출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세 입			세 출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예산액	초과지출 승인액	예산현액	집행액
2021년	1,263	-	-	939	-	939	-
2022년	1,033	-	-	464	-	464	-
2023년	1,033	627	627	939	-	939	640
2024년	1,075	1,704	1,704	815	**745**	1,560	1,451
2025년	815	1,791	1,791	815	**992**	1,807	1,794

주 1) 세입은 기타 잡수입임
2) 2026년 세입 예산액은 2025년과 동일한 8억 1,500만원임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대체경비는 예견하기 어려운 행정 서비스 수요 급증 시 해당 세입으로 즉시 경비를 충당함으로써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나, 「국가재정법」[22]에 따른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용될 필요가 있음.

수입대체경비 예산을 과소계상할 경우 부처의 지출한도 내에서 타 사업 예산 확보가 용이하고 국회 사전심의를 받지 않는 초과지출을 통해 집행의 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는데, 이러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관행은 수입대체경비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도 수입대체경비의 연례적 과소계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③ 민원인 국고 납부 ④ 현지실사 국외출장 ⑤ 출장자에게 여비(수입대체경비) 지급 ⑥ 현지실사 결과 적합한 경우 품목 허가 처리의 단계를 거치고 있음.

22)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을 감안해 볼 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예산 편성 시 전년도 수입 수납실적, 향후 여건변화,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초과지출승인 규모가 최소화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5.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사업: HACCP 인증 수수료 수입의 국고 납입 등 개선 필요

가. 개 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사업은 HACCP 인증 등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인건비·경상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85억 3,000만원 중 284억 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6%)되고 1억 2,800만원이 불용되었음.[23)]

[2025년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 지원	28,530	28,530	-	-	28,530	28,402	-	128	41,502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국가 사무인 HACCP 인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HACCP 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한 HACCP 인증 수수료 중 일부를 법령에 근거 없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HACCP 인증 수수료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도록 하여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2025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사업[24)]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HACCP 인증 심사 및 맞춤형 기술지원·교육·연구개발 등을 위해 편성된 사업비 82억 5,7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23) 일반회계-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1032-315)(식품안전정책국)

24) 이 사업의 성과지표인 ‘가공식품 및 축산물가공품 HACCP 적용 생산비율’은 2023년 90.6%, 2024년 91.2%, 2025년 91.4%임.

[2025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세 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내역
인건비	민간위탁사업비	15,577	15,577	임직원 연봉, 제수당, 법정부담금 등
경상비	민간위탁사업비	1,735	1,735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기관운영비
통합청사 운영비	민간위탁사업비	1,421	1,421	통합 청사 임차료 및 관리비
사업비	**민간위탁사업비**	**8,257**	**8,257**	**HACCP 인증심사 및 맞춤형 기술지원·교육·연구개발, 스마트 HACCP 운영 등 경비**
예비비	민간위탁사업비	499	499	임직원 경영평가 성과급
청사이전 지원비	민간자본보조	1,041	913	실시설계비

주) 인건비, 경상비, 통합청사 운영비, 사업비, 예비비는 2022년까지 민간경상보조(320-01)로 편성·집행하였고, 2023년부터 민간위탁사업비(320-02)로 편성·집행 중임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HACCP 인증의 근거 법률인 「식품위생법」[25]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26]에 따르면,

25) 「식품위생법」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기 원하는 영업자의 업소를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그 인증을 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기술지원 및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8조의2(인증 유효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6. 제48조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또는 변경 인증을 신청하는 자

6의2.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는 자

26)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받기를 원하는 자(제2항 본문에 따른 영업자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준수 여부를 심사하여 해당 작업장·업소 또는 농장을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

제9조의2(인증 유효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의2. 제9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인증 또는 제9조제6항에 따른 변경 인증을 신청하는 자

HACCP 인증 업무의 주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HACCP 인증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HACCP 인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HACCP 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한 HACCP 인증 수수료 수입을 전액 반납하지 않고 수입 중 일부를 퇴직급여충당금 적립[27] 또는 수탁업무 수행 등을 위해 자체 집행한 후 남은 잔액만 반납하는 문제가 있음.

[2021~2025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HACCP 인증 수수료 자체 집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연 도	인증 건수	수수료 수입액	수수료 자체 집행액
2021년	17,628	3,943	**3,943**
2022년	18,355	3,695	**3,695**
2023년	20,860	4,876	**4,298**
2024년	18,892	5,033	**4,482**
2025년	19,757	5,080	**4,664**

주) HACCP 연장심사 수수료 포함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HACCP 인증 수수료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28]의 ‘그 밖의 수입금’에 해당하므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내부규정[29]을 근거로 HACCP 인증 수수료 일부를 자체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함.[30][31]

---

3. 제9조의2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작업장등의 **인증 등에 관한 업무**와 제31조의3, 제31조의4 및 제31조의5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2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회계연도 결산잉여금 사용에 대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2021년 4월 9일)에 따라 HACCP 인증 수수료 수입을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에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함.

28)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운영 재원) 인증원은 정부의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29)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등 심사수수료 규정」(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내부규정)
제8조 (수수료의 사용) 인증 등 심사수수료는 인증원의 운영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집행잔액은 전액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반납하여야 한다.(2025년 2월 27일 신설)

30) 「식품·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등에 관한 위·수탁 사업 계약 특수조건」

그러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그 밖의 수입금’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사업,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사업[32] 등 민간위탁사업비와 용역수입금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등에서 규정한 국가사무(HACCP 인증 업무) 수탁 수행(민간위탁사업 수행) 중 발생한 수수료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33]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HACCP 인증 업무를 위탁하면서 해당 사업비(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사업 수행 중 발생한 HACCP 인증 수수료 수입 중 일부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자체 집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국가재정법」[34]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국고금 관리법」[35]에 따라 HACCP 인증 수수료 수입을 모두 국고에 반납하거나 법적 근거 마련 후 자체 집행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임.

제13조(자체수입금의 징수·처리) ① “인증원”은 수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서 정하는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인증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 등의 자체수입금은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하거나 제2조에 따른 위·수탁업무 수행에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정산 및 반납) ① “인증원”은 위탁사업비 및 자체수입금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발생이자 등 부수수입을 포함한 총액 기준의 정산서를 작성한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70일까지 “식약처”에 위탁사업비 잔액, 자체수입금 잔액, 기타 수익을 반납하여야 한다.

3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사업의 인건비, 경상비, 통합청사 운영비, 사업비, 예비비는 2022년까지 민간경상보조(320-01)로 편성·집행하였고, 2023년부터 민간위탁사업비(320-02)로 편성·집행 중임. 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보조사업의 수익금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사업비에는 이 지침이 적용되지 않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받아야 한다.

32)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 사업의 내역사업임.

33)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보조금’은 청사이전 지원비 사업(민간자본보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 HACCP 인증지원 사업(민간자본보조, HACCP제도 활성화 사업의 내역사업)의 보조금을 의미함.

34)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35) 「국고금 관리법」
제7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6.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기술지원 및 기능성원료 재평가 사업: 스마트 GMP 구축 실적 제고 필요

가. 개 요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기술지원 및 기능성원료 재평가’ 사업은 건강기능식품[36] 제조업의 사전요건으로 GMP[37]를 운영하고, 기능성 원료의 재평가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억 4,300만원 중 2억 1,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0.1%)되고 2,400만원이 불용되었음.[38]

[2025년도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기술지원 및 기능성원료 재평가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건강기능식품 관리	1,034	1,034	-	29 △25	1,038	999	-	39	1,124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기술지원 및 기능성원료 재평가	243	243	-	-	243	219	-	24	243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건강기능식품 GMP란 우수한 품질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공급하기 위해 제조공장의 구조 설비를 비롯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자재 등의 구입에서부터 생산·포장·출하에 이르기까지 제조 및 품질관리 전반에 걸쳐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기준을 말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건강기능식품 제공, 제조업체의 자율적 품질관리 역량 강화,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국제적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2018년 12월 건강기능식품의 GMP 적용을 의무화하였음.

---

36) 건강기능식품: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 포함)한 식품

37)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조·품질관리 전반에 걸쳐 안전성과 고품질을 보증하는 ‘우수 제조·품질관리 기준’

38) 일반회계-건강기능식품 관리(1032-309)(식품소비안전국, 식품안전정책국)

나. 검토의견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부적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스마트 GMP를 도입한 제조업체는 전체의 3.8%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스마트 GMP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021~2025년 건강기능식품 부적합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6~10건의 기준·규격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2025년에는 잔류용매 부적합[39] 10건, 중금속 부적합 2건이 발생하였음.

[2021~2025년 건강기능식품 부적합 현황]

(단위: 건)

연 도	부적합 원인				합 계
	기준·규격	잔류용매	부정위해물질	중금속	
2021년	6	-	1	-	7
2022년	7	-	-	-	7
2023년	10	-	-	-	10
2024년	7	-	-	-	7
2025년	8	10	-	2	20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작업자가 원료 칭량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에서 작업자의 실수로 원료 함량이 기준치와 일치하지 않아 품질이 저하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제조 공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에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 작업자에 따른 품질 편차를 줄이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마트 GMP[40]의 요건 및 관리 기준을 마련·운영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안전 관리 고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39) 잔류용매 부적합: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조 공정에서 원료 물질을 녹이거나 추출, 정제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유기 용매가 공정 후에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제품에 미량 남아 있는 상태

40) 스마트 GMP: 건강기능식품 제조 과정에서 중량, 온도, 시간 등 품질 관리 정보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화하여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관리·저장하는 시스템

[스마트 GMP 도입 개요]

구 분	내 용
도입(1단계): 칭량 정보 자동 기록 관리	원료의 입·출고, 칭량 정보 자동 기록관리 구축
발전(2단계): 공정 자동 기록 관리	제조설비 감시정보 실시간 자동 기록(수집) 관리
완성(3단계): 실시간 제조관리 기록	제조지시기록서 정보 실시간 전산화 및 확인 검토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러나 스마트 GMP 구축 현황을 살펴보면, 스마트 GMP를 구축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는 전체 제조업체의 3.8%에 불과한 실정으로 특히 소규모업체일수록 구축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생산 공정 데이터 수집 자동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 센서 설치 등 초기 구축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임.

[스마트 GMP 구축 현황]

(단위: 개소, %)

구 분	매 출 액				합 계
	1,000억 원 이상	1,0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전체 제조업체 수(A)	11	45	140	308	504
스마트 GMP 구축 제조업체 수(B)	5	8	4	2	19
구축률(B/A)	**45.5**	**17.8**	**2.9**	**0.6**	**3.8**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스마트 GMP는 제조공정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휴먼에러를 최소화하고 허위기록 방지와 품질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안전 관리 고도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제도 확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마트 GMP 전문가의 현장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및 지속적인 사후 관리 강화, 스마트 GMP 구축 제조업체에 대한 정기 조사 평가 면제 등 관련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상쇄할 만큼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유인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7. 송무업무지원 사업: 소송 패소율 증가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송무업무지원’ 사업은 식의약 관련 국가 상대 소송에 대응하여 송무 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4억 4,000만원 중 4억 2,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8%)되고 1,400만원이 불용되었음.[41)]

[2025년도 송무업무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식의약 법무통계 관리운영	584	584	-	54 △54	584	569	-	15	666
송무업무지원	440	440	-	30 △30	440	426	-	14	507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소송 패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재량권 행사 가이드라인 정비, 소송 대응 전문성 강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교육훈련비 등 일반수용비를 배상금 지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019~202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패소율이 2019년 2.8%에서 2025년 22.7%로 6년 사이 19.9%p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음.

41) 일반회계-식의약 법무통계 관리운영(7036-309)(기획조정관)

[2019~202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송 현황]

(단위: 건, %)

연 도	승소 (소취하 포함)	패소 (A)	일부 승·패소	합 계 (B)	패소율 (A/B)
2019년	35	1	0	36	2.8
2020년	39	3	1	43	7.0
2021년	41	4	0	45	8.9
2022년	44	5	1	50	10.0
2023년	34	5	0	39	12.8
2024년	26	7	1	34	20.6
2025년	15	5	2	22	22.7

주) 패소율은 해당연도에 '패소'로 확정된 사건 기준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송 패소의 주된 원인은 처분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거나 행정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기 때문인데, 이는 행정 처분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저하시키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음.[42)]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행 중인 소송이 49건에 달하는데, 패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대응 전략 마련으로 패소율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금(3,000만원) 지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당초 소송대응 역량강화 교육훈련비, 소송대리인 선임비 등을 위해 편성된 일반수용비를 4차례에 걸쳐 배상금으로 전용하였는데, 2024년에도 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금(3,200만원) 지급을 위해 일반수용비를 배상금으로 전용하였음.[43)]

42) 2025년 5건의 패소 사건은 의약품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 취소청구, 의약품 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임처분 취소청구, 수입품목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등임.

43) 2024년과 2025년 예산에는 배상금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으나 2026년 예산에는 1,800만원의 배상금이 계상됨.

[2024년 및 2025년 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금 지급을 위한 전용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전용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전용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세목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세목	
2024. 6.13. 2024. 9.26.	식의약 법무통계 관리운영 (7036-309)	일반수용비	32	식의약 법무통계 관리운영 (7036-309)	배상금	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지급
2025. 4. 1. 2025. 7. 4. 2025.10.14. 2025.11.25.	식의약 법무통계 관리운영 (7036-309)	일반수용비	30	식의약 법무통계 관리운영 (7036-309)	배상금	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지급

소송수행자의 역량 강화 및 승소율 제고 등을 위해 편성된 교육훈련비, 소송대리인 선임비 등 일반수용비를 반복적으로 전용하는 것은 국가송무 체계의 전문성과 대응 능력의 저하를 야기시키고 소송 패소율 증가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수용비를 배상금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 재량권 행사 가이드라인 정비, 법리 검토 강화 등을 통해 행정의 지속성과 집행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8.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 사업: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 활성화 필요

가. 개 요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 사업은 현지실사 및 HACCP 적용을 통한 수입식품 생산단계 안전 위해요인 분석·차단, 국내 생산식품 수출위생관리 지원 확대 등으로 수출입식품 전 주기 안전관리 체계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1억 2,300만원 중 20억 8,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3%)되고 3,600만원이 불용되었음.[44)]

[2025년도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	2,133	2,133	-	5 △15	2,123	2,087	-	36	2,025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가 근거 법률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시행된 2016년 이후 현재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홍보 활동 강화, 수입업자 대상 위생관리 점검 교육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인 제도 확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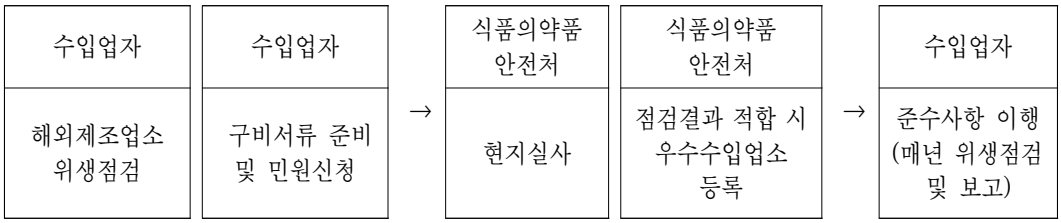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는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업자가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사전 점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지실사 등을 통해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하는 제도임.[45)46)]

---

44) 일반회계-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1515-301)(수입식품안전정책국)

4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하

[우수수입업소 등록 절차]



이 제도는 2009년 2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수입식품 등의 안전체계 일원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2015년 2월 제정(2016년 2월 시행)되면서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의 근거 법률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으로 변경됨.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르면, 우수수입업소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이하 "축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7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①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한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 신청이나 등록된 우수수입업소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영업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수입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우수수입업소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29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⑧ 제7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업소는 그 취소가 있은 날부터 3년 동안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⑨ 우수수입업소의 등록대상과 등록·변경 및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46)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위생점검을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현지실사를 거치지 않고 등록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는 해당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위생기준 적합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위생관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수입업소에 대하여 ① 등록한 수입식품등을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서 제외, ② 우수수입업소의 명칭·소재지 등을 식품안전나라 등에 게재, ③ 등록된 수입식품등의 포장지에 우수수입업소 도안 표시, ④ 등록한 수입식품등의 신속한 수입검사 지원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음.

2021~2025년 우수수입업소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수입 건수는 1만 6,480건, 수입 중량은 19만 3,797톤, 수입 금액은 2억 8,291만 5,000달러로 2021년 대비 각각 소폭 증가하였으나, 2025년 우리나라 전체 수입식품의 수입 건수는 87만 4,928건, 수입 중량은 1,933만 1,757톤, 수입 금액은 366억 1,979만 8,000달러인 점을 감안해 보면 전체 대비 2% 미만의 저조한 수준임.

[2021~2025년 우수수입업소 수입 현황]

(단위: 건, 톤, 천달러, %)

연 도	수입 건수			수입 중량			수입 금액		
	우수수입 업소(A)	전 체 (B)	비율 (A/B)	우수수입 업소(C)	전 체 (D)	비율 (C/D)	우수수입 업소(E)	전 체 (F)	비율 (E/F)
2021년	6,331	814,618	0.8	114,361	18,936,539	0.6	233,818	32,577,910	0.7
2022년	6,168	802,200	0.8	111,106	19,476,547	0.6	233,799	38,110,296	0.6
2023년	7,126	792,374	0.9	110,696	18,382,546	0.6	249,734	34,825,722	0.7
2024년	10,992	846,593	1.3	150,598	19,380,930	0.8	262,869	37,878,310	0.7
2025년	16,480	874,928	1.9	193,797	19,331,757	1.0	282,915	36,619,798	0.8

주) 전체 통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수입식품 종합 포털 사이트인 '수입식품정보마루'의 수입식품 일반현황 통계에 따른 것임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우수수입업소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140개소에서 2025년 154개소로 14개소 증가하였는데, 우리나라 전체 수입판매업소가 5만여개소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47] 증가 폭은 미미한 실정임.

47) '수입식품정보마루'(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수입식품 종합 포털 사이트)의 업체조회에 따르면, 2026년 6월 7일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소 수는 5만 286개소임.

[2016~2025년 우수수입업소 등록 현황]

(단위: 개소, 개)

연 도	우수수입업소 수	국가 수	제품 수	제품 유형
2016년	140	20	1,075	식품 840개, 첨가물 9개, 건강기능식품 8개, 기구・용기 218개
2017년	152	22	1,037	식품 861개, 첨가물 6개, 건강기능식품 15개, 기구・용기 155개
2018년	129	19	758	식품 719개, 첨가물 4개, 건강기능식품 22개, 기구・용기 13개
2019년	106	17	634	식품 591개, 첨가물 3개, 건강기능식품 28개, 기구・용기 12개
2020년	99	14	641	식품 600개, 첨가물 3개, 건강기능식품 26개, 기구・용기 12개
2021년	94	13	619	식품 583개, 첨가물 3개, 건강기능식품 22개, 기구・용기 11개
2022년	86	12	604	식품 569개, 첨가물 3개, 건강기능식품 21개, 기구・용기 11개
2023년	88	12	652	식품 625개, 첨가물 3개, 건강기능식품 24개
2024년	107	12	803	식품 756개, 첨가물 3개, 건강기능식품 17개, 축산물가공품 9개, 기구・용기 18개
2025년	154	19	1,065	식품 995개, 첨가물 3개, 건강기능식품 37개, 축산물가공품 12개, 기구・용기 18개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에 대한 수입업자의 인지도가 낮았고, 그 동안 실시한 제도 설명회는 일반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개괄적인 제도 안내 수준에 머물러 실제 참여 가능성이 높은 수입업자에게 제도의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는 정부 중심의 사후 규제나 무작위 통관 검사만으로는 폭증하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완벽히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수입업자의 자율적 위생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국내에 안전한 수입식품의 유통을 촉진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음.

이러한 제도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많은 수입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 확산 정책이 중요하므로, 안전한 수입식품은 수입업소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판매량 증가 및 수익 증대로 이어진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수입업자 대상 위생관리 점검 교육 강화, 행정 절차의 간소화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기　타】

9.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해 시정요구 16건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주의 1건·제도개선 15건이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	1	15	-	16
예비비	-	-	-	-	-	-	-
합계	-	-	-	1	15	-	1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정요구사항 16건 모두 조치완료(조치율 100.0%)하였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16	16	100.0	-
예비비	-	-	-	-
합계	16	16	100.0	-

국회가 「2024회계연도 결산」을 심의·의결하면서 채택한 부대의견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회계연도 결산 관련 부대의견은 아래와 같음.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2024회계연도 결산 부대의견]

구분	부대의견
2024회계연도 결산	(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조하여 4대강 유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식품의 녹조 마이크로시스틴 함유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질병관리청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회계연도 질병관리청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385억 6,400만원(57.8%)이 많은 1,053억 3,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953억 7,200만원(△82.5%)이 감소됨.[1)]

[2025회계연도 질병관리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212,504	212,504	600,707	388,203	66,771	66,771	105,335	38,564	△495,372
총수입	212,504	212,504	600,707	388,203	66,771	66,771	105,335	38,564	△495,372

문의: 02-6788-5691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5회계연도 질병관리청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253억 9,800만원(△5.2%)이 적은 4,630억 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364억 4,700만원(△53.7%)이 감소됨.

[2025회계연도 질병관리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648,781	648,781	999,529	350,748	488,480	488,480	463,082	△25,398	△536,447
총지출	648,781	648,781	999,529	350,748	488,480	488,480	463,082	△25,398	△536,447

나.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질병관리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003억 3,300만원으로, 1,575억 3,4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440억 5,100만원이 수납(수납률 91.4%)되고, 134억 8,3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5회계연도 질병관리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58,609	58,609	-	58,609	110,488	97,996	12,492	-
국립마산병원 특별회계	21,505	21,505	-	21,505	21,639	21,238	401	-
- 손익계정	15,163	15,163	-	15,163	15,245	14,844	401	-
- 자본계정	6,342	6,342	-	6,342	6,394	6,394	-	-
국립목포병원 특별회계	20,219	20,219	-	20,219	25,407	24,817	590	-
- 손익계정	11,227	11,227	-	11,227	11,027	10,437	590	-
- 자본계정	8,992	8,992	-	8,992	14,380	14,380	-	-
합 계	100,333	100,333	-	100,333	157,534	144,051	13,483	-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질병관리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5,169억 900만원으로, 4,873억 4,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4.3%)되고 70억 7,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24억 9,0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질병관리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471,706	471,706	2,561	2,740 △2,740	-	474,267	453,703	854	19,710
국립마산병원 특별회계	21,505	21,505	30	356 △226	-	21,665	20,092	-	1,573
- 손익계정	15,163	15,163	30	356 △226	-	15,323	13,765	-	1,557
- 자본계정	6,342	6,342	-	-	-	6,342	6,327	-	15
국립목포병원 특별회계	20,219	20,219	757	33 △33	-	20,977	13,550	6,219	1,207
- 손익계정	11,227	11,227	-	33 △33	-	11,228	10,330	-	898
- 자본계정	8,992	8,992	757	-	-	9,749	3,220	6,219	309
합 계	513,430	513,430	3,348	3,131 △3,000	-	516,909	487,345	7,073	22,490

주 1) 총계 기준
2) 이·전용 등: 국립마산병원 특별회계의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승인액 1억 3,100만원 포함

다. 재무결산

2025회계연도 말 기준 질병관리청 자산은 전년 대비 1,101억 2,500만원이 감소된 3,810억 6,300만원으로, 이는 금융자산 및 기타자산이 각각 343억 2,500만원, 811억 3,200만원으로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무형자산이 53억 3,200만원 증가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25억 4,400만원 감소된 343억 9,200만원으로 차입부채 24억 8,500만원의 감소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075억 8,100만원이 감소된 3,466억 7,100만원임.

2025회계연도 질병관리청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3,945억 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조 7,696억 1,700만원 감소되었으며, 재정운영결과는 4,929억 3,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조 4,690억 6,000만원 감소됨.

[2025회계연도 질병관리청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 (A)	2024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381,063	491,188	△110,125	△22.4
		금융자산	32,411	66,736	△34,325	△51.4
		유·무형자산	307,741	302,409	5,332	1.8
		기타자산	40,911	122,043	△81,132	△66.5
	부 채		34,392	36,936	△2,544	△6.9
		차입부채	34,315	36,800	△2,485	△6.8
		충당부채	41	115	△74	△64.3
		기타부채	35	20	15	75.0
	순자산		346,671	454,252	△107,581	△23.7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394,501	2,164,118	△1,769,617	△81.8
	재정운영순원가		493,001	1,962,053	△1,469,052	△74.9
	재정운영결과		492,933	1,961,993	△1,469,060	△74.9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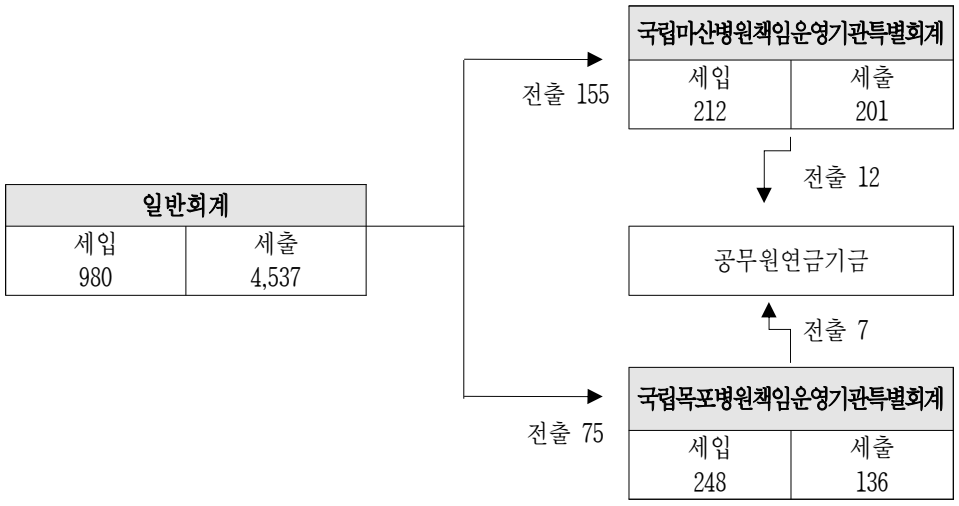
2025회계연도 질병관리청 소관 재정은 일반회계·국립마산병원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및 국립목포병원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등 3개 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회계 간 거래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국립마산병원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155억원, 국립목포병원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75억원이 각각 전출되었음.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국립마산병원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12억원, 국립목포병원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7억원이 전출되었음.

[2025회계연도 질병관리청 재정흐름도]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질병관리청은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 상시감염병 및 만성질환·건강위해 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 국가보건의료 역량 제고를 2025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총 104개 세부사업에서 감염병 예방 강화와 대응 체계 고도화, 결핵 및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공공의료기관 구현 등을 수행하였음.

2025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R&D) 사업은 사업 계획의 적정성 검토 이전에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사업비 상당 부분을 불용 처리하였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가결핵예방 사업의 시험연구비 중 일부를 시험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경비로 집행하였으므로, 해당 시험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는 별도 비목에 계상하여 국가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셋째, 암 역학조사 사업의 실시 실적이 없고 자치단체 보조금이 매년 전액 불용되고 있으므로, 향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 체계 개편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 연내 집행 가능성을 감안한 보조금 교부 필요

가. 개　요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은 신종감염병·재유행감염병 등에 의한 국가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을 위하여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하고 독립적 감염병동 설치·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5,3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2)]

[2025년도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53	53	-	-	53	53	-	-	17,160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5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이 지정[3)]되어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의 감염병동 구축 사업이 진행 중이며, 호남권은 2024년 6월 공사가 착공되어 2027년 상반기 중 완공될 예정이고, 다른 4개 권역은 중간설계 적정성 재검토, 기획

2) 일반회계-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6234-331)(감염병위기관리국)

3) 수도권은 경기도 분당 서울대병원, 충청권은 충청남도 순천향대천안병원, 호남권은 광주광역시 조선대병원, 경북권은 대구광역시 칠곡경북대병원, 경남권은 경상남도 양산부산대병원이 지정됨.

예산처와의 총사업비 협의, KDI 타당성 재조사 등 관련 절차가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음.

사업 추진절차는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 및 설계, 총사업비 확정, 업체 선정, 착공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중간설계 또는 실시설계 후에도 각각 조달청의 적정성 검토와 기획예산처와의 총사업비 협의 절차가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부터 기획예산처와의 총사업비 협의까지 최소 28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2025년도 예산(5,300만원)은 경남권 구축 사업비(시설부대비)이고, 2026년도 예산(171억 6,000만원)은 호남권과 수도권 구축 사업비임.

나. 검토의견

양산부산대병원의 경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 수행 거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사업 보조금이 전액 교부되어 대부분 실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었으므로, 질병관리청은 연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 교부할 필요가 있음.

경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의 감염병동 구축 사업은 2020년 7월 31일 경상남도 양산부산대병원이 지정되어 계획설계 및 조달청 적정성 검토(2022년 1월), 중간설계 및 조달청 적정성 검토(2022년 10월),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2023년 5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2024년 12월), 총사업비 조정(2025년 12월)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음.[4)]

양산부산대병원은 당초 연면적 27,101㎡(국비 9,651㎡, 자부담 17,450㎡)를 요구하였으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연면적 17,241㎡(국비 6,246㎡, 자부담 10,995㎡)로 감염병동 규모가 축소됨.

이에 대해 양산부산대병원은 감염병 전문병원으로서의 기능 수행 불가능, 타 권역과의 형평성 부족[5)]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대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질병관리청은 2026년 7월 양산부산대병원과의 업무협의를 거쳐 경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 등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경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감염병동 구축 사업의 실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20년에

4) 사업기간은 2020~2027년, 총사업비(공고 기준 국고지원 시설 구축 사업비)는 449억 5,300만원이며, 자기부담 비율은 미확정임.

5) 호남권의 경우 국비 연면적이 9,170㎡임.

편성된 설계비는 이월과 재이월을 거쳐 실집행되었고, 2021년 이후 편성된 공사비, 시설부대비는 대부분 이월되거나 불용되었으며, 2025년에 편성된 시설부대비 5,300만원 역시 대부분 실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었음.

[경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감염병동 구축 사업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질병관리청			양산부산대병원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A)						교부 현액	집행액 (B)			
2020년	2,268	2,268	2,268	2,268	-	2,268	-	2,268	-	2,268	-	-
2021년	17,580	17,580	17,580	17,580	2,268	19,848	1,136	17,580	-	18,712	-	-
2022년	5,790	5,790	5,790	5,790	18,712	24,502	1,186	5,790	-	23,316	-	-
2023년	2,218	2,218	-	-	23,316	23,316	1	-	-	5,790	17,525	-
2024년	-	-	-	-	5,790	5,790	1	-	-	-	5,789	-
2025년	53	53	53	53	-	53	1	53	1	52	-	1.9

주) 2023년 예산액(22억 1,800만원)은 코로나19 치료제 추가 도입을 위한 전용 재원으로 사용됨
자료: 질병관리청

경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감염병동 구축을 위한 보조금 교부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과 2024년을 제외하고 매년 예산액 전액을 교부하였는데, 2025년(예산액 5,300만원)에는 8월 28일과 11월 25일에 4,000만원, 1,300만원을 각각 교부하였음.

[경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감염병동 구축 사업 보조금 교부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질병관리청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교부일	용 도
	본예산	추경(A)				
2020년	2,268	2,268	2,268	2,268	2020년 8월 11일	설계비
2021년	17,580	17,580	17,580	17,580	2021년 6월 13일	공사비, 시설부대비
2022년	5,790	5,790	5,790	580	2022년 11월 24일	공사비, 시설부대비
				5,210	2022년 12월 6일	공사비, 시설부대비
2023년	2,218	2,218	-	-	-	-
2024년	-	-	-	-	-	-
2025년	53	53	53	40	2025년 8월 28일	시설부대비
				13	2025년 11월 25일	시설부대비

주) 교부일은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일임
자료: 질병관리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6] 및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되 자금부족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분기까지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여야 하며, 연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질병관리청은 양산부산대병원의 사업 수행 거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내 집행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2025년 8월과 11월에 예산액 전액을 교부하여 교부된 보조금 대부분이 이월되었으므로, 향후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보조금의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 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6)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R&D) 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한 예산 편성 필요

가. 개 요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R&D)’ 사업은 비임상 및 임상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mRNA[7] 백신[8]을 개발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53억 8,700만원 중 169억 8,600만원이 집행(집행률 66.9%)되고 84억 100만원이 불용되었음.[9]

[2025년도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R&D)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R&D)	25,387	25,387	-	-	25,387	16,986	-	8,401	26,448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국가재정법」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은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은 적정성 검토 이전에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사업비 상당 부분을 불용 처리하였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R&D) 사업은 mRNA 기술을 활용한 백신의 신속개발 플랫폼을 완성함으로써 미래 팬데믹 위기 시 최대 200일 내 초고속으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2025년 신규로 예산에 반영됨.

---

7) mRNA(mRNA: messenger ribonucleic acid, 메신저 리보핵산): 우리 몸의 세포가 특정 단백질을 만드는 방법을 지시하는 유전 물질(설계도)

8) mRNA 백신: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담은 설계도를 인체에 주입하여 세포 스스로 항원(바이러스 단백질)을 만들게 하고 이에 대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백신

9) 일반회계-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R&D)(6634-362)(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R&D)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목적	◦ mRNA 기술을 활용한 백신 신속개발 플랫폼 완성 ◦ (위기시) 미래 팬데믹 발생 시 최대 200일 내 초고속 백신 개발 추진 ◦ (평시) 매년 예방접종이 예상되는 코로나19 mRNA 백신의 제품화를 통해 국내 수급에 활용하고 국산 mRNA 기술 사전 확보
사업 기간	2025~2028년
사업 수행	◦ 질병관리청 mRNA 백신 지원단(임시조직)을 구성(2025년 5월)하여 전담팀을 중심으로 질병관리청 인프라 및 경험 등을 활용하여 사업 관리・운영 - 단장: 질병관리청장, 부단장: 질병관리청 차장, 반장: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장, 의료안전예방국장 등
사업 주체	◦ 주관기관: 질병관리청, 전문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참여기관: 백신개발기업 등
총사업비	5,052억원(국비 3,379억원)
사업 내용	◦ (mRNA 백신 비임상 지원) mRNA 백신 후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동물에서 수행하는 안전성, 효능평가 비임상 연구지원 ◦ (mRNA 백신 임상 지원)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백신의 안전성, 면역반응, 효능을 평가하는 임상1~3상 시험 실시 지원
추진 목표	◦ 2028년까지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 추진

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기준
자료: 질병관리청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0억원 이상인 대규모사업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나, 질병관리청은「국가재정법」제38조제2항제10호[10]에 따른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았음.

「국가재정법」제38조제5항[11]에서는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예비

10)「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 · 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 · 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R&D) 사업에 대해 2024년 9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시료생산·공정개발 국비지원율 하향 조정, 임상시험 1인당 단가 감액, 기술사용료 불인정, 장비시설구축비 미반영, 기획평가관리비 감액 등으로 총 사업비가 당초 5,313억원에서 261억원 감액된 5,052억원으로 축소 조정됨.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R&D)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단위: 억원)

구 분	당 초	수 정	조 정	내 용
비임상	367	336	△31	◦ 시료생산·공정개발 국비지원율(70%⇒50%): 산업통상부 유사사업 보조율 적용 ◦ 자체개발 취지상 기술사용료 불인정
임상1상	300	257	△43	◦ 임상시험 1인당 단가(4,000만원⇒2,900만원) ◦ 시료생산·공정개발 국비지원율(70%⇒50%) ◦ 장비시설구축비(10.5억원) 미반영
임상2상	800	690	△110	◦ 임상시험 1인당 단가(4,000만원⇒2,900만원) ◦ 시료생산·공정개발 국비지원율(70%⇒50%)
임상3상	3,750	3,750	-	◦ 적정성 재검토 등 활용 예정
기획평가 관리	96	19	△77	◦ 국비 대비 2.63% 적용하여 산출 ◦ 임상3상 기획평가관리비는 산출 보류
합 계	5,313	5,052	△261	◦ 재원조달: 국가 3,379억원, 민간 1,673억원

자료: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러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가 도출되기 전에 관련 사업비를 2025년도 예산에 편성하였는데, 비임상 및 임상1상 과제의 단가 감액, 기획평가관리비 감액 등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당초 편성된 예산액 253억 8,700만원 중 84억 1,800만원을 불용(불용률 33.1%)하였음.

11)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2025년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R&D)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실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비임상 연구개발활동비등	23,333	15,709	7,624	32.7
임상1상 연구개발활동비등	1,313	876	437	33.3
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	741	384	357	48.2
합 계	25,387	16,969	8,418	33.1

주) 불용액은 교부된 예산액에서 실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된 금액(1,700만원)을 포함함
자료: 질병관리청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보고서[12]에 따르면, 이 사업은 mRNA 백신 플랫폼 관련 새로운 원천기술 확보가 아닌 현존 경쟁물질과 동등 수준의 국산 기술을 확보하고 제품을 자체 공급하는 역량 및 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임에도 주관부처는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제시하여 목표와 사업 추진 방식 간 부조화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 점, 1단계에 해당하는 비임상~임상2상에 대한 연구개발 추진 시 핵심 요소기술 특정 및 요소기술 목표 설정, 요소기술 자립화 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이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 계획하고 이 사업에서 추진되는 과제의 제품 조달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이 지적되었는데,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필요가 있고, 적정성 검토 이전에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사업비 상당 부분을 불용 처리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최종보고서」, 2025. 5.

【응급의료기금】

〈지　출〉

3.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관리 사업: 다인 병실의 1인 병실 전환 필요

가. 개　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관리’ 사업은 코로나19 등 고위험·신종감염병 발생 시 즉각적인 격리입원치료를 통해 병원 및 지역 사회로의 2차 감염을 최소화하고 신종감염병 확산을 차단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39억 7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13]

[2025년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관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관리	3,907	3,907	-	3,907	3,907	-	-	3,907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감염병관리기관은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전실(前室)[14] 및 음압시설(陰壓施設)[15] 등을 갖춘 1인 병실을 설치하여야 하나 일부 기관에서는 다인 병실을 10년 넘게 유지하고 있으므로, 질병관리청은 감염병관리기관 재지정 요건 및 지정 해제 기준

13) 응급의료기금-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관리(2837-322)(감염병위기관리국)

14) 전실(前室)은 음압 병실의 출입구에 위치한 완충 공간으로, 병실 안의 오염된 공기가 외부 복도로 유출되는 것을 완벽히 차단하는 역할을 함.

15) 음압시설(陰壓施設)은 병실 내부의 공기압을 낮춰 바이러스나 세균이 병실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특수 환기 시설임.

강화 등을 통해 다인 병실의 1인 병실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6]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7]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 등은 고위험·신종감염병 대비·대응을 위해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하여야 하고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은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 등을 갖춘 1인 병실을 설치하여야 함.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운영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입원치료 병실은 총 38개 감염병관리기관의 233개 병실이고 1인 병실 이외에 다인 병실을 운영하고 있는 국립목포병원 등 10개 의료기관에 대하여도 다인 병실(20개) 운영 관련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

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등을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감염병관리기관에는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 등을 갖춘 1인 병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제64조(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부담한다.
4. 제36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
제65조(시·도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도가 부담한다.
2. 제36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
제66조(시·도가 보조할 경비) 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는 제64조에 따라 시·군·구가 부담할 경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6의4. 제3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
제68조(국가가 보조할 경비)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2.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시·도가 부담할 경비의 2분의 1 이상

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기준 등) ① 법 제36조제3항 및 법 제39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1. 감염병관리시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3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관리기관: 별표 4의2의 기준에 적합한 음압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나. 300개 미만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관리기관: 외부와 격리된 진료실 또는 격리된 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국가 지원 입원치료 병실 현황]

(단위: 개)

연번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자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관리시설		
			1인 병실 수	다인 병실 수 (다인 병실 병상 수)	총 병실 수 (총 병상 수)
1	국가	국군수도병원	8	-	8(8)
2	국가	**국립목포병원**	2	**2(8)**	4(10)
3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4	**3(15)**	7(19)
4		서울대병원	7	-	7(7)
5		서울의료원	10	-	10(10)
6		중앙대병원	4	-	4(4)
7		한일병원	3	-	3(3)
8	부산	부산대병원	5	-	5(5)
9		부산시의료원	5	-	5(5)
10		삼육부산병원	5	-	5(5)
11		온종합병원	6	-	6(6)
12	대구	경북대병원	5	-	5(5)
13		**대구의료원**	1	**2(4)**	3(5)
14	인천	인천의료원	7	-	7(7)
15		가천대길병원	5	-	5(5)
16		인하대병원	7	-	7(7)
17	광주	조선대병원	5	-	5(5)
18		전남대병원	7	-	7(7)
19	대전	충남대병원	8	-	8(8)
20		건양대병원	5	-	5(5)
21		대전보훈병원	8	-	8(8)
22	울산	울산대병원	9	-	9(9)
23	경기	**명지병원**	7	**2(4)**	9(11)
24		분당서울대병원	14	-	14(14)
25		고대안산병원	5	-	5(5)
26	강원	강원대병원	6	-	6(6)
27		**강릉의료원**	1	**2(4)**	3(5)
28		원주의료원	5	-	5(5)
29	충북	**충북대병원**	3	**2(6)**	5(9)
30	충남	단국대천안병원	7	-	7(7)
31		아산충무병원	5	-	5(5)
32	전북	**전북대병원**	10	**1(4)**	11(14)

(단위: 개)

연번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자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관리시설		
			1인 병실 수	다인 병실 수 (다인 병실 병상 수)	총 병실 수 (총 병상 수)
33		원광대병원	3	-	3(3)
34	경북	**동국대경주병원**	1	**2(4)**	3(5)
35	경남	**경상대병원**	1	**3(6)**	4(7)
36		창원경상대병원	5	-	5(5)
37		마산의료원	7	-	7(7)
38	제주	**제주대병원**	7	**1(2)**	8(9)
합 계			213	20(57)	233(270)

자료: 질병관리청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 등을 갖춘 1인 병실 설치 의무화 규정(법률 제13639호, 2015년 12월 29일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그 시행일이 2016년 6월 30일로,[18] 시행일 이전에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다인 병실 운영 관련 경비를 계속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현재 다인 병실을 운영하고 있는 10개 의료기관의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16년 6월 30일 이후에 최초 지정되거나 재지정되었으며, 국가기관인 국립목포병원과 공공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이 다인 병실을 운영하면서 관련 경비를 지원받고 있는 점은 현행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다인 병실 운영 중인 의료기관의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현황]

연 번	감염병관리기관	최초 지정일	최근 재지정일
1	국립목포병원	2016년 8월 3일	2016년 8월 3일
2	국립중앙의료원	2020년 2월 20일	2020년 2월 20일
3	대구의료원	2011년 5월 19일	2020년 2월 18일
4	명지병원	2020년 2월 10일	2020년 2월 10일
5	강릉의료원	2020년 1월 1일	2020년 2월 21일
6	충북대병원	2019년 2월 1일	2019년 2월 1일
7	전북대병원	2018년 12월 19일	2024년 1월 11일
8	동국대경주병원	2017년 12월 8일	2023년 11월 17일
9	경상대병원	2020년 5월 25일	2025년 5월 25일
10	제주대병원	2020년 2월 19일	2023년 1월 3일

주) 2026년 6월 2일 기준
자료: 질병관리청

18)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 음압시설 부족 지적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의 관련 시설 설치가 의무화됨.

음압시설(陰壓施設) 등을 갖춘 1인 병실 설치 의무화 규정 신설 이후 약 1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다인 병실을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 관련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려는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감염병관리기관의 재지정 요건 및 지정 해제 기준 강화 등을 통해 다인 병실의 1인 병실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국민건강증진기금】

〈지　출〉

4. 국가결핵예방 사업: 시험연구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개선 필요

가. 개　요

‘국가결핵예방’ 사업은 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2023~2027년)에 따른 결핵 전주기(예방・진단・치료) 정책 추진으로 결핵 조기 퇴치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390억 8,100만원 중 385억 8,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7%)되고 1억 3,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억 6,100만원이 불용되었음.[19)]

[2025년도 국가결핵예방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국가결핵예방	39,051	39,051	30	39,081	38,583	137	361	39,472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질병관리청은 시험연구비 중 일부를 시험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경비로 집행하였으므로, 해당 시험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는 별도 비목에 계상하여 국가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시험연구비는 국가시험연구기관의 시험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비로, 일용임금,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임차료, 유류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여비, 고용부담금 등 10개 경비가 통합된 비목임.

19) 국민건강증진기금-국가결핵예방(6136-303)(감염병정책국)

2023~2025년 국가결핵예방 사업의 시험연구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감염병관리진단분야 강사 양성과정 교육, 외국인 대상 결핵 감염병 예방 인쇄물 및 홍보물품 구매, 결핵환자 신고 연보 제작, 활동집 및 리플릿 제작, 결핵 다국어 홍보물 인쇄, 워크숍 개최 등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로 집행한 사례가 있음.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20]에 따르면, 해당 시험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념품 제작, 홍보책자 발간, 직원 워크숍 개최 비용 등은 시험연구비가 아닌 별도 비목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재정법」[21]에서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는 일반수용비 등 해당 비목에 계상하여 집행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023~2025년 국가결핵예방 사업의 시험연구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구 분		집행 비목	계획액	집행액	집행내역
집단시설 역학조사	2023년	시험 연구비	일반 수용비	75	10	<충청권 질병대응센터> 4.9백만원 • 결핵 및 감염병 세미나 **기념품 제작** 및 자료집 제본 등(3.4백만원) • 결핵 역학조사 방역 물품 구입(1.5백만원) <호남권 질병대응센터> 3.1백만원 • 결핵관련 역량강화 **워크숍 다과비 및 강의료**(3.1백만원) <경북권 질병대응센터> 1.8백만원 • 대한감염학회 추계학술대회 참가(0.24백만원) • 결핵역학조사반 사무용품 구매(1.6백만원)
			임차료		2	<호남권 질병대응센터> 2백만원 • 지자체 결핵조사 담당자 교육 장소 대관(2백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 신속대응대응차량 장비 수리비 (포터블엑스레이, 1백만원)
			국내여비		19	<집단시설 결핵역학 조사 관련 현장조사>

20)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시험연구비는 10개 경비를 통합한 비목이므로 동일 또는 유사 사업에 통합된 비목은 별도 계상을 제한
○ 다만, 해당 시험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는 별도 비목에 계상
* 연구과제 수행에 직접 관련이 없는 기념품 제작, 홍보책자 발간, 직원 워크숍 개최 비용 등

21)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구 분		집행 비목	계획액	집행액	집행내역
						• 수도권질병대응센터: 270건(12백만원) • 충청권질병대응센터: 41건(2백만원) • 호남권질병대응센터: 27건(3.6백만원) • 경북권질병대응센터: 9건(1백만원) • 경남권질병대응센터: 1건(0.027백만원)
			소계	75	32	-
	2024년	시험 연구비	일반 수용비	50	16.31	<호남권 질병대응센터> 9.7백만원 • 호남권 결핵관리 역량강화 **워크숍 기념품 구매** 등(3.1백만원) • 호남권 결핵관리 역량강화 **워크숍 인쇄비** 등(0.9백만원) • 호남권역 결핵역학조사 사례기반 조사 교육 지원비 4회(1백만원) • 결핵 관련 **홍보용품 소책자 등 구매** 2회(4.4백만원) • 결핵 유관기관 지역협의체 인쇄비 및 지원비 등(0.3백만원) <충청권 질병대응센터> 3.66백만원 • 2024년 충청권 결핵환자관리 및 역학조사 세미나 인쇄물(1.3백만원) • 2024년 충청권 결핵환자 관리 및 역학조사 세미나 강사 수당 지급(0.3백만원) • 결핵예방 역학조사 **홍보** 및 사무용품 구입 등(2백만원) <경남권 질병대응센터> 2.95백만원 • 2024년 경남권 결핵 환자관리 및 역학조사 교육 관련 물품 구매(2.95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0.07	<호남권 질병대응센터> 0.07백만원 • 호남권 감염병대응 포럼 행사 인터넷 설치비 및 이용료(0.07백만원)
			임차료		0.5	<호남권 질병대응센터> 0.5백만원 • 결핵역학조사(전북) 사례기반 관련 교육 장소 임차료 1건(0.5백만원)
			국내여비		11.18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8백만원 • 2024년 결핵 현장대응차량 검진 216건(8백만원) <호남권 질병대응센터> 1.7백만원 • 결핵 교육 지원 및 **워크숍 참석** 등 21건(1.7백만원) <충청권 질병대응센터> 0.33백만원 • 결핵역학조사 및 충청권 결핵환자관리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구 분		집행 비목	계획액	집행액	집행내역
						및 역학조사 세미나 참석 등 12건(0.3백만원) 〈경북권 질병대응센터〉 1.15백만원 • 경북권 결핵역학조사 및 역학조사 세미나 참석 등 5건(1.15백만원)
			소계	50	28	-
	2025년	시험연구비	일반수용비	50	20.6	〈충청권 질병대응센터〉 0.2백만원 • **감염병관리진단분야 강사 양성과정 교육비**(0.2백만원) 〈호남권 질병대응센터〉 15.4백만원 • **외국인 대상 결핵 감염병 예방 인쇄물 및 홍보물품 구매**(7.8백만원) • 2024년 호남권 **결핵환자 신고 연보 제작(**3백만원) • 2025년 결핵환자 관리 및 역학조사 세미나 관련 인쇄물 제작(0.3백만원) • 결핵예방 역학조사 **활동집 및 리플릿 제작**(4.3백만원) 〈경남권질병대응센터〉 4.97백만원 • 2025년 경남권 감염병 대응 평가회 강의 수당(0.82백만원) • 2024년 경남권역 결핵역학조사반 **활동집 인쇄**(2백만원) • 2025년 제3차 결핵환자관리 및 역학조사 세미나 강사수당(0.35백만원) • 2025년 4분기 경남권역 결핵역학조사반 세미나 인쇄료(0.6백만원) • **결핵 다국어 홍보물 인쇄**(1.2백만원)
			임차료		0.4	〈호남권 질병대응센터〉 0.4백만원 • 결핵 환자관리 협의 개최(0.4백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3.8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3.8백만원 • 결핵 현장대응차량 점검, 견인 및 정비 비용 지급 4회(3.8백만원)
			국내여비		12.7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8.2백만원 • 결핵 현장대응차량 검진 225건(8.2백만원) 〈충청권 질병대응센터〉 3.4백만원 • 결핵 역학조사 및 중점관리 시설 현장조사 등 12건(3.4백만원) 〈호남권 질병대응센터〉 1.1백만원 • 결핵역학조사현장대응 및 PPM 결핵관리 평가대회 참석 등 29건(1.1백만원)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구 분		집행 비목	계획액	집행액	집행내역
			소계	50	37.5	-
국가결핵 관리사업 지원	2023년	시험 연구비	일반수용비	374	3	• 결핵 **민간위탁사업 평가수당**(0.48백만원) • **정책연구용역사업 최종평가 수당** (0.42백만원) • 결핵 환자관리 및 역학조사 세미나 강의 수당(0.9백만원) • 국립결핵병원 관련 연구용역 회의자료 인쇄 (0.9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5	• **결핵통합시스템 문자메시지서비스 이용요금**(4.5백만원) • 결핵역학조사 현장대응차량 무선인터넷 이용요금(0.6백만원)
			국내여비		33	• 결핵역학조사현장대응 및 PPM 결핵관리 평가대회 참석 등 152건
			소계	374	41	-
	2024년	시험 연구비	일반 수용비	100	1.6	• 결핵 환자관리 및 역학조사 세미나 자문 수당(0.3백만원) • 결핵관련 학회 등록비(0.68백만원) • 결핵역학조사 현장대응차량 정기검사 수수료(0.25백만원) • 결핵역학조사 현장대응차량 하이패스 통행료(0.4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2	• **결핵통합시스템 문자메시지서비스 이용요금**(3.63백만원) • 결핵역학조사 현장대응차량 무선인터넷 이용요금(0.54백만원)
			임차료		0.8	• 결핵역학조사 관련 회의 개최(0.75백만원)
			국내여비		30.4	• 결핵역학조사현장대응 및 PPM 결핵관리 평가대회 참석 등 144건(30.4백만원)
			소계	100	37	-
	2025년	시험 연구비	일반 수용비	100	48.7	• 결핵 환자관리 및 역학조사 관련 자문수당 (25.6백만원) • 결핵 환자관리 및 역학조사 관련 인쇄 (20.5백만원) • 결핵관련 학회 등록비(0.3백만원) • 결핵역학조사 현장대응차량 하이패스 통행료 (2.3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8.2	• **결핵통합시스템 문자메시지서비스 이용요금**(4.6백만원) • 결핵역학조사 현장대응차량 무선인터넷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구 분		집행 비목	계획액	집행액	집행내역
						이용요금(0.6백만원) • **AI 복약서비스 이용요금**(1.6백만원) • **결핵ZERO 누리집 지도 기반 시각화 서비스 이용요금**(1.4백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2	• 결핵역학조사 현장대응차량 유지관리비(12백만원)
			국내여비		29.6	• 결핵역학조사현장대응 및 PPM 결핵관리 평가대회 참석 등 132건(29.6백만원)
			소계	100	98.5	-

주 1) 집단시설 역학조사: 집단시설 내 결핵환자 발생 시 접촉자에 대한 결핵역학조사 실시
2) 국가결핵관리사업 지원: 결핵관리사업을 위한 기본 경비 등 운영
3) PPM: Public-Private Mix(민간·공공협력)

자료: 질병관리청

5. 암 역학조사 사업: 사업 실적 전무에 따른 사업 체계 개편 필요

가. 개 요

‘암 역학조사’ 사업은 암 집단발생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여 암 예방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2억 8,700만원 중 3,700만원이 집행(집행률 12.9%)되고 2억 5,000만원이 불용되었음.[22)]

[2025년도 암 역학조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만성질환 예방관리	13,925	13,925	-	13,925	13,673	-	252	14,332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근거생산	751	751	-	751	501	-	250	751
암 역학조사	287	287	-	287	37	-	250	2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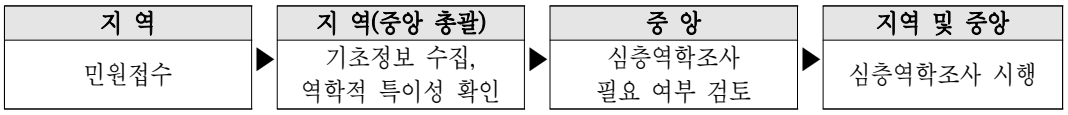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암관리법」[23)]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중앙역학조사반) 또는 시·도지사(지역역학조사반)는 특정 암 종류의 과다한 발생 등이 예측되거나 관찰될 경우 그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22) 국민건강증진기금-만성질환 예방관리(6533-308)(만성질환관리국)

23)「암관리법」
제16조(역학조사)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역학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⑤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시기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암 역학조사 수행 과정]



나. 검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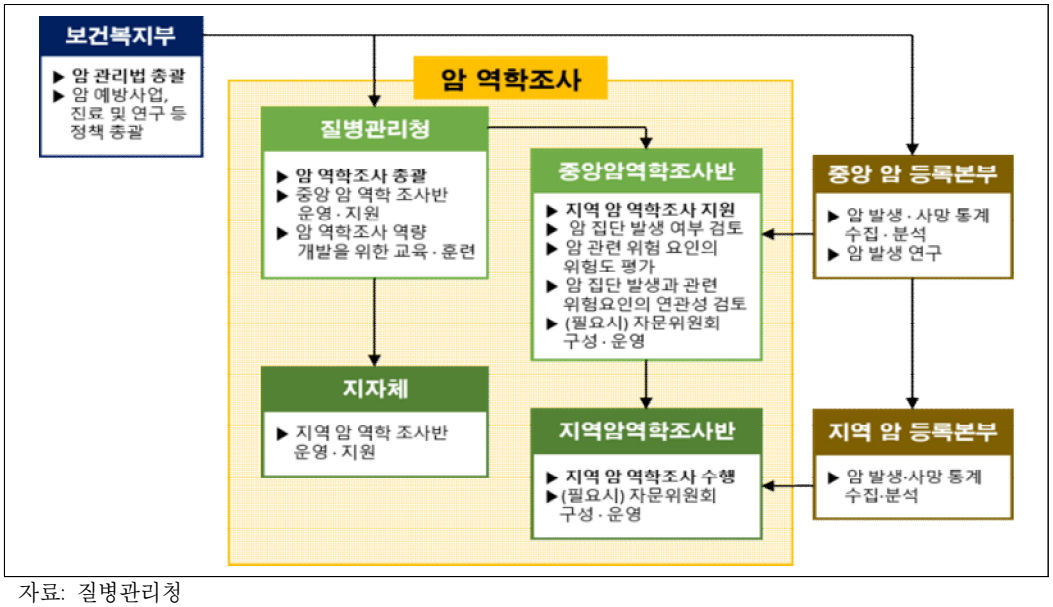
2019년 이후 암 역학조사 수행 의뢰 및 실시 실적이 없고 자치단체 보조금이 매년 전액 불용되고 있으므로, 질병관리청은 향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 체계 개편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암 역학조사 사업의 수행 체계를 살펴보면, 관할 지역 역학조사는 시·도 지역역학조사반이 수행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하거나 지역역학조사반의 역학조사에 대한 심층조사가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의 중앙역학조사반이 역학조사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역학조사를 실시함.[24)]

---

24)「암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역학조사반의 구성·운영 및 임무)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역역학조사반을 둔다.
② 중앙역학조사반은 3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지역역학조사반은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역학조사반 및 지역역학조사반(이하 "역학조사반"이라 한다)의 반원은 중앙역학조사반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지역역학조사반의 경우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암관리사업 또는 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
2. 역학조사 분야의 전문가
3. 암에 관한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환경 및 직업성 질환 관련 전문가
5. 영양학 분야의 전문가
6. 보건통계 분야의 전문가
7. 그 밖에 의학 또는 과학 분야의 전문가
④ 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2. 역학조사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3. 역학조사의 시행 및 평가
4. 역학조사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5. 암의 발병 사례 수집·분석 및 제공
6. 암 발생 위험 요인의 위험도 평가
⑤ 역학조사를 하는 반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이 요청할 때에는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⑥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는 반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되어 활동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역학조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반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

[암 역학조사 사업의 수행 체계도]



자료: 질병관리청

암 역학조사는 자치단체 경상보조[25]로 추진되고 있는데, 2018년 해남군 소아 혈액암 발생 보완 조사를 마지막으로[26] 암 역학조사는 실시된 바가 없고 이에 따라 2019년 이후 자치단체 보조금도 전액 불용되고 있음.

접 관련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역학조사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25) 국비지원율은 70%임.

26) 〈2018년 이전 암 역학조사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예산액	조사 내역	집행액
2012년	500	여수시 갑상샘암 발생 역학조사 및 사후관리 1차년도	178
		진도군 간암과 C형 간염 발생 역학조사 및 사후관리 1차년도	270
2013년	500	여수시 갑상샘암 발생 역학조사 및 사후관리 2차년도	200
		진도군 간암과 C형 간염 발생 역학조사 및 사후관리 2차년도	284
2014년	440	여수시 갑상샘암 발생 역학조사 및 사후관리 3차년도	123
		진도군 간암과 C형 간염 발생 역학조사 및 사후관리 3차년도	204
		남원시 폐암 집단발생 역학조사 및 사후관리 1차년도	100
2015년	350	남원시 폐암 집단발생 역학조사 및 사후관리 2차년도	350
2016년	350	남원시 폐암 집단발생 역학조사 및 사후관리 3차년도	35
2018년	350	해남군 소아 혈액암 발생 보완 조사	21

자료: 질병관리청

[2019~2026년 암 역학조사 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A)				계획 현액	집행액 (B)			
2019년	350	350	-	350	-	350	-	-	350	-
2020년	350	350	-	350	-	350	-	-	350	-
2021년	350	350	-	350	-	350	-	-	350	-
2022년	350	350	-	350	-	350	-	-	350	-
2023년	350	350	-	350	-	350	-	-	350	-
2024년	250	250	-	250	-	250	-	-	250	-
2025년	250	250	-	250	-	250	-	-	250	-
2026년	250	250	-	250	-	250	-	-	250	-

주) 2026년 5월 18일 기준
자료: 질병관리청

예기치 못한 암 역학조사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관련 사업비의 사전 확보 필요성은 일부 인정되는 측면이 있으나, 2019년 이후 자치단체의 암 역학조사 의뢰나 실시 실적이 없고 암 집단 발생 현안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자치단체 보조금은 최소화하면서 암 역학조사 대응 능력은 유지·강화할 수 있도록 암 역학조사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등 사업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6. CJD 부검센터 운영 사업: 유가족의 부검 동의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CJD 부검센터 운영’ 사업은 막대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초래하는 변종 CJD[27][28]의 조기 발견과 국가 감염병 감시체계 유지를 위해 CJD 부검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6,8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29]

[2025년도 CJD 부검센터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	21,476	22,582	9	22,591	21,892	279	420	22,110
인수공통감염병관리	615	615	-	523	520	-	3	615
CJD 부검센터 운영	68	68	-	68	68	-	-	68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최근 5년간 연평균 60건 이상의 CJD가 발생하고 있으나 유가족의 부검 동의를 확보하지 못해 뇌조직 생검 및 부검 건수가 연평균 0.6건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질병관리청은 전담 인력의 상담 절차를 강화하는 등 유가족의 부검 동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30]에 따르면, CJD는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27) CJD(CJD: Creutzfeldt-Jakob disease,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뇌에 축적되면서 뇌 조직이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려 그 기능을 잃게 되는 치명적인 퇴행성 뇌 질환으로, 일반 치매보다 인지기능 저하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며 근육 경련 등을 동반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는 희귀 질환

28) 변종 CJD: 광우병에 감염된 쇠고기의 특정 부위(뇌, 척수 등)를 섭취하여 전염되는 후천성 희귀 뇌 질환으로, 발병 후 평균 14개월 내외에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 질환

29) 국민건강증진기금-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6134-309)(감염병정책국, 의료안전예방국, 국립보건연구원)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제3급감염병으로, CJD의 원인 병원체인 ‘프리온’은 일반 멸균법이나 소독에 대한 저항성이 크기 때문에 공조실에서 공기를 정화하여 배출하는 BL3[31] 연구시설이 필요함.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일송생명과학연구소)이 2006년부터 현재까지 CJD 부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은 민간경상보조로 관련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32]

2025년 CJD 부검센터 운영 사업 실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실집행률이 인건비 0.8%, 운영비 47.9%, 여비 20.0%, 업무추진비 40.0%로 저조한데, 특히 생검 및 부검 경비는 실집행 실적이 전무함.

[2025년 CJD 부검센터 운영 사업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질병관리청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실집행률 (B/A)
		당초	수정(A)					
인건비	기본경비	20.2	20.2	20.2	20.2	20.2	0.2	1.0
	생검 및 부검 경비	4.8	4.8	4.8	4.8	4.8	-	-
	합 계	25.0	25.0	25.0	25.0	25.0	0.2	0.8
운영비	기본경비	25.3	25.3	25.3	25.3	25.3	20.1	79.4
	생검 및 부검 경비	16.7	16.7	16.7	16.7	16.7	-	-
	합 계	42.0	42.0	42.0	42.0	42.0	20.1	47.9
여 비		0.5	0.5	0.5	0.5	0.5	0.1	20.0
업무추진비		0.5	0.5	0.5	0.5	0.5	0.2	40.0

주 1) 생검: 살아있는 환자의 조직을 일부 채취해 질병을 진단하는 과정
2) 부검: 사망자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신을 검사하는 절차
자료: 질병관리청

3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제3급감염병”이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31) BL3(BL3: Biosafety Level 3, 생물안전 3등급): 공기 전염으로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 병원체를 안전하게 다루기 위해 최고 수준의 차폐 시설과 엄격한 안전 관리 기준을 갖춘 연구 시설

32) 국비지원율은 100%임.

2016~2025년 CJD 부검센터 운영 사업 실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까지 약 50~90%의 실집행률을 보였으나 2023년 이후에는 실집행률이 약 15~30%로 저조한 수준임.

[2016~2025년 CJD 부검센터 운영 사업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연 도	질병관리청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불용액	실집행률 (B/A)
	당초	수정(A)						
2016년	100	100	100	100	100	49	51	49.0
2017년	100	100	100	100	100	67	33	67.0
2018년	500	500	500	500	500	441	59	88.2
2019년	100	100	100	100	100	91	9	91.0
2020년	140	140	140	140	140	86	54	61.4
2021년	100	100	100	100	100	63	37	63.0
2022년	100	100	100	100	100	76	24	76.0
2023년	150	150	30	30	30	22	8	14.7
2024년	68	68	68	68	68	19	49	27.9
2025년	68	68	68	68	68	21	47	30.9

주 1) 2018년 계획액(5억원)은 노후화로 인한 부검 시설 보수비 4억원이 반영됨
2) 민간경상보조 기준
자료: 질병관리청

이는 최근 CJD 생검 및 부검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인데, CJD 발생 건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60건 이상이고 2025년에는 99건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나, 최근 5년간 뇌조직 생검 및 부검 건수는 연평균 0.6건에 불과하고 2023년 이후에는 생검 및 부검 실적이 전무함.

[2016-2025년 CJD 발생 및 생·부검 실적]

(단위: 건)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CJD 발생	43	38	54	53	64	68	61	67	67	99
CJD 생검	1	-	-	2	-	-	-	-	-	-
CJD 부검	-	1	1	2	1	1	2	-	-	-

자료: 질병관리청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부검에 대한 사회·심리적 거부감이 높고 사망 후 6시간 이내 부검센터로 이송해야 하는 절차상 제약이 커 최근 3년 동안 CJD 추정환자의 부검 동의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함.

이 사업은 부검을 통해 변종 CJD를 조기 발견하고 국가 감염병 감시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유가족의 부검 동의는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핵심적인 선결 과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질병관리청은 전담 인력의 상담 절차를 강화하고 유가족 대상 설명·동의 지원 체계를 개선하는 등 유가족의 부검 동의율 제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7.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 사업: 실수요를 감안한 계획 수립 필요

가. 개 요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 사업은 감염병 발생 감시·분석, 감염병환자 및 접촉자 관리 등을 통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225억 9,100만원 중 218억 9,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9%)되고 2억 7,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억 2,000만원이 불용되었음.[33)]

[2025년도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	21,476	22,582	9	22,591	21,892	279	420	22,110
말라리아 퇴치	1,963	1,963	-	2,033	2,020	-	13	1,963
격리대상 감염병환자등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424	1,530	-	1,530	1,366	-	164	364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내역사업인 **‘말라리아 퇴치’**는 말라리아 환자 감시 및 말라리아 위험지역 집중관리 등 말라리아 퇴치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20억 3,300만원 중 20억 2,0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4%)되고 1,300만원이 불용되었음.

또 다른 내역사업인 **‘격리대상 감염병환자등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은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방지 및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감염병환자의 격리 조치에 따른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15억 3,000만원 중 13억 6,600만원이 집행(집행률 89.3%)되고 1억 6,400만원이 불용되었음.

33) 국민건강증진기금-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6134-309)(감염병정책국, 의료안전예방국, 국립보건연구원)

나. 검토의견

북한 대상 말라리아 퇴치 지원 사업과 내국인 및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사업은 실수요 예측 미흡, 계획액의 과다 계상 등으로 실집행이 연례적으로 저조하므로, 질병관리청은 과거 집행실적, 향후 여건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적정 소요를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질병관리청은 남북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통한 북한의 감염병 관리역량 강화 및 한반도 말라리아 퇴치 공동 기반 마련을 위해 2001년부터 WHO를 통한 대북 말라리아 퇴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북한 대상 말라리아 퇴치 지원 사업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매년 해외경상이전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실집행이 전무한 실정인데, 이는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대북 지원이 중단되었기 때문임.

[2021~2025년 북한 대상 말라리아 퇴치 지원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 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A)				계획 현액	집행액 (B)			
2021년	10	10	-	10	-	10	-	-	10	-
2022년	10	10	-	10	-	10	-	-	10	-
2023년	10	-	-	-	-	-	-	-	-	-
2024년	10	10	-	10	-	10	-		10	-
2025년	10	10	-	10	-	10	-	-	10	-

자료: 질병관리청

또한 질병관리청은 감염병환자, 의사환자,[34] 병원체보유자의 격리입원기간 내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비용을 보건복지부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임.

내국인 격리입원치료비는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는 일반수용비로 각각 지원하고 있는데, 2025년 실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내국인 격리입원치료비는 계획현액 3억 2,000만원 중 1억 4,600만원이 집행(집행률 45.6%)되고, 외국인 격리

34) 의사환자: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아직 감염병환자(확진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입원치료비는 계획현액 1억 400만원 중 600만원이 집행(집행률 5.8%)되었음.

[2025년 내국인 및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사업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내국인 격리입원치료비 (자치단체 경상보조)	320	320	-	320	146	320	146	-	174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 (일반수용비)	104	104		104	6	104	6	-	98

주)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사업은 별도로 추진됨
자료: 질병관리청

내국인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사업은 A형간염 격리 대상이 2022년까지는 모든 유증상자이었으나 2023년 이후 개인위생 관리가 어려운 사람으로 축소되면서 실집행률이 낮아짐.

[2021~2025년 내국인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사업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연 도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집행액 (B)	불용액	실집행률 (B/A)
	당초	수정(A)					
2021년	139	139	139	139	129	10	92.8
2022년	139	464	464	464	398	66	85.8
2023년	320	320	320	320	180	140	**56.3**
2024년	320	320	320	317	138	179	**43.1**
2025년	320	320	320	320	146	174	**45.6**

자료: 질병관리청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사업은 2021년 이후 연간 200~224명 지원을 예상하였으나 실제 지원 인원은 6명 이하에 불과하여 약 1억원의 계획액 중 집행액은 600만원 이하 수준임.

[2021~2025년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사업 실집행내역]

(단위: 명, 백만원)

연 도	계 획		집 행	
	계획 인원	계획액	지원 인원	집행액
2021년	224	115	-	-
2022년	224	115	-	-
2023년	224	115	5	4
2024년	200	104	6	5
2025년	200	104	6	6

주) 2021년과 2022년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코로나19 이외 격리대상 감염병 발생 환자가 없었음
자료: 질병관리청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북한 대상 말라리아 퇴치 지원 사업, 내국인 및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사업 등 실집행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사업은 실집행 저조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여건변화 및 실수요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적정 소요를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기　타】

8.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질병관리청에 대해 시정요구 27건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주의 1건, 제도개선 26건이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	1	26	-	27
예비비	-	-	-	-	-	-	-
합계	-	-	-	1	26	-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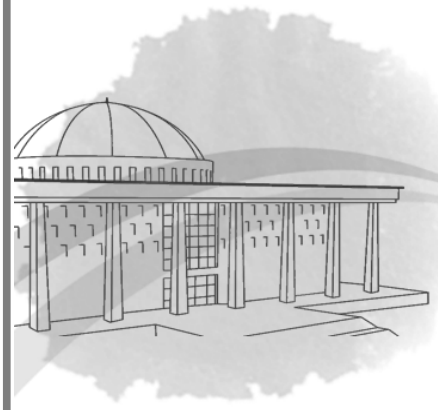
질병관리청은 시정요구사항 27건에 대해 25건을 조치완료(조치율 92.6%)하고 2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27	25	92.6	2
예비비	-	-	-	-
합계	27	25	92.6	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회계연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1,283억 5,500만원(1.8%)이 많은 7조 2,753억 7,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조 4,511억 1,400만원(157.6%)이 증가됨.[1)]

[2025회계연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564,472	1,564,472	1,802,348	237,876	1,583,727	1,583,727	1,819,925	236,198	17,577
기 금	1,102,016	1,102,016	1,021,912	△80,104	5,563,292	5,563,292	5,455,449	△107,843	4,433,537
총수입	2,666,488	2,666,488	2,824,260	157,772	7,147,019	7,147,019	7,275,374	128,355	4,451,114

2025회계연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7,359억 1,500만원(△3.9%)이 적은 18조 1,644억 5,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조 9,087억 5,300만원(48.2%)이 증가됨.

문의: 02-6788-5680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5회계연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2,505,905	12,505,905	11,230,280	△1,275,625	12,983,894	12,995,643	12,321,747	△673,896	1,091,467
기 금	1,047,459	1,047,459	1,025,418	△22,041	5,505,127	5,904,723	5,842,704	△62,019	4,817,286
총지출	13,553,364	13,553,364	12,255,698	△1,297,666	18,489,021	18,900,366	18,164,451	△735,915	5,908,753

나.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9조 5,119억원으로, 10조 1,545억 1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9조 3,089억 7,500만원이 수납(수납률 91.7%)되고, 7,672억 8,600만원은 미수납되어 782억 3,8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65,228	65,228	197	65,425	37,135	26,873	10,261	-
환경개선특별회계	7,346,834	7,724,233	-	7,724,233	8,619,541	7,812,123	729,180	78,238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87,862	187,862	1,519,594	1,707,456	1,425,793	1,408,028	17,765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675	12,675	-	12,675	69,685	59,699	9,985	-
- 지역지원계정	589	589	-	589	23,264	22,443	821	-
- 지역자율계정	12,086	12,086	-	12,086	45,448	36,314	9,134	-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	-	-	633	602	30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	-	-	340	340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111	2,111	-	2,111	2,348	2,253	94	-
합 계	7,614,710	7,992,109	1,519,791	9,511,900	10,154,501	9,308,975	767,286	78,238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2조 3,757억 7,100만원으로, 21조 2,418억 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4.9%)되고 823억 7,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조 515억 8,8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8,187,343	8,624,342	57,615	7,020	1,482	8,690,458	8,643,950	32,848	13,660
환경개선특별회계	7,346,834	7,724,233	66,822	120	1,482	7,792,657	7,596,828	47,580	148,249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3,200,667	2,775,417	862	345,967	-	3,122,246	2,292,227	604	829,41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596,694	2,687,988	-	-	-	2,687,988	2,626,382	1,343	60,264
- 지역지원계정	2,016,140	2,107,434	-	-	-	2,107,434	2,045,828	1,343	60,264
- 지역자율계정	516,359	516,359	-	-	-	516,359	516,359	-	-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8,521	8,521	-	-	-	8,521	8,521	-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55,674	55,674	-	-	-	55,674	55,674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82,422	82,422	-	-	-	82,422	82,422	-	-
합 계	21,413,960	21,894,402	125,302	353,106	2,964	22,375,771	21,241,809	82,375	1,051,588

주) 총계 기준

다. 기금 결산

2025회계연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18조 1,081억 4,500만원으로, 36조 4,938억 4,7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8조 4,886억 8,000만원이 수납(수납률 50.6%)되고, 1,711억 2,000만원은 미수납되어 10억 5,8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				
한강수계관리기금	562,556	562,556	739,091	533,431	48,547	252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37,589	237,589	468,432	246,347	20,568	41
금강수계관리기금	190,800	190,800	216,671	188,950	14,635	38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169,728	169,728	152,892	182,662	9,062	37
석면피해구제기금	62,277	62,277	69,461	66,259	3,126	76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0,406,202	10,406,202	13,288,962	9,833,112	-	-
전력산업기반기금	3,875,157	3,879,276	7,458,989	4,763,621	61,831	614
기후대응기금	2,621,717	2,599,717	14,099,349	2,674,298	13,351	-
합 계	18,126,026	18,108,145	36,493,847	18,488,680	171,120	1,058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18조 1,286억 1,900만원으로, 18조 4,886억 7,900만원이 지출(집행률 102.0%)되고 171억 7,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707억 5,6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한강수계관리기금	562,556	562,556	5,968	568,524	533,431	2,362	1,670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37,589	237,589	1,512	239,101	246,346	1,656	638
금강수계관리기금	190,800	190,800	2,791	193,591	188,950	640	2,232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169,728	169,728	939	170,667	182,662	68	459
석면피해구제기금	62,277	62,277	27	62,304	66,259	30	14,127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0,406,202	10,406,202	-	10,406,202	9,833,112	-	-
전력산업기반기금	3,875,157	3,879,276	136	3,879,412	4,763,621	132	2,311
기후대응기금	2,621,717	2,599,717	9,101	2,608,818	2,674,298	12,291	49,319
합 계	18,126,026	18,108,145	20,474	18,128,619	18,488,679	17,179	70,756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5회계연도 말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산은 전년 대비 5조 7,985억 3,000만원이 증가된 155조 4,197억 7,000만원으로, 이는 금융자산이 2조 7,784억 1,900만원, 유·무형자산이 2조 1,048억 5,800만원, 기타자산이 9,152억 5,300만원 각각 증가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5조 5,615억 8,500만원 증가된 5조 6,774억 7,200만원으로 차입부채 5조 5,844억 200만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2,369억 4,500만원이 증가된 149조 7,422억 9,800만원임.

2025회계연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12조 6,844억 5,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조 250억 1,300만원 증가되었으며, 재정운영결과는 9조 4,613억 4,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105억 8,500만원 증가됨.

[2025회계연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 (A)	2024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155,419,770	149,621,240	5,798,530	3.9
		금융자산	19,651,923	16,873,504	2,778,419	16.5
		유·무형자산	134,164,122	132,059,264	2,104,858	1.6
		기타자산	1,603,725	688,472	915,253	132.9
	부 채		5,677,472	115,887	5,561,585	4,799.1
		차입부채	5,674,319	89,917	5,584,402	6,210.6
		충당부채	76	54	22	40.7
		기타부채	3,077	25,916	△22,839	△88.1
	순자산		149,742,298	149,505,353	236,945	0.2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12,684,457	11,659,444	1,025,013	2.8
	재정운영순원가		12,651,430	11,909,753	741,677	6.2
	재정운영결과		9,461,341	8,950,756	510,585	5.7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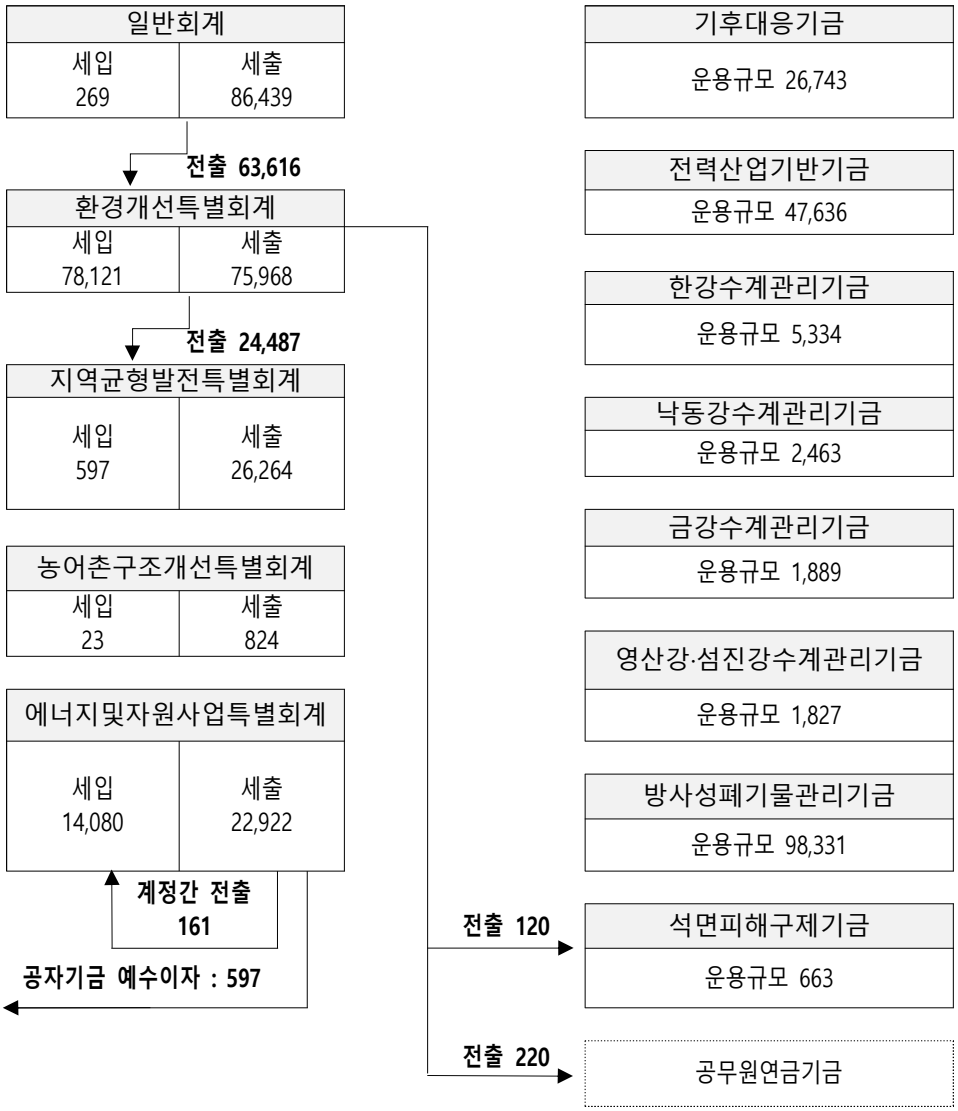
2025회계연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재정은 일반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 5개 회계와 기후대응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등 8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로 6조 3,616억원 전출되었고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2조 4,487억원,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 120억원, 공무원연금기금으로 220억원이 각각 전출되었음. 또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수이자 597억원을 상환하였음.

계정 간 거래를 살펴보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융자계정에서 투자계정으로 161억원이 전출되었음.

[2025회계연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정흐름도]

(단위: 억원)



주1) 회계간 거래 : 총 8조 8,103억원
- 일반회계 → 환특회계 6조 3,616억원
- 환특회계 → 지특회계 2조 4,487억원

주2) 회계-기금간 거래 : 총 937억원
- 환특회계 → 석면기금 120억원
- 환특회계 → 공무원연금기금 220억원
- 에특회계(예수이자) → 공자기금 597억원

주3) 계정간 거래 : 총 161억원
- 에특회계 융자계정 → 투자계정 161억원

내부거래 총 8조 9,201억원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걱정 없는 민생·안전, 도전하며 성장하는 탄소중립, 전국민이 혜택받는 환경복지를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총 581개 세부사업에서 치수연구개발,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 무공해차 보급사업 등을 수행하였음.

2025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정산금이 확정되고 고지서까지 발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679억 4,200만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미수납액이 조속히 수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제재부가금 및 정산금을 부과하였음에도 연구기관의 미납 등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133억 5,090만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미수납액이 조속히 수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셋째,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된 사업은 연내 집행을 전제로 편성되었음에도 대규모 이월이 발생한 사업이 다수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집행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넷째,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은 보조금의 재이월을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음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에서 재이월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조사업의 사업 추진 및 집행 상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에너지 관련 사무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어 관련 법령 및 예산도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고시·훈령 등에서 여전히 사업 수행 주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음.

여섯째, 하천관리청은 「하천법」에 따라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법정 수립기한이 도과한 일부 하천의 하천기본계획이 기한 내 수립되지 않고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천기본계획이 법정 기한 내에 수립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일곱째,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은 유찰 등으로 인해 사업이 2년 이상 지연되어

2025년 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여덟째, 세입징수비용교부금은 법령상 교부 시기와 금액이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교부되고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법령에서 정한 시기 및 금액을 준수하여 부담금 징수비용을 교부할 필요가 있음.

아홉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소음·진동관리법」에 근거하여 층간소음 피해 예방 및 분쟁해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비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법률상 근거가 불명확하므로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열째, 국립환경과학원은 PC 백신 라이선스 비용을 연례적으로 공공요금·관리용역비 등 타 비목에서 조정하여 집행하고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적정 소요를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열한째, 무공해차 보급사업은 예산 편성 시 보급 예상 대수를 과다하게 편성하여 실집행이 부진한 측면이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실적인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열두째, 급속 전기차 충전기 구축 지원사업의 예산안은 충전기당 보조금액을 7,500만원으로 산정하여 편성된 것인데, 실제 집행상으로는 충전기당 평균 단가가 산정 금액보다 낮게 나타나므로 이를 현실화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열셋째,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가 2026년 3월 준공되었음에도 시험·평가장비의 도입 지연으로 인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장비 도입을 조속히 완료하여 센터가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열넷째,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을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연례적으로 타 발전원의 집행부진으로 인하여 이를 태양광(단독주택) 및 태양광(일반)으로 조정하여 집행하고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계획에 따라 목표한 발전원대로 집행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기타경상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정산액의 조속한 수납 필요

가. 개 요

‘기타경상이전수입’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정산된 보조금 집행 잔액이 수납되는 비목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일반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등 총 5개 회계의 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여러 사업을 보조하고 있으며, 이들 회계의 총 기타경상이전수입은 8,081억 2,9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6,695억 9,900만원이 수납(수납률 82.9%)되었고, 1,385억 3,1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2025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C)	수납액 (D)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D/C)	
	본예산	추경(A)								
일반회계	38,417	38,417	-	38,417	28,800	21,015	7,784	-	73.0	76,889
환경개선 특별회계	356,441	356,441	-	356,441	426,648	319,975	106,674	-	75.0	444,740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87,069	87,069	24,521	111,590	289,676	273,622	16,054	-	94.5	191,208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1,461	11,461	0	11,461	61,136	53,210	7,927	0	87.0	29,650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2,019	2,019	0	2,019	1,869	1,777	92	0	95.1	2,019
합계	495,407	495,407	24,521	519,928	808,129	669,599	138,531	0	82.9	744,506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정산금이 확정되고 고지서까지 발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679억 4,200만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미수납액이 조속히 수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일반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여러 사업을 보조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 교부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집행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관련 법령 및 보조금 관련 지침에 따라 차년도 3월까지 사업비를 정산한 후 정산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반납하여야 함.[2)]

그런데 2025년도 결산상 지방자치단체가 정산 이후 반납하여야 할 보조금 정산금이 상당 규모 미수납 상태로 남아 있음.

구체적으로 5개 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총 미수납액은 1,385억 3,100만원에 달하는데, 사유별 미수납액은 납기 미도래가 580억 7,300만원(41.9%), 소송 등 59억 2,800만원(4.3%), 분납 등 65억 8,800만원(4.8%) 등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납부지연에 따른 미수납액이 679억 4,2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49.0%)을 차지하고 있음.

이는 납기 미도래, 소송 등 별도의 사유가 있는 것과 달리,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정산이 완료되어 반납 액수가 확정되고 고지서까지 발급되었음에도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납부지연을 이유로 수납되지 않고 있는 것임.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산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미수납액이 큰 사업의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수납률 제고를 위한 점검회의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보조사업 집행잔액 미반납시 보조금 추가 교부 제한 안내 및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독려 등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나,[3)] 단순 납부지연을 이

---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조치로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 2026년 5월부터 보조금 집행 잔액 미반납 보조사업자에게 추가 보조금 교부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임

유로 미수납된 금액이 679억 4,200만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실효적인 수납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25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 사유]

(단위: 백만원)

	미수납금	지자체 보조금 납부지연	납기 미도래	소송 등	분납 등
일반회계	7,784	377	553	5,928	926
환경개선 특별회계	106,674	48,684	52,839	-	5,15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6,054	10,862	4,681	-	511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7,927	7,927	-	-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92	92	-	-	-
소계 (비중)	138,531 (100.0)	67,942 (49.0)	58,073 (41.9)	5,928 (4.3)	6,588 (4.8)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정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반납하여야 하는 재원이라는 점에서, 단순 납부지연으로 인해 대규모 미수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국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p.1354〉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53	무공해차 보급사업의 조속한 보조금 집행잔액 수납 필요	관련 사업명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무공해차 보급사업 (1633-311)	시정	기후에너지 환경부
		지적 사항	내역사업인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2018년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집행잔액을 현재까지 약 7년간 반납하지 않고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정산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시정 요구 사항	정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과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템e)의 데이터 연계, 공유 등을 통해 보조금 미반납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적인 제재방안, 제도 및 시스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고 관리 및 보조금 사후관리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으며 보조금 관리체계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음.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정산금 반납 현황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장기 미수납 사업에 대해서는 독촉·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여 국고 미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연구개발비 제재부가금 및 정산금: 미수납 제재부가금 및 정산금의 조속한 수납 필요

가. 개 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에너지기획평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총 10개 기관을 통해 총 92개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 R&D 예산액 1조 3,379억 2,600만원 중 1조 3,348억 6,200만원(집행률 99.8%)이 집행되고 19억 3,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8억 8,7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번	기관명	사업수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42	900,372	900,282	-	90	99.9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5	280,134	279,868	140	126	99.9
3	국립환경과학원	8	88,665	87,841	624	960	99.1
4	국립생물자원관	2	19,535	19,316	14	205	98.9
5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1	35,160	35,160	-	-	100
6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1	7,111	5,642	1,105	364	79.3
7	화학물질안전원	1	2,709	2,530	54	125	93.4
8	한국에너지공단	1	2,000	1,983	-	17	99.2
9	정보통신기획평가원	1	1,280	1,280	-	-	100.0
1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	960	960	-	-	100.0
합계		92	1,337,926	1,334,862	1,937	1,887	99.8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나. 검토의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제재부가금 및 정산금을 부과하였음에도 연구기관의 미납 등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133억 5,090만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미수납액이 조속히 수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여러 기관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4]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연구협약 위반 등이 발생한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경우 제재부가금 및 연구비 정산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기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제재부가금 및 정산금 미수납액이 총 133억 5,090만원에 달하고 있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총 97억 9,350만원의 제재부가금이 수납되지 못하고 있고, 정산금 미수납액 역시 총 20억 3,200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연구기관의 미납을 이유로 수납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총 10억 2,370만원의 제재부가금이 수납되지 못하고 있고, 연구기관의 폐업, 경영 악화 등을 미수납 사유로 들고 있음. 또한 정산금 미수납액도 총 5억 17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연구기관의 미납을 그 이유로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제재부가금 및 정산금의 미수납은 단년도에 그치지 않고 최근 수년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상당수 금액에 대해 단순 납부독촉 단계에 머물러 있음.

[2025년말 기준 제재부가금 및 정산금 미수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명	종류	부과년도	세부사업명	미수납액	미수납 사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재부가금 미수납	2022	유망녹색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250.0	폐업
		2023	유망녹색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621.0	경영 악화
		2024	야생생물 유래 친환경 신소재 및 공정 기술개발사업	133.8	폐업
		2025	유망녹색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18.9	연구기관 미납
		합계		1,023.7	
	정산금 미수납	2023	유망녹색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124.1	경영악화
		2024	생태모방 기반 환경오염관리 기술개발사업	39.2	폐업, 연구기관 미납
			야생생물 유래 친환경 신소재 및 공정 기술개발사업	139.5	폐업
			지중환경오염위해관리기술개발사업	30.4	경영악화
		2025	기후위기대응 홍수방어능력 혁신기술개발사업	0.8	연구기관 미납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사업	3.0	
			지중환경 오염위해관리 기술개발사업	45.3	
			폐자원 활용 에너지 전환 실증 기술개발사업	119.4	
		합계		501.7	
	총 합계			1525.4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위: 백만원)

기관명	종류	부과년도	세부사업명	미수납액	미수납 사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제재부가금 미수납	2022	에너지안전기술개발	72.5	납부 대상자 미납중
			원자력핵심기술개발	63.3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163.1	
			원전해체방폐물안전관리기술개발	12.2	
		2023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9,211	
		2024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131.4	
		2025	화력발전소안전환경구축기술개발	140.0	
		합계		9,793.5	
	정산금 미수납	2023	기술혁신형에너지강소기업육성	1.5	납부 대상자 미납중
			신재생에너지융합핵심기술개발(전력)	70.4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635.5	
			에너지기술수용성제고및사업화촉진	14.0	
			원자력핵심기술개발	3.8	
			원전해체방폐물안전관리기술개발	84.0	
		2024	기술혁신형에너지강소기업육성	10.1	
			멀티터미널직류송배전시스템개발	0.1	
			미래형스마트그리드 실증	7.1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0.1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41.5	
			에너지국제공동연구	33.5	
			에너지기술수용성제고및사업화촉진	57.2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에특)	122.6	
			원전 안전부품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1.4	
			제조업활력제고를위한산업기계에너지 저감형재제조기술개발	8.0	
		2025	LNG발전용 가스터빈 고온부품 성능검증혁신기술개발	19.6	
			PCS 경쟁력 강화 핵심기술개발	1.6	
			가동원전 안전성 향상 핵심기술개발	30.7	
			공공에너지 선도투자 및 신산업창출 지원 사업	0.3	
			기술혁신형에너지강소기업육성	24.9	
			선박용 고안전성 ESS 패키징 기술개발	5.5	
			신산업맞춤형핵심광물개발활용기술개발	25.8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249.1	
			에너지국제공동연구	33.4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에특)	195.6	
			에너지인력양성	20.0	
			원자력핵심기술개발	113.5	
			원전 중대사고 방지 안전강화 기술개발사업	2.2	
			제조업활력제고를위한 산업기계에너지 저감형재제조기술개발	0.3	

(단위: 백만원)

기관명	종류	부과 년도	세부사업명	미수납액	미수납 사유
			중소규모 가스전 및 희소광물탐사·활용 기술개발사업	6.9	
			지능형 LVDC(저압직류) 핵심기술개발	9.2	
			포항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	0.6	
			화력발전소 안전환경 구축 기술개발	202.0	
		합계		2,032.0	
	총 합계			11,825.5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부가금 및 정산금은 연구개발비의 적정 집행과 연구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법령에 따라 수납되어야 함에도 현재와 같이 미수납이 장기간 누적될 경우 제재부가금 및 정산금 제도의 실효성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또한 미수납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닌 대다수 납부대상자의 미납에 기인하고 있음에도 상당한 규모의 미수납액이 장기간 누적되고 있는 것은 제재부가금 및 정산금의 징수·관리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재부가금 및 정산금 장기 미수납 금액에 대한 회수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미수납액이 조속히 수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추가경정예산 사업: 연내 집행을 위한 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제1회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일반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소관 사업의 예산액을 경정하였음.

추가경정예산 반영 사업 기준으로, ① 일반회계는 본예산 6조 7,830억 6,900만원에서 추경을 통해 4,369억 9,900만원이 증액되어 7조 2,200억 6,800만원이 되었고, ② 환경개선특별회계는 본예산 1조 5,051억 1,000만원에서 추경을 통해 1,514억 5,500만원이 증액되어 1조 6,565억 6,500만원이 되었으며, ③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 3조 1,915억 2,700만원에서 4,252억 5,000만원이 감액되어 2조 7,662억 7,700만원이 되었음.

또한 ④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우 본예산 1조 6,264억 1,800만원에서 912억 9,400만원이 증액되어 1조 7,177억 1,200만원이 되었고, 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경우 계획액 2조 2,856억 2,000만원에서 13억 5,800만원이 증액되어 2조 2,869억 7,800만원이 되었음.

[2025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추가경정예산 반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회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일반회계	6,783,069	7,220,068	47,460	1,482	7,269,010	7,239,009	21,495	8,505	6,331,716
환경개선특별회계	1,505,110	1,656,565	12,778	-	1,669,343	1,633,605	2,200	33,538	641,124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3,191,527	2,766,277	115	-	2,766,392	2,123,418	98	642,876	3,215,451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626,418	1,717,712	-	-	1,717,712	1,657,618	-	60,095	833,826
전력산업기반기금	2,285,620	2,286,978	-	-	2,286,978	5,806,553	-	-	2,686,610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된 사업은 연내 집행을 전제로 편성되었음에도 대규모 이월이 발생한 사업이 다수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집행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5년 4월 21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2025년 5월 2일 정부에 이송되었음. 또한 2025년 6월 23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2025년 7월 4일 정부에 이송되었음.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의결 일자]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		
내용	제출	→	국회 의결 및 정부 이송	제출	→	국회 의결 및 정부 이송
날짜	2025. 4. 21.		2025. 5. 2.	2025. 6. 23.		2025. 7. 4.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특성상 시급성 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두 차례의 추경 과정에서 증액된 사업 중 실집행이 부진한 사업들이 다수 있음.

구체적으로, ①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된 609억 9,400만원 전액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었으나 실집행액은 375억 5,800만원에 불과하고 234억 3,600만원이 이월(추경액 대비 38.4% 이월)되었으며, ②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의 경우 추가경정예산 증액분 46억 5,100만원 전액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었으나 4억 5,500만원만 실집행되고 40억 2,400만원이 이월(추경액 대비 86.5% 이월)되었고 1억 7,200만원이 불용되었음.

또한 ③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의 경우 추가경정예산 증액분 304억 4,000만원 전액이 국립공원공단에 교부되었으나 221억 8,800만원이 집행되었고 82억 5,200만원이 이월(추경액 대비 27.1% 이월)되었으며, ④ ‘재활용 및 업사이클 체계 구축 사업’의 경우 추가경정예산 증액분 18억 9,800만원 전액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었으나 9억 8,600만원만 실집행되고 9억 1,200만원이 이월(추경액 대비 48.1% 이월)되었음.

이에 더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⑤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경우 추가경정예산 증액분 912억 9,400만원 전액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었으나 491억 700만원만이 실집행되었고 421억 8,700만원이 이월(추경액 대비 46.2% 이월)되었음.

이들 5개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1,892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중 실집행액은 1,102억 9,400만원에 그친 반면, 총 788억 1,100만원이 이월(추경액 대비 41.6% 이월)되었고, 1억 7,2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추가경정예산 반영 사업 중 집행부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회계명	사업명	2025년										
		추가경정예산 (기후부)				추가경정예산 (실집행(보조사업자))						
		추경액(A)	이전용 등(B)	예산현액 (A+B)	추경 집행액	교부된 금액 (C)	이전용 등(D)	예산현액 (C+D)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불용액
환경개선 특별회계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60,994	-	60,994	60,994	60,994	-	60,994	37,558	23,436	38.4	-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4,651	-	4,651	4,651	4,651	-	4,651	455	4,024	86.5	172
	국립공원 및 자연공원사업	30,440	-	30,440	30,440	30,440	-	30,440	22,188	8,252	27.1	-
	재활용 및 업사이클 체계 구축	1,898	-	1,898	1,898	1,898	-	1,898	986	912	48.1	-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하수관로 정비	91,294	-	91,294	91,294	91,294		91,294	49,107	42,187	46.2	-
합계		189,277	-	189,277	189,277	189,277	-	189,277	110,294	78,811	41.6	172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추가경정예산액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공원공단의 실집행 단계에서 행정절차 지연, 민원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실집행이 부진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은 연내 신속한 집행을 통한 정책효과의 조기 달성을 위하여 편성되는데, 사업에서 보조사업자들의 대규모 이월이 발생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단계에서 실제 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음.[5)]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된 사업들이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강화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5)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월별 집행점검, 부진사업 담당자 면담, 집행상황을 고려한 계획 수립 등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임

4.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재이월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일반회계·환경개선특별회계·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5개의 회계와 6개의 기금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 총 예산현액 8조 1,492억 300만원 중 7조 7,109억 7,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4.6%)되고 16억 4,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365억 8,6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회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일반회계	360,958	360,958	-	2,851	363,809	363,809	-	-	526,359
환경개선특별회계	2,040,082	2,275,647	17,443	△3,650	2,289,440	2,230,488	342	58,610	1,053,114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2,188,404	1,826,154	-	△105,000	1,721,154	1,407,257	-	313,897	1,959,66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2,603,100	2,694,394	-	-	2,694,394	2,632,884	1,301	60,210	1,815,033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82,422	82,422	-	-	82,422	82,422	-	-	2,439
기후대응기금	110,460	117,960	-	-	117,960	115,639	-	2,321	149,785
전력산업기반기금	193,807	193,807	-	-	193,807	193,100	-	707	153,228
한강수계관리기금	377,077	377,077	-	-	377,077	377,076	-	1	360,448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74,099	174,099	-	-	174,099	173,602	-	497	167,098
금강수계관리기금	92,107	92,107	-	-	92,107	92,083	-	24	90,291
영산강·섬진강수계 관리기금	42,934	42,934	-	-	42,934	42,615	-	319	49,081
합계	8,265,450	8,237,559	17,443	△105,799	8,149,203	7,710,975	1,643	436,586	6,326,536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은 보조금의 재이월을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음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에서 재이월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조사업의 사업 추진 및 집행 상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은 보조금의 이월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인정된 이월한 경비 중 이월한 회계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도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재이월을 허용하고 있음.[6)]

그런데 2025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 단계에서 상당한 규모의 재이월이 발생하였음.

각 회계별로 재이월이 발생한 사업 기준 전년도 이월액 중 재이월액은 ① 일반회계에서 1,199억 1,200만원 중 430억 5,400만원(35.9%), ②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3,885억 8,000만원 중 499억 8,100만원(12.9%), ③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4,859억 7,000만원 중 968억 5,400만원(19.9%), ④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94억 3,300만원 중 46억원(48.8%)에 달함.

또한 기금 수행 보조사업에서도 재이월이 발생하였는데, 재이월이 발생한 사업 기준 전년도 이월액 중 재이월액은 ① 기후대응기금에서 254억 7,300만원 중 10억 5,400

---

6)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월을 위해서는 보조사업자는 해당연도 교부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중 이월이 필요한 금액 및 반납금액을 포함한 이월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연도 말까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25조의2(보조사업비의 재이월) ① 제25조에 따라 이월한 경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이월한 경비
2. 제25조제2항제3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이월한 경비 중 이월한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월한 경비 중 이월한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입찰공고 후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재이월의 경우 제25조제3항 내지 제4항, 제6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만원(4.1%), ②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573억 8,000만원 중 74억 900만원(12.9%), ③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153억 4,900만원 중 11억 2,200만원(7.8%), ④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68억 2,800만원 중 5,700만원(0.8%), ⑤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76억 6,800만원 중 21억 3,100만원(27.8%)에 달함.

이에 따라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4개 회계 및 5개 기금에서 총 전년도이월액 1조 1,165억 9,300만원 중 2,062억 6,200만원(18.5%)이 다음 연도로 재이월되었음.

[2025년도 보조사업자 기준 회계 및 기금별 재이월 발생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회계명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								2026년도 예산액
	예산현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A)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재이월액 (B)	재이월률 (B/A)	불용액	
일반회계	227,936	213,246	119,912	333,158	155,480	135,196	43,054	35.9	463	359,190
환경개선 특별회계	1,814,828	1,731.,164	388,580	2,119,744	1,633,522	401,559	49,981	12.9	41,727	2,037,184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2,185,181	2,125,086	485,970	2,611,056	1,771,980	779,372	96,854	19.9	26,989	2,429,742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82,422	82,422	9,433	91,855	70,931	15,191	4,600	48.8	1,133	84,444
기후대응 기금	21,487	21,487	25,473	46,959	28,040	11,419	1,054	4.1	6,446	21,626
전력산업 기반기금	66,228	66,203	57,380	123,583	79,373	44,210	7,409	12.9	-	52,900
한강수계 관리기금	25,921	25,921	15,349	41,270	36,888	2,057	1,122	7.8	1,206	21,981
낙동강수계 관리기금	59,034	59,034	6,828	65,862	60,465	5,078	57	0.8	319	56,042
금강수계 관리기금	59,987	59,983	7,668	67,651	58,471	7,940	2,131	27.8	1,240	60,844
합계	4,543,024	2,653,382	1,116,593	5,501,138	3,895,150	1,402,022	206,262	18.5	79,523	5,123,953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심지어 5개 사업은 재이월된 금액도 차년도로 재재이월되고 있는데, 환경개선특별회계의 ①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국고보조사업’은 2022년부터 이월된 금액 중 4억 8,100만원이 2026년으로 이월(4년 이월)되었고, ②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평가 사업’[7]은 2023년에 이월된 금액 중 1억 5,400만원이 2026년으로 이월(3년 이월)되었으며, ③ ‘하수처리장설치사업’은 2023년에 이월된 금액 중 6,400만원이 2026년으로 이월(3년 이월)되었음.

또한 기금의 경우 ④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친환경청정 사업’에서 2022년부터 이월된 금액 중 10억 8,700만원이 2026년으로 이월(4년 이월)되었고, ⑤ 금강수계기금의 ‘생태하천복원사업’에서 2023년부터 이월된 금액 중 10억 9,500만원이 2026년으로 이월(3년 이월)되었음.

[2025년도 보조사업자 기준 재재이월 이상 발생한 사업의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명	사업명	연도	부처	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									
			예산현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이월시작 연도부터 2026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C/A)
								예산현액	집행액(C)				
환경개선특별회계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국고보조사업	2022	49,604	49,061	28,345	77,406	43,730	49,061	28,235	28,230	481	5,446	56.9
		2023	34,911	34,404	28,230	62,634	36,339	34,404	17,946	22,578		3,717	51.4
		2024	33,691	30,696	25,459	56,155	38,573	30,296	21,480	16,151		1,431	63.8
		2025	39,160	39,159	16,151	55,310	45,707	39,159	32,345	8,996		607	82.6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평가	2023	5,400	5,400	11,100	16,500	5,122	5,400	-	6,744	154	4,634	-
		2024	5,500	5,500	6,744	12,244	1,760	5,500	-	10,450		34	-
		2025	6,300	6,300	10,450	16,450	5,952	6,300	-	10,798		-	-
	하수처리장 설치	2023	763,984	763,984	74,598	838,582	688,817	763,984	630,379	140,219	64	9,546	82.5
		2024	1,016,742	957,670	143,285	1,100,955	879,444	957,670	768,542	207,313		14,198	75.6
		2025	903,488	887,289	207,285	1,094,574	899,255	887,289	732,272	178,765		16,554	81.0
한강수계관리기금	친환경청정 사업	2022	19,902	19,902	8,830	28,732	16,516	19,902	10,251	11,042	1,087	1,174	51.3
		2023	33,964	33,964	11,042	45,006	26,374	33,964	18,276	18,454		178	53.7
		2024	28,190	28,190	18,454	46,644	31,938	28,190	20,574	14,000		706	72.8
		2025	20,569	20,569	14,000	34,569	30,789	20,569	18,667	2,991		789	90.4
금강수계관리기금	생태하천 복원 사업	2023	1,656	1,656	1,923	3,579	2,235	1,656	1,406	1,345	1,095	-	84.9
		2024	1,159	1,159	1,345	2,504	1,109	1,159	1,109	1,395		-	95.7
		2025	1,053	1,053	1,395	2,448	948	1,053	648	1,500		-	61.5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7) 세부사업인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사업의 내역사업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실집행 단계에서 행정절차 지연 및 지역주민 반대 민원,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재이월이 발생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재이월이 발생한 사업들의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절차 지연, 민원 발생, 사업계획 변경 등의 집행 제약요인이 존재하였음에도 상당 규모의 예산이 교부되었다는 점에서, 예산 편성 및 교부 단계에서 사업 준비도와 실제 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못하였던 측면이 있음.[8)]

또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은 재이월의 경우 이월한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도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행정절차 지연·사업계획 변경 등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사항이라는 점에서 이를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9)]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조사업자의 실제 집행현황을 면밀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금 교부 이후에도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재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8) 또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은 보조금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월과 재이월에 대해서만 예외 규정을 규정하였을 뿐 재재이월 이상의 경우에는 별도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9)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당 사업들이 「지방재정법」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되었으므로 5년 이내로 이월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국비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에 따른 이월 및 재이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계속비 사업이라는 사정만으로 국고보조금의 장기 이월이 당연히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年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5. 에너지 관련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소관 변경 후 미정비 규정의 조속한 정비 필요

가. 개 요

2025년 10월 1일「정부조직법」개정 및 시행으로 기존 환경 사무를 담당하던 환경부에 에너지 관련 사무가 이관되었고,[10] 명칭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되었음.

이에 따라「에너지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등 에너지 관련 법률의 소관 및 예산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일반회계·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3개 회계 및 전력산업기반기금·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등 2개 기금에서 에너지 관련 예산액 총 3조 8,320억 8,400만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었고, 3조 8,254억 7,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8%)되었으며 3억 9,600만원이 이월되고 62억 5,6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 에너지 관련 사업 결산]

(단위: 개, 백만원)

회계명	사업수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일반회계	11	23,013	-	4	23,017	22,952	4	61	7,103
에특회계	35	1,217,622	260	-	1,217,882	1,213,377	260	3,885	1,268,977
지특회계	4	26,497	-	-	26,497	26,497	-	-	13,954
전력기금	59	2,399,089	136	-	2,399,225	2,396,783	132	2,310	2,737,739
방폐기금	9	165,863	-	-	165,863	165,863	-	-	148,499
계	118	3,832,084	396	4	3,832,484	3,825,472	396	6,256	4,176,272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10)「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제43조(기후에너지환경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 · 이용 · 개발, 하천 및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나. 검토의견

2025년 10월 1일「정부조직법」개정으로 에너지 관련 사무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어 관련 법령 및 예산도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고시·훈령 등에서 여전히 사업 수행 주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음.

2025년 10월 1일「정부조직법」및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관련 예산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 에너지 사업의 일부 고시·지침은 여전히 산업통상자원부를 담당 부처 또는 권한 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사업 집행체계와 규정 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

예를 들어「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에너지사용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개정에 따라 실제 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대상으로 수행되고 있음.

이 외에도「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전기위원회 운영·재정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등 다수의 규정에서 여전히 산업통상자원부를 수행 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에너지 관련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담당하는 행정체계와 괴리가 존재하는 상황임.

[현재까지 소관이 미개정된 한국에너지공단 수행 사업 관련 규정]

규정 명	종류	규정 내용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사업 실제 집행 주체 및 예산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전되었으나 규정상 수행 주체가 여전히 산업통상자원부로 규정됨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고시	
전기위원회 운영·재정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고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고시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고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및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고시	
송전선로 최소유지관리기준	고시	
송전선로 성능개선기준	고시	
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	훈령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와 같은 규정 미정비로 인하여 업무 수행의 근거 불명확, 행정절차 혼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실제 집행 체계에 맞도록 관련 고시·훈령 등을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음.

6. 공공기관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공공기관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의무설치규정 준수 여부 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정부조직법」 개정 및 시행으로 에너지 관련 사업의 주무부처로, 공공기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의 주관 부처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R&D)의 내내역사업인 한국형 그린버튼 플랫폼 개발 및 구축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두 사업의 예산액 총 838억 1,1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

[2025년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관련 결산]

(단위: 백만원)

회계명	사업명 (내내역사업명)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79,061	-	-	79,061	79,061	-	-	82,842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 (한국형그린버튼 플랫폼 개발 및 구축)	4,750	-	-	4,750	4,750	-	-	5,000
계		83,811	-	-	83,811	83,811	-	-	87,842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은 공공기관이 전력피크 저감 등을 위해 계약전력 2,000kW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11]

1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④ 공공기관은 전력피크 저감 등을 위해 계약전력 2,000kW 이상의 건축

나. 검토의견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의무 이행률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기관이 ESS 설치 의무를 준수하도록 관리·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공공기관의 ESS 설치현황 등을 관리하고 있고,[12]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ESS 우수사례집 배포, ESS 효과성 홍보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 및 사업수행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공기관의 ESS 설치의무 이행률은 저조한 상황으로, 2023년 기준 ESS 설치 의무 대상 공공기관은 281개였으나 실제 설치 의무를 이행한 기관은 69개에 불과하여 ESS 설치 의무이행률은 24.6% 수준이었음.

또한 2024년의 경우에도 ESS 설치 의무 대상 공공기관은 308개였으나, 실제 의무를 이행한 기관은 109개로 의무이행률이 35.4%로 나타나 여전히 상당수 공공기관이 ESS 설치의무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

[최근 2년간 공공기관의 ESS 설치 의무 이행률]

(단위: 개소, %)

연도	ESS설치 의무 공공기관 수 (A)	ESS설치 의무이행 공공기관 수 (B)	의무이행률(B/A)
2023년	281	69	24.6
2024년	308	109	35.4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간 부족 및 화재 우려 등으로 인하여 의무이행률이 저조하다는 입장이나,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는 단순 권고사항이 아니라 규정상 의무라는 점에서, 현재와 같이 낮은 수준의 의무이행률이 지속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임.[13]

물에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2)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의 내내역사업인 한국형 그린버튼 플랫폼 개발 및 구축 사업을 통해 공공기관 에너지 데이터의 수집·저장·관리, 분석 및 시각화 등을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기관별 의무 미이행 현황 및 사유를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이행 점검 강화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 법령상 ESS 설치 의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3)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간 부족으로 ESS 설치가 어려운 공공기관은 인접 공공부지 활용 여부를 검토하고, 안전기준 강화 등을 통해 화재 우려를 저감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임.

7. 수자원공사 출자 수도사업: 수도사업의 출자 분담비율 준수 필요

가. 개 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도사업을 수자원공사에 출자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공업용수도 안정화, 공업용수도 확충, 광역상수도 확충, 광역상수도 안정화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이 사업들은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국비 30%를 출자하고, 수자원공사가 7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집행됨.

공업용수도 안정화 사업은 2025년도 예산현액 346억 200만원이 전액(집행률 100.0%) 집행되었고, 공업용수도 확충 사업은 2025년 예산현액 14억 6,600만원 전액(집행률 100.0%) 집행되었으며, 광역상수도 확충 사업은 2025년 예산현액 492억 6,200만원 중 488억 3,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1%)되고 4억 2,400만원이 불용되었고, 광역상수도 안정화 사업은 2025년 예산현액 586억 3,400만원이 전액(집행률 100.0%) 집행되었음.

[2025년도 수자원공사 출자 수도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공업용수도 안정화	27,502	34,602	-	-	34,602	34,602	-	-	26,825
공업용수도 확충	1,466	1,466	-	-	1,466	1,466	-	-	1,651
광역상수도 확충	49,262	49,262	-	-	49,262	48,838	-	424	17,757
광역상수도 안정화	58,634	58,634	-	-	58,634	58,634	-	-	48,705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수자원공사 출자 수도사업은 국비 30%, 수자원공사 70%의 분담비율에 따라 추진하여야 함에도 국비가 분담비율보다 높게 편성되는 사업이 다수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예산편성 시 수자원공사의 실집행 현황을 고려하여 분담비율에 부합하는 적절한 예산액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국비를 출자하여 공업용수도 안정화, 공업용수도 확충, 광역상수도 확충 및 광역상수도 안정화 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도법」에 따라 10년마다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14] 해당 계획에 근거하여 수자원공사 수도 사업은 2011년부터 정부가 총사업비의 30%를 출자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나머지 70%를 부담하는 구조로 추진되고 있음.

그런데 2025년도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상 일부 사업에서 당초 설정된 정부와 수자원공사 간 부담 비율이 충분히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수행되는 '포항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 사업'은 2024년 누적 수자원공사 부담 비율이 63.6%(국비 비율 36.4%)로 70%에 미달하고 있음에도 2025년도 수자원공사 부담 비율이 1.5%(국비 비율 98.5%)에 불과함.

또한 2022년부터 2028년까지 수행되는 '군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도 2024년 누적 수자원공사 부담 비율이 60.1%(국비 비율 39.9%) 수준에 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수자원공사 부담 비율이 6.1%(국비 비율 93.9%)이며,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수행되는 '금강남부권(2차) 급수체계조정사업'도 2024년 누적 수자원공사 부담 비율이 59.3%(국비 비율 40.7%)에 불과한데도 2025년도 수자원공사 부담 비율이 8.2%(국비 비율 91.8%)에 불과함.

이처럼 총 11개의 수도 사업에서 2024년까지 수자원공사의 누적 부담금 비율이 70%에 미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도 수자원공사 부담 비율이 70% 미만으로 관련 예산이 편성·집행되어 사업비 분담 원칙이 충분히 이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14) 「수도법」
제4조(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025년도 수자원공사 출자 수도 사업 중 수공 부담금액이 저조한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사업수행연도	2024년까지 누적			2025년		
			국비지원금액	수공부담금액	수공부담금액비율	국비지원금액	수공부담금액	수공부담금액비율
공업용수도 안정화	군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	'22~'28	4,944	7,437	60.1	5,093	332	6.1
	울산공업용수도(Ⅰ) 노후관 개량(4차)	'24~'29	200	20	9.1	200	453	69.4
공업용수도 확충	포항블루밸리 용수공급(2차)	'24~'30	607	272	30.9	500	95	16.0
광역상수도 확충	금강남부권(2차) 급수체계조정사업	'20~26	5,989	8,724	59.3	2,164	193	8.2
광역상수도 안정화	수도권광역상수도(Ⅰ) 노후관 개량	'21~'27	8,589	7,244	45.8	4,668	8,685	65.0
	남강댐광역 1단계 노후관개량	'21~'27	1,866	2,382	56.1	11,442	9,882	46.3
	태백권광역상수도 광동계통 노후관 개량	'21~'27	5,251	10,323	66.3	6,280	7,699	55.1
	포항광역상수도 관로복선화	'20~'27	12,056	21,098	63.6	5,403	82	1.5
	수도권광역상수도(Ⅲ) 노후관 개량	'24~'29	1,000	1,944	66.0	1,000	2,274	69.5
	보령댐광역 당진계통 노후관개량	'24~'29	630	473	42.9	300	28	8.5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20~'27	53,093	84,637	61.5	5,328	3,300	38.2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와 같이 수도사업에서 정부 출자 비율이 과다하게 편성됨에 따라 전체 수도사업의 평균 매칭 비율 또한 낮아지고 있는데, 2025년 전체 수도사업의 평균 수자원공사 부담 비율은 64.1%로 나타나 2024년 전체 수도사업의 평균 수자원공사 부담 비율인

67.3% 대비 3.1%p 감소하였음.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 절차 이행, 원자재 가격상승 및 인허가 지연 등에 따라 사업 지연이 발생하여, 당해연도에 편성된 국비가 먼저 집행되고 있다는 입장임.[15)]

그러나 이와 같은 예산 편성이 반복될 경우 국비가 분담비율 대비 과다 투입되어 다른 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재원이 제약될 수 있음.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간 재원 분담 비율(국비 30%, 수자원공사 70%)에 부합하도록 적절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음.

15)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 준공된 광역상수도 스마트관리체계 구축(2020년 ~ 2024년 수행) 사업은 준공 당시 수자원공사 누적 부담 금액 비율이 70.0%, 2025년 준공된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개량(2차) (2019년 ~ 2025년 수행) 사업은 수자원공사 누적 부담 금액 비율이 70.6%로, 준공 시에는 부담 비율을 준수한다는 입장임.

【일반회계】

〈세 출〉

8. 치수연구개발: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하천법」상 기한 준수 필요

가. 개 요

‘치수연구개발’ 사업은 「하천법」에 따라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여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등 하천의 관리에 관한 법정계획인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436억 800만원 중 415억 2,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2%)되고 18억 4,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억 4,300만원이 불용되었음.[16)]

[2025년도 치수연구개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치수연구개발	40,000	40,000	3,608	-	43,608	41,525	1,840	243	41,000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하천관리청은 「하천법」에 따라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법정 수립기한이 도과한 일부 하천의 하천기본계획이 기한 내 수립되지 않고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천기본계획이 법정 기한 내에 수립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하천법」[17)]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정비·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방향을 설

16) 일반회계-치수연구개발(5331-302)(수자원정책관)

17) 「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 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하천의 치수·이수·수생태환경 및

정하기 위하여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하천기본계획은 하천의 치수·이수·수생태환경 및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서, 국가하천 관리의 기본이 되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법정 기한을 준수하여 적기에 수립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일부 국가하천의 경우 법정 수립기한이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서낙동강·평강천·맥도강·보성강의 경우 법정 수립기한이 2023년이었으나 현재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2024년까지 수립하여야 하는 안성천·진위천·오산천·황구지천과 2025년까지 수립하여야 하는 수영강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이 모두 기한 내 수립되지 않았음.

[최근 3년간 법정 하천기본계획 수립 기한 연도 및 실제 수립 연도]

연번	하천명	법정 하천기본계획 수립 기한 연도	2026년 6월 기준 수립여부
1	내성천	2023	수립완료
2	양산천	2023	
3	형산강	2023	
4	중랑천	2023	
5	달천	2023	
6	서낙동강	2023	수립중
7	평강천	2023	
8	맥도강	2023	
9	보성강	2023	
10	안성천	2024	
11	진위천	2024	
12	오산천	2024	
13	황구지천	2024	
14	수영강	2025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처럼 총 89개의 국가하천 중 법정 하천기본계획 수립기한이 도과하였음에도 2025년 말까지 수립되지 않은 하천이 총 20곳(전체 하천 대비 22.5%)에 달하고, 법정 수립기한이 2021년이었으나 2026년 6월까지 수립되지 않아 4년 이상 수립이 지연된 하천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주민친화적 활용, 자연친화적 관리·보전 및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 있는 상황임.

[2026년 6월 기준 법정 하천기본계획 수립기한을 도과한 하천 현황]

법정 하천기본계획 수립 기한	미수립 하천 수	지연 기간
2021년	2곳	4년 6개월
2022년	9곳	3년 6개월
2023년	4곳	2년 6개월
2024년	4곳	1년 6개월
2025년	1곳	6개월
합계	20곳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류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포괄한 권역단위 하천기본계획을 통합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전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하천기본계획은 「하천법」에 따라 일정 주기마다 수립이 예정되어 있고, 권역단위 통합 추진이나 관계기관 협의 등을 이유로 법정 수립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권역 단위 통합 발주 방식을 선택하였다면, 권역 내 포함된 하천 중 법정 수립기한이 가장 빠른 하천의 기한에 맞추어 전체 용역 및 행정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특히 하천기본계획은 일정 주기마다 반복적으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라는 점에서, 관계기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권역 단위 통합 검토 등 주요 절차 역시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다수 하천에서 반복적으로 법정 기한을 넘겨 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은 사업관리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하천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법정 수립기한 내 계획이 적기에 수립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 및 계획수립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9.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 필요

가. 개 요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은 도림천 일대에 반복적으로 침수가 일어남에 따라 침수예방을 위한 수해대책을 위해 서울특별시에 국고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액 50억원이 전액 미집행되고 타 사업에 전액 전용(집행률 0.0%)되었음.[18][19]

[2025년도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5,000	5,000	-	△5,000	-	-	-	-	2,142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서울특별시의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시설 공사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5%의 비율로 서울특별시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집행됨.

[2025년도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 국비 보조율]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5결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사업	보조	지자체 보조	5,000	25	- 하천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저류지·홍수조절지 및 방수로의 설치공사) -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1의 122 (그 밖에 국가와 지자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18) 일반회계-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5338-309)(수자원정책관)

19) 예산액 50억원은 전액 하천편입토지보상 사업(5333-461)으로 전용됨

나. 검토의견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은 유찰 등으로 인해 사업이 2년 이상 지연되어 2025년 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사업은 당초 2023년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5월 실시설계 및 이후 6월 본공사에 착공하여 2027년 12월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턴키공사 입찰이 총 4차례 무응찰 유찰되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음.

특히 2024년 2월 총사업비를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4월 턴키공사가 다시 2차례 무응찰되자 계약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하였고, 당초 2023년 10월에 완료할 예정이었던 기본설계가 실제로는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어 턴키공사 계약도 2024년 12월에야 체결되었음.

이후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설계가 진행되었으나, 당초 2023년에 완료할 예정이었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가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이루어지게 되면서 2025년에도 본공사에 착수하지 못하였음.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의 당초 계획과 실제 집행 현황]

	당초 계획	실제 집행 현황
2023년	총사업비 확정(6월), 입찰공고(6월), 기본설계(7월~10월), 실시설계(10월~)	총사업비 확정(11월), 턴키공사 입찰공고(12월)
2024년	실시설계(~5월), 본공사(6월~)	턴키공사 무응찰 유찰 2회(2월) 총사업비 조정(2월) 턴키공사 공고 및 무응찰 유찰 2회(4월) 수의 계약으로 계약방식 변경 기본설계(6월~12월)
2025년	본공사	실시설계(1월~6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7월~12월)
2026년		인허가 등 행정절차(1월~6월) 본공사(예정)(6월)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교부받은 금액을 연례적으로 연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2023년 교부된 30억 3,100만원은 실집행단계에서 전액 이월되어 2024년에 집행되었고, 2024년 교부된 125억원도 실집행단계에서 전액 이월되어 2025년에 124억 8,200만원이 집행되었고 1,800만원이 재이월되었음.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년도	사업시행 주체 (기관명)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A)	예산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B)			
2023	서울시	3,031	3,031	3,031	3,031	-	3,031	-	3,031	-	3,031	-	-
2024	서울시	12,500	12,500	12,500	12,500	3,031	15,531	3,031	12,500	-	12,500	-	-
2025	서울시	5,000	5,000	-	-	12,500	12,500	12,482	-	-	18	-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은 2026년 6월 중순에 본공사 실착공을 시작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현재 일정대로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준공 시점은 2030년으로 예상되어 당초 계획인 2028년 준공보다 2년 이상 늦어질 전망임.[20]

이 사업은 침수 피해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는 만큼, 2026년 연내 착공 등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집행 및 일정을 보다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20)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울시와 협조하여 월별 집행점검 회의·분기별 현장점검 실시 등을 통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임.

【환경개선특별회계】

〈세 출〉

10. 세입징수비용교부금: 법령상의 시기 및 액수를 준수한 세입징수비용 교부 필요

가. 개 요

‘세입징수비용교부금’ 사업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징수에 소요되는 행정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559억 5,5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21]

[2025년도 세입징수비용교부금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세입징수비용 교부금	155,955	155,955	-	-	155,955	155,955	-	-	153,972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세입징수비용교부금은 법령상 교부 시기와 금액이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교부되고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법령에서 정한 시기 및 금액을 준수하여 부담금 징수비용을 교부할 필요가 있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2],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

21) 환경개선특별회계-세입징수비용교부금(7135-302)(기획조정실)

2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폐기물부담금이나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폐기물부담금

환에 관한 법률」[2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24] 등은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담금, 회수부과금,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징수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각종 부담금 징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공단이 각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의 부담금 징수에 소요되는 행정경비를 지급하여야 함.

부담금 징수 행정경비의 지급액과 지급 시기는 각 부담금 근거 법률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국환경공단이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폐기물 부담금·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징수비용의 경우 매월 정산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비용의 경우 분기별로 정산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함.

[각 부담금별 법령에 따른 교부 시기 및 교부 액수]

구 분	근거 법령	교부 시기	교부 액수
폐기물부담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 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
재활용부과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음달 말일까지	
회수부과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음달 말일까지	
폐기물처분부담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분기별 정산 후 다음달 말일까지	

과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23)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전기 · 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 · 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등의 처리)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2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등 관계 전문기관에 전기 · 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 · 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에 대한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전기 · 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 · 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2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폐기물처분부담금)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7조에 따라 시 · 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그러나 법령에 따른 세입징수비용 교부 시기가 준수되지 않고 있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각 징수비용을 3월 및 6월 두 차례에 걸쳐서만 공단에 교부하였으며, 이후 연내에 징수비용에 대한 추가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구체적으로, 2025년 3월 13일에는 전년도인 2024년 3·4분기(7월~12월) 부담금 징수비용이 교부되었고, 2025년 6월 27일에는 2025년 1·2분기(1월~6월) 징수비용이 교부되었음.

그런데 규정에 따르면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 회수부과금에 대해서는 7월 징수비용은 8월말까지, 폐기물처분부담금은 10월 말까지 징수비용이 교부가 되었어야 하나, 2025년 7월 이후의 징수비용에 대해서는 연내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에 따라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환경공단에 교부하여야 할 징수비용은 2025년 연내 미교부 상태로 남아 있다가, 2026년 3월 23일에야 교부되었음.

[각 부담금별 법령에 따른 징수비용 교부일 및 실제 교부일]

구 분	환경공단의 부담금 등 징수시기	법령에 따른 교부일	실제 교부일	2025년 7월~12월분 교부 지연 기간
폐기물부담금	매월	다음달 말일까지	2025년 3월 (2024년 7월~12월분) 2025년 6월 (2025년 1월~6월분) 2026년 3월 (2025년 7월~12월분)	6개월 이상[25]
재활용부과금	매월	다음달 말일까지		
회수부과금	1월~2월, 7월~12월	다음달 말일까지		
폐기물처분부담금	매월	분기별 정산 후 다음달 말일까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심지어 교부일에 교부되는 금액도 법정 교부금액보다 연례적으로 부족하게 지급되고 있는데, 1월~6월 법령상 교부 금액을 연도별로 보면 2023년은 1,021억 5,000만원이었으나 실제 교부금액은 931억 6,900만원(△89억 8,100만원)에 불과했고, 2024년은 1,000억 8,600만원이었으나 실제 교부금액은 911억 2,700만원(△89억 5,900만원)에 불과하였으며, 2025년은 1,120억 1,100만원 중 872억원(△248억 1,100만원)에 불과했음.

이에 따라 매년 당해연도 예산이 전년도 상반기(1~6월) 법정 교부액 중 미지급액과 전년도 하반기(7~12월) 법정 교부액을 지급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어 법령상 교부일보다 약 8개월 이상[26] 지연되어 교부되고 있음.

25) 폐기물처분부담금은 4개월 이상

26) 당해연도 상반기 교부액은 당해연도 7월에 지급하였어야하나, 다음 연도 3월에 집행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음

[법령에 따른 총 교부금액과 실제 교부금액]

(단위: 백만원)

구분	법령상 교부 금액	실제 교부금액	차이
2023년 6월 교부 (2023.1.~6.)	102,150	93,169	△8,981
2024년 6월 교부 (2024.1.~6.)	100,086	91,127	△8,959
2025년 6월 교부 (2025.1.~6.)	112,011	87,200	△24,811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와 같이 법령에서 징수비용 교부액과 교부 시기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8개월 이상 징수비용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법정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측면이 있음.[27]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법령에서 정한 지급 시기를 준수하여 한국환경공단에 부담금 징수비용을 교부할 필요가 있음.

27)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부담금별로 부과 및 수납시기에 차이가 있어 예산 집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일괄 교부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이는 효율성을 이유로 법령에 규정된 금액 및 시기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11.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 국제협상 대응: 선행용역의 수행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후행용역 예산 편성 필요 등

가. 개 요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 국제협상 대응’ 사업은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등 생물다양성 분야 국제협약에 따른 회의 참석, 의제 대응 및 국내 대응전략 연구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억 4,600만원 중 9,800만원이 집행(집행률 67.1%)되고 1,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600만원이 불용되었음.[28)]

[2025년도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 국제협상 대응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생태계보전 국제협력 강화	4,036	4,036	177	-	4,213	4,027	112	74	4,152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 국제협상 대응	187	187	42	△83	146	98	12	36	226
일반용역비	92	92	28	△92	28	-	-	28	92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 사업의 2025년 일반용역비 예산액 9,200만원 및 전년도 이월액 2,800만원[29)]은 전액 집행되지 못하였음(집행률 0%).

나. 검토의견

첫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선행용역의 수행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후행용역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후행용역을 연내 발주조차 하지 못하여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으므로, 실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28) 환경개선특별회계-생태계보전 국제협력 강화(1831-316)(국제협력관)

29) 전년도 이월액 2,800만원은 선행용역인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 국가플랫폼 운영’의 잔금으로, 정산결과 이월액이 집행되지 않아 불용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 국제협상 대응 사업에서 2025년 일반용역비 예산액 9,200만원으로 국내 생물다양성 분야 세미나 개최 등을 수행하는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 국가플랫폼 운영2’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예산은 전액 집행되지 못하였음.

이는 대한민국 생물다양성 과학기구의 전문가 선정 및 지원 등을 수행하는 선행용역인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 국가플랫폼 운영’의 사업 수행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025년 내 완료되지 못하여 선행용역을 바탕으로 수행하는 후행용역인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 국가플랫폼 운영2’용역은 발주조차 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해당 선행용역은 2024년 10월 29일 공고되어 같은 해 11월 28일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용역 수행 기간도 2024년 11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었음. 이에 따라 후행용역은 구조적으로 2025년 연내 착수 및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임.

[선행용역 및 후행용역의 집행 현황]

구 분	공고일	체결일	수행기간
선행용역 (생물다양성과학기구 (IPBES) 국가플랫폼 운영)	2024. 10. 29.	2024. 11. 28.	~ 2025. 12. 31.
후행용역 (생물다양성과학기구 (IPBES) 국가플랫폼 운영2)	선행용역의 연내 미종료로 집행하지 못함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2025년 예산안 편성 시점에는 선행용역의 계약 체결 전이므로 정확한 계약 종료 시점을 확정하기 어려웠을 수 있으나, 해당 용역 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선행용역의 구체적인 수행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후행용역 예산을 편성한 것은 후행용역의 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음.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선행용역의 계약 및 진행 상황을 보다 면밀히 반영하고, 후행용역의 실제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후행용역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해당 예산을 다른 내역사업인 세계자연보전총회 홍보관 사업으로 전액 조정하여 본예산의 2배 이상 금액을 집행하였으므로, 국회 의결 취지를 고려하여 본예산 규모에 부합하

게 예산을 집행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역사업인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 국제협상 대응’ 일반용역비 예산 9,200만원으로 추진하려던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 국가플랫폼 운영2’ 용역이 집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2025년 5월 해당 예산 9,200만원 전액을 다른 내역사업인 ‘생물다양성 과학기술 협력 이니셔티브 추진’의 일반용역비로 조정하여 집행하였음.

구체적으로, ‘생물다양성 과학기술 협력 이니셔티브 추진’ 사업에는 당초 ‘생물다양성과학기술협력 개도국 지원사업’ 명목으로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위 9,200만원을 조정하여 ‘세계자연보전총회 국제기여사업 등 홍보관 계획수립 및 운영’[30]에 예산현액 1억 7,200만원 중 1억 6,700만원이 집행되었음.

[내역사업 간 일반용역비의 예산 편성 및 실제 집행 현황]

(단위: 만원)

내역사업명	추진사업명	예산액	조정	예산현액	집행액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 국제협상 대응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 국가플랫폼 운영2	9,200	△9,200	-	-
생물다양성 과학기술 협력 이니셔티브 추진	생물다양성 과학기술협력 개도국 지원사업 (세계자연보전총회 국제기여사업 등 홍보관 계획수립 및 운영)	8,000	9,200	17,200	16,70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런데 세계자연보전총회는 4년 주기로 개최되어 2025년에 개최된 것으로, 홍보관 사업도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이므로 필요한 예산은 당초 예산 편성단계에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8,000만원만 편성한 후 집행 과정에서 다른 내역사업의 예산 9,200만원을 조정하여 1억 7,200만원을 집행한 것은 당초 본예산의 2배가 넘는 규모로 확대하여 집행한 것임.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물다양성과학기술협력 개도국 지원사업에 세계자연보전총회 국제기여사업 등 홍보관 계획수립 및 운영이 포함되어 있었고, 사업수행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확대하여 운영했다는 입장이나, 예산 조정규모(9,200만원)가

30) 2025년 아랍에미리트에서 진행된 세계자연보전총회에 한국 홍보관 설치

본예산(8,000만원)을 초과하여 최종 집행 규모(1억 6,700만원)가 본예산의 2배 이상으로 확대된 점을 고려하면 과도한 조정 및 집행 규모 확대가 이루어진 측면이 있음.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 단계에서 필요한 재원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국회의 의결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 및 예산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2. 국립공원공단 출연: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된 대형헬기 도입 지연 문제 등

가. 개 요

‘국립공원공단 출연’ 사업은 국립공원 환경관리 및 지도·단속, 공원관리장비 운영 등 국립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428억 2,8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31]

[2025년도 국립공원공단 출연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립공원공단 출연	222,728	242,828	-	-	242,828	242,828	-	-	260,029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국립공원공단은 이 사업을 통해 중형헬기 및 대형헬기 헬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중형헬기 도입사업은 2024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무응찰 유찰로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여 2024년 예산액 25억원이 전액 이월되었고, 2025년 본예산 5억원에 2025년 5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7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2025년 12월 대형헬기 사업으로부터 99억원을 조정받아 예산현액 198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

대형헬기 도입사업은 2025년 5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10억원이 증액되어 신규 추진된 사업으로, 2025년 12월 99억원을 중형헬기 사업으로 조정하였고 예산현액 11억원이 전액 이월(집행률 0%)되었음.

중형헬기의 경우 2025년 12월 헬기 제작사와 납품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대형헬기의 경우 2025년 연내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음.

31) 환경개선특별회계-국립공원공단 출연(1831-306)(자연보전국)

[2025년도 국립공원공단 출연 헬기 도입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부처			사업시행주체(국립공원공단)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조정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중형헬기 도입	500	7,400	7,400	7,400	2,500	9,900	19,800	19,800	17,300	17,300	-	-	100
대형헬기 도입	-	11,000	11,000	11,000	-	△9,900	1,100	-	1,100	-	1,100	-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헬기 도입 사업의 경우 ① 도입하려는 헬기의 규격을 심의하는 규격심의 및 이후 해당 규격 헬기를 대상으로 입찰공고, ② 입찰공고를 통해 받은 제안서에 대하여 헬기가 형식증명을 받았는지 여부[32] 등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③ 계약 체결 ④ 헬기 제작 및 ⑤ 납품 순서로 진행됨.

① 규격심의 및 ② 입찰공고 및 제안서 평가는 일반적으로 각각 약 3개월이 소요되며, 헬기 제작에는 약 3년이 소요됨. 대형헬기 도입사업의 경우 제안서 평가를 거쳐 2025년 중 헬기 제작사와 계약체결 및 선금 20%를 집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액 110억원이 편성되었고, 중형헬기 도입사업의 경우 2025년 중 헬기 제작사와 계약체결 및 선금 30%를 집행하기 위한 예산현액으로 전년도 이월액 25억원 및 추가경정예산액 74억원을 합한 99억원이 편성되었음.

[헬기 도입 사업 집행과정]

집행 내용	규격심의, 입찰공고	→	제안서평가 (헬기 형식증명 여부 등 평가)	→	헬기 제작사와 계약 체결	→	헬기 제작	→	납품
소요 기간	3개월		3개월		-		3년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32) 형식증명(Type Certificate, TC)이란, 미국의 군수용 헬기를 민간에서 운용하기 위한 미연방항공청이 하는 증명으로, 군용 헬기를 민간에서 도입 및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식증명을 받아야 하므로 제안서평가시 해당 헬기가 형식증명을 받았는지 여부를 평가함.

나. 검토의견

첫째, 대형헬기 도입 사업은 계약 체결 전 헬기의 형식증명 여부를 평가하는데, 국립공원공단은 형식증명에 일반적으로 3~4년이 소요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연내 계약 체결을 전제로 2025년 5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연내 형식증명을 받지 못해 제안서 부적합을 받아 전액 집행되지 못하였으므로, 향후 장비 도입 시 형식증명에 소요되는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국립공원공단 출연사업에서 대형헬기 도입 사업을 신규 추진하였는데, 구체적으로 2025년 계약체결 후 2027년까지 매년 각각 연부율 20%, 30%, 50%를 적용하여 대금을 분할 지급할 계획에 따라 2025년도에는 예산액 110억원을 편성하였음.

[국립공원공단 출연 대형헬기 도입사업 예산안 편성]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합계
예산액	11,000	16,500	27,500	55,000
연부율	20%	30%	50%	10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러나 국립공원공단이 도입하려는 대형헬기는 미국의 군용 헬기를 도입하여 민간(국립공원공단)에서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계약 체결 전 규격 및 장비 요건 충족을 위한 형식증명이 필요하였으나, 연내 대형헬기가 형식증명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제안평가서가 승인되지 못하여 2025년도 예산은 전액 집행되지 못하였음.

구체적으로 국립공원공단은 대형헬기의 전문성·기술성 등을 고려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33]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2025년 5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약 5개월

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 용역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의 전문성 · 기술성 ·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협상적격자를 선정해야 한다.
⑧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간 제작사와 사전협의 및 규격심의를 거쳐 10월 입찰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도입하려는 대형헬기가 형식증명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제안서 부적합을 받아 2025년 12월 입찰공고가 유찰되었음.

이후 국립공원공단은 대형헬기업체의 형식증명 관련 의견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2025년 12월 입찰 재공고를 하였으나 업체의 의견서를 받지 못하였고, 결국 1차 공고 당시와 실질적으로 달라진 여건이 없어 형식증명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제안서 부적합으로 재공고 또한 2026년 2월에 유찰되었음.

[국립공원공단 출연 대형헬기 도입사업 집행과정]

집행 내용	대형헬기 업체와 협의	→	1차 입찰공고	→	제안평가서 부적합 유찰	→	2차 입찰공고	→	제안평가서 미승인 유찰
연월	2025. 5. ~ 10.		2025. 10.		2025. 12.		2025. 12.		2026. 2.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는 형식증명 승인이 통상 3~4년이 소요되는 절차이고, 국립공원공단은 산림청의 동일한 대형헬기 도입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형식증명에 소요되는 기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 사업 추진과 동시에 계약 체결 및 선금 지급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연내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그 결과 예산이 전액 실집행되지 못한 것임.

이와 같이 연내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자 국립공원공단은 2025년 12월 재공고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원인행위로 대형헬기 도입 예산현액 11억원을 이월[34]하였는데, 해당 재공고는 형식증명을 받지 못하여 제안서가 승인되지 않았던 1차 공고 당시와 같이 형식증명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34)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이에 대해 국립공원공단은 업체의 형식증명 관련 의견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상황이 달라졌다고 설명하였으나, 의견서 제출 여부는 전적으로 업체의 의사에 달린 사항으로 이러한 가능성만으로는 형식증명 확보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합리적인 개연성이 있는 이월사유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대형헬기 도입사업은 2026년 6월기준으로도 형식증명을 받지 못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상황으로, 이월된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의 집행 가능성 또한 불확실한 상황임.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국립공원공단의 장비 도입사업 추진 시 형식승인 등 장비 도입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충분히 고려한 후 예산액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립공원공단은 대형헬기 도입 계약이 연내에 체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대형헬기 도입 예산액을 중형헬기 도입사업으로 조정하여 집행하였는데, 이는 국회가 대형헬기 도입을 전제로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국립공원공단은 대형헬기가 연내 형식증명을 받지 못하여 계약 체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5년 12월 대형헬기 도입사업의 예산 110억원 중 99억원(90%)을 중형헬기 도입사업으로 조정하여 집행하였음.

[2025년 국립공원공단 출연 헬기 도입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본예산	예산액 (추경)	전년도 이월	조정	예산현액	집행액
중형헬기	500	7,400	2,500	9,900	19,800	19,800
대형헬기	-	11,000	-	△9,900	1,100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러나 해당 예산은 2025년 대형헬기 도입 계약 체결 후 연부율 20%에 해당하는 선금 지급을 목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이를 중형헬기 도입사업에 집행한 것은 국회가 사업별 필요성과 집행 시기를 고려하여 의결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중형헬기의 경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계약체결 및 연부율 30%에 해당하는 선금 지급을 목적으로 99억원이 편성되었는데, 대형헬기 도입사업의 예산 99억원을 조정하여 총 198억원을 집행하여 2025년도 선금 지급 비율이 당초 30%에서 60%로 변경된 것은 국회가 연도별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의결한 연부율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국립공원공단 출연 중형헬기 도입사업 예산안 편성]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합계
예산	예산액	9,900	9,900	13,200	33,000
	연부율	30%	30%	40%	100%
실제 집행	예산액	19,800	-	13,200	33,000
	연부율	60%	-	40%	100%

주) 2025년도 계획상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형헬기의 부품을 조기 확보하고자 선금 연부율 비율을 높였고, 이로 인해 중형헬기를 당초 계약 기간(2029년 2월 도입)보다 2개월 빠르게(2028년말) 도입할 수 있어 대형헬기 예산액의 조정을 통해 집행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국회는 연도별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연부율을 30%, 30%, 40%로 의결하였는데, 2025년도 선금 지급 비율을 60%로 높여 집행한 것은 연부율 의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이를 위해 대형헬기 도입사업 예산을 조정하여 집행한 것 역시 당초 예산의 목적과 국회의 의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특히 추가경정예산은 긴급성 및 시급성을 전제로 편성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국립공원공단의 대형헬기 도입 시급성을 이유로 편성한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중형헬기 도입으로 조정하여 집행한 것은 사업 추진 여건 및 계약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형식증명 등 장비 도입의 선행요건과 계약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재원이 국회의 의결 취지에 부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3.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운영: 비공동주택 층간소음 지원의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등

가. 개 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운영’ 사업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간 갈등에 대해 전화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 등을 통해 갈등을 완화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7억 5,0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35]

[2025년도 소음·진동 관리대책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생활공해관리	6,940	6,940	21	-	6,961	6,949	-	12	6,042
소음·진동 관리대책	6,677	6,677	12	-	6,689	6,682	-	7	5,831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 운영	2,750	2,750	-	-	2,750	2,750	-	-	2,390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조정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소음·진동관리법」[36]에 근거하여 한국환경공단으로 하여금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한국환경공단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통해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전화상담, 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등을 실시하여 조사·상담과 피해조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35) 환경개선특별회계-생활공해관리(1633-321)(대기환경국)

36)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 소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첫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소음·진동관리법」에 근거하여 층간소음 피해 예방 및 분쟁해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비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법률상 근거가 불명확하므로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국환경공단은 2025년도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사업을 통해 총 6,834건의 층간소음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 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총 6,583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비공동주택에 대해서도 251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2025년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 등 지원 현황]

(단위: 건)

구분	접수	처리(서비스 제공)
공동주택	6,812	6,583
비공동주택	299	251
합계	7,111	6,834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런데 「소음·진동관리법」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해서만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2023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비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층간소음 상담 및 조정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으며, 지원 건수도 2023년 7건, 2024년 10건, 2025년 251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비공동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 지원 현황]

(단위: 건)

연도	접수	처리
2023년	9	7
2024년	8	10*
2025년	299	251

주) 전년도 이월 2건 포함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비공동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지원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상 비공동주택의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약한 상황임.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비공동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지원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정부는 층간소음 분쟁과 관련한 대체적 분쟁 제도(ADR)로서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민원절차 일원화 또는 간소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 층간소음 관련 민원에 대한 대체적 분쟁 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로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존재함.

또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37]가 설치되어 있으며, 한국환경공단에 설치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38]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층간소음 관련 상담·측정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오염·소음 및 일조권 침해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 분쟁을 다루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리비·사용료 등 징수, 아파트 리모델링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다루기 때문에 서로의 권한과 역할이 다르지만, 두 기관 모두 층간소음 분쟁 처리를 업무에 포함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현행법상 층간

37)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기관 또는 단체를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7. 공동주택의 조사·검사 및 분쟁조정의 지원

38)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 소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소음을 다루는 정부기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분쟁해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39]

한편 당사자의 의사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배상을 목적으로 하면 환경분쟁조정 피해구제위원회를, 입주자 공동체의 자율적 해결을 목적으로 하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여 제도상 두 기구의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음.[40]

그럼에도 불구하고 ① 두 기관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 절차는 사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 ADR제도로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민원인의 관점에서 그 차이를 구별하기 어려우며, ② 동일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의 역할이 부여되었음에도 처리방식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원인의 선택에 따라 분쟁해결 절차가 달라질 수 있고, ③ 두 기관의 분쟁해결 판단 또는 결과가 다를 경우 민원인에게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④ 중복되는 층간소음 업무를 일원화함에 따라 절차 · 인력 및 경비가 절감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실제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로 접수된 민원 중 방문상담이나 소음측정을 원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로 안내를 하고 있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분쟁조정 권한이 없어 국토교통부 분쟁조정위원회로 다시 안내하고 있는 상황임.

[층간소음 분쟁 관련 기관 비교]

구분	기 후 부		국 토 부	
관련 기관	환경분쟁조정 피해구제위원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중앙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근거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 제1항
설립 목적	환경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해결	층간소음 측정,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피해조정지원	공동주택내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조정	공동주택 관리 민원상담, 관리진단 및 기술자문, 교육 등 공동주택 관리지원
소관 업무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및 소음・진동,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등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구성, 동대표 자격 관리비·사용료 및	공동주택관리 전 분야(관리행정, 회계, 장기수선계획 등)에 대한 전화, 서면, 인터넷, 방문 등

39) 박광현, 「층간소음분쟁 해결을 위한 형사법적 접근」, 2020, p. 163.

40) 이현욱,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층간소음 분쟁 해결 방안에 관한 소고」, 2022, p. 32-34.

구분	기 후 부		국 토 부	
	인한 건강・재산・정신상 피해에 대한 분쟁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공용부분 유지·보수·개량, 리모델링, 층간소음, 혼합주택단지 분쟁	다채널 상담 관리진단, 기술자문 법정교육 관련 매뉴얼, 지침서 등 제작 및 배포 등
업무 범위	사업활동, 기타활동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소음 등과 관련된 분쟁해결	층간소음 관련 전화상담 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공동주택 분쟁 (층간소음 등) 조정	공동주택관리 민원상담(층간소음 포함), 관리진단 및 기술자문, 교육 등 업무를 수행하여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위원회 구성	(중앙) 30인 이내 -위원장 1, 위원 29 (지방) 20인 이내 -위원장 1, 위원 19	위원회 없음	(중앙) 20인 이내 - 위원장1, 위원 19 (지방) 15인 이내 - 위원장 1, 위원 14	위원회 없음
권한	중재, 재정, 조정, 알선	조정기능 없음	조정 * 당사자 수락시 재판상 화해 효력	조정기능 없음
운영 기관	(중앙)중앙환경분쟁 조정피해구제위원회 (지방)17개 시도	한국환경공단	LH	LH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재구성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층간소음 관련 ADR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일원화 또는 간소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4. 미세먼지 대응 국제협력: 내역사업에 부합하는 고용부담금 집행 필요

가. 개 요

‘미세먼지 대응 국제협력’ 사업은 미세먼지 예보정확도 개선, 한중 협력, 미세먼지 국민행동요령 등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국제협력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5억 3,400만원 중 27억 8,500만원이 집행(집행률 78.8%)되고 1억 2,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6억 2,800만원이 불용되었음.[41)]

[2025년도 미세먼지 대응 국제협력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미세먼지 대응 국제협력	3,235	3,235	299	-	3,534	2,785	121	628	3,086
한중 미세먼지 대응 공동연구	2,267	2,267	200	△94	2,374	1,774	121	479	2,305
대기분야 국제협력 추진	817	817	99	94	1,010	902	-	108	631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내역사업인 **‘한중 미세먼지 대응 공동연구’** 사업은 한·중 주요지역에 대한 대기질 입체 관측을 통한 연구 등을 추진하는 것이고, 내역사업인 **‘대기분야 국제협력 추진’** 사업은 한·중·일 대기오염 정책대화 등 국제회의 개최·참석, 대기오염 문제의 국제사회 이슈화를 위한 국제기구와 협력을 추진하는 사업임.

두 내역사업 모두 사업 수행을 위해 상용직을 채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25년 퇴직연금 적립금 등 고용부담금이 발생하였음. 한중 미세먼지 대응 공동연구 사업은 2025년 고용부담금 예산현액 6,4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고, 대기분야 국제협력 추진 사업은 2025년 고용부담금 예산현액 2,300만원이 전액 불용(집행률 0%) 되었음.

41) 환경개선특별회계-미세먼지 대응 국제협력(1634-301)(대기환경국)

[2025년도 미세먼지 대응 국제협력사업 내역사업의 고용부담금 결산]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한중 미세먼지 대응 공동연구	64	64	-	-	64	64	-	-	71
대기분야 국제협력 추진	23	23	-	-	23	-	-	23	26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역사업인 ‘대기분야 국제협력 추진’에서 고용한 상용직의 고용부담금을 다른 내역사업인 ‘한중 미세먼지 대응 공동연구’에서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동일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고용부담금은 동일 내역사업에서 집행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중·일 대기오염 정책대화 및 국제회의 개최·참석 등 내역사업인 ‘대기분야 국제협력 추진’을 수행하기 위해 상용직 2명을 고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인력에 대한 상용임금으로 총 1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음.

그런데 상용직 고용으로 지급해야 하는 고용부담금이 해당 내역사업 예산에 편성되어 있음에도 이를 집행하지 않아 2025년도 고용부담금 예산 2,3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음.

이는 해당 상용직 인력의 임금은 내역사업인 ‘대기분야 국제협력 추진’에서 집행된 반면, 이에 따라 발생한 고용부담금 800만원은 다른 내역사업인 ‘한중 미세먼지 대응 공동연구’에서 집행되었기 때문임. 즉, 동일 인력 채용으로 발생한 인건비와 고용부담금이 서로 다른 내역사업에서 집행되었음.

[2025년도 대기분야 국제협력 추진사업의 상용직 관련 비용 결산]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대기분야 국제협력 추진	한중 미세먼지 대응 공동연구
상용 임금	예산	117	-
	결산	104	-
고용 부담금	예산	23	-
	결산	-	8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런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업 추진 시 내역사업을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동일 인력 채용에 수반되는 인건비와 고용부담금이 서로 다른 내역사업에서 집행되는 것은 내역사업별 집행실적을 정확하게 관리하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상용직 인력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법정 고용부담금이 동일 내역사업 내에서 일관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15. 대기환경연구소 확충: 시설 용도 사전 확인 후 사업 추진 필요

가. 개 요

‘대기환경연구소 확충’ 사업은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중 유해중금속 및 미량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분석하는 대기환경연구소를 건립하여 관련 피해를 저감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51억 4,700만원 중 31억 7,000만원이 집행(집행률 61.6%)되고 19억 6,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800만원이 불용되었음.[42)]

[2025년도 대기환경연구소 확충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51,504	51,504	1,781	-	53,285	49,083	3,459	574	48,182
장거리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종합대책	17,516	17,516	513	-	18,029	15,675	2,211	143	13,453
대기환경연구소 확충	5,061	5,061	86	-	5,147	3,170	1,969	8	1,000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 사업은 2024년부터 시작한 경북권 대기환경연구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4년 건설보상비, 설계비 등 예산으로 총 15억 5,200만원이 편성되어 14억 2,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1.8%)되고, 실시설계비 8,600만원이 이월되었음.

2025년에는 공사비·감리비 등 예산으로 총 50억 6,100만원이 편성되어 31억 7,000만원이 집행(집행률 61.6%)되었으며, 2026년에는 공사비로 10억원이 편성되었고 2026년 6월 기준 총 550만원[43)]이 집행(집행률 5.5%)되었음.

42) 환경개선특별회계-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1634-302)(국립환경과학원)

43)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6월 기준 예산액 10억원 중 총 5억 2,700만원의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중 550만원이 집행되었다는 입장임.

[최근 3년간 대기환경연구소 확충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연도	비목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24년	건설보상비	1,402	1,401	-	1
	기본조사설계비	50	23	-	27
	실시설계비	100	-	86	14
	합계	1,552	1,424	86	42
2025년	공사비	3,000	1,081	1,919	0
	감리비	50	-	50	0
	시설부대비	11	7	-	4
	자산취득비	2,000	1,996	-	4
	합계	5,061	3,084	1,969	8
2026년 6월	공사비	1,000	5.5	-	-
	합계	1,000		-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나. 검토의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기환경연구소 건립사업 추진 과정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설계 보완 및 사업 지연이 발생하였으므로, 건축사업 추진 시 시설 용도 및 관련 요건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및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업무시설 등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BF)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44]

44)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 ·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 · 증축 · 개축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기환경연구소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기환경연구소를 교육연구시설로 분류하여 실시설계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BF 인증 의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음.

이에 별도 BF 인증 절차 없이 2025년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이후 지자체와의 건축협의를 거쳐 2025년 8월까지 건축공사 발주 및 계약, 2025년 9월 착공 및 2026년 6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었음.

그러나 실시설계 이후 지자체와의 건축협의 과정에서 대기환경연구소 신축 부지가 업무시설용지에 해당하여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을 업무시설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보완 요구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건축물 용도를 복합용도(업무시설+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하게 되었음.

그 결과 대기환경연구소에 업무시설이 포함되면서 BF 인증 의무가 적용되는 것을 인지하였고, 이에 따라 설계보완 및 건축협의 재추진, BF 인증 절차 등을 수행하기 위해 사업 일정이 지연되었음.

구체적으로,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라 9월부터 11월까지 BF 인증 용역을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건축공사 발주 및 계약은 당초 2025년 8월에서 2025년 11월로, 준공 시점 역시 2026년 6월에서 2026년 10월로 각각 지연되었음.[45)]

[대기환경연구소 건립사업의 당초 계획과 실제 집행 현황]

	당초 계획	실제 집행
공사 발주 및 계약	2025년 8월	2025년 11월
준공시점	2026년 6월	2026년 10월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와 같이 설계보완 및 건축협의 재추진 등으로 인해 공사발주 및 계약, 준공 시점이 지연됨에 따라 2025년 예산액 중 공사비는 30억원 중 10억 8,100만원만 집행(집행률 36.0%)되고 19억 1,900만원이 이월되었고, 감리비 5,000만원은 전액 이월되었음.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① 법 제10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별표 2의2 제11. 업무시설

45)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설계 변경은 장애인 진입로 폭 조정 등만이 이루어져 설계비가 추가로 소요되지는 않았다는 입장임

[2025년 대기환경연구소 건립사업 세부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공사비	3,000	3,000	-	-	3,000	1,081	1,919	-	1,000
감리비	50	50	-	-	50	-	50	-	-
시설부대비	11	11	-	-	11	7	-	4	-
자산취득비	2,000	2,000	-	-	2,000	1,996	-	4	-
실시설계비	-	-	86	-	86	86	-	-	-
합계	5,061	5,061	86	-	5,147	3,170	1,969	8	1,00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런데 대기환경연구소 신축 부지는 당초부터 업무시설 용지로 구분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건축물 용도 및 이에 따른 BF 인증 의무 적용 여부는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등을 통해 실시설계 단계 이전부터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보임.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추진 시 건축물 용도 및 부지 관련 계획, BF 인증 의무 적용 여부 등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요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 편성 및 사업 일정을 수립하여 설계 변경 및 사업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6. 환경연구정보화기반구축(정보화): 필수 소요 예산 미편성에 따른 연례적 예산 조정 부적절

가. 개 요

‘환경연구정보화기반구축(정보화)’ 사업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서버, 보안장비, 네트워크장비, 사무용기기 등 정보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과학적이고 선진화된 공동연구 기반 조성 및 대국민 환경정보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9억 2,200만원 중 18억 8,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0%)되고 3,900만원이 불용되었음.[46)]

[2025년도 환경연구정보화기반구축(정보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환경연구정보화 기반구축	1,922	1,922	-	-	1,922	1,883	-	39	1,945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5년 환경연구정보화기반구축 사업의 일반수용비는 예산현액 1억 1,300만원 중 1억 1,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1%)되고 1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년도 환경연구정보화기반구축(정보화) 사업 일반수용비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환경연구정보화 기반구축	1,922	1,922	-	-	1,922	1,883	0	39	1,945
일반수용비	70	70	-	43	113	112	-	1	70
공공요금및제세	175	175	-	△23	152	151	-	1	175
관리용역비	1,457	1,457	-	△20	1,437	1,400	-	37	1,457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46) 환경개선특별회계-환경연구정보화기반구축(정보화)(1946-504)(국립환경과학원)

나. 검토의견

국립환경과학원은 PC 백신 라이선스 비용을 연례적으로 공공요금, 관리용역비 등 타 비목에서 조정하여 집행하고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적정 소요를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은 연구수행 등을 위하여 PC 2,000대를 운영하고 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47]에 따라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및 활용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전체 PC 2,000대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매년 백신 라이선스를 갱신하여 사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5년도 국립환경과학원의 PC 백신 프로그램 라이선스 갱신비 6,000만원과 기타 소모성 물품 구입비 1,000만원을 합산한 총 7,000만원을 일반수용비 예산으로 편성하였음.

그런데 백신 프로그램의 PC 1대당 연간 라이선스 갱신 비용은 44,605원으로, 전체 2,000대를 기준으로 연간 약 8,921만원의 비용이 고정적으로 소요되는 구조임. 이에 따라 6,0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액과 달리 백신 라이선스 갱신비용만으로도 약 8,921만원이 집행되어, 예산액 대비 부족한 비용을 타 비목으로부터 조정하여 집행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2025년도의 경우 10월 22일 공공요금 및 관리용역비 등에서 4,300만원이 일반수용비로 조정되어 백신 라이선스 비용으로 집행되었는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연례적으로 백신 라이선스 갱신비용 부족분이 공공요금, 관리용역비 등 타 비목으로부터 조정 후 집행되고 있음.

---

47)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73조(단말기 보안) ① 개별사용자는 소속된 기관에서 지급받은 PC · 노트북 · 휴대폰 · 스마트패드 등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② 개별사용자는 단말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대책을 준수해야 한다.
3.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6. 인터넷을 통해 자료(파일) 획득시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활용하고 자료(파일) 다운로드시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검사 후 활용

[최근 5년간 환경연구정보화기반구축 사업의 일반수용비로의 예산 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1.11.30)	환경연구 정보화 기반구축 (정보화)	공공요금 및제세	20	환경연구 정보화 기반구축 (정보화)	일반 수용비	운영비 내에서 수용비(라이선스 사용권 갱신) 부족분 세목변경
		관리 용역비	27			
세목조정 (22.3.8.)	환경연구 정보화 기반구축 (정보화)	공공요금 및제세	33	환경연구 정보화 기반구축 (정보화)	일반 수용비	운영비 내에서 수용비(소모품, 라이선스 사용권 갱신) 부족분 세목변경
		관리 용역비	60			
세목조정 (22.10.17.)	환경연구 정보화 기반구축 (정보화)	공공요금 및제세	9	환경연구 정보화 기반구축 (정보화)	일반 수용비	운영비 내에서 수용비(소모품, 라이선스 사용권 갱신) 부족분 계약금액으로 조정을 위한 세목변경
세목조정 (23.12.11.)	환경연구 정보화 기반구축 (정보화)	공공요금 및제세	30	환경연구 정보화 기반구축 (정보화)	일반 수용비	운영비 내에서 수용비(라이선스 사용권 갱신) 부족분 세목변경
		관리 용역비	3			
세목조정 (24.10.23)	환경연구 정보화 기반구축 (정보화)	공공요금 및제세	14	환경연구 정보화 기반구축 (정보화)	일반 수용비	운영비 내에서 수용비(백신 라이선스 사용권 갱신) 부족분 세목변경
		관리 용역비	9			
세목조정 (25.10.22)	환경연구 정보화 기반구축 (정보화)	공공요금 및제세	23	환경연구 정보화 기반구축 (정보화)	일반 수용비	백신 라이선스 사용권 갱신 부족분 세목 조정
		관리 용역비	2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와 같이 백신 프로그램 라이선스 갱신비가 약 8,921만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일반수용비 예산은 매년 7,000만원으로 동일하게 편성되고 있고, 집행액은 2021년 1억 1,500만원, 2022년 1억 4,400만원, 2023년 1억 100만원, 2024년 9,200만원, 2025년 1억 1,200만원에 달하고 있음.

이에 따라 부족한 일반수용비 예산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2021년 4,700만원, 2022년 7,400만원, 2023년 3,300만원, 2024년 2,300만원, 2025년 4,300만원이 조정을 통해 집행되었음.

[환경연구정보화기반구축 사업의 최근 5년간 일반수용비 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환경연구정보화기반구축(정보화) 일반수용비 (210-01)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2021년	70	70	-	47	-	117	115 [115]	117	115 [115]	-	2
2022년	70	70	-	74	-	144	144 [144]	144	144 [144]	-	-
2023년	70	70	-	33	-	103	101 [101]	103	101 [101]	-	2
2024년	70	70	-	23	-	93	92 [92]	93	92 [92]	-	1
2025년	70	70	-	43	-	113	112 [112]	113	112 [112]	-	1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는 백신 라이선스 갱신에 필요한 일반수용비가 당초 예산액을 초과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관리용역비 등의 예산을 매년 동일하게 편성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동일한 유형의 예산 조정이 연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당초 예산 편성과 실제 집행 간 괴리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반복적인 예산 조정이 발생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간 불일치가 지속되지 않도록 예산 운용의 계획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17.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보조금 재이월 방지를 위한 관리 필요

가. 개 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61억 8,700만원 중 349억 4,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6%)되고 12억 4,200만원이 불용되었음.[48)]

[2025년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48,953	53,604	514	-	54,118	51,655	548	1,915	64,078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31,536	36,187	-	-	36,187	34,945	-	1,242	44,849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소규모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은 국비 50%의 비율[49)]로 국고보조금을 교부하여 소규모사업장의 미세먼지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측정기기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규모사업장이 설치업체를 통해 미세먼지 방지시설 및 IoT 측정기기를 설치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 확인 등을 거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됨.

[2025년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보조율]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5결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34,945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122호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48) 환경개선특별회계-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1633-301)(대기환경국)

49) 국비 50%, 지방비 40%, 소규모사업장 10%

나. 검토의견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시공업체의 시공상 오류 등을 이유로 보조금 재이월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상 재이월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업관리를 강화하여 사업이 연내에 집행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소규모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인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2025년 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액 14억 9,100만원 중 실집행액은 3억 5,100만원(실집행률 23.5%)에 불과하고, 16억 3,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억 1,600만원이 불용되었음.

그런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년도 이월예산으로 추진하던 사업마저 일부가 재이월된 것으로 나타는데, 2024년도에서 2025년도로 이월된 64억 100만원 중 5억 5,000만원이 다시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25년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의 한 실집행 지자체 결산]

(단위: 백만원, %)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재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1,427	1,491	1,491	1,491	6,401	7,892	6,041	1,491	351	1,635	550	216	23.5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미세먼지 방지시설 및 IoT 측정기기 설치업체가 방지시설 전류계를 다른 배전선에 연결하거나 방지시설을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등의 시공상 오류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점검 시 준공검사 보완 절차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시설 준공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50]은 보조금의 이월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50)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재이월 역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시공업체의 반복적인 시공상 오류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해당하므로 시공업체의 수행 역량을 면밀히 검토하거나, 집행 과정에서 보완 사유를 조기에 관리하였다면 일정 부분 방지가 가능하였던 측면이 있음.[51]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자체의 보조금 재이월 사유를 보다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동일한 사유로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월을 위해서는 보조사업자는 해당연도 교부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중 이월이 필요한 금액 및 반납금액을 포함한 이월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연도 말까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25조의2(보조사업비의 재이월) ① 제25조에 따라 이월한 경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이월한 경비
2. 제25조제2항제3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이월한 경비 중 이월한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월한 경비 중 이월한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입찰공고 후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재이월의 경우 제25조제3항 내지 제4항, 제6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51)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3월 업체와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사업설명회, 간담회 등 사업장·설치업체 등과의 지속적인 교육·소통을 진행하여 개선하겠다는 입장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투자계정)】

〈세 출〉

18. 무공해차 보급 사업: 연례적 집행부진 해소를 위한 사업 관리 강화 필요 등

가. 개 요

‘무공해차 보급’ 사업은 전기 및 수소차의 구매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조 9,009억 300만원 중 1조 5,946억 5,900만원이 집행(집행률 83.9%)되고 9,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061억 4,600만원이 불용되었음.[52)]

[2025년도 무공해차 보급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무공해차 보급사업	2,263,104	1,900,854	49	-	1,900,903	1,594,659	98	306,146	2,284,513
전기차 보급사업	1,521,770	1,242,770	-	-	1,242,770	1,175,353	-	67,417	1,611,370
수소차 보급사업	721,830	638,580	-	-	638,580	399,870	-	238,710	576,200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무공해차 보급사업은 내역사업으로 전기차 보급사업, 수소차 보급사업 등이 있으며, 내역사업인 **‘전기차 보급’** 사업은 2025년 예산현액 1조 2,427억 7,000만원 중 1조 1,753억 5,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4.6%)되고 674억 1,700만원이 불용되었음.

또한 내역사업인 **‘수소차 보급’** 사업은 2025년 예산현액 6,385억 8,000만원 중 3,998억 7,000만원이 집행(집행률 62.6%)되고 2,387억 1,000만원이 불용되었음.

5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무공해차 보급사업(1633-311)(녹색전환정책관)

나. 검토의견

첫째, 무공해차 보급사업은 예산편성 시 보급 예상 대수를 과다하게 편성하여 실집행이 부진한 측면이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실적인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적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무공해차 보급사업에서 전기차 보급사업은 한국환경공단의 민간경상보조와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2025년 전기화물차, 전기어린어통학버스 등 일부 차종의 집행이 부진하였음.

구체적으로,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한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은 예산액 267억 2,000만원 중 82억 9,900만원만 집행되어 실집행률이 31.1%에 그쳤으며, 지방자치단체 보조 방식으로 수행한 사업의 경우에도 실집행률이 전기어린이통학버스는 35.2%, 전기이륜차는 58.7%에 불과함.

[2025년도 전기차보급사업 중 실집행률이 60% 이하인 차종 결산]

(단위: 백만원)

2025년	사업수행주체	차종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현액	집행액 (C)			
민간경상보조	한국환경공단	전기화물	26,720	26,720	13,100	13,100	780	13,880	9,073	13,100	8,299	4,732	75	31.1%
자치단체자본보조	지자체	전기어린이통학버스	33,350	33,350	17,939	17,939	-	17,939	11,754	17,939	11,754	306	5,879	35.2%
		전기이륜	16,000	16,000	12,613	12,613	594	13,207	9,903	12,613	9,397	634	2,670	58.7%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와 같은 집행부진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보급 수요를 실제보다 높게 산정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법인·개인사업자 수요,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및 17개 광역지자체 수요조사 결과와 여유 물량 등을 반영하여 보급 물량을 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집행은 전기화물차 2,672대 계획 대비 890대(33.3%), 전기어린이통학버

스 290대 대비 142대(49.0%), 전기이륜차 20,000대 대비 8,581대(42.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수요 예측과 실제 집행 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였음.

[2025년도 전기차보급사업 예산 편성 및 실제 집행 대수]

구분	사업 수행 주체	차종	예산 편성시 수요 예측 대수	수요 산출 방법	실제 집행 대수
민간경상보조	한국환경공단	전기화물	2,672대	법인, 개인사업자 수요 고려	890대
자치단체 자본보조	지자체	전기어린이 통학버스	290대	전국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수요조사 결과 반영	142대
		전기이륜	20,000대	17개 광역지자체별 수요조사 결과와 여유 물량을 고려하여 산출	8,581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는 예산 편성 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다고 하나, 실제로는 여유 물량을 과다하게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한 데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임. 전기이륜차 보조사업의 경우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요조사 대수보다 총 3,628대를 추가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은 총 편성 물량 11,200대 중 2,927대(집행률 26.1%)에 그쳐 수요조사 결과를 초과하여 편성한 물량은 모두 집행조차 되지 못하였음.

[2025년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서 수요 조사 결과보다 많이 편성된 지자체]

(단위: 대, %)

연번	수요조사 대수 (A)	예산 편성 대수 (B)	실제 집행 대수 (C)	초과 편성 대수 (B-A)	집행률 (C/B)
1	170	321	82	151	25.5
2	300	368	229	68	62.2
3	2,276	3,884	878	1,608	22.6
4	449	775	158	326	20.4
5	498	1,120	169	622	15.1
6	738	849	110	111	13.0
7	706	958	310	252	32.4
8	1,185	1,549	394	364	25.4
9	1,250	1,376	597	126	43.4
	7,572	11,200	2,927	3,628	26.1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수소차 보급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방식으로 집행되는데, 총 예산액 6,385억 8,000만원 중 실집행액은 3,541억 1,000만원에 그쳐 전체 실집행률이 55.5%에 불과함.

구체적으로, 수소 저상버스는 예산액 2,499억원 중 997억 6,700만원만 집행되어 실집행률이 39.9%에 그쳤으며, 다른 차종도 실집행률이 수소 고상버스는 58.0%, 수소 화물차는 40.0%, 수소 청소차는 50.0%, 수소차 스택교체는 8.5%에 불과함.

[2025년도 수소차 보급사업 실집행 결산]

(단위: 백만원)

2025년	사업수행주체	차종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C/A)
			본예산	추경(A)						예산현액	집행액(C)			
자치단체 차본보조	지자체	승용	247,500	164,250	133,560	133,560	270	133,830	127,260	133,560	127,193	292	6,278	77.4%
		버스(저상)	249,900	249,900	118,410	118,410	15,960	134,370	112,158	118,410	99,767	18,060	4,152	39.9%
		버스(고상)	210,600	210,600	142,740	142,740	23,556	166,296	139,880	142,740	122,200	16,120	10,296	58.0%
		화물	2,500	2,5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	-	40.0%
		청소차	7,200	7,200	3,600	3,600	154	3,754	3,754	3,600	3,600	-	-	50.0%
		스택교체	4,130	4,130	560	560	140	700	490	560	350	70	140	8.5%
합계			721,830	638,580	399,870	399,870	40,080	439,950	384,542	399,870	354,110	34,542	20,866	55.5%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수소차의 실집행부진도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 편성 시 수요 예측 대수를 과다하게 책정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소차 보급사업 사업의 예산안 편성을 위한 대수 추계시 지자체별 수요를 고려하여 산출한다는 입장이나, 실제 집행상 저상버스 1,190대 예측 대비 476대(40.0%), 고상버스 810대 대비 470대(58.0%), 화물차 10대 대비 4대(40.0%), 청소차 10대 대비 5대(50.0%), 스택교체 118개 대비 10개(8.5%)에 그쳐 수요 예측과 실제 집행 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였음.

[2025년도 수소차보급사업 예산 편성 및 실제 집행 대수]

2025년	사업 수행 주체	차종	예산 편성시 수요 예측 대수	수요 산출 방법	실제 집행 대수
자치단체 자본보조	지자체	버스(저상)	1,190대	17개 광역지자체별 수요조사 결과와 여유 물량을 고려하여 산출	476대
		버스(고상)	810대		470대
		화물	10대		4대
		청소차	10대		5대
		스택교체	118개		10개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는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예산 편성 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다고 하나, 실제로는 여유 물량을 과다하게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한 데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임.

수소 저상버스의 경우 1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요조사 대수보다 총 367대를 추가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은 총 편성 물량 1,180대 중 476대(집행률 40.3%)에 그쳤음. 심지어 특정 지자체의 경우 수요조사에 따른 수요 대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0대를 편성하여 모두 집행되지 못하였음.

[2025년도 수소 버스(저상)에서 수요 조사 결과보다 많이 편성된 지자체]

(단위: 대, %)

연번	수요조사 대수 (A)	예산 편성 대수 (B)	실제 집행 대수 (C)	초과 편성 대수 (B-A)	집행률 (C/B)
1	100	150	47	50	31.3
2	80	100	49	20	49
3	220	260	80	40	30.8
4	10	11	-	1	-
5	4	15	4	11	26.7
6	15	20	15	5	75
7	23	30	23	7	76.7
8	94	170	113	76	66.5
9	16	35	13	19	37.1
10	6	14	14	8	100
11	12	15	16	3	106.7
12	133	150	29	17	19.3
13	19	31	8	12	25.8
14	9	51	46	42	90.2
15	72	118	19	46	16.1
16	-	10	0	10	-
합계	813	1180	476	367	40.3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와 같이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사업은 모두 예산 편성 단계에서의 수요 예측과 이에 따른 예산 편성 및 실제 집행 간 괴리로 인하여 실집행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예산편성 시 단순히 수요조사 결과와 여유 물량을 반영하여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실제 보급 여건 및 사업별 집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다 정밀한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무공해차 보급사업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집행잔액 중 국고에 반납되지 않은 금액이 1,869억 5,000만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반납 지연 사유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신속한 정산과 회수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한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및 보조사업의 수익금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되도록 규정하고 있음.[53]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 보조금 정산자료를 차년도 3월 내에 교부받아 정산자료 검토 후 지방자치단체에 반납금액을 통지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집행 잔액을 반납받고 있음.

그런데 2024년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잔액 3,040억 2,900만원 중 국고반납액이 1,738억 9,700만원(반납률 57.2%)에 불과하고, 미반납액이 1,301억 3,200만원에 달하고 있음.

심지어 2018년에 사업이 완료되어 반납하여야 할 2,600만원도 현재까지 반납되지 않고 있어 반납 기한을 7년 이상 경과하는 등,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집행잔액 1조 230억 9,600만원 중 미반납액이 1,869억 5,000만원(미반납률 18.3%)에 달하고 있음.

53)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무공해차 보급사업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반납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지자체 집행잔액(A)	국고반납액(B)	미반납액	반납률(B/A)
2018	8,079	8,053	26	99.7
2019	66,608	66,608	-	100
2020	116,042	116,041	1	100
2021	129,012	129,010	2	100
2022	110,013	109,937	55	99.9
2023	289,313	232,578	56,734	80.4
2024	304,029	173,897	130,132	57.2
합계	1,023,096	836,124	186,950	81.7

주) 2023년 및 2024년 금액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이의신청, 보완 요구 등 정산 진행 중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출 기준으로 작성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아 수납이 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으로, 지자체와 합동 회의를 개최하여 국비 반납계획 수립현황 점검 등 반납 독려를 하고 있다는 입장임.[54]

54)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조치로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 2026년 5월부터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 보조사업자에게 추가 보조금 교부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임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p.1354〉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53	무공해차 보급사업의 조속한 보조금 집행잔액 수납 필요	관련 사업명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무공해차 보급사업(1633-311)	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 사항	내역사업인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2018년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집행잔액을 현재까지 약 7년간 반납하지 않고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정산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시정 요구 사항	정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과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템e)의 데이터 연계, 공유 등을 통해 보조금 미반납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적인 제재방안, 제도 및 시스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그러나 이와 같이 수납이 지연되는 것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되도록 규정한 기한을 도과한 것임.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납 지연 사유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함께 회수 계획을 수립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교부 보조금 집행잔액을 조속히 반납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19.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집행부진 해소를 위한 사업 관리 강화 필요 등

가. 개 요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은 전기·수소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무공해차의 보급을 확산시키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8,654억 8,900만원 중 5,287억 5,900만원이 집행(집행률 61.1%)되고 3,367억 3,000만원이 불용되었음.[55)]

[2025년도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928,423	865,423	66	-	865,489	528,759	-	336,730	930,938
전기차 충전기 구축 지원	623,750	560,750	-	-	560,750	307,150	-	253,600	550,750
수소충전소 설치	196,280	196,280	-	-	196,280	113,210	-	83,070	189,700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은 내역사업으로 전기차 충전기 구축 지원 사업,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등이 있으며, 내역사업인 **‘전기차 충전기 구축 지원’** 사업은 2025년 예산현액 5,607억 5,000만원 중 3,071억 5,000만원이 집행(집행률 54.8%)되고 2,536억원이 불용되었음.

또한 내역사업인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은 2025년 예산현액 1,962억 8,000만원 중 1,132억 1,000만원이 집행(집행률 57.7%)되고 830억 7,000만원이 불용되었음.

5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1633-312)(녹색전환정책관)

나. 검토의견

첫째,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은 2025년 실집행률이 22.0%에 불과하는 등 집행이 부진한데, 이는 예산 편성 시 추산한 대수와 실제 집행되는 대수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실적인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의 내역사업인 전기차충전기 구축 지원 사업과 수소충전기 설치 사업은 2025년 예산액 7,570억 3,000만원 중 3,366억 7,000만원은 수요 부족으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되지 않고 불용되었으며, 교부된 4,203억 6,000만원 중 실집행액은 1,668억 200만원(예산 대비 실집행률 22.0%)에 불과함.

세부적으로, 전기차 충전기 구축 지원사업은 예산액 5,607억 5,000만원 중 1,078억 2,700만원만 집행되어 실집행률이 19.2%, 수소차 충전기는 예산액 1,962억 8,000만원 중 589억 7,500만원만 집행되어 실집행률이 30.0%에 불과함.

[2025년도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실집행 결산]

(단위: 백만원,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조사업자(실집행)							
사업명	예산 (추경) (A)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대비 실집행률 (B/A)
전기차 충전기	560,750	307,150	307,150	168,539	475,689	234,238	107,827	188,922	52,529	19.2
수소차 충전기	196,280	113,210	113,210	74,245	187,455	79,145	58,975	78,330	29,980	30.0
합계	757,030	420,360	420,360	242,784	663,144	313,383	166,802	267,252	82,509	22.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전기차 충전기 구축 지원 사업의 경우 급속충전기, 완속충전기 등 충전기의 종류별로 일정 금액을 보조하는 방식[56]으로 직접 수행[57],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보조 방식으로 수행됨. 그런데 한국환경공단의 급속충전기 보급사업은 예산액

56) 급속 충전기 7,500만원, 스마트 완속 충전기 300만원, 스마트 완속 교체 150만원, 이륜차 배터리 교환 1,000만원 등

57) 한국환경공단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 관리함

1,277억 5,000만원 중 집행액이 61억 1,600만원(실집행률 4.8%), 스마트완속충전기 보급사업은 예산액 2,430억원 중 집행액이 275억 7,800만원(실집행률 11.3%)에 불과함.

또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급속충전기 보급사업은 예산액 935억원 중 실집행액이 32억 1,900만원(실집행률 3.4%), 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사업은 예산액 50억원 중 집행액이 24억 5,800만원(실집행률 49.1%)에 불과함.

[2025년도 전기차 충전기 실집행 결산]

(단위: 백만원, %)

전기차	사업수행주체	차종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추경)(A)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C/A)
									예산 현액	집행액(C)			
직접	한국환경공단	급속	91,500	91,500	91,500	5,023	96,523	72,092	91,500	68,456	21,406	3,025	74.8%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이동형	-	-	-	29,657	29,657	19,616	-	-	-	10,041	-
민간자본보조	한국환경공단	급속	127,750	19,950	19,950	10,308	30,258	9,583	19,950	6,116	7,937	12,738	4.8%
		완속	-	-	-	27,192	27,192	26,539	-	-	-	653	-
		스마트완속	243,000	134,200	134,200	69,837	204,037	81,677	134,200	27,578	105,244	17,116	11.3%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급속	93,500	56,500	56,500	24,902	81,402	21,513	56,500	3,219	53,281	6,608	3.4%
		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5,000	5,000	5,000	1,620	6,620	3,218	5,000	2,458	1,054	2,348	49.1%
합계			560,750	307,150	307,150	168,539	475,689	234,238	307,150	107,827	188,922	52,529	19.2%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와 같은 집행 부진은 당초 예산 편성 시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수요 예측 대수를 과다하게 책정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예산 편성을 위한 전기차 충전기 물량 산정 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및 제2차 미세먼지 종합계획(2024~2029년) 등의 설치목표 달성을 고려하여 물량(전기차 대수)를 산출하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실제 집행 실적을 보면 직접설치 급속충전기는 계획 물량 610기 중 456기(74.8%), 한국환경공단 설치 급속충전기는 계획 물량 1,703기 중 81기(4.8%), 스마트 완속은 91,000기 중 9,202기(10.1%)만 집행되었음.

또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경우 급속충전기 예측 대수 1,247기 중 753기(60.4%), 이륜차 배터리 교환형의 경우 500기 중 245기(49.0%)만 집행되는 등 계획 대비 실제 설치 실적이 크게 미달한 것으로 나타남.

[2025년도 전기차 충전기 예산 편성과 실제 집행 대수]

(단위: 기)

2025년	사업 수행 주체	차종	예산(추경) 편성시 수요 예측 대수	실제 집행 대수
직접	한국 환경 공단	급속	610	456
민간자본 보조		급속	1,703	81
		스마트완속	91,000	9,202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	급속	1,247	753
		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500	245
합계			95,060	10,737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또한 수소충전기 설치 사업은 충전소 설치비용의 7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지자체 보조 방식으로 수행되는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승용 충전기 보급사업은 예산액 133억원이 전액 불용되었고, 상용 충전기는 예산액 525억원 중 338억 4,500만원이 집행되어 실집행률이 64.5%이며, 상용액화 충전기는 예산액 980억원 중 186억 2,000만원이 집행되어 실집행률이 19.0%에 불과함.

또한 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승용 충전기는 예산액 37억 8,000만원 중 18억 9,000만원이 집행되어 실집행률이 50.0%, 상용 충전기는 예산액 217억원 중 46억 2,000만원이 집행되어 실집행률이 21.3% 수준이며, 상용액화 충전기 사업은 예산액 70억원이 전액 불용되었음.

[2025년도 수소차 충전기 실집행 결산]

(단위: 백만원, %)

2025년	사업 수행 주체	차종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추경) (A)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예산 현액	집행액 (C)			
민간자본보조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승용	13,300	-	-	4,280	4,280	780	-	-	700	2,800	-
		상용	52,500	52,500	52,500	26,145	78,645	47,285	52,500	33,845	15,330	16,030	64.5
		상용액화	98,000	36,000	36,000	43,610	79,610	24,570	36,000	18,620	51,100	3,940	19.0
지자체자본보조	지자체	승용	3,780	1,890	1,890	210	2,100	1,890	1,890	1,890	-	210	50.0
		상용	21,700	15,820	15,820	-	15,820	4,620	15,820	4,620	11,200	-	21.3
		상용액화	7,000	7,000	7,000	-	7,000	-	7,000	-	-	7,000	-
합계			196,280	113,210	113,210	74,245	187,455	79,145	113,210	58,975	78,330	29,980	30.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수소차 충전기도 전기차 충전기와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 편성 시 수소차 충전기에 대한 수요 예측 대수를 과다하게 책정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소차 충전기 물량 선정 시 중기사업계획 및 전략적 배치계획 및 계속사업 예산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수요(2024년 2월~3월 조사)를 반영하여 수량을 산정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실제 집행 대수를 보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승용 충전기 7개소는 연중 수요가 없어 전액 집행되지 않았고, 상용 충전기는 계획 물량 23개소 중 16개소(69.6%)만 집행되었으며, 상용액화 충전기는 계획 물량 28개소 중 8개소(28.6%)만 집행되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도 승용 충전기는 계획 물량 2개소 중 1개소(50.0%), 상용 충전기는 6개소 중 2개소(33.3%)만 집행되었으며, 상용액화 충전기 1개소는 집행되지 않았음.

[2025년도 수소차 충전기 예산 편성과 실제 집행 대수]

2025년	사업 수행 주체	차종	예산 편성시 수요 예측 대수	수요(개소) 산출 방법	실제 집행 대수
민간 자본 보조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	승용	7개소	- 25~29년 중기사업계획, 전략적 배치계획 등 각종 계획 반영 - 계속사업 예산 반영	-
		상용	23개소		16개소
		상용 액화	28개소		8개소
자치 단체 자본 보조	지자체	승용	2개소	- 25~29년 중기사업계획, 전략적 배치계획 등 각종 계획 반영 - 계속사업 2차년도 예산 반영 -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신청 수요 반영	1개소
		상용	6개소		2개소
		상용 액화	1개소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와 같이 전기차 충전기 및 수소차 충전기 설치지원사업은 실제 수요를 충분히 검토하여 책정하기보다 미세먼지 종합계획 등 중기사업계획상의 목표 물량과 연초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실제 수요와 괴리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단순히 미리 계획한 목표 및 중기사업계획 등만을 고려하여 예산액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수요 예측과 시장 상황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급속 전기차 충전기 구축 지원 사업의 예산안은 충전기당 보조단가를 7,500만원으로 산정하여 편성된 것인데, 실제 집행상으로는 충전기당 평균 보조단가가 산정금액보다 낮게 나타나므로, 이를 현실화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2025년 급속 전기차 충전기 구축 지원 사업은 한국환경공단 1,277억 5,000만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93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각각 충전기 1,703기 및 1,247기를 충전기당 7,500만원을 보조하는 것을 반영하여 산정된 것임.

그런데 실제 집행되는 전기차 급속충전기의 충전기당 보조단가는 예산상 편성 금액인 7,500만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급속충전기 보조금은 충전기 용량별로 차등 지원되고 있는데, 2023년 및 2024년에는 40kW 이상 800만원, 50kW 이상 1,000만원, 100kW 이상 2,000만원, 200kW 이상

4,000만원, 350kW 이상 7,500만원을 지원하였음.

이후 2025년 4월 23일 「2025년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 운영지침」 개정으로 충전기당 40kW이상의 경우 1,000만원, 50kW이상은 1,400만원, 100kW이상은 2,600만원, 200kW이상은 4,800만원, 350kW이상은 8,2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해당 기준은 2026년에도 적용되고 있음.[58)]

[전기차 급속충전기 용량별 지원단가]

(단위: 만원/기)

구 분	40kW 이상	50kW 이상	100kW이상	200kW이상	350kW이상
2023년, 2024년	800	1,000	2,000	4,000	7,500
2025년, 2026년	1,000	1,400	2,600	4,800	8,200
증가액	200	400	600	800	70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런데 한국환경공단의 2025년 실집행 내역을 보면, 50kW 이상 충전기 558기, 100kW 이상 충전기 167기, 200kW 이상 충전기 40기가 설치되었고, 350kW 이상 충전기는 설치되지 않았음.

이에 따라 실제 전기 급속충전기당 평균 집행단가는 1,840만원으로, 예산 편성 단가인 7,500만원의 약 1/4 수준에 그쳤음.

이와 같은 예산상 단가와 실제 집행 단가의 차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 집행 단가는 2023년 2,359만원(예산 대비 △5,141만원), 2024년 1,989만원(예산 대비 △5,511만원)에 불과함.

[최근 3년간 한국환경공단의 전기차 급속충전기 용량별 실집행 내역]

(단위: 대수)

구 분	40kW 이상	50kW 이상	100kW 이상	200kW 이상	350kW 이상	합계	예산상 단가	실제 평균 단가	차이
2023년	-	267	2,567	580	65	3,479	7,500만원	2,359만원	△5,141만원
2024년	-	471	552	226	1	1,250	7,500만원	1,989만원	△5,511만원
2025년	-	558	167	40	-	765	7,500만원	1,840만원	△5,660만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58) 각 용량별 지원단가는 충전기 1기당 최대 지원금액에 해당하고, 실제 충전기 설치 비용의 50%를 한도로 지원함. (즉, 최대 보조율은 50%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경우에도 전기차 급속충전기의 예산상 단가에 비해 실제 집행단가가 낮게 나타나는데, 2025년 실집행상 50kW이상 충전기 12대, 100kW이상 충전기 43대, 200kW이상 충전기 728대, 350kW이상 충전기 67대가 집행되어 이들의 실제 평균 단가는 충전기당 4,909만원에 불과함.

이와 같은 예산상 단가와 실제 평균 단가의 차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 평균 단가는 2023년 2,949만원(예산 대비 △4,551만원), 2024년 3,964만원(예산 대비 △3,536만원), 2025년 4,909만원(예산 대비 △2,591만원)에 불과함.

[최근 3년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전기차 급속충전기 용량별 실집행 내역]

(단위: 대수)

구 분	40kW 이상	50kW 이상	100kW 이상	200kW 이상	350kW 이상	합계	예산상 단가	실제 평균 단가	차이
2023년	-	49	642	632	9	1,332	7,500만원	2,949만원	△4,551만원
2024년	-	101	204	771	190	1,266	7,500만원	3,964만원	△3,536만원
2025년	-	12	43	728	67	850	7,500만원	4,909만원	△2,591만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실제 사업 현장에서 50~200kW 규모 충전기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입장이나, 이러한 수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면 실제 설치 수요와 집행 실적을 반영하여 예산 단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예산안 편성 시 실제 설치 수요와 최근 집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급속충전기 보조단가를 현실화함으로써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셋째, 2026년 6월 기준 전기차 충전소 설치 보조금을 지급받아 충전소를 설치한 이후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충전소가 약 6,151기에 달하고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충전소의 실제 운영 여부 등을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한 경우 최소 5년간 해당 충전시설을 운영·관리하며 전기차 이용자에게 충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59)]

59)「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Ⅳ. 충전시설 운영 및 관리 (p.20)

그런데 일부 사업수행기관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충전소를 설치하였음에도 충전시설을 장기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총 54억 6,6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A사의 경우 2,313개의 충전소 중 194개의 충전소만 운영(운영률 8.4%)하고 2,119기의 충전소를 미운영하고 있으며, 75억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B사의 경우 7,502기의 충전소 중 4,806기의 충전소만 운영(운영률 64.1%)하고 2,696기의 충전소를 미운영하고 있고, 13억 3,6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C사의 경우 1,336기의 충전소 모두를 미운영(운영률 0%)하고 있음.

이들 업체의 충전소는 모두 전기요금 미납을 이유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A사의 경우 충전소 미운영 시작일이 2024년 8월로, 2026년 6월 기준 미운영 시작일로부터 1년 8개월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운영을 위한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충전기가 설치되었음에도 현재 총 6,151기의 충전소가 실제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미운영 전기차 충전소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업체명	총 충전기 수	충전기 보조금 지급 총액	운영 충전기 수	미운영 충전기 수	미운영 시작일	조치 상황	시작일부터 조치 경과일	미운영 사유
A사	2,313	5,466	194	2,119	2024.8.8.	진행중	1년 8개월 이상	전기요금 미납
B사	7,502	21,033	4,806	2,696	2025.11.4.	진행중	7개월 이상	
C사	1,336	1,833	-	1,336	2026.5.20.	진행중	1개월 이상	
계	11,151	28,332	5,000	6,151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1. 기본 원칙
① 사업수행기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법률」,「전기사업법」,「전기안전관리법」,「전기설비 기술기준」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충전시설을 운영·관리해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아 충전시설을 설치한 경우, 충전시설 소유자 및 사업수행기관은 최소 5년간 해당 충전시설을 운영·관리해야 한다.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6월 기준 연구용역[60]을 통하여 구체적인 미납사유를 확인하고 있고, 확인 후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임.

전기차 충전소 설치 지원사업은 단순히 충전소를 설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설치된 충전소가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전기차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상당수 충전소가 장기간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업의 효과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충전소의 운영 현황을 보다 철저히 점검하여 장기간 미운영 중인 충전소에 대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사업수행기관이 충전소를 적정하게 운영·관리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60)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4월부터 10월까지 '민간사업자 충전시설 양수 및 운영방안에 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임.

20.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 조속한 장비 도입을 통한 실질적인 센터의 업무수행 필요

가. 개 요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 사업은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 및 장비 구축으로 액화수소 제품에 대한 고장분석 등 신뢰성 시험을 수행하고 신뢰성 평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07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61]

[2025년도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	10,700	10,700	-	-	10,700	10,700	-	-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 사업은 수소특화산업단지 내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의 장비 도입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70%의 비율로 보조하는 사업으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장비도입비 교부현액 158억 1,900만원 중 29억 8,500만원이 집행(집행률 19.0%)되고 127억 6,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6,7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년도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 사업 실집행 결산]

(단위: 백만원, %)

연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자체		장비구입비							
	본예산 (A)	집행액	교부액	집행액	교부액 (B)	전년도 이월액 (C)	교부현액 (D=B+C)	집행액 (E)	당해연도 교부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최종 집행률 (E/D)
2025년	10,700	10,700	10,700	10,700	10,700	5,119	15,819	2,985	-	12,767	67	19.0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6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액화수소신뢰성평가센터구축(5203-320)(수소열산업정책관)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는 액화수소 관련 제품에 대하여 환경시험, 내구성, 고장분석 등을 평가하기 위한 기관으로, 예산안은 제품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장비 도입을 위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음.

나. 검토의견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가 2026년 3월 준공되었음에도 시험·평가장비의 도입 지연으로 인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장비 도입을 조속히 완료하여 센터가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액화수소 기자재의 성능·안전성 검증과 시험평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시험·평가장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2025년까지 주요 장비의 시운전을 완료하여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를 운영할 계획이었음.

그런데 센터는 2026년 3월에 준공되었으나 도입 예정이었던 장비들은 장비 제작 지연 및 규격 적정성 검토 지연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어 센터의 실질적인 운영도 지연되고 있음.

실제 2025년 10대의 장비 도입을 위해 107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자체 장비 규격 적정성 검토 등으로 인하여 해당 장비들은 2025년 내 발주조차 하지 못하여 전액 이월되었고,[62] 2026년 4월에 계약이 체결되어 2026년 10월에 도입될 예정임.

---

62)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당 장비가 꼭 필요한 장비이고, 조달청과 9월 및 12월에 일괄발주, 분할발주 등 발주 방법에 관한 협의했다는 것을 지출원인행위로 보고 이월을 승인하였다는 입장이나, 지출원인행위란 일반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지출원인행위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③ 제2항에 따른 이월을 위해서는 보조사업자는 해당연도 교부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중 이월이 필요한 금액 및 반납금액을 포함한 이월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연도 말까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계획상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액화수소 평가 장비의 실제 도입 현황]

도입 예정 연도	장비명	구축 현황	지연 사유
2025년	① 방폭구조용 액화수소 내구성 시험기 ② 액화수소기자재 수명 특성 측정 시스템 ③ 액화수소 기화기 수명 시험기 ④ 수소 장입 및 극저온 재료시험기 ⑤ 내압(수압)시험장비 ⑥ 가진(진동)시험장비 ⑦액화수소용 복합환경 시험장비 ⑧수면 운동 구현 시험 평가 장비 ⑨ 해상 환경 시험 평가 장비(동결 등) ⑩ 해상 환경 시험 평가 장비(온도 등)	제작 중	○ 자체 장비 규격 적정성 검토, 시험평가기준 마련 등으로 인한 도입장비 발주 지연으로 연내 발주하지 못함 ○ 이후 2026년 2월 발주, 2026년 4월 계약체결 및 2026년 10월 도입예정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또한 2024년에 도입을 계획한 장비들도 현재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당초 2024년에 도입할 계획이었던 ① 액화수소 펌프 고장시험장비는 핵심 부품의 발주 및 제작 지연으로 2026년 9월 도입 예정이고, ② 액화수소 부품시험 및 평가장비는 위 장비의 도입 지연으로 인하여 설치 및 시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마찬가지로 ③ 액화수소 공급 및 회수·재액화 설비와 ④ 시험용 액체 가스 공급시설도 도입이 지연되고 있으며, 탱크 제작 지연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검토 지연으로 인해 2026년 9월 도입 예정임.

이처럼 계획상 2024년 도입 예정이었던 9개의 장비 중 2025년말 기준 실제 구축이 완료된 장비는 수소 분석기 하나에 불과한 등 당초 계획한 장비 구축이 대부분 지연되어 센터의 실질적인 운용도 계획 대비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음.

[계획상 2024년 도입 예정이었던 액화수소 평가 장비의 실제 도입 현황]

도입 예정 연도	장비명	구축 현황	지연 사유
2024년	① 액화수소 펌프 고장시험장비	제작 중	○ 핵심 부품(VFD, PDB) 발주 및 제작 지연으로 인해 장비 구축 일정이 지연되고 있음. ○ 2026. 9. 30. 구축 예정
	② 액화수소 부품시험 및 평가장비	제작 완료	○ 장비 제작은 완료되었으나, 액화수소 펌프 고장시험장비와 연계 구축 장비로 연동 일정을 고려하여 통합 설치・시운전 예정임
	③ 액화수소 공급 및 회수/재액화 설비 ④시험용 액체 가스 공급시설	제작 중	○ 탱크 제작 및 한국가스안전공사(KGS) 검토 지연에 따라 장비 구축 일정이 지연되고 있음. ○ 2026. 9. 30. 구축 예정
	⑤ X-ray 결정 분석기(XRD) ⑥ X-ray 성분 분석기(XRF)	제작 중	○ 센터 준공 지연에 따른 수입 신고 절차 지연으로 구축 일정 지연 ○ 2026. 5. 구축 예정
	⑦ 미세조직 성분분석용 X-ray 검사기(LIBS) ⑧ 액화수소 미세구조 분석용 전자현미경	제작 완료	○ 장비 제작은 완료되었으나, 센터 준공 지연에 따라 장비 반입 및 검수 일정이 지연되고 있음
	⑨ 수소 분석기	구축 완료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로 인해 주요 장비의 입고 및 시운전 일정도 당초 계획보다 상당 기간 연기되었는데, 액화수소 공급 및 회수/재액화 설비는 당초 2024년 6월 입고, 2025년 8월 시운전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2026년 9월 입고 및 시운전 예정으로 당초 계획보다 시운전 계획이 1년 1개월이 지연될 예정임.

또한 2025년 도입예정이던 장비 10개는 모두 2025년 8월 입고 및 시운전을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2026년 10월 입고 및 시운전 예정으로, 당초 계획보다 1년 2개월이 지연된 상황임.

[시험장비의 당초 시운전 계획과 실제 시운전 예정일 현황]

년 도	장 비 명	당초 계획상 입고일	실제 입고일	당초 계획상 시운전일	실제 시운전 (예정)일	시운전 지연 기간
2023년	액화수소 배관·밸브 및 저장용기 신뢰성 시험장비	24.1.	26.5.	25.8.	26.6.	10개월
2024년	미세조직 성분분석용 X-ray 검사기(LIBS)	24.6.	26.4.	25.8.	26.5.	9개월
	액화수소 미세구조 분석용 전자현미경					
	수소 순도(기타 가스) 분석기	24.6.	25.11.	25.8.	26.5.	9개월
	X-ray 결정 분석기(XRD)	24.6.	26.5.	25.8.	26.6.	10개월
	X-ray 성분 분석기(XRF)					
	액화수소 부품시험 및 평가장비	24.6.	26.4.	25.8.	26.9.	1년 1개월
	액화수소 펌프 고장시험장비	24.6.	26.9.	25.8.	26.9.	1년 1개월
	액화수소 공급 및 회수/재액화 설비	24.6.	26.12.	25.8.	26.9.	1년 1개월
	시험용 액체 가스 공급시설					
2025년	수소 장입 및 극저온 재료시험기	25.8.	26.12.	25.8.	26.10.	1년 2개월
	수면 운동 구현 시험 평가 장비					
	방폭구조용 액화수소 내구성 시험기					
	내압(수압)시험장비					
	가진(진동)시험장비					
	해상 환경 시험평가 장비(결빙 등)					
	해상 환경 시험평가 장비(온도 등)					
	액화수소기자재 수명 특성 측정 시스템					
	액화수소 기화기 수명 시험기					
	액화수소용 복합환경 시험 장비					

주) 입고일은 장비 입고일 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는 2026년 3월 준공되었으나 핵심 시험·평가장비의 도입 및 시운전이 완료되지 않아 당초 계획한 액화수소 기자재 성능·안전성 검증 및 시험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센터의 활용성과가 적기에 창출되지 못하고 있으며, 시험평가 서비스 제공 및 관련 산업 지원 기능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장비 제작·설치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장비 도입 및 시운전을 조속히 완료하여, 이미 준공된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가 본래 목적에 따라 시험·평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전력산업기반기금】

〈지 출〉

21.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 계획에 따른 발전원별 보급을 위한 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은 주택, 건물 등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의 육성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1,682억 1,2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63]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156,373	168,212	-	168,212	168,212	-	-	214,332
	주택지원	22,154	24,919	-	24,919	24,919	-	-	25,665
	건물지원	32,093	41,167	-	41,167	41,167	-	-	45,867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내역사업인 **‘주택지원’**은 2025년 계획현액 249억 1,9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고, 내역사업인 **‘건물지원’**도 2025년 계획현액 411억 6,7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 되었음.

두 사업 모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태양광, 태양열 설비 등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용도 및 발전 용량별로 50% 이내[64]의 범위에서 보조하는 방식으로 집행됨.

63) 전력산업기반기금-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5202-303)(재생에너지정책관)

64) 건물지원(시범적 사업)의 경우 80% 이내

나. 검토의견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을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연례적으로 타 발전원의 집행부진으로 인하여 이를 태양광(단독주택) 및 태양광(일반)으로 조정하여 집행하고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계획에 따라 목표한 발전원대로 집행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은 주택과 건물을 나누어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에너지원별 평균 설치용량, 설치단가, 예상 개소수 및 보조율 등을 반영하여 계획안을 편성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5년간 에너지원별 계획안 편성과 실제 집행 간 차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원별 조정이 연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① 주택지원 사업의 경우 태양광(단독주택)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실제 지원금액이 당초 계획액을 초과하였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각각 63억 4,400만원, 55억 5,100만원, 3억 1,900만원, 21억 2,600만원, 29억 6,500만원을 초과 집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타 발전원으로부터 각각 79억 3,000만원, 60억 4,900만원, 22억 7,900만원, 21억 8,900만원, 57억 8,000만원을 조정하여 집행하였음.

반면 태양광(공동주택), 태양열, 연료전지 등은 반복적으로 계획액 대비 실제 집행액이 미달하고 있음. 태양광(공동주택)의 경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각각 45억 5,000만원, 40억 2,700만원, 22억 7,900만원, 9억 1,100만원, 16억 7,500만원을 계획액 대비 집행하지 못하였음.

태양열의 경우에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각각 8억 6,100만원, 12억 6,400만원, 2억 900만원, 11억 7,600만원, 33억 4,800만원을 계획액 대비 집행하지 못하였음.

특히 연료전지의 경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각각 계획액으로 16억 8,000만원, 8억 4,000만원, 5억 400만원, 1억 800만원,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21년 5,000만원, 2022년 1,700만원만이 집행되었을 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액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주택지원) 사업 조정내역]

(단위: 백만원)

주택지원			2021	2022	2023	2024	2025
태양광(단독주택)	계획	금액	43,750	41,400	31,161	14,182	12,015
	결산	실제 지원 금액	50,094	46,951	31,480	16,308	14,980
		차이	6,344	5,551	319	2,126	2,965
		타 발전원 내역조정 액수	7,930	6,049	2,279	2,189	5,780
태양광(공동주택)	계획	금액	5,750	5,400	3,948	2,412	2,522
	결산	실제 지원 금액	1,200	1,373	1,669	1,501	847
		차이	△4,550	△4,027	△2,279	△911	△1,675
		내역조정 액수	△4,550	△4,027	△2,279	△911	△1,583
태양열	계획	금액	4,900	7,100	5,355	5,370	6,495
	결산	실제 지원 금액	4,039	5,836	5,146	4,194	3,147
		차이	△861	△1,264	△209	△1,176	△3,348
		내역조정 액수	△861	△1,179	166	△1,157	△3,225
지열	계획	금액	7,700	8,740	6,500	4,436	2,480
	결산	실제 지원 금액	5,715	8,480	6,717	4,272	4,205
		차이	△1,985	△260	217	△164	1,725
		타 발전원 내역조정 액수	△1,730	-	353	2	1,894
연료전지	계획	금액	1,680	840	504	108	81
	결산	실제 지원 금액	50	17	-	-	-
		차이	△1,630	△823	△504	△108	△81
		내역조정 액수	△1,630	△823	△504	△108	△81
기타	계획	금액	1,220	1,520	1,471	1,429	1,326
	결산	실제 지원 금액	1,200	1,380	1,296	1,357	1,254
		차이	△20	△140	△175	△72	△72
		내역조정 액수	△20	△20	△15	△15	△2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② 건물지원 사업도 주택지원 사업과 유사하게 발전원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데, 건물지원 태양광(일반)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계획액보다 실제 집행액이 많은 상황임.

구체적으로 건물지원 태양광(일반)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각각 5억 1,600만원, 70억 1,600만원, 70억 5,300만원, 140억 6,700만원, 99억 8,400만원을 초과 집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타 발전원으로부터 초과 지출한 액수와 동일한 금액을 조정하여 집행하였음.

특히 2024년에 태양광(일반)의 계획액이 124억 2,900만원인데 타 발전원으로부터 140억 6,700만원(계획액 대비 113.2%)을 조정받아 집행하였고, 2025년에는 계획액이 181억 7,200만원인데 타 발전원으로부터 99억 8,400만원(계획액 대비 54.9%)을 조정받아 집행하여 계획액 대비 과다하게 조정 후 집행하는 측면이 있음.

반면 태양광(BIPV: Building-Integrated Photovoltaic(건물일체형)),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시범적사업 등은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태양광(BIPV)의 경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각각 27억 7,400만원, 6억 300만원, 32억 3,500만원, 63억 7,200만원, 18억 8,800만원이 집행되지 못하였고, 해당 금액이 타 발전원으로 조정되어 집행되었음.

태양열의 경우에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각각 7억 7,100만원, 12억 1,800만원, 6억 5,500만원, 25억 2,800만원, 10억 9,400만원이 집행되지 못하였고, 해당 금액이 타 발전원으로 조정되어 집행되었음.

연료전지의 경우 역시 2024년 31억 1,100만원, 2025년 17억 2,700만원이 계획액으로 편성되었으나 전액 집행되지 못하여 타 발전원으로 조정되었고, 시범적 사업[65]의 경우 2025년 계획액은 66억 2,400만원이었으나 실제 집행액은 2억 3,200만원에 그쳐 약 63억 9,200만원이 집행되지 못하였음.

65) 재생에너지 기술 상용화 활용 사업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건물지원) 사업 조정내역]

(단위: 백만원)

건물지원			2021	2022	2023	2024	2025
태양광(일반)	계획	금액	30,000	30,000	28,329	12,429	18,172
	결산	실제 지원 금액	30,516	37,016	35,382	26,496	28,156
		차이	516	7,016	7,053	14,067	9,984
		타 발전원 내역조정 액수	516	7,016	7,053	14,067	9,984
태양광(BIPV)	계획	금액	10,500	10,500	9,177	8,205	7,108
	결산	실제 지원 금액	7,726	9,870	5,942	1,833	5,220
		차이	△2,774	△630	△3,235	△6,372	△1,888
		내역조정 액수	△2,774	△630	△3,235	△6,372	△1,888
태양열	계획	금액	5,250	5,250	3,872	5,059	4,925
	결산	실제 지원 금액	4,479	4,032	3,217	2,531	3,831
		차이	△771	△1,218	△655	△2,528	△1,094
		내역조정 액수	△771	△1,218	△655	△2,528	△1,094
지열	계획	금액	4,000	4,000	2,723	2,140	1,793
	결산	실제 지원 금액	2,918	2,009	1,746	700	1,490
		차이	△1,082	△1,991	△977	△1,440	△303
		내역조정 액수	△1,082	△1,991	△977	△1,440	△303
연료전지	계획	금액	18,200	18,200	7,860	3,111	1,727
	결산	실제 지원 금액	13,589	11,244	5,880	-	-
		차이	△4,611	△6,956	△1,980	△3,111	△1,727
		내역조정 액수	△4,611	△6,956	△1,980	△3,111	△1,727
기타	계획	금액	590	590	379	325	818
	결산	실제 지원 금액	179	212	184	-	758
		차이	△411	△378	△195	△325	△60
		내역조정 액수	△411	△378	△195	△325	△60
시범적 사업	계획	금액	10,000	10,000	8,834	5,377	6,624
	결산	실제 지원 금액	7,630	8,566	3,165	1,893	232
		차이	△2,370	△1,434	△5,669	△3,484	△6,392
		내역조정 액수	△2,370	△1,434	△5,669	△3,484	△6,392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에 따라 에너지원별 보급 수를 기준으로도 태양광과 같은 일부 에너지원만 정부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반면, 타 에너지원은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한 상황임.

주택지원의 경우 2025년 결산상 태양광(단독주택)은 정부 목표 5,006개소 대비 실제 8,356개소의 보급 지원이 이루어져 목표 대비 3,350개소가 초과 달성되었으나, 태양광 공동주택은 목표 200개소 대비 실제 76개소(목표 대비 38.0%), 태양열은 목표 838개소 대비 실제 285개소(목표 대비 34.0%)에 그쳐 목표 대비 553개소가 부족하였고, 연료전지의 경우 목표 6개소가 모두 보급되지 못하였음.

건물지원의 경우에도 2025년 결산상 태양광(일반)은 정부 목표 717개소 대비 실제 730개소의 보급 지원이 이루어져 목표 대비 13개소가 초과 달성되었으나, 태양열은 목표 150개소 대비 실제 39개소(목표 대비 26.0%)에 그쳐 목표 대비 111개소가 부족하였고, 연료전지의 경우 목표 8개소가 모두 보급되지 못하였음.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 목표와 실제 보급 수]

(단위: 개소, %)

구분		정부 보급 목표 (A)	실제 보급 수 (B)	보급률 (B/A)	차이
주택 지원	태양광 (단독주택)	5,006	8,356	166.9	3,350
	태양광 (공동주택)	200	76	38.0	△124
	태양열	838	285	34.0	△553
	지열	218	349	160.1	131
	연료전지	6	-	0.0	△6
	기타	1	1	100.0	-
건물 지원	태양광 (일반)	717	730	101.8	13
	태양광 (BIPV)	30	19	63.3	△11
	태양열	150	39	26.0	△111
	지열	30	30	100.0	-
	연료전지	8	-	0.0	△8
	기타	5	4	80.0	△1
	시범적사업	8	1	12.5	△7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는 에너지원별 계획 물량 및 그에 따른 예산 산정시 실제 수요 및 집행 상황보다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 등 중장기 보급목표를 중심으로 편성함에 따라 실제 수요와 괴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임.[66]

특히 동일한 에너지원에서 계획액 대비 초과 집행 또는 집행 부진이 최근 5년간 동일한 경향으로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집행실적이 다음 연도 계획 물량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 추진 시 실제 수요와 집행실적을 보다 면밀히 반영하여 에너지원별 계획 물량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계획 단계에서 설정한 정부 보급 목표가 특정 에너지원에 편중되지 않고 계획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및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66)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에서 에너지원별 보급목표 산출 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과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산출한다는 입장임.

22.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사업: 발전원별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필요

가. 개 요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를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는 자에게 장기·저리의 사업비를 융자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의 육성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4,263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67]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	326,300	426,300	-	426,300	426,300	-	-	880,294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생산 및 설치자에게 사업비의 일정 비율[68]을 분기마다 공시하는 금리[69]를 기준으로 최대 10년간 융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나. 검토의견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은 연례적으로 풍력 및 기타 발전원의 집행 부진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발전원별 실제 수요와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계획 물량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발전원별 보급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67) 전력산업기반기금-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5202-304)(재생에너지정책관)

68) 중소기업 75%이내, 중견기업 55% 이내, 대기업 35% 이내

69)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25년도의 경우 1분기~4분기 모두 대출금리가 1.75% 였고, 2026년의 경우 1분기 대출금리는 1.75%, 2분기 대출금리는 2.00%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은 태양광, 풍력, 바이오, 소수력, 연료전지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 융자지원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계획액으로 태양광 3,323억원, 풍력 800억원, 바이오, 소수력 및 연료전지 100억원 등을 편성하였음.

그런데 연례적으로 태양광은 계획액을 초과하여 집행되는 반면, 풍력 및 기타 발전원은 계획액 대비 집행이 부진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태양광의 경우 2024년에는 계획액은 2,692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실제로는 2,952억 9,000만원이 집행되어 약 260억 1,000만원이 추가 집행되었고, 2025년에도 계획액은 3,32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실제로는 3,369억 500만원이 집행되어 약 46억 500만원이 미집행된 타 발전원에서 조정 후 초과 집행되었음.

반면 풍력 및 기타 발전원은 계획액 대비 집행이 부진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풍력의 경우 2024년 계획액은 800억원이었으나 실제 집행액은 455억원(집행률 56.9%)으로 약 345억원이 미집행되었으며, 2025년에는 계획액 800억원 중 실제 집행액은 750억원(집행률 93.8%)으로, 50억원이 미집행 되었음.

바이오, 소수력 및 연료전지의 경우 2025년 계획액 100억원 중 실제 집행액은 22억 5,800만원(집행률 22.6%)에 불과하고, 77억 4,200만원이 미집행되었음.

[최근 2년간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사업 발전원별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에너지원	계획액	집행액	계획액 대비 차이
2024년	태양광	269,280	295,290	26,010
	바이오	10,000	-	1,649
	소수력		1,649	
	연료전지		10,000	
	풍력	80,000	45,500	△34,500
2025년	태양광	332,300	336,905	4,605
	바이오	10,000	158	△7,742
	소수력		2,100	
	연료전지		-	
	풍력	80,000	75,000	△5,00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는 발전원별 실제 수요와 집행실적이 계획액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계획액 편성 시 태양광의 경우 계획액 편성 전년도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하고, 풍력의 경우 사업자들에게 수시로 수요조사를 받으며 그 외 에너지원의 경우 전년도 금액과 유사하게 편성한다는 입장임.

그러나 바이오·소수력 및 연료전지는 별도 수요조사 없이 연례적으로 100억원으로 동일한 규모의 계획액이 편성되어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풍력의 경우 수시 수요조사를 받았으나 2024년 및 2025년 모두 800억원으로 편성되어 계획액 대비 집행 부진이 반복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집행 추세가 계획액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70]

이에 따라 풍력 및 기타 발전원에서 연례적으로 집행 부진이 발생하여 풍력 및 기타 발전원에 배정된 재원이 태양광으로 조정되는 집행 방식은 발전원별 계획액이 실제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원별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균형적으로 지원하려는 사업 취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추진 시 발전원별 신청 수요, 최근 집행실적 및 사업 추진 여건 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여 계획 물량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지원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및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70) 2026년 이 사업의 계획액의 경우 바이오, 소수력 및 연료전지는 동일하게 100억원이 편성되었고, 풍력의 경우 2024년 및 2025년에는 육상풍력 80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육상풍력 1,200억원과 해상풍력 1,200억원을 합산한 총 2,400억원이 편성되었음

23. 풍력 현장기술 인력양성 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규정의 적시 마련 필요

가. 개 요

‘풍력 현장기술 인력양성 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은 풍력 현장전문인력이 갖추어야 하는 안전관리 등 필수기술에 대한 운영·유지보수 교육훈련 장비 구축과 인력양성을 통해 국내 풍력 운영관리 산업의 해외의존도를 탈피하고, 풍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30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71]

[2025년도 풍력 현장기술 인력양성 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11,000	11,000	-	11,000	11,000	-	-	9,000
풍력 현장기술 인력양성 플랫폼 구축 지원	3,000	3,000	-	3,000	3,000	-	-	-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 사업은 풍력 현장전문인력[72]에 대한 교육훈련 장비 도입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50%의 비율로 보조하는 사업으로, 정부 부처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보조금을 교부하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이를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방식으로 집행됨.[73]

[2025년도 풍력 현장기술 인력양성 플랫폼 구축 지원 집행방법]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5결산)	지원 비율(%)
풍력 현장기술인력 양성 플랫폼 구축 지원	보조	한국에너지기술 평가원	3,000백만원	5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71) 전력산업기반기금-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5202-315)(녹색전환정책관)

72) 풍력발전기의 운영, 유지보수 등을 수행하는 인력

73) 이 사업은 국비 50%(30억원), 지방비 50%(30억원) 매칭으로 사업 수행자에게 교부됨.

나. 검토의견

풍력 현장기술 인력양성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은 사업 이관에 따른 규정 정비가 지연되어 실집행이 부진하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규정을 적시에 마련하고 사업 추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계획액 30억원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액은 9,000만원(집행률 3.0%)에 불과함.

[2025년도 풍력 현장기술 인력양성 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 실집행 결산]

(단위: 백만원, %)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계획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당초	수정 (A)						계획 현액	집행액 (C)			
3,000	3,000	3,000	3,000	-	3,000	90	3,000	90	2,910	-	3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는 사업 수행자가 해당 예산을 통해 교육훈련장비(풍력발전터빈) 도입을 하려고 하였으나, 교육훈련장비 도입을 위한 중앙장비심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된 데 기인함.

구체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2월 사업공고 후 같은 해 4월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였고, 이후 2025년 4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보조금 20억원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교부하였으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이를 선정된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였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하려는 풍력 현장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장비는 1억원을 초과하여 중앙장비심의 대상에 해당하였고[74][75], 이에 따라 장비 도입을 위해서는 중앙장비심의가 선행되어야 하였음.

이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2025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중앙장비심의를 요청하였

74)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6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혁신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타당성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부위탁연구사업 중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구축계획이 포함된 경우

75) 도입하려는 장비는 풍력발전터빈 1세트(견적상 약 40억원)임

으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에너지 사업 소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면서 해당 요청은 반려되었음.

이후 사업 수행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중앙장비심의를 요청하였으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련 규정[76]이 마련된 이후 중앙장비심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그런데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은 2026년 1월 29일에야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중앙장비심의도 2026년 2월에 완료되었음. 이로 인해 사업의 목적인 교육훈련장비 도입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었으며, 장비 조달공고 또한 2026년 6월에야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2025년도 풍력 현장기술 인력양성 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 집행 과정]

집행 내용 (보조금 교부액)	사업 공고	→ 지자체 선정 (20억원 교부)	→ 지자체의 중앙장비 심의 요청 및 반려	→ 보조금 잔액 교부 (10억원 교부)	→ 규정 마련
연월	2025. 2.	2025. 4.	2025. 10.	2025. 12.	2026. 1.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 사업은 교육훈련장비 도입이 사업의 핵심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 개편으로 사업 소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 이후 중앙장비심의를 수행하기 위한 규정 제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음.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중앙장비심의를 요청한 시점부터 관련 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장비 도입을 위한 필수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음.

그런데 에너지 관련 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기 전에는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따라 장비심의가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사업 이관 과정에서 기존 규정을 공동 활용하거나 후속 규정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연속성이 확보되지 못하였음.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 관련 업무 이관 이후 내부 업무분장이 늦어져 규정이 신속하게 마련되지 못하였고, 2025년 12월 중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이관 이전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을 준용하여 심의하도록 협조요청[77]을 하였다는 입장임.

76)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시행 2026. 1. 29.]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33호, 2026. 1. 29., 제정]

그러나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업무분장은 내부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사업 이관 이후 2개월이 지난 후에나 이전 규정을 준용하여 심의하도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협조 요청을 하였고, 해당 요청은 실제 사업 수행자에게 전달되지도 못하였음.

그 결과 사업 수행의 필수 절차인 중앙장비심의와 장비 조달이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교부된 사업비 30억원 중 29억 1,000만원(97.0%)이 이월되었음.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업 이관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공백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사업 수행에 필요한 규정을 적시에 마련하고,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행정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77) 협조요청 공문 내용: 1) 부처 간 승계된 업무에 대해 산업기술혁신촉진법령 및 (구)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차질없이 관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로 제정·시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후대응기금】

〈수　입〉

24. 기타재산이자외수입: 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수입 확보 노력 필요

가. 개　요

‘기타재산이자외수입’ 은 한국거래소에서 월별 1회 온실가스배출권의 유상할당 경매를 실시하여 발생하는 수입 등으로, 2025년도 징수결정액 1,903억 6,200만원이 전액 수납(수납률 100.0%) 되었음.[78)]

[2025년도 기타재산이자외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액
	계획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당초	수정(A)						
기타재산 이자외수입	348,700	348,700	190,362	190,362	-	-	100.0	765,123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5년 기타재산이자외수입의 계획액은 2024년 2,897억원 대비 590억원 증액된 3,487억원이고, 2026년 계획액은 2025년 대비 4,164억 2,300만원 증액된 7,651억 2,300만원임.

이와 같이 계획액이 연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2025년에는 경제상황 개선 및 시장 수요 확대를 전망하여 유상할당 경매물량을 확대[79)]하였고, 2026년에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2026년~2030년)에 따라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한 데[80)] 기인함.

기후대응기금은 기타재산이자외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등을 자체수입[81)]으로 하고

78) 기후대응기금-기타재산이자외수입(54-547)(기후에너지정책실)

79) 2024년 2,060만톤 → 2025년 3,290만톤

80) 할당대상업체의 실질 유상할당 비율: 2025년 4.2% → 2026년 6.6% (+ 2.4%p)

있고, 자체수입 총 계획액 3,630억 2,700만원 중 기타재산이자외수입 계획액이 3,487억원으로 약 9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기후대응기금의 비목별 자체수입 비중]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				2026 계획
	당초 계획	수정 계획	결산	합계 대비 계획액 비중	
토지대여료 (51-511)	-	-	7	-	-
정부출자수입 (52-521)	4,242	4,242	5,478	1.2	5,964
기타민간이자수입 (54-544)	817	817	1,732	0.2	1,868
기타재산이자수입 (54-546)	7,084	7,084	25,220	2.0	11,141
기타재산이자외수입 (54-547)	348,700	348,700	190,362	96.0	765,123
과태료 (56-563)	-	-	23	-	-
과징금 (56-565)	-	-	27	-	-
가산금 (58-581)	-	-	0.8	-	-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2,184	2,184	96,314	0.6	30,815
합계	363,027	363,027	319,163.8	100	814,911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나. 검토의견

기후대응기금의 주 수입인 기타재산이자외수입은 온실가스배출권 판매 수입이 저조하여 당초 계획액 3,487억원 중 실제 수납액은 1,903억 6,200만원에 불과한 등 지속적으로 수입이 저조하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입 재원 확충을 통해 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온실가스배출권 매각대금 수입으로 총 3,487억원을 계획하였으며, 이는 유상할당 경매 공급 예상량 3,290만톤, 예상 낙찰률 61%, 예상 낙찰

81) 전입금, 예수금, 회수금 등 제외

가 16,958원/톤 등[82]을 반영하여 산출된 것임.

그러나 2025년 결산상 온실가스배출권 매각대금 수입은 1,903억 6,200만원에 불과하여, 당초 계획액 대비 약 54.6% 수준만 수납되었음.

이와 같은 계획액 대비 저조한 배출권 매각대금 수익은 연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23년 계획액 4,009억원 대비 실제 수입액은 852억원(계획액 대비 21.3%)에 불과했고, 2024년에도 계획액 2,897억원 대비 실제 수입액은 1,877억원(계획액 대비 64.8%)에 머물렀음.

[최근 3년간 배출권 매각대금 계획액과 결산액]

연도	구분	총 배출권 수(만톤)	낙찰률	낙찰가 (원/만톤)	예비분	계획액, 집행액 (집행률)
2023년	계획	2,060	70%	27,000	115억 5,600만원	4,009억원
	결산	1,901	41.5%	10,672	11억 4,528만원	852억원 (21.3%)
	차이	△159		△6,328	△104억 1,072만원	△3,157억원
2024년	계획	2,060	59%	23,234	101억 5,200만원	2,897억원
	결산	2,015	89.1%	10,355	20억 2,210만원	1,877억원 (64.8%)
	차이	△45		△12,879	△81억 2,990만원	△1,020억원
2025년	계획	3,290	61%	16,958	83억 7,000만원	3,487억원
	결산	2,025	93.8%	9,956	13억 8,734만원	1,903억원 (54.6%)
	차이	△1,265		△7,002	△69억 8,266만원	△1,584억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는 계획 대비 매각 배출권 물량 및 낙찰가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2025년 낙찰된 총 배출권은 2,025만톤으로 계획 3,290만톤 대비 1,265만톤이 저조하며, 평균 낙찰가 역시 톤당 9,956원으로 당초 계획 시 추계한 16,958원 대비 7,002원이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었음.

82) 예비분이란 유상할당 외에 배출권을 대여해주고 이를 배출권이나 현금으로 받는 물량으로, 시장조성자 대여분 상환에 따른 예비분 수입(현금으로 상환) 약 83억 7,000만원 포함

이와 같이 기후대응기금 운용이 시작된 이후 매년 반복적으로 계획 대비 대규모 수입 부족이 발생하고 있어 기금 운용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특히, 계획 대비 실제 수입 규모의 차이가 반복적으로 크게 발생할 경우 기금 재원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안정적인 집행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상반기의 경우 배출권 낙찰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는 등 배출권 매각대금의 수입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입장임.[83]

기후대응기금의 운용이 시작된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입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기후대응기금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기금의 중·장기 수입 및 지출구조 전반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83)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026년 배출권 낙찰가(원/만톤)는 (1~4월) 14,182원, (5월) 19,600원, (6월) 26,450원, (7월) 25,400원임.

〈지 출〉

25. 녹색정책금융활성화사업: 이차보전사업 취지에 부합한 예산 편성 및 집행 필요

가. 개 요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녹색경제활동 추진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대출 이자 일부를 이차보전 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539억 6,700만원 중 431억 7,400만원이 집행(집행률 80.0%)되고 107억 9,300만원이 불용되었음.[84)]

[2025년도 녹색정책금융활성화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녹색정책금융 활성화사업	53,967	53,967	-	53,967	43,174	-	10,793	66,488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 사업은 녹색경제활동, 국제감축사업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하여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금융기관의 우대금리에 매칭하여 대상 기업의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집행됨.

나. 검토의견

시중 금리와 정책 금리간의 차를 보전하는 일반적인 이차보전사업과 달리 녹색정책금융활성화사업은 금융기관 우대금리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일반적인 이차보전사업의 구조에 부합하게 집행되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84) 기후대응기금-녹색정책금융활성화사업(6232-601)(녹색전환정책관)

이 사업은 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이 우대하는 금리와 같은 비율을 매칭하여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며, ② 대기업의 경우 0.5%의 상한을 두고 금융기관의 우대금리와 매칭하여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A은행의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대출금리 상품설명서]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온실가스 감축률		24%이상	15%이상	2.4%이상	24%이상	15%이상	2.4%이상	24%이상	15%이상	2.4%이상
우대금리	은행우대	1.40%	1.35%	1.30%	1.35%	1.30%	1.25%	1.20%	1.15%	1.10%
	이차보전	1.40%	1.35%	1.30%	1.35%	1.30%	1.25%	0.50%	0.45%	0.40%
	합 계	2.80%	2.70%	2.60%	2.70%	2.60%	2.50%	1.70%	1.60%	1.5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 규모는 정책금리나 시중금리 변동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설정한 우대금리 수준에 의해 결정되며, 2025년 이 사업의 예산액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금융기관의 평균 합계 우대금리 2.55%p의 절반인 1.275%p으로, 대기업의 경우 상한 이차보전비율인 0.5%p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음.

그런데 이차보전사업은 정부가 시중금리와 정책적으로 설정한 금리 간 차이를 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의 경우 금융기관이 정한 우대 금리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예를 들어 중견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2.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중 50%인 1.25%p를 지원하고, 금융기관은 나머지 1.25%p를 부담하게 됨.

이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설정한 금리와 시중금리 간 차이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결정한 우대금리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액이 결정되는 구조로, 정책금융 상품의 우대금리 수준을 정부가 아니라 금융기관이 정하고 그에 따라 기금 지출 규모가 좌우되어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행 지원방식이 이차보전사업의 취지와 다소 괴리가 있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이차보전사업의 구조에 부합하게 집행되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기　타】

26.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해 시정요구 117건(중복 8건 포함)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시정 4건·주의 28건·제도개선 93건이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4	28	93	8	117
예비비	-	-	-	-	-	-	-
합계	-	-	4	28	93	8	117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4월말 기준 시정요구사항 117건에 대해 83건을 조치완료(조치율 70.9%)하고 34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117	83	70.9	34
예비비	-	-	-	-
합계	117	83	70.9	34

국회가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면서 채택한 부대의견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회계연도 결산 관련 부대의견은 아래와 같음.

[기후에너지환경부 관련 2025년도 예산안 등 부대의견]

구분	부대의견
2025년도 본예산	(35) 환경부는 건설된 대형보 시설의 어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한다.
	(36) 환경부는 마포구 상암동 광역자원회수 설치사업 추진 시 서울시의 주민의견 수렴 상황을 검토하여 2026년도 국고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을 추진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환경오염 및 건강영향 등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한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18) 산업통상자원부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환급사업의 집행 이후 국산·수입산 제품 비율, 환급 대상자 소득분포, 구매제품 브랜드별 국적 통계 등을 포함한 사후 성과 평가를 분석·공개한다.
	(20) 환경부는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한다.
2024회계연도 결산	(9)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양수시설 개선사업이 농민들에게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지역 주민에게 적극 홍보한다.
	(14)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는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주식 매각에서 최다액 출자자 승인 변경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불법·부당행위가 밝혀지거나 YTN 최다액 출자자가 변경 승인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필요한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
2026년도 본예산	(14)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 대상 사회복지시설 중 일부를 전력효율향상(사회복지시설전기화, 신규)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는바, 기존 예산에 따른 지원대상 시설 중에 누락되는 곳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협력한다.
	(43)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무탄소에너지 보증사업에서 바이오매스 등이 화력발전 존속에 기여할 우려가 있으므로 바이오매스 지원 사업에 대한 재검토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기 상 청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12억 400만원(13.6%)이 많은 100억 3,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7,800만원(15.9%)이 증가됨.[1)]

[2025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8,505	8,505	8,654	149	8,828	8,828	10,032	1,204	1,378
총수입	8,505	8,505	8,654	149	8,828	8,828	10,032	1,204	1,378

문의: 02-6788-5680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5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79억 1,700만원(△1.7%)이 적은 4,618억 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2억 1,200만원(2.7%)이 증가됨.

[2025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448,185	448,185	449,669	1,484	469,798	469,798	461,881	△7,917	12,212
총지출	448,185	448,185	449,669	1,484	469,798	469,798	461,881	△7,917	12,212

나.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88억 2,800만원으로, 100억 3,3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00억 3,200만원이 수납(수납률 100%)되고 1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5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8,828	8,828	-	8,828	10,033	10,032	1	-
합 계	8,828	8,828	-	8,828	10,033	10,032	1	-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721억 6,100만원으로, 4,618억 8,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8%)되고 15억 2,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87억 5,2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468,435	468,435	2,309	-	-	470,744	460,840	1,155	8,750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363	1,363	53	-	-	1,416	1,042	372	2
합 계	469,798	469,798	2,363	-	-	472,161	461,881	1,527	8,752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5회계연도 말 기준 기상청 자산은 전년 대비 76억 1,300만원이 증가한 1조 361억 6,000만원으로, 이는 유·무형자산이 102억 2,600만원 증가한 것 등에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152억 3,000만원 증가한 251억 9,100만원으로 차입부채 152억 2,600만원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76억 1,700만원이 감소한 1조 109억 6,900만원임.

2025회계연도 기상청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3,524억 7,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73억 8,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4,859억 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22억 8,700만원 증가하였음.

[2025회계연도 기상청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 (A)	2024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1,036,160	1,028,547	7,613	0.7
		금융자산	10,975	11,348	△373	△3.3
		유·무형자산	1,023,860	1,013,634	10,226	1.0
		기타자산	1,325	3,565	△2,240	△62.8
	부 채		25,191	9,961	15,230	152.9
		차입부채	25,185	9,959	15,226	152.9
		충당부채	-	-	-	-
		기타부채	6	2	4	200.0
	순자산		1,010,969	1,018,586	△7,617	△0.7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352,478	305,096	47,382	15.5
	재정운영순원가		485,905	433,618	52,287	12.1
	재정운영결과		485,905	433,618	52,287	12.1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2025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재정은 일반회계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 간 거래는 없음.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기상청은 기상재해에 안전한 국민, 기후위기에 준비된 국가를 2025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총 112개 세부사업에서 기상용슈퍼컴 운영,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등을 수행하였음.

2025년도 기상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로의 이·전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기상청은 비총액인건비 사업 예산의 이·전용을 통해 총액인건비 경비로 다수 집행하였는바, 향후 기상청은 적정 예산 편성을 통해 지침의 취지에 부합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기상청은 2025년 연내 슈퍼컴퓨터 6호기 도입을 계획하였으나, 4차례의 무응찰 유찰로 2026년 6월말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슈퍼컴퓨터 5호기의 운영기간이 연장된 상황이므로, 원활한 기상 예보를 위한 슈퍼컴퓨터 6호기 도입이 추가로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셋째, 도로기상관측장비의 장애 건수와 시간이 연례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기상청은 원활한 도로기상관측이 가능하도록 장비의 장애 발생 방지를 위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기상청 인건비: 총액인건비 관련 지침의 취지에 부합한 집행 필요

가. 개 요

‘기상청 인건비’는 기상청 본부·각 지방청 및 국립기상과학원 등 기관의 총액인건비를 말하는 것으로, 2025년 본예산 1,062억 6,900만원과 이·전용 46억 1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1,108억 7,000만원 중 1,105억 9,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7%)되고 2억 7,8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년도 기상청 인건비(총액인건비)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기상청 인건비 (총액인건비)	106,269	106,269	-	4,601	110,870	110,592	-	278	111,180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구체적으로, 기상청은 공무원 보수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해양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등 타 사업에서 본부인건비로 15억 600만원, 국립기상과학원 인건비로 5억 5,900만원, 항공기상청 인건비로 5억 3,100만원 등 총 46억 2,200만원을 총액인건비로 이·전용하고, 총액인건비에서 고용부담금으로 2,100만원을 이·전용하여 집행하였음.

[2025년도 기상청 인건비(총액인건비) 이·전용 내역[2)]]

(단위: 백만원)

~에서 (사업명)	~으로 (사업명)[3)]	이·전용액 합계
해양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국가태풍센터 운영,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기상레이더 운영, 지진관측망 확충 및 운영, 기후변화 감시·서비스 체계 구축 및 운영 등	본부 인건비 (총액인건비)	1,506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R&D), 국립기상과학원 기본경비(R&D)	국립기상과학원 인건비(총액인건비)	559
항공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항공항행 기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항공기상청 인건비(총액인건비)	531
수치예보 지원 및 활용 기술 개발(R&D), 기상청 청사시설 관리, 대국민 기상인식 제고, 기상산업 활성화 등	광주지방청 인건비(총액인건비)	518
지진관측망 확충 및 운영	대전지방청 인건비(총액인건비)	333
기상레이더 운영,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기상청 청사시설 관리	수도권기상청 인건비(총액인건비)	307
기상기후교육, 기상청 청사시설 관리, 기상과학관·박물관 운영	강원지방청 인건비(총액인건비)	253
국가레이더 통합 활용기술 개발(R&D), 지진화산업무 지원 및 활용 기술 개발(R&D), 대국민 기상인식 제고, 기후과학 국제협력 역량 강화 등	대구지방청 인건비(총액인건비)	216
기상위성 운영 및 활용 기술개발(R&D), 기후변화 감시·서비스 체계 구축 및 운영, 부산지방청 기본경비 등	부산지방청 인건비(총액인건비)	206
기상기후교육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인건비(총액인건비)	80
기상위성 운영 및 활용 기술개발(R&D), 기상청 청사시설 관리	국가기상위성센터 인건비(총액인건비)	53
수치예보 지원 및 활용 기술 개발(R&D)	수치모델링센터 인건비(총액인건비)	41
기상레이더 운영	기상레이더센터 인건비(총액인건비)	20
합계		4,622

자료: 기상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나. 검토의견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로의 이·전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기상청은 비총액인건비 사업 예산의 이·전용을 통해 총액인건비 경비로 다수 집행하였는바, 향후 기상청은 적정 예산 편성을 통해 지침의 취지에 부합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음.

2) 총액인건비에서 고용부담금으로 약 2,100만원을 이·전용하여 총 이·전용 규모는 46억 100만원임

3) 기상청은 모든 이·전용 사유로 기상청 공무원 보수 부족분을 제시하고 있음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함)은 ①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로 이·전용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② 수시직제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액인건비 증가소요는 원칙적으로 기확정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4)5)]

그러나 기상청은 ① 자산취득비, 일반연구비 등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로부터 총 73건(합계 20억 7,300만원)을 기상청 및 책임운영기관의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로 이·전용하여 집행하였음.

또한 기상청은 ② 2025년 6월 대전지방청 7급 인력 3명을 수시 직제 개정을 통해 증원하였고, 지진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에서 인건비 3억 3,300만원을 이·전용하여 충당하였는데, 이와 같은 이·전용을 통한 집행은 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4)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 Ⅲ.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방안
1. 예산분야 세부 운영방안
4)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로의 이·전용과 예비비의 사용 등을 통한 총액인건비 규모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① 각 기관은 총액인건비에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및 예산을 계획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건비 및 운영경비를 삭감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행기관은 수시직제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액인건비 증가 소요는 원칙적으로 기 확정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충당하여야 한다.
③ 다만, 환율인상, 긴요한 대규모 인력수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총액인건비에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거쳐 총액인건비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5) 총액인건비란 인건비 보수, 연가보상비 등을 의미함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 Ⅲ.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방안
1. 예산분야 세부 운영방안
<표1: 총액인건비 대상경비>

구분		세부내역
인건비	공통	인건비 세부사업(사업코드 : 100~149)으로 편성된 보수(110-01), 기타직 보수(110-02), 연가보상비(110-05)
운영경비	중앙행정기관	기본경비 세부사업(사업코드 : 200~249)으로 편성된 상용임금(110-03), 일용임금(110-04), 특근매식비(210-05), 일·숙직비(210-06), 복리후생비(210-12), 기타운영비(210-16), 교수보직경비(250-01), 직책수행경비(250-02), 특정업무경비(250-03), 고용부담금(320-09)
	책임운영기관	기본경비 세부사업(세부사업 코드 : 200~249)으로 편성된 인건비(100목) 중에서 상용임금(110-03), 일용임금(110-04), 물건비(200목) 중에서 시험연구비(210-13), 일반용역비(210-14), 관리용역비(210-15), 연구용역비(260목)를 제외한 비목, 고용부담금(320-09)

[2025년도 기상청 비총액인건비에서 총액인건비로 이·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목	이·전용 건수	이·전용 합계액
기상청	자산취득비(430-01)	5건	452
	일반연구비(260-01)	15건	381
	공사비(420-03)	5건	277
	일반용역비(210-14)	11건	266
	시험연구비(210-13)	2건	97
	국외업무여비(210-02)	4건	82
	관리용역비(210-15)	5건	59
	연구개발인건비(360-01)	1건	55
	일반수용비(210-01)	6건	40
	공공요금및제세(210-02)	3건	28
	국외교육여비(220-03)	5건	26
	감리비(420-04)	1건	23
	급식비(210-04)	1건	16
	정책연구비(260-02)	1건	12
	시설장비유지비(210-09)	2건	5
	국내여비(220-01)	1건	2
	임차료(210-07)	1건	2
책임운영기관	일반연구비(260-01)	1건	120
	관리연구비(210-15)	1건	80
	일반용역비(210-14)	1건	30
	자산취득비(430-01)	1건	20
합계		73건	2,073

자료: 기상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에 대해 기상청은 2025년 공무원 보수가 2024년에 비해 3.0%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예산액이 2024년 인건비 집행액인 1,062억원보다 1억원 증액된 1,063억원에 불과하고, 수시직제 개정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6)]

6) [최근 3년간 기상청 인건비(총액인건비) 편성 및 집행 내역]

(단위: 억원)

연도	본예산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전년도 집행액 대비 예산액 증감
2023	1,077	1,009	68	93.7%	-
2024	1,091	1,062	29	97.3%	82
2025	1,063	1,106	-	104.0%	1

자료: 기상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러나 지침은 공무원 보수 인상 및 수시직제 개정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를 이·전용 제한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상청은 실제 집행되는 인건비 소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 규모의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고, 총액인건비가 아닌 사업예산을 원칙적으로 총액인건비로 이·전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지침을 준수하여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일반회계】

〈세 출〉

2. 슈퍼컴 구축 및 유지관리: 도입 지연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슈퍼컴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은 기상예보 생산과 극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필수 자원인 국가기상슈퍼컴퓨터를 도입하여 운영·관리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20억 6,200만원 중 73억 8,000만원이 집행(집행률 61.2%)되고 46억 8,200만원이 불용되었음.[7)]

[2025년도 슈퍼컴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기상용슈퍼컴운영 (정보화)	27,546	27,546		1,500	29,046	23,210	714	5,122	20,421
슈퍼컴 구축 및 유지관리	12,065	12,065	-	△3	12,062	7,380	-	4,682	6,036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슈퍼컴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의 2025년도 임차료는 슈퍼컴퓨터 5호기 임차료 및 슈퍼컴퓨터 6호기 도입 임차료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현액은 78억 6,000만원임. 그 중 슈퍼컴퓨터 6호기 도입을 위한 임차료 예산현액 45억 4,2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음.

7) 일반회계-기상용슈퍼컴운영(정보화)(1239-502)(관측기반국)

[2025년도 슈퍼컴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의 임차료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임차료	7,860	7,860	-	-	7,860	3,318	-	4,542	1,977
슈퍼컴퓨터 5호기	3,271	3,271	-	47	3,318	3,318	-	-	-
슈퍼컴퓨터 6호기	4,589	4,589	-	△47	4,542	-	-	4,542	1,977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기상청은 2024년 8월 14일 슈퍼컴퓨터 6호기 도입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2025년 12월에 슈퍼컴퓨터 초기분 및 최종분을 도입하여 2030년까지 임차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918억원[8]을 기준으로 2025년 임차료 예산 45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음.

[2025년 기준 슈퍼컴퓨터 6호기 도입 계획]

(단위: 억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슈퍼컴 6호기 임차료 (2025년 예산 편성시)	회차	1회	4회	4회	4회	4회	3회	20회
	예산	45.9	183.6	183.6	183.6	183.6	137.7	918

자료: 기상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런데 기상청은 2025년 중 슈퍼컴퓨터 6호기의 도입 계약이 체결되지 않자 슈퍼컴퓨터 6호기 설치 일정을 순연하고, 이에 따라 2026년에는 초기분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슈퍼컴퓨터 6호기 초기분 도입 임차료 예산으로 19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후 기상청은 2026년 4월 기획예산처와 중기재정심의(2026년~2030년)를 거쳤고, 슈퍼컴 6호기 도입사업의 총사업비가 1,858억 3,000만원으로 증액(약 940억원 증액)되었음.

8) 총사업비 918억원 = 슈퍼컴퓨터 전체 물품대금 814억원(초기분 163억원 + 최종분 651억원)·리스이자(5.2%)

[2026년 기준 슈퍼컴퓨터 6호기 도입 계획]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6호기 리스료 (2026년 기준)	초기분	19.8	50.5	67.4	67.4	67.4	67.4	-	339.9
	최종분	-	-	277.2	369.5	369.5	369.5	89.5	1,475.2
	관·부가세	-	16.2	27	-	-	-	-	33.2
	합계	19.8	66.7	371.6	436.9	436.9	436.9	89.5	1,858.3

자료: 기상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나. 검토의견

기상청은 2025년 연내 슈퍼컴퓨터 6호기 도입을 계획하였으나, 4차례의 무응찰 유찰로 2026년 6월말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슈퍼컴퓨터 5호기의 운영기간이 연장된 상황이므로, 원활한 기상 예보를 위한 슈퍼컴퓨터 6호기 도입이 추가로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기상청은 2024년 8월 14일 슈퍼컴퓨터 6호기 도입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2025년 12월까지 연내 슈퍼컴퓨터 6호기를 도입하기 위한 임차료 예산액 45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음.

그런데 2025년 슈퍼컴퓨터 6호기 도입 임차료 45억 8,900만원은 4,700만원이 슈퍼컴퓨터 5호기 임차료로 조정되어 집행되었을 뿐, 그 예산현액 45억 4,200만원은 전액 불용되었음.

이는 기상청이 2025년 슈퍼컴퓨터 6호기 도입을 위해 2025년 9월부터 총 4차례의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메모리 가격 급등과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모두 무응찰 유찰되면서 연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임.

[슈퍼컴퓨터 6호기 계약 공고 현황]

공고명	공고일	개찰일	현황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6호기 구축) 조달계약	2025.9.18.	2025.10.14.	유찰(무응찰)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6호기 구축) 조달계약	2025.10.15.	2025.11.04.	유찰(무응찰)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6호기 구축) 조달계약	2025.12.18.	2026.1.13.	유찰(무응찰)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6호기 구축) 조달계약	2026.1.14.	2026.1.27.	유찰(무응찰)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6호기 구축) 조달계약	2026.6.16.		

자료: 조달청 나라장터

슈퍼컴퓨터 6호기는 2026년 6월 제5차 입찰공고를 한 상황으로, 현재(2026년 6월)까지도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상황임. 이로 인해 당초 2027년 12월까지 운영될 계획이었던 슈퍼컴퓨터 5호기의 운영 기간이 2029년 6월까지로 1년 6개월 연장되는 등 기존 장비의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슈퍼컴퓨터는 수집된 방대한 기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의 날씨와 장기적인 기후 변화 등을 예측하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도입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안정적인 예보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상청은 슈퍼컴퓨터 6호기의 도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도로기상관측망 운영: 도로기상관측장비의 장애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도로기상관측망 운영’ 사업은 도로 살얼음·안개 등 도로 위험기상 관측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로기상관측망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69억 5,6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9)]

[2025년도 도로기상관측망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24,876	24,876	1,555	△6	26,425	26,329	-	96	20,607
도로기상관측망 운영	6,285	6,285	671	-	6,956	6,956	-	-	3,953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도로기상관측망 운영 사업은 도로기상관측장비 설치사업 및 도로기상관측장비 운영 등 사업[10)]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도 도로기상관측장비 설치 사업은 도로기상관측장비 총 107개소[11)]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현액 54억 4,7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고, 도로기상관측장비 운영 등 사업은 예산현액 13억 8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

9) 일반회계-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1231-301)(관측기반국)

10) 도로기상관측장비 운영 등 사업: 도로기상장비 유지관리, 보험료 및 통신비 등

11) 거점관측소 6개소(개소당 1억 4,400만원), 기본관측소 29개소(개소당 6,400만원), 안개관측 39개소(개소당 3,100만원), 결빙관측 33개소(개소당 4,600만원)

[2025년도 도로기상관측망 운영 세부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도로기상관측망 운영	6,285	6,285	671	-	6,956	6,956	-	-	3,953
도로기상관측장비 설치	5,447	5,447	-	-	5,447	5,447	-	-	
도로기상관측장비 운영 등	838	838	671	-	1,509	1,509	-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도로기상관측장비의 장애 건수와 시간이 연례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기상청은 원활한 도로기상관측이 가능하도록 장비의 장애 발생 방지를 위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기상청은 2022년부터 도로의 기상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로기상관측장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비 운용 지점 수도 2023년 55곳, 2024년 259곳, 2025년 366곳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도로기상관측장비의 장애 건수 및 시간도 연례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구체적으로 2023년 장애 건수는 16건, 시간은 277시간이었으나 2024년에는 장애 건수가 전년 대비 20건 증가한 36건, 시간은 전년 대비 1,080시간 증가한 1,357시간이고, 2025년에는 장애 건수가 전년 대비 72건 증가한 108건, 시간은 전년 대비 3,023시간 증가한 4,380시간임.

또한 도로기상관측장비 지점당 평균 장애 발생 시간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2023년에는 지점당 평균 장애 발생 시간이 17시간 19분이었으나 2024년에는 전년 대비 20시간 24분이 증가한 37시간 43분, 2025년 지점당 평균 장애 발생 시간은 전년 대비 2시간 50분 증가한 40시간 33분에 달함.

[최근 4년간 도로기상관측장비 장애 발생 현황]

(단위: 곳, 건, 시간)

구분	지점 수	총 장애 건수	총 장애 시간	평균 장애 시간	전년도 대비 증가한 평균 장애 시간
2022	24	-	-	-	-
2023	55	16	277:00	17:19	17:19
2024	259	36	1,357:42	37:43	20:24
2025	366	108	4,380:03	40:33	2:50

자료: 기상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에 대해 기상청은 고속도로변 등 현장 접근이 제한적인 지역에 도로기상관측장비의 설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장애 건수 및 시간이 증가하였다는 입장이나, 도로기상관측장비의 설치 위치는 장비 도입 초기부터 계획된 사항인 만큼, 이러한 환경적 요인을 전제로 한 유지·관리 방안이 사전에 충분히 마련될 필요가 있었음.

도로기상관측장비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 풍향·풍속 및 온도 등 도로와 관련된 주요 기상정보가 장시간 측정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연례적인 장애 건수 및 시간의 증가는 기상 관측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기상청은 도로기상관측장비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고, 장애 발생 후에도 조속한 복구 체계를 마련하여 원활한 도로기상의 관측이 가능하도록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4.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실제 운영 현황을 반영한 공공요금 편성 필요

가. 개 요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은 다양한 관측환경에서도 연속적인 고품질의 관측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상·지진장비의 내구성·정확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증시험 전문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9억 4,200만원 중 29억 3,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6%)되고 1,100만원이 불용되었음.[12)]

[2025년도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4,243	4,243	324	△1,625	2,942	2,931	-	11	2,833
공공요금 및 제세	1,801	1,801	-	△1,551	251	246	-	5	36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는 풍동시험장비 및 강수량검정장비 등 총 91개의 장비 인증을 위한 측정 장비를 운영하고 있음.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의 전기요금 등을 집행하기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는 2025년 예산액 18억 100만원 중 15억 5,100만원이 이·전용(감) 및 조정(감)되었고,[13)] 2억 4,600만원(예산액 대비 집행률 13.6%)이 집행되고 500만원이 불용되었음.[14)]

12) 일반회계-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1231-304)(관측기반국)

13) 이전용액 15억 5,100만원 중 15억 2,000만원은 슈퍼컴퓨터 공공요금(기상용슈퍼컴 운영(정보화))으로, 2,400만원은 본부 인건비(총액인건비)로, 400만원은 인증센터 차량임차료로, 100만원은 인증센터 수리공사비로 이·전용 및 조정하여 집행하였음.

14) 2026년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공공요금 및 제세 비목이 아닌 법정민간대행사업비(26년 예산 21억 4,700만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대행)에 포함하여 편성하였음

나. 검토의견

기상청은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에 실제 도입된 풍동장비 설비용량 및 전력사용량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당초 장비 도입 및 운영계획에 따라 공공요금 및 제세를 편성하여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향후 실제 집행 소요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기상청은 기상측기 검정을 위한 전문시설로서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를 2023년 9월 준공하였고, 2023년 11월부터 장비를 도입하여 2024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인증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를 집행하기 위한 예산액이 2025년 18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그중 2억 4,600만원(13.6%)만이 집행되었음.

이는 당초 센터 운용 계획에 따른 장비 도입 계획 등에 기반하여 공공요금 및 제세를 편성하였으나, 실제 도입된 풍동장비의 용량 및 전력사용량이 적어 집행 과정에서 실소요량이 적었기 때문임.

구체적으로, 당초 계획에서는 풍동장비 2기(각 1,000kW, 총 2,000kW)와 기타 장비(750kW)의 설비용량을 합산한 총 2,750kW를 기준으로 전력사용량을 산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월 808,500kWh, 연간 총 9,702,000kWh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여 전기요금 17억 5,100만원과 수도요금 등 5,000만원을 포함한 총 18억 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풍동장비로 945kW 및 445kW 장비가 각 1기씩 도입되어 풍동장비 설비용량이 총 1,390kW에 그쳤고, 기타 장비(750kW)를 포함한 전체 설비용량도 2,140kW 수준에 불과함.

또한 실제 장비 운용시간이 당초 예상보다 적어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75,176kWh, 연간 총 전력사용량은 902,121kWh에 그쳤고, 이에 따라 전기요금 2억 3,500만원과 수도요금 등 1,100만원을 포함한 총 2억 4,600만원의 공공요금만이 집행되었음.

[2025년도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의 당초 계획과 실제 운영[15]]

(단위: kWh, 만원)

	전력사용량			전기요금		
	당초 계획(A)	실제 운영(B)	차이(B-A)	당초 계획(A)[16]	실제 운영(B)	차이(B-A)
1월	808,500	51,672	△756,828	15,771	1,645	△14,126
2월	808,500	46,464	△762,036	15,771	1,543	△14,228
3월	808,500	44,760	△763,740	12,568	1,532	△11,036
4월	808,500	44,472	△764,028	12,568	1,384	△11,184
5월	808,500	51,480	△757,020	12,568	1,487	△11,081
6월	808,500	49,224	△759,276	16,392	1,465	△14,927
7월	808,500	70,872	△737,628	16,392	2,051	△14,341
8월	808,500	113,688	△694,812	16,392	2,807	△13,585
9월	808,500	117,072	△691,428	12,568	2,791	△9,777
10월	808,500	119,577	△688,923	12,568	2,436	△10,132
11월	808,500	102,264	△706,236	15,771	2,131	△13,640
12월	808,500	90,576	△717,924	15,771	2,275	△13,496
합계	9,702,000	902,121	△8,799,879	175,102	23,548	△151,554

자료: 기상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또한 풍동장비의 경우 계약일이 2023년 7월 7일이고, 센터도 2024년 4월 1일부터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2025년 예산 편성시 풍동장비 설비용량과 실제 전력사용량 현황 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기상청은 향후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실제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15) 그 외 당초 계획상 근무인원 70명 대비 실제 근무인원 28명 등 인원 차이로 인하여 수도요금은 당초 계획 1,200만원 대비 실제 집행은 300만원(△900만원), 도시가스요금은 당초 계획 1,400만원 대비 실제 집행은 260만원(△1,140만원)에 불과함.

16)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5. 공공요금 다. 전기요금에 따라 봄·가을철(3~5, 9~10월), 여름철(6~8월), 겨울철(11~2월) 요금 기준이 다름

5.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기상청)(R&D): 위성개발계획 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기상청)(R&D)’ 사업은 위험기상 및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예측을 강화하기 위한 세 번째 정지궤도 기상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을 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95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17)]

[2025년도 정지궤도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기상청)(R&D)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 (천리안위성 5호) 개발(기상청)(R&D)	19,500	19,500	-	-	19,500	19,500	-	-	111,058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100% 출연하는 방식으로 집행되며, ① 시스템/본체 ② 기상탑재체 ③ 우주기상탑재체를 각각 개발하는 사업임. 2025년 ① 시스템/본체 예산액 63억원 ② 기상탑재체 예산액 120억원 및 ③ 우주기상탑재체 예산액 12억원이 각각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

[2025년 정지궤도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의 세부 과제 결산]

(단위: 백만원)

	예산액	집행액	2026년도 예산액
시스템/본체	6,300	6,300	25,100
기상탑재체	12,000	12,000	82,958
우주기상탑재체	1,200	1,200	3,000

자료: 기상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17) 일반회계-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기상청)(R&D)(3137-406)(국가기상위성센터)

나. 검토의견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에서 기상탑재체 개발 관련 계약이 당초 계획보다 7개월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물품 인도 시기도 9개월 이상 지연된 상황이므로, 기상청은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계획대로 진행되어 2031년 천리안위성 5호의 발사가 가능하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은 ① 시스템/본체 ② 기상탑재체 ③ 우주기상탑재체를 각각 개발한 후 2030년 중 각 개발된 장비들을 총조립하여 천리안위성 5호를 완성한 후 2031년 중 발사할 계획으로 추진되었음.

그런데 기상탑재체 개발을 위한 납품 계약을 당초 2025년 5월에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2025년 12월 23일에서야 계약이 체결되었음.

이는 기상탑재체 계약 체결을 위한 해외 제작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비용 등과 관련한 이견이 있어 계약이 지연된 것으로, 당초 계획보다 약 7개월 늦게 계약이 체결된 것임.

당초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 계획 당시 기상탑재체를 2029년 4분기에 인도받은 후 위성체를 총조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계약 체결이 지연됨에 따라 계획보다 약 9개월 지연된 2030년 9월에 기상탑재체를 인도받을 예정으로 위성체 조립도 늦어질 것으로 보임.

[천리안 5호 기상탑재체 사업의 당초 계획과 실제 집행 현황]

	당초 계획	변경된 집행	지연기간
계약 체결	2025년 5월	2025년 12월 23일	약 7개월
기상탑재체 인도예정일	2029년 4분기	2030년 9월	약 9개월

자료: 기상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 사업은 ① 시스템/본체 ② 기상탑재체 ③ 우주기상탑재체 개발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각 과제의 결과물을 합쳐 위성체를 완성하는 사업이므로, 한 과제가 지연될 경우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 전체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18)]

따라서 기상청은 사업이 더 지연되지 않고 계획대로 2031년 천리안위성 5호 발사가 가능하도록 철저하게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18) 이에 대해 기상청은 일정 단축 등을 통해 2031년 천리안위성 5호 발사를 위한 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임

6. 항공항행 기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실제 집행 상황을 반영한 항공기 관측자료 수집비용 편성 필요

가. 개 요

‘항공항행 기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업은 공항 기상관서 정보시스템을 유지 및 개선하고, 수요자를 대상으로 의사결정을 위한 기상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4억 7,800만원 중 14억 4,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6%)되고 3,600만원이 불용되었음.[19)]

[2025년도 항공항행 기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항공항행 기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1,520	1,520	-	△42	1,478	1,442	-	36	1,482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항공항행 기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는 항공기 관측자료 수집, 네트워크 비용 등으로 편성되며, 2025년도 항공기 관측자료 수집은 예산액 1억 300만원 중 3,500만원이 집행(집행률 34.3%)되고 6,800만원이 이·전용 및 조정되었고, 네트워크 비용 등은 예산액 5,400만원 중 5,000만원이 집행(집행률 92.6%)되고 400만원이 이·전용(감) 및 조정(감)되었음.[20)]

19) 일반회계-항공항행 기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4132-500)(항공기상청)

20) 항공항행 기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이·전용 등은 모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이루어졌는데, 공공요금및제세 총 이·전용 등 7,200만원 중 3,000만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타 비목(일반용역비 등)으로 조정되었고, 4,200만원은 항공기상청 인건비로 전용되어 집행되었음.

[2025년도 항공항행 기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공공요금 및 제세	157	157	-	△72	85	85	-	-	157
항공기 관측자료 수집	103	103	-	△68	35	35	-	-	103
네트워크 비용 등	54	54	-	△4	50	50	-	-	54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기상청은 매년 항공기 관측자료 수집비용 예산액을 1억 320만원으로 동일하게 편성하고 있는데, 항공기 관측자료 데이터 수신 실적 저조로 인하여 연례적으로 집행이 저조하므로, 향후 실제 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기상청은 항공기에 탑재된 관측장비를 통해 생산된 고도별 기상관측값(기온, 풍향·풍속 등)이 포함된 텍스트 형식의 자료를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수집하고 있고, 이를 항공위험기상 감시, 공항 급변풍 예·경보 지원 등에 활용하고 있음.

그런데 기상청은 매년 항공기 관측자료 수집 예산액을 1억 320만원으로 동일하게 편성하고 있으나, 2023년에는 5,814만원(예산액 대비 56.3%), 2024년에는 3,420만원(예산액 대비 33.1%), 2025년에는 3,545만원(예산액 대비 34.3%)만이 집행되었음.

이는 항공기 관측자료 수집비용이 관측자료 수신 데이터 양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수신 데이터의 양이 2023년 25.81MB, 2024년 16.68MB, 2025년 16.64MB로 점점 감소하고 있기 때문임.

[최근 3년간 항공기 관측자료 수집비용 예산 및 결산]

(단위: 만원)

연도	추계내역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수신 데이터 양[21]
2023년	항공기 기상 관측자료 수신료	10,320	5,814	56.3	25.81MB
2024년		10,320	3,420	33.1	16.68MB
2025년		10,320	3,545	34.3	16.64MB

자료: 기상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또한 이러한 관측자료 수신 데이터 양의 감소추세는 항공사의 항공기 관측장비가 감소한 데 기인하는데, 2022년 9대였던 항공기 관측장비 구비 항공기 수가 2023년에 2대 감소되어 7대가 되었는데, 2024년에도 2대가 추가 감소되어 5대가 되었고, 이후 2026년 6월말 현재까지 5대만이 운용되고 있음.

[최근 4년간 항공기 관측장비 운용 항공기 수]

(단위: 대)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항공기 관측 장비 현황 (운용 항공기수)	9	7	5	5
전년대비 변동	-	△2	△2	-

자료: 기상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따라서 기상청은 항공기 관측자료 수집비용 예산 편성시 기존 예산액을 연례적으로 동일하게 편성하는 것에서 벗어나 실제 데이터 수집 추세 및 항공기 관측장비 운용 항공기 수 등을 고려하여 실소요에 맞게 편성할 필요가 있음.

21) 2025년의 경우 일 평균 수신건수는 93건으로, 1건당 데이터 용량은 약 0.48KB임

【기　타】

7.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기상청에 대해 시정요구 11건(중복 1건 포함)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주의 2건·제도개선 10건이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	2	10	1	11
합계	-	-	-	2	10	1	11

기상청은 시정요구사항 11건에 대해 10건을 조치완료(조치율 90.9%)하고 1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11	10	90.9	1
합계	11	10	90.9	1

고용노동부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1조 7,380억 6,800만원(△5.0%)이 적은 33조 1억 2,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조 2,578억 4,300만원(4.0%)이 증가함.[1)]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342,259	342,259	212,561	△129,698	347,219	347,219	149,090	△198,129	△63,471
기 금	30,951,947	30,951,947	31,529,722	577,775	34,390,974	34,390,974	32,851,035	△1,539,939	1,321,314
총수입	31,294,206.0	31,294,206.0	31,742,283	448,077	34,738,193.0	34,738,193.0	33,000,125	△1,738,068	1,257,843

문의: 02-6788-5688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6,971억 8,100만원(△1.8%)이 적은 37조 3,548억 7,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조 8,080억 1,400만원(7.5%)이 증가함.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5,815,148	5,815,148	5,712,100	△103,048	5,754,924	6,072,168	5,862,492	△209,676	150,392
기 금	27,867,377	29,409,720	28,834,760	△574,960	29,590,265	31,979,887	31,492,382	△487,505	2,657,622
총지출	33,682,525	35,224,868	34,546,860	△678,008	35,345,189	38,052,055	37,354,874	△697,181	2,808,014

나.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3,472억 1,900만원으로, 3,565억 1,5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490억 9,000만원이 수납(수납률 41.8%)되고 2,052억 5,700만원이 미수납되어 21억 6,8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325,397	325,397	-	325,397	315,408	119,666	193,573	2,168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	-	-	562	94	467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1,822	21,822	-	21,822	40,536	29,319	11,216	-
지역지원계정	19,293	19,293	-	19,293	39,582	28,366	11,216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2,529	2,529		2,529	954	954	-	-
합 계	347,219	347,219	-	347,219	356,515	149,090	205,257	2,168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6조 6,456억 5,100만원으로, 6조 4,338억 7,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7%)되고 39억 5,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078억 2,5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5,718,293	5,960,488	2,623	△577	55	5,962,589	5,763,395	3,953	195,24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86,620	131,669	-	-	-	131,669	131,660	-	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2,902	152,902	-	-	-	152,902	151,432	-	1,470
지역지원계정	107,864	137,864	-	-	-	137,864	136,394	-	1,470
제주특별자치도계정	15,038	15,038	-	-	-	15,038	15,038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398,491	398,491	-	-	-	398,491	387,386	-	11,105
합 계	6,326,306	6,643,550	2,623	△577	55	6,645,651	6,433,874	3,953	207,825

주) 총계 기준

다. 기금 결산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54조 8,035억 8,000만원으로, 54조 7,199억 6,2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46조 4,671억 4,500만원이 수납(수납률 84.9%)되고 7조 8,921억 4,800만원은 미수납되어 3,604억 6,0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				
고용보험기금	27,695,504	27,695,504	25,847,412	23,713,281	2,056,539	77,592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기금	23,418,118	23,418,118	20,416,883	18,902,515	1,410,808	103,560
임금채권보장기금	914,227	914,227	5,324,491	956,723	4,197,720	170,04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2,182,936	2,182,936	2,402,068	2,366,359	32,784	2,926
근로복지진흥기금	566,123	592,795	729,108	528,269	194,296	6,334
합 계	54,776,908	54,803,580	54,719,962	46,467,145	7,892,148	360,460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54조 8,036억 2,500만원으로, 46조 4,671억 4,500만원이 지출(집행률 84.8%)되고 3억 3,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4,883억 7,0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고용보험기금	27,695,504	27,695,504	21	27,695,525	23,713,281	148	412,071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기금	23,418,118	23,418,118	24	23,418,142	18,902,515	172	23,538
임금채권보장기금	914,227	914,227	0	914,227	956,723	12	32,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2,182,936	2,182,936	0	2,182,936	2,366,359	0	113
근로복지진흥기금	566,123	592,795	0	592,795	528,269	0	20,648
합 계	54,776,908	54,803,580	45	54,803,625	46,467,145	332	488,370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5회계연도 말 기준 고용노동부 자산은 전년 대비 3조 7,339억 6,700만원이 증가한 53조 4,323억 4,600만원으로, 이는 주로 금융자산이 3조 6,844억 6,900만원 증가하고, 유무형자산이 439억 7,800만원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2조 5,091억 8,600만원 증가한 44조 5,425억 8,600만원으로, 이는 차입부채가 1조 1,843억 5,900만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부채와 충당부채가 각각 3조 6,865억 1,700만원, 70억 2,800만원 증가한 데 기인함.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조 2,247억 8,100만원이 증가한 8조 8,897억 6,000만원임.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38조 5,885억 9,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조 9,363억 9,1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8조 2,124억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조 8,161억 4,300만원 증가하였음.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 (A)	2024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53,432,346	49,698,379	3,733,967	7.5
		금융자산	49,954,207	46,269,738	3,684,469	8.0
		유무형자산	3,452,783	3,408,805	43,978	1.3
		기타자산	25,356	19,836	5,520	27.8
	부 채		44,542,586	42,033,400	2,509,186	6.0
		차입부채	8,211,705	9,396,064	△1,184,359	△12.6
		충당부채	41,146	34,118	7,028	20.6
		기타부채	36,289,734	32,603,217	3,686,517	11.3
	순자산		8,889,760	7,664,979	1,224,781	16.0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38,588,597	33,652,207	4,936,391	14.7
	재정운영순원가		38,252,783	33,535,379	4,717,404	14.1
	재정운영결과		8,212,420	4,396,277	3,816,143	8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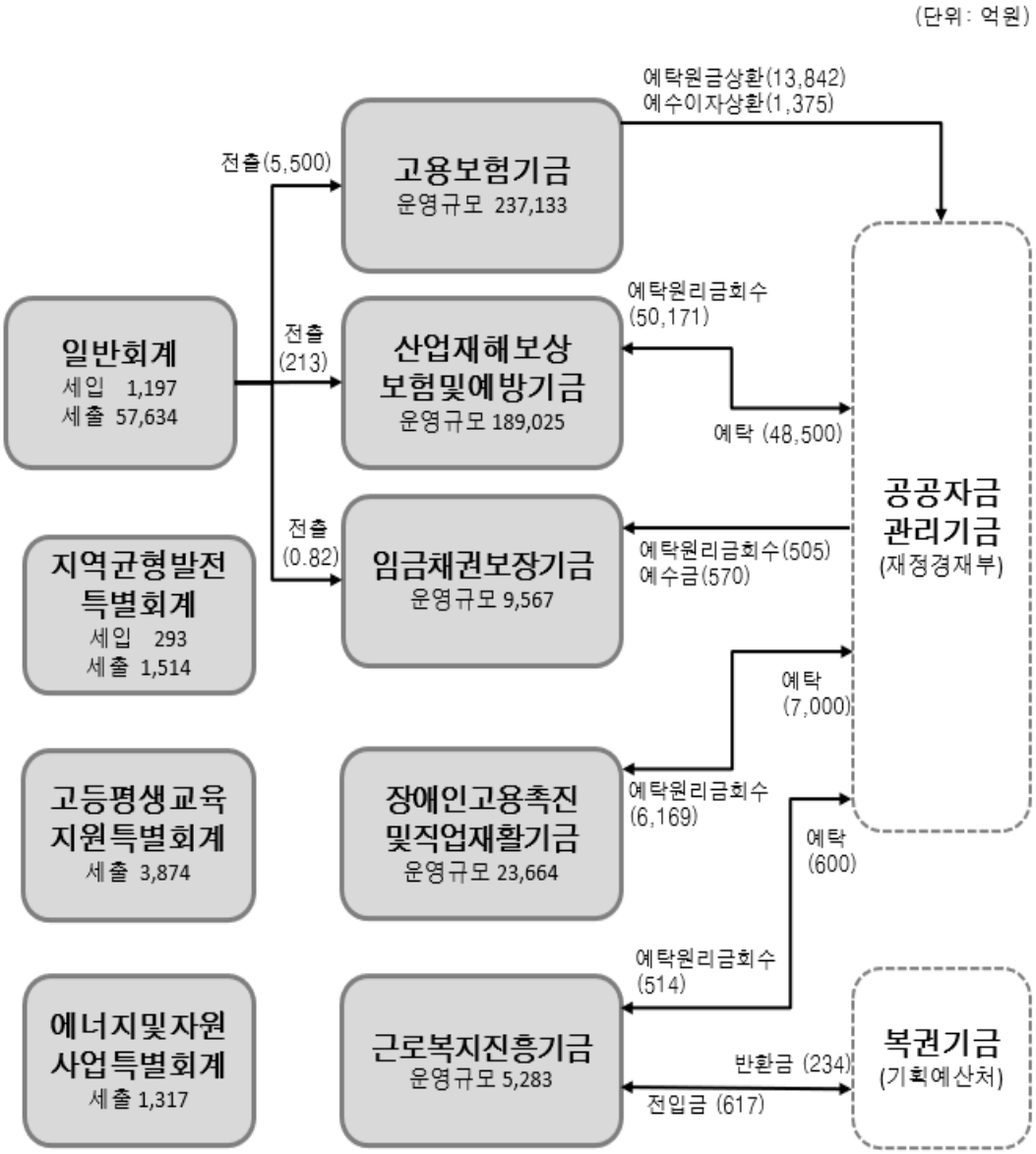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재정은 일반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 4개 회계와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5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 5,500억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213억원,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8,200만원이 각각 전출되었음.

다음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고용보험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수원금 1조 3,842억원과 예수이자 1,375억원을 상환하였음.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원금 4조 8,501억원과 예탁이자 1,670억원을 받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 4조 8,500억원을 예탁하였음.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원금 500억원, 예탁이자 5억원 및 예수금 570억원을 받았음.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원금 6,000억원, 예탁이자 169억원을 받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 7,000억원을 예탁하였음.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원금 500억원, 예탁이자 14억원을 받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 600억원을 예탁하였으며, 복권기금으로부터 617억원을 전입받고, 복권기금에 234억원을 반환하였음.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재정흐름도]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노동약자 보호 및 이중구조 개선, 근로자 생명과 안전 보호, 노동존중사회 기반 마련, 고용안전망 고도화 및 현장형 인재 신속 공급, 청년·중장년·장애인·외국인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총 127개 세부사업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일자리창출지원, 모성보호육아지원, 클린사업장조성지원 등의 예산을 집행하였음.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2025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까지 되었으나, 본예산조차 전액 집행하지 못해 726억 700만원의 불용액을 남겼는바, 향후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예산 추계를 위해 기존 참여자의 지급 현황과 불용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2025년 제2회 추경 시 2유형 중 청년 추가지원을 위해 1만 명분을 추가로 편성하여 연내 7만 8,000명 지원을 목표로 하였으나, 실제 2유형 수급자격 인정자 수가 5만 6,831명에 불과하여 성과가 저조하므로, 향후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셋째, 모성보호사업 확대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증가해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넷째, 대지급금 회수 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체불청산융자금의 경우 상환이 제때 이루어지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채권 분석을 통해 회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회수를 추진하는 등 미상환 융자금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산재보험급여 사업의 경우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신청 후 승인까지의 기간이 증가하여 처리가 지연된 측면이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산재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해 산재승인 처리 신속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여섯째, 장애인 고용촉진 직업재활기금의 경우 최근 5년간 여유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장애인고용률이 2022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여유자금의 활용을 통한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집행 저조 등

가. 개 요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급해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7,914억 2,600만원 중 7,188억 1,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0.8%)되고, 726억 700만원이 불용되었음.[2)]

[2025년도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청년일자리창출지원	777,181	802,597	-	△11,171	791,426	718,819	-	72,607	925,126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777,181	802,597	-	△11,171	791,426	718,819	-	72,607	925,126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사업주 720만원, 청년근로자 48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임.

2024년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하나의 유형으로 운영되었으나,

2) 일반회계-청년일자리창출지원(1043-301)(청년고용정책관)

2025년은 ‘유형1’(사업주 지급)과 ‘유형2’(빈일자리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 및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로 구분하여 운영함.

① ‘유형1’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이고, ② ‘유형2’는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근로자’에게 480만원을 지원하는 것임.[3)]

나. 검토의견

첫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2025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54억원을 증액했으나 본예산조차 다 집행하지 못하고 726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향후 정확한 예산 추계를 위해 기존 참여자들의 지급 현황과 불용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2022년부터 추진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집행률은 2022년 43.0%, 2023년 80.9%, 2024년 80.3%로, 매년 상당 규모의 불용이 발생하였음. 2025년 집행률은 90.8%로 2024년 대비 개선(약 10%p 증가)되었으나, 여전히 예산현액 7,914억 2,600만원 중 7,188억 1,900만원만 집행되어 726억 7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2~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2년	542,820	542,769	-	-	-	542,769	233,321	43.0	43.0	-	309,448
2023년	889,078	889,078	-	-	-	889,078	719,429	80.9	80.9	-	169,649
2024년	607,780	607,780	-	△1,500	-	606,280	487,003	80.1	80.3	-	119,277
2025년	777,181	802,597	-	△11,171	-	791,426	718,819	89.6	90.8	-	72,607

자료: 고용노동부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5년 제1회 추경에서 총 254억 1,600만원 증액편성되었는데 이는 ① 당초 지원대상 청년에서 제외되었던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지원대상에 다시 포함하는 사업대상자 확대와 ② ‘유형2’의 ‘6개월 및 12개월 근속인센티브 신설’로 인한 것임.

한편 고용노동부는 경기 불확실성 등에 의해 기업이 신규 채용을 유보하고, 수시·경력직 중심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청년들은 구직난을 겪는 반면,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예산 254억 1,600만원을 증액함.

이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목표 인원을 10만명에서 10.7만명으로 확대하고, 청년들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과 단계적인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근속 인센티브 지급 주기를 앞당기기 위한 것이었음(기존 18·24개월 차 각 240만원 지급 → 6·12·18·24개월 차 각 120만원 지급).

그러나 이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증액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편성 당시의 금액도 모두 집행하지 못하였음.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 주요내용]

구 분	2024년		2025년 본예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유형	단일 유형		Ⅰ유형	Ⅱ유형(신설)		Ⅰ유형	Ⅱ유형(신설)
지원 업종	모든 업종		모든 업종	빈일자리 업종		좌동	좌동
지원대상청년	취업애로청년		취업애로 청년	모든 청년		좌동	좌동
			* 대학 졸업예정자 제외			* 대학 졸업예정자 포함	
사업주 지원 (청년 1인당)	720만원 (60만원/月) + 2년차 480만원	⇒	720만원 (1년만 지원)		⇒	좌동	
청년지원 (장기근속 인센티브)	-		-	480만원 (18·24개월차 각 240만원)		-	480만원 (6·12·18·24개월차 각 120만원)
목표인원	12.5만명		55,000명	45,000명		58,850명	48,150명
			10만명			10.7만명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예산은 2025년 채용자에 대한 신규 지원금과 2023·2024년 채용자에 대한 잔여 지원금으로 구성되는데,[4] 추가경정예

4)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한 2025년 채용자에 대한 지원금은 기업(1년간 지원)의 경우, 2025년부터 최대 2027년까지 집행되고 청년(2년간 지원)의 경우, 최대 2028년까지 집행됨.

산을 통해 확대한 2025년 신규 목표 인원(107,000명, 추가경정예산으로 7,000명 확대)을 모두 달성하여 추경 증액분을 포함한 신규 지원금은 모두 집행 완료되었다는 입장이고,

전산시스템 상 사업연도에 따라 잔여 지원금과 신규 지원금 집행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2025년 Ⅰ유형, Ⅱ유형은 모두 신규 지원금 중 비목 상 기타보전금으로 동일하게 분류되고, 동일한 수준(기업지원금 1년 최대 720만원)으로 집행되어 유형별 집행액은 현재 전산시스템 상 구분하여 추출하기 어렵다고 설명함.

[2023년~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실집행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23년 (단일유형)	2024년 (단일유형)	2025년	
				(Ⅰ유형)	(Ⅱ유형)
인 원	목표(A)	90,000	125,000	58,850	48,150
	실적(B)	88,649	101,519	65,130	42,053
	차이(A-B)	1,351	23,481	△6,280	6,097
예 산	예산(A)	889,078	607,780	720,428	82,169
	집행(B)	719,429	487,003	718,819	
	차이(A-B)	169,649	120,777	83,778	

자료: 고용노동부

다만 2023년·2024년 채용자에 대한 잔여 지원금에서 불용이 발생하였고, 불용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이 사업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인위적 감원 등 지원 제외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데, 지원 제외요건 해당 기업 발생 등의 사유로 예산 추계 시 활용한 고용유지율과 실제 지급 인원 비율에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설명함.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2025년 신규 목표 인원 107,000명을 모두 달성했다고 설명하였으나, 유형별로 보면 Ⅰ유형은 목표 대비 6,280명을 초과 달성하였고, Ⅱ유형은 목표 대비 6,097명이 미달성된 점을 고려할 때, 유형별로 분리하여 설계한 당초 정책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아울러 2022년부터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상

(2025년 12월에 채용된 청년에 대한 3회차 기업지원금(채용일 기준 고용유지 12개월 차)은 2026년 12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신청할 수 있고, 4회차 청년 근속 인센티브(채용일 기준 근속 24개월 차)는 2027년 12월부터 2028년 2월까지 신청할 수 있음)

마찬가지로, 2023·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각각 참여한 2023·2024년 채용자에 대한 지원금은 2025년에도 잔여 지원금으로써 집행될 수 있음

당액의 불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확한 예산 추계를 위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임.

특히 고용노동부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2023·2024년 잔여 지원금의 집행 소요를 정확히 파악했으면 예산 증액 없이 제도개선이 가능하였을 것임.

고용노동부는 향후 사업 추진 시 기존 사업 참여자들의 지원금 지급 현황이나 기타 불용 발생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둘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빈일자리 업종’ 청년 취업 지원금(Ⅱ유형)을 도입 1년만에 폐지하고 ‘모든 업종’에 지원하는 방식으로의 개편은 제도의 일관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측면이 있으므로,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2025년에 신설된 이 사업의 Ⅱ유형은 이른바 ‘빈일자리 업종’[5]에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2026년부터는 ‘빈일자리 업종’뿐 아니라 ‘모든 업종’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빈일자리는 구인·구직 불일치의 직접적 결과로서 사업체의 적극적 구인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못한 인원인 미충원인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미충원인원은 2020년부터 증가추세로 전환된 이후 급격히 상승하여 2022년에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하였으며, 이에 정부는 2023년 「빈일자리 해소방안」(1차 2023.3., 2차 2023.7.)을 발표하고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의 총 10개 업종을 빈일자리 업종으로 선정하여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였음.

---

5) - 빈일자리의 개념: 다음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일자리(미충원 인원이 높고 현장의 인력난이 심한 일자리)
① 현재 구인활동을 하고 있고, ② 한 달 이내에 일이 시작될 수 있으며, ③ 즉시 채용이 가능한 일자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참고〉
- 빈일자리 업종: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10개 업종 (2022.12월 노동부, 기재부 등이 참여한 범정부 일자리 TF 회의를 통해, 2023년 선정)

[주요 업종별 미충원인원 및 미충원율]

		전체	제조업 (뿌리, 조선)	운수창고	도소매	숙박음식	보건복지	정보통신
미충원인원 (만명)	2021.3분기	13.5	4.1	2.4	1.2	0.7	1.3	0.8
	2022.3분기	18.5	5.8	2.8	1.9	1.4	1.6	1.0
	차이(만명)	5.1	1.7	0.4	0.6	0.7	0.3	0.3
미충원율 (%)	2021.3분기	12.0	22.2	48.7	11.0	7.9	9.0	19.5
	2022.3분기	15.4	28.7	51.4	15.0	11.3	11.4	23.7
	차이(%p)	3.4	6.5	2.7	4.0	3.4	2.4	4.2

자료: 빈일자리 해소 방안(2023. 3. 8. 관계부처 합동)

이에 맞추어 고용노동부는 2025년 본예산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Ⅱ유형을 신설하고, 빈일자리 업종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사업주에게 최장 1년간 월 60만원씩 최대 720만원을, 해당 기업에서 18·24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는 각 240만원씩 최대 48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빈일자리에 청년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취업하는 청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음.

그런데 2026년 본예산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Ⅱ유형의 지급 대상이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이 아닌 모든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으로 대상이 변경되었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Ⅱ유형과 같은 빈일자리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2025년도 예산에 처음 편성되어 아직 그 시행 성과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1년 만에 사업(제도)을 변경하는 것은 사업 참여자에게 혼란을 유발할 수 있으며, 빈일자리 업종 인력 충원율 제고라는 당초 정책목표와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는 2025년 이후 비수도권 청년 이탈[6] 등으로 인한 인력난 심화,[7]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우대지원 대상이자, 대표 빈일자리 업종인 제조업의 빈일자리율은 다소 감소[8]됨에 따라 한정된 예산 내에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2026년에는 모든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으로 지원을 결정하였다고 설명함.

그런데 이러한 개편은 청년층의 참여를 확대하고 단기적인 사업성과를 높이는 데에

6) 2015~2024년 청년 수도권 순유입, 비수도권 순유출: 약 67만명(청년 순이동률, 국가데이터처)

7) 2025년 청년 취업자 수: 수도권 632만명, 비수도권 524만명(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8) 빈일자리율(빈일자리 수 / (빈일자리 수+전체 근로자 수) × 100): 2024년 1.2% → 2025년 0.9%(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부)

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으나, 동시에 제도의 일관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

제도개편이 잦을 경우, 청년층 입장에서는 제도의 향후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각종 지침 개정, 시스템 수정, 홍보·안내 재정비 등이 반복되어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도 저하시키므로, 고용노동부는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2. 내일배움카드(일반): 훈련기관의 수도권 집중 개선 필요

가. 개 요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은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5,961억 6,100만원 중 5,938억 4,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6%)되고, 22억 8,200만원이 불용되었음.[9)]

[2025년도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내일배움카드 (일반)	580,161	596,161	-	-	596,161	593,841	38	2,282	778,545
첨단산업·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훈련	478,116	478,116	-	△500	477,616	476,994	-	622	573,703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첨단산업·디지털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igital Training, 이하 “KDT사업”이라 함)’ 사업은 민간 혁신훈련기관, 민간 선도기업, 대학 등이 참여하여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배우고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직업훈련사업임.

또한 기업의 실제 인력수요를 훈련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훈련기관과 기업이 협약을 체결, 훈련과정을 함께 설계하도록 하고 기업의 실제 프로젝트 과제를 전체 훈련과정의 30% 이상 편성한다는 특징이 있고, 과정별로 일부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평균 6개월·주 5일·1일 8시간으로 운영되는 집중적인 훈련과정임.

9) 일반회계-내일배움카드(1131-300)(직업능력정책국)

나. 검토의견

‘KDT’ 사업의 경우 훈련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비수도권에서도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양성훈련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KDT 사업의 2025년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25년 목표인원 45,125명의 93.5%에 이르는 42,191명이 훈련에 참여하였고, 예산액 4,781억 1,600만원 중 99.8%에 이르는 4,769억 9,400만원이 집행되었음.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양성훈련 연도별 집행내역]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인원			예결산		
	목표인원	실시인원	지원율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2021	24,015	11,727	48.8	221,832	81,205	36.6
2022	28,521	22,394	78.1	305,562	232,967	76.2
2023	36,580	31,922	87.3	414,260	369,114	89.1
2024	44,000	37,628	85.5	475,688	475,499	100.0
2025	45,125	42,191	93.5	478,116	476,994	99.8

자료: 고용노동부

그런데 KDT 사업의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지역별 훈련기관 및 훈련인원 실적을 보면, KDT 사업의 집행과 관련하여 훈련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비수도권지역에 대한 훈련기관이 미흡하여 수도권 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훈련 접근성이 상당히 낮은 상황임.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KDT는 예외적으로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지역 제한을 완화해 관할 지역 밖에서도 훈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비대면 실시간 훈련을 통해 비수도권의 훈련생도 수도권의 인기 훈련기관·기업이 운영하는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함.

[시도별 2022~2025년 KDT 훈련기관 및 참여인원 수(주소지 기준)]

(단위: 개, 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훈련기관 수	훈련 참여인원	훈련기관 수	훈련 참여인원	훈련기관 수	훈련 참여인원	훈련기관 수	훈련 참여인원
강원	2	404	3	337	4	404	3	529
경기	25	12,088	35	9,949	50	12,088	54	15,830
경남	1	918	2	834	3	918	1	1,077
경북	1	691	1	673	2	691	2	876
광주	9	813	9	940	8	813	8	1,031
대구	6	1,294	9	1,167	14	1,294	20	1,473
대전	8	1,067	8	1,153	6	1,067	8	1,154
부산	11	1,953	14	1,663	17	1,953	16	2,301
서울	99	13,140	153	10,392	200	13,140	191	16,651
세종	3	166	3	166	3	166	1	182
울산	2	383	3	334	3	383	2	410
인천	6	2,318	8	2,117	9	2,318	11	3,065
전남	-	457	1	388	2	457	2	529
전북	3	540	5	525	4	540	4	621
제주	4	155	5	128	7	155	8	227
충남	1	735	3	680	4	735	5	1,058
충북	1	506	3	469	3	506	5	678
합계	182	37,628	265	31,915	339	37,628	341	47,692

자료: 고용노동부

그러나 2025년 기준 전체 훈련 기관 중 75.1%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22년 대비 2025년 수도권의 훈련기관은 130개소에서 256개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에 비해 비수도권의 훈련기관은 52개소에서 85개소로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수도권 집중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요구됨.

더구나 AI, 스마트제조, 무인이동체 및 사물인터넷 등의 응용기술 훈련 분야는 비대면 실시간 훈련이 아닌 현장 실습 훈련이 필요한 측면이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지방의 훈련기관 등을 발굴하고 지방훈련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등의 마련을 통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균형 있는 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국가자격검증시험 관리 미흡 등

가. 개 요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자격검정사업, 외국인고용관리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경상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823억 3,300만원 중 1,803억 3,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9%)되고, 20억원이 불용되었음.[10)]

[2025년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비비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E)	예산액
	본예산	추경(A)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	182,333	182,333	-	-	-	182,333	180,333	-	2,000	193,723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업인력의 양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1982.3.18. 설립됨.

나. 검토의견

첫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자격검정 업무와 관련하여 연이은 검정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부적절한 사고대응으로 자격검정업무 전문기관으로서 공정성·신뢰도가 크게 훼손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자격검정사업은 크게 국가기술자격(검정형, 과정평가형), 국가전문자격, 일학습병행자격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는데, 국가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규정된 자격으로 주로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 기능 및 서비스분야의 자격이고, 대표적인 예

10) 일반회계-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1134-307)(직업능력정책국)

로 전기기사, 산업안전기사, 가스기사 등이 있음.

국가전문자격은 주로 서비스분야의 자격으로 개별 부처의 필요에 의해 운영되고 면허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며, 대표적으로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세무사 등이 있음.

마지막으로 일학습병행자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내·외부 평가를 거쳐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함.

자격시험마다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자격시험은 기본적으로 필기와 실기로 구분되는데, 필기 시험의 출제 체계를 살펴보면 먼저 문제출제위원에게 출제를 의뢰하여 문제를 확보하고, 검수·검토위원의 합숙 검수·검토를 거쳐 문제를 확정함.

2025년 6월 공인노무사 1차 시험관련 2교시 미응시자가 합격자로 발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 수습과정에서 2024년도에도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 동일 사고가 있었음을 확인하고도 2024년도 건은 합격자 정정공고를 미실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정당한 의사결정 절차 없이 전산시스템상 2024년 합격자 통계를 수정하는 등 사고 은폐 의혹을 자초하고, 시험관리 행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등 검정업무 전문기관으로서 공정성·신뢰도를 크게 훼손하였음.

이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5년 1차 시험과 관련하여 오류로 합격 처리된 5명을 제외한 최종 1차 합격자 수험번호를 Q-Net(국가자격정보시스템)에 정정공고 실시(2025.6.)하였고, 2024년도 1차 시험의 경우 2024년 합격 오류자 1명은 2024년 당시 2차 시험에 미응시하고 2025년 1차 시험에 재응시하여 합격하였음을 확인하여, 내부전산 시스템에 평균 점수 오류를 정정하고, 2025년 시험이 진행 중임에 따라 수험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격 정정공고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함.

그런데 2019년부터 2025년까지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과 국가전문자격검정시험의 출제 오류건수를 살펴보면 매년 적게는 24건에서 많게는 37건의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2019-2025년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 및 국가전문자격검정시험의 출제 오류건수]

(단위: 건)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국가기술자격	1	2	-	2	-	1	1
국가전문자격	31	29	37	29	26	23	28
합 계	32	31	37	31	26	24	29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자격시험의 출제 오류가 매년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로 시험위원 및 검수·검토위원의 수당이 물가 및 최저임금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하여 전문가의 참여가 저조해짐에 따라 출제 품질이 저하되는 점을 들고 있음.

그런데 자격시험 관리 부실 및 오류로 기관장(2023년)과 소관 상임이사(2025년)가 연이어 사퇴하고 2025년 경영평가에서 미흡(D) 등급을 받은 점을 감안할 때, 국가자격시험의 출제 오류는 단순한 시험위원 수당 문제가 아니라 공단 내부의 시스템 붕괴, 지휘·감독 소홀 및 공직 기강 해이 등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임.

향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전문가의 시험출제 참여 확대를 위하여 시험위원 수당 현실화, 자격검정 업무 전반의 시스템·사고대응체계 재정비 등 국가자격검정시험의 출제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외국인고용관리' 사업의 수입 예산 추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적정 수준의 사업 물량을 설정하고 향후 수입 예산을 과다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의 내역 사업인 '외국인고용관리'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에 따른 17개국 송출국가에서 EPS 센터[11]를 운영하고,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과 기능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전문취업비자(E-9)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귀국 외국인근로자 재정착을 지원하는 수지차보전 방식의 사업임.[12]

이에 외국인력 도입, 한국어 시험, 취업교육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와 관련한 수수료 수입을 해당 사업 뿐만 아니라 외국인력 체류지원, 교육 등에도 활용하고 있어 실제

11) EPS 센터
- 설립목적: 외국인근로자 선발·도입 과정 지원, 송출국과 원활한 업무협력을 위해 17개 고용허가제 송출국에 EPS센터를 설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외국인력송출에 기여 (공단에서 파견한 센터장 1명, 현지 직원 1~2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
- 설치근거: 외국인근로자의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4조, 한국 고용노동부-송출국 정부 양해각서(MOU)
- 수행업무: 인력송출(도입)업무 지원 및 모니터링, 선발포인트제(한국어·기능시험) 접수시행, 송출국 현지 외국인근로자 사전교육 모니터링 등 수행

12) 외국인고용허가제에 따른 송출국가 17개국: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네팔, 미얀마, 라오스, 타지키스탄. 다만, 타지키스탄은 2023년 12월 29일에 개최된 제41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17번째 송출국가로 지정되었고, 준비절차 등을 거쳐 2025년부터 정식으로 도입됨.

발생할 수입 예산에 대한 추계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나, 2025년의 경우 수입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한 측면이 있음.

[2023~2025년 외국인고용관리 사업 수입 및 지출 예·결산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	결산	증감	예산	결산	증감	예산	결산	증감
수입	외국인고용관리		16,929	26,522	9,593	25,890	34,480	8,590	37,729	19,402	△18,327
		도입위탁	4,205	6,973	2,768	8,895	7,451	△1,444	13,342	4,034	△9,308
		취업교육	3,316	2,118	△1,198	2,211	2,027	△184	2,211	1,261	△950
		한국어시험	9,408	17,431	8,023	14,784	25,002	10,218	22,176	14,107	△8,069
지출	외국인고용관리		16,836	26,429	9,593	25,641	34,231	8,590	32,492	17,072	△15,420
		입국지원및취업교육	6,484	7,804	1,320	7,265	9,473	2,208	9,211	6,098	△3,113
		외국인력선발	7,395	13,821	6,426	12,358	18,440	6,082	16,245	6,930	△9,315
		사업장내애로해소지원	2,540	4,302	1,762	2,937	3,237	300	3,955	1,824	△2,131
		귀국지원	417	502	85	847	847	-	847	374	△473
		외국인고용관리교육	-	-	-	2,234	2,234	-	2,234	1,846	△388
수지차			93	93	-	249	249	-	5,237	2,330	△2,907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5년 외국인고용관리 사업 수입예산(안) 산정시에 2024년 외국인 도입 쿼터를 참조하여 도입 인원은 165,000명, 한국어 시험응시 인원은 도입쿼터의 4배수인 660,000명을 기준으로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2025년 도입 쿼터 축소, 경기 둔화에 따른 고용 수요 감소, 타 체류자격(E-7, E-8 등) 활용 증가로 E-9 외국인 근로자 도입 및 한국어시험 인원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수입예산 목표 대비 실제 수입액에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설명함.

그리고 실제보다 도입 인원 및 한국어시험 응시자 수가 과도하게 설정된 것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제 정세 악화나 경기 둔화에 따른 외국인 고용 수요 감소, 실제 외국인력 도입 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국무총리실 소속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설정한 상한 기준인 도입쿼터를 수입 예산의 사업 목표치로 활용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더구나, 외국인 고용 수요 감소 및 도입 명부의 포화 등으로 한국어시험 응시자가 앞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관련 수입과 지출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2023~2025년 외국인력 사업 예산 목표 대비 실적 현황]

(단위: 명)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외국인 도입 쿼터		110,000	165,000	130,000
도입	목표	52,000	110,000	165,000
	실적	100,148	78,025	61,184
한국어시험	목표	280,000	440,000	660,000
	실적	552,274	771,328	303,276

자료: 고용노동부

참고로, 2024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현실적으로 결정하여 예산이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시정요구한 만큼, 이와 동일한 지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고용관리' 사업의 수입 예산 추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정 수준의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향후 수입 예산을 적정수준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202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형
(2)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 과다 결정 방지책 필요	ㅇ [지적사항]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도입 규모와 실제 도입 인원 간에 큰 차이가 있고, 외국인근로자 지원 강화가 필요함에도 외국인근로자 1인당 체류 지원 예산이 감소 추세임 ㅇ [시정요구사항]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현실적인 E-9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산정하도록 노력하고,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도입 규모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결정에 관계 없이 별도의 현실적 목표로 수입목표량을 결정하는 등 예산 과다 산정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시정) ㅇ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1인당 체류지원 예산을 증액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제도개선)	시정, 제도개선

4. 숙련기술장려사업: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건립 사업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숙련기술장려’ 사업은 숙련기술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통해 우수숙련기술자를 육성함으로써 제조업분야 청소년 취업촉진 및 기능강국으로서의 국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45억 5,5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13)]

[2025년도 숙련기술장려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숙련기술장려사업	33,744	24,555	-	24,555	24,555	-	-	35,405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건립	9,625	436	-	436	436	-	-	9,189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고용노동부는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건립 사업이 사업계획 단계에서의 준비 미흡으로 인해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2024년부터 2025년까지 3차례의 총사업비 변경이 있었고, 2025년 제2회 추경 시 91억 8,900만원이 감액 되었음에도 이월이 발생하였으므로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숙련기술진흥원은 숙련기술 습득을 장려하고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설기관으로, 2013년 인천에 처음으로 설립되었음.

고용노동부는 기존 숙련기술진흥원이 수도권(인천)에 위치하고 있어 비수도권 학교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전수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영남권(울산)에 추가로 숙련기술진흥원을 설립하여 지역 간 기술교육 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영남권 예비 숙련기술인

13) 일반회계-숙련기술장려사업(1134-317)(직업능력정책국)

(고교생, 중소기업근로자)에게 대한민국명장 등의 숙련 기술을 체계적으로 전수할 수 있는 전문기관 설립을 목적으로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건립을 추진함.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건립 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 2028년(2023.부지선정->2024.설계->2026.착공->2028. 완공)

◈ 사업예산 : 365억 6,200만원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681-1

◈ 부지규모 : 부지 6,656㎡(2,013평), 시설 7,802㎡(2,360평), 지상 1~5층 건물

용 도	주요시설	비고
전수 교육시설	실습실, 준비실, 자재실 등	29실
업무 및 지원시설	사무실, 회의실, 강당, 식당, 기숙사 등	41실

* 훈련분야(예정) : 컴퓨터,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산업설비 등 5개 분야 13개 직종

◈ 사업대상 : 전문계고 학생 및 교원 등

자료: 고용노동부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건립 사업은 당초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 사업의 총 사업비 333억원으로 추진되었으나,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 설계 착수 및 공사 착공 지연에 따른 총 사업기간 연장, 조달청 중간설계 검토 결과 반영 등의 사유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3차례의 총사업비 변경이 있었고, 사업이 지연됨.

또한 2025년 제2회 추경 시 사업지연 등의 이유로 91억 8,900만원의 감액 편성이 있었음에도 2025년 실집행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4억 3,600만원 중 3억 8,300만원의 이월이 발생하여 집행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남.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건립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B)	집행액(C) [실집행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2	-	-	-	-	-	-	-	-	-
2023	1,929	1,929	-	1,929	1,929 [1,927]	100.0	100.0	-	-
2024	12,561	12,561	-	12,561	12,561 [6,479]	100.0	100.0	-	-
2025	9,625	436	-	436	436 [53]	100.0 [12.2]	100.0 [12.2]	- [383]	-

주) 괄호 안은 보조사업자의 실집행액 수치임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향후 실제 집행 가능성을 반영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건립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중 청년 및 건설업 퇴직자 분야 사업 관리 미흡 등

가. 개 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여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으로, 일반회계로 지원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사업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지특)’ 사업으로 구분됨.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14]은 예산현액 1조 108억 6,500만원 중 9,209억 7,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1.1%)되고 898억 9,000만원이 불용됨.

‘국민취업지원제도(지특)’[15]은 예산현액 89억 1,0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됨.[16]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지특)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비비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E)	예산액
	본예산	추경(A)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845,709	1,010,865	-	-	-	1,010,865	920,975	-	89,890	1,092,963
국민취업지원제도(지특)	8,910	8,910	-	-	-	8,910	8,910	-	-	9,957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근로의사는 있으나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저소득 구직자 등(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실업자, 고용보험 혜택이 종료된 실업자,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다가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구직자 등)에게 소득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것임.

14) 일반회계-국민취업지원제도(1234-300)(고용서비스정책관)

1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국민취업지원제도(7041-316)(고용서비스정책관)

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의 경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의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며,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지만, 2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1유형 내에서도 최근 취업여부를 기준으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요건심사형은 저소득층이면서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고, 선발형은 저소득층이지만 취업 경험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음.

이러한 구분은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구직촉진수당 수령을 목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려는 수요를 방지하기 위함임. 요건심사형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참여자로 확정되어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게 되지만, 선발형의 경우 요건에 해당하여 신청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예산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 하에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분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내용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취업지원서비스	소득지원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1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	4억원↓	2년이내 100일(800시간) 이상	○	○	×
	선발형	청년	15~34세	중위소득 120%↓	5억원↓	선발 시 고려			
		비경활	15~69세	중위소득 60%↓	4억원↓	2년이내 100일(800시간) 미만			
2유형	특정계층		15~69세	×	×	×	○	×	○
	청년		15~34세	×	×	×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	×			

자료: 고용노동부

2022~2024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목표 대비 실제 참여인원 규모가 다소 부진하였으나, 매해 지속적으로 목표 인원을 감소시켰고 그 결과 2025년에는 지원인원 목표를 대부분 달성하였음.

[2022~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별 목표 대비 실제 참여인원(수급자격 인정 기준)]

(단위: 명, %)

유형		연도	참여 인원 (수급자격 인정 인원)		달성률	유형		연도	참여 인원 (수급자격 인정 인원)		달성률
			목표	실제					목표	실제	
1유형	요건 심사형	2022	250,000	86,233	34.5	2유형	특정 계층	2022	10,000	12,983	129.8
		2023	200,000	83,595	41.8			2023	20,000	15,029	75.1
		2024	88,000	88,431	100.5			2024	10,000	12,535	125.3
		2025	117,000	106,220	90.8			2025	12,000	15,032	125.3
	선발형 비경활	2022	80,000	30,242	37.8		청년층	2022	80,000	37,801	47.3
		2023	60,000	28,697	47.8			2023	40,000	39,709	99.3
		2024	20,000	26,690	133.5			2024	40,000	40,259	100.6
		2025	20,000	21,237	106.2			2025	78,000	56,831	72.9
	선발형 청년특례	2022	170,000	100,495	59.1		중장년층	2022	10,000	14,046	140.5
		2023	140,000	114,454	81.8			2023	10,000	14,565	145.7
		2024	140,000	134,543	96.1			2024	10,000	12,767	127.7
		2025	105,000	92,623	88.2			2025	18,000	16,672	92.6

자료: 고용노동부

나. 검토의견

첫째, 고용노동부는 2025년 제2회 추경 시 국민취업제도 2유형 중 청년 추가지원을 위해 1만명 분을 추가로 편성하여 연내 7만 8,000명 지원을 목표로 하였으나, 실제 2유형 수급자격 인정자 수가 5만 6,831명에 불과하여 성과가 저조하므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참여한 후 취업활동계획(IAP: Individual Action Plan)을 수립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참여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음.

고용노동부는 2025년 제2회 추경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중 청년 추가 지원 1만명분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추가인원에 따른 참여수당(15억 9,800만원)과 훈련참여지원수당(17억 400만원), 추가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42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음.

[2025년 제2회 추경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목표인원 변경내역]

(단위: 명)

구 분	당초 인원	변경후 인원
특정계층	12,000	12,000 (변동 없음)
청년층	**68,000**	**78,000 (+10,000)**
중장년층	10,000	18,000 (+8,000)
건설업 퇴직자	**-**	**10,000 (+10,000)**

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 12월말까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청년 참여자의 수급자격 인정 인원 현황을 보면 총 5만 6,831명이 인정되어 목표인 7만 8,000명의 72.9%에 불과하였음. 더구나 2유형 청년층의 경우 본예산 당시 목표 인원이었던 6만 8,000명에도 못 미치는 달성률을 나타냄.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중 청년 수급자격 인정인원 현황]

(단위: 명)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21	1,650	6,407	4,342	3,342	3,163	3,493	3,289	2,803	2,583	2,457	2,312	2,044	37,885
2022	2,884	2,928	3,540	2,647	4,032	3,844	3,231	2,996	1,216	4,461	3,390	2,632	37,801
2023	2,666	2,866	3,403	3,082	4,526	4,086	3,571	3,197	2,917	3,294	3,512	2,589	39,709
2024	3,149	2,664	3,012	3,244	4,262	3,772	4,266	3,268	3,112	4,130	2,746	2,634	40,259
2025	2,875	3,119	3,286	4,486	3,937	3,621	9,897	7,702	5,782	4,204	3,843	4,079	56,831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악화되는 청년고용상황에 적극 대응하고자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청년 목표인원을 확대(6.8만명 → 7.8만명)하였으나, 2025년 지원인원(5.7만명)이 예년(약 4만명)보다 증가했음에도, 집행 추이 대비 과도한 목표설정(7.8만명)으로 지원 실적이 미달하였다고 설명함.

동 사업이 시작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청년 수급자격 인정인원이 약 4만명 수준에서 유지된 것을 보면, 추경 후 1만명을 추가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7만 8,000명은 기존의 사업방식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고 보임.

결국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청년 증가분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였으나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여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하였다고 보이므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2025년 제2회 추경 시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업 퇴직자의 취업 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10,000명분의 ‘건설업 퇴직자 재취업지원 강화 사업’을 신설하였으나, 사업 대상자의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기존 참여가 많지 않고, 연도 중 사업인원 확대로 취업지원서비스의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함.

2025년 건설업 일자리 감소 등의 고용상황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2025년 제2회 추경 시 건설업 퇴직자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율을 제고하고, 상용직 등 안정적인 노동시장으로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건설업 퇴직자 재취업지원 강화’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음.[17)]

[2024년 및 2025년 월별 건설업 취업자 수]

(단위: 천명)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2024년 (A)	2,089	2,077	2,117	2,098	2,070	2,057	2,014	2,042	2,057	2,061	2,087	2,011	24,780
2025년 (B)	1,921	1,909	1,932	1,948	1,964	1,960	1,922	1,910	1,973	1,937	1,956	1,948	23,280
B-A	△168	△168	△185	△150	△106	△97	△92	△132	△84	△124	△131	△63	△1,500

자료: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참여자들에게 ① 취업지원서비스와 ② 취업활동비용[18)]을 지원하고 있음. 2025년 제2회 추경 시 신설된 프로그램은 기존의 지원에 ① 건설업 퇴직자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참여수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② 훈련참여수당도 월 최대 20만원을 6개월 동안 추가로 지원하는 것임.

어려운 고용여건에 놓인 건설업 퇴직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여 수행한 것은

17) 건설업 퇴직자 재취업지원 강화 프로그램의 경우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특정계층 참여자와 유사하게 보고,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18) 참여수당: 15~25만원, 훈련참여지원 수당: 1개월 당 최대 28.4만원, 최대 6개월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항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건설업 퇴직자 재취업지원 강화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전 3년 이내 건설 관련 업종 이력이 있는 2유형 참여자임.

2025년 12월 말 기준 두 유형 사업대상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현황을 보면 ① 특정계층[19]의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119명, ② 유형 참여자 중 사업 참여 전 2년간 최종 이직 사업장(상용)이 건설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사람은 2,465명으로 고용노동부가 계획했던 1만명과 차이가 상당함.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간을 보더라도, 두 유형의 사업대상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규모는 2,000~3,000명 수준에 머물러 있음.

[2021~2025년 건설업 퇴직자 재취업지원 강화 프로그램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현황]

(단위: 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특정계층의 건설일용직 근로자	115	114	107	108	119
사업 참여 전 2년간 최종 이직 사업장이 건설관련 업종인 경우	2,744	1,908	2,168	2,237	2,465
합 계	2,859	2,022	2,275	2,345	2,584

주) (산출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 전 2년간 최종 이직사업장(상용)이 해당 업종인 자이거나, 3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고 마지막 일용근로 사업장이 해당 업종인 자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업 홍보를 추진하고, 각종 홍보 콘텐츠를 개발·보급하였으며, 소속 기관(실업급여과, 민원실, 근로감독부서 등)과 연계하여 참여자를 적극 발굴하였다고 설명함.

물론 참여수당 10만원의 추가지급과 훈련비 20만원 인상 지급이 인센티브로 작용하여 사업 참여자가 증가할 수는 있으나, 과거 실적 등을 고려할 때 1만명 분으로 편성

19)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으로, 소득·재산·취업경험과 무관하게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참여 가능함(단, 청년, 취업맞춤특기병, 대학교(대학원) 졸업예정자, 저임금 근로자였던 실직자는 제외)
(특정계층 종류: 24개) ①기초연금 수급자, ②생계급여 수급자, ③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④북한이탈주민, ⑤여성가구주, ⑥결혼이민자, ⑦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⑧신용회복지원자, ⑨위기청소년, ⑩자유무역협정 피해실직자, ⑪건설일용직 근로자, ⑫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⑬미혼모(부)·한부모, ⑭청소년 부모, ⑮구직단념청년, ⑯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사람, ⑰고용위기지역 등 지정에 따른 실직자, ⑱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참여자, ⑲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실직자, ⑳영세자영업자, ㉑소상공인 및 성실경영 실패자, ㉒노무제공자, ㉓직접일자리 참여자, ㉔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된 2025년도 제2회 추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참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더구나 건설업 퇴직자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상황을 고려할 때 목표 달성이 어려워 보인다는 지적[20]이 있었던 점, 건설업 퇴직자의 경우 매년 2,000~3,000명 내외의 인원만이 사업에 참여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고용노동부가 계획한 목표인 1만명은 처음부터 달성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적정소요를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환경노동위원회」, 2025. 6.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고용노동부」, 2025. 6.

6.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운영지원: 고용노동교육 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운영지원’ 사업은 노사관계 당사자,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 국민에 대한 노동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폭넓게 하고 고용노동 관련 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노사갈등 예방 및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87억 6,3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21]

[2025년도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운영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운영지원	18,763	18,763	-	-	18,763	18,763	-	-	21,105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법령과 정관을 위반하여 노동인권 교육 대신 부적절한 신규 청년 취업 교육을 추진하며 기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1만명 감축)을 축소한 사실이 고용노동부 특정감사(2025.7.)에서 지적된바, 재발 방지를 위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각별한 주의와 주무부처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함.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및 「정관」에서 정한 청소년 등 국민에 대한 노동인권 및 권리보호 관련 교육을 수행하는 기타 공공기관임.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설립 목적은 ① 노사관계 당사자,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 국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 실시로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폭넓게 하고, ② 고용노동 관련 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및 노동관계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제고하여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하는데 있음.

21) 일반회계-한국고용노동교육원 운영지원(2031-305)(노사협력정책관)

이에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설립 목적에 기반하여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및 「정관」으로 정해진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각 교육부서장은 교육과정 설계내용과 예산편성지침을 반영하여 연간 교육사업 계획 및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운영하여야 함.[22)]

그런데 2025년에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설립 목적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설계된 2025년 청년 취업활성화 교육사업 신설[23)]로 인해,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기존 '청년 고용노동교육' 사업이 축소 운영되었음.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2025.7.)에 따르면,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법령·정관상 목적 및 사업 범위를 위반하여 노동인권 및 권리보호 교육 대신 실업 극복·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한 '청(소)년 취업활성화 교육'을 기획·운영하면서 노동인권 교육의 본질과 무관한 내용으로 구성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여, 기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예산을 감액하여 목표를 축소시켰고(1만명 감축),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하였다는 지적을 받았음.

[2024년 및 2025년 청년 고용노동교육 예산 및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회, 명)

구 분	2024년	2025년		청년 고용노동교육 증감률 (B-A)/A
	청년 고용노동교육 (A)	청년 고용노동교육 (B)	청(소)년 취업활성화교육	
예산	415	354	102	△ 14.7%
교육횟수	662	611	300	△ 7.7%
교육인원	81,000	71,000	10,000	△ 12.3%

자료: 고용노동부

이는 당초 계획에 없던 신규사업 추진으로 인해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등에 따른 법정 사업을 부당하게 감축한 결과임. 따라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주의가 요구되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산하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2)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육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등

23) '청년 취업활성화 교육사업' 관련 예산 및 교육인원은 2025년 당초 본예산에 미반영됨.

7.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 외국인근로자 공공주거시설 지원 사업 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 사업은 지방과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을 해소하면서 내국인의 일자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를 적정 규모로 도입·관리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사업장을 관리하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체류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91억 9,500만원 중 89억 8,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8%)되고, 2억 600만원이 불용되었음.[24)]

[2025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9,195	9,195	-	-	9,195	8,989	-	206	13,837
외국인근로자 공공주거시설 지원	300	300	-	-	300	300	-	-	3,678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외국인근로자 공공주거시설 건립을 위한 설계비는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미확보로 인해 실집행이 전무하므로, 향후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의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외국인근로자 공공주거시설 지원’ 사업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밀집지역에 공공주거시설을 설치하고, 상담 및 교육 등 체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설계비와 공사비는 지방자치단체와 매칭으로, 부지매입비 및 시설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수행하는 자치단체자본보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

24) 일반회계-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3051-308)(국제협력관)

[외국인근로자 공공주거시설 지원 사업 개요]

<table>
<tr><th>사업내용</th><th>외국인근로자(E-9) 공공주거시설 건립을 위한 설계비 및 공사비 지원</th></tr>
<tr><td>사업기간</td><td>2025~2027년</td></tr>
<tr><td>사업규모</td><td>18,000백만원(2개소×9,000백만원)
(단위: 백만원)
<table>
<tr><th>구 분</th><th>국비(30%)</th><th>지방비(70%)</th><th>총 예산</th><th>비 고</th></tr>
<tr><td>2025년</td><td>300</td><td>700</td><td>1,000</td><td>설계비</td></tr>
<tr><td>2026년</td><td>2,040</td><td>4,760</td><td>6,800</td><td>공사비(40%)</td></tr>
<tr><td>2027년</td><td>3,060</td><td>7,140</td><td>10,200</td><td>공사비(60%)</td></tr>
<tr><td>계</td><td>5,400</td><td>12,600</td><td>18,000</td><td></td></tr>
</table></td></tr>
<tr><td>역할분담</td><td>- (고용노동부) 사업 총괄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근로자 거주를 위한 기숙사 신축, 기숙사 건립 이후 시설 운영 및 관리</td></tr>
<tr><td>사업시행주체</td><td>지방자치단체〔경상남도(사천시, 김해시)〕</td></tr>
</table>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25년 경상남도에 외국인근로자 공공주거시설 건립을 위한 설계비 3억원을 2회에 걸쳐 교부(1차: 2025.6.30., 2차: 2025.10.24.)하였으나, 해당 지자체의 설계비 실집행 실적은 전무함.

[2025년 외국인근로자 공공주거시설 지원 사업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비목	고용노동부			사업시행주체(경상남도)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300	300	300	300	-	300	-	300	-	-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방비 미확보, 부지 및 건립규모 등 지자체 사업계획에 따른 인가 및 허가, 사전절차 이행, 건립공사 설계를 위한 준비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실집행 실적이 전무하였다고 설명함.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유무, 사전 행정

절차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 검토를 하여야 하고, 특히 연내 집행가능성을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25)]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지방비 미확보 등의 이유로 연내 집행가능성이 없는 상황임에도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위의 사유로 설계비의 실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향후 고용노동부는 해당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사전절차 이행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외국인근로자 공공주거시설 지원 사업 관리를 강화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5)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p.115.

8. 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 송무수행 경비의 연례적 전용 문제

가. 개 요

‘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 사업은 노동쟁의의 조정, 복수노조와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결정과 부당해고 사건 등에 대한 심판, 차별시정 사건에 대한 심판 등을 담당하는 노동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94억 7,900만원 중 92억 4,0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5%)되고, 1억 9,800만원이 불용되었음.[26)]

[2025년도 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	8,898	8,898	20	561	9,479	9,240	40	198	9,645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노동위원회는 소송대상 사건 수 증가에 따라 패소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노동위원회 판정 수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등의 지급을 위한 패소비용의 연례적 전용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노동위원회는 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와 관장업무에 따른 조정, 심판, 차별시정 등을 담당하는 심판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조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중재위원회,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 총 7개의 부문별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음.

조정위원회는 노동쟁의 조정, 심판위원회는 부당해고 등 부당노동행위 판정과 복수노조 관련 결정, 차별시정위원회는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및 일학습병행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판정을 담당함.

노동위원회의 송무수행 현황을 살펴보면 노동위원회 판정수용률이 증가(소송 제기율 감소)하고 있음에도 법원의 소송계류 일수가 증가하고 있음.[27)]

---

26) 일반회계-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7039-309)(중앙노동위원회)

[2020~2025년 노동위원회 행정소송 처리 현황]

(단위: 건, %)

연도	소송대상 (중노위 처분)	소송 제기		소송 종결				승소율	재심 유지율
		건수	소송 제기율	합계	승소	패소	취하		
2020	1,724	593	34.4	384	255	56	73	82.0	85.4
2021	1,789	567	31.7	459	299	74	86	80.2	83.9
2022	1,709	548	32.1	568	355	90	123	79.8	84.2
2023	1,736	539	31.0	480	325	75	80	81.3	84.4
2024	1,865	577	30.9	544	397	68	79	85.4	87.5
2025	1,691	497	29.4	575	428	71	76	85.8	87.7

주 1) 소송제기율: 소송제기건수 / 소송대상건수
2) 승소율: 승소건수 / (승소건수 + 패소건수)
3) 재심유지율: 재심유지건수(승소건수 + 취하건수) / 소송종결건수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승소율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진행 중인 소송 건수 증가로 인해 패소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패소 비용 예산을 다른 사업 예산에서 전용하여 집행하고 있는 문제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020~2025년 패소비용 예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2020	403	75	478	478
2021	391	67	458	458
2022	391	438	829	823
2023	391	148	539	536
2024	391	293	684	683
2025	391	206	597	569

노동위원회는 패소 사례 분석 및 교육 등 패소 사건 관리 강화를 통해 노동위원회 위원 및 조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판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노동위원회 판정 수용률 제고를 도모하고, 연례적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27) 법원의 노동사건 심급별 평균처리일수: 2025년: (1심) 501일, (2심) 893일, (3심) 1,137일
2024년: (1심) 426일, (2심) 960일, (3심) 1,092일

【고용보험기금】

〈지 출〉

9.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연례적 불용액 과다 문제

가. 개 요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사업은 장기간(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계비를 융자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347억 8,800만원 중 244억 8,000만원이 집행(집행률 70.4%)되고, 103억 800만원이 불용되었음.[28]

[2025년도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34,788	34,788	-	34,788	24,480	-	10,308	25,055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009년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고용보험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 전직 실업자, 무급 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계비를 융자하는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이 사업에 따른 융자금 환수의 경우 은행에 융자금 상환 환수를 위탁하고 있으며, 원금과 이자가 납부되면 은행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상환이 이뤄지고 있으며, 공단에서 이를 고용보험기금 관련 사업별 수입 등을 취합하여 국고에 수납함.

다만, 이자·원리금이 6개월 이상 미납 등으로 융자금 환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공단의 근로자 신용보증지원 사업(보증료 1%에 관한 부분)에 의해서 공단에서 은행으로 대위변제(공단이 신용보증을 한 채무자(대부대상자) 대신 원금을 갚는 것)가 이뤄지고 공단에서 채무자를 대상으로 구상채권 회수를 진행함.[29]

28) 고용보험기금-직업훈련생계비대부(1160-352)(직업능력정책국)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사업 개요]

구분	주요내용
대 상	○ (비정규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 노동자 ○ (전직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 상태에 있는 자 ○ (무급휴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피보험자 * 제외: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경우
소득요건	○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소득기준 우대 - (100% 이하)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T), 중장년 내일참여과정에 참여하는 자 - (120% 이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에 참여하는 자 - (소득요건 없음)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종사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
훈련요건	○ 아래에 해당되는 총 140시간 이상 훈련 중 대부 대상 월의 교육 일수가 15일 이상 ○ 대부대상 훈련과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대학 직업훈련과정 ‣「고용보험법」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금 리	연리 1%(*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상 환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중 1택 가능
한 도	1인당 월 200만원(총 한도 1,000만원)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은 1인당 월 200만원, 총한도 2,000만원 이내

자료: 고용노동부

29) 근로자신용보증지원 사업의 경우,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통해서 이뤄지는 사업으로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사업(고용보험기금)과는 별도로 진행됨.

나. 검토의견

고용노동부는 국회 지적(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콘텐츠 재생형 원격훈련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2025년도 계획액을 107억원 감액 편성하였음에도 집행이 부진하였으므로, 향후 제도개선 등에 따른 수요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4년부터 고용노동부는 콘텐츠 재생형 원격훈련을 융자지원대상 직업훈련에서 제외하는 제도개선을 하였고, 이에 따른 융자수요 감소를 고려하여 2025년에 2024년도(454억 9,200만원)대비 107억 400만원 감액된 347억 8,800만원을 계획액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음에도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사업은 불용이 과다 발생하였음.

[2021~2025년도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C) [실집행액]	집행률 (C/A)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A)						
2021	43,443	183,745	-	183,745	173,005 [173,005]	94.2	-	10,740
2022	41,030	59,780	-	59,780	53,848 [53,848]	90.1	-	5,932
2023	53,520	95,559	-	95,559	78,953 [78,953]	82.6	-	16,606
2024	45,492	45,492	-	45,492	25,055 [25,055]	55.1	-	20,437
2025	34,788	34,788	-	34,788	24,480 [24,480]	70.4	-	10,308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024년부터 콘텐츠 재생형 원격훈련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대부 인원이 대폭 감소(2023년 14,611명 → 2024년 4,535명 → 2025년 4,312명)하여 사업이 부진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런데 원격훈련의 경우 2021~2023년까지는 비대면 실시간 원격훈련과 콘텐츠 재생형 원격훈련 모두 지원하였으며 2024년도부터 비대면 실시간 원격훈련만 지원하였음에도 2025년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사업의 당초 계획액 347억 8,800만원 중 103억

800만원이 불용되고 집행률도 70.4%로 부진하였는데, 이는 고용노동부가 원격훈련에 따른 융자수요 감소를 적절하게 추계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향후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요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1~2025년도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사업 지원인원 및 지원금액]

(단위: 명, 백만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지원 인원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지원 금액
전체	29,901	173,005	10,840	53,848	14,611	78,953	4,535	25,055	4,312	24,480
원격훈련*	9,897	45,192	4,820	23,070	8,020	39,259	494	2,460	142	840
집체훈련	20,004	127,813	6,020	30,778	6,591	39,694	4,041	22,595	4,170	23,640

주) 원격훈련의 경우 2021~2023년까지는 비대면 실시간 원격훈련과 콘텐츠 재생형 원격훈련 모두 지원하였으며 2024년도부터 비대면 실시간 원격훈련만 지원

자료: 고용노동부

10.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실근로시간 단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및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제도개선 모색 필요

가. 개 요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은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일·육아 병행 지원제도를 도입·활용하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하여 고용을 안정시키는 사업주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생활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2025년 계획현액 3,908억 9,400만원 중 3,812억 9,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5%)되고, 95억 9,500만원이 불용되었음.[30)]

[2025년도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고용안정장려금	390,894	390,894	-	390,894	381,299	-	9,595	439,394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35,826	30,726	-	30,726	28,051	-	2,675	58,36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336,637	336,637	-	336,637	330,850	-	5,787	359,488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첫째,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형) 사업은 복잡한 계획서 작성에 따른 사업주 부담으로 인해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향후 고용노동부는 유사 제도 설계 시 전문기관의 네트워크 및 사업주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참여 유인을 높이고 치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함.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사업은 2015년부터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사업명으로 추진되다가 2020년부터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으로 사업명칭

30) 고용보험기금-고용안정장려금(1345-350)(고용지원정책관)

을 변경한 사업인데,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과 실근로시간 단축의 2개 유형으로 구성됨.

실근로시간 단축 유형[31]의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근로자 1인당 초과근무시간 등 장시간 근로 현황, 단축 목표 시간 및 시행일, 구체적인 단축 계획, 향후 지속 방안을 포함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 감소하여야 하며, 전자·기계적 방법으로 단축 전·후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여야 함.

[실근로시간 단축 유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사업 개요]

구 분	실근로시간 단축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지원요건	①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 근로자 1인당 초과근무시간 등 장시간 근로 현황, 단축 목표 시간 및 시행일, 구체적인 단축 계획, 향후 지속 방안 ② 시행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③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단축 전·후 출퇴근 시간 관리
지원내용	지원인원 1인당 장려금 월 30만원 * 지원대상 근로자의 30% 지원 (최대 100명,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지원기간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3개월 단위

자료: 고용노동부

그런데 2024년과 2025년의 실근로시간 단축 유형의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2024년의 경우 전체 지원인원은 1,219명, 지원금액은 12억 4,300만원으로 집행률이 11.5%에 불과하였고, 2025년도에도 집행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지원인원은 1,784명, 지원금액은 31억 8,100만원으로 집행률이 29.5%로 저조하게 나타남.[32]

31) 실근로시간은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하고, 실근로시간 단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요일에 관계없이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면 지급 대상이 됨.

32) 2024년 및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시엔 450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기업 당 평균지원인원은 45명을 예상하여 약 107억 8,900만원의 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함.

[2024년 및 2025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 유형)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개소, 명, %)

구분	예산 (당초)	지원 기업수	지원대상 근로자수	지원대상 인원	지원금액	집행률
2024년	10,789	80	5,989	1,219	1,243	11.5
2025년	10,789	142	6,007	1,784	3,181	29.5

자료: 고용노동부

집행부진의 사유는 실근로시간 단축형의 고용안정장려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의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계획서에는 근로자 1인당 초과근무시간 등 장시간 근로 현황, 단축 목표 시간 및 시행일, 구체적인 단축 계획(교대제 개편, 연장근로 관리방안, 연차제도 활성화 방안 등), 향후 지속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하는바 사업주의 행정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보임.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실근로시간 단축 유형은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 관리와 증빙에 부담이 크고, 다른 유형(소정근로시간 단축 유형) 대비 지원단가[33]가 낮아 지원 수요가 저조함에 따라 2026년부터 실근로시간 단축 유형의 신규지원을 중단하고, 2025년 승인기업에 대한 잔여사업비만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함.

이러한 이유로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당시에도 이 사안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의 현실적인 추진 가능성을 검토할 것(제도개선)'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한 바 있음.

[202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20) 성과관리, 적정예산 편성 및 홍보 강화 필요 등	ㅇ [지적사항] 실근로시간 단축 유형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한바, 동 사업의 현실적인 추진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 [시정요구사항] 고용노동부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의 현실적인 추진 가능성을 검토할 것(제도개선)	사업 내용 전반을 점검하여 기업 참여가 저조한 실근로시간단축 유형을 2026년부터 신규 지원 종료

자료: 고용노동부

33) 실근로시간 단축 유형은 지원인원 1인당 장려금 월 30만원이나,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형의 경우 최대 월 50만원을 지원함.

향후 고용노동부는 위 사례와 유사한 고용안정장려금 제도 설계 시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지방관서 및 지역 사업주 단체 등과 소통을 강화하여 기업의 참여 유인을 제고하는 등 치밀한 사업관리로 장려금 사업의 변경 및 폐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둘째, 정부의 저출산 대책 강화에도 불구하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업무분담 지원금)'의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분야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고용노동부는 부진 사유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에게 모성보호제도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의 저출산 대책 강화 등에 따라 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2025회계연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333,637	333,637	-	-	333,637	327,850	-	5,787	359,488
육아휴직 지원금	123,646	224,252	-	-	224,252	222,603	-	1,649	156,60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55,404	44,500	-	-	44,500	44,448	-	52	44,296
대체인력 지원금	119,352	57,266	-	-	57,266	54,124	-	3,142	130,298
업무분담 지원금	35,235	7,619	-	-	7,619	6,675	-	944	25,194

자료: 고용노동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 업무분담 지원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인데, 2025회계연도 당초 계획액은 352억 3,500만원이었으나, 집행부진에 따라 66억 7,500만원만 집행됨.

업무분담 지원금 사업의 세부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은 집행률 6.6%, 목표인원 달성률 9.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은 집행률

50%, 목표인원 달성률 68.2%에 머물러 있음.

[2025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 업무분담 지원금 세부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명, %)

	계획액 (A)	집행금액 (B)	집행률 (B/A)	목표인원 (C)	지원인원 (D)	목표인원 달성률 (D/C)
육아휴직	25,179	1,651	6.6	18,651	1,823	9.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0,056	5,024	50.0	6,285	4,288	68.2

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은 2024.7.1.,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은 2025.1.1. 신설된 제도임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업무분담 지원금은 최근 신설된 제도로, 해당 제도에 대한 인지 및 현장 안착에 시간이 소요되어 예상보다 활성화되지 못하였다고 설명함.

업무분담 지원금 제도는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들에게 사업주가 추가적인 보상을 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점에서 육아휴직 등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고용노동부는 업무분담 지원금 사업이 집행이 부진한 사유를 철저히 파악하고,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11.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은 육아휴직급여 지급 등을 통해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제고를 도모하는 것으로, 2025년 계획현액 4조 3,195억 1,100만원 중 4조 3,091억 5,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8%)되고 103억 5,600만원이 불용되었음.[34)]

[2025년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D)	불용액 (E)	계획액
	당초	수정(A)						
모성보호 육아지원	4,022,454	4,319,511	-	4,319,511	4,309,155	-	10,356	4,072,832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은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에 6개 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유산사산휴가급여・배우자출산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난임치료휴가급여)가 있고, 2025년 전체 집행액 중 약 84.2%인 3조 6,291억 6,900만원이 육아휴직급여로 집행되었음.

[2025년도 모성보호육아지원 관련 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재원	2024년 결산	2025년		2026 계획액
			계획현액	지출	
모성보호육아지원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	2,573,780	4,319,511	4,309,155	4,072,832
출산전후휴가급여		353,689	418,356	416,299	379,160
유산사산휴가급여		2,323	4,095	4,031	2,666
육아휴직급여		2,052,487	3,635,802	3,629,169	3,393,598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157,970	229,432	228,186	268,001
배우자출산휴가급여		7,311	31,709	31,355	26,944
난임치료휴가급여		-	117	114	2,463

자료: 고용노동부

34) 고용보험기금-모성보호육아지원(1345-358)(고용지원정책관)

나. 검토의견

모성보호사업 확대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증가해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재정건전성 제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으로 분리되어 운용되고 있음. 실업급여 계정에서는 구직급여 등의 실업급여사업 및 육아휴직급여 등의 모성보호사업을 수행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에서는 신규고용 촉진·취업알선 등의 고용안정 사업과 직업훈련지원·훈련장비 보강 등의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실업급여 계정에서 모성보호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2001년 육아휴직 제도 도입 당시 모성보호가 국민 전체의 건강과 복지차원에서 사회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라는 인식하에 건강보험에서 지출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된 것임.[35)]

육아휴직급여 등이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되는 재원구조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으로 실업급여 계정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2025년 모성보호급여 지급액 인상 등의 제도개선으로 전년 대비 모성보호급여가 1조 7,354억원 증가하여 실업급여 계정지출에서 모성보호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24.7%까지 증가하였으나,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가 비례해서 증가하지 못하였고 모성보호급여에서 일반회계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4년 15.5%에서 2025년 12.8%로

35) 제도 도입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건강보험의 재정형편상 고용보험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소요비용의 일정 부분을 매년 일반회계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음.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 적용확대를 위한 촉구 결의안 (국회환경노동위원회, 2001.6.)〉

주 문
대한민국국회는 모성보호관련법을 개정하여 우선 고용보험 적용근로여성을 대상으로 산전후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되면서 확대된 30일분의 비용을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형편상 고용보험이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출산·육아는 사회공동의 문제로 산전후휴가급여는 장차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이를 위해서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는 산전후휴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형편상 고용보험이 부담토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소요비용의 일정부분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도록 촉구한다.
2. 정부는 일정 연한이 지난후에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전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면서 그 비용은 일반회계와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중장기적인 재정대책과 제도개선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한다.

감소하였음.

[2015~2026년도 실업급여 계정 중 모성보호급여 비중]

(단위: 억원, %)

구분	실업급여 계정지출(A)	모성보호 급여(B)	비율 (B/A)	모성보호급여		일반회계 전입금 (C)	비율 (C/B)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 급여		
2015년	54,978	8,859	16.1	2,590	6,269	700	7.9
2016년	58,557	8,840	15.1	2,480	6,360	700	7.9
2017년	62,858	9,356	14.9	2,434	6,922	900	9.6
2018년	79,157	11,041	13.9	2,493	8,547	900	8.2
2019년	98,558	13,500	15.1	2,701	10,799	1,400	10.4
2020년	138,860	15,614	11.2	2,942	12,671	1,800	11.5
2021년	144,138	16,850	11.7	2,978	13,872	2,200	13.1
2022년	141,325	20,772	14.7	3,126	17,646	3,000	14.4
2023년	143,307	22,615	15.8	3,342	19,273	3,000	13.3
2024년	151,541	25,738	17.0	3,633	22,105	4,000	15.5
2025년	174,623	43,092	24.7	4,518	38,574	5,500	12.8
2026년 (계획)	165,121	40,728	24.6	4,112	36,616	6,000	14.7

주) 2015~2025년은 결산값(2026년은 계획값)이며 표의 ‘출산전후휴가급여’ 항목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급여,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난임치료휴가급여를 포함하고 ‘육아휴직급여’에는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가 포함됨

자료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계정이 실업의 위험을 완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치된 계정임을 고려할 때, 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의 부담으로 기금 계정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더구나 실업급여계정은 2020~2025년간 「고용보험법」 제8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법정 적립배율(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을 연례적으로 준수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고용보험기금의 지속적인 법정 적립배율 미준수로 인한 재정여력 감소는 모성보호 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계정을 통해 추진되는 다른 사업까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을 늘리는 등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020~2025년 결산 기준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 재정수지 및 적립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수 입(a)	13,628,678 (10,328,678)	14.814,055 (10,840,080)	13,567,529 (13,120,717)	14,387,917 (14,387,917)	14,910,478 (14,910,478)	15,682,341 (15,682,341)
사업비(b)	13,885,952	14,413,779	14,132,507	14,330,660	15,154,139	17,462,266
수지차(a-b)	△257,275 (△3,557,275)	400,277 (△3,573,698)	△564,978 (△1,011,790)	57,258 (57,258)	△243,662 (△243,662)	△1,779,925 (△1,779,925)
연말적립금	3,866,572 (566,572)	4,266,295 (△3,007,680)	3,695,306 (△4,025,481)	3,752,509 (△3,968,278)	3,508,310 (△4,212,477)	1,727,484 (△5,993,303)
적립금배율	0.3 (0.0)	0.3 (△0.2)	0.3 (△0.3)	0.3 (△0.3)	0.2 (△0.3)	0.1 (△0.3)

주) 괄호 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진흥기금(중소복지계정)】

〈지 출〉

12.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내실 있는 융자 사업을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은 저소득 근로자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생활필수자금 융자를 통해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융자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1,063억 4,200만원 중 924억 8,000만원이 집행(집행률 87.0%)되고 138억 6,200만원이 불용되었음.[36)]

[2025년도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생활안정자금(융자)	91,462	106,342	-	106,342	92,480	-	13,862	98,407
생활안정자금(융자)	88,462	103,342	-	103,342	92,438	-	10,904	94,450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3,000	3,000	-	3,000	42	-	2,958	3,957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1996년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2020년 12월에는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하여 융자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체 및 산재가입 1인 자영업자로 확대하였음.

2025년 기준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등은 자신과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소액생계비 총 6종의 융자가 가능하고, 2025년부터는 직접융자 방식외에 이차보전 방식을 신규로 추가 도입하여 2가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36) 근로복지진흥기금-생활안정자금(융자)(3062-306)(근로기준정책관)

[생활안정자금(융자 및 이차보전) 사업 개요[37]]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 분</th><th colspan="2">대상 및 조건</th></tr>
<tr><th>생활안정자금(융자)</th><th>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th></tr>
<tr><td rowspan="2">융자대상</td><td>①의료비
②혼례비
③장례비
④노부모부양비
⑤자녀양육비
* 이차보전 융자: ②~⑤만 해당</td><td>•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의 1/2(’ 25년 252만 원) 이하
* 일용직은 소득요건 비적용</td><td>•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 적용 노무제공자로 한정
* 일용직은 재직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신청일 이전 3개월의 직장건강보험료 납부금액으로 판단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25년 5,025,353만 원) 이하</td></tr>
<tr><td>⑥소액생계비</td><td>•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 휴업·휴직(경영상 이유, 개인 사정), 사업 구조상 이유(계절 사업, 공공근로)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의 1/2(’ 25년 252만 원) 이하
* 일용직은 소득요건 비적용</td><td>-</td></tr>
<tr><td rowspan="6">융자한도</td><td>①의료비
③장례비
*이차보전 융자: ③만 해당</td><td>• 1,000만원</td><td>• 1,000만원</td></tr>
<tr><td>②혼례비</td><td>• 1,250만원</td><td>• 2,000만원</td></tr>
<tr><td>④노부모부양비</td><td>• 2천만원 한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500만원</td><td>• 2천만원 한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500만원</td></tr>
<tr><td>⑤자녀양육비</td><td>• 2천만원 한도 내 자녀 1인당 500만원(7세미만 자녀)</td><td>• 2천만원 한도 내 자녀 1인당 1,000만원(18세미만 자녀)</td></tr>
<tr><td>⑥소액생계비</td><td>• 200만원</td><td>-</td></tr>
<tr><td colspan="3">※ 1인당 총 2,000만원 한도(기존 융자와 이차보전 융자 별도 한도 관리)</td></tr>
<tr><td>금리</td><td colspan="2">• 연 1.5% (신용보증료 연 0.9%)</td><td>-</td></tr>
<tr><td>이차보전 지원율</td><td colspan="2">-</td><td>• 개인신용 대출금리에서 3.0%p 이내 보전</td></tr>
<tr><td>상환</td><td colspan="3">•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td></tr>
</table>

자료: 고용노동부

37) 고용노동부는 ①소득기준 변경(중위소득 2/3이하→1/2이하) ②이차보전 방식의 융자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을 일부개정 하여 2025년 1월 6일 시행하였고, 이후 ①일반융자와 이차보전 융자 한도 분리(각각 2,000만원) ②융자대상 확대(자녀양육비 7세 미만→18세 미만 자녀, 장례비 자녀 포함) ③신청기한 확대(장례비 90일→1년, 혼례비 1년→3년, 자녀양육비 자녀 7세미만→18세 미만 까지) ④ 이차보전 융자종목 신설(노부모부양비, 장례비 추가) ⑤ 이차보전 융자 한도증액(혼례비 2,000만원, 자녀양육비 자녀 1인당 1,000만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을 일부개정 하여 2025년 12월 15일 시행함.

나. 검토의견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생활안정자금 사업의 지원요건 완화에 따라 대위변제 건수 및 금액이 증가 추세임을 고려하여, 내실있는 융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임.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제1회 추경 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규모의 확대를 통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148억 8,000만원의 사업비 추가증액을 통해 1,063억 4,200만원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생활안정자금(융자)의 경우 109억 400만원,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의 경우 29억 5,800만원 등 총 138억 6,200만원(추경증액분의 93.2%)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025년 1월부터 동 사업 시행을 위해 금융기관 선정, 업무협약 체결, 공단 업무처리지침 및 업무매뉴얼 마련, 전산시스템 업무분석・개발・연계・테스트 등 필수적인 준비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절차 추진에 금융기관과의 협의 및 전산 연계 등이 수반되어 일정 기간이 소요되어 2025년 5월부터 사업을 시행하였고,

이차보전의 경우 사업 시행 첫해로 인해 제도 인지도가 낮았고, 금융기관의 신용심사 기준 적용으로 실제 이용 가능한 대상자가 제한되는 등의 요인으로 집행률이 저조하였다고 설명함.

그런데 금융기관 선정 및 전산 개발 소요로 인해 2025년 5월에서야 융자사업 준비가 완료된 점, 이차보전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을 2025년 12월 15일에 개정한 점을 감안하면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준비 및 노력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2021~2025년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목	세목	금액	계획수정 사유
자체변경 (2021.1.12.)	융자금	기타 민간 융자금	20,000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확대로 생계보호 강화
국회의결 (2021.3.25.)	융자금	기타 민간 융자금	50,000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의 경제상황 악화로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규모 확대를 통해 생계안정 지원 강화
자체변경 (2022.1.28.)	융자금	기타 민간 융자금	△2,794	융자사업 증가에 따른 사업수행인력 인건비 등 운영비 증액을 위한 융자금 감액
자체변경 (2022.8.9.)	융자금	기타 민간 융자금	25,000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근로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생활안정 지원 강화
자체변경 (2022.12.8.)	융자금	기타 민간 융자금	7,799	시중 금리인상 등 지속적 경제악화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생활안정 지원 강화
자체변경 (2023.9.27.)	융자금	기타 민간 융자금	20,000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자체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
자체변경 (2024.7.17.)	융자금	기타 민간 융자금	30,000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여파에 따른 경기회복세 둔화로 저소득 근로자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자체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
국회의결 (2025.5.1.)	융자금	기타 민간 융자금	14,880	산불 피해 근로자지원 강화를 위해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규모 확대를 통해 생계안정 지원 강화

자료: 고용노동부

그리고 2019년 생활안정자금(융자)의 대위변제가 3,234건으로 131억 1,900만원의 대위변제금이 지출되었던 것에 비해, 2020년 이후의 융자 사업 확대 영향으로 2023년 대위변제 건수는 4,143건으로 183억 4,600만원의 대위변제금이 지출되었고, 2025년의 경우 대폭 증가하여 12,275건의 대위변제에 대한 496억 9,900만원의 대위변제금 지출이 이루어졌음.

[2019~2025년 생활안정자금(융자) 대위변제 현황]

(단위: 백만원, 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대위변제	건수	3,234	2,483	2,488	3,696	4,143	3,876	12,275
	금액	13,119	10,221	13,176	17,432	18,346	16,301	49,699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025년의 경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보증 규모 확대(2배)[38]후 경기침체 장기화, 원금 상환기간 동시 도래(통상 1년 거치 3~4년 분할 상환) 등에 따른 차주의 상환능력 저하로 연체율 급증[39] 및 대위변제 지출 소요가 증가하였다고 설명함.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의 대위변제 현황에서 보듯이 융자 부실로 인한 근로복지공단의 대위변제 규모의 증가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재정건전성과도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고용노동부는 기존 융자 사업은 보다 취약한 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한편, 2025년에 신규도입한 이차보전 방식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등 내실있는 융자 사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8)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한 보증액 규모 추이(단위: 백만원): (2019) 150,258 → (2020) 322,090 → (2021) 352,157 → (2022) 309,078 → (2023) 306,807 → (2024) 192,945 → (2025) 170,129

39) 연체율(%): (2020)1.76 → (2021)2.45 → (2022)4.13 → (2023)8.50 → (2024)15.11 → (2025)14.38

【근로복지진흥기금(신용보증사업계정)】

〈지 출〉

13.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 대위변제 후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 필요

가. 개 요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40] 및 제26조[41]에 따라 보증·담보여력이 낮은 취약근로자 등에 대한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금융회사를 통해 융자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소득격차 해소와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863억 3,1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42]

[2025년도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신용보증대위변제	31,659	86,331	-	86,331	86,331	-	-	60,315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 사업을 통해 근로복지진흥기금(신용보증계정)이 취약계층 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융자사업은 ①「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에 따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40)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구직 신청한 실업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근로자를 포함한다.)가 금융회사 등에서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등의 융자를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 등과의 계약에 따라 그 금전채무를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대상 융자사업 및 보증대상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1) 「근로복지기본법」
제26조(보증채무의 이행 등)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융자사업을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은 같은 조의 계약 내용에 정하여진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의 계약 내용에 따라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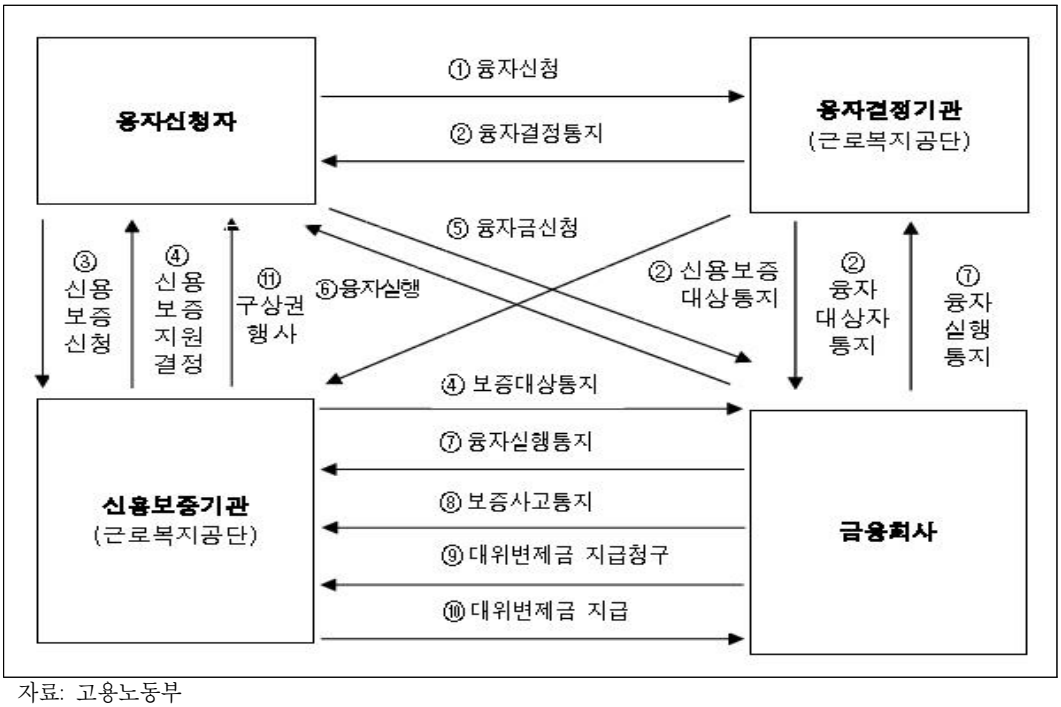
42) 근로복지진흥기금-신용보증대위변제(3064-308)(근로기준정책관)

융자, ②「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 융자,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에 따른 산업재해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④「고용보험법」 제29조에 따른 전직실업자 등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등이 있음.

신용보증사업계정의 보증을 제공받는 융자사업의 집행절차는 다음과 같음. 먼저 대상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생활안정자금이나 직업훈련생계비 등에 대한 융자 및 보증을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요건을 확인하여 융자신청자에게 융자결정 통보를 하고 대행금융기관에게 융자대상자를 통지함. 이후 각 기금으로부터 융자금을 지급받은 금융기관은 융자대상자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대상자의 원리금 상환액을 각 기금에 반납함.[43]

만약 대위변제 청구사유(6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가 발생하면 금융기관은 신용보증계정에 대위변제를 청구하여 이 사업 예산에서 융자원리금을 회수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융자대상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대위변제한 융자원리금을 회수하는 절차로 진행됨.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 집행절차]



자료: 고용노동부

43) 금융회사에는 업무 대행 약정에 따라 융자금리 중 연 0.6%를 업무대행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금리는 기금의 수익으로 귀속됨. 예를 들어, 융자 금리가 연 1.25%인 경우 금융회사는 연 0.6%, 공단은 연 0.65%를 각각 배분받음. 또한 융자 재원은 공단이 정책자금으로 금융회사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금융회사는 대출 재원 조달을 위한 별도의 자금조달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 대출 심사 및 실행 등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임.

나. 검토의견

고용노동부는 향후 신용보증잔액 증가에 따른 대위변제금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므로, 대위변제 후 구상채권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이 사업을 통해 3만 4,833명의 근로자들이 1,701억 3,000만원의 신용보증을 받았음. 사업별로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융자하는 생활안정자금이 가장 큰 규모의 924억 4,800만원의 신용보증지원을 받았고, 다음으로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326억 8,700만원), 고용보험기금의 직업훈련생계비 융자(244억 8,100만원), 산재보험기금의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205억 1,400만원) 순임.

[2021~2026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 내 신용보증사업계정의 융자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백만원, 명,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월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생활안정자금융자 (근로복지진흥기금)	143,946 (40.9)	24,801 (50.0)	220,676 (71.4)	41,639 (76.1)	165,030 (53.8)	30,639 (59.7)	118,234 (61.3)	20,306 (55.5)	92,448 (54.3)	15,781 (45.3)	29,780 (46.1)	5,482 (39.2)
직업훈련생계비융자 (고용보험기금)	173,005 (49.1)	20,383 (41.1)	53,848 (17.4)	8,405 (15.4)	78,953 (25.7)	13,103 (25.5)	25,055 (13.0)	10,053 (27.5)	24,481 (14.4)	12,570 (36.1)	4,405 (6.8)	2,257 (16.1)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산재보험기금)	15,481 (4.4)	1,588 (3.2)	15,636 (5.1)	1,580 (2.9)	15,617 (5.1)	1,637 (3.2)	14,265 (7.4)	1,515 (4.1)	20,514 (12.1)	2,185 (6.3)	2,534 (3.9)	288 (2.1)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임금채권보장기금)	19,724 (5.6)	2,842 (5.7)	18,918 (6.1)	3,080 (5.6)	47,207 (15.4)	5,910 (11.5)	35,391 (18.3)	4,734 (12.9)	32,687 (19.2)	4,297 (12.3)	27,913 (43.2)	5,967 (42.6)
신용보증합계	352,157 (100.0)	49,614 (100.0)	309,078 (100.0)	54,704 (100.0)	306,807 (100.0)	51,289 (100.0)	192,945 (100.0)	36,608 (100.0)	170,130 (100.0)	34,833 (100.0)	64,633 (100.0)	13,994 (100.0)

주) 괄호안의 숫자는 전체에서 해당 융자사업 신용보증 지원금액 또는 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고용노동부

신용보증금액은 2021~2023년 기간 동안 크게 확대되었는데,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 일환으로 2020년부터 취약계층 융자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기금별로 융자지원이 크게 증가하였고, 결과적으로 이들 융자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는 근로복지진흥기금(신용보증사업계정)의 신용보증금액이 증가한 것임.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가 발생하여 금융회사 등이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경

우 「근로복지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대위변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융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보증지원 후 원리금 연체 등의 발생으로 근로복지공단이 금융기관에 지급한 대위변제금도 큰 규모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에는 전년 대비 2.9배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였음.

[2022~2026년도 사업별 대위변제금 회수 및 지급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월 말	
	회수	지급	회수	지급	회수	지급	회수	지급	회수	지급
생활안정자금융자 (근로복지진흥기금)	5,088	17,432	4,742	18,346	5,147	16,301	5,961	49,699	1,244	7,313
직업훈련생계비융자 (고용보험기금)	1,479	8,782	1,784	12,510	2,139	10,975	2,794	32,186	600	4,614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산재보험기금)	896	1,399	747	1,739	780	1,529	728	1,527	90	183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임금채권보장기금)	2	92	21	439	86	750	142	2,390	40	382
합 계	7,465	27,705	7,294	33,034	8,152	29,555	9,625	85,802	1,974	12,492

자료: 고용노동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대위변제금에 대한 회수율은 저조한 수준이며, 2024년에는 회수관리가 불가능한 불납결손액이 74억 6,300만원 발생하였고, 2025년의 경우 63억 3,400만원의 불납결손액과 761억 5,6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음.

[2020~2026년(2월 말) 구상채권 수납액 및 미수납액 등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징수결정액 (A)	수납액(B)	수납률 (B/A)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2020	15,451	6,908	44.71	8,543	3,361
2021	18,418	7,147	38.80	11,271	4,170
2022	27,711	7,756	27.99	19,955	6,532
2023	33,035	7,320	22.16	25,715	6,942
2024	29,555	8,173	27.65	21,382	7,463
2025	85,803	9,647	11.24	76,156	6,334
2026년 2월 말	12,492	1,975	15.81	10,519	-

자료: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신용보증을 통해 실행된 대출에 대하여 대출자가 원리금을 연체하고 금융회사로부터 보증사고자로 통지된 이후에도 연체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됨.

공단이 금융회사에 연체된 원리금을 대위변제하면 해당 채권은 공단으로 이전되며, 공단은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다만, 채무자가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절차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채권추심을 중단하고, 채무조정 결과에 따른 상환계획에 따라 구상채권을 회수하고 있는데, 구상권은 민사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 민사집행 절차를 거쳐 구상채권을 회수하고 있음.

최근 구상채권 회수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증가한 융자 건의 거치기간 경과(통상 1년 거치 3~4년 분할 상환)와 2022년 이후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상환능력이 저하된 취약근로계층의 대위변제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설명함.

코로나19로 2021~2023년에 신용보증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향후 상당기간 2025년과 같은 대규모 대위변제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는 기금 재정의 안정성 확보 및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지 출>

14. 산재보험급여: 업무상 질병의 평균 승인 처리기간 개선 필요

가. 개 요

‘산재보험급여’ 사업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노동자 및 그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8조 43억 2,600만원 중 8조 43억 2,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200만원이 불용되었음.[44]

[2025년도 산재보험급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산재보험급여	8,004,326	8,004,326	-	8,004,326	8,004,324	-	2	8,146,300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 사업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수행되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제1호),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제2호),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제3호),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제4호) 등을 수행함.

산재보험의 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의 8종으로 구분됨.

2018년 이후 산재보험의 보장성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1년 소프트웨어 기술자, 2022년 유통배송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음.

44)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산재보험급여(4051-350)(산업보건보상정책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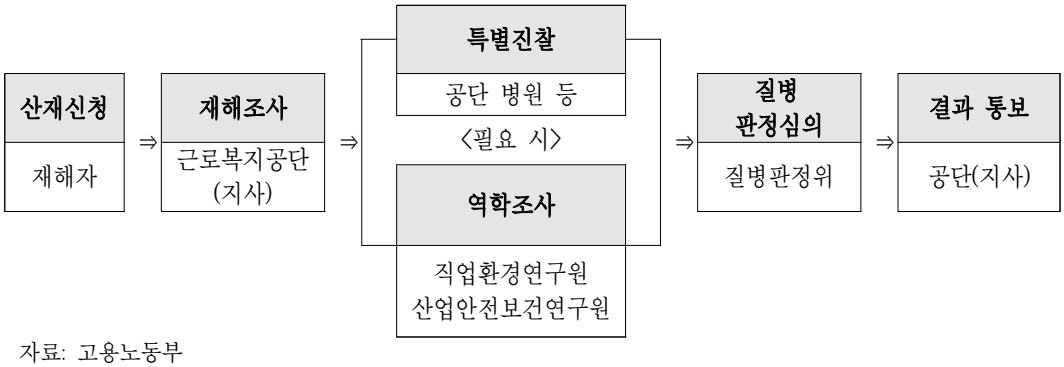
나. 검토의견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처리기간이 2021년 175.8일에서 2025년 244.7일로 지연되고 있으므로, 적기에 산재승인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으며,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함.

이 중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승인 여부는 근로자의 산재신청 이후 공단의 재해조사와 (필요 시) 공단 병원에서의 특별진찰, 직업환경연구원이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한 후, 질병 판정심의 절차를 거쳐 당사자에게 통보됨.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업재해 승인업무 처리 절차]



자료: 고용노동부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승인 평균처리일 수는 2021년 175.8일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244.7일로 2021년의 175.8일 대비 39% 이상 증가하였음.

[2021~2025년 산재신청 후 평균 처리일 수]

(단위: 일)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체 평균처리일수	43.4	47.6	55.0	63.9	81.1
업무상 사고의 평균처리일 수	14.8	15.5	16.2	17.4	18.5
출퇴근재해의 평균처리일 수	20.8	20.3	20.0	20.8	22.8
업무상 질병의 평균 처리일 수	175.8	182.0	214.5	227.7	244.7

자료: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질병의 산재 승인이 지연되는 원인을 ① 법원 판결로 소음성 난청의 산재신청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사업장 퇴사 시점이 아닌 진단 시점으로 변경되어 접수 건수가 폭증하였고,[45] ② 새로운 질병 및 유해인자의 증가에 따른 역학조사 및 특별진찰 의뢰 건수 증가로 설명함.[46]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승인 및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재해노동자는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를 통한 경제적 지원을 적절한 시기에 받을 수 없어 의료비와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이후 재활도 지연되어 사회 복귀가 늦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 전문조사, 특별진찰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단순·반복업무의 전산화, 역학·전문조사와 특별진찰 위탁물량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수립한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여 신속·공정하게 업무상 질병의 승인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45) 소음성난청 접수건수: ('18) 3,294건 → ('20) 9,090건 → ('22) 12,590건 ('18년 대비 282% 증가)

46) ▲ 역학조사 의뢰건수(누적): ('18) 944건 → ('20) 1,136건 → ('22) 1,202건 → ('24) 741건
▲ 특별진찰 의뢰건수(누적): ('18) 5,398건 → ('20) 9,352건 → ('22) 24,223건 → ('24) 43,237건

15. 산재병원지원: 경영성과 개선 노력 필요

가. 개 요

‘산재병원지원’ 사업은 산재근로자의 적기 치료 및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출연 방식으로 전국 15곳의 산재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796억 5,400만원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47]

[2025년도 산재병원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산재병원지원	79,654	79,654	-	79,654	79,654	-	-	130,186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5년 산재병원을 전국에 15개소 운영하였으며, 3,685명의 환자가 산재병원을 이용함.

[2025년도 산재병원 운영 현황]

(단위: 명)

연번	병원명	지정년도	산재환자 현황(연도말 기준)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	인천병원	1983	971	921	927	772	834
2	안산병원	1985	628	554	657	638	631
3	창원병원	1979	269	347	548	364	312
4	대구병원	2012	293	376	401	311	329
5	순천병원	1985	275	222	221	223	170
6	대전병원	1991	600	642	598	409	375
7	태백병원	1977	341	334	319	306	301
8	동해병원	1983	404	464	457	295	285
9	정선병원	1988	167	162	164	170	164
10	경기요양병원	1985	43	117	92	98	109
11	태백요양병원[48]	2024	-	-	-	-	-
12	서울의원	2019	46	67	48	45	61
13	광주의원	2020	79	45	84	55	49
14	부산의원	2022	-	57	55	46	50
15	구미의원	2025	-	-	-	-	15
산재병원 전체			4,116	4,308	4,571	3,732	3,685

자료: 고용노동부

47)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산재병원지원(4054-350)(산업보건보상정책관)

나. 검토의견

산재병원의 경우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간에서 수익성이 낮아 기피하는 산재장기요양환자(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진폐환자, 사지마비환자 등)를 치료하고 있으나, 과도한 장기요양환자의 수용은 산재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므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장기요양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과 방안을 마련하여 산재병원 운영의 효율화와 재정건전성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2021~2025년 산재병원의 수입 및 지출 현황을 보면 비용을 보면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수익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2025년 적자는 △307억원으로 전년대비 154% 이상 증가하였음.

[2021~2025년 산재병원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손 익(A-B)			△53	112	282	△121	△307
수익(A)	합 계		3,395	3,665	3,802	3,596	3,840
	의료수익	소 계	3,048	3,194	3,048	3,356	3,551
		입 원	2,035	1,965	1,744	2,019	2,056
		외 래	796	992	1,062	1,086	1,240
		산업보건	217	237	242	251	255
	의료외 수익		347	471	754	240	289
비용(B)	합 계		3,448	3,553	3,520	3,717	4,147
	의료비용	소 계	3,268	3,509	3,499	3,693	4,135
		인건비	2,410	2,575	2,610	2,803	3,192
		운영비	538	627	612	574	943
		재료비	320	307	277	316	343
	의료외 비용		180	44	21	24	12

자료: 고용노동부

산재병원 적자가 심화되는 원인 중 하나는 전체 수용 환자 중 장기요양(입원 및 통원)환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보임.[49] 산재 근로자가 산재병원에 입원하는 기간이

48)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태백시 기반 산업인 석탄산업이 사양화 및 태백병원 진폐·일반산재 환자 감소로 유휴병상이 발생하고, 산재환자 및 지역주민의 고령화로 인해 요양병원 설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
- 이에 의료취약지 필수 의료 제공 차원에서 지자체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아 태백병원 내 유휴 병상(동일 건물 내 1개층)을 요양 병상으로 전환하여 2024. 2월부터 태백요양병원을 개원·운영하고 있음.
- 현재 태백병원이 태백시 관내 산재환자 진료를 전담하고 태백요양병원은 산재환자외 일반 시민에 대한 요양 진료를 하고 있어, 태백요양병원의 산재환자는 실적이 없음.

49) 고용노동부는 산재병원 적자의 원인은 ① 인프라 노후(시설·장비)에 따른 의료서비스 경쟁력 약화, ② 지방

길어질수록 진료 단가가 하락하고,[50] 장기요양환자의 병상 장기 점유로 인해 병상회전률이 저하되면 신규환자 수용 여력이 감소하여 실질 수익이 저조하게 나타나게 됨.

2021~2025년 산재병원 환자를 요양기간별로 보면, 10년이 넘게 요양을 받는 근로자가 매해 약 25% 정도이며, 매해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나 산재병원 환자의 약 30% 이상이 5년 넘게 산재병원에서 요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21~2025년 요양기간별 산재병원 환자 현황]

(단위: 명, %)

요양기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6개월 이하	600	14.6	632	14.7	654	14.3	646	17.3	735	19.9
6개월 초과 1년 이하	866	21.0	812	18.8	830	18.2	676	18.1	774	21.0
1년 초과 2년 이하	596	14.5	734	17.0	816	17.9	562	15.1	479	13.0
2년 초과 5년 이하	532	12.9	605	14.0	750	16.4	559	15.0	538	14.6
5년 초과 10년 이하	415	10.1	439	10.2	455	10.0	343	9.2	311	8.4
10년 초과	1,107	26.9	1,086	25.2	1,066	23.3	946	25.3	848	23.0
전체	4,116	100.0	4,308	100.0	4,571	100.0	3,732	100.0	3,685	100.0

자료: 고용노동부

2024년 2월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제도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장기요양환자의 요양기간 관리에 대해 ① 상병별 표준요양기간 등 기준없이 진료계획서를 승인·연장하였고, ② 진료계획서 승인·연장의 적정성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 절차가 부재하다고 지적하였음.[51]

또한 장기요양 환자 감소를 위한 평가체계 측면에서는 산재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점검 시 장기요양환자 감소를 위한 평가요소 및 장기요양환자에 대한 현황분석과 통계관리가 부재한 문제가 있으며, 치료종결일 판단에서는 요양환자 진료계획서 연장심

의사 구인난, ③ 코로나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입원환자 소산) 후 환자회복 속도 둔화, ④ 많은 장기요양환자 등 다양하다고 설명함.

50) 고용노동부는 장기입원은 수술, 집중재활 등 고부가가치의 의료행위가 적어 수익성이 낮다고 설명하였음. 예를 들어 1년미만 환자의 경우 진료단가가 1일 평균 41만원이나, 5년 이상 환자의 경우 1일 평균 27만원임.

51) 고용노동부는 산재병원에서의 요양 연장 변경횟수에 대해 별도의 제한은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7조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상병 상태, 치료 예정 기간 및 치료 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서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자문의사의 자문 또는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함.

사를 위한 자문의사회의 시 치료종결일에 대한 기준 부재로 요양환자별 치료종결일의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지적함.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민간병원에서 요양이 곤란한 장기요양 환자(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진폐환자, 사지마비환자 등)들을 수용하고 있는 산재병원의 공적 역할과 산재근로자 개인마다 상병의 정도 및 상태가 다양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입장임.

다만 적정 요양관리를 통해 10년 이상 장기요양환자 비중이 감소[52]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있는바, 향후 장기요양환자 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산재병원의 역할 제고 및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도모하겠다고 설명함.

그러나 요양기간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별도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환자관리 방안으로 보이고,[53] 근로자의 조기 직장 복귀를 지원하는 산재병원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장기요양환자 감소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관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집중적인 전문재활치료를 통해 치료효과를 높이고 장해를 최소화하여 직업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산재보험 재활인증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 비용 없이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집중재활치료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재활치료 분야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여 빠르게 직업과 사회로 복귀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집중재활치료 전체 참여인원]

(단위: 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103	1,666	2,421	2,888	2,940	3,103	3,078	4,134

자료: 고용노동부

따라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장기요양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과 방안을 마련하여 산재병원 운영의 효율화와 경영성과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52) 2021년 26.9% → 2024년 25.3% → 2025년 23.0%

53) 고용노동부는 표준요양기간 기준은 없으나, 산재근로자의 요양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의학자문 지원모형’을 구축하여 요양관리에 활용 중이라고 설명함.

16. 산재보험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 국가핵심정보시스템 재해복구센터 구축 지연에 따른 사업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산재보험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은 산재마루시스템 개편 등 고도화, 전산장비 유지관리, 스마트산재보상시스템 구축, 국가핵심정보시스템 재해복구센터 구축 등 산재보험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연속성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정보화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191억 1,400만원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54]

[2025년도 산재보험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산재보험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19,114	19,114	-	19,114	19,114	-	-	23,191
국가핵심정보시스템 재해복구센터 구축	2,240	2,240	-	2,240	2,240	-	-	6,200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가핵심정보시스템 재해복구센터 구축’은 근로복지공단 주전산센터가 재난 발생으로 가동 중단될 경우, 4시간 이내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전산시스템을 재가동하기 위한 사업임.

이 사업은 2024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이후 2025년부터 센터기반구축을 거쳐, 2026년에는 고용 및 산재보험 등 1등급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재해복구센터를 구축할 계획인데, 2025년에는 22억 4,000만원이 편성·집행됨.[55]

54)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산재보험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4057-350)(산업보건보상정책관)

55) 국가핵심정보시스템 재해복구센터 구축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시스템 2개 시스템과 관련되는바, 2025년 관련 예산이 산재기금의 산재보험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의 내역사업 22억 4,000만원, ‘고용보험적용부과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고용보험기금, 1083-355)의 내역사업 ‘국가핵심정보시스템 재해복구센터 구축’ (22억 4,000만원)으로 나누어 편성됨.

[국가핵심정보시스템 재해복구센터 구축 사업 개요]

○ (추진기간) 2024년~2027년 ○ (총사업비) 278억 300만원 ○ (추진계획) - 2024년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 추진을 통한 종합계획 수립(3억 4,400만원) - 2025년 공단 재해복구센터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44억 8,000만원) - 2026년 산재·고용보험 재해복구시스템 신규 구축(124억원) - 2027년(예상) 퇴직연금, 근로복지 재해복구시스템 신규 구축(105억 7,900만원) ※ 2025년·2026년 예산은 산재기금(50%)·고용보험기금(50%) 분담, 2027년 예산은 근로복지기금 등과 비율별 분담

자료: 고용노동부

나. 검토의견

고용노동부는 국가핵심정보시스템 재해복구센터 구축 사업의 2025년 기반시설 구축 지연으로 2026년도 계획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이 순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당초 국가핵심정보시스템 재해복구센터 구축 사업의 추진 일정과 관련하여, 2025년 기반시설 구축 후 2026년과 2027년에 1~2등급 위주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고, 2028년 이후 3~4등급 시스템 중 중요도를 고려하여 재해복구시스템의 확대 구축을 실시하는 등 운영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었음.

단계별 사업 추진일정을 보면, 고용노동부는 2025년 1분기에 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구축에 착수하여, 2~3분기에 하중 및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하고, 3분기부터 기반 설비 구축을 시작하여 2025년 내 재해복구센터 구축을 완료할 것을 목표로 하였음.

그런데 2025년 사업 집행실적을 보면, 2025년도 계획액 22억 4,000만원이 출연금으로 근로복지공단에 교부되었는데 실집행액은 15억 2,100만원에 불과하고, 7억 1,900만원은 이월되어 실질적인 센터 구축을 위한 공사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2025년 국가핵심정보시스템 재해복구센터 구축 사업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국가핵심정보시스템 재해복구센터 구축	2,240	2,240	2,240	2,240	1,521	719	-	67.9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당초 국가핵심정보시스템 재해복구센터의 구축을 위해 신축을 계획하였으나, 신축하는 경우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 타 기관 등 소유 건물의 임차 시 비용 과다 및 보안상 문제 발생 등으로 부적합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2025년 3월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으로 위치를 최종 확정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건축기획 등 이후 절차가 지연되었다고 설명함.

그러나 건축설계 완료 후 공사 입찰공고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계약하고 착공해야 하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5항[56]에 따라 입찰공고만 최소 40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 그 외에 제안요청서 작성, 조달청 협의, 낙찰자 결정 후 협상 및 계약과정을 고려하면 통상 2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용노동부의 예상 기간보다 착공 및 완공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고, 2026년 예정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도 순연되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국가핵심정보시스템 재해복구센터 구축 사업의 2025년 기반시설 구축 지연으로 2026년도 계획에 따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이 순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산재보험 등 업무가 재난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5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17.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 온열질환 예방장비 설치지원 사업의 관리 미흡

가. 개 요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은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급성중독 및 직업성 질병예방의 기본이 되는 장비 및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4,967억 9,200만원 중 4,965억 2,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2억 7,100만원이 불용되었음.[57)]

[2025년도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481,792	496,792	-	496,792	496,521	-	271	537,093
건강일터 조성지원	35,825	50,825	-	50,825	50,824	-	1	40,825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은 폭염재난 등의 대응설비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폭염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58)]이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 안착을 위해 사업장의 수요가 높은 온열질환 예방 장비(이동식에어컨·산업용선풍기·그늘막 등) 지원을 4,762개소에 추가 지원을 계획하였고, 이에 따라 2025년 제2회 추경 시 150억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여 집행하였음.

이 사업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여 추진됨.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투자계획과 함께 비용지원을 신청하면, 공단에서 투자계획을 확인한 뒤 지원

57)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클린사업장 조성 지원(4151-350)(산업안전예방정책관)

58)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7.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금을 결정하고, 사업주가 투자계획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도입하여 시설을 개선한 뒤 공단에서 이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2025년도 건강일터조성지원 사업 중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 사업 집행절차]

비용지원 신청	▶	투자계획 확인	▶	지원금 결정	▶	시설 개선	▶	투자완료 확인	▶	지원금 지급	▶	사후관리
사업주		공단		공단		사업주		공단		공단		공단 /위탁기관

자료: 고용노동부

나. 검토의견

고용노동부는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을 신속히 집행했으나, 공급 업체의 냉방능력 과대 표기 등 부정수급을 방치한 관리 소홀이 지적된 만큼, 향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보조금 집행 전 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2025년 제2회 추경을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의 폭염 취약업종[59] 사업주에게 2,000만원을 한도로 이동식 에어컨 및 산업용선풍기 또는 그늘막 같은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 사업을 실시함.

[2025년도 건강일터조성지원 사업 중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 품목]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그늘막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신속한 장비 공급을 위해 재정지원 신청 및 심사 등 일정을 단축하여 가장 무더운 8월 전까지 사업장에 보급이 가능하도록 사업절차를 간소화하였고,[60] 보

59) 건설업, 기계·금속·화학·조선 등 제조업, 물류·유통업, 폐기물처리업, 외국인 다수 고용 농축산업 등

60) 고용노동부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추가 지원이 확정되기 전 사업절차를 단축하여 폭염이 본격 시작되

조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생략하고 사업주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8월 중 보급 완료하였다고 설명함.

[2025년 추경 증액분에 대한 재정지원 절차 간소화 사항]

(본예산) 공고 및 신청(4주) → 지원사업장 선정(2주) → 보조금 지급결정(2주) → 장비 구매・설치(4주) (추경) 공고 및 신청, 즉시 지원사업장 선정 및 보조금 지급 결정(2~3주) → 7월 하순부터 장비 구매・설치

자료: 고용노동부

그런데 최근 증가하는 폭염 산재[61]에 대응하고, 추경 편성 예산의 연내 집행 등을 위해 빠른 집행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적절해 보이나, 온열질환 예방장비 업체의 부정수급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온열질환 예방장비에 대한 규격 확인 및 검수, 해당 장비공급 업체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 수립 등에 대해서는 업무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2025년 온열질환 예방장비 업체의 부정수급 현황]

구 분	부정수급 관련 업체 수	온열질환 예방장비 냉방능력 과대표기에 따른 초과지급 현황		
		사업장수(개소)	수량(대)	초과 지급금액(원)
온열질환 예방장비	14개	1,761	3,699	727,767,000

자료: 고용노동부(2025.12월 기준)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추가 세부조사 결과(2026년 6월 말 기준), 장비의 냉방능력을 과대표기한 제조사는 총 18개사, 초과 지급액은 약 87억원 규모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제조사는 12개사라고 밝힘.

아울러 참여제한 처분 예정 제조사를 대상으로 청문 등 소명 절차를 거쳐 부정수급 여부를 최종 확정한 후, 동 사업 참여제한 및 초과지급액 환수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

는 8월 전까지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최대한 신속하게 보급하였다고 설명함.

61) < 2018~2024년 폭염 관련 산재 현황 >

(단위: 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사망	사망외	사망	사망외	사망	사망외	사망	사망외	사망	사망외	사망	사망외	사망	사망외
12	53	2	18	2	16	3	22	7	21	3	30	2	61

자료: 고용노동부

만약 기한 내에 자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강제 환수를 위한 법적 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함.[62)]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에 온열질환 예방장비 공급 업체가 온열장비(이동식 에어컨)의 냉방능력 과대표기 등의 방법으로 다수 업체에서 부정수급이 적발된 만큼,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전담 인력·부서 확충 등 보조금 집행 전 과정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봄.

62) 2025년도 사업에 참여한 제조사를 대상으로 조사 결과 부정수급 제조사는 14개사, 7.3억원의 부당이익 확인
- 사업참여제한 통보(2025.12.30.) 및 이의제기에 따른 심사위원회 개최(2026.1.30.)
- 심사 결과 14개 제조사는 2020년~2024년도 사업에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어 2020~2024년도 추가 조사 후 최종 처분조치하기로 결정함.

18. 산재예방시설 건립 사업: 공공안전체험교육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 노력 필요

가. 개 요

‘산재예방시설 건립’ 사업은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및 리모델링 등으로 산재예방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42억원 중 41억 9,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100만원이 불용되었음.[63)]

[2025년도 산재예방시설 건립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산재예방시설 건립	4,200	4,200	-	4,200	4,199	-	1	11,395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현장 중심의 안전교육 확대를 위한 안전체험교육장은 2026년 5월 현재 8개 중 3개가 시설 노후화 및 안전문제로 운영이 중단된 상황이므로, 고용노동부는 안전체험교육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 전략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교육의 내용 및 체계를 정비하는 세부과제를 설정하였으며,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제1호[64)]에 따라 설치된 8개 공공안전체험교육장을 운영 중임.

---

63)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산재예방시설 건립(4154-351)(중대재해감축로드맵이행추진단)

64)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 · 운영)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지도시설, 연구시설 및 교육시설

익산 안전체험교육장은 2024년 신규건립을 완료하여 현재 정상 운영 중이고, 중부 안전체험교육장의 경우 2020년 1월 운영을 중단한 이후 2025년 12월에 재개관하여 운영 준비 중에 있음.

반면 경남·경북·충청지역의 안전체험교육장의 경우 코로나 확산(2020~2021년) 및 구조물 노후화(2023년 정밀안전점검결과 D등급으로 운영 중단)로 인해 교육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상황이며, 2025년에는 제천·담양·여수·익산의 4개 안전체험교육장만 운영되었음.[65]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경남·경북 지역 등의 안전체험교육장이 운영 중단됨에 따라 해당 권역 노동자들의 체험교육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부터 경남·경북 지역의 안전체험교육장에 대한 시설개선을 위한 건립 사업에 착수(2030년 준공 목표)하였다고 설명함.

[연도별 공공안전체험교육장 교육인원]

(단위: 명)

교육장	위치	개장일	운영중단 시점	2021	2022	2023	2024	2025
중부	인천 부평구	'97.05.	'20.01.	-	45	865	-	-
경남	경남 김해	'02.06.	'24.01.	-	-	-	-	-
경북	경북 경산	'08.02.	'24.01.	-	-	-	-	-
충청	충남 공주	'09.04.	'24.01.	23	519	21	-	-
제천	충북 제천	'19.03.	-	-	1,763	2,868	4,987	5,165
담양	전남 담양	'23.05.	-	-	-	2,065	4,295	4,950
여수	전남 여수	'23.12.	-	-	-	-	8,775	9,942
익산	전북 익산	'24.12.	-	-	-	-	-	8,891
합 계				23	2,327	5,819	18,057	28,948

자료: 고용노동부

또한 사업주들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민간안전체험교육장(2026년 6월 말 기준 52개 교육장)에서도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주로 대기업 위주로 해당 기업의 업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다양한 업종의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65)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시 「안전보건교육규정」은 사업주는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체험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게 해당 교육시간을 2배로 인정하여 연간 정기교육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안전체험교육장 이용 시 교육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음.

의 안전체험교육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공공 안전체험교육장과 달리 비용이 소요되어 일부 회사의 근로자들만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경우가 있어 공공 안전체험교육장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임.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의 감축 등을 위해 실질적인 대처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안전체험교육장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산업구조 변화, 기술 발전, 새로운 위험요인 발생 등으로 기존의 안전체험교육장 운영 체계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최신 기술을 반영하는 체험교육 콘텐츠 고도화, 체험교육 운영 방식 개편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임금채권보장기금】

〈지 출〉

19. 대지급금 지급 사업: 대지급금 회수율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대지급금 지급’ 사업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여 체불근로자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7,190억 9,200만원 중 6,885억 1,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7%)되고, 305억 7,300만원이 불용되었음.[66)]

[2025년도 대지급금 지급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대지급금 지급	529,346	719,092	-	719,092	688,519	-	30,573	746,068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대지급금은 법원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기업의 파산 또는 도산을 인정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과 기업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확인서를 받아 청구할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으로 구분됨.

66) 임금채권보장기금-대지급금 지급(3051-300)(근로기준정책관)

[대지급금 제도 개요]

구 분		지원요건	지원내용 및 한도
도산 대지급금		[사업주] ①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②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 ③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도산등사실인정 [근로자]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파산·회생·도산인정 신청일 등	[지원내용] 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67](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②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지원한도] 최대 2,100만원 (연령별 차등, 월별(연별) 상한액 존재)
간이 대지 급금	퇴직자	[사업주] ①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②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 영위 ③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 임금등 확인 [근로자] (확정판결)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제기 또는 (체불확인서) 1년 이내 진정 제기	[지원내용] ① 퇴직일 기준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②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지원한도] 1,000만원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재직자	[사업주] ①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② 소송 또는 진정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 영위 ③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 임금등 확인 [근로자] ① 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 (일용근로자 제외) ②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110% 미만 ③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확정판결의 경우) 또는 1년 이내 진정(체불확인서의 경우) 제기	[지원내용]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지원한도] 700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67) 2026년 8월 20일부터 최종 6개월분의 임금 지급으로 변경될 예정임.

나. 검토의견

대지급금 회수 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대지금금 회수를 철저히 하여 회수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대지급금 지급액의 규모는 2020년 5,796억 9,000만원에서 2025년 6,845억 1,1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대지급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어 누적 대지급금 회수율은 2020년 32.8%에서 2025년 29.7%로 감소하였음.

2025년 12월말 기준으로 누적 대지급금 중 불납결손액을 제외한 미수금은 4조 429억 8,000만원으로 2020년 2조 4,921억 7,600만원 대비 1조 5,508억 400만원(62.2%) 증가하였음.

[2020~2025년 대지급금 지급 내역 및 사업 회수 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당해년도 대지급금 지급액	579,690	546,571	536,864	686,905	724,207	684,511
당해연도 대지급금 지급액 중 미수금	457,207	398,323	383,623	538,773	565,979	505,247
당해연도 대지급금 회수율	21.1	27.1	28.5	21.6	21.8	26.2
누적 대지급금 지급액(A)	5,153,742	5,700,313	6,237,177	6,924,083	7,648,289	8,332,800
누적 대지급금 회수금액(B)	1,689,864	1,838,112	1,991,353	2,139,485	2,297,714	2,476,977
누적 대지급금 지급액 중 미수금	3,463,878	3,862,201	4,245,824	4,784,598	5,350,575	5,855,823
불납결손액 제외	2,492,176	2,750,155	3,090,740	3,329,359	3,700,423	4,042,980
누적 대지급금 회수율 (B/A)	32.8	32.2	31.9	30.9	30.0	29.7

주) 누적 대지급금 회수율은 당해연도 12월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고용노동부는 간이대지급금 도입(2015.7월), 1인당 상한액 인상(기존 400 → 현행 1,000만원, 2019.7월), 경기불황 장기화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액 급증[68]으로 전체 누적 회수율은 하락 추세에 있고, 체불사업장 특성상 무재산, 폐업 사업장 비중이 높으며, 특히 변제능력이 낮은 5인 미만 영세 사업주 비중이 높아 변제금 회수에 구조적 한계[69]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함.

68) 지급액(억원): (2015) 2,979 → (2019) 4,599 → (2021) 5,466 → (2024) 7,242 → (2025) 6,845

대지급금 지급 후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금액은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주 수입원으로, 회수가 적기에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고, 임금채권보장제도 또한 유지할 수 있음.[70]

그러나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경우 대지급금 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지급금 회수가 저조하고, 2020~2025년간 매해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 적립금의 규모가 2020년 8,340억 3,200만원에서 2025년 2,765억 9,6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기금이 고갈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회수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71]

[2020~2025년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입·지출 및 적립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수입(A)	515,629	523,876	565,385	617,255	663,021	736,848
지출(B)	640,374	627,414	600,342	792,305	836,242	807,518
사업비지출	627,195	613,715	584,138	773,028	818,023	789,845
대지급금 지급액	579,690	546,571	536,864	686,905	724,207	684,511
수지차 (A-B)	△124,745	△103,538	△34,957	△175,050	△173,221	△70,670
적립금	834,032	730,494	695,537	520,487	347,266	276,596
여유자금	629,067	626,307	590,558	416,886	292,690	270,746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금	2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	0
한국은행 예치금	4,965	4,188	4,980	3,601	4,576	5,850

주) 적립금 = 여유자금+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한국은행 예치금
자료: 고용노동부

69) 2025년 말 기준 미납사업장 현황: 무재산(72.8%), 폐업(70.9%), 5인 미만 영세 사업장(68.5%)

70) 대지급금 지출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도 있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50인 미만(2027.1.1.부터 1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퇴직급여가 사외에 적립이 되어 근로자의 퇴직급여 체불이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대지급금 수요도 완화될 것으로 보임.

71) 고용노동부는 ①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보장업무 담당인력 보강 및 효율적인 배치, ② 변제금 미납 사업주의 미납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하고, 오래된 악성채권은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회수업무를 효율화, ③ 변제금을 일시납부하기 어려운 사업주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 ④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성화하여 대지급금보다 사업주 융자를 먼저 활용하도록 유도해 변제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함.

20. 체불청산지원 융자 사업: 체불사업주 미상환 융자금 회수율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체불청산지원 융자’ 사업은 경영 애로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863억 5,600만원 중 859억 1,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5%)되고, 4억 4,500만원이 불용되었음.[72)]

[2025년도 체불청산지원 융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체불청산지원 융자	70,352	86,356	-	86,356	85,911	-	445	70,635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체불청산지원 융자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① ‘체불사업주 융자’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을 체불하였으나 체불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융자이고, ② ‘체불근로자 융자’는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또는 재직중인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융자 사업임.

72) 임금채권보장기금-체불청산지원 융자(3054-304)(근로기준정책관)

[2025년 체불청산지원 융자 사업 개요]

구분	체불사업주 융자('12.8월~)	체불근로자 융자('21.6.9. 시행)
지원형태	융자	융자
지원대상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을 체불하였으나 체불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사업자에서 퇴직한 근로자 또는 재직중인 근로자
지원요건	6개월 이상 가동	① 융자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1개월이상 임금체불 ② 체불확인서 필요
이자율	(담보) 2.2%, (신용) 3.7%	1.5%
융자금액	원칙적으로 근로자 체불액만큼 융자 (사업장 1개소당 1억5천만원, 근로자당 1천5백만원 한도)	총 체불금액에서 대지급금 지원금액을 제외한 체불금액 (1천만원 한도)
융자상환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분할상환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자료: 고용노동부

나. 검토의견

고용노동부는 융자금 상환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채권 분석을 통해 회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회수를 추진하는 등 미상환 융자금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최근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업주에게 그 책임이 있으므로 정부가 임금등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보다 사업주가 융자 등을 통해 임금체불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여 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음.[73)]

이렇듯 이 사업은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융자제도 지원요건 완화 등 제도 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향후 예산 규모도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융자 실행 이후 융자금 상환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사업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73) 2023. 3. 8. (2023. 7. 1. 시행) 사업주 융자제도의 사업장 요건 완화, 융자 지급한도 확대, 상환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

그런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체불사업주 융자 회수 현황을 살펴보면, 누적 미상환액의 경우 2021년 263억 8,600만원에서 2025년 540억 2,100만원으로 늘어나 약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바, 융자 집행액이 증가하면서 상환되지 못한 융자금 또한 함께 증가한 것이 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2021~2025년 체불사업주 융자 회수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융자액	누적 융자액	상환 예정액	누적상환 예정액(a)	실제 상환액	누적 상환액(b)	누적 미상환액 (a-b)
2021	21,255	94,111	17,058	56,190	9,254	29,804	26,386
2022	14,259	108,370	19,418	75,608	13,247	43,051	32,557
2023	25,579	133,949	18,522	94,130	10,974	54,025	40,105
2024	39,806	173,755	15,698	109,828	7,480	61,505	48,323
2025	53,224	226,979	11,651	121,479	5,953	67,458	54,021

자료: 고용노동부

누적 미상환금액의 증가는 경기 영향에 따른 개별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융자금 상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연체된 채권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융자 규모가 증가 추세에 있고, 융자실행 요건의 완화 및 제도 활성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융자금 누적 미상환 금액 또한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융자 실행 이후 융자금 상환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채권 분석을 통해 회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회수를 추진하는 등 미상환 융자금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수 입〉

21. 장애인고용기금: 장애인 고용 지원 정책 확대 필요

가. 개 요

「국가재정법」상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써 설치하는 특정자금[74]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75]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운영, 고용장려금의 지급,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주된 수입 재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2조의2, 제33조 및 제69조[76]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며, 이외에 여유자금 자산운용 · 예탁운용 등에 따른 수입 및 이자 수입 등의 수입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74)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7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8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운영, 고용장려금의 지급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7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의 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69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33조와 제35조에 따른 부담금·가산금 및 연체금

나. 검토의견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여유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여유자금의 활용을 통한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수입 및 지출 현황을 살펴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8%)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사업주들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자체수입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

[2021~2026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수입		지출(A)					사업비 비중
		장애인 고용부담금		사업비(B)		운영비	내부지출·여유자금 운용	
					고용장려금			
2021	1,717,843	767,611	1,717,843	610,819	252,191	75,029	1,031,995	35.6
2022	1,925,696	763,688	1,925,696	693,356	269,790	78,838	1,153,501	36.0
2023	2,095,985	829,580	2,095,985	784,648	324,272	81,305	1,230,032	37.4
2024	2,304,378	895,365	2,304,378	851,734	353,371	84,063	1,368,581	37.0
2025	2,366,359	886,222	2,366,359	861,274	377,377	85,929	1,419,155	36.4
2026	2,512,054	1,012,286	2,512,054	924,642	403,220	89,063	1,498,349	36.8

자료: 고용노동부

그런데 기금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장애인 고용 지원을 위한 사업비 지출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그에 따라 정부 내부지출 및 여유자금운용 비중만 커지고 있음.

[2021~2026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지출 주요 항목별 비중]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주요사업비	610,819 (35.6%)	693,356 (36.0%)	784,648 (37.4%)	851,734 (37.0%)	861,274 (36.4%)	924,642 (36.8%)
정부내부지출	350,000 (20.4%)	600,315 (31.2%)	600,000 (28.6%)	600,000 (26.0%)	700,000 (29.6%)	800,000 (31.8%)
여유자금운용 등	757,024 (44.1%)	632,025 (32.8%)	711,337 (33.9%)	852,644 (37.0%)	805,084 (34.0%)	787,412 (31.3%)
합 계	1,717,843	1,925,696	2,095,985	2,304,378	2,366,358	2,512,054

자료 : 고용노동부

또한 기금 지출사업의 주요 성과지표인 장애인 고용률이 증가하지 않고 정체 상태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애인 고용을 증진하고 직업재활을 지원하는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사업 발굴 및 추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최근 10년간 15~64세 장애인 고용률]

(단위: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50.2	49.2	49.0	50.0	48.0	49.0	50.3	49.8	48.4	48.3

자료 : 고용노동부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026년 5월말 현재 장애인 고용 관련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 중으로,[77] 이를 토대로 여유자금 활용 방안을 추가 모색하는 한편, 기존 사업의 확대(근로지원인 지원 단계적 확대, 발달장애재직자 훈련 확대, 컨설팅 등 의무고용 이행 지원 강화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향후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고, 장애인 고용률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장애인 고용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77) 「장애인고용기금 효율성 제고 및 내실화 확보방안 연구」(계약기간: 2026.3월~10월)

【기　타】

22.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고용노동부에 대해 시정요구 65건(중복 6건 포함)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시정 3건· 주의 11건· 제도개선 57건이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3	11	57	6	65
예비비	-	-	-	-	-	-	-
합계	-	-	3	11	57	6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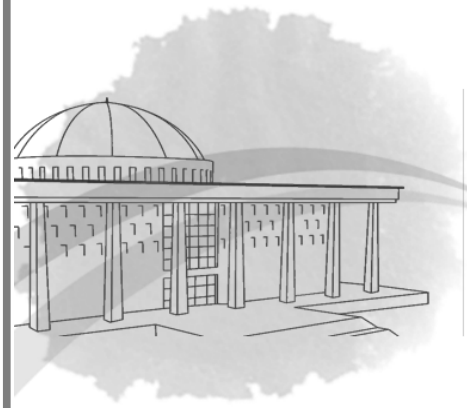
고용노동부는 시정요구사항 65건에 대해 43건을 조치완료(조치율 66.2%)하고 22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65	43	66.2	22
예비비	-	-	-	-
합계	65	43	66.2	22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8조 1,295억 9,300만원(△29.4%)이 적은 19조 5,113억 3,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조 5,372억 5,700만원(△7.3%)이 감소됨.[1)]

[2025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715,181	1,715,181	2,305,694	590,513	1,692,103	1,692,103	1,536,248	△155,855	△769,446
기 금	23,566,254	23,566,254	18,742,894	△4,823,360	25,948,821	25,948,821	17,975,083	△7,973,738	△767,811
총수입	25,281,435	25,281,435	21,048,588	△4,232,847	27,640,924	27,640,924	19,511,331	△8,129,593	△1,537,257

2025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16조 571억 1,800만원(△26.5%)이 적은 44조 4,376억 6,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조 1,353억 400만원(△20.0%)이 감소됨.

문의 : 02-6788-5675

---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5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23,658,347	23,658,347	22,715,328	△943,019	22,724,841	23,289,590	22,771,031	△518,559	55,703
기 금	37,285,588	37,896,681	32,857,641	△5,039,040	35,451,171	37,205,193	21,666,634	△15,538,559	△11,191,007
총지출	60,943,935	61,555,028	55,572,969	△5,982,059	58,176,012	60,494,783	44,437,665	△16,057,118	△11,135,304

나.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4조 8,059억 3,900만원으로, 15조 9,479억 6,9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4조 4,461억 2,000만원이 수납(수납률 90.6%)되고, 1조 4,947억 5,2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70억 9,8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200,971	200,971	-	200,971	263,632	232,701	30,931	-
교통시설특별회계	13,785,641	13,815,622	-	13,815,622	13,825,474	13,636,618	188,857	-
- 도로계정	7,280,422	7,389,484	-	7,389,484	7,350,304	7,216,286	134,019	-
- 철도계정	3,767,215	3,909,958	-	3,909,958	3,867,649	3,850,263	17,386	-
- 교통체계관리계정	1,296,985	1,554,929	-	1,554,929	1,557,020	1,531,405	25,615	-
- 공항계정	1,441,019	961,251	-	961,251	1,050,501	1,038,664	11,837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779	779	-	779	78	78	-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204,902	204,902	-	204,902	27,065	27,065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83,665	583,665	-	583,665	1,831,720	549,658	1,274,964	7,098
- 지역자율계정	283,738	283,738	-	283,738	1,363,620	283,803	1,072,756	7,061
- 지역지원계정	299,524	299,524	-	299,524	466,935	264,690	202,208	37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42	42	-	42	671	671	-	-
- 세종특별자치도계정	361	361	-	361	494	494	-	-
합 계	14,775,958	14,805,939	-	14,805,939	15,947,969	14,446,120	1,494,752	7,098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1조 13억 4,300만원으로, 38조 8,846억 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4.8%)되고 7,913억 4,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조 3,253억 9,3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23,421,254	24,222,170	33,190	±25,876	15,567	24,271,002	23,488,012	29,423	753,567
교통시설특별회계	13,785,641	13,815,622	596,363	±995,977	-	14,411,984	13,343,769	719,782	348,433
- 도로계정	7,280,422	7,389,484	451,432	±881,179	-	7,840,915	7,205,628	544,249	91,038
- 철도계정	3,767,215	3,909,958	14,649	±86,215	-	3,924,607	3,790,432	44,683	89,492
- 공항계정	1,441,019	961,251	128,753	±23,584	-	1,090,004	826,073	129,671	134,260
- 교통체계관리계정	1,296,985	1,554,929	1,529	±4,999	-	1,556,458	1,521,636	1,179	33,64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3,667	13,667	-	-	-	13,667	11,838	-	1,829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203,573	203,573	850	±2,340	-	204,423	22,216	124	182,08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038,003	2,061,003	39,265	±42,039	-	2,100,267	2,018,772	42,014	39,481
- 지역지원계정	767,159	767,159	-	-	-	767,159	762,855	-	4,304
- 지역자율계정	1,179,677	1,202,677	37,486	±37,769		1,240,163	1,167,672	38,090	34,401
- 제주계정	78,535	78,535	267	-	-	78,802	76,802	2,000	-
- 세종계정	12,632	12,632	1,512	±4,270	-	14,143	11,443	1,924	776
합 계	39,462,138	40,316,035	669,668	±1,066,232	15,567	41,001,343	38,884,607	791,343	1,325,393

주) 총계 기준

다. 기금 결산

2025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104조 2,566억 9,900만원으로, 102조 7,600억 8,1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01조 5,516억 4,700만원이 수납(수납률 98.8%)되고, 1조 1,607억 6,800만원은 미수납되어 476억 6,6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259,159	259,159	538,555	255,365	268,745	14,445
주택도시기금	103,391,465	103,997,540	102,221,525	101,296,282	892,023	33,221
합 계	103,650,624	104,256,699	102,760,081	101,551,647	1,160,768	47,666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104조 2,572억 5,400만원으로, 101조 5,516억 4,700만원이 지출(집행률 97.4%)되고, 6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조 7,050억 7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259,159	259,159	-	259,159	255,365	-	-
주택도시기금	103,391,465	103,997,540	554	103,998,095	101,296,282	600	2,701,213
합 계	103,650,624	104,256,699	554	104,257,254	101,551,647	600	2,705,007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5회계연도 말 기준 국토교통부 자산은 전년 대비 7조 1,485억 9,800만원이 증가된 731조 5,484억 7,100만원으로, 이는 금융자산이 6조 7,294억 6,700만원 증가, 유무형자산이 1,876억 200만원 증가, 기타자산이 2,315억 2,800만원 증가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3조 761억 4,400만원 증가된 198조 8,871억 5,000만원으로 차입부채 3조 280억 4,000만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4조 724억 5,400만원이 증가된 532조 6,613억 2,200만원임.

2025회계연도 국토교통부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23조 7,466억 8,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93억 2,500만원 증가되었으며, 재정운영결과는 23조 1,259억 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조 229억 8,400만원 증가됨.

[2025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 (A)	2024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731,548,471	724,399,873	7,148,598	1.0
		금융자산	284,427,462	277,697,995	6,729,467	2.4
		유무형자산	443,702,929	443,515,327	187,602	-
		기타자산	3,418,080	3,186,552	231,528	7.3
	부 채		198,887,150	195,811,006	3,076,144	1.6
		차입부채	198,613,101	195,585,061	3,028,040	1.5
		충당부채	69,474	73,580	△4,106	△5.6
		기타부채	204,574	152,365	52,209	34.3
	순자산		532,661,322	528,588,868	4,072,454	0.8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23,746,688	23,467,363	279,325	1.2
	재정운영순원가		23,710,645	21,538,229	2,172,416	10.1
	재정운영결과		23,125,940	21,102,956	2,022,984	9.6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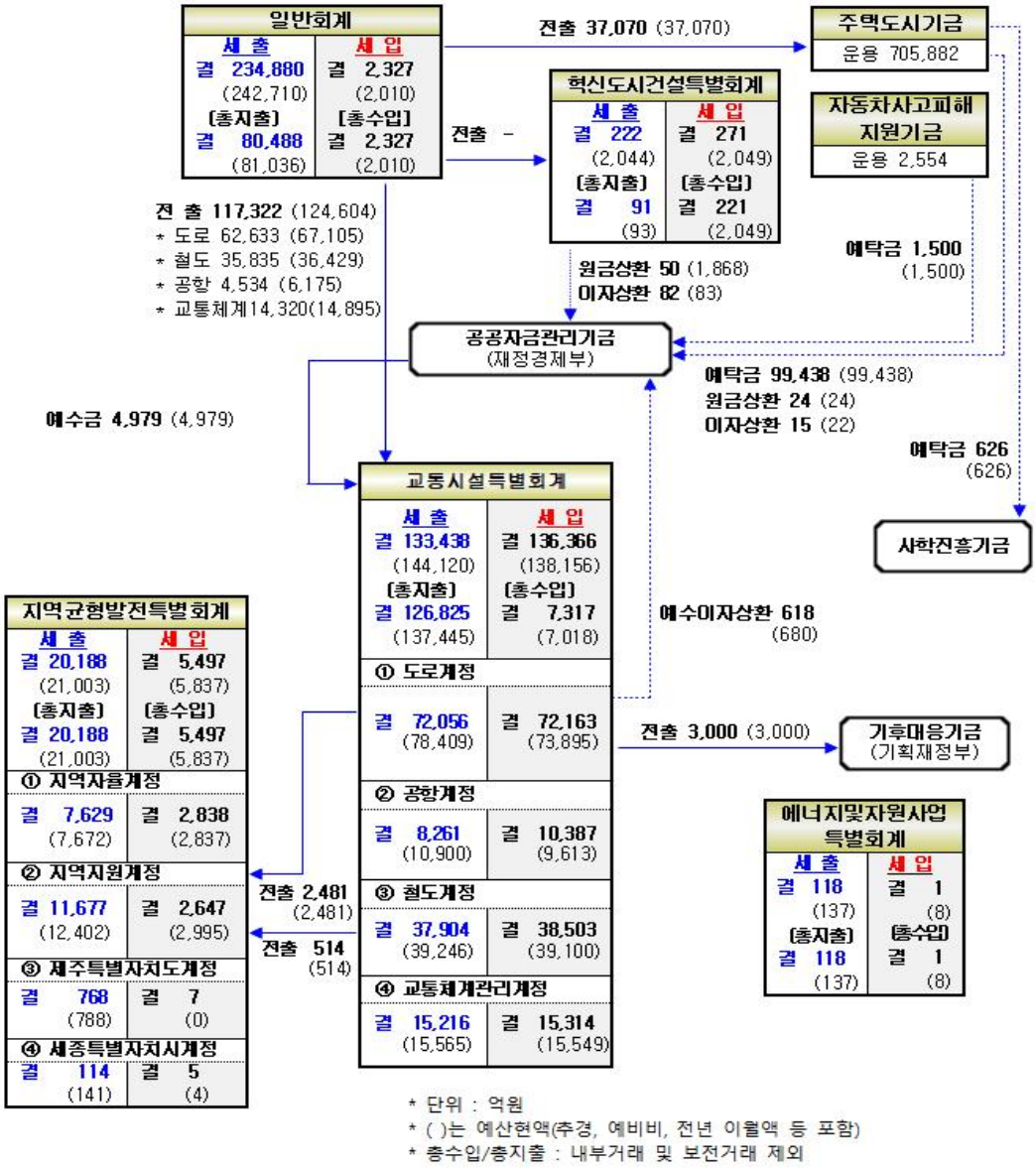
2025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재정은 일반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5개 회계와 주택도시기금, 자동차기금 등 2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교통시설특별회계로 11조 7,322억, 주택도시기금으로 3조 7,070억원이 각각 전출되었음.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2,995억, 기후대응기금으로 3,000억이 각각 전출되었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는 618억원이 상환되었음.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132억원 상환되었음.

다음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주택도시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9조 9,438억, 사학진흥기금으로 626억원 예탁되었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39억원 상환되었음. 또한 자동차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1,500억원이 예탁되었음.

[2025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재정흐름도]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국토교통부는 지속 성장을 위해 모두가 잘사는 국토공간, 모든 국민의 주거권 보장,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하고 자유롭게 연결되는 사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공간을 2025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총 715개 세부사업에서 싱크홀 등 안전사고 대응, 서민의 교통부담 완화, 맞춤형 주택공급 등을 수행하였음.

2025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국토교통부 소관의 완료된 민간의 연구개발사업 중 일부 사업에서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활용 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국토교통부는 해당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이를 후속과제 기획 시 반영할 필요가 있음.

둘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금의 반납 지연이 발생하면서 2025년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을 조속히 정산 및 수납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셋째, 2025년 주택시장에서 수도권-지방간, 고가-저가 주택간 가격 격차가 더욱 심화되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넷째, 산악벽지용친환경전기열차기술개발(R&D) 사업의 환경영향 검토·평가를 사업대상지 확정 이후에 실시함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착수부터 중단까지의 기간 동안 투입된 예산 중 일부가 매몰비용으로 전락하는 등 예산 낭비가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추경예산으로 교체한 도로지반조사장비의 2025년 탐사 실적이 저조하므로, 국토교통부는 장비의 내용연수 도과에 따른 교체 소요를 사전에 예측하고 본예산에 반영하는 등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여섯째, 공공부문 건축물 대비 민간부문 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친환경 건축환경 및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인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일곱째, 국토교통 혁신펀드의 운용사 선정과 자펀드 결성 지연으로 인하여 매년 1차년도의 투자집행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운용사 모집 단계부터 유망 투자처를 사전에 적극 발굴하는 등 투자집행률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여덟째, 국토교통부는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의 철도용량 확충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오송역의 과주여유거리 및 분기기 설치와 관련된 병목 현상 문제를 2복선화 사업 완료 이전까지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음.

아홉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의 지연 등으로 인한 삼성역 미개통으로 GTX 운영지원 사업에서 지급해야 하는 손실보전금 재정 소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GTX-A 삼성역 구간 개통을 위한 공정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열째, 철도차량업체의 납품지연으로 계약이 해지되면서 미정산금이 발생하고 철도차량 적기 교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바, 이 과정에서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의 철도차량 납품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계약 및 납품 관리 등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열한째,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의 계획 수립과 입찰 준비 과정에서 연약지반 안정화 등 핵심 공정의 공기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사업 일정 지연(2년 이상)과 사업비 증가를 초래하였으므로, 원인 분석과 함께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효율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열두째,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 관리를 위하여 직접적인 국민 교통비 부담 경감 효과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 촉진 효과도 확인·점검할 필요가 있음.

열셋째, 임대주택리츠 출자금의 회수 실적이 계획 대비 저조하므로, 국토교통부는 사업이 종료된 리츠의 청산 지연 사유를 점검하고, 출자금이 적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열넷째, 사업초기 주택정비사업에 따른 융자 실적이 계획 대비 저조하므로, 국토교통부는 융자 수요를 확인하여 전반적인 융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검토 - 기술료 수입이 없는 R&D 기술의 활용 가능성 점검 및 연구중단 과제 발생 방지 필요 등

가. 개 요

2025년 결산 기준 국토교통부 소관 전체 연구개발사업은 세부사업 기준 총 78개이며, 4,853억 3,900만원을 집행하여 전년도보다 920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음.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47개 세부사업에서 2,996억 6,400만원,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는 30개 세부사업에서 1,806억 7,500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는 1개 세부사업에서 50억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2025년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결산 총괄]

(단위: 개,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 개수(개)	2024년 결산 (A)	2025년			(B-A)	2026년 예산
			본예산	추경	결산(B)		
일반회계	47	230,962	299,800	302,200	299,664	68,702	340,956
교특회계	30	157,325	180,675	180,675	180,675	23,350	174,241
지특회계	1	5,000	5,000	5,000	5,000	-	5,000
합계	78	393,287	485,475	487,875	485,339	92,052	520,197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를 재작성

한편, 국토교통부 소관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민간은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의 일부 또는 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에 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함.[2)]

2)「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민간으로부터 수납한 기술료 수입 현황을 보면, 2025년 결산 기준 3억 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00만원이 증가하였음. 기술료 수입규모는 2019년 34억 8,900만원에서 2021년 6억 200만원으로 크게 줄었으며 이후 3억원 ~ 7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음.[3)]

[연도별 기술료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정부납부기술료	3,489	2,843	602	501	715	347	369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를 재작성

나. 검토의견

첫째, 국토교통부 소관의 완료된 민간의 연구개발사업 중 일부 사업에서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활용 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국토교통부는 해당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이를 후속과제 기획 시 반영할 필요가 있음.

국가는 공공성은 높으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재정을 투입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민간으로 확산시킨다는 측면에서 볼 때, 기술료 수입은 해당 기술에 대한 민간부문에서의 활용 여부 및 시장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지표로 볼 수 있음.

국토교통부 소관의 완료된 연구개발사업 중 일부는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완료된 연구개발사업 총 60건 중 민간이 참여한 연구개발사업 26건에서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 민간 부문에서의 기술 활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임.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이와 같이 기술료 수입이 감소한 것은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방식이 2021년을 기점으로 정액기술료 방식에서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경상기술료 방식에 적용되는 요율도 하향 조정된 것에 기인함.

[기술료 징수 방식 변경]

구분	종전	변경
징수기준	(정액기술료) 기업의 매출(수익)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정액으로 납부	(경상기술료) 기업의 매출(수익)이 있는 경우에 매출(수익)에 비례하여 납부 ☞ 수익×기술기여도×요율
요율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대기업 40%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5%, 대기업 10%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를 재작성

[2020~2024년 정부납부기술료가 발생하지 않은 연구개발사업 목록]

(단위: 건)

완료 연도	완료된 연구개발 사업	기술료 미발생 연구개발 사업	목록(회계, 사업코드)
2020	3	1	국토교통 연구성과 활용지원(R&D)(일반, 4159-301)
2021	5	0	
2022	14	2	SuperBRT의 우선신호기술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R&D)(교특, 4162-302)
			무인비행체 안전지원 기술개발(R&D)(교특, 4161-302)
2023	22	9	Off-SiteConstruction 기반 공동주택생산시스템 혁신 기술개발(R&D)(일반, 4156-312)
			경전철용 고성능 고내구 타이어 및 안전성강화 헬스모니터링 기술개발(R&D)(교특, 4159-305)
			공공혁신조달 연계 무인이동체 및 SW플랫폼 기술개발(R&D)(교특, 4161-309)
			나노기술을 활용한 다기능·경량 하이퍼콘크리트 기술개발(R&D)(일반, 4154-306)
			세계 최장경간(200m급) 경전철 고가구조물 실증연구(R&D)(교특, 4159-318)
			소형무인비행기 인증 기술개발(R&D)(교특, 4161-307)
			수소버스 안전성 평가 기술 및 장비개발(R&D)(기후기금, 6431-404)
			저탄소 에너지 고효율 건축 기술개발(R&D)(기후기금, 6431-401)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사업(R&D)(교특, 4159-303)
2024	16	14	BIM기반 인프라설계 프로세스 디지털 협업체계 개발(R&D)(일반, 4154-312)
			광역일반 및 고속철도용 열차 자동운전시스템 개발(R&D)(교특, 4159-308)
			도시철도 회생전력 유휴에너지를 이용한 도심형 수소모빌리티확산 인프라 기술개발(R&D)(교특, 4159-332)
			디지털트윈 기반 화재재난지원 통합플랫폼 기술개발(R&D)(일반, 4156-315)
			빅데이터 기반 항공안전관리 · 보안인증 기술개발(R&D)(교특, 4161-308)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토도시공간계획 및 관리 기술개발(R&D)(기후기금, 6431-402)
			전동차용 급곡선 주행 능동조향 대차 실용화 기술개발(R&D)(교특. 4159-309)
			차세대 대인보안 검색 기술개발(R&D)(교특. 4161-315)
			차세대 중형위성2호대체발사 지원사업(R&D)(일반. 4156-353)
			철도배전선로 케이블 무전원무선 안전감시 기술개발(R&D)(교특. 4159-315)
			철도인프라 생애주기 관리를 위한 BIM기반 통합플랫폼 개발(R&D)(교특. 4159-306)
			철도차량 ECVM시스템 기술개발(R&D)(교특. 4159-331)
			트램-트레인 국내도입을 위한 직결운행 핵심 기술개발(R&D)(교특. 4159-310)
			한국형 어린이 통학버스안전성 향상 기술개발(R&D)(일반. 4158-315)
계	60	26	

주) 2025년 완료된 연구개발사업의 경우는 기술의 취득과 활용 간 시차가 6개월 이하로 매우 짧으므로 제외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 중 비교적 최근에 취득한 기술의 경우는 민간이 활용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할 수 있으나, 3년 이상 경과한 기술의 경우에는 현대의 기술 주기(개발된 기술이 새로운 기술로 대체되는 순환주기)를 고려할 때, 그 활용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특히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은 기초·원천 연구보다는 사업화 및 현장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응용·실증 중심의 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며,[4] 최근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투자 규모가 증가하면서 취득 기술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므로, 기술료 수익 발생 여부를 통해 완료된 연구개발사업의 효과성을 사후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측면에서 국토교통부는 사업 완료 이후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후속 과제 기획 시 반영할 필요가 있음.[5]

둘째, 연구개발사업이 중단될 경우 연구실적의 최종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거나 이미 투입된 비용 일부분이 매몰비용이 되는 예산 낭비 우려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연구 기획 및 과제 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중 2025년에 종료된 사업은 일반회계 9개, 교통시설특별회계 9개 등 총 18개로,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총사업비는 5,694억 7,900만원이고, 2025년에 882억 5,400만원의 연구개발출연금을 집행하면서 사업이 종료되었음.

이 중 ‘산악벽지용 친환경전기열차 기술 개발(R&D)’ 사업은 2026년까지 계획된 사업이지만 2025년에 중단된 과제로서, 당초 편성된 2025년 출연금 27억원은 전액 불용 처리되었음.

---

4) (참고)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p. 80.)

> 나. 국가연구개발사업별 기초·원천연구 투자비중 제출
>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도 1월말까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산하연구기관의 사업 포함)별로 기초·원천연구 투자계획 비중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민간·공공 발주처의 수요가 많은 연구개발 과제 기획을 통해 R&D 사업화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견임.

[2025년 국토교통부 소관 완료된 연구개발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사업명 (사업코드)	사업기간	총사업비	2024년 결산액	2025년 결산액
일반회계	**산악벽지용 친환경전기열차 기술 개발(R&D) (2733-322)**	**2020~2026 (중단)**	**28,075**	**2,328**	**0 (2,700 불용)**
	건설분야 성능기반 표준실험 절차 개발(R&D) (4141-302)	2021~2025	13,814	1,797	2,600
	국토교통 데이터산업 생태계 플랫폼 구축(R&D) (4141-304)	2022~2025	15,694	3,840	6,038
	스마트건설 기술 개발사업(R&D) (4154-304)	2020~2025	143,479	19,756	18,049
	탄소고분자 부식 ZERO 철근대체재 기술 개발(R&D)(4154-308)	2021~2025	18,847	2,971	2,844
	시설물 안전기반 플랜트 통합위험관리 패키지기술 개발(R&D)(4155-308)	2021~2025	17,352	1,689	2,496
일반회계	해외수소 기반 대중교통 인프라 기술 개발(R&D) (4156-310)	2021~2025	21,569	4,670	4,203
	인공지능 기반의 건축설계 자동화 기술 개발(R&D)(4156-317)	2021~2025	23,293	4,797	2,053
	위성정보 빅데이터 활용 국토종합관리 기술 개발(R&D)(4156-322)	2022~2025	11,396	4,167	3,885
교통시설특별회계	철도차량부품 개발사업(R&D)(4159-304)	2020~2025	122,681	28,310	16,391
	열차탈선/침범사고 피해 최소화 및 위험도 저감 기술개발(R&D)(4159-312)	2021~2025	4,808	900	763
	370kph 이상 고속운행 핵심기술 및 평가기준 개발(R&D)(4159-320)	2022~2025	18,036	5,111	5,504
	항공기 개조인증 기술개발(R&D)(4161-312)	2021~2025	21,328	3,306	3,311
	데이터기반 항공교통관리 기술개발(R&D)(4161-313)	2021~2025	16,120	2,921	3,203
	위성항법 보정시스템 안전운용 기술개발(R&D)(4161-314)	2021~2025	18,825	616	616
	지능형 휴대수하물 보안검색 기술개발(R&D)(4161-316)	2021~2025	20,378	3,295	2,912
	도심항공 모빌리티 가상통합운용 및 검증 기술개발(R&D)(4161-317)	2022~2025	27,180	8,080	6,218
	도심항공 모빌리티 감시정보 획득체계 개발(R&D)(4161-318)	2022~2025	26,604	7,602	7,168
계			569,479	106,156	88,254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재작성

‘산악벽지용 친환경전기열차 기술 개발(R&D)’ 사업은 당초 2026년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산악열차 시범노선의 설치 대상 지역(지리산 권역)이 생태·환경적 보전 가치가 높다는 이유로 2025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재검토” 판단을 받았으며, 이에 4월 특별평가에서는 사업의 필요성이 낮다고 보아 “중단” 결정된 것임.

[산악벽지용 친환경전기열차 기술 개발(R&D) 사업 특별평가 주요내용]

□ **특별평가 종합결과 : 지원중단**

□ 주요의견

ㅇ연구진이 제안한 시험선로(T/B)의 구축필요성, 설치부지, 규모 및 구축비용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미흡

ㅇ수요조사시 도입의사를 표명한 지자체를 언급하였으나 구체적인 도입계획을 확인할 수 없어 가시적인 수요 및 그에 따른 실용화 가능성 또한 높다고 보기 어려움

ㅇ이에 본 연구는 중단하고 현재까지 연구성과를 정리하고, 이 중 향후 활용가능한 부분을 명확히 근거와 함께 구분하여 제시하고 연구성과의 양적, 질적 수준에 대해 최종평가를 통해 판단 필요

- 다만 필요시 현재까지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최종평가를 받기 위해 소요되는 연구비는 집행토록 할 수 있음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를 재작성

시범노선 설치 단계부터 사업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완성차의 주행 성능 및 시범노선에서의 급곡선·급구배 성능 등 그 동안의 연구 실적에 대한 최종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게 되었음.

[산악벽지용 친환경전기열차 기술 개발(R&D) 사업 성과지표 및 달성도]

(단위: %)

지표명	목표치	실적치
① 시범사업을 통한 실용화 계획 이행 진척도	100	100
② 급곡선·급구배 주행을 위한 차량 핵심성능 달성률	100	100
③ 급곡선·급구배 주행을 위한 인프라 주요 장치(랙레일)의 개발률	100	100
④ 완성차 주행성능 확보율	**100**	**-**
⑤ 시범노선 인프라 성능 확보율	**100**	**-**
⑥ 시범노선 완공 및 관련 기준 마련 진척도	**100**	**60**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를 재작성

이러한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중단 사례는 2024년에도 2건이 발생하였으며, 해당 사업의 2024년 출연금도 모두 불용 처리되었음.

먼저 ‘도시철도회생전력 유휴에너지를 이용한 도심형수소 모빌리티확산 인프라기술

개발(R&D)’ 사업은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해 부산시가 분담금을 지급하기로 협약(2022년 4월, 총 125억원)하였으나, 2022년과 2023년에 지자체가 분담금(85억원)을 미납함에 따라 재원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여 특별평가[6]를 거쳐 중단되었음.

또한 ‘차세대 대인보안 검색 기술개발(R&D)’ 사업은 1단계 단계평가(2023년 12월) 결과 계획대비 실적미달 및 성과증빙 불량 등 “극히불량” 등급(40점 미만) 판정을 받으면서 사업이 중단되었음.

[2024년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중단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코드)	당초 사업기간	당초 총사업비	기투입액		연구중단 시점
			연도	금액	
도시철도 회생전력 유휴에너지를 이용한 도심형수소 모빌리티 확산인프라 기술개발(R&D) (4159-332)	2022~2025	9,438	2022	1,921	2023.11
			2023	454	
차세대 대인보안 검색 기술개발(R&D) (4161-315)	2021~2025	21,237	2021	3,000	2023.12
			2022	5,287	
			2023	5,200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를 재작성

연구개발사업이 중단될 경우 시제품 제작 등 투입비용의 일부분이 매몰비용이 되거나, 향후 연구개발사업을 재추진할 필요성이 발생하면서 연구자 교체 및 사업 재추진에 따른 중복 투자 등 예산 낭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시범사업 대상지의 환경영향 분석, 지자체의 매칭비용 확보 여부 확인, 기술 검증을 위한 성과지표 설정 등 연구 기획 및 과제 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7]

---

6) [도시철도회생전력 유휴에너지를 이용한 도심형수소 모빌리티확산 인프라기술개발(R&D)’ 사업 특별평가 주요의견]

ㅇ 지자체부담금 없이 본 사업의 당초 목표인 도시철도 회생전력을 이용한 수소생산충전 인프라 모델 개발은 불가한 상황임 ㅇ 수소생산충전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일부로서의 통합전력공급시스템 개발이 아닌 전력변환기술 및 통합전력공급시스템만 개발시 이는 기존 시장에 기 출시된 전력변환장치와 기술적 차별성이 없어 “지원중단”으로 결정

자료: 국토교통부

7) ‘산악벽지용 친환경전기열차 기술 개발(R&D)’ 사업의 기획 및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6. 산악벽지용친환경전기열차기술개발(R&D) 사업: 연구 기획 부실과 인한 연구개발사업 중단과 예산 낭비 문제’ 참조

【일반회계】

〈세 입〉

2.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재산이자수입: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집행 잔액의 조속한 정산 및 수납 필요

가. 개 요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지원, 스마트시티 조성 등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보조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보조금을 정산하고 원금과 이자를 국토교통부에 반납함.[8)]

이 중 국고보조금 반납금 원금은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수납 처리되며, 해당 비목의 징수결정액 1,922억 9,700만원 중 1,853억 4,900만원이 수납(수납률 96.4%)되고 미수납액 69억 4,800만원이 발생하였음.[9)]

국고보조금 반납금에 대한 이자수입의 경우는 **'기타재산이자수입'**으로 수납 처리되며, 해당 비목의 징수결정액 394억 9,200만원 중 391억 5,6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1%)되고 미수납액 3억 3,500만원이 발생하였음.[10)]

---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일반회계-기타경상이전수입(59-596)(기획조정실)

10) 일반회계-기타재산이자수입(54-546)(기획조정실)

[2025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재산이자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기타경상 이전수입	132,218	132,218	192,297	185,349	**6,948**	-	96.4	184,605
기타재산 이자수입	13,615	13,615	39,492	39,156	**335**	-	99.1	16,072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두 수입 비목의 미수납액 중 지방자치단체가 미수납한 금액(“관계기관 예산부족” 항목)은 2025년 결산 기준 66억 9,900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액 72억 8,300만원의 92.0%를 차지하고 있음.

[2025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기타재산이자수입 미수납액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과목명 (사업코드)	계	유예	납기 미도래	체납자재력 부족 및 거소불명	관계기관 예산부족	기타사유
기타재산이자수입 (54-546)	335	16	-	0.04	**315**	4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6,948	-	0.05	424	**6,384**	141
계	7,283	16	0.05	424	**6,699**	145
(비중)	100.0	0.2	0.0	5.8	**92.0**	2.0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를 재작성

나. 검토의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금의 반납 지연이 발생하면서 2025년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을 조속히 정산 및 수납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11]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11)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때에는 보조금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등을 반납받아야 하고, 반납기한은 반납금액과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함.

2025년 기타재산이자수입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 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이 완료된 2024년의 다음연도인 2025년에 국고보조금 이자 및 집행잔액을 적기에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예를 들면, 전북특별자치도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2024년 교부받은 보조금 정산액 4,149만원을 정산시점(2025년 6월 2일) 이후에도 반납하지 않았음. 서울특별시는 주거급여지원 사업에서 교부받은 보조금 중 정산액 총 7억 1,701만원을 정산시점(2025년 6월 25일)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2026년 3월에 반납하였는데, 이는 2025년에 반납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2025년 결산에서 미수납액으로 처리되었음.

[국고보조금 미반납 지자체 현황]

(단위: 천원)

징수기관 (납부의무자)	반납 대상 사업(보조, 위탁 등)					
	사업명 (사업코드)	교부시점	정산시점	정산 (반납대상)액	수납액	미수납액
전북특별 자치도 진안군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5637-304)	'24.10.07. '24.11.25.	'25.09.11.	608	-	608
울산광역시	주거급여지원 - 장애인주택개조사업 (1034-302)	'24.04.24 '24.06.17	'25.03.06	518	-	518
대구광역시	주거급여지원 - 장애인주택개조사업 (1034-302)	'24.04.24 '24.06.17	'25.03.06	137	-	137
전북특별 자치도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1034-311)	'24.01.16. '24.02.08. '24.03.12. '24.05.07. '24.07.18. '24.09.23.	'25.06.02	41,489	-	41,489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받아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징수기관 (납부의무자)	반납 대상 사업(보조, 위탁 등)					
	사업명 (사업코드)	교부시점	정산시점	정산 (반납대상)액	수납액	미수납액
		’24.10.22. ’24.12.04.				
서울특별시	주거급여지원 - 주거상향지원 (1034-302)	’24.01.16	’25.6.25	380,271	380,271 (’26.03.24)	-
	주거급여지원 - 주거상향지원 (1034-302)	’24.01.16	’25.6.25	35,700	35,700 (’26.03.24)	-
	주거급여지원 - 이사비지원 (1034-302)	’24.01.16	’25.6.26	284,266	284,266 (’26.03.24)	-
	주거급여지원 - 주거상향지원 (1034-302)	’24.01.16	’25.6.26	16,772	16,772 (’26.03.24)	-

주) 지자체 미수납액 중 ① 납부기한이 6개월 이상(체납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② 미수납 건당 금액이 1백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함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를 재작성

국토교통부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하는 정산보고서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간 대조·검증 과정에서 담당자의 검토시간 소요 또는 시스템 오류 정정 등의 사유로 정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다는 입장임.

또한「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제24조제2항[12]에 따라 반납 기한인 2025년 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정산 후 해당 지자체에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기한 내 납부할 것을 안내하는 등 필요한 수납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나 지자체에서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반납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의견임.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7조[13]에 따라 국고보조금 이자 및 집행잔액을 기한 내 반납 완료할 수 있도록 점검

12)「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4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제출) ② 보조사업자등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3)「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7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집행점검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정산 후 집행잔액 등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해당 보조사업과 관련된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보조사업 집행점검) ① 중앙관서의 장은「보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등의 수행상황을 점검하며 다음 각 호의 보조사업 등을 주요점검대상으로 한다.
4. 2회계연도 이상 정산을 완료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산 후 집행잔액 등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은 보조사업의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는 조사개시 7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절차 미숙 등으로 인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국토교통부는 점검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반납 지연에 따른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현장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조금 반환 결정은 검찰의 공소제기 시까지 하여야 한다.

제33조(보조사업점검평가단) 중앙관서의 장은 제32조의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위하여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며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점검실적은 연1회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세　출〉

3. 주거급여지원 사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정산금 처리 시정 필요 등

가. 개　요

‘주거급여지원’ 사업은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임차료를 보조(임차가구)하거나 주택개보수 등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자가가구)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조 529억 1,400만원 중 3조 513억 2,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3억 7,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2억 2,100만원이 불용되었음.[14)]

[2025년도 주거급여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예비비 (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주거급여지원	3,036,823	3,036,823	524	15,567	3,052,914	3,051,323	370	1,221	3,230,896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첫째, 국토교통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주거급여지원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급자 반환금의 처리 절차를 국고보조금 관련 법령에 맞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수급자에게 지급된 주거급여에서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의 변경,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이 과잉 지급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로부터 과잉지급분을 반환받게 됨.[15)]

---

14) 일반회계-주거급여지원(1034-302)(주택토지실)

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7조(반환명령) ①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 · 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그리고「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수급자 반환금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을 국토교통부에 반납하여야 함.[16][17]

이에 따라 2025년 교부한 보조금 중 발생한 수급자 반환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연내에 회수한 경우, 국토교통부는 이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반납받아 다음 연도(2026년) 세입인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으로 처리(정산)하고 있음.

그런데 수급자 반환금이 보조금이 교부된 2025년에 반환·회수되지 않고 해를 넘겨 2026년에 반환되는 경우[18]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로 반납하지 않고 지자체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음.

[주거급여 반환금의 정산 시기에 따른 귀속 주체]

교부시기	반환금 회수 및 정산 시기	반환금 성질	처리방식	반환금 귀속
2025년	**2025년**	보조금 집행잔액	2026년 국고 반납	**국가**
	2026년	세외수입	2026년 지자체 수입	**지방자치단체**
	2027년		2027년 지자체 수입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정리

이와 같이 동일한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임에도 반납 시점에 따라 귀속 주체 및 회계처리가 달라지고 있으며, 이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 및 사후관리를 규정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실적 보고 등)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19]

---

16)「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보조금법」제27조와「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반납 받아야 하는 ‘집행잔액’은 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하고, 반납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의 수익금’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보조금법」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통일 · 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기획예산처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집행잔액을 산정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7)「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 122.

18) 수급자의 자격 기준 변동 또는 부정수급 상황을 조사 등을 통해 사후에 확인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

19)「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하나로서, 반환금 처리 절차도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정하고 있다는 의견임.

국토교통부가 소관 예산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은 보조사업 정산이 미흡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음.[20]

지방자치단체가 주거급여 집행잔액을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토교통부는 집행잔액 중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처리된 부분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집행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2023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서 “국토교통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총괄 주관부서인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주거급여 부정수급 환수분 처리 방식을 개선할 것”으로 주의를 요구한 바 있음.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2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주거급여 사업에 대한 2023년 결산 시정요구사항]

구분	내용
시정요구명	(103) 주거급여 부정수급 환수분 처리 방식 개선 필요
지적사항	○ 주거급여 부정수급 환수분을 당해 연도 환수액은 국고에 귀속하고, 차년도 환수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는 현행 방식이 부적절함 - 국토교통부는 부정수급에 대한 징수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징수 금액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지급하는 등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2003년 감사원 지적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임 - 그러나, 해당 감사원 지적은 부정수급분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라는 취지이지 환수 시점에 따라 국고 귀속 여부를 달리 하라는 것이 아니며, 현행 방식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당해연도 부정수급 환수 유인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수준)	국토교통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총괄 주관부서인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주거급여 부정수급 환수분 처리 방식을 개선할 것 (주의)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사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주거급여지원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급자 반환금의 처리 절차를 국고보조금 관련 법령에 맞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관련 연구용역과제의 계약이 연내에 완료되어 불필요한 이월이 최소화되거나 재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용역계약 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가 2024년 및 2025년에 정책연구비(260-02) 비목으로 수행한 주거급여 관련 연구용역과제 중 다음 3건은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연말에 입찰공고를 실시하면서 관련 예산을 전액 이월 처리하였음.

이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경우는 국가재정법령에 따라 회계연도 말까지 입찰공고만 실시하면 관련 예산의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임.[21)]

21)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국가재정법 시행령」

[2024, 2025년 주거급여 관련 정책연구비(260-02) 계약(일부)]

(단위: 천원)

연도	용역제목	계약방식	입찰공고	계약상대방	계약일	계약기간	계약금액	집행금액	잔금
2024	25년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제고 및 발전방안	경쟁 후 수의 (일반경쟁)	2024.12.30	국토연구원	2025.2.27	2025.2.27 ~ **2026.1.21**	267,273	267,273	-
2024	수선유지급여 제도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경쟁 후 수의 (제한경쟁)	2024.12.26	국토연구원	2025.2.18	2025.2.18 ~ **2026.2.18**	178,182	178,182	-
2025	제4차 주거급여 기본계획 수립	경쟁 후 수의 (협상)	(1차) 2025.11.25 (2차) 2025.12.24	국토연구원	**2026.01.12**	2026.01.12~ **2027.01.09**	267,273	-	267,273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를 재작성

2025년 연말에 실시한 “제4차 주거급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경우는 유찰(단일응찰)로 인하여 최종적으로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2026년 1월 12일에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국가재정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예산 이월 사유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되지 못한 것임.

이는 수의계약 대상 사업에 대해 입찰공고만으로 예산의 이월이 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며,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된 낙찰자와의 협상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이월을 허용한 국가재정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특히 문제가 되는 연구용역과제는 주거급여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최저보장수준(최저주거급여기준)을 결정하려는 것으로, ① 국토교통부가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추진되는 과제로서 연말에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불가피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② 과제 수행 능력이 있는 기관 역시 국토연구원 등 일부 기관에 한정되어 있어 단일응찰 또는 유찰 가능성이 높았다는 사정도 충분히 예측 가능함.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가 입찰공고 시기를 최소 1개월 이상 앞당겨 추진하였다면 연내 계약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법 제4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

체결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예상됨.

무엇보다 2025년 예산으로 2026년 1월에 계약을 체결한 “제4차 주거급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제의 경우, 2027년까지 계약기간을 설정하였으나「국가재정법」제4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재이월은 불가능하므로, 관계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계약인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22)]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연말에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활용하여 예산을 이월시키는 집행 방식을 지양하고, 주거급여 관련 연구용역과제의 계약이 연내에 완료되어 불필요한 이월을 최소화하거나 재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용역계약 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22)「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4.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센터 운영지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무위탁 사업: 분쟁조정절차의 법정 처리기간 준수 필요 등

가. 개 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공동주택관리 관련 민원 및 분쟁에 대응하여 상담·자문 및 분쟁조정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입주민 불편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1억 9,800만원 중 21억 5,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0%)되고 4,400만원이 불용되었음.[23)]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무위탁’ 사업은 공동주택 하자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 하자 예방 및 주택품질 제고를 통해 입주자 주거안정과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7억 3,300만원 중 26억 6,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5%)되고 6,900만원이 불용되었음.[24)]

[2025년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센터 운영지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무위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센터 운영지원	2,198	2,198	-	-	2,198	2,154	-	44	2,198
하자심사분쟁조정 위원회 업무위탁	2,733	2,733	-	±13	2,733	2,664	-	69	2,738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3) 일반회계-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센터 운영지원(1034-306)(주택토지실)

24) 일반회계-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무위탁(1034-307)(주택토지실)

나. 검토의견

첫째,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하자 및 층간소음 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및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법정 처리기간 준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는「공동주택관리법」제39조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하자 분쟁을 제외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조정하고 있음.[25]

법정 처리기한에 대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는 전유부분은 60일, 공용부분은 90일이며 30일 연장이 가능하고,[26]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는 60

25)「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제2항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자 여부 판정
2.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 ·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하 “사업주체등”이라 한다)과 입주자대표회의등 · 임차인등 간의 분쟁의 조정 및 재정
3.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등 · 설계자 · 감리자 및「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13호 · 제14호에 따른 수급인 · 하수급인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및 재정
4. 다른 법령에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공동주택관리 분쟁(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공동주택 비율이 낮은 시 · 군 · 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 · 군 · 구의 경우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 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 선임 · 해임 · 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 ·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 · 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 · 보수 · 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 ·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 · 조정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 또는 시 · 군 · 구의 조례(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한정한다)로 정하는 사항

26)「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조정등의 처리기간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등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2항에 따른 흠결보정기간 및 제48조에 따른 하자감정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

일(처리 30일+당사자 의사표시 30일)로 설정되어 있음.[27]

두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법정 처리기간 준수율을 보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위원회의 경우 전체 법정기간 준수율은 2025년 기준으로 64%이나 기각(각하) 사건을 제외할 경우 26%로 저조한 상황임.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도 전체 법정기간 준수율이 44%, 기각(각하) 사건을 제외할 경우 20%로 나타나고 있어, 최근 5년 동안 연례적으로 50%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실적]

(단위: 건, 일, %)

연도	접수	처리(건)				처리 중	평균 소요기간(일)	법정기간 준수율(%)			
		계	조정성립	불성립	기각 또는 각하			계	조정성립	불성립	기각 또는 각하
2021	82	22	18	2	3	0	61	**35**	**22**	0	100
2022	89	39	13	2	24	0	54	**56**	**0**	0	83
2023	81	46	17	0	29	0	51	**53**	**24**	0	99
2024	88	49	18	0	31	0	45	**76**	**28**	0	100
2025	136	70	31	8	31	24	50	**64**	**26**	0	100

주 1) 소요기간은 처리 건을 기준으로 접수부터 처리(성립, 불성립, 기각 등)까지의 기간(일)
2) 법정기간 준수율은 처리 건을 기준으로 조정성립, 불성립 등 각각 산정함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를 재작성

하여야 한다.

1.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60일(공용부분의 경우 90일)**

③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정등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각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7)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 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실적]

(단위: 건, 일, %)

연도	접수	처리(건)					처리중	평균 소요기간(일)	법정기간 준수율(%)				
		계	조정성립	불성립	기각 또는 각하	취하			계	조정성립	불성립	기각 또는 각하	취하
2021	740	389	148	50	63	128	-	211	**38**	**41**	44	35	32
2022	595	389	76	34	136	143	-	279	**36**	**21**	35	51	31
2023	453	292	42	50	61	139	-	232	**47**	**43**	48	44	48
2024	436	288	56	35	41	156	-	205	**38**	**34**	37	37	39
2025	549	343	60	62	60	161	206	179	**44**	**20**	58	52	45

주 1) 소요기간은 처리 건을 기준으로 접수부터 처리(성립, 불성립, 기각 등)까지의 기간(일)
2) 법정기간 준수율은 처리 건을 기준으로 조정성립, 불성립 등 각각 산정함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를 재작성

분쟁조정 법정 처리가 지연될 경우 공동주택의 하자 및 층간소음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 입주자의 불편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법정처리기간 준수율 제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층간소음 분쟁과 관련한 대체적 분쟁 제도(ADR)로서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민원 절차 일원화 또는 간소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 층간소음 관련 민원에 대한 대체적 분쟁 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로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존재함.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오염·소음 및 일조권 침해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 분쟁을 다루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리비·사용료 등 징수, 아파트 리모델링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다루기 때문에 서로의 권한과 역할이 다르지만, 두 기관 모두 층간소음 분쟁을 처리하는 것을 업무에 포함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현행법상 층간소음을 다루는 정부기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분쟁해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원화로 재정비할 필요

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28]

한편 당사자의 의사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배상을 목적으로 하면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를, 입주자 공동체의 자율적 해결을 목적으로 하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여 제도상 두 기구의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음.[29]

그럼에도 불구하고 ① 두 기관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 절차는 사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 ADR제도로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민원인의 관점에서 그 차이를 구별하기 어렵고, ② 동일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의 역할이 부여되었음에도 처리방식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원인의 선택에 따라 분쟁해결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③ 두 기관의 분쟁해결 판단 또는 결과가 다를 경우 민원인에게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④ 중복되는 층간소음 업무를 일원화함에 따라 절차 · 인력 및 경비가 절감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로 접수된 민원 중 방문상담이나 소음측정을 원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로 다시 안내를 하고 있음. 한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소음 측정 및 중재상담 이후에도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두 곳을 함께 안내하고 있음.

그런데 두 위원회는 재정(금전배상 목적)과 조정(생활개선 목적)이라는 서로 다른 목적과 절차로 운영되고 있으나, 안내 과정에서 이러한 차이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인이 사전에 성격 차이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어느 기관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을 겪거나 두 기관을 오가며 상담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음.

[층간소음 분쟁 관련 기관 비교]

구분	기 후 부		국 토 부	
관련 기관	환경분쟁조정 피해구제위원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중앙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근거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 제1항

28) 박광현, 「층간소음분쟁 해결을 위한 형사법적 접근」, 2020, p. 163.

29) 이현욱,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층간소음 분쟁 해결 방안에 관한 소고」, 2022, p. 32-34.

구분	기 후 부		국 토 부	
설립 목적	환경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해결	층간소음 측정,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피해조정지원	공동주택내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조정	공동주택 관리 민원상담, 관리진단 및 기술자문, 교육 등 공동주택 관리지원
소관 업무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및 소음・진동,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등으로 인한 건강・재산・정신상 피해에 대한 분쟁	공동주택 층간소음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구성, 동대표 자격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공용부분 유지·보수·개량, 리모델링, 층간소음, 혼합주택단지 분쟁	공동주택관리 전 분야(관리행정, 회계, 장기수선계획 등)에 대한 전화, 서면, 인터넷, 방문 등 다채널 상담 관리진단, 기술자문 법정교육 관련 매뉴얼, 지침서 등 제작 및 배포 등
업무 범위	사업활동, 기타활동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소음 등과 관련된 분쟁해결	층간소음 관련 전화상담 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공동주택 분쟁 (층간소음 등) 조정	공동주택관리 민원상담(층간소음 포함), 관리진단 및 기술자문, 교육 등 업무를 수행하여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위원회 구성	(중앙) 100인 이내 -위원장 1, 위원 99 (지방) 30인 이내 -위원장 1, 위원 29	위원회 없음	(중앙) 15인 이내 - 위원장1, 위원 14 (지방) 10인 이내 - 위원장 1, 위원 9	위원회 없음
권한	중재, 재정, 조정, 알선	조정기능 없음	조정 * 당사자 수락시 재판상 화해 효력	조정기능 없음
운영 기관	(중앙)중앙환경분쟁 조정피해구제위원회 (지방)17개 시도	한국환경공단	LH	LH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재구성

향후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층간소음 관련 ADR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절차 일원화 또는 간소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주택 및 주거동향조사, 주택공시가격조사 사업: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추진 과정에서 주택가격 격차 문제를 고려할 필요

가. 개 요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대표적인 주택시장의 가격지표로서 “주택매매가격” 지수와 “주택공시가격” 지수가 있음. 주택매매가격(가격동향) 지수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주택 및 주거동향조사’ 사업에서, 주택공시가격 지수는 ‘주택공시가격조사’ 사업에서 각각 조사하여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음.

‘주택 및 주거동향조사’ 사업은 주택가격동향조사와 주거실태조사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대응에 활용하고 대외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90억 800만원 중 185억 2,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4%)되고 4억 5,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300만원이 불용되었음.[30]

‘주택공시가격조사’ 사업은 표준주택·개별주택·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결정·공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608억 3,700만원 중 594억 4,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7%)되고 3억 1,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0억 7,800만원이 불용되었음.[31]

[2025년도 주택 및 주거동향조사 및 주택공시가격조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주택 및 주거동향조사	18,194	18,194	814	-	19,008	18,522	453	33	17,798
주택공시가격조사	60,462	60,462	375	-	60,837	59,446	313	1,078	62,256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구체적으로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주택법」 규정[32]에 근거하여 전국의 아파트, 연립

30) 일반회계-주택 및 주거동향조사(1031-301)(주택토지실)

31) 일반회계-주택공시가격조사(1031-302)(주택토지실)

32) 「주택법」
제88조(주택정책 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적절한 주택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건설·공급·관리 및 이와 관련된 자

주택, 단독주택 등의 매매가격변화를 측정하여 공표하는 것으로, 주택시장의 판단지표 또는 주택정책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지표임.

주택공시가격지수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규정[33]에 근거하여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를 조사하여 공표하는 것임.[34]

나. 검토의견

2025년 주택시장에서 수도권-지방간, 고가-저가 주택간 가격 격차가 더욱 심화되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주택매매가격지수를 보면, 전국 증가율은 전년 대비 1.02%로 전년도(0.13%)

금의 조달, 주택가격 동향 등 이 법에 규정된 주택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 ·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91조(업무의 위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3. 주택가격의 동향 조사 및 주택시장 분석

3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표준주택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표준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 · 산정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 · 공시 등) 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시 · 군 · 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 ·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 · 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 ·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 6. 9.>

34) 주택공시가격은 시세뿐만 아니라 “시세반영률”도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실제 시세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함. 다만 2023년 이후로는 시세반영률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현재 공시가격 변화는 대부분 시세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목표시세반영률]

(단위 : %)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공동주택	70.2	71.5	69.0	69.0	69.0	69.0
표준주택	55.8	58.1	53.6	53.6	53.6	53.6
표준지	68.4	71.6	65.5	65.5	65.5	65.5

보다 증가폭이 다소 확대되었음.

그런데 지역간 증가율을 보면, 서울은 2024년 3.18%, 2025년 7.07%로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반면, 대구광역시는 2024년 △3.9%, 2025년 △2.96%로 2년 연속 하락하고 있으며,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면 2년 연속으로 상승하는 광역지자체가 전북을 제외하고 존재하지 않는 등 수도권-지방간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주택매매가격지수(주택종합) 전년 대비 증감률(광역지자체별)]

(단위: % 전년 대비)

시기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024년	0.13	3.18	△2.14	△3.90	0.44	△1.01	△0.92	△0.21	△5.68
2025년	1.02	7.07	△0.87	△2.96	△0.75	△1.58	△1.61	1.55	1.74
시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강원
2024년	0.45	△0.04	△0.69	0.26	△0.04	△0.22	△1.00	△1.48	0.77
2025년	1.10	0.34	△0.77	1.08	△0.71	△0.65	△0.68	△1.64	△0.23

주) 2024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사된 지표를 2025년에 발표한 것을 의미함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를 재작성

지역간 격차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전국 증가율은 2024년 0.07%, 2025년 1.04%로 주택 전체 증가율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서울은 2024년 4.67%, 2025년 8.98%로 전체 주택가격지수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는 반면, 대구광역시는 2024년 △4.93%, 2025년 △3.82%로 전체 주택가격지수보다도 낮게 조사되었음.

[주택매매가격지수(아파트) 전년 대비 증감률(광역지자체별)]

(단위: % 전년 대비)

시기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024년	0.07	4.67	△2.67	△4.93	1.54	△1.36	△1.24	△0.30	△6.46
2025년	1.04	8.98	△1.11	△3.82	△0.72	△1.94	△2.14	1.96	1.89
시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강원
2024년	0.57	△0.38	△1.20	0.34	△0.87	△0.98	△1.53	△2.35	0.66
2025년	1.35	0.32	△1.23	1.69	△1.50	△1.65	△0.81	△2.17	△0.87

주) 2024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사된 지표를 2025년에 발표한 것을 의미함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를 재작성

이에 따라 지역간 증감률의 차이(최대값-최소값)와 표준편차는 2024년 대비 2025년에 모든 분야에서 증가하여 지역간 격차, 특히 수도권-지방의 가격 차이가 공동주택(아파트)을 중심으로 심화되었음을 보여줌.

[주택매매가격지수(전체 및 아파트) 전년 대비 증감율 종합]

(단위: % 전년 대비)

분야	연도	전국	최대지역(A)	최소지역(B)	차이(A-B)	표준편차
전체	2024	0.13	3.18(서울)	△5.68(세종)	8.86	1.88
	2025	1.02	7.07(서울)	△2.96(대구)	10.03	2.14
아파트	2024	0.07	4.67(서울)	△6.46(세종)	11.13	2.39
	2025	1.04	8.98(서울)	△3.82(대구)	12.8	2.76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를 재작성

또한, 2025년에는 지역간 격차 뿐만 아니라 고가주택이 저가주택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가격 격차도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주택공시가격과 주택매매가격의 산출 방식을 비교하면, 공시가격은 주택 가액의 크기가 변동률에 영향을 미치는 '총액변동방식'으로 산출되는 반면, 매매가격은 주택 가액의 크기가 변동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하평균방식'으로 산출하고 있음. 이러한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가격이 고가구간에 있는 주택(고가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더 높으면, 공시가격의 변동률은 매매가격보다 높게 나타남.

[주택매매가격지수 및 공시가격지수 산출방식 비교]

구 분	2025년 가격	2026년 가격	총액변동 방식 (공시가격)	기하평균 방식 (매매가격)
주택 A	10,000	10,000	(180,000/130,000) = 1.385 ☞ 38.5% 상승	(A주택변동비 × B주택변동비 × C주택변동비 × D주택변동비) 1/4 = 1.107 ☞ 10.7% 상승
주택 B	10,000	10,000		
주택 C	10,000	10,000		
주택 D	100,000	150,000		
합계	130,000	180,000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를 재작성

2025년 매매가격과 공시가격의 차이를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매매가격보다 공시가격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음수값), 이는 고가주택의 상승률이 저가주택보다 더 높게 나타났음을 의미함.

[2025년 주택매매가격지수(주택종합) 및 표준주택공시가격 전년 대비 증감율(광역지자체별)]

(단위: % 전년 대비)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매매가격(A)	1.02	7.07	△0.87	△2.96	△0.75	△1.58	△1.61	1.55	1.74
공시가격(B)	2.51	4.51	1.96	1.52	1.42	1.50	1.04	1.24	1.32
차이(A-B)	△1.49	2.56	△2.83	△4.48	△2.17	△3.08	△2.65	0.31	0.42
구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강원**
매매가격(A)	1.10	0.34	△0.77	1.08	△0.71	△0.65	△0.68	△1.64	△0.23
공시가격(B)	2.49	1.05	0.75	0.61	0.63	0.97	0.08	△0.29	1.34
차이(A-B)	△1.39	△0.71	△1.52	0.47	△1.34	△1.62	△0.76	△1.35	△1.57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를 재작성

특히, 아파트는 전체 지역에서 공시가격 증가율이 매매가격보다 높았으며, 서울의 경우 전체 주택에서는 매매가격(7.07%)이 공시가격(4.51%)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아파트에서는 매매가격(8.98%)보다 공시가격(18.67%)이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음.

이는 2025년에 서울의 고가 아파트에서의 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을 의미하는 것임.

[주택매매가격지수(아파트) 및 공동주택공시가격 전년 대비 증감률(광역지자체별)]

(단위: % 전년 대비)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매매가격(A)	1.04	8.98	△1.11	△3.82	△0.72	△1.94	△2.14	1.96	1.89
공시가격(B)	9.16	18.67	1.14	△0.76	△0.10	△1.25	△1.12	5.22	6.29
차이(A-B)	△8.12	△9.69	△2.25	△3.06	△0.62	△0.69	△1.02	△3.26	△4.40
구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강원**
매매가격(A)	1.35	0.32	△1.23	1.69	△1.50	△1.65	△0.81	△2.17	△0.87
공시가격(B)	6.38	1.75	△0.53	4.32	△0.24	0.07	0.85	△1.76	△0.45
차이(A-B)	△5.03	△1.43	△0.70	△2.63	△1.26	△1.72	△1.66	△0.41	△0.42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를 재작성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값 상승폭 확대는 과거 주택공급 부진 여파로 수급불안 심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양도세 중과 이후 매물 감소, 호가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임. 구체적으로 전월세 시장은 과거 2022~2023년 착공실적 부진이 시차를 두고 입주물량 감소 등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며,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9.7대책, 1.29방안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등 공급 조기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매입임대 등 단기 공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임.

국토교통부는 2025년에 주택공급 및 대출규제 등을 통해 주택가격의 안정화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주택시장에서의 가격 격차 문제는 주택보유자-비보유자의 소득 및 자산 격차를 더욱 악화시키고 전월세 시장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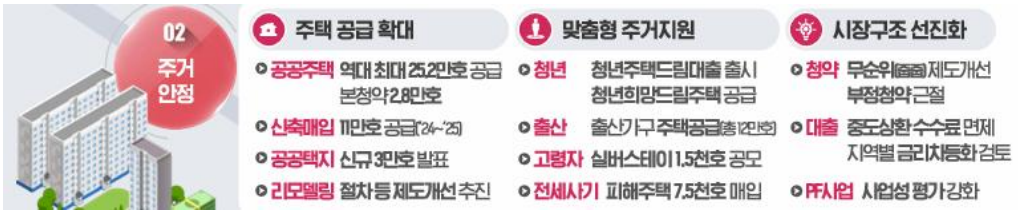
[2025년 국토교통부 핵심 추진과제 일부(부동산 정책 부분 발췌)]

2. 서민 주거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 공공주택 25.2만호, 신축매입 11만호 공급('24~'25), 공공주택 2.8만호 청약

○ 리모델링 제도개선, 무순위 청약(줍줍)개선, 정책자금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 출산가구 12만호 공급,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추진



자료: 2025년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및 인포그래픽을 재작성

[2025년 하반기 주요 부동산 안정화 정책]

날짜	제목	주요내용
3.19.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 지정 ○ 시장 과열 지속 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적극 검토 ○ 국토부 · 서울시 합동 점검반 가동, 자금출처 조사 등 투기수요 차단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를 축소하고, 6.28일부터 현행 은행 자율관리 조치사항을 全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 주담대 한도 제한(6억원), 주택구입시 전입의무 부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규제 강화 등 추가 조치도 병행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 年 27만호(과거比 1.7배) 신규착공 ○ 공공택지에서는 LH가 주택사업을 직접 시행하여 공급 확대 및 공급속도 제고 ○ 노후 임대주택, 노후 공공청사, 미사용 학교용지 등 활용해 도심 내 공급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 확대 지정 ○ 수도권 · 규제지역 내 15억 초과 주택 주담대 한도 제한 강화(6→2~4억원) ○ 과도한 부동산 투자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제도 합리화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를 재작성

6. 산악벽지용친환경전기열차기술개발(R&D) 사업: 연구 기획 부실과 사업대상지의 환경성 검토 미흡으로 인한 연구개발사업 중단과 예산 낭비 주의 필요

가. 개 요

‘산악벽지용친환경전기열차기술개발(R&D)’ 사업은 국내 산악지역 등의 이동 편의 증진·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환경 산악철도 시스템 개발 및 시범노선 구축·운영 추진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7억원 전액이 불용되었음(집행률 0%).[35]

[2025년도 산악벽지용 친환경전기열차 기술개발(R&D)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산악벽지용친환경 전기열차기술개발 (R&D)	2,700	2,700	-	-	2,700	-	-	2,700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 사업은 총 280억 7,500만원 규모의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2020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2025년 환경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었음. 이에 2025년도 정부출연금은 전액 집행되지 않았고, 2024년까지 투입된 정부출연금 223억 7,900만원을 끝으로 사업이 종료되었음.

[산악벽지용 친환경전기열차 기술개발(R&D) 사업 개요]

■ (목적) 국내 산악지역 등의 이동 편의 증진・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환경 산악철도 시스템 개발 및 시범노선 구축・운영
- 급경사 180‰, 급곡선 10m 이상 도로 겸용 선로에서 운행이 가능한 친환경 전기열차 1편성 제작 및 1km 내외 시범노선 구축(인프라, 신호・통신 등)후, 시운전 시험을실시하여 성능・신뢰성을 검증하고 운영・유지보수 기술 개발

■ (사업내용)

35) 일반회계-산악벽지용친환경전기열차기술개발(R&D)(2733-322)(철도국)

-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실용화 연구) 시범노선 추진을 위한 지자체 선정 및 전략마련, 산악벽지 형궤도 적용 관련 법·제도 연구 등 실용화 기반 구축
-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차량 개발) 산악용 운송시스템 완성차량 1편성 설계·제작 및 성능검증
-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의 시범노선 건설기술 개발) 산악용 운송시스템 설계 및 시공(안) 수립, 시범노선 건설 등

■ (사업비/기간) 280억 7,500만원 / 2020~2026년

(단위: 백만원)

총 정부출연금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8,075	960	4,685	7,203	7,203	2,328	2,700	2,996

■ (사업추진절차) 국토교통부(예산교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협약체결·연구개발비지급) → 연구개발기관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를 재작성

나. 검토의견

첫째, 산악벽지용친환경전기열차기술개발(R&D) 사업은 연구 기획 단계에서 사업 후보 대상지의 생태·자연환경 보호 문제가 예견되었음에도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 사업의 기획보고서를 보면, 산악철도 노선의 경제성 분석을 위하여 지리산 권역을 후보 대상지 중 하나로 정하거나 해당 지자체인 남원시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리산 권역에 대해 산악열차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였음.

특히 기획보고서에서는 남원시에 대하여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에 따른 사업 타당성 분석 연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노선을 선정하고 사업 편익 분석 및 사업 추진 전략을 구축하는 등 "산악철도에 가장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로 언급되고 있음을 볼 때,[36] 연구 기획 당시부터 지리산 권역에 산악철도를 설치할 가능성을 높게 검토한 것으로 보임.

[산악벽지용친환경전기열차기술개발(R&D) 사업 수요조사 결과 - (1) 총괄]

연번	지자체	사업 위치	입지	궤도연장(km)	주 목적	필요성	상세계획
1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자연녹지지역(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	7	관광객 수송	남산공원 대기청정지역 구현을 위한 친환경 대체 교통수단 도입	O

36)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산악철도 실용화 기술개발 기획 최종보고서」, p. 267~268.

연번	지자체	사업 위치	입지	궤도연장 (km)	주 목적	필요성	상세 계획
2	**남원시**	·1구간(육모정~고기삼거리~정령치~도계삼거리~달궁) ·2구간(천은사~성삼재~도계삼거리~달궁)	·공원지역(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백두대간보호지역(핵심구역, 완충구역)	3	·산악벽지형 궤도(교통시설) ·관광형 궤도	·산악벽지형 주민들의 겨울철 교통 기본권 확보 ·환경훼손이 최소화되면서 사계절 지리산 관광이 가능한 친환경 녹색 교통시스템 도입 필요성 제기	O
3	경남 하동군	화개, 악양, 청암면	보전관리지역	12.4	관광객 수송	하동군 대표 관광지 간 연계 관광자원화	X
4	태백시	피재~매봉산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2.84	관광연계 대중교통	관광연계 대중교통	X
5	태백시	시내~절골~오투~서학~시내(환형)	도시계획구역	10.89	관광연계 대중교통	관광연계 대중교통	X
6	평창군	횡계리 산1-134 일원	계획관리지역 외	3.5	관광	규제프리존	X

자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산악철도 실용화 기술개발 기획 최종보고서」, p. 261

[산악벽지용친환경전기열차기술개발(R&D) 사업 수요조사 결과
- (2) 세부계획 수립 지자체 수요조사 상세내용]

연번	지자체	예상 이용수요 (연간)	사업시기	사업비	최대 기울기	최소 곡선반경	기존도로 활용 가능 여부
1	서울 특별시	약 3백만명	2018년	약 2,500억원	161‰	22m	가능
2	**남원시**	300만	2016~2024	2,510억원	180‰	10m	가능

자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산악철도 실용화 기술개발 기획 최종보고서」, p. 261

그런데 산악철도가 국립공원 권역에 설치됨에 따른 자연 서식지 훼손 여부 등 환경영향분석과 환경단체 민원 대응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 당시에는 관계 기관 및 환경단체(5개 단체, 13명)에 대한 의견 조회 수준에 그쳤음.

또한 당시 환경단체와 (구)환경부는 환경훼손, 생태계 보전과 안전성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했음에도, 기획 당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 환경 문제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산악벽지용친환경전기열차기술개발(R&D) 사업 환경단체 및 (구)환경부 의견 정리]

단체 또는 기관	의견(요약)
(구)환경부 공원생태과	○ **국립공원 내 추가시설 도입에 대해 매우 민감** (케이블카=산악철도=관광개발)
국립공원 관리공단 (지리산북부 관리사무소)	○ 산악철도 도입에 대한 공식입장은 밝힐 수 없음 ○ 사업구간은 겨울철 해빙기 낙석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 검토가 필요함
국립공원 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	○ 도로통제 계획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사찰(천은사)과 지역주민의 동의가 선결되어야 함 ○ 야생동물에게 미치는 사업 전후 영향 검토 필요함
국립공원 관리공단 (국립공원연구원)	○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존재 목적은 생태계 보전으로, 지리산에 어떠한 추가시설 도입이라도 타 지역 확산이 우려됨 ○ 향후 여행패턴은 고지대 방문이 아니라 저지대 문화를 체험하는 SLOW 패턴으로 변화될 것임
A 연합	○ 산악철도 단독 추진은 검토 가능하나, 케이블카·관광호텔 등과 연계된 개발사업에는 부정적 ○ 환경부는 산악철도와 케이블카를 유사한 시설로 보고 국립공원 내 설치에 신중한 입장임
K 모임	○ 산악철도는 케이블카보다 환경친화적이지만 환경부는 같은 사업으로 바라봄 ○ 환경훼손 우려와 경제성 부족, 높은 유지관리 비용 등의 한계가 있으며, 도입에 앞서 지방도 개선과 방문객 설득 등 필요
J 연합	○ 케이블카 대비 산악철도의 친환경성은 인정되나 경제성과 조망권 확보, 지리산 탐방 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 투자비, 지방도 수요 등 투자가치 검토 필요
H 새명	○ 인접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의 경제성 검증 필요
J연대	○ 과거 북한산 산악철도도 무산된 예가 있듯이 4~5천억 투자 대비 흑자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 산악철도는 지역주민의 생활권을 해결하는 문제라고 보기 어려움

자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산악철도 실용화 기술개발 기획 최종보고서」, p. 258~259.

비록 연구개발사업이 지리산국립공원 및 백두대간 보호지역 외부에서 진행되고 1km 내외의 시범(Test-bed)노선을 구축하는 정도이므로 환경 훼손의 영향이 적어 기획 단계에서 고려할 필요성이 낮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악철도의 시범노선 구간을 연장하여 상용 노선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함. 실제 2025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시범노선의 상용화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산악벽지용친환경전기열차기술개발(R&D) 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일부)]

○ **시범사업 구간(1km)은 지리산국립공원 및 백두대간 보호지역 외부에서 진행되나, 상용화 사업(13km)*은 보호구역 내 핵심구간이 대상** * 시범노선 포함 총 연장 13km(육모정 ~ 고기삼거리 ~ 정령치) - **국가환경정책(관련계획)과의 부합성·연계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전체 사업(노선)에 대한 개발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등의 선행 검토** 필요 ○ 사업목적으로 산간벽지 지역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제시하였으나, '남원 주천-고기 국가지원지방도 시설개량공사'로 동절기 주민불편 등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 ○ **자연생태적 측면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수준의 보전·관리 필요** ○ **(결과 : 재검토)** 국가환경정책(관련계획)과의 부합성·연계성 등이 확보되지 않았고, 사업 추진 시 생태·환경적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의 훼손이 우려되므로 재검토*하여야 함. * **개발 여건이 적합한 다른 지역을 입지 대안으로 선정하여야 함**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를 재작성

무엇보다 기획보고서에서도 후보지 결정시 상용 노선 건설을 강제할 필요가 있으며 상용화 노선 건설이 어렵더라도 철거하지 않고 전용 시험선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언급하고 있음을 볼 때, 시범노선 이상의 환경 훼손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환경영향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었음.

[산악벽지용친환경전기열차기술개발(R&D) 사업 연구성과 활용 계획(일부)]

1) Test bed구간 연장을 통한 상용 노선 건설 - **연구 성과 건설된 시험선을 연장하여 상용화 노선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시험선 활용**의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판단됨 - **시험선 후보지 결정 시 지자체의 상용화 계획을 반영한 추진 전략제시 필요하며 상용노선 건설을 후보지 선정 시 강제**할 필요가 있음 - 연구 성과 개발된 시제차량을 예비 차량 등으로 활용 할 수 있음 2) Test bed구간의 산악열차 전용 시험선로로 활용 - **Test bed 구간의 연장을 통한 상용화 노선 건설이 안될 경우, 향후 예상되는 국내 및 국외 산악열차 개발 시 차량 및 인프라 성능 검증 시험선로로 활용** - 시험선로로 사용하는 기간은 차량을 통제함. 시험선로로 운행 되지 않는 경우는 일반 도로로 활용(매립형 궤도 건설로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함) - 또한, 겨울철과 같이 차량의 운행이 되지 않는 기간에 산악열차 홍보 및 체험장으로 활용이 가능함

자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산악철도 실용화 기술개발 기획 최종보고서」, p. 272.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기획 단계에서 「도로교통법」, 「도로법」, 「궤도운송법」 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고, 특히 궤도운송법상 궤도사업 허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

평가, 사전재해영향평가 및 자연공원 인허가 사항 등을 검토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이는 궤도 사업 허가에 필요한 법적 절차나 서류를 확인하는 인허가 사항을 검토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실질적인 환경 분석이라 보기 어려움.

[궤도 사업 허가에 필요한 서류]

구분	대상
환경영향 평가	- 철도건설법 및 도시철도법: 길이 4킬로미터 이상, 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 궤도운송법: 삭도의 길이 2킬로미터 이상, 삭도 제외 길이 4킬로미터 이상, 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규정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
사전재해 영향평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대상으로 교통시설의 건설이 이에 해당함
자연공원 인허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 등 공작물을 건설하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함

자료: 국토교통부

결과적으로 국토교통부는 연구개발사업 기획 단계에서 산악열차가 설치되는 후보지가 생태 환경을 보존하여야 하는 국립공원 일대로서 생태·자연환경 보호 문제가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연구 기획 단계에서 실질적·구체적인 환경영향 검토가 미흡한 문제가 있었음.

둘째, 산악벽지용친환경전기열차기술개발(R&D) 사업의 환경영향 검토·평가를 사업대상지 확정 이후에 실시함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착수부터 중단까지의 기간 동안 투입된 예산 중 일부가 매몰비용으로 전락하는 등 예산 낭비가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산악열차 상용노선 또는 시범노선 건설의 환경 영향성 검토 또는 평가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사업대상지가 확정되기 이전인 2020년 사업 초기부터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차량 및 인프라 구성품 설계를 착수하였고, 2022년부터는 시제품 제작 절차에 돌입하였음.

[산악벽지용친환경전기열차기술개발(R&D) 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구 분	주요내용	예산(백만원)
1차년(2020년)	■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차량 및 인프라 구성품 기본설계	960
2차년(2021년)	■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차량 및 인프라 구성품 상세설계	4,685
3차년(2022년)	■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차량 및 인프라 구성품 시작품 제작, 시범노선 설계	7,203
4차년(2023년)	■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차량 및 인프라 구성품 시작품 제작·시험	7,203
5차년(2024년)	■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차량 모듈 단위 제작 및 인프라 구성품 시제품 제작	2,328
6차년(2025년)	■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완성차 조립 및 시험, 시범노선 착공	2,700
7차년(2026년)	■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차량 및 시범노선 인프라 성능시험·검증	2,996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를 재작성

이후 2022년 7월에 사업대상지가 선정되고 2025년 2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재검토' 결과가 내려짐에 따라 4월 특별평가에서 '지원중단'이 내려질 때까지 시범노선 건설에 필요한 차량, 인프라 등 예산이 집행되었음.

[산악벽지용친환경전기열차기술개발(R&D) 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특별평가 요지]

일시	평가요지	주요내용
2025. 2월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재검토)**	○ 시범사업 구간(1km)은 지리산국립공원 및 백두대간 보호지역 외부에서 진행되나, 상용화 사업(13km)은 보호구역 내 핵심구간이 대상 ○ 국가환경정책(관련계획)과의 부합성·연계성 등이 확보되지 않았고, 사업 추진 시 생태·환경적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의 훼손이 우려되므로 재검토*하여야 함. * 개발 여건이 적합한 다른 지역을 입지 대안으로 선정하여야 함
2025. 4월	특별평가 **(지원중단)**	○ 연구진이 제안한 시험선로(T/B)의 구축필요성, 설치부지, 규모 및 구축비용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미흡 ○ 수요조사시 도입의사를 표명한 지자체를 언급하였으나 구체적인 도입계획을 확인할 수 없어 가시적인 수요 및 그에 따른 실용화 가능성 또한 높다고 보기 어려움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를 재작성

이 사업의 착수 시점인 2020년부터 2025년 지원이 중단될 때까지의 연구비 집행 현황을 보면, 시스템 실용화(30억 8,100만원), 차량 설계·제작(60억 2,500만원), 인프라 개발(102억 4,000만원) 등 193억 4,600만원이 기 집행되었음.

이 중 차량 제작(38억 700만원) 등 시제품은 사업 중단 이후 재활용 가능성이 낮아 매몰비용으로서 예산 낭비가 우려됨. 2024년까지의 연구성과만으로는 산악열차 상용화가 불확실하며, 향후 타 지자체에서 사업을 재추진하더라도 설계도서 활용은 가능할 수 있겠으나 종전 시제품 재활용은 불확실하기 때문임.

[산악벽지용친환경전기열차기술개발(R&D) 사업 연구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당초 (a+b)	기집행 (a)	미집행 (b)
시스템 실용화 (법제도적 기반 마련)	법제도 제·개정, 기준 마련	1,892	1,787	105
	투자평가 지침 마련	1,189	1,189	-
	소계	3,081	2,976	105
차량 (3량1편성의차량 1량제작)	차량 설계	2,323	2,323	-
	차량 제작	4,208	**3,807**	401
	소계	6,531	6,130	401
인프라 (산악열차 인프라 개발)	랙&피니언 개발	3,662	3,662	-
	충진재&베딩재 개발	295	295	-
	궤도시스템 개발	5,277	5,277	-
	신호&통신 시스템 개발 및 검증	1,006	1,006	-
	소계	10,240	10,240	-
시범사업 (시범노선 건설)	노반 공사	1,322	-	1,322
	정거장 및 검수고 건설	297	-	297
	랙, 분기기, 히팅장치 설치	1,357	-	1,357
	궤도 공사	2,580	-	2,580
	충진재 생산& 시공	834	-	834
	시스템(전력, 신호, 통신 등) 설치	1,052	-	1,052
	예비비	558	-	558
	소계	8,000	-	8,000
합계		27,852	19,346	8,506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를 재작성

만일 사업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병행 또는 우선 실시하는 등 환경성 검토를 조속히 수행한 이후에 사업 예산을 투입하였으면, 해당 예산의 낭비가 최소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됨.

결과적으로 국토교통부는 환경영향 검토·분석을 사업 대상지 확정 이후에 실시함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착수부터 중단까지의 기간 동안 일부 예산 낭비가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7. 국토안전관리원출연 사업: 도로지반조사장비 교체 소요를 고려한 예산 운용 효율성 제고 필요

가. 개 요

‘국토안전관리원출연’ 사업은 시설물 및 건설공사의 안전·품질관리, 지하안전관리, 기술인력 양성 등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868억 6,3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37]

[2025년도 국토안전관리원출연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토안전관리원 출연	85,950	86,863	-	-	86,863	86,863	-	-	92,819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5년도 추경예산에는 지반침하 사고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차량형 도로지반조사장비 1대를 추가로 구매(8억 5,800만원)하고, 탐사구간 연장에 따른 출장비 3,500만원, 소모품 구입 2,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9억 1,300만원이 추가되었음.

[2025년도 국토안전관리원출연 사업 추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2025년 예산	2025년 추경안
산출내역	산출내역
○ 지반침하 안전점검: 1,462 가. 차도용 도로지반조사 장비 구매 **1대**: 850 나. 협소지역용 도로지반조사 장비 구입비: 165 다. 장비 유지보수 및 지반탐사 운영: 447 * 안전점검 수행출장비: 268, 소모품 구입: 89, 안전점검 지자체 교육 운영: 90	○ 지반침하 안전점검: 2,375**(+913)** 가. 차도용 도로지반조사 장비 **2대** 구매: 1,708**(+858)** 나. 협소지역용 도로지반조사 장비 구입비: 165 다. 장비 유지보수 및 지반탐사 운영: 502 * 안전점검 수행출장비: 303**(+35)** 소모품 구입: 109**(+20)** 안전점검 지자체 교육 운영: 90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를 재작성

37) 일반회계-국토안전관리원출연(4313-301)(건설정책국)

나. 검토의견

추경예산으로 교체한 도로지반조사장비의 2025년 탐사 실적이 저조하므로, 국토교통부는 장비의 내용연수 도과에 따른 교체 소요를 사전에 예측하고 본예산에 반영하는 등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 및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함)은 2025년 추경 예산 8억 6,500만원을 집행하여 도로지반조사장비 1대를 추가 구매하였는데, 2025년 11월 28일에 해당 장비를 납품받았음.

[2025년도 도로지반조사장비 구매 계약 내용]

(단위: 백만원)

연도	용역명	입찰 공고	계약상대방	계약일	계약기간	계약 금액	집행금액		납품일
							날짜	금액	
2025	차량형 도로지반조사장비 구매 및 제작	25.6.10	케이테크 글로벌	25.8.8	25.8.8~ 25.12.6	865	25.12.15	865	**25.11.28**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를 재작성

당초 국토교통부와 관리원은 추경안 편성 당시 추가 구매하는 도로지반조사장비를 활용하여 탐사 목표치를 당초 3,255km에서 4,064km로 27%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연말에 장비를 납품받은 시기적인 이유와 동절기 탐사 제약 등으로 인하여 해당 장비는 사실상 2025년에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2025년 관리원의 도로지반 조사 실적]

(단위: km)

2025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지자체 수요조사	78.24	314.90	140.75	355.73	188.87	120.79	503.31	273.47	671.72	345.81	263.78	**3.04**	3,260.41
직권조사	-	-	-	-	-	-	14.79	93.57	77.53	215.85	106.94	-	508.68
합계	78.24	314.9	140.75	355.73	188.87	120.79	518.1	367.04	749.25	561.66	370.72	**3.04**	3,769.09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를 재작성

[2023~2025년 탐사목표와 탐사실적]

(단위: km)

연도	탐사목표(km)	탐사실적(km)
2023	1,663.4	1,665.3
2024	2,285.4	2,308.3
2025(추경)	3,255.1 **(→4,064)**	3,769.09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를 재작성

국토교통부와 관리원은 기존 장비 6대를 최대로 활용하여 탐사실적을 크게 개선하였고, 종전 장비의 내용연수가 도과하기 때문에 적기 교체를 위한 장비 도입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었다는 의견임.

그러나 이 사업의 경우 추경예산으로 조사장비를 구매하더라도 구매절차에 필요한 소요 시간으로 인하여 장비가 2025년 탐사에 활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며, 종전 장비의 내용연수가 도과하는 사정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하였으므로 추경예산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함.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도로지반조사장비의 내용연수 도과에 따른 교체 소요를 사전에 예측하여 본예산에 반영하는 등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8. 건설 및 지하안전관리 사업: 지반탐사 실적과 지반침하 사고현황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 시정 필요

가. 개 요

‘건설 및 지하안전관리’ 사업은 건설현장 및 지하안전 점검과 불법행위 단속, 지반탐사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 확보와 건설현장 부실·불법행위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61억 3,800만원 중 60억 7,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0%)되고 6,400만원이 불용되었음.[38)]

[2025년도 건설 및 지하안전관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건설 및 지하안전관리	1,687	6,047	91	-	6,138	6,074	-	64	5,727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건설 및 지하안전관리 사업에 따른 지반탐사 실적에 있어 지역간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 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 위주로 탐사가 이루어지도록 탐사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반탐사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고보조사업(국가와 지자체 각각 50% 분담)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중 지반침하 위험이 있어 탐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구간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39)]

2025년 지반탐사 실적과 연도별 지반침하 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지반탐사 실적의 지역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일부 지역은 지반침하 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탐사 실

38) 일반회계-건설 및 지하안전관리(4323-304)(건설정책국)

39) 유사 사업인 국토안전관리원출연 사업(4313-301)에 따른 지반탐사 사업은 「지하안전법」 제3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국토부 현장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직접 지반탐사를 수행하는 사업임.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예를 들면, 인천, 세종, 충남, 경북, 제주의 경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2025년에 지반탐사가 실시되지 못하였음.

[2025년 지반탐사 실적과 연도별 지반침하 사고현황]

(단위: km, 건)

구분	지반탐사 실적(km)		연도별 지반침하 사고현황(건)					
	2025년	전체 대비 탐사 비중(%)	합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전국	3,402.4	100.0	760	142	177	162	101	178
서울	610	17.9	112	11	20	22	17	42
부산	325.2	9.6	74	17	8	16	19	14
대구	357.7	10.5	13	1	2	4	3	3
인천	-	-	26	2	1	2	3	18
광주	87.3	2.6	69	13	6	28	6	16
대전	100	2.9	32	8	9	9	4	2
울산	134	3.9	10	5	3	-	-	2
세종	-	-	4	-	1	-	3	-
경기	1,080	31.7	151	35	36	26	28	26
강원	73	2.1	40	5	10	18	2	5
충북	18.1	0.5	28	2	9	10	2	5
충남	-	-	30	5	4	-	2	19
전북	256.1	7.5	74	14	40	3	2	15
전남	220	6.5	21	7	5	4	4	1
경북	-	-	42	12	16	8	2	4
경남	141	4.1	26	5	4	9	3	5
제주	-	-	8	-	3	3	1	1

자료: 국토교통부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인천, 충남 등 지자체에서는 지반탐사 지원 예산을 미신청하였으며,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탐사 이행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는 의견임.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면 인근 지역으로 위험이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반침하 사고 예방의 실효성 제고의 측면에서 지자체 사업을 포함한 전체 지반탐사 실적을 파악하고, 이를 지반침하 사고현황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 우려지역 및 사고 발생지역에 대한 지반탐사 실시 여부와 우선순위 설정이 적정한지 점검하고, 지반침하 사고가 높은 지역 위주로 탐사가 이루어지도록 탐사 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자체 자체 탐사를 포함한 전체 지반탐사 실적을 관리하는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9. 건설공사 사후평가지원센터 운영 사업: 공공기관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이행조치 실적 제고 필요

가. 개 요

‘건설공사 사후평가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건설공사 사후평가의 이행관리와 평가체계 고도화를 통해 평가 신뢰성을 제고하고 유사사업의 시행착오를 줄이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3억 5,0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되었음.[40]

[2025년도 건설공사 사후평가지원센터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건설공사 사후평가지원센터 운영	1,350	1,350	-	-	1,350	1,350	-	-	1,250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3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공사비·공사기간·기대효과·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함.[41]

---

40) 일반회계-건설공사 사후평가지원센터 운영(4329-301)(건설정책국)

41) 「건설기술 진흥법」
제52조(건설공사의 사후평가) ①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 내용 및 효과를 조사 · 분석하여 사후평가를 하고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6조(건설공사의 사후평가)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상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이하 “사후평가서”라 한다)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② 발주청은 사후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와 제78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 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총공사비가 5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예상 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 · 분석
2. 공사 기획 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 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 · 분석
3. 해당 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에 따라 건설기술연구원 사후평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42]는 사후평가 전문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한 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행관리 조치를 제시하고 있음.

나. 검토의견

국토교통부 및 건설공사 사후평가지원센터는 공공기관의 건설공사 사후평가를 완료하지 못한 건설공사에 대해 관리·점검을 강화하여 이행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에 따라 발주기관이 준공 이후 정해진 기한(120일 등) 이내에 실시하여야 함.[43]

2025년 기준 건설공사 사후평가 이행 현황을 보면, 전체 공사 304건 대비 9.2%에 달하는 28개 공사에서 사후평가가 완료되지 못하였음.

[2025년 기준 공공기관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이행 현황]

(단위: 건)

합계(건)	완료	미완료(진행 중)	제외	기간 미도래
304	44	28	72	160

주 1) 제외: 사후평가 제외 대상 공사(공공주택사업, 민간사업 등)
2) 미도래: 평가시기 내 공사, 공기연장, 미준공 등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해당 공사의 발주기관이 주어진 기간까지 사후평가를 이행하지 못한

4.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의 만족도
5. 그 밖에 발주청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2) 「건설기술 진흥법」
제52조의2(사후평가 관리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관리기관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6조의2(사후평가 관리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연구원을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후평가 관리 업무를 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43)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5조(평가시기 및 방법) ① 제4조에 규정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는 평가지표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각각 실시한다.
1. 사업수행성과 평가 : 건설공사 준공 이후 120일 이내
2.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 : 건설공사(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에 한한다) 준공 이후 5년 이내
⑤ 발주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법 제52조에 따른 사후평가서 작성, 사후평가위원회 자문 및 사후평가서 공개 등의 모든 절차를 각각 완료해야 한다.

사유에 대하여 제재규정이나 인센티브 부족, 법령 미숙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44] 사후평가 이행 대상 기관은 공공부문에 해당하므로 민간보다 엄격하게 이행 여부와 미이행 사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건설공사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향후 유사 건설공사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거나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토교통부는 사후평가를 완료하지 못한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하여 이행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사후평가 이행조치 미완료 기관 현황]

(단위: 억원)

연도	공사명	발주청	준공일	준공금액
2024	보령-청양(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2020-06-28	759
2024	용인시(삼가-대촌)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20-12-26	2,888
2024	정읍-신태인(2공구) 도로건설공사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20-04-30	647
2024	화양-적금(2공구) 도로건설공사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20-03-01	951
2024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 건설공사	국가철도공단 강원지역본부	2020-12-31	566
2024	시화분기점 건설공사	한국도로공사수도권건설 사업단	2020-12-14	566
2024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사업 조성공사 3공구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진해직할사업단	2020-12-31	1,253
2024	삼천포화력 제4회처리장 건설공사	한국남동발전(주)	2020-05-31	658
2024	남제주복합화력 발전소 건설공사	한국남부발전(주)남제주화 력발전소	2020-11-30	1,759
2024	삼척 그린파워 1,2호기 대비공사	한국남부발전㈜	2020-12-31	4,612

44) 국토교통부는 발주청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이행이 다소 저조한 사유에 대해 다음 사유를 제시하고 있음.

1. 현행 관련 제도가 건설공사를 담당하는 발주청이 스스로 평가함으로 인해 평가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공사비 증가, 안전사고 발생 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평가 회피
2. 현행 관련 제도에는 사후평가 미이행에 대한 제재규정(과태료, 예산 삭감 등)이나 인센티브 부재로 인해 수행에 대한 적극성 부족
3. 일부 발주청에서는 사후평가를 직접 수행할 인력이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미이행 상태 지속
4. 발주청의 법령미숙지 등으로 건설공사가 준공된지 오래되었지만 건설공사 사후평가가 미이행된 경우 사후평가에 필요한 자료가 유망실 되어 평가이행에 어려움

연도	공사명	발주청	준공일	준공금액
2024	부산항 조도 방파제 보강공사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2020-07-31	569
2024	울릉(사동)항 2단계 접안시설 축조공사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2020-07-16	748
2024	화성시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BTO)	화성에코텍 주식회사	2020-11-03	1,743
2024	지방도 415호선 문곡-창리간 도로확포장공사	강원특별자치도	2020-06-30	566
2024	하남선(상일~검단산) 복선전철 3공구 건설공사	경기도	2020-03-31	1,605
2024	하남선(상일~검단산) 복선전철 2공구 건설공사	경기도	2020-03-31	994
2024	하남선(상일-검단산) 복선전철 4공구 건설공사	경기도	2020-12-31	1,132
2024	하남선(상일~검단산) 복선전철 5공구 건설공사	경기도	2020-08-31	1,068
2024	동탄2신도시 워터프론트 조경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2020-12-31	630
2024	진교~노량간 4차로 확.포장공사(2018년분, 17차)	경상남도	2020-02-29	590
2024	율촌 제1산단 1차부지 조성공사 1-21차 공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2020-02-29	4,700
2024	서울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3공구 기반시설조성공사(2단계)	서울주택도시공사	2020-12-31	659
2024	선장-염치간 국지도 확·포장공사	충청남도 건설본부	2020-07-31	1,080
2024	복수~대전간(2차) 지방도 확포장공사	충청남도 건설본부	2020-09-29	563
2025	거제-마산3 국도건설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21-04-01	1,501
2025	부산항 신항 2-4단계 컨테이너부두(3선석) 민간투자시설사업 건설공사[토목공사]	해양수산부(부산컨테이너 터미널주식회사)	2021-02-16	4,905
2025	제부 마리나항 건설공사	경기도	2021-03-19	581
2025	상개-매암 혼잡도로 개선공사	울산광역시	2021-02-28	647

자료: 국토교통부

10.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 도시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스마트 솔루션 발굴·확산 필요

가. 개 요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 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실증사업을 통해 체감도가 높고 효과성이 검증된 스마트 솔루션을 전국으로 확산·보급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60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되었음.[45]

[2025년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스마트시티확산 사업	73,312	73,312	838	△3,000	71,150	70,401	434	315	31,615
스마트시티 조성	56,000	56,000	323	△3,000	53,323	53,114	177	32	-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	6,000	6,000	-	-	6,000	6,000	-	-	-

주 1)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은 2026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로 이관

나. 검토의견

국토교통부는 향후 유사 스마트 사업 추진시 지역 수요와 도시 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스마트 솔루션이 발굴·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기초지자체에게 효과성이 검증된 보급 솔루션의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자체자본보조(330-03) 방식으로 보조(국고보조율 50%, 1년)하려는 것으로, 2025년에는 총 5개 지자체에게 각 12억원씩 집행하였음.

보급 솔루션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주차공유,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폴 등 8개가 있으나, 지자체는 지역(현장) 여건 및 구축·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여 솔루션의

45) 일반회계-스마트시티확산사업(5637-308)(국토도시실)

세부기능과 구성요소를 추가·축소 및 변경할 수 있음.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 보급 솔루션 내용]

분야	솔루션	내용	적용지역
교통	스마트 주차공유	주차관제설비가 구축된 공영·민영 주차장을 개방하여 주차장 신설없이 가용 주차면 수를 늘리고 통합 주차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주차 수요 대비 가용 주차면이 부족한 지역 •특정시설 주차량 편중 지역 •도로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스마트 횡단보도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첨단기술을 결합한 교통 안전시설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 •스쿨존내 또는 노인보호구역내 횡단보도 •주거·상업지 횡단보도 보행자 많은 지역 등
	스마트 버스쉘터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향상하고 안전성을 강화한 대중교통 정류장	•대중교통 이용자, 유동인구, 교통약자가 많은 지역 •대중교통 이용으로 자차 운행량 최소화를 추진하는 지역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 취약 지역
안전·방재	스마트 폴	CCTV, 보안등, 비상벨 등 안전·복지·편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IoT 통합 설치 지주	•주거·상업지역 등 유동인구 많은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여성안심 귀갓길 등 주민 안전이 요구되는 지역 •산발적으로 구축된 지주들을 통합·설치가 필요한 지역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방범·방재, 교통, 환경 등 지자체의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통합 연계하여 지능화 된 도시기반을 지원하는 플랫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미 구축 지자체
	스마트 전기안전 모니터링	화재 취약 지역에 IoT 센서를 설치하여 실시간 수집 데이터 분석 및 화재 감지 등 화재 예방 서비스 제공	•전통시장, 지하상가, 노후 산업단지 등 화재 취약 지역 •주요 문화재, 다중이용시설
생활·복지	스마트 헬스케어존	무인화된 헬스케어존(ICT·IoT 헬스케어 장비 보유)을 방문하는 주민의 건강진단, 운동·식이처방, 스트레스 관리 등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서비스	•노령층 인구비율이 높은 지역 •방문객이 많은 지방행정기관(시·군·구청,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등), 근로사업장, 지역 커뮤니티 시설 등
	스마트 온라인 전통시장	전통시장 상인이 부담하는 수수료 없이 주문-보관-배송 서비스가 비대면 One-Stop으로 구현되는 전통시장 활성화 서비스	•지역 대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지역 복합상가구역

자료: 국토교통부, 「2025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보급 솔루션 표준 가이드라인」을 재작성

이에 따른 2025년 솔루션 발굴 실적을 정리하면, 지역별 여건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폴 등 유사한 유형의 솔루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5년 스마트 솔루션 지원 현황]

지자체	(주요)사업내용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계	국비	지방비	
경기 가평군	- 스마트 주차공유, 스마트 폴, 가평 워커힐 센터	24	12	12	2025.6.~ 2026.6.
강원 홍천군	- 스마트 버스쉘터, 스마트 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24	12	12	
강원 고성군	- 스마트 주차공유,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해변안전, 스마트 침수대응	24	12	12	
전북 군산시	-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폴, 실시간 신호제어 및 신호개방, 이상음원장치 지능형(AI) 선별관제	24	12	12	
경남 합천군	- 스마트 주차공유, 스마트 폴, 계류형 드론 기반 스마트 화재감시	24	12	12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솔루션 정보 접근이 어려운 지역 현실을 감안하여 효과성이 검증된 보급 솔루션에 대한 표준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지자체별로 주민 체감도가 높은 솔루션을 우선 도출하여 해당 지역에 최적화되도록 집중 구축함으로써, 소도시 지역의 실질적인 서비스 여건을 개선하고 대도시 등과의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려는 취지라는 입장임.

다만 해당 솔루션은 스마트 챌린지 등 실증사업을 통해 체감도와 효과성이 일정 부분 검증된 사례라는 점은 인정되나, 기술 수준[46]이 비교적 높지 않은 1, 2단계 수준의 ICT 기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교통량 및 유동인구가 적은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활용도와 효과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스마트시티 사업이 도시별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획일적인 솔루션 보급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수요와 도시 특성에 적합한 솔루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46) 기술수준 단계: 1단계(ICT인프라구축) → 2단계(통합 플랫폼) → 3단계(AI, 빅데이터활용) → 4단계(자율, 지능형)

11. 제로에너지건축 신산업 육성 사업: 민간부문 건축물의 인증 실적 제고 필요

가. 개 요

‘제로에너지건축 신산업 육성’ 사업은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와 인증제도 운영 및 확산을 통해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과 탄소중립 달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5억 4,6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47]

[2025년도 제로에너지건축 신산업 육성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제로에너지건축 신산업 육성	3,546	3,546	-	-	3,546	3,546	-	-	2,968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국토교통부는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증등급은 플러스등급·1등급·2등급·3등급·4등급 및 5등급으로 구분됨.[48]

사업추진체계와 내용을 보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민간경상보조금을 받아 건물의 설계도서를 통하여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49]과 에너지

47) 일반회계-제로에너지건축 신산업 육성(6133-312)(국토도시실)

4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③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은 플러스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및 5등급으로 구분한다.

49)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단위: kWh/㎡·y)

등급	ZEB+	ZEB1	ZEB2	ZEB3	ZEB4	ZEB5
주거용	-10미만	10미만	30미만	50미만	70미만	90미만
비주거용	-70미만	-30미만	10미만	50미만	90미만	130미만

자립률[50]을 평가하여 이 중 높은 등급산정 기준에 따라 6개 등급(ZEB Plus~5등급)으로 인증함.

나. 검토의견

공공부문 건축물 대비 민간부문 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친환경 건축환경 및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인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 등을 하려는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신축·재축·전부 개축 또는 별동 증축하는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500㎡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기숙사 제외)은 5등급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으며, 연면적 1000㎡ 이상의 일부 용도는 4등급 이상을 받아야 함.[51]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사업 추진 경과]

일시	내용
2014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및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 방안 마련
2017. 1. 20.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국토부, 산업부 공동부령 및 공동고시)
2017 ~ 2018	시장형 공기업(2017), 준시장형 공기업(2018) 대상 연면적 3,000㎡ 이상 신축 또는 별동 증축 건축물(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조기 의무화 시행
2020	연면적 1,000㎡ 이상 신축, 재축 또는 별동 증축 공공건축물 의무화 시행
2023	연면적 500㎡ 이상 공공 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공 공동주택 의무화 시행
2025	연면적 1,000㎡ 이상 17개 용도에 한해 공공 건축물 4등급 의무화 시행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내용을 재작성(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2002003000.do)

공공부문은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의무사항으로

50) [에너지자립률 -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비량 대비 1차 에너지생산량의 비율]

(단위: %)

등급	ZEB+	ZEB1	ZEB2	ZEB3	ZEB4	ZEB5
에너지자립률	120이상	100이상	80이상	60이상	40이상	20이상

5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규정되어 있어, 해당 인증실적과 전체 공공건축물 대비 인증비율은 개선되는 추세임.

구체적으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인·허가 받은 건축물 중 본인증까지 통과한 건축물은 6.54%인데 2024년 단년도로만 보면 22.21%로 나타났으며, 인허가 시점(예비인증 취득)부터 준공·사용승인(본인증 취득)까지의 시차(통상 3~4년)를 고려하면 해당 실적이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임.

[공공건축물 대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실적(2017~2024년)]

(단위: 동, 건, %)

구 분	공공건축물 건수(동)	인·허가 건수(동)(A)	예비 인증건수(건)	본 인증건수(B)	(B/A), %
2017년	190,074	3,287	8	0	0.00
2018년	196,263	3,341	24	3	0.09
2019년	200,796	2,892	34	5	0.17
2020년	210,338	3,427	485	11	0.32
2021년	225,015	3,331	981	81	2.43
2022년	231,332	2,783	881	315	11.32
2023년	237,091	2,820	1,290	490	17.38
2024년	245,001	3,363	1,373	747	22.21
합 계	-	25,244	5,076	1,652	6.54

자료: 국토교통부

반면, 의무 대상이 아닌 민간건축물 및 소규모(500㎡ 이하, 전체 건축물의 84.4%) 공공건축물은 국내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임. 이에 따라 전체건축물의 인허가 건수 대비 본인증건수 비율은 2024년 0.59%로, 공공건축물의 22.21%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남.

[전체건축물 대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실적(2017~2024년)]

(단위: 동, 건, %)

구 분	전체건축물 건수(동)	인·허가 건수(동)(A)	예비 인증건수	본 인증건수(B)	(B/A), %
2017년	7,126,526	262,859	10	0	**0.00**
2018년	7,191,912	270,198	26	4	**0.00**
2019년	7,243,472	235,981	33	6	**0.00**
2020년	7,275,266	223,019	491	14	**0.01**
2021년	7,314,264	231,455	1,006	86	**0.04**
2022년	7,354,340	196,477	927	325	**0.17**
2023년	7,391,084	150,469	1,364	512	**0.34**
2024년	7,421,603	131,741	1,444	778	**0.59**
합 계	-	1,702,199	5,301	1,725	**0.10**

자료: 국토교통부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민간부문의 경우 2025년부터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과 1천㎡ 이상 민간 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을 갖추도록 관련 기준을 강화하여 민간의 건물에너지 효율 향상을 이행 중이라는 입장임. 아울러, 건축물이 기준보다 높은 에너지 성능을 갖추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사비 증가분을 상쇄시킬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인센티브]

항목	내용	법적근거
건축기준 완화	11~15% (ZEB 인증 등급에 따라 결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지원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고시 지원단가에 따라 30~50% 보조금 지원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공고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최대 20% 상향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세제혜택	취득세 15~20% 감면 (ZEB 인증 등급에 따라 결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비용 최대 10%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기반기설 기부채납 부담수준(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에 대해 최대 15% 경감률 적용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제2절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저리융자혜택	에너지효율관련 설비(공동주택 제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지침」 별표1

자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홈페이지 내용을 재작성
(https://www.kcl.re.kr/site/homepage/menu/viewMenu.do?menuid=001013001009)

전체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부문 건축물 중 일부(30세대 이상 공동주택,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의 성능은 의무화 되었으나, 그 이상의 성능 확보(ZEB 인증 취득)에 대하여 현재와 같이 수익-비용의 합리적 역선택 시스템 제도 설계 하에서 자발적 참여만을 기대한다면 향후 공공부문(ZEB 4등급 의무화)과 비교하여 민간부문의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확산 속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탄소 중립 및 건물에너지 효율 향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민간 부문 비의무 대상 건축물의 인증 취득 유인을 강화하여 친환경 건축환경 조성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2. 국토교통 혁신펀드 사업: 혁신펀드 1차년도 투자집행률 개선 필요

가. 개 요

‘국토교통 혁신펀드’ 사업은 국토교통 혁신계정 펀드 조성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기술 투자와 스마트 인프라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50억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52]

[2025년도 국토교통 혁신펀드 사업 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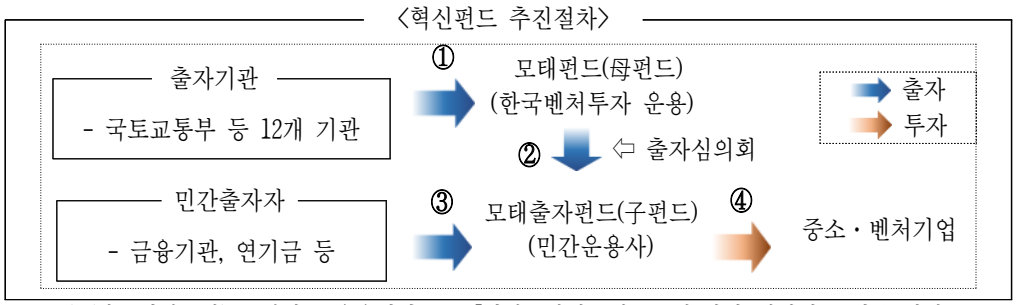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토교통 혁신펀드	15,000	15,000	-	-	15,000	15,000	-	-	8,000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국토교통 혁신펀드의 사업구조를 보면, ① 국토교통부 등 출자기관이 모태펀드에 정부출자부분을 납입하고, ② 모태펀드(한국벤처투자)는 민간출자금을 모집하여 자펀드 조성과 민간운용사 선정을 완료하며, ③ 자펀드는 중소·벤처기업에 투자를 실시하는 구조임.

[국토교통 혁신펀드 사업구조]



주 1)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운용기관으로 「벤처투자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2) (출자심의회) 금융·법률, 산업, 과학기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민간운용사 선정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52) 일반회계-국토교통 혁신펀드(7036-307)(기획조정실)

나. 검토의견

국토교통 혁신펀드의 운용사 선정과 자펀드 결성 지연으로 인하여 매년 1차년도의 투자집행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운용사 모집 단계부터 유망 투자처를 사전에 적극 발굴하는 등 투자집행률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025년 결산 기준 국토교통 혁신펀드 내 총 8개의 자펀드에서 2,186억원(정부 950억원 + 민간 1,236억원) 규모의 출자금이 조성되었고, 98개 기업을 대상으로 1,291억원(65.7%)의 투자가 집행되었음.

[국토교통 혁신펀드 투자현황]

(단위: 억원)

예산 연도	펀드명	특성	조성시기	존속기간 만료	조성액	정부 출자	투자금	투자율	투자 여력
2020	1호	일반	2020.09.	2028.09.	170	100	149(16개社)	97.2%	-
2021	2호	일반	2021.12.	2029.12.	176	200	152(12개社)	96.0%	-
	3호	특화	2022.03.	2030.03.	180		153(12개社)	94.1%	10
2022	4호	일반	2022.12.	2030.12.	170	200	148(16개社)	96.4%	6
	5호	특화	2022.12.	2030.12.	417		401(24개社)	106.8%	-
2023	6호	일반	2023.12.	2031.12.	247	150	178(15개社)	79.9%	45
2024	7호	특화	2024.12.	2032.12.	385	150	92(7개社)	26.5%	255
2025	8호	일반	2025.09.	2033.09.	440	150	20(1개社)	5.1%	376
2026 (안)	9호	일반	-	-	115	80	-	-	-
합계					2,186	950	1,291(98개社)	65.7%	690

주 1) 펀드 총액의 10% 이상을 운용사 수수료 등으로 지출하므로 이를 차감한 후 투자여력과 투자율 산정
2) 2026년 정부출자금으로 조성될 9호 펀드는 아직 조성되지 않았으므로 합계에서 제외함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토교통혁신펀드가 도입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투자 집행 현황을 보면,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자펀드가 조성된 첫해의 투자 집행률(자펀드 결성금액 대비 투자집행금액의 비중)은 10% 미만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 2023년에는 투자 집행실적이 없었고, 2024년에는 2.6%(385억원 중 10억원 집행), 2025년에는 4.5%(440억원 중 20억원 집행)가 투자된 것으로 나타남.

[국토교통 혁신펀드 2020~2025년 1차년도 투자 집행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결성금액		투자금액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0	정부출자	100	45.7 (26.9)	83.1	19.9	-	-	-
	민간출자	70						
2021	정부출자	200	-	10.0 (2.8)	86.0	82.8	46.0	79.7
	민간출자	156						
2022	정부출자	200	-	-	42.5 (7.2)	285.0	135.0	85.9
	민간출자	387						
2023	정부출자	150	-	-	-	0 (0.0)	121.2	56.9
	민간출자	97						
2024	정부출자	150	-	-	-	-	10.0 (2.6)	81.8
	민간출자	235						
2025	정부출자	150	-	-	-	-	-	20.0 (4.5)
	민간출자	290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토교통부는 1차연도의 투자 집행실적이 저조한 원인으로 사업 초기 단계에서 운용사 선정과 자펀드 결성, 투자 대상 발굴 및 심사 절차 진행을 위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펀드 결성 일정을 보면, ① 운용사 선정을 위한 사업 공고와 평가 등에 3개월이 소요되고, ② 이후 운용사가 관리할 자펀드 결성(민간출자자 모집)에 3개월 이상이 추가 소요되고 있음.[53]

2025년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6월에 혁신펀드 운용사 선정을 완료하는 등 펀드 조성 시기를 전년도보다 약 3개월 앞당겨 9월부터 투자를 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율은 여전히 5%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국토교통 혁신펀드 자펀드 결성 일정(2025년)]

(2025.03.24.) 모태펀드(문체부 등) 2차 정시 출자사업 공고
→ (2025.04~2025.05) 서류 평가 및 현장실사
→ (2025.06) 출자심의회 개최 및 최종 선정
→ (2025.09.09) 2025년도 선정 자펀드 등록 완료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정부 출자금의 집행 효율성과 투자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운용사 모집 단계부터 유망 투자처를 사전에 적극 발굴하거나 투자 심사 및 집행 절차를 조기에 병행 추진하는 등 1차년도 자펀드 투자 집행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53) 국토교통부는 펀드가 결성되는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2025년 출자사업 진행시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성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함. 이는 자펀드 결성에 3개월 정도의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세 출〉

13. 고속도로건설 사업: 세종-청주고속도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계양-강화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연도 중 과도한 예산 감액을 지양할 필요

가. 개 요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에는 2025년 예산 기준으로 총 18개의 고속도로 건설 세부사업이 편성되었는데, 2025년도 예산현액 8,378억 8,600만원 중 8,278억 5,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8%)되고 100억 3,200만원이 이월되었음.

[2025년도 고속도로건설 단위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고속도로건설	1,030,308	837,886	-	-	837,886	827,854	10,032	-	982,247
세종-청주 고속도로건설	119,867	119,867	-	△119,867	-	-	-	-	102,314
울산외곽순환 고속도로건설	51,478	51,478	-	△51,478	-	-	-	-	28,220
계양-강화 고속도로건설	148,031	148,031	-	△146,407	1,624	1,624	-	-	313,080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세종-청주 고속도로건설’ 사업은 2032년까지 총사업비 1조 2,781억 1,500만원(정부출자금 6,974억 9,300만원)을 투입하는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2025년에 공사비와 용지비로 편성된 당초 예산액 1,198억 6,700만원이 전액 조정(감)되어 예산현액은 없음.[54]

54)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세종-청주 고속도로건설(1532-392)(도로국)

‘울산외곽순환 고속도로건설’ 사업은 2032년까지 총사업비 1조 2,058억 8,300만원(정부출자금 5,504억 4,800만원)을 투입하는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2025년에 공사비와 용지비로 편성된 당초 예산액 514억 7,800만원이 전액 조정(감)되어 예산현액은 없음.[55]

‘계양-강화 고속도로건설’ 사업은 2032년까지 총사업비 3조 2,628억 7,000만원(정부출자금 1조 4,442억 100만원)을 투입하는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2025년에 공사비와 용지비로 편성된 당초 예산액 1,480억 3,100만원 중 1,464억 700만원이 조정(감)되고 남은 16억 2,400만원만 집행되었음.[56]

[세종-청주고속도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 개요]

(단위: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출자금)	사업기간
세종-청주고속도로	1,278,115	697,493	2020년 1월 ~ 2032년 12월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1,205,883	550,448	2020년 1월 ~ 2032년 12월
계양-강화 고속도로	3,262,870	1,444,201	2021년 1월 ~ 2032년 12월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를 재작성

나. 검토의견

세종-청주고속도로·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및 계양-강화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 사업 추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결과 예산 전액 또는 대부분이 다른 사업으로 조정되는 등 국회 심의 내용과 실제 집행 간의 괴리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고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025년 결산 기준 세종-청주고속도로 및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에 편성된 당초 예산 전액과 계양-강화고속도로 건설사업 당초 예산의 99%를 합한 총 3,177억 5,200만원[57]이 다른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으로 조정(감)되었으며, 이는 고속도로 건설사업 전체 예산(8,378억 8,600만원)의 37.9%에 해당하는 금액임.

이는 해당 고속도로 건설사업들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으로 지연됨에 따라

55)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울산외곽순환 고속도로건설(1532-393)(도로국)

56)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계양-강화 고속도로건설(1532-395)(도로국)

57) 세종-청주고속도로 건설사업 1,198억 6,700만원(전액),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514억 7,800만원(전액), 계양-강화고속도로 건설사업 1,464억 700만원(당초예산 1,480억 3,100만원의 99%)

불용될 예산 일부를 사업 추진이 원활한 다른 사업으로 조정한 것으로, 불용액의 최소화를 통한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다만, 위 사례와 같이 당초 예산의 100% 또는 99%를 다른 사업으로 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타 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별 예산 규모와 실제 집행 규모 간 상당한 간극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예산 심의 및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특히 해당 건설사업 조정(감) 시기가 2025년 2월 17일부터 실시되어 연초부터 예산 조정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국토교통부는 2025년 사업예산의 집행 가능성을 2024년 하반기 또는 연말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사전에 치밀하게 파악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예산안 규모를 조정·반영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2025년 고속도로 건설 단위사업 중 예산 조정 세부내역(2025년 2월 17일)]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조정 (2025.2.17.)	세종-청주 고속도로건설 (1532-392)	460-01	△119,867	당진-천안 고속도로건설 (1532-368)	460-01	사업추진 원활, 총사업비 증액 등 추가 예산소요 반영
				김포-파주 고속도로건설 (1532-369)		
	울산외곽순환 고속도로건설 (1532-393)	460-01	△51,478	김포-파주 고속도로건설 (1532-369)	460-01	
				강진-광주 고속도로건설 (1532-370)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건설 (1532-372)		
				양평-이천 고속도로건설 (1532-376)		
	계양-강화 고속도로건설 (1532-395)	460-01	△126,655	양평-이천 고속도로건설 (1532-376)	460-01	
				안산-북수원 고속도로건설 (1532-379)		
				대산-당진 고속도로건설 (1532-382)		
				세종-안성 고속도로건설 (1532-384)		

자료: 국토교통부 사업설명자료를 재작성

또한 세종-청주고속도로 및 울산외곽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예산 전액 조정(감) 사례가 2년 연속 반복되고 있는 등 연례적인 문제로 발생하고 있으며, 두 사업 모두 2026년 예산에 공사비(세종-청주고속도로 건설사업은 247억 1,100만원, 울산외곽고속도로 건설사업은 81억 2,200만원)를 편성하고 현재 착공 이전 단계에 있으나, 사업일정이 순연될 경우 예산 조정(감) 사례가 다시 재발될 우려가 있음.

[세종-청주, 울산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연도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사업비	사업기간	연도	예산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A)					
세종-청주	1,278,115	2020~2032	2023	100,269	100,269	-	100,269	-	100,269	0.0
			2024	165,456	165,456	△165,456	-	-	-	0.0
			2025	119,867	119,867	△119,867	-	-	-	0.0
			2026	102,314	102,314	-	-	-	-	-
울산외곽 순환	1,205,883	2020~2032	2023	57,256	57,256	-	57,256	-	57,256	0.0
			2024	104,029	104,029	△104,029	-	-	-	0.0
			2025	51,478	51,478	△51,478	-	-	-	0.0
			2026	28,220	28,220	-	-	-	-	-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를 재작성

국토교통부는 조정이 과다하게 이루어지는 해당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추진 일정과 집행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2027년 예산안에서는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 예산확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사업비 편성 규모가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14. 일반국도건설 사업: 반복되는 집행 부진 및 과다한 전용·내역 변경 시정 필요

가. 개 요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에는 2025년 예산 기준으로 총 92개의 일반국도건설 세부사업이 편성되었으며, 2025년도 예산현액 1조 7,348억 4,400만원 중 1조 5,502억 3,200만원이 집행(집행률 89.4%)되고 1,818억 6,500만원이 이월되고, 27억 4,7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년도 일반국도건설 단위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일반국도건설	1,511,984	1,597,984	162,456	△25,596	1,734,844	1,550,232	181,865	2,747	1,485,730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첫째, 일부 일반국도건설 세부사업에서 2년에 걸쳐 집행부진이 발생하였음에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것을 가정하고 2026년 예산을 재차 편성하였는데, 해당 사업들은 집행 부진이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 추진 경과를 고려하여 2027년 예산안을 편성 및 심사할 필요가 있음.

본예산 대비 집행률이 50% 미만으로 집행 실적이 2년 연속 저조한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2025년 결산 기준으로 일반국도건설 세부사업 중 집행부진 사업은 총 17건으로 전체(92개)의 18.5%이고, 2025년 당초예산 2,346억 4,400만원 중 531억 8,600만원만 집행되어 집행률은 22.7%로 전년도 집행률(18.6%)보다는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수치임.

[2024년, 2025년 연속 집행이 부진한 일반국도 건설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1632-)	2024년			2025년			2026년
	본예산 (추경포함)	집행액 (이월 제외)	집행률	본예산 (추경포함)	집행액 (이월 제외)	집행률	본예산
[300] 남양주-춘천1	500	25	**5.1**	6,372	10	**0.2**	22,827
[301] 남양주-춘천2	500	25	**4.9**	4,481	10	**0.2**	18,858
[302] 남양주-춘천3	500	25	**4.9**	9,721	10	**0.1**	30,489
[303] 남양주-춘천4	500	34	**6.8**	2,903	10	**0.3**	8,785
[308] 성주선남-대구다사	1,000	0	**0.0**	44,621	0	**0.0**	200
[309] 경주외동녹동-문산	1,000	17	**1.7**	22,051	0	**0.0**	200
[329] 울주범서-경주외동	500	17	**3.4**	3,217	0	**0.0**	200
[345] 인제상남-기린	1,000	30	**3.0**	3,052	820	**26.9**	4,901
[346] 청송진보-영양입암	1,000	0	**0.0**	1,696	0	**0.0**	200
[349] 거제남부-일운	500	0	**0.0**	4,056	22	**0.5**	200
[355] 무안현경-해제	1,000	39	**3.9**	5,965	2,628	**44.1**	2,794
[669] 청북IC-요당IC	10,353	6	**0.1**	5,600	2,163	**38.6**	6,466
[787] 부안-흥덕	7,634	3,101	**40.6**	1,507	517	**34.3**	7,939
[800] 오지-동송	5,304	396	**7.5**	9,137	2,545	**27.8**	3,846
[802] 입장-진천	7,217	1,668	**23.1**	14,310	3,398	**23.7**	20,795
[812] 화순동면-송광봉산	3,041	1,400	**46.0**	10,266	4,685	**45.6**	19,910
[820] 천안 동면-진천	29,840	6,525	**21.9**	85,689	36,368	**42.4**	33,676
계(17개)	**71,389**	**13,308**	**18.6**	**234,644**	**53,186**	**22.7**	**182,286**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를 재작성

건설공사는 특성상 사업절차가 복잡하고 공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다년도 사업이 많아 각종 인허가·협의 및 시공 순서에 따른 공정 등 사업단계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함.

이는 유관기관 협의 등으로 발생한 사업지연은 그 기간만큼의 사업기간 연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늘어난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방식으로 집행실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우며, 무리하게 조기집행을 독려할 경우 오히려 과도한 공기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 등 위험 우려가 있기 때문임.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업별로 추진 경과, 보상·설계 등 절차상 지연 요소를 확인·점검하여 집행 부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2026년 해당 사업 예산액을 총 1,822억 8,600만원 편성하였는데, 집행 부진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연말 사업 추진 경과를 고려하여 2027년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둘째, 일반국도건설 세부사업간 내역변경 또는 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하므로, 국토교통부는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는 총 92개의 일반국도건설 세부사업 중 일부 세부사업에 대하여 민원 검토, 공정지연, 보완설계, 문화재 협의, 보상비 정산 등을 이유로 건설보상비(410-00), 공사비(420-03), 감리비(420-04), 시설부대비(420-05) 등을 다른 일반국도건설 세부사업으로 내역변경 또는 전용하였음.[58)]

2025년 기준 내역변경 또는 전용을 통해 예산이 변동된 규모를 보면 건수로는 총 309건, 예산 규모는 4,481억 3,600만원으로 집계되었음. 이는 일반국도건설 92개 사업 예산 1조 5,979억 8,400만원(추경 기준)의 28.0% 수준으로, 순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상 이·전용 금액(△255억 9,600만원)의 17.5배에 달하는 규모임.

[2025년 일반국도건설 사업의 전용 또는 내역변경 현황]

(단위: 건, 백만원)

날짜	구분	건	금액
3.13.	내역변경	49	74,222
	전용	5	96,449
4.21.	전용	3	12,000
6.8.	내역변경	66	88,793
	전용	38	84,518
10.23.	내역변경	32	21,631
	전용	28	5,267
12.23.	내역변경	66	32,876
	전용	21	32,287
12.30	전용	1	93
합계		**309**	**448,136**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를 재작성

세부사업간 내역변경 또는 전용이 과다하면 예산 심의 및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게 되므로, 국토교통부는 과도한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58) 공사비(420-03), 감리비(420-04), 시설부대비(420-05) 등 같은 420목 내에서는 내역변경, 420목과 건설보상비(410-00) 사이에서는 전용 절차가 필요함

【교통시설특별회계(철도계정)】

〈세 출〉

15.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 철도용량 확충 효과와 관련된 과주 여유거리 문제의 조속한 해결 필요

가. 개 요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은 선로용량이 부족한 평택~오송 구간의 용량 확충을 위해 고속철도 복선을 추가로 건설(2복선화)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4,500억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59)]

[2025년도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평택~오송 2복선화	250,000	450,000	-	-	450,000	450,000	-	-	80,000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국토교통부는 KTX 및 SRT 열차의 추가 투입을 통한 운행 용량 확대를 위하여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열차운행 횟수를 263회까지 증설하고자 함.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8년까지이고, 총 3조 4,841억 9,1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임.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 개요]

○ 사업내용 : 경부고속선 평택～오송간 46.4km 2복선화
○ 사 업 비 : 3조 4,841억 9,100만원
○ 사업기간 : 2020～2028년
○ 재원조달 : 국고 30%, 공단 70%
○ 사업효과

59) 교통시설특별회계(철도계정)-평택~오송 2복선화(2531-309)(철도국)

- 경부고속선 평택~오송 구간의 2복선화를 통해 지속적인 고속철도 이용수요 증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고속철도 서비스 수혜지역을 확대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
- 기술력 향상을 통해 400km/h급 고속철도를 도입하여 국내 수요 대응 및 해외시장 진출 등 미래 철도산업 토대 마련

구분	운행열차	편 성	운행횟수	운행간격	선로용량	여유용량	비고
현재	KTX 등	최대 20량	188회	5.6분	190회	2회	일/편도
장래	KTX, EMU-320(개통시)	최대 20량	263회	4분	373회	110회	
	EMU-370 등(장래)	-					



자료: 국토교통부 사업설명자료

나. 검토의견

국토교통부는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의 철도용량 확충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오송역의 과주여유거리[60] 및 분기기[61] 설치와 관련된 병목 현상 문제를 2복선화 사업 완료 이전까지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음.

역사의 분기기 설치 구간은 열차의 진로 변경이 이루어지는 안전 중점 관리구간으로, 신호위반 또는 제동 성능 저하에 따른 열차간 접촉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열차 정차지점부터 분기기 설치 위치까지 충분한 거리(과주여유거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현재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의 종착지인 오송역은 총 10개 선로 중 일부에서 과주여유거리가 부족한 상황이고, 이 중 2개 노선(5번, 6번)은 안전 문제로 선로 자체가 미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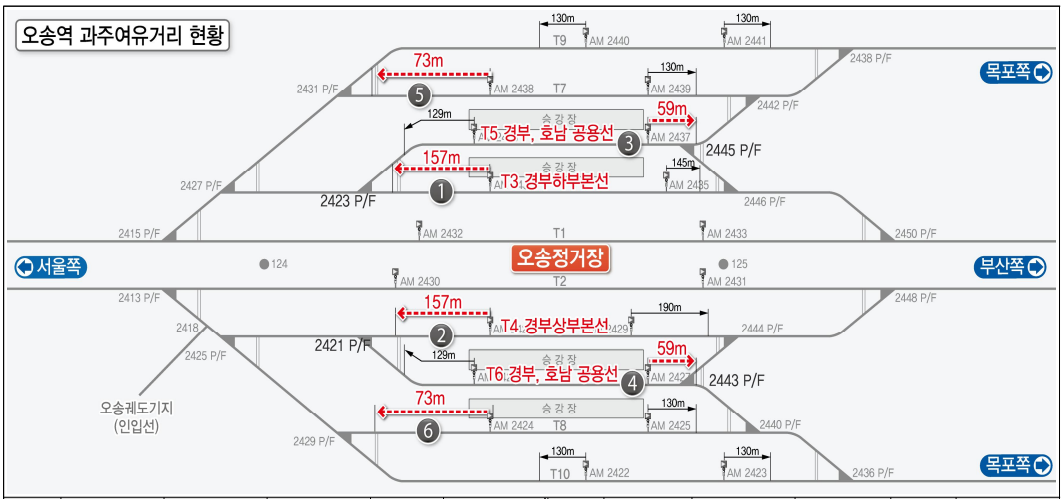
이는 경부고속 2단계 건설공사(2010.11.) 이후 호남고속선을 추가 배선할 당시

60) (과주여유거리) 열차가 정해진 정지위치를 통과할 경우, 인접한 선로에서 이동하고 있는 열차와 접촉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정한 최소한의 안전 여유거리

61) (분기기) 철도의 한 선로에서 다른 선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선로설비(Turnout)

(2015.4.) 과주여유거리가 확보되지 못한 상태로 분기기가 설치되었기 때문으로, 이로 인하여 오송역에서는 열차의 동시 진출입이 원활하지 않은 병목 현상이 일부 발생되고 있는 상황임.

[현 오송역 과주여유거리 및 분기기 위치 현황]



구분	방향	과주여유거리	분기기 위치	부족거리	비고	구분	방향	과주여유거리	분기기 위치	부족거리	비고
T3	상행	164m	157m	7m	❶역방향	T6	하행	130m	59m	71m	❹역방향
T4	상행	160m	157m	3m	❷순방향	**T7**	**상행**	**130m**	**73m**	**57m**	**❺역방향**
T5	하행	130m	59m	71m	❸순방향	**T8**	**상행**	**130m**	**73m**	**57m**	**❻순방향**

자료: 국가철도공단

특히 평택~오송 2복선 사업 이후에는 선로 용량이 증가하여 열차가 증편되더라도 운행 과정에서의 병목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

감사원 감사[62] 결과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평택~오송 2복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오송역 6번선에서 과주여유거리 내 분기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함으로써 열차 운행을 더욱 어렵게 하였음. 이에 따라 사업 후 운행 가능한 최대 열차 운행 횟수를 산정한 결과 병목 현상으로 총 158회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업 전보다 오히려 18회 이상 감축되는 결과임.

62) 감사원, 「SOC Ⅳ-1 철도(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실태」, 2024. 11, p. 97~98.

[오송역 과주여유거리 실태]

○ (원인 ①) 경부고속2단계 건설('10.11.) 후 호남고속 추가 배선('15.4.) 시 오송정거장에 **과주여유거리가 확보되지 않게 설치**

○ (원인 ②) 평택~오송2복선화 추진 시 **과주여유거리 내 분기기 설치**를 계획함에 따라 열차운행 상황 악화 (열차운행 가능횟수 176→158회, △18회)

구분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2010년 개통)	호남고속철도 사업 (2015년 개통)	평택~오송 2복선 사업 (2028년 개통 예정)
사업 개요	오송역에 경부고속선 분기기 신설	호남고속선 연결	평택~오송 2복선 연결
운전 제약	3·5번선, 4·6번선에 열차 동시 진·출입 제한	5번선 분기기방향 전환 시 3분대기	5, 6번선 분기기방향 전환 시 3분대기

자료: 국가철도공단

오송역의 과주여유거리 부족은 2015년경 호남고속철도 개통시 발생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의 개선 조치는 장기간 지연되었으며, 총사업비 3.5조원에 달하는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안전운행과 충분한 선로용량 확보를 위하여 과주여유거리 부족 문제에 대해 승강장 길이 연장(약 11m), 분기기 이설, 신호설비 개량 및 대규모 교각 확장공사 등을 포함한 단계적인 조치를 통해 열차운행 지장 해소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입장임.

국토교통부는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의 철도용량 확충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오송역의 과주여유거리 및 분기기 설치와 관련된 병목 현상 문제를 2복선화 사업 완료 시점인 2028년 이전에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16. GTX 운영지원 사업: 손실보전금 최소화를 위한 GTX-A 철도 공정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GTX 운영지원’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GTX-A가 삼성역의 개통 지연으로 분리 운행됨에 따라 발생되는 손실분과 특수계층(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할인 손실분을 사업시행자에게 보전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897억 2,0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되었음.[63]

[2025년도 민자철도운영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민자철도운영지원	917,060	917,060	14,146	-	931,206	930,378	-	828	871,611
GTX 운영지원	19,106	19,106	13,714	56,900	89,720	89,720	-	-	79,775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의 지연 등으로 인한 삼성역 미개통으로 GTX 운영지원 사업에서 지급해야 하는 손실보전금 재정 소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GTX-A 삼성역 구간 개통을 위한 공정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GTX-A 노선은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SG레일이 건설비를 투자하고 일정 기간 운영권을 보유하며 운임수입 등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임. SG레일과의 실시협약(2018년 12월)에서는 GTX-A 전 구간(운정중앙~동탄) 완전 개통 및 노선 운영을 전제하였음.

그러나 삼성역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환승센터 사업으로 열차가 통과하지 못하고 분리 운영됨에 따라 SG레일의 운영수입이 감소하게 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운영

63) 교통시설특별회계(철도계정)-민자철도운영지원(2732-309)(철도국)

사업자의 순운영이익 감소분 일부를 보전금[64]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임.

[GTX-A 노선 운영 현황]

역명	운정중앙 – 킨텍스 – 대곡 – 연신내 – 서울역 –	(삼성역)	– 수서 – 성남 – 구성 – 동탄
개통시기	2024. 12. 28.	미개통	2024. 3. 30.
운행	← 운정중앙~서울역 분리 운행 →		← 수서~동탄 분리운행 →

자료: GTX-A 노선도를 재작성

실제 삼성역 미개통의 영향으로 인한 GTX-A 노선의 운영수입 감소분이 실시협약(완전개통) 대비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어 보전금 지급 규모가 예산 대비 크게 증가하였음.

2025년에는 19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지급 금액은 375.6%인 717억 6,100만원이었고, 2026년에는 편성된 예산 797억 7,500만원의 64.3% 수준인 512억 8,800만원을 1분기에 이미 집행함.

[GTX-A 노선 손실보전금 예산 대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2026년	합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소계	1분기	
손실보전금 지급액(A)	14,487	0	40,257	17,017	71,761	51,288	123,049
예산액(B)					19,106	79,775	98,881
비중(A/B)					375.6	64.3	124.4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를 재작성

특히 서울시가 추진하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이 설계변경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면서 삼성역의 개통시기가 연기된 상황인데, 최근에는 공사 중인 삼성역 승강장의 지하 5층 기둥에서 철근 절반이 누락되는 시공상 하자(시공오류)가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삼성역의 임시 또는 완전 개통 시기의 추가 지연 우려가 큰 상황임.

64)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시설이 GTX-A 민간투자사업시설 운영개시일 전까지 개통되지 않음으로 인해 순운영이익이 감소하는 경우, 정부가 그 지연기간 동안의 순운영이익 감소분을 보전하는 구조임.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개요]

통합역사	교통 결절점에 위치하여 교통허브 특성에 적합한 통합역사 구축(GTX-A, GTX-C, 위례신사선)
버스환승정류장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간 빠르고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
공공, 상업문화시설	현대차GBC, COEX와 연계된 지하도시개발로 비즈니스, 상업, 관광 명소화
주차장	주변 개발로 직·간접적으로 증가하는 관광버스 등 주차수요 확보

자료: 서울균형발전포털(https://uri.seoul.go.kr/web/contents/55.do?mid=1147)

이에 따라 서울시가 삼성역 구간에 시행하는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현재와 같은 운정중앙~서울, 수서~동탄 구간 분리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임.

또한 전 구간을 직결하되 삼성역을 "무정차 통과" 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분리 개통 방식보다는 손실보전금을 절감할 수 있겠으나,[65] 삼성역 시공상 하자(시공오류)로 인하여 무정차 통과 등 개통 일정이 불확실한 상황임.[66]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손실보전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여 GTX-A 삼성역 구간 개통을 위한 공정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65) 삼성역을 제외한 운정중앙역부터 동탄역까지 전 구간에 걸쳐 여객운송이 가능하므로, 현재와 같은 분리 운영 방식보다는 여객수요가 확실히 늘어날 것임.

66) 국토교통부는 삼성역 지연 책임은 서울시에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손실보전에 대해 서울시와 책임관계를 정리하여 추후 정산할 계획이라는 의견임.

【교통시설특별회계(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세 출〉

17. 수송차량구입, 도시철도노후차량개선지원 사업: 철도차량 납품 관리 개선 필요

가. 개 요

국토교통부는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건설되는 신규·개량 노선의 안정적인 개통과 노후도시철도 차량의 적기 교체를 통해 철도운행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철도운영기관(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에 철도차량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음.

‘수송차량구입’ 사업은 철도차량 구입비를 한국철도공사에게 출자금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778억 7,2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67]

‘도시철도노후차량개선지원’ 사업은 노후 도시철도차량 구입비를 한국철도공사에 출자하거나 서울교통공사 등에 보조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126억 1,6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68]

[2025년도 차량구입 관련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수송차량구입	77,872	77,872	-	-	77,872	77,872	-	-	197,891
도시철도노후차량 개선지원	112,616	112,616	-	-	112,616	112,616	-	-	74,727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67) 교통시설특별회계(철도계정)-수송차량구입(2732-301)(철도국)

68) 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체계관리계정)-도시철도노후차량개선지원(3031-351)(철도국)

나. 검토의견

철도차량업체의 납품지연으로 계약이 해지되면서 미정산금이 발생하고 철도차량 적기 교체에 부정적 영향이 미쳤는바, 이 과정에서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의 철도차량 납품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계약 및 납품 관리 등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철도공사가 해당 세부사업을 통해 철도차량업체 ㈜다원시스와 철도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의 납품 경과를 보면, 2019년 11월 20일부터 2023년 11월 10일까지 총 3,821억원의 규모로 208량의 철도차량을 인수받는 것으로 업체와 계약하였으나 계약기한까지 철도차량을 적기에 인도받지 못하는 등 납품 지연이 심각하게 발생하였음.

한국철도공사는 2026년 3월 계약해지시까지 업체로부터 24량을 납품받았으나 이는 전체 물량(208량)의 11.5% 수준에 불과한 것이고, 공사는 계약기간 동안 업체에게 전체 대금(8차 수정계약, 4,004억 2,200만원)의 66.3% 수준인 2,655억 7,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됨.

[(주)다원시스 관련 철도차량 계약 현황 - 한국철도공사]

(단위: 백만원)

계약내용 (계약일자)	계약금 (계약기간)	기지급 금액		수정계약		2026년 기준 납품현황	납품시기
		날짜	금액	차수	수정내용 (기간, 금액 등)		
EMU-150 208량 (110량 포함) (19.11.20.)	382,100 (19.11.20. ~ 23.11.10.)	19.11.25.(선금)	59,300	1차 (20.12.08.)	370,327 (물가변동)	**24량** 계약해지 (26.3.27)	25.4.18. 4량 25.6.17. 4량 25.6.30. 4량 25.10.1. 8량 26.3.31. 4량
		19.12.20.(선금)	20,785				
		20.4.24.(선금)	32,902	2차 (21.6.15.)	376,770 (물가변동)		
		20.6.25.(선금)	8,090				
		20.11.04.(선금)	20,901	3차 (21.10.13.)	384,536 (물가변동)		
		20.12.14.(선금)	29,469				
		23.1.18.(선금)	9,300	4·5차 (22.4.18.)	396,681 (물가변동)		
		23.6.23.(선금)	65,000	6차 (23.6.22.)	401,131 (물가변동)		
		25.4.18.(대금)	3,105				
		25.6.17.(대금)	3,105	7차 (23.8.21.)	402,670 (물가변동)		
		25.6.30.(대금)	3,105				
		25.10.1.(대금)	6,209	8차 (24.10.31.)	**400,422** (물가변동)		
		26.3.31.(대금)	4,298				
합계			**265,570**				

주) 2025년 결산 기준 기지급 금액은 선급금, 중도금, 잔금 등을 의미함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를 재작성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경우를 보면, 2021년 12월 15일에 체결한 계약에서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총 3,643억원의 금액으로 298량의 철도차량을 인수받는 것으로 업체와 계약하였으나 역시 계약기한까지 철도차량을 1량도 인도받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2026년 4월에 계약을 해지하였음.

또한 2023년 12월 1일에 체결한 계약에서는 2027년 8월 13일까지 총 2,189억 6,600만원의 규모로 철도차량 200량을 인수받는 내용이었으나, 2026년 4월 2일 계약이 중도 해제되어 납품차량은 없었음.

위 2건의 계약을 통해 서울교통공사는 전체대금(수정계약 이후, 5,923억 1,300만원)의 43.6%에 달하는 총 2,580억 5,600만원을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남.

[(주)다원시스 관련 철도차량 계약 현황 - 서울교통공사]

(단위: 백만원)

계약내용 (계약일자)	계약금 (계약기간)	기지급 금액		수정계약		2025년 기준 납품현황
		날짜	금액	차수	수정내용 (기간, 금액 등)	
5,8호선 298량 (21.12.15.)	364,300 (21.12.15.~ 25.6.30.)	21.12.23.	61,000	1차	364,388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0칸 (26.4.2. 계약해제)
		22.5.16.	11,830			
		22.6.20.	36,500	2차	384,764 (물가변동 반영)	
		22.9.29.	40,000			
		23.2.6.	5,436	3차	374,045 (물가변동 반영)	
		23.6.28.	37,600	4차	373,347 (제작사양서 변경)	
5호선 200량 (23.12.1.)	218,966 (23.12.1.~ 27.8.13.)	24.4.8.	21,897	1차	218,966 (제작사양서 변경)	0칸 (26.4.2. 계약해제)
		25.4.16.	43,793			
합계	**583,266**		**258,056**		**592,313**	

주) 2025년 결산 기준 기지급 금액은 선급금, 중도금, 잔금 등을 의미함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를 재작성

납품업체가 기업회생(2026년 4월 17일)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사실상 업체로부터는 정산되지 못한 선급금과 중도금을 직접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높아졌음.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금을 청구하여 미정산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69] 철도차량의 적기 교체에 차질을 빚게 되어

69) 국토교통부는 다원시스 회생절차는 다원시스와 채권자 사이의 채무조정 절차이므로, 보증사(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한국철도공사는 공제조합에 신속한 지급을 촉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5.29)한 상황임.
*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보증기관의 보증채무는 감액되지 않음)

결과적으로 대국민 철도교통 서비스 안정성과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차량 발주기관인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는 계약기간 지연 및 납품업체의 이행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였음에도 전반적인 납품 이행 가능성을 충분히 점검하지 않는 등 사업 관리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기존 노후차량의 정밀안전진단・리모델링으로 수명을 연장하고, 계약해지 물량을 조속히 발주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그 밖에 입찰평가시 납품지연 감점 확대, 제작 공정률을 토대로 선금을 지급토록 개선하였고, 한국철도공사의 퇴직자 재취업 감점 신설, 제3자 감시 강화, 입찰심사 개선 등 전관예우 근절대책을 수립하였다는 의견임.

국토교통부는 선급금 지급 등 예산집행을 철저히 관리하고 발주기관이 계약관리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는 향후 대규모 철도차량 구매계약 체결 시에는 제작사의 재무건전성 및 납품 이행능력에 대한 사전 검증을 강화하고, 선급금 지급 및 공정관리 체계를 보다 엄격히 운영하는 등 철도차량 계약 및 납품 관리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교통시설특별회계(공항계정)】

〈세 출〉

18.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미흡한 사업 계획과 입찰 준비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및 공사비 증가 문제 개선 필요

가. 개 요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부산 가덕도에 공항, 접근철도 및 접근도로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4,553억 3,300만원 중 3,620억 2,400만원이 집행(집행률 79.5%)되고 933억 900만원이 이월되었음.[70]

[2025년도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가덕도신공항 건설	964,025	441,661	13,672	-	455,333	362,024	93,309	-	688,979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 사업은 가덕도신공항건설, 접근철도건설, 접근도로건설로 구분됨. 이 중 신공항건설사업은 2035년까지 총 13조 9,841억 5,600만원의 총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임.

[2025년도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총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총사업비	1차 (2023년)	2차 (2024년)	3차 (2025년)	4차 (2026년)	5차 (2027년)	6차 (2028년)
13,984,156	13,000	508,721	342,544	631,562	874,183	1,248,833
7차 (2029년)	**8차 (2030년)**	**9차 (2031년)**	**10차 (2032년)**	**11차 (2033년)**	**12차 (2034년)**	**13차 (2035년)**
1,248,833	1,873,249	1,873,249	1,873,249	1,873,249	1,373,716	249,768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를 재작성

70) 교통시설특별회계(공항계정)-가덕도신공항 건설(3538-308)(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나. 검토의견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의 계획 수립과 입찰 준비 과정에서 연약지반 안정화 등 핵심 공정의 공기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사업 일정 지연(2년 이상)과 사업비 증가를 초래하였으므로, 원인 분석과 함께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효율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023년 12월 29일에 고시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실시하며 2029년 12월에 개항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71]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2024년 5월부터 9월까지 총 4차례 입찰공고 결과 유찰되면서 사업 추진 및 개항 일정이 지연되었으며, 2024년 9월 12일에 현대건설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으로 전환되었음.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 경과(2024년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전환까지)]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2024.4.25)
-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1차 입찰공고(2024. 5. 17.) 및 유찰(2024. 6. 5.)
-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2차 입찰공고(2024. 6. 7.) 및 유찰(2024. 7. 11.)
-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3차 입찰공고(2024. 8. 1.) 및 유찰(2024. 8. 20.)
-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4차 입찰공고(2024. 8. 20.) 및 유찰(2024. 9. 5.)
- 4차례 유찰로 수의계약 전환(2024.9.12)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를 재작성

현대건설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협의가 진행되는 2024년 말을 기준으로 사업일정을 검토하면, 2024년 10월까지 수의계약 협의를 완료하고 2025년 7월 우선시공분 공사에 착수할 경우 총 공사기간 84개월을 거쳐 2032년 7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산정됨.

이에 따라 개항 시점을 준공 1년 전으로 가정하면, 2024년말 기준 목표 개항 시점은 2031년으로 추정되며, 이는 당초 목표 개항 시점(2029년 12월)보다 2년 정도 지연된 것이었음.

7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60호,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2023. 12. 29.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일정 계획(안) (2024년말 기준)]

일정	기간	내용
2024. 9. ~ 10.	2개월	수의계약 협의
2024. 10.~ 2025. 4.	6개월	기본설계
2025.6.	1개월	설계평가 및 적격자 선정
2025.7.	1개월	우선 시공분 착수
2025. 7. ~ 12.	6개월	실시설계
2026.2	1개월	실시설계 평가 및 계약
2026.3. ~ 2032. 7.	우선시공분 착수(2025.7.)부터 84개월	본 공사
2031년 12월(가정)		개항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p. 154 및 국토교통부 자료를 재작성

그러나 2025년 수의시담 과정에서 현대건설컨소시엄은 공사기간 108개월을 제시하였고, 국토교통부의 공사기간 84개월과의 차이가 해소되지 못하면서 수의계약이 최종 중단·결렬되었음.

이후 국토교통부는 공사기간을 당초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조정하여 입찰절차를 재추진하였으며, 두 차례 유찰 및 수의계약 전환을 거쳐 대우건설컨소시엄이 2026년 3월 기본설계에 착수하였음.[72)]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 경과(2024년 수의계약 전환 이후)]

-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현장설명회(2024.10.28) 및 기본설계 착수(2024.10.28~)
-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안 접수(2025.4.28)
-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중심위 설계적격심의(2025.5~) → **수의계약 절차 중단(6.16)**
-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재추진 방안 발표(2025.11.21)
-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공고(2025.12.29)
-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재공고(2026.1.19)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를 재작성

결과적으로 현대건설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결렬과 입찰 재추진 등으로 기본설계의 착수 시점이 2024년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 17개월 지연되었으며, 늘어난 공사기간(22개월 연장)을 감안하면 예상 준공 시점은 총 39개월(17개월+22개월) 지연된 2035년 10월이고, 개항 시점도 2034년 또는 2035년으로 순연될 것으로 예상됨.

72) 대우건설컨소시엄과 계약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가격협상 등을 거쳐 이루어질 예정임.

이는 2024년말 당시 예측한 개항 시점(2031년)보다 3년 이상, 기본계획 고시(2023년말) 당시의 개항 시점(2029년) 대비 5년 이상 지연된 것으로, 향후 설계 및 공사 과정에서 추가 지연 요인이 발생할 경우 개항 시점은 더욱 늦어질 우려가 있음.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재추진 내용(수의계약 결렬 이후)]

1 재추진 방안 주요내용 ㅇ 발주방식: 설계·시공 일괄 입찰 (턴키) ㅇ **공사기간: 당초 84개월 → 변경 106개월 (22개월 증)** - 연약지반 안정화 +13개월, 해상장비 제작 등 +3개월, 공사용 도로 및 항행안전시설 설치 등 +6개월 ㅇ **공사금액: 당초 10조 5,300억원 → 변경 10조 7,175억원 (1,875억원 증)** - 그간 물가상승 금액을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 2 입찰 추진경과 ㅇ 2025. 12. ~ 2026. 2 : 부지조성공사 입찰공고(2회 유찰) ㅇ 2026. 2. 24 :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전환 ㅇ 2026. 3. 9 :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착수(대우 컨소, 6개월)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를 재작성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연약지반 안정화 등 핵심 공정에 대한 소요 공사기간 등 충분한 사전검토가 부족한 채로 2024년에 입찰을 진행하였으며,[73][74] 그 결과 사업 지연과 추가 공사비 증가를 초래한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연약지반 안정화 등 핵심 공정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기술용역업체의 검토 등을 거쳐 84개월의 공기를 산정한 것으로, 민간의 기술력 및 창의적 제안을 바탕으로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았으며, 한 차례 사업중단 이후 연약지반에 대한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공기를 재산정한 것이라는 입장임.

그러나 현대건설컨소시엄에서 주장하였던 연약지반 안정화 등 소요기간보다 부족한 기간으로 입찰을 개시한 문제가 있으며, 해당 공정은 사업 재추진 과정에서 공사기간을 연장하면서 대부분 반영되었음.[75] 이러한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비도 물가상

73)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입찰 이후에는 입찰 조건(84개월)과 다른 공사기간(108개월)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음. 이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않아 현대의 설계는 부적격으로 판정(2025. 6월)

74) 현대건설 컨소시엄에서는 방파호안 선시공 7개월, 연약지반 안정화 기간 17개월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사유로 입찰조건(84개월)과 맞지 않는 공기 108개월을 제출하였음.

75) 당초 입찰 당시 공기(84개월) 당시 연약지반 안정화 기간을 1개월로 설정하였고,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18개

승분만큼인 1,875억원 늘어났음.

국토교통부는 사업 지연과 공사비 증가를 초래한 미흡한 사업 계획 및 입찰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향후 진행되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는 주요 공정의 현실적 소요기간과 시공 여건을 면밀하게 파악해 향후에는 사업 지연 및 추가 비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월(17개월 추가 소요)을 주장하였음. 재추진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최종적으로 14개월(13개월 추가)로 확정되었음.

19.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운영 사업: 사업 추진 경과를 고려한 적정 공단 조직 규모 관리 필요

가. 개 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운영’ 사업은 가덕도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하여 체계적인 발주 및 계약 체결, 설계·시공 등 사업관리를 수행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43억 5,700만원 중 228억 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3.6%)되고 15억 5,500만원이 불용되었음.[76)]

[2025년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운영	24,330	24,330	27	-	24,357	22,802	-	1,555	24,936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진척 수준 대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조직 및 인력 규모가 과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국토교통부는 사업 추진 경과를 고려하여 공단의 조직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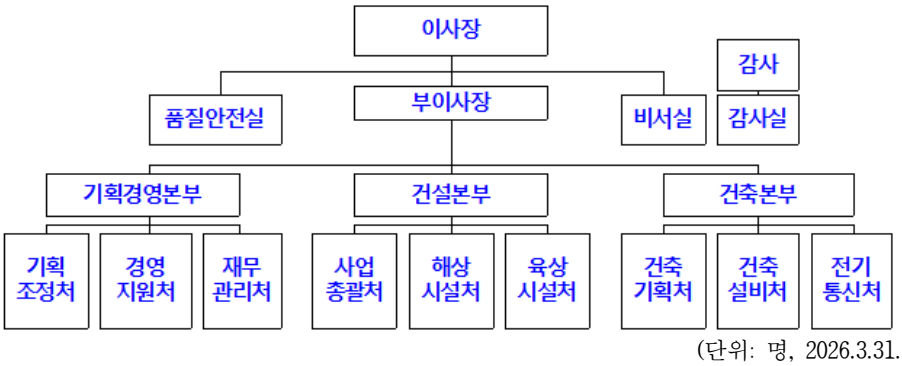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77)]에 따라 2024년 설립된 기타공공기관으로, 현

76) 교통시설특별회계-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운영(3538-313)(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77)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하여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신공항건설사업
2. 공항건설에 관한 연구·기술개발 및 조사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재 3본부 9처 3실 체계와 정원 176명, 현원 137명의 조직·인력 규모를 운영하고 있음.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조직 및 인력 현황]



(단위: 명, 2026.3.31.기준)

구 분 \ 직급별	계	임원	직원	1급	2급	3급	4급	5급이하
정 원	176	6	170	11	34	60	61	4
현 원	137	5	132	10	29	44	49	-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를 재작성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사업추진 기관인 공단의 조직과 인력 규모를 다른 국토교통부 소관 지역공항 건설사업과 비교하면, 다른 지역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 팀과 지방항공청 과 단위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에 비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별도 건설 전담 조직인 공단이 수행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공항 건설사업보다 사업규모가 큰 점을 감안하더라도 조직과 인력 규모가 상대적으로 방대한 수준임.

구체적으로, 다른 지역공항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 공항건설팀과 지방항공청에서 전담하며 총 20명 이내의 인력으로 추진되고 있는 반면,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에 별도 추진단을 두고 14명의 전담 인력을 구성하고 있으면서 137명 규모의 공단까지 구성되어 있는 상황임.

비록 가덕도신공항은 공항, 접근철도, 접근도로가 포함되어 있어 다른 지역공항에 비하여 사업규모(총사업비)가 크지만, 이는 넓은 부지와 대규모 시설 조성에 따라 각 공정에 투입되는 사업비 규모가 방대한 측면이 크며, 항만시설, 여객터미널, 부대건물, 부지조성 공사 등 공정 절차는 다른 지역공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임.[78]

4.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공항건설 관련사업

[국토교통부 소관 지역공항건설 사업의 추진조직 및 인력 현황]

(단위: 억원)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총사업비	사업기간	국토부 조직	담당기관	2025년 사업단계
흑산도 소형공항 (3538-302)	1,833	2012 ~ 2027	공항정책관 공항건설팀 (7명)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8명)	설계완료 (타당성 재조사 중)
새만금 신공항건설 (3538-305)	8,268	2022 ~ 2028			설계중 (순연)
백령도 소형공항 (3538-310)	2,018	2023 ~ 2029			계획수립 (타당성 재조사 중)
울릉도 소형공항 (3538-301)	8,897	2014 ~ 2027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14명)	공사중 (공정률 70.7%)
제주 제2공항 (3538-304)	54,532	2017 ~ 2030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시설과 (14명)	설계중
서산 공항건설 (3538-311)	484	2024 ~ 2028		-	계획수립 중
대구경북 신공항건설 (3538-309)	26,996	2024 ~ 2030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 (6명)	-	계획수립 완료
가덕도신공항 건설 (3538-308)	159,569 (공항 139,842 접근철도 12,948 접근도로 6,779)	2023 ~ 2035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14명)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137명)	설계준비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및 지방항공청 홈페이지 내용을 재작성

2025년 기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경과를 보면, 접근철도 부분만 실시설계가 진행 단계에 있으며, 그 외 공항 부지조성공사와 접근도로 부분은 기본설계가 진행되지 못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 진척도가 낮은 상황임.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사업 계획과 입찰 과정에서의 미흡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 대비 준공 시점이 3년 이상 지연된 상황[79]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사업총괄 및 건설 등 필수 인력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78) 따라서 총사업비 규모가 다른 지역공항보다 수십 배 크다는 이유만으로 사업관리에 필요한 인력도 이에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른 지역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계획수립 및 설계 단계에서 총사업비 증가 가능성도 있음.

79) 검토보고서 '18.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미흡한 사업 계획과 입찰 준비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및 공사비 증가 문제 개선 필요' 참조

[2025년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 경과]

- 가덕도신공항 접근도로 건설공사 입찰공고(2024.12.31)
- 가덕도신공항 접근철도 제1공구 기본설계 착수(2025.2.6)
- 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구성・운영(2025.2.28)
- 가덕도신공항 접근철도 제2공구 기본설계 착수(2025.4.10)
-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안 접수(2025.4.28)
-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중심위 설계적격심의(2025.5~) → 수의계약 절차 중단(6.16)
- 가덕도신공항 접근철도 제1공구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2025.8.11)
- 가덕도신공항 접근철도 제2공구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2025.10.13)
-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재추진 방안 발표(2025.11.21)
-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공고(2025.12.29)
- 가덕도신공항 접근도로 건설공사 입찰공고(2025.12.30)
-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재공고(2026.1.19)
- 가덕도신공항 접근도로 건설공사 입찰 재공고(2026.1.23)

자료: 국토교통부 사업설명자료

국토교통부는 현 사업 추진 단계에서 공단 조직과 인력이 과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사업 추진 경과와 필수 소요 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직 규모 확대 및 신규 채용 여부를 검토하는 등 공단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단의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80]

80)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공단의 설립 준비 과정에서 전문기관 검토를 통해 적정 조직·인원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경과를 고려하여 조직을 운영하는 중이며, 향후에도 전문 용역을 통해 여건 변화를 분석하여 이에 맞는 적정 조직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임.
 * 정원 176명 대비 사업총괄·건설 등 필수 부서 중심으로 현원 137명만 배치
 * 적정 조직 및 인력 규모 산정을 위한 용역 시행 중(2025.12~2026.6)

【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체계관리계정)】

〈세 출〉

20.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대중교통 이용 촉진 효과 확인 및 점검 필요

가. 개 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 지원하고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여 국민 교통비 부담 경감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374억 6,000만원 중 2,374억 3,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2,300만원이 불용되었음.[81)]

[2025년도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237,460	237,460	-	-	237,460	237,437	-	23	748,373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 사업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모두의카드”(종전 “K-패스” 사업에서 2026년 사업 명칭 변경) 사업은 ① 정률할인 방식의 「기본형」과 ② 정액할인 방식의 「일반형·플러스형」으로 구분되며, 세부 환급률 또는 정액금은 다음 표와 같음.

2026년 1차 추경예산에서는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교통비 부담액을 더욱 절감시키고자 기본형의 환급률과 정액형의 환급 기준금액을 한시적(4월부터 9월까지)으로 상향하였음.

81) 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체계관리계정)-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4931-354)(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2026년 모두의카드 사업 개요]

1 기본형(정률형)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이용자에게 지출금액 중 일정 비율(20~53.3%) 환급('24.5~)

: 2026년 신설

구분	일반	청년	2자녀	65세 이상 어르신	3자녀	저소득
환급률	20%	30%	30%	30%	50%	53.3%

2 일반형·플러스형(정액형)

○ 고빈도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기 위해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대중교통비 지출금액(차액)을 전액 환급

- ①시내버스, 지하철 이용이 가능한 일반형과 ②광역버스·GTX 등 광역 이동 수단까지 이용할 수 있는 플러스형으로 구분
  * 일반형 : 1회 총 이용금액(환승 포함) 3,000원 미만인 대중교통수단
  * 플러스형 : 1회 총 이용금액(환승 포함) 3,000원 이상인 대중교통수단까지 포함
- 지방 혜택 확대를 위해 전국을 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우대
  * 인구감소 등을 고려하여 4개(수도권, 일반 지방권, 우대·특별지원 지역)으로 구분

구 분	일반 국민		청년·2자녀·어르신		3자녀 이상·저소득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수도권	6.2 만원	10 만원	5.5 만원	9만원	4.5 만원	8 만원
일반 지방권	5.5 만원	9.5 만원	5 만원	8.5만원	4 만원	7.5 만원
우대지원지역	5 만원	9 만원	4.5 만원	8만원	3.5 만원	7 만원
특별지원지역	4.5 만원	8.5 만원	4 만원	7.5만원	3 만원	6.5 만원

3 2026년 한시적 혜택(4~9월)

○ 기본형(정률형) : 환급률 30% 상향(출퇴근 시차시간)

구분	일반	청년	2자녀	65세 이상 어르신	3자녀	저소득
환급률	20%	30%	30%	30%	50%	53.3%
출퇴근 시차시간	50%	60%	60%	60%	80%	83.3%

*(시차시간, 탑승기준) 5:30-6:30, 9:00-10:00, 16:00-17:00, 19:00-20:00

○ 모두의 카드(정액형) : 환급 기준금액 50% 인하

구 분	일반 국민		청년·2자녀·어르신		3자녀 이상·저소득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수도권	3 만원	5 만원	2.5 만원	4.5만원	2.2 만원	4 만원
일반 지방권	2.7 만원	4.7 만원	2.3 만원	4.2만원	2 만원	3.7 만원
우대지원지역	2.5 만원	4.5 만원	2.1 만원	4만원	1.7 만원	3.5 만원
특별지원지역	2.2 만원	4.2 만원	2 만원	3.7만원	1.5 만원	3.2 만원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를 재작성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은 사업 시행 첫해부터 가입자 수와 예산이 계획 대비 빠르게 증가하였음. 예산 규모는 2024년 735억원에서 2025년 2,375억원, 2026년에는 추경 기준 7,484억원으로 2년 만에 약 10배가 증가하였음.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의 성과지표를 "전체 가입자 수"로 관리하고 있는데, 가입자 수 역시 2024년 185만명 목표 대비 266만명의 실적을 달성(143.8%)하였고, 2025년에는 목표치 361만명 대비 427만명의 실적을 달성(118.3%)하는 등 성과지표에 따른 사업 성과가 높게 나타남.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예결산(2024~2026년)]

(단위: 백만원, 만명)

연도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추경
금액	73,469	113,268	237,460	237,437	557,970	748,373
가입자수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연말 기준)	185	266	361	427	625(예상)	-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를 재작성

나. 검토의견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 관리를 위하여 직접적인 국민 교통비 부담 경감 효과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 촉진 효과도 확인·점검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① 국민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과 ②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늘어나는 가입자 수 및 재정 투입 규모에 비례하여 사업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 성과 관리도 면밀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먼저 일반 국민의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 효과는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비례하여 가시적으로 나타남. 1회 평균 대중교통비 1,591원을 지출하는 일반 이용자의 경우 월평균 32회 이용 시 약 1만 200원 수준의 환급 혜택을 받고 있음(2026년 예산 기준, 2026년 추경에 따른 한시적 혜택 미반영).

다만, 대중교통 이용 촉진 효과는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

교통카드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른 일반·마을버스와 도시철도 이용 총량을 연도별로 보면, 제도가 도입된 2024년과 2025년의 전체 대중교통 이용량은 7,751,698천회, 7,889,502천회인데, 이는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의 이용량인 8,675,876천회보다

낮은 수치이므로, 이 사업을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가 어느 정도로 나타났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2024년과 2025년의 전년 대비 증가량(각각 212,254천회, 137,804천회)과 전년 대비 증가율(각각 2.8%, 1.8%)은 모두의카드 제도의 도입 효과뿐만 아니라, 일부 코로나19의 기저효과로도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임.

[연도별 대중교통 이용 총량 현황]

(단위: 천회, %)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이용량(천회)	8,675,876	6,348,227	6,410,232	7,089,881	7,539,444	7,751,698	7,889,502 (7,889,908)
증감(천회)	-	△2,327,649	62,005	679,649	449,563	212,254	137,804
증감률(%)	-	△26.8	1.0	10.6	6.3	2.8	1.8

주 1) 모두의카드 할인 적용 대상인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 도시철도를 대상으로 집계함
2) 일반, 경로, 국가유공자, 어린이, 장애인, 청소년, 외국인 모두 포함
3) 수도권, 대전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울산권을 대상으로 함
4) 발생량 기준으로 집계
5) 2025년부터는 전주권이 포함되었음(괄호안은 전주권을 포함한 수치임)

자료: 교통카드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 추출

만일 기존 대중교통 이용자들만 K-패스(모두의카드)를 신청하는 데 그치고, 자가용 이용자의 대중교통 전환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투입 예산 대비 대중교통 이용 촉진 효과는 제한적일 우려가 있음.

특히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이 K-패스(모두의카드)로 이동하는 등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교통할인 정책이 국토교통부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재정 부담만 지방자치단체(서울시)에서 국가로 이전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임.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실제 자가용 이용자의 대중교통 전환 효과 및 대중교통 추가 이용 유발 효과 등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 출〉

21.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공실 문제에 대한 선제적 조치 필요

가. 개 요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사업은 대학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창업·성장기업에 저렴한 임대공간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40억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82)]

[2025년도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4,000	4,000	-	-	4,000	4,000	-	-	14,150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사업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가보조금, 지방비 및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대학교 내 유휴부지에 산·학·연 혁신허브 용도의 임대건물 건축공사를 수행한 후, 최소 30년간의 임대 운영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로 추진되고 있음.

2019년 5월에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이 발표된 이래로 4차례 공모를 거쳐 총 9개 대학을 선정하여 건축공사를 계획 또는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인 ‘산학연혁신허브’가 2024년 12월에 1차로 준공되어 2025년 3월부터 기업 입주가 개시되었음.

8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캠퍼스 혁신파크 조성(6031-315)(국토도시실)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ㅇ (사업내용) 대학 내 유휴부지를 무상으로 활용하여 대지조성공사 및 산학연혁신허브동 건축 공사 시행
- ㅇ (사업비) 국비 190.5억원(수도권 95.2), 지방비 약 80억원 지원, 사업시행자(LH) 잔여 비용 부담
- ㅇ (공간구성) 기업임대공간, 지원시설(상가), 대학사용공간, 공용시설
- ㅇ (사업구조) 보조금과 LH 투자비로 시행, 최소 30년 임대를 통해 투자비 회수
  * 임대가격 : 기업임대공간은 시세의 70~80% 수준, 지원시설은 시세의 100%
- ㅇ (추진절차) 대상지 선정 → 산업단지계획 수립 → 산업단지계획 승인(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 부지 조성 착공 → 건축공사(산학연 혁신허브) 착공 → 준공 → 임대 및 운영

□ **추진 현황**

- ㅇ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 발표(2019년 5월, 교육・국토・중기부) 후 4차례 공모를 거쳐 총 9개 대학을 선정, 도첨산단 조성 추진중

구분	1차(19.8)			2차(21.4)		3차(22.6)		4차(23.4)	
대학	한남대	한양대 에리카	강원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창원대	단국대 천안	부경대
사업비 (억원)	559	552	737	585	587	미정	미정	미정	미정
현황	건축완공 (24.12)	건축완공 (26.下)	건축완공 (26.上)	착공 (24.11)	착공 (24.12)	기본협약 체결 협의중	산단계획 승인 준비중	협의중	협의중

자료: 국토교통부 사업설명자료를 재작성

나. 검토의견

국토교통부는 투자비 회수와 임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향후 조성될 캠퍼스 혁신파크의 공실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2024년 12월에 준공되어 2025년 3월부터 입주가 개시된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 ‘산학연혁신허브’의 임대 현황을 보면, 준공 후 약 1년이 경과한 2026년 4월 기준으로 전체 임대공간 99호 중 입주가 완료되지 못한 호수는 41호(미계약 29호, 공급 미시행 12호)로 공실률이 41% 수준으로 높은 수준임.

특히 상가의 경우는 기업입주가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라 11호 전체가 입주자 모집 공고조차 시행하지 못한 상황임.

[한남대 혁신파크 임대 현황]

(단위: 호, %)

구분		계(호)	공급시행		공급 미시행	임대조건 (시세대비)
			계약	미계약		
전체		**99**	**58**	**29**	**12**	
기업	창업(BI)	29	27	2	-	70%
	성장(POST BI)	49	22	27	-	80%
	코워킹	1	-	-	1	-
	소계	79	49	29	1	
유관기관		9	9	-	-	90%
상가		11	-	-	11	-

주) 2026년 4월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를 재작성

한남대 산학연혁신허브는 이 사업으로 조성된 제1호 혁신파크로서, 입주 실적이 저조할 경우 대학의 사업 참여가 위축되거나 임대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LH의 혁신파크 재투자 또는 혁신파크 건물의 유지관리 등 임대서비스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LH는 창업(BI)과 성장(POST BI) 공간 간 입주수요 불균형으로 일부 공실이 발생하였고, 공급 유형간 구분 없이 수요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또한 적극적인 기업유치로 공실률을 낮추고, 공실률과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적절한 임대료 조정을 통해 임대 수익을 개선해 투자비 회수를 도모하겠다는 의견임.

현재 국토교통부와 LH가 조성하려는 혁신파크는 한남대를 포함하여 총 9개이고, 한남대의 경우와 같이 연구개발 및 산업 인프라 접근성 등의 사유로 초기 공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입주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고, 기업 유치 전략 및 임대조건 개선방안 등을 선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한남대 혁신파크 및 향후 조성 예정인 혁신파크의 공실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대학 위치, 사업기간 및 투자 내역]

(단위: 억원)

구분		사업 위치	사업기간	사업비 조달				손실 추정액
				계	국비	지방비	LH 투자	
계				4,156	1,619.2	715	1821.8	840
1차(2019.8)				1,848	476.2	180	1191.8	642
	강원대	강원 춘천	'20~'26	737	190.5	74	472.5	335
	한남대	대전 대덕	'20~'25	559	190.5	76	292.5	143
	한양대에리카	경기 안산	'20~'26	552	95.2	30	426.8	164
2차(2021.4)				1,172	381	161	630	198
	경북대	대구북구	'22~'28	585	190.5	76	318.5	95
	전남대	광주 북구	'22~'28	587	190.5	85	311.5	103
3차(2022.6)				미정	381	154	미정	미정
	전북대	전북 전주	미정	미정	190.5	80	미정	미정
	창원대	경남 창원	미정	미정	190.5	74	미정	미정
4차(2023.4)				미정	381	220	미정	미정
	단국대천안	충남 천안	미정	미정	190.5	110	미정	미정
	부경대	부산 남구	미정	미정	190.5	110	미정	미정

주) 손실추정액은 LH 선투자 사업비와 허브동 운영수익(임대료), 수선유지 비용 등을 감안한 추정액

자료: 국토교통부 2026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재작성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

〈수　입〉

22. 정부출자주식매각대: 출자금 회수 실적 제고 필요

가. 개　요

‘정부출자주식매각대’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리츠 사업시행자에게 지원된 기금 출자금의 원금회수 수입으로, 2025년도 계획액 983억 3,300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37억 7,800만원이고 전액 수납되었음(수납률 100.0%).[83]

[2025년도 정부출자주식매각대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액
	계획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당초	수정(A)						
정부출자주식매각대	98,333	98,333	3,778	3,778	-	-	100	565,100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임대주택리츠 출자금의 회수 실적이 계획 대비 저조하므로, 국토교통부는 사업이 종료된 리츠의 청산 지연 사유를 점검하고, 출자금이 적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해당 수입은 임대주택리츠출자(1440-409) 사업을 통해 리츠에 출자된 주택도시기금 재원이 사업이 종료된 이후 리츠 청산 절차를 거쳐 회수됨에 따라 발생하는 것임.

2025년 당초 계획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5년 출자금 중 리츠 청산에 따라 572억 4,000만원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해당 리츠의 청산이 지연되면서 출자금이 전액 회수되지 못하였음. 2025년에 실제 회수된 37억 7,800만원은 2024년 회수 예

83) 국민주택기금(주택계정)-정부출자주식매각대(78-781)(주택토지실)

정되었던 출자금이 1년 연장되면서 일부만 회수된 금액임.

[2025년 임대주택리츠 출자금 회수 실적]

(단위: 백만원, 호)

출자 연도	출자기관	출자액	출자기한		회수		주택 공급실적 (호)
			당초	변경	회수액	미회수 사유	
2018	주택도시기금	6,000	2024	2025	3,778	매각 부진 사유로 일반공매 매각하여 계획 대비 미회수액 발생	26
2015	주택도시기금	38,240	2025	2027	-	매각 부진으로 보통주 주주의 매각가 수용 불가로 임대기간 연장	360
2015	주택도시기금	19,000	2025	2027	-		291

자료: 국토교통부

2025년 계획된 출자금 회수가 전액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위례뉴스테이(출자액 382.4억원)와 해피투게더스테이제1호(출자액 190억원) 리츠에서 대주주인 기금과 보통주 주주 간 세부 매각계획에 대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한 데 따른 것임.

구체적으로 해당 리츠에 따라 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 분양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양 대상자와 금액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면서 청산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임.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임대주택 공급사업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종료된 리츠를 조속히 청산하고 출자금을 적기에 회수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사업 종료 리츠의 청산 지연 사유와 출자금 회수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져 출자금이 적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지 출〉

23.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사업: 공사의 적정 보증실적 등을 고려한 출자 필요

가. 개 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본금을 확충하여 정책 보증사업 추진에 필요한 여건 조성 및 HUG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4,000억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84]

[2025년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	400,000	-	400,000	400,000	-	-	-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정책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지원한 출자금 대비 공사의 보증실적이 저조하므로, 국토교통부는 공사의 적정 보증배수 및 보증실적을 고려하여 출자금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는 2025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PF 위기극복 특별보증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목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하 ‘공사’라 함)의 자본금 확충을 위한 출자금 4,000억원을 편성하였음.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은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여 건설사 자금난 및 공사중단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출자금 2,000억원이 배정되었으며, ‘PF 위기극복 특별보증’ 사업은 시공순위 100위 미만 중소건설사를 위한 맞춤형 PF 대출보증 상품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역시 출자금 2,000억원이 배정되었음.

84) 국민주택기금(주택계정)-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1043-301)(주택토지실)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여 건설사 자금난 및 공사 중단 우려를 해소
□ (지원내용) ① 준공 전 지방 미분양 주택을 ②공공이 한시 매입하고,
③ 준공 후 사업주체에게 환매, ④ 사업주체는 분양하여 사업종료
□ (지원대상) 공정률 50% 이상 지방 미분양 최대 1만호 매입
□ (지원조건) 매입가격: 분양가격의 50%
환매가격: 당초매입가(분양가 50%) + 최소실비용(취득세 등)
□ (사업기간 / 수행주체) 총 4년('25~'28) / HUG 수행
* (연간 매입규모) 25~26년: 4천호, 27년: 3천호, 28년: 3천호

자료: 국토교통부 사업설명자료를 재작성

[PF 위기극복 특별보증 사업 개요]

□ (사업목적) 기존 보증제도로는 지원이 어려웠던 중소건설사를 위해 맞춤형 PF대출보증 상품 마련
* PF보증실적('22~'25.3) : 110개 중 90개가 시공순위 100위 이내 건설사 사업장(82%)
□ (지원내용) 중소 건설사의 주요 자금조달 경로인 제2금융권 PF 대출에 대해 HUG가 최대 2조원 보증 지원(한시 사업)
* (제2금융권) 증권사, 보험사,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신협 등), 저축은행
□ (지원대상) 제2금융권 자금조달이 이루어지는, 시공순위 100위 미만 건설사의 우량 PF 사업장
□ (지원조건) 사업장별 총사업비 70% 이내 보증
□ (사업기간 / 수행주체) 총 3년간 / HUG 수행
* (연간 공급규모) 25년: 4천억원, 26년: 8천억원, 27년: 8천억원

자료: 국토교통부 사업설명자료를 재작성

2025년 정책사업 추진 성과를 보면,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 따른 매입 규모는 1,224억원으로 당초 출자금(2,000억원) 대비 집행실적은 61.2% 수준이고, PF 위기극복 특별보증 승인 규모는 1조 3,520억원으로 나타나 투입된 출자금(2,000억원)으로 4,457세대를 지원하였음.

[2025년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사업 성과]

(단위: 억원)

사업명	출자금	실적	성과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2,000	1,224(매입)	집행률 61.2%
PF 위기극복 특별보증 사업	2,000	13,520(보증)	4,457세대 지원

자료: 국토교통부 사업설명자료를 재작성

특히 보증배수의 관점에서 보면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제27조[85]에 따라 보증배

85)「주택도시기금법」
제27조(보증의 한도) 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9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수를 자기자본의 90배까지 관리할 수 있으며, PF 위기극복 특별보증 사업을 실시하는 하반기에는 보증배수가 60배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면, 보증한도 대비 출자금이 과다하게 편성되었거나 정책사업의 집행 실적이 계획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2024년, 2025년 월별 HUG의 보증배수 현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4년	54.2	54.8	54.9	55.3	54.8	53.4	53.0	52.9	53.1	53.0	54.1	54.4
2025년	53.1	52.7	72.9	73.1	72.1	72.1	65.5	65.1	60.9	60.5	61.1	61.1

자료: 국토교통부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90배의 보증배수는 전반적인 보증여력과 재무안정성 관리를 위한 지표로서, 그 동안 전세사기성 보증사고 급증에 따른 HUG 보증여력 확보를 위해 한도를 크게 상향한 측면이 있으며, PF 위기극복 특별보증에 반드시 적용되는 한도는 아니라는 의견임. 또한 PF 특별보증 사업의 공급목표(2조원)에 따른 예상 사고율(10%)을 감안하여 HUG에 미리 손실보전 성격으로 정부출자금을 증액하였다는 입장임.

보증배수는 개별 보증상품별로 적용되는 지표가 아니라 HUG 전체의 보증 총량 한도를 관리하기 위한 지표라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추가 투입된 출자금의 정책효과가 제한적이었던 점과 당시 HUG의 보증배수가 별도의 자본확충이 시급할 정도의 위험 수준은 아니었다는 점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는 향후 HUG 출자금 편성 시 정책사업별 실제 보증수요와 보증배수 수준, 기존 자기자본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출자금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지　출〉

24. 주택정비사업(융자): 정비사업 수요를 반영한 융자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주택정비사업(융자)’ 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와 안정성을 높이고, 조합 등의 사업 초기 인허가 및 시공자 선정에 필요한 기본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를 융자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400억원 중 45억 5,000만원이 집행(집행률 11.4%)되고 354억 5,000만원이 불용되었음.[86)]

[2025년도 주택정비사업(융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주택정비사업(융자)	40,000	40,000	-	40,000	4,550	-	35,450	42,250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주택정비사업(융자)은 2025년 신규사업으로서 조합의 용역비, 운영비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원까지 3%대의 금리로 융자하는 사업임.

86) 국민주택기금(도시계정)-주택정비사업(융자)(1520-305)(주택토지실)

[주택정비사업(융자) 개요]

□ (대상) 2025년 조합 → 2026년 추진위 및 조합
- 2025.1월 기준「주택법」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

□ (자금용도) 용역비, 조합운영비, 총회개최비용, 보증부대출금 이자비용, 그밖에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사용 가능

□ (융자한도) 구역별 건축연면적에 따른 한도 내에서 지원

건축연면적		~20만㎡	~30만㎡	~40만㎡	~50만㎡	50만㎡~
현행	조합	18억원	20억원	30억원	40억원	50억원
2026년 (안)	조합	30억원		40억원	50억원	60억원
	추진위	10억원	12억원	13억원	14억원	15억원

□ (융자조건(이자)) 소재지(서울 · 서울外) 및 유형(재건축 · 재개발)에 따라 금리 차등

구분	서울			서울外		
	기금(a)	보증료(b)	금리(a+b)	기금(a)	보증료(b)	금리(a+b)
재건축	3.0%	1.0%	4.0%	2.6%	1.0%	3.6%
재개발	2.6%	1.0%	3.6%	2.2%	1.0%	3.2%

□ (담보) HUG 보증서 (단, 조합장 및 감사 전원의 연대보증 필요)

□ (만기) 사업계획승인 후 1년 내 일시상환(단, 최대 5년)

□ (기한이익상실) 명백한 사업중단 사유* 발생 시 원리금 회수
* 정비구역 해제, 조합설립인가 취소, 3개월 이상 이자연체(월별납부 선택시)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를 재작성

나. 검토의견

사업초기 주택정비사업에 따른 융자 실적이 계획 대비 저조하므로, 국토교통부는 융자 수요를 확인하여 전반적인 융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는 2025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이 사업의 기금계획액 편성 당시, 융자 심사 기준을 충족하여 융자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20개 조합(전체 조합의 약 7% 추정)에 대해 평균 2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음.

[2025년 주택정비사업(융자) 계획안 세부내역]

- (산출) 20개 조합*×평균 20억 = 400억
* 현재 조합설립 되어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인 전국 272개 조합과 '25년 신규설립 47개 조합 중 융자 심사 기준을 충족(약 7% 예상)하여 융자를 신청(기준충족 조합 중 88% 예상)할 것으로 예상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2025.10.15.)"에서 조정대상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으로 본 사업대상 지역이 축소됨에 따라 당초 설정하였던 사업대상 제외지역 요건을 완화·변경[87]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였음.

그리고 이 사업의 실적 제고를 위하여 지자체와 연계하여 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 첫해 집행률은 11%로 저조한 상황임.

이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 사업장별 추진 단계와 여건이 상이하고, 이러한 사업 추진 경과가 융자 수요 및 집행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에 기인함.

또한 2025년 3월 신설된 사업으로 사업 인지도가 낮았고, 융자 대상이 조합으로 한정되는 등 서울시의 유사 사업에 비해 지원 조건이 불리하였으며, 사업 시행 시기가 조합의 차입 의결을 위한 총회 일정과 맞물려 신청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임.

[2025년 융자신청 및 승인 현황]

(단위: 백만원 / 2025년 12월말 기준)

구역명	융자대상	신청 접수일	승인일	승인금액	집행일	집행금액	비 고
A구역	조합	25.05.27	25.07.10	4,000	25.09.09	100	
B구역	조합	25.07.02	25.08.01	2,000	25.08.05	2,000	
C구역	조합	25.07.28	25.08.07	650	25.08.21	650	투기과열지구 서울시(1,943백만원)
D구역	조합	25.08.29	25.09.10	1,800	25.09.17	1,800	

자료: 국토교통부

87)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2025.10.15)을 통해 조정대상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강남3구+용산구 → 서울전지역+경기 12개지역)에 따라 사업대상 제외지역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2025년 제6차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사업대상 제외지역 조건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10.27).

기존	변경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 (강남3구, 용산구)	- **2025.1월 기준**「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 (강남3구, 용산구)

[주택정비사업(융자)의 수혜 대상지역 - 재개발+재건축 단계별 구역 현황]

(단위: 구역 수)

지역 (2025년 12월 기준)		추진위 구성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착공
전국		**146**	**286**	185	219	194
	수도권	74 (57)	166 (118)	101 (79)	129 (90)	142 (96)
	- 서울 (규제지역)	49 (49)	111 (111)	76 (76)	72 (72)	74 (74)
	- 경기 (규제지역)	25 (8)	46 (7)	17 (3)	43 (18)	49 (22)
	- 인천 (규제지역)	0 (0)	9 (0)	8	14 (0)	19 (0)
비수도권		**72**	**120**	84	90	52

자료: 국토교통부

유사 사업으로 서울시에서도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융자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융자 한도와 금리 등 지원 조건이 국토교통부의 사업과 유사함에도 지원 건수와 집행 실적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주택정비사업의 융자 수요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2025년 서울시에서는 9개 추진위원회와 35개 조합을 대상으로 총 239억 9,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국토교통부 사업 집행액(45억 5,000만원)의 약 5배 수준임.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사업과의 비교(2025년 기준)]

구분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국토부 검토(안)
대상	추진위원회 및 조합(서울시)	조합(전국)
한도 (2025년)	추진위: 건축연면적별 10~15억원 조합: 건축연면적별 20~60억원	추진위: 해당없음 조합: 건축연면적별 18~50억원
이율	(신용) 연 4%, (담보) 연 2.5%	(신용) 3.2%~4.0, (담보) 없음
기간 (최대 융자기간)	최초 융자실행일 ~ 5년 (1년 단위 연장 가능)	사업계획승인 후 1년 내 일시상환 (단, 최대 5년)
담보	(신용) 조합장 연대보증, (담보) 부동산	조합임원 연대보증

자료: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자료를 재작성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사업 실적]

(단위: 건, 백만원)

연도	추진위원회		조합		계	
	지원건수	지원금액	지원건수	지원금액	지원건수	지원금액
2024	4	1,900	50	21,015	54	22,915
2025	9	5,741	35	18,255	44	23,996

자료: 서울시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융자 수요를 확인하여 전반적인 융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기　타】

25.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국토교통부에 대해 시정요구 104건(중복 3건 포함)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시정 3건·주의 20건·제도개선 84건이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3	20	83	3	103
예비비	-	-	-	-	1	-	1
합계	-	-	3	20	84	3	104

국토교통부는 시정요구사항 104건에 대해 75건을 조치완료(조치율 72.1%)하고 29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103	74	71.8	29
예비비	1	1	100.0	-
합계	104	75	72.1	29

국회가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면서 채택한 부대의견 중 국토교통부 2025회계연도 결산 관련 부대의견은 아래와 같음.

[국토교통부 관련 2025년도 예산안 등 부대의견]

구분	부대의견
2025년도 본예산	(5) 정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소외된 지역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인프라 확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19) 국세청은 국토교통부 및 한국부동산원과 협의하여 비주거 부동산 기준시가 고시 업무의 조속한 이관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한다.
	(20) 국토교통부는 LH 공공임대주택 공가 비율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21)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조사 사업 예산이 감액된 취지에 따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노선이 변경된 구간에 대해서는 설계 등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한다.
	(22) 국토교통부는 수서-광주 복선전철 공사시 인근 주민의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한다.
	(23) 국토교통부는 택시 운영 정책과 관련하여 지리적으로 불합리한 곳에서 교육훈련 및 면허 반납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도록 환경을 개선한다.
	(34)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종합적인 빈집정비 체계를 마련하고 신속한 사업 집행을 위해 노력한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4) 국토교통부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재생에너지(히트펌프 등) 활용을 반영하는 등 현장수요에 부합하게 재설계하여 적극 강구한다.
	(5) 국토교통부는 산불피해 이재민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예산이 산불피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데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8)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는 대구경북신공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법에 따른 협의기구에 적극 참여·협력한다.
	(24)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조속하게 로드맵을 제시하고, 내년도 부지공사 등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만전을 기한다.
2024회계연도 결산	(11)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와 철도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기 확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전국 철도 노선의 지하플랫폼과 연계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한다.
	(12) 국토교통부는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과 빈건축물에 속하지 않지만 사실상 사용이 중단된 방치건축물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정비근거를 마련한다.
	(13)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검토한다.
	(15) 국토교통부는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철도 등 교통서비스에서 소외된 지역의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16) 국토교통부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철도 급행화를 추진 시 적극 협조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회계연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778억 8,000만원(900.8%)이 많은 865억 2,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6억원(△10.0%)이 감소됨.[1)]

[2025회계연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1,507	11,507	96,126	84,619	8,646	8,646	86,526	77,880	△9,600
총수입	11,507	11,507	96,126	84,619	8,646	8,646	86,526	77,880	△9,600

2025회계연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453억 8,700만원(△20.7%)이 적은 1,735억 8,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95억 3,300만원(29.5%)이 증가됨.

문의 : 02-6788-5675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5회계연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34,754	134,754	134,054	△700	218,974	218,974	173,587	△45,387	39,533
총지출	134,754	134,754	134,054	△700	218,974	218,974	173,587	△45,387	39,533

나.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204억 8,300만원으로, 2,984억 8,3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2,983억 6,3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9%)되고, 1억 2,0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5회계연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220,483	220,483	-	220,483	298,483	298,363	120	-
합 계	220,483	220,483	-	220,483	298,483	298,363	120	-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5,176억 5,500만원으로, 3,869억 3,300만원이 집행(집행률 74.7%)되고 1,267억 8,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9억 4,0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211,837	211,837	-	-	-	211,837	211,837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220,483	220,483	85,335	±2,420	-	305,818	175,096	126,782	3,940
합 계	432,320	432,320	85,335	±2,420	-	517,655	386,933	126,782	3,940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5회계연도 말 기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자산은 전년 대비 76억 7,600만원이 증가된 2조 396억 9,300만원으로, 이는 유무형자산과 기타자산이 각각 66억 6,400만원, 10억 2,300만원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1,800만원이 증가한 8,900만원으로 차입부채 1,800만원이 증가한 데 기인함.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76억 5,800만원이 증가한 2조 396억 400만원임.

2025회계연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프로그램순원가는 1,401억 9,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3억 3,800만원 감소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1,743억 6,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억 4,600만원 감소하였음.

[2025회계연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 (A)	2024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2,039,693	2,032,017	7,676	0.4
		금융자산	288	299	△11	△3.7
		유무형자산	2,037,393	2,030,728	6,664	0.3
		기타자산	2,011	988	1,023	103.5
	부 채		89	71	18	25.4
		차입부채	89	71	18	25.4
		충당부채	-	-	-	-
		기타부채	-	-	-	-
	순자산		2,039,604	2,031,946	7,658	0.4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140,191	147,529	△7,338	△5.0
	재정운영순원가		174,366	177,712	△3,346	△1.9
	재정운영결과		174,366	177,712	△3,346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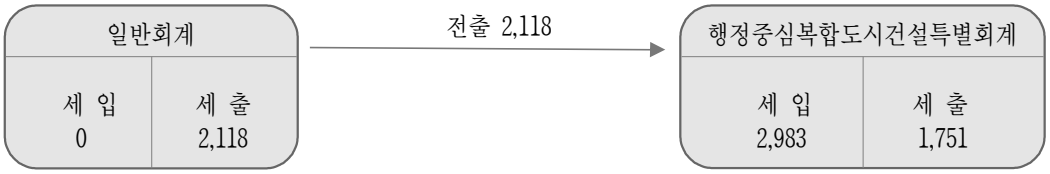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2025회계연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결산은 일반회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2,118억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전출되고, 이를 바탕으로 자체 수입과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모든 세출사업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바, 회계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2025회계연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재정흐름도]

(단위: 억원)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실질적 행정수도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 26개 세부사업을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건립되는 중심부를 실질적 행정수도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광역교통망을 확대하며 도심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음.

2025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기본경비 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국가상징구역 국민참여단 운영 용역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내용상 기본경비 성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사업의 추진 경과를 고려하여 사업 일정을 수립하고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셋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사업이 계획된 일정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용역·건축설계 범위 및 총사업비 조정 등을 조속히 확정하고 사업 지연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업 공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넷째,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과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의 수립 대상지와 범위가 중첩되고 있으므로, 관계 기관은 두 마스터플랜 간 연계성과 정합성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 계획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세 출〉

1. 기본경비(비총액) 사업: 기본경비 목적에 부합하는 용역과제 추진 필요

가. 개 요

‘기본경비(비총액)’ 사업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일반수용비·공공요금 및 관서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편성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7억 9,800만원 중 26억 4,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4.5%)되고 1,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 3,800만원이 불용되었음.[2)]

[2025년도 기본경비(비총액)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기본경비(비총액)	2,778	2,778	17	3	2,798	2,645	15	138	2,947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기본경비(비총액)(1011-250)(운영지원과)

나. 검토의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기본경비 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국가상징구역 국민참여단 운영 용역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내용상 기본경비 성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25년 대통령세종집무실·국회세종의사당 및 시민공간 등 국가상징구역 조성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국가상징구역 국민참여단’을 운영하고자 기본경비 세부사업에서 일반용역비 4,9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5년 국가상징구역 국민참여단 운영 용역 계약 내용]

(단위: 백만원)

계약명	계약 유형	발주금액	계약금액	수탁기관	계약기간
2025년 국가상징구역 국민참여단 운영 용역	제한경쟁	50	49	주식회사 워드캣	2025.10~ 2026.4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자료를 재작성

그러나 해당 용역은 국가상징구역 조성과 관련된 정책사업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관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일용임금, 특근매식비, 맞춤형 복지비, 공용차량 유류비, 통신요금, 국내외 출장여비 및 사업추진경비” 등 경상적 경비를 편성하는 기본경비 사업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정부 국정과제 발표와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수립 일정(9월 공고, 12월 당선작 선정)에 맞추어 의견수렴과 홍보를 추진할 필요가 있어 불가피하게 기본경비를 활용하여 우선 집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3)]

3) 해당 용역은 2026년도 예산안에서 ‘대외유치협력기능지원’ 세부사업의 ‘행정수도 세종 추진 국민소통 및 홍보’ 신규 내역사업에 별도 편성되었음.

[2026년 행정수도 세종추진 국민소통 및 홍보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① **국가상징구역 국민참여단 운영: 1억 2,100만원**
- 국민참여단 참석수당: 9,600만원 (120명×4회×200,000)
- 국민참여단 소통그룹 원고료: 1,000만원 (25명×4회×100,000)
- 국민참여단 발대식 행사: 1,500만원

② 행정수도 세종 홍보 실행 및 모니터링: 1억 5,900만원
③ 연구용역 인력투입 : 1억 2,0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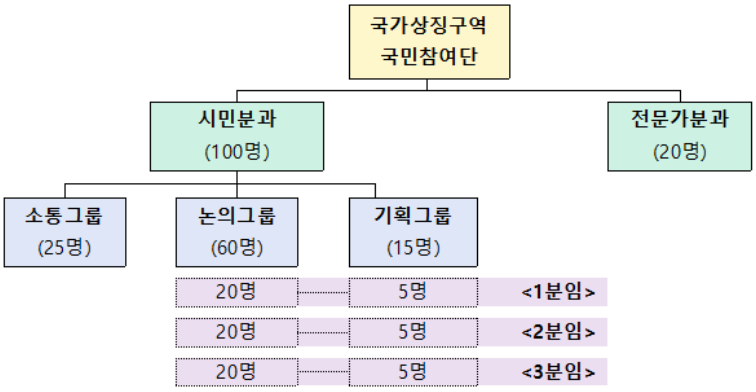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년 국가상징구역 국민참여단 운영 용역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 ㅇ (국가상징구역 국민참여단 구성) 시민분과 100명,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국민참여단 모집·홍보 및 구성(발대식 개최)
- ㅇ (국민참여단 운영) 국민참여단 운영계획 수립 및 국민참여단 프로그램 운영, 사전활동 실시, 단원 활동 관리 및 운영 전반
- ㅇ (국가상징구역 아이디어 공모전) 국민이 바라는 국가상징구역을 주제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 **국가상징구역 국민참여단 구성(안)**



자료: 「2025년 국가상징구역 국민참여단 운영 용역 제안요청서」를 재작성

국정과제 반영, 마스터플랜 일정에 따른 사전 국민의견 수렴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대통령세종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의 준공 시기가 2029년 이후로 예정되어 있으며, 사업 추진 당시인 2025년에는 건축설계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이전 단계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준공 시기와 홍보 시기 간 상당한 시차가 존재함에도 해당 홍보사업을 기본경비 예산으로 조기에 추진할 시급성 및 필요성이 크지 않아 보임.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기본경비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용역계약 집행을 지양하고, 향후에는 정책사업과 기관운영 경비를 명확히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등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사업: 사업 추진 경과를 반영한 예산 편성 필요 등

가. 개 요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사업은 국무회의 증가, 대통령세종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등 주요 국가시설에 대한 대테러 발생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창설된 세종경찰특공대의 업무·훈련 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7억 1,400만원 중 4억 8,200만원이 집행(집행률 67.5%)되고 2억 2,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000만원이 불용되었음.[4)]

[2025년도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714	714	-	-	714	482	223	10	2,560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첫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사업의 추진 경과를 고려하여 사업 일정을 수립하고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사업의 2025년과 2026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25년에는 기본설계를 완료한 후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2026년에는 상반기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연말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었음.

이에 따라 2025년에는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 2026년에는 실시설계비와 공사감리비가 각각 계상되어 있음.[5)6)]

---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2033-321)(시설사업국)

5) 2025년 예산편성 내역의 경우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는 사업의 긴급성 등 특별한 사유가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사업 예산 세부내역]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 총계: 7억 1,400만원 ○ **기본조사설계비(420-01)**: 2억 8,400만원 ○ **실시설계비(420-02): 4억원** ○ 시설부대비(420-05): 3,000만원	□ 총계: 25억 6,000만원 ○ **건설보상비(410-00): 20억 9,000만원** - 부지매입계약금 12% 반영 ○ **실시설계비(420-02): 2억 8,300만원** - 설계완료를 위한 잔여 사업비 전액 ○ **공사비(420-03): 1억원** - 공사발주를 위한 최소 소요 ○ **감리비(420-04): 5,000만원** ○ 시설부대비(420-05): 3,700만원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실제 사업 추진 경과를 보면, 2025년 9월과 10월에는 기본설계 적정성 검토를 이유로 기본설계가 중지되었음.[7] 이에 따라 당초 2025년에 착수할 예정이었던 실시설계는 2026년 하반기로, 2026년에 계획되었던 공사 착공은 2027년 상반기 이후로 각각 순연될 예정임.

없는 한 2가지 이상 비목의 동시계상을 지양' 하도록 규정한 예산편성지침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 278.

> □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는 사업의 긴급성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가지 이상 비목의 동시계상을 지양

6) 2026년에는 설계비와 함께 공사비도 포함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서는 '2026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사업추진의 시급성이 높은 경우 또는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설계비와 함께 공사비 반영'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 281.

> □ 토목공사 및 대규모 건축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타당성조사·기본조사설계, 실시설계, 토지보상 등 사업추진을 위한 단계적 절차가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공사비 반영
> ㅇ '25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사업추진의 시급성이 높은 경우 또는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설계비와 함께 공사비 반영

7) 건축 기본설계는 2025년 10월 7일, 전기 기본설계는 2025년 10월 27일, 교통영향평가는 2025년 9월 26일에 각각 중지되었음.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사업의 당초/변경 일정(안)]

<table>
<tr><th rowspan="2">시기</th><th colspan="4">2025년</th><th colspan="4">2026년</th><th colspan="4">2027년</th></tr>
<tr><th>3월</th><th>6월</th><th>9월</th><th>12월</th><th>3월</th><th>6월</th><th>9월</th><th>12월</th><th>3월</th><th>6월</th><th>9월</th><th>12월</th></tr>
<tr><td>당초</td><td colspan="2">기본설계</td><td colspan="2">총사업비 협의</td><td colspan="2">실시설계</td><td colspan="2">총사업비 협의</td><td colspan="2">공사발주
및 착공</td><td colspan="4">공사시행</td></tr>
<tr><td>변경</td><td colspan="5">기본설계(+설계적정성 검토)</td><td>총사업비
협의</td><td>실시설계</td><td>총사업비
협의</td><td colspan="2">공사발주
및 착공</td><td colspan="4">공사시행</td></tr>
</table>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본설계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2025년에는 설계비 2억 2,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026년에도 후속 절차의 순연으로 공사비와 감리비 등 관련 예산의 추가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임.

특히 변경된 사업 일정에서는 실시설계와 총사업비 협의 기간이 이전보다 1~2개월 단축되었는데, 실시설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사비의 과소 또는 과다 산정, 시공 과정에서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사업기간 연장 및 준공 이후 하자 발생 문제 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8)]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사업의 추진 경과를 고려하여 사업 일정을 수립하고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2025년도에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사업의 기본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시설계에 대한 선급금을 지급한 것은 선급금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향후 선급금 지급 시기에 주의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사업에서 2025년에는 기본설계 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협의가 진행됨에 따라 연말까지 기본설계가 완료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실시설계도 착수되지 못하였음.

그러나 2025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보면 실시설계비(420-02)로 편성된 예산 4억원 중 1억 7,600만원이 실시설계의 선급금으로 지급되었음.

8) 실시설계가 불완전할 경우 공사비의 과소 또는 과다산출, 시공 중 빈번한 설계변경, 준공 후 하자발생 등을 초래(「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 280).

[2025년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비목	2025년								2026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714	714	-	-	714	482	222	10	2,560
- 건설보상비(410-00)	-	-	-	-	-	-	-	-	2,090
- 기본조사설계비(420-01)	284	284	-	-	284	284	-	-	-
- 실시설계비(420-02)	**400**	**400**	**-**	**-**	**400**	**176**	**214**	**10**	**283**
- 공사비(420-03)	-	-	-	-	-	-	-	-	100
- 감리비(420-04)	-	-	-	-	-	-	-	-	50
- 시설부대비(420-05)	30	30	-	-	30	22	8	-	37
합 계	714	714			714	482	222	10	2,560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사업설명자료

이에 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예산상에는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구분하여 편성되어 있으나, 설계 계약 체결 시에는 업무 연속성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일괄 체결하였고, 2025년에는 기본설계비 잔여분 및 실시설계비 일부를 포함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2차수 계약을 체결하고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의 70% 범위에서 선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실시설계비 일부까지 선급금으로 집행하였다는 의견임.

[2025년 기준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사업 설계용역 계약 세부내용]

(단위: 백만원)

계약명	계약방식	계약상대방	계약일	계약기간	계약 금액	집행 금액	잔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수의계약	플로 건축사 사무소	2024.6.25	(당초) 2024.6.25. ~ 2025.6.19. (수정) 2024.6.25. ~ 2025.10.7. (용역중지)	820	438	382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그러나 선급금은 "자재 구입 또는 대여, 건설기계 대여 또는 건설근로자 고용 등" 공사 등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금전이고, 이 사업의 설계용역이 기본 및 실시설계의 통합 방식으로 계약되었다 하더라도 실시설계는 기본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실시설계에 대한 선급금은 실시설계가 실제 착수되는 시점에 지급하는 것이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선급금 지급 취지에 부합함.[9)]

기본설계도 완료되지 못한 상황에서 실시설계에 대한 선급금까지 미리 지급하는 것은 선급금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본설계 완료에 대한 검수 절차도 없이 다음 단계인 실시설계 선급금이 미리 지급되는 것은 계약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향후 선급금 지급 시기에 주의하여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음.

9)「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④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 구입 또는 대여, 건설기계 대여 또는 건설근로자 고용 등 하도급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수급인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3.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사업: 조속한 사업 내용 확정 필요

가. 개 요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및 국정운영 효율화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56억 5,900만원 중 3억 4,700만원이 집행(집행률 6.1%)되고 52억 2,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8,800만원이 불용되었음.[10][11]

[2025년도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4,520	4,520	1,139	-	5,659	347	5,224	88	24,000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 사업의 2025년도 추진 경과를 보면, 대통령세종집무실을 포함한 국가상징구역에 대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를 실시(9월~12월)하고, 12월 24일에 당선 업체와 마스터플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2026년에는 상반기에 마스터플랜 용역을 진행하는 한편, 1월부터 4월까지 설계공모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한 상황임.

---

1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2031-307)(시설사업국)

1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의2(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 설치)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2025년, 2026년 상반기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사업 주요 경과]

과업	일정	내용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공고('25.9.2) → 작품접수(11.20) → 국민참여투표(11.28)→ 1·2차 심사(12.1, 12.15)	○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등이 위치할 행복도시 S-1생활권(세종동) 일대 약 210만㎡에 해당하는 국가상징구역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및 용역 실시 - 마스터플랜 관리용역: 계약금 7억 3,300만원, 계약기간 '24.6.27 ~ '26.6.30 - 마스터플랜 용역: 계약금 10억원, 계약기간 '25.12.24 ~ '26.7.5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용역	'25.12.24 ~ '26.07.05 (용역 일시중지 중)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공모	공고('26.1.16) → 작품접수(4.8) → 1차 심사(4.13) → 2차 심사(4.24)	○ 대통령 세종집무실 창의적인 설계안 선정을 위해 건축설계공모 시행 - (설계비) 111억(당선작에 대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기본 및 실시설계권에 해당하는 금액) - (설계보상비) 1억(2위 4,000만원, 3위 3,000만원, 4위 2,000만원, 5위 1,000만원)

주)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용역"은 국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위해 6월에 일시 중지하였음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자료를 재작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2027년 중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에 착수하여 2029년 8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임.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사업 경과 및 향후 계획(안)]

○ 2022년 6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
○ 2022년 9월 ~ 2023년 12월 :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방안 기획 연구용역
○ 2023년 6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기본계획안 수립(행복청)
○ 2023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2025년 9월 ~ 12월: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 2025년 12월 ~ 2026년 7월(일시중지):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수립
○ 2026년 1월 ~ 4월: 설계공모
○ 2026년 7월 ~ : 설계 착수
○ (계획) 2027년 하반기 ~ **2029년 8월**: 공사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자료를 재작성

나. 검토의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사업이 계획된 일정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용역·건축설계 범위 및 총사업비 조정 등을 조속히 확정하고 사업 지연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업 공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사업의 설계용역 계약을 준비 중인데, 계획대로 2029년 8월 대통령이 입주하기 위해서는 2026년 하반기부터 약 3년 동안 설계와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함.

그러나 현재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건축설계의 범위, 총사업비 조정 등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함.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사업 향후 일정 및 사업 지연 우려 요소]

사업일정	사업내용	지연 우려 요소
2026년 1월 ~ 7월(일시중지)	마스터플랜	① 설계용역 이전에 도시계획 확정
2026년 7월 ~ 2027년 하반기	설계용역	② 설계 범위, 증축 사업 확정 ③ 기본·실시설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
2027년 하반기	총사업비 확정, 공사 발주 준비	④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⑤ 총사업비 조정 ⑥ 선행 부지조성 공사 ⑦ 인테리어 공사(추가시)
2027년 하반기 ~ 2029년 8월	공사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출 사업일정을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작성

우선,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경관계획, 공원·녹지계획, 보행 및 교통계획, 기반시설계획 등 세부 계획이 설계 이전에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현재 해당 용역이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과의 연계를 위해 일시중지 상황인데, 마스터플랜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가 진행될 경우 추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임.

다음으로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 단계에서는 건축면적·시설 규모 및 예정공사비 등 주요 설계 범위가 확정될 필요가 있음. 현재 이전 대상 시설과 공간 구성 등 “증축 사업”과 추가 공사비 등 설계 범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추가적인 시간 및 비용 소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한 설계 범위 확정이 필요함.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사업 설계공모 개요(일부)]

1.1 공모 목적
본 설계공모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상징하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해 창의적이고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사업 개요

항목	본 사업	**추가 증축 (향후 의사결정 시)**
대지위치	행정중심복합도시 S-1생활권내 일단의 대지 ([자료제공-1]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부지위치)	
대지면적	15만㎡	10만㎡
건축연면적	40,102㎡	93,342㎡
예정공사비(부가세포함)	**2,057억원**	**3,574억원**
예정설계비(부가세포함)	111억원	-
예정설계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용역계약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경우 향후 정책여건 변화에 따라 증축사업을 통해 추가시설이 건립될 수 있다.

자료: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지침서」(p. 4.)를 재작성

또한 상위 의사결정 등에 따라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전체 이전이 결정되어 “증축사업”이 일부 또는 전부가 사업에 반영될 경우, 공사비는 당초 2,057억원에서 증축부분 3,574억원을 더한 5,631억원 수준까지 증가하게 되는데, 늘어나는 공사비와 감리비 등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음.

특히 해당 사업은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공건축사업으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설계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12] 설계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설계도서 보완이 요구될 경우 당초 계획보다 상당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우려가 있음.

12)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1조(설계 검토)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물량을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불필요한 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의한 설계내용 검토(설계VE)를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하며, 건축사업의 경우 제57조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대한 반영여부를 포함한 실시설계의 내용에 대하여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기반구축 R&D사업의 경우 제57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특수설비 · 연구장비 부문) 및 조달청장(건축 부문)과 협의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이하 “설계의 경제성등”이라 한다)을 직접 검토하거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전문가가 검토하게 해야 한다.
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총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비목	코드	총사업비	1차 (2023년)	2차 (2024년)	3차 (2025년)	4차 (2026년)	5차 (2027년)	6차 (2028년)	7차 (2029년)
보상비	410-00	171,055	-	-	-	8,684	162,371	-	-
기본설계비	420-01	4,212	-	1,000	3,300	-	-	-	-
실시설계비	420-02	15,306	-	-	-	15,021	285	-	-
공사비	420-03	**205,657**	-	-	-	-	41,131	82,263	82,263
감리비	420-04	7,294	-	-	-	-	1,459	2,918	2,917
부대비	420-05	656	-	-	200	-	456	-	-
소계		**404,180**	-	1,000	3,500	23,705	205,702	85,181	85,180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증축 사업” 반영으로 인한 공사비의 증액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 관련 협의나 행정절차를 거치거나,[13] 국가 상징성과 혁신적인 공간 구현을 위해 추가적인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전체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사업이 계획된 일정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용역·건축설계 범위 및 총사업비 조정 등을 조속히 확정하고 사업 지연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업 공정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13)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타당성재조사의 요건)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물가인상분과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사업물량 또는 토지 등의 규모 증가로 총사업비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 대비 100분의 10 부터 100분의 20 까지의 범위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한 사업. 다만,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동조에 따른 대상규모로 증가하지 아니한 사업은 제외한다.

나.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한 사업이라 함은 총사업비 규모가 1,000억 원 미만인 경우 총사업비가 100분의 20 이상,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100분의 15 이상 증가한 사업을 말한다.

제49조의2(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49조제2항 각 호 및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 단서에 해당하여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재조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업의 경우 타당성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4.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과의 연계성 확보 필요

가. 개 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업무 효율성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국회의 상시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170억 5,700만원 중 3억 4,000만원이 집행(집행률 0.3%)되고 1,167억 1,700만원이 이월되었음.[14][15]

[2025년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35,000	35,000	82,057	±1,500	117,057	340	116,717	-	95,640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과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의 수립 대상지와 범위가 중첩되고 있으므로, 관계 기관은 두 마스터플랜 간 연계성과 정합성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 계획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은 국회세종의사당 건축 설계공모에 앞서 종합적 공간 계획의 기준과 체계를 마련하는 선행 사업으로서,[16] 부지 내 주요 건축물의 배치, 동선체계, 조경 및 외부공간 계획 등을 구체화하여 향후 건축설계공모 및 설계 발주의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함.

---

1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국회세종의사당 건립(2033-315)(시설사업국)

15) 「국회법」
제22조의4(국회세종의사당) ①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이하 “국회세종의사당“이라 한다)을 둔다.

16)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지침서」, p. 6.

국회사무처는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당선작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마스터플랜 구체화 용역을 추진 중임(2026년 8월 기준).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은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사업[17]에 따라 진행 중인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과 수립 대상지 및 범위가 중첩되고 있음.

구체적으로, 국회세종의사당 부지는 국가상징구역 내에 전부 포함되어 있고,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과업지시서에는 국회세종의사당 부지에 대한 공간구상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비교]

구분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추진주체	국회사무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모기간	2026.1.27. ~ 2026.5.6.	2025.9.2. ~ 2025.12.12.
용역기간	미정	2025.12.24. ~ 2026.7.5.(일시중지)
용역비	13억 3,800만원	10억원
비목	기본조사설계비(420-01)	일반연구비(260-01)
대상범위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 내부** 	**국가상징구역 전체** 
중점내용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 내 건축·배치계획 마련	국가상징구역 차원의 종합적인 도시계획 마련
홈페이지	https://assembly-sejong.kr/	https://sejong-compe.kr/ko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자료를 재작성

이에 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이 국가상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인 반면,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은 세종의사당 부지 내 건축물과 조경 등의 배치를 구체화하는 건축계획이므로 차이가 있다는 입장임.

1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2031-307)(시설사업국)

그러나 도시계획인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에서도 주요 건축물의 배치, 공간구조 등 건축계획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는 사항이며, 실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과업지시서에도 ‘국회세종의사당 건축설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주요 건축물의 배치, 도시관련 건축 등)을 제안’하거나 ‘국회세종의사당 주요 건축물과 배치 시 고려사항’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중 국회세종의사당 관련 계획 내용]

1.3 주요 과제

(4) 국회세종의사당 계획

- **국회세종의사당 부지에 대한 건축설계는 국회사무처가 별도 추진하므로 본 공모에서는 마스터플랜의 도시공간 구조와 시민공간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향후 국회세종의사당 건축설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주요 건축물의 배치, 도시관련 건축 등)을 제안**한다.

2.5 국회세종의사당 계획

(1)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 경계는 [그림2-2]와 같이 유지하되 절재로 등 일부 도로의 선형 변경이 필요할 경우 최소한의 경계 조정은 가능하다. 다만, 국회세종의사당의 부지면적 63.1만㎡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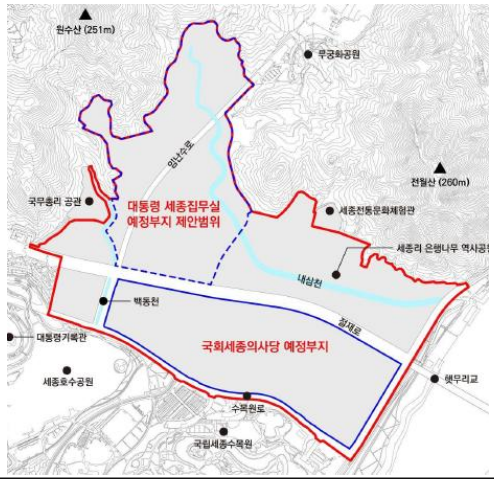
(2) 국회세종의사당은 대한민국 입법부의 대표 공간으로 국민주권의 공간이라는 상징적 측면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국민주권과 정의・평화・자유・번영의 헌법적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의 자긍심과 화합, 미래지향적 가치를 이상적으로 표현한 국회세종의사당으로 계획한다.

(3) 국회세종의사당 부지의 배치계획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주변 도시맥락을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4) [계획지침 2.3]에서 제시된 시민공간과 [계획지침 2.6]에서 제시한 녹지축 등과 연계하여 주요 시설 및 오픈스페이스 등을 배치한다.

(5) **국회세종의사당 주요 건축물과 배치 시 고려사항**은 [제공자료-9(국회의사당 시설계획)]를 참조한다.

(6) ‘국회세종의사당 설계공모(본 공모와 별도 시행 예정)‘ 결과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 부지내의 건물배치 및 매스계획 등과 부지 주변(경계)과 연계되는 도시계획 등은 국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도시계획 수립권자와 협의하여 수정・조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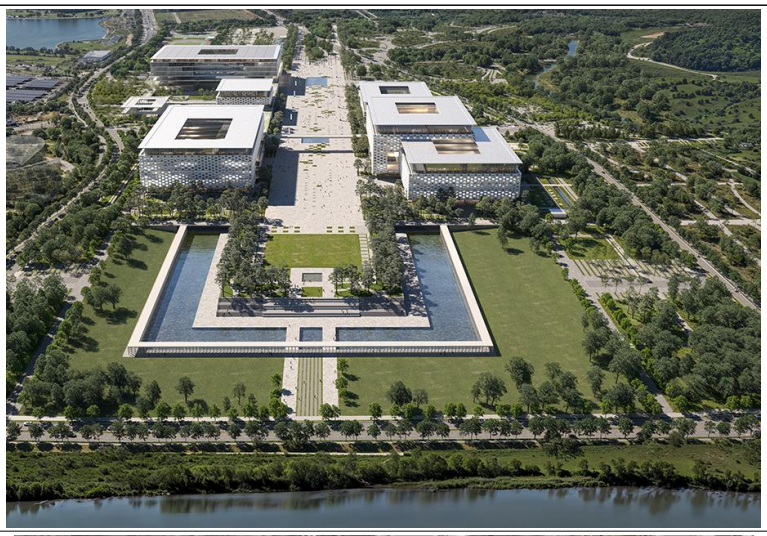


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지침서」p. 21~24.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의 구분 여부를 떠나 두 계획 간 역할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을 경우 국회세종의사당 조성과 관련하여 두 마스터플랜 간 연계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실제 현재 두 마스터플랜의 당선작을 비교하면 국회세종의사당의 배치계획과 조감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두 마스터플랜 간 충분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사업비 발생이나 사업 지연 등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음.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에 따른 국회세종의사당 조감도]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자료: 각 공모 홈페이지 참조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국회사무처는 각자 마스터플랜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두 마스터플랜 간 연계성과 정합성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협조하여 계획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18]

18) 이에 따라 국회사무처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가상징구역 내 주요 시설 간 연계성 확보 등을 위한 협의체를 2026년 5월 구성하여 운영 중임(세종의사당추진단장·행복청 차장).

【기　타】

5.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대해 시정요구 7건(중복 2건 포함)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시정 2건·주의 3건·제도개선 4건이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2	3	4	2	7
예비비	-	-	-	-	-	-	-
합계	-	-	2	3	4	2	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시정요구사항 7건에 대해 6건을 조치완료(조치율 85.7%)하고, 1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7	6	85.7	1
예비비	-	-	-	-
합계	7	6	85.7	1

국회가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면서 채택한 부대의견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회계연도 결산 관련 부대의견은 아래와 같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련 2025년도 예산안 등 부대의견]

구분	부대의견
2024회계연도 결산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사업이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필수적이므로, 설계예산 반영 등 사업 연속성 확보와 사업기간 준수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

새만금개발청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회계연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17억 7,900만원(19.3%)이 많은 109억 7,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900만원(0.7%)이 증가됨.[1)]

[2025회계연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8,892	8,892	10,894	2,002	9,194	9,194	10,973	1,779	79
총수입	8,892	8,892	10,894	2,002	9,194	9,194	10,973	1,779	79

문의 : 02-6788-5675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5회계연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171억 2,100만원(△15.2%)이 적은 956억 3,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23억 2,800만원(187.1%)이 증가됨.

[2025회계연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47,702	47,702	33,310	△14,392	112,759	112,759	95,638	△17,121	62,328
총지출	47,702	47,702	33,310	△14,392	112,759	112,759	95,638	△17,121	62,328

나.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91억 9,400만원으로, 135억 7,0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09억 7,300만원이 수납(수납률 80.9%)되고, 25억 9,7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5회계연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9,136	9,136	-	9,136	13,520	10,924	2,597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8	58	-	58	49	49	-	-
- 지역지원계정	58	58	-	58	49	49	-	-
합 계	9,194	9,194	-	9,194	13,570	10,973	2,597	-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139억 8,700만원으로, 956억 3,800만원이 집행(집행률 83.9%)되고 119억 8,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63억 6,7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112,759	112,759	1,228	-	-	113,987	95,638	11,982	6,36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	-	-	-	-	-	-
- 지역지원계정	-	-	-	-	-	-	-	-	-
합 계	112,759	112,759	1,228	-	-	113,987	95,638	11,982	6,367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5회계연도 말 기준 새만금개발청 자산은 전년 대비 57억 9,200만원이 증가된 1조 5,591억 9,900만원으로, 이는 금융자산이 28억 5,700만원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무형자산이 80억 7,300만원 증가되고 기타자산이 5억 7,600만원 증가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14억 4,300만원 감소된 15억 8,200만원으로 기타부채 15억 1,000만원의 감소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72억 3,500만원이 증가된 1조 5,576억 1,700만원임.

2025회계연도 새만금개발청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659억 8,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6억 4,200만원 증가되었으며, 재정운영결과는 794억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7,400만원 증가됨.

[2025회계연도 새만금개발청 재무제표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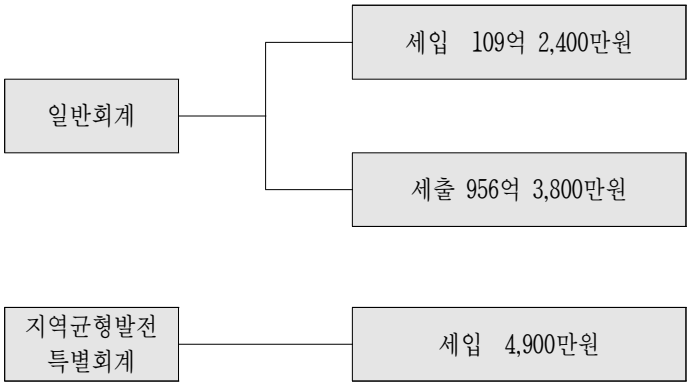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 (A)	2024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1,559,199	1,553,407	5,792	0.4
		금융자산	1,983	4,840	△2,857	△59.0
		유무형자산	1,555,259	1,547,186	8,073	0.5
		기타자산	1,957	1,381	576	41.7
	부 채		1,582	3,025	△1,443	△47.7
		차입부채	306	279	27	9.7
		충당부채	194	154	40	26.0
		기타부채	1,082	2,592	△1,510	△58.3
	순자산		1,557,617	1,550,382	7,235	0.5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65,983	61,341	4,642	7.6
	재정운영순원가		79,406	76,832	2,574	3.4
	재정운영결과		79,406	76,832	2,574	3.4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2025회계연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재정은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2개 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별 현황은 다음과 같음.

[2025회계연도 새만금개발청 재정흐름도]



주) 총계 기준
자료: 새만금개발청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새만금개발청은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치함에 따라 핵심 성장거점 육성, 성장기반 구축, 기업 맞춤형 투자환경 조성 등을 위해 2025년도 총 19개 세부사업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과 함께 지역간 연결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입주기업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였음.

2025년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입주기업의 경영악화에 따른 토지대여료 미수납 문제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새만금개발청은 미수납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음.

둘째, 새만금개발청은 국립새만금 간척박물관 사업비를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전용을 통해 집행하였으므로, 향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불필요한 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셋째, 새만금산단 기업성장센터 건립 사업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행정절차 지연과 부지 관련 소송이 발생하여 당초 계획 대비 사업 일정이 지연되었으므로, 새만금개발청은 향후 사업 추진 경과를 반영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입〉

1. 토지대여료: 입주기업 경영악화로 발생하는 미수납 문제 해소 필요

가. 개 요

‘토지대여료’는 새만금 장기임대용지 입주기업에 대해 부과하는 사용료 비목으로서, 징수결정액 39억 5,800만원 중 13억 9,100만원이 수납(수납률 35.1%)되고 미수납액 25억 6,800만원이 발생하였음.[2)]

[2025년도 토지대여료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토지대여료	1,868	1,868	3,958	1,391	2,568	-	35.1	1,498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장기임대용지 입주기업에 부과하는 국유재산 사용료는「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3)] 새만금산단 표준지공시지가

2) 일반회계-토지대여료(51-511)(운영지원과)

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세제 및 자금지원 등)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공유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에 임대료율(1%)과 국비비율(80%)을 고려하여 산정함.

토지대여료 =
새만금산단 표준지공시지가 × 면적 × 임대료율 1% × 국비비율 80%

나. 검토의견

입주기업의 경영악화에 따른 토지대여료 미수납 문제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새만금개발청은 미수납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음.

최근 토지대여료 결산 내역을 보면, 미수납액은 2022년 4억 200만원에서 2025년 25억 6,800만원으로 6배 이상 증가한 반면, 수납률은 같은 기간 74.0%에서 35.1%로 절반 이하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수납 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토지대여료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A)						
2022	1,720	1,720	1,720	1,545	1,143	66.5	**74.0**	**402**
2023	1,720	1,720	1,720	2,068	1,280	74.4	**61.9**	**788**
2024	1,728	1,728	1,728	3,871	1,362	78.8	**35.2**	**2,509**
2025	1,868	1,868	1,868	3,958	1,391	74.5	**35.1**	**2,568**

자료: 새만금개발청 사업설명자료를 재작성

미수납 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입주기업의 경영악화에 따른 자금 부족에 기인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파산 등으로 사실상 납부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확인됨. 또한 일부 기업의 경우 체납이 반복되거나 납부 시기가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등 임대료 수납의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음.

제41조(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등) ②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국공유 재산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감면하는 경우 그 사용료등은 해당 국공유 재산의 가액에 100분의 1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가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하고, 해당 국유재산의 사용료등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2025년 토지대여료 미수납 세부 내용]

(단위: 천원)

징수대상자(납부의무자)	업종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체납 사유	징수 방안	전년도 연체여부	
							2023	2024
A	신재생에너지(태양광)	1,669,709	-	1,669,709	파산	관할세무서 징수사무위임 예정	○	○
B	친환경 농업	326,280	-	326,280	파산	관할세무서 징수사무위임 예정	×	○
C	신재생에너지(태양광)	97,157	-	97,157	파산	관할세무서 징수사무위임 예정	○	○
D	신재생에너지(태양광)	110,233	-	110,233	기업 경영 악화	보증보험금 청구 예정	○	○
E	이차전지(배터리) 제조업	94,879	-	94,879	기업 경영 악화	업무 협의 및 독촉	×	×
F	전기자동차 제조업	149,990	88,720	61,270	기업 경영 악화	업무 협의 및 독촉	○	○
G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158,266	14,758	143,507	기업 경영 악화	보증보험금 청구 예정	×	○
H	금속구조물 가공·제조업	14,171	-	14,171	기업 경영 악화	보증보험금 징수 완료	○	○
I	친환경 유기농	18,095	13,312	4,783	기업 경영 악화	입주계약 해지(2025.12.18.)로 2026년 미수납분(4,783천원) 전액 감	○	○

자료: 새만금개발청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새만금 장기임대용지는 최대 100년간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연간 임대료를 토지가액의 1% 수준으로 책정하는 등 기업에 상당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4] 입주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해 임대료 체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새만금개발청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체납 문제에 대하여 보증보험증권 활

4)「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12조(사용 (임대) 료의 산정) ① 임대용지 연간 사용료는 법 제58조제4항, 영 제41조제2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한다. 다만, 사용료 산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며 지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재산정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 해당 임대용지의 재산가액에 100분의 1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
2. 국내기업: 해당 임대용지의 재산가액에 100분의 1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
3. 연구기관: 해당 임대용지의 재산가액에 100분의 1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

용,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징수사무 위임[5] 등 적극적인 채권 확보 및 징수 조치를 강구하는 등 미수납 문제를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음.

5)「국유재산법」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변상금 및 제1항에 따른 연체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0조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중앙관서의 장(일반재산의 경우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 ·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직접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등은 그 사무를 집행할 때 위임한 중앙관서의 장의 감독을 받는다.
2.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 ·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등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세 출〉

2. 국립새만금 간척박물관 운영 사업: 예산 전용을 통한 간척박물관 사업비 집행을 지양할 필요

가. 개 요

‘국립새만금 간척박물관 운영’ 사업은 국립새만금 간척박물관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9억 4,4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되었음.[6)]

[2025년도 국립새만금 간척박물관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립새만금 간척박물관 운영	3,224	3,224	-	720	3,944	3,944	-	-	5,410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 사업의 2025년 결산 세부내역을 보면, 당초 예산액 32억 2,400만원과 전용(증)액 7억 2,000만원은 모두 기관운영출연금(350-01) 비목으로 편성되어 있었고, 사업출연금(350-02)의 편성 또는 집행은 전년도 이월액 2,800만원을 제외하고는 없음.

6) 일반회계-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운영(5557-392)(개발사업국)

[2025년도 국립새만금 간척박물관 운영 사업 결산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 운영	3,224	3,224	-	720	3,944	3,944 [3,765]	3,944	3,944 [3,737]	-	- [207]	5,410
- 기관운영출연금 (350-01)	3,224	3,224	-	720	3,944	3,944 [3,737]	3,944	3,944 [3,737]	-	- [207]	3,885
- 사업출연금 (350-02)	-	-	- [28]	-	-	- [28]	-	-	-	-	1,525
합 계	3,224	3,224	-	720	3,944	3,944 [3,765]	3,944	3,944 [3,737]	-	- [207]	5,410

자료: 새만금개발청 사업설명자료

나. 검토의견

새만금개발청은 국립새만금 간척박물관 사업비를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전용을 통해 집행하였으므로, 향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불필요한 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새만금개발청은 국립새만금 간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함)의 전시·유물·교육 등 박물관 사업 추진을 위하여, 새만금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지원 사업[7]의 공사비 일부를 전용하여 증액된 기관운영출연금 3억 9,000만원을 재원으로 관련 사업비를 집행하였음.

[2025년도 국립새만금 간척박물관 운영 사업 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전용날짜	~에서		금액	~으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비목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비목
(2025.4.17.)	새만금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지원 (5557-418)	공사비 (420-03)	390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 운영(5557-392)	기관운영 출연금 (350-01)
(2025.9.25.)			330		

자료: 새만금개발청

7) 일반회계- 새만금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지원(5557-418)(개발사업국)

이에 따라 2025년 박물관 사업 추진을 위해 기관운영출연금에서 집행된 금액은 총 6억 4,500만원임.

[2025년 국립새만금 간척박물관 사업비 조달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목적	재원	금액
전시·유물·교육 등 박물관 기능유지 및 평가	새만금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지원 사업 공사비 전용	390
	기관운영출연금에서 집행	255
계		645

자료: 새만금개발청 자료를 재작성

그러나 전시·유물·교육 등 박물관의 고유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기관 운영을 위한 일반 경비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기관운영출연금(350-01)이 아닌 사업출연금(350-02)으로 편성·집행하는 것이 적절함. 실제로 해당 비용은 2024년 및 2026년도 예산에서는 사업출연금 비목으로 편성되어 있음.

[2023~2025년 국립새만금 간척박물관 실적]

구분	전시	교육·체험	기타
2023	· 개관(2023.8.) 전 사전개방(2023.7.)	· 제1회 전국 어린이 글짓기 대회 개최	· 제1종 전문박물관 등록 · 무장애인증(BF) 인증
2024	· 개관 1주년 특별전(멋진 신세계) 개최 · 기획전(땅, 쌀, 삶) 개최	·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교육부) · 제2회 전국 어린이 글짓기 대회 개최	· 조선하천조사연보 등 213건 504점 구입 · 간척지 및 민속문화 현지조사 및 자료확보
2025	· 기획전(뉴욕! 물 위에 쌓은 꿈의 도시) 개최	· 모바일 자율체험 콘텐츠 개발 및 지역아동센터 대상 프로그램 운영 · 제3회 전국 어린이 글짓기 대회 개최	· 소장자료 창해국팔도대총도 등 유물 보존처리 · 환경정화활동 2회 · 소장품 DB등록 및 대국민공개 확대(e-뮤지엄)

자료: 새만금개발청

[2026년도 국립새만금 간척박물관 운영 사업 예산 세부내역]

예산	산출내역
54억 1,000만원	○ 기관운영출연금(350-01) 38억 8,500만원 가. 인건비 22억 3,100만원 · 임금 18억 2,400만원(34명, 12개월), 연가보상비 1,700만원, 성과급 5,614만원, 법정부담금 등 3억 3,100만원 나. 경상비 16억 5,400만원 ·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제세, 임차료, 유류비 등 **○ 사업출연금(350-02) 15억 2,500만원** **· 전시운영사업비, 유물관리사업비, 교육운영사업비 등**

자료: 새만금개발청 사업설명자료

이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평가를 위한 예산 편성 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박물관 사업[8]을 위한 사업출연금 예산을 편성 단계에서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이후 기관운영출연금 예산을 증액 전용하여 집행한 것으로서, 예산의 목적과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비목 편성 및 집행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새만금개발청은 박물관의 전시·유물·교육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출연금 비목으로 적정하게 편성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불필요한 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8) 예를 들면, 2025년은 박물관이「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예산안 편성 시점부터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6조(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후 3년이 지난 국 ·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새만금산단 기업성장센터 건립 사업: 사업 추진경과를 고려한 적정 예산 편성 검토

가. 개 요

‘새만금산단 기업성장센터 건립’ 사업은 이차전지 밸류체인 형성을 위해 소규모 소재부품 기업을 대상으로 임대형 생산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4억 9,0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되었음.[9)]

[2025년도 새만금산단 기업성장센터 건립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새만금산단 기업성장센터 건립	490	490	-	-	490	490	-	-	1,700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새만금산단 기업성장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총사업비 320억원의 중소기업 대상 임대형 생산시설로서, 국가가 사업시행주체(군산시)에게 160억원(50%)을 지원하려는 것임.

[새만금산단 기업성장센터 개요]

□ (개요) 이차전지 밸류체인 형성을 위해 임대형 생산공간을 조성하여 소규모 소재부품 기업대상 공간 지원 및 비용 부담 감경 추진
- 사업근거: 국정과제 38*, 새만금특별법 제35조(새만금청장의 업무), 제45조의2(자금지원 등), 제52조의2(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투자여건 개선, 인프라 지원 등) 통해 민간투자 촉진
- 시행주체: 군산시(자치단체자본보조)
- 사업기간: 2024~2027년
- 총사업비: 320억원(국비: 160억원, 지방비: 부지매입비 포함 160억원)
  * 부지비 58억원, 설계비 11억원, 공사비 등 251억원

9) 일반회계-새만금산단 기업성장센터 건립(5557-405)(개발전략국)

□ (주요시설) 부지 20,000㎡, 건폐율 30%(6,000㎡), 연면적 18,000㎡*
 * 공장 전용면적 11,200㎡(63실), 근생 등 지원시설면적 6,300㎡, 기타 공용면적 500㎡
 - 운영: 중소기업 대상 임대형 생산시설(63개 실, 평균면적 177㎡)제공, 근린생활시설 및 스포츠센터 등 조성으로 산단 내 생활 인프라 확보

자료: 새만금개발청 사업설명자료

이 사업의 2024년도 예산은 전액 불용되었고, 2025년도 예산은 보조기관에서 전액 이월 처리하여 현재까지는 실집행 실적이 없는 상태임.

[2024년, 2025년 새만금산단 기업성장센터 실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 · 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B)			
2024	200	200	-	-	-	-	-	-	-	-	-	0.0
2025	490	490	490	490	-	490	-	-	-	490	-	0.0

자료: 새만금개발청 사업설명자료

나. 검토의견

새만금산단 기업성장센터 건립 사업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행정절차 지연과 부지 관련 소송이 발생하여 당초 계획 대비 사업 일정이 지연되었으므로, 새만금개발청은 향후 사업 추진 경과를 반영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새만금산단 기업성장센터 건립 사업은 2023년 7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2024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었음.

그러나 2024년 7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사업 추진이 중단되었고, 이후 2025년 4월 해당 심사를 통과하기까지 약 9개월간 사업이 지연되었음. 또한 군산시와 민간사업시행자(자동차수출복합센터) 간 사업부지 관련 소송이 2025년 2월부터 2026년 4월(대법원 기각 판결로 최종 분쟁 종결)까지 약 14개월간 진행되었음.[10)]

10) 민간사업자 실시협약 존속확인 청구의소 : (원고) 군산자동차무역센터, (피고) 군산시
 * (선고) 1심-2025.5월, 2심-2025.11월, 3심-2026.4월.

이와 같은 사유로 2025년도 예산 4억 9,000만원은 보조기관에서 전액 이월 처리하였고, 기업성장센터 설계가 개시된 2026년 4월 이후부터 집행이 이루어지는 등 사업 지연이 발생하는 상황임.

[새만금산단 기업성장센터 사업 추진 경과]

○ 2023년 7월: 새만금 국가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 2023년 12월: 이차전지 분야 9조 3천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달성(12월말 기준) ○ 2024년 7월: 행안부 중앙 지방재정투자심사 제출(결과: 재검토) ○ 2024년 8월: 기업성장센터 운영방안 등 연구용역 추진(군산시) ○ 2025년 4월: 행안부 중앙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 및 연구용역 완료 ○ 2025년 9월: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업계획 검토 ○ 2025년 10월: 지방건축위원회 공공건축 심의 ○ 2025년 11월 ~ 2026년 1월: 설계용역 발주 및 원가심사 ○ 2026년 2월 ~ 3월: 설계공모 및 설계업체 선정 ○ 2026년 4월 8일: 설계 계약 체결 및 기본 및 실시설계 개시

자료: 새만금개발청 자료를 재작성

새만금개발청은 2026년 8월까지 3~4개월 동안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같은 해 발주 준비를 거쳐 2026년 11월에 착공이 가능하므로, 2025년 이월된 예산과 2026년도 예산(잔여설계비와 2개월분 공사비)은 연내 집행 가능하다는 입장임.

[2026년도 새만금산단 기업성장센터 사업 예산 세부내역]

예산	산출내역
자치단체 자본보조 (330-03) 17억원	○ **설계비 2억원**: 설계비 국비 지원액 6억 9,000만원* - 2025년 설계비 4억 9,000만원 * 건축비 234억원 × 2종(공장 등) 상급시설 기준 건축설계 대가요율** 4.8% × 국비 지원 61%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부 고시) ○ **공사비 15억원**: 국비 지원액 151.6억원(21개월) 중 2개월분

자료: 새만금개발청 사업설명자료

[새만금산단 기업성장센터 사업 일정 계획(안)]

시기	2025				2026				2027			
	3	6	9	12	3	6	9	12	3	6	9	12
구분	사전행정절차 추진				설계공모 및 계약		기본 및 실시설계		조달발주 및 계약		공사 착공 및 기초 공사	

자료: 새만금개발청

그러나 새만금개발청이 공고한 설계공모의 내용 및 계약 조건에서 설계 기간이 6개월로 설정되어 있으며, 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 등 전 분야에 대한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관련 설계까지 수행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새만금개발청이 제시한 3~4개월의 설계 일정에 대한 달성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임.

[새만금산단 기업성장센터 설계공모 내용(일부)]

○ 용역범위
  · 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건축, 토목, 조경, 기계, 인테리어,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포함)
  · 예비인증: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 설계용역비: 12억 9,667만원
  · 예정공사비: 273억 7,000만원
○ 설계기간: 착수일부터 240일(**6개월**)

자료:「군산시 공고 제2026-519호」, 설계공모(제안공모) 공고 일부

또한 해당 사업은 공사비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설계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함.[11] 이 과정에서 설계도서 보완이나 사업 규모 조정 등이 요구될 경우 당초 계획보다 기간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아울러 현재 사업비는 설계용역비가 당초 6억 9,000만원에서 12억 9,700만원으로 증가하였고, 공사비 역시 234억원에서 273억 7,000만원으로 증가한 상태임. 이에 대한 사업 규모와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결과적으로 새만금산단 기업성장센터 건립 사업은 지방재정투자심사 지연과 부지 관련 소송으로 2025년 결산 기준 실집행실적이 없고, 설계 및 발주 절차 순연과 관련 예산의 불용 또는 이월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새만금개발청은 향후 실제 사업 추진 경과와 집행 가능성을 반영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11)「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이하 "설계의 경제성등"이라 한다)을 직접 검토하거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전문가가 검토하게 해야 한다.
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기　타】

4.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새만금개발청에 대해 시정요구 6건(중복 1건 포함)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주의 3건·제도개선 4건이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	3	4	1	6
예비비	-	-	-	-	-	-	-
합계	-	-	-	3	4	1	6

새만금개발청은 시정요구사항 6건에 대해 5건을 조치완료(조치율 83.3%)하고 1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6	5	83.3	1
예비비	-	-	-	-
합계	6	5	83.3	1

나. 검토의견

새만금 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지원 사업[12]에 대하여 국회는 2024년 결산 당시 사업의 추가 지연을 방지하고 불용액 발생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2025년 결산 결과 이월액과 불용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 공정 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보임.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산단 공동 ‘방류관로’ 건설사업의 경우, 새만금 인근 어민단체의 반대로 사업 추진에 일부 차질이 발생하였으나, 이후 어민 상생협의회 협의를 거쳐 관련 민원이 해소됨에 따라 착공이 이루어졌음.

[새만금 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지원 사업 시정요구 조치결과]

구분	내용
시정요구명	(3)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수준)	ㅇ 새만금개발청은 2026년 상반기 입주예정인 이차전지 기업의 관로 통수에 지장이 없도록 새만금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지원 사업의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등 철저한 사업관리를 할 것(제도개선) ㅇ 새만금개발청은 지역주민 의견수렴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한 결과, 설계용역이 중단되어 예산의 65% 이상이 불용 처리되는 등 졸속 추진을 담당한 관련자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주의) ㅇ 새만금개발청은 인근 어민의 강한 반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지역주민 의견수렴 없이 4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추진 결과, 65% 이상 불용 처리되는 비효율을 발생시킨 바,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이전에 주민의견 수렴 및 갈등 조정 과정을 의무화할 것(제도개선) ㅇ 새만금개발청은 용·폐수 관리 구축이 기업 가동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사업 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어민단체와 합의된 상생방안을 성실히 이행하여 갈등으로 인한 추가 지연을 방지할 것(제도개선)
조치상황	조치중(조치예정일: 2026년 12월 31일)
조치결과	ㅇ 새만금산단 공동 방류관로 건설사업은 새만금지역 인근 어민단체의 반대로 인해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음 ㅇ 현재 우리청은 어민 상생협의회를 통한 실질적인 소통을 거쳐 공사를 착공(2025.6월)하였으며, 입주기업의 원만한 공장가동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사업추진과 어민협상을 병행 중으로, 어민들도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동의(2025.5월)하였으며 어민측 요구사항은 상생협의회를 통해 적극 논의중 ㅇ 사업담당자 주의 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실시(2025.12.24.)

12) 일반회계-새만금 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지원(5557-418)

이 과정에서 방류관로 건설사업은 착공 시기가 당초 2025년 1월에서 실제 6월로 지연됨에 따라 일부 예산이 이월되었음.[13)]

한편, ‘용수관로’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수행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착공 시기를 당초 2026년 상반기에서 2028년 하반기로 2년 이상 연기함에 따라 관련 예산이 전액 불용 처리되었음.

[용수관로 및 공동관로 건설사업 연도별 결산내역(2024년 및 2025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연도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방류관로	2024	4,000	4,000	-	-	4,000	693	4,000	693	388	2,919
	2025	23,365	23,365	388	720	23,033	9,204	22,645	8,878	**11,512**	**2,317**
용수관로	2024	700	700	-	-	700	369	700	369	192	139
	2025	2,174	2,174	192	-	2,366	192	2,174	-	-	**2,174**

자료: 새만금개발청

이에 따라 2025년 결산 기준 불용액과 이월액은 시정 요구가 채택된 2024년 결산보다 오히려 증가하였으므로, 새만금개발청은 향후 적정 예산 편성 및 사업 공정 관리에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음.

[새만금 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지원 사업 연도별 결산내역(2024년 및 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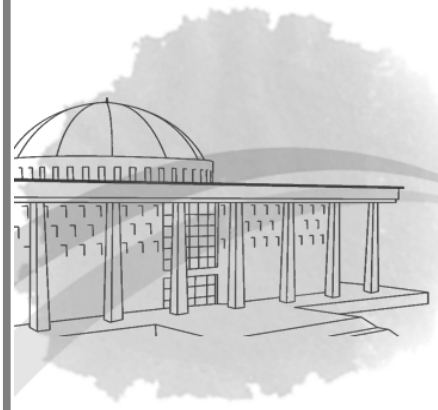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4	4,700	4,700	-	-	4,700	1,062	22.6	22.6	**580**	**3,058**
2025	25,539	25,539	580	△720	25,399	9,396	35.8	37.0	**11,512**	**4,491**

자료: 새만금개발청 사업설명자료

13) 2025년 방류관로 건설사업 불용사유: 방류관로 낙찰차액(22억 1,400만원), 방류관로 집행잔액(1억 300만원)

성평등가족위원회



성평등가족부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회계연도 성평등가족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1,045억 5,700만원(165.8%)이 많은 1,676억 2,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10억 4,100만원(43.8%)이 증가됨.[1)]

[2025회계연도 성평등가족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38,156	38,156	48,935	10,779	33,322	33,322	93,004	59,682	44,069
기 금	26,831	26,831	67,653	40,822	29,750	29,750	74,625	44,875	6,972
총수입	64,987	64,987	116,588	51,601	63,072	63,072	167,629	104,557	51,041

문의 : 02-6788-5692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5회계연도 성평등가족부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84억 7,600만원(△0.5%)이 적은 1조 7,309억 4,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70억 1,700만원(4.7%)이 증가함.

[2025회계연도 성평등가족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771,466	771,466	763,065	△8,401	805,911	807,001	800,322	△6,679	37,257
기 금	914,620	914,620	890,861	△23,759	932,418	932,418	930,621	△1,797	39,760
총지출	1,686,086	1,686,086	1,653,926	△32,160	1,738,329	1,739,419	1,730,943	△8,476	77,017

나.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성평등가족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333억 2,200만원으로, 1,467억 7,5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930억 400만원이 수납(수납률 63.4%)되고, 537억 4,6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2,5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성평등가족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32,942	32,942	32,942	32,942	137,700	85,354	52,322	2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80	380	380	380	9,075	7,650	1,424	-
- 지역지원계정	380	380	380	380	8,751	7,327	1,424	-
- 지역자율계정	-	-	-	-	324	324	-	-
합 계	33,322	33,322	33,322	33,322	146,775	93,004	53,746	25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성평등가족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8,103억 3,900만원으로, 8,003억 2,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8%)되고 2,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99억 8,9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성평등가족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714,248	715,338	2,761	±4,459	-	718,676 (고용부 577이체 포함)	708,933	7	9,73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91,663	91,663	-	-	-	91,663	91,389	21	253
- 지역자율계정	3,950	3,950	-	-	-	3,950	3,950	-	-
- 지역지원계정	87,713	87,713	-	-	-	87,713	87,439	21	253
합 계	805,911	807,001	2,761	-	-	810,339 (고용부 577이체 포함)	800,322	28	9,989

주) 총계 기준

다. 기금 결산

2025회계연도 성평등가족부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1조 123억 9,400만원으로, 1조 5,321억 8,4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조 5,011억 8,600만원이 수납(수납률 98.0%)되고, 307억 7,500만원은 미수납되고 2억 2,3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성평등가족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				
양성평등기금	841,022	841,022	1,266,938	1,246,986	19,945	8
청소년육성기금	171,372	171,372	265,246	254,200	10,831	216
합 계	1,012,394	1,012,394	1,532,184	1,501,186	30,775	223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성평등가족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1조 130억 7,400만원으로, 1조 1,060억 2,000만원이 지출(집행률 109.2%)되고 25억 7,8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성평등가족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양성평등기금	841,022	841,022	680	841,702	923,554	-	1,081
청소년육성기금	171,372	171,372	-	171,372	182,466	-	1,497
합 계	1,012,394	1,012,394	680	1,013,074	1,106,020	-	2,578

주) 여유자금운용 순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5회계연도 말 기준 성평등가족부 자산은 전년 대비 625억 5,900만원이 증가된 4,121억 9,600만원으로, 이는 기타자산이 27억 5,100만원 감소하였으나, 금융자산과 유·무형자산이 각각 609억 7,100만원, 43억 3,700만원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37억 2,400만원 감소된 549억 6,500만원으로 차입부채 37억 2,400만원 감소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662억 8,300만원 증가된 3,572억 3,100만원임.

2025회계연도 성평등가족부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1조 6,354억 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93억 4,100만원 증가되었으며, 재정운영결과는 6,490억 8,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5억 6,800만원 감소됨.

[2025회계연도 성평등가족부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 (A)	2024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412,196	349,637	62,559	17.9
		금융자산	217,584	156,613	60,971	38.9
		유·무형자산	189,146	184,809	4,337	2.3
		기타자산	5,465	8,216	△2,751	△33.5
	부 채		54,965	58,689	△3,724	△6.3
		차입부채	54,964	58,688	△3,724	△6.3
		충당부채	-	-	-	-
		기타부채	1	1	-	-
	순자산		357,231	290,948	66,283	22.8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1,635,407	1,556,066	79,341	5.1
	재정운영순원가		1,536,373	1,524,785	11,588	0.8
	재정운영결과		649,087	659,655	△10,568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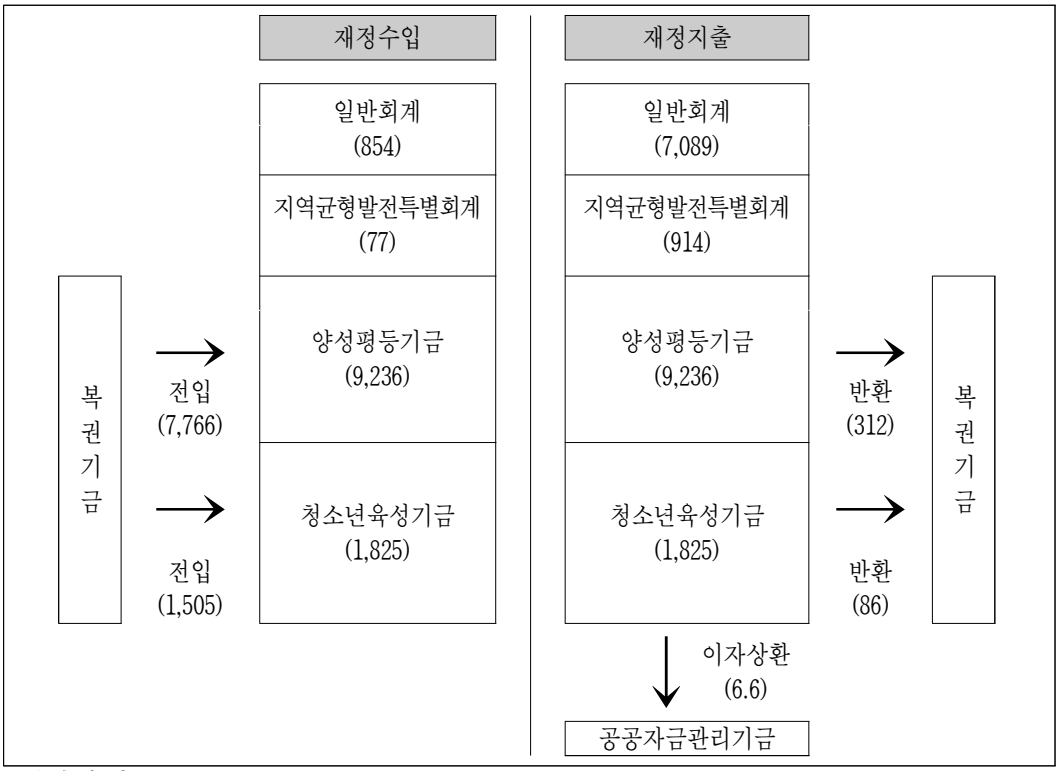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2025회계연도 성평등가족부 소관 재정은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개 회계와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2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2025년 회계·기금 간 거래는 없었음. 기금 간 거래에서 양성평등기금은 복권기금으로부터 7,766억원을 전입받고 312억원을 반환하였으며, 청소년육성기금은 복권기금으로부터 1,505억원을 전입받고 86억원을 반환하였음. 아울러 청소년육성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를 6억 6,000만원을 상환함.

[2025회계연도 성평등가족부 재정흐름도]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 기반 및 고용평등 강화,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다양한 가족 대상 서비스 확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주요 목표로 하여, 6개의 프로그램, 63개의 세부사업에서 아이돌봄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예산을 집행하였음.

2025년도 성평등가족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신청률은 상승하고 있으나 실제 바우처 이용률과 실집행률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성평등가족부는 성과관리 목표를 이용성과 중심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둘째,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신청가구와 매칭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기가구와 평균 대기일수도 증가하고 있고,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이수자가 실제 활동인력으로 전환되는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성평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확보·유지 및 지역별 서비스 연계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영아종일제는 전체 돌봄수당에 비해 실집행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수요 특성과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집행관리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셋째,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사업은 사업출연금의 실집행률이 낮고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초기 집행실적도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성평등가족부는 실제 수요를 재점검하여 사업출연금 편성 기준과 집행관리 방식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에 따라 회수대상 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청구·회수·강제징수 등 회수관리 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양육비구상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기준도 점검할 필요가 있음.

넷째, 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은 직업교육훈련 과정의 유관취업률이 50% 내외에 머무르고 있어 성평등가족부는 훈련과 취업 분야 간 연계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새일여성인턴은 인턴 종료 후 취업률과 6개월 및 12개월 고용유지율 간에 차이가 나타나므로, 장기 고용유지 성과를 중심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사업은 아동양육비 부정수급 환수결정금액이 증가하는 반면 환수비율은 하락하고 있으므로, 성평등가족부는 부정수급 환수결정분에 대한 환수관리와 수급자격 변동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기타경상이전수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의 신속한 수납 및 세입추계 보완 필요

가. 개 요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 정산잔액 반환금 등으로 구성되는 세입·수입 과목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청소년육성기금·양성평등기금의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징수결정액 2,241억 800만원 중 1,464억 2,300만원이 수납(수납률 65.3%)되었고, 774억 6,9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2억 1,600만원이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5년도 회계·기금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계획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일반회계	30,000	30,000	127,975	78,122	49,852	-	61.0	31,75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380	380	8,196	6,908	1,288	-	84.3	3,873
청소년육성 기금	6,397	6,397	11,992	4,446	7,330	216	37.1	6,601
양성평등 기금	17,647	17,647	75,945	56,946	18,999	-	75.0	29,366
합계	54,424	54,424	224,108	146,422	77,469	216	65.3	71,590

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자율계정 및 지역지원계정 합산 기준

나. 검토의견

첫째, 성평등가족부의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액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성평등가족부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액 774억 6,900만원 중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미수납액은 748억 6,700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96.6%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2024년도 지자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미수납액만 697억 9,300만원으로, 미수납액의 93.2%가 직전연도 보조사업 정산잔액 반납 지연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2025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납부자(단체)	발생내역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지자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서울특별시 등 17개 시·도	2010~2023년까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1,144	46,070	5,074	-
		2024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65,111	95,318	69,793	-
		소계	216,255	141,388	74,867	-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민간단체 등	2005~2023년까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581	3,762	2,603	216
		2024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272	1,272	-	-
		소계	7,853	5,034	2,603	216
합계			224,108	146,422	77,469	216

자료: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는 국고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기타경상이전수입이 발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일정 등에 따라 반납 시기가 지연될 수 있으며, 사업 담당자 교육, 시도 국장회의 및 간부회의 등 점검회의를 통해 수납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이미 교부된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을 정산 후 반환받는 성격의 수입이므로, 징수결정 이후 실제 수납이 지연될 경우 보조사업 정산관리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음. 특히 지자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2010년 발생분부터, 민간단체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2005년 발생분부터 미수납액이 남아 있어 일부 미수납액은 발생 후 장기간 경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성평등가족부는 보조사업 정산

잔액의 반납 지연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장기 미수납액 회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최근 3년간 예산액 대비 수납액의 괴리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성평등가족부는 국고보조사업 규모와 정산 예정액 등을 반영하는 등 세입추계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국고보조사업 집행 및 정산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이므로 사전에 정확한 규모를 추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2023~2025년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이 180.0%, 260.4%, 411.8%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예산액 대비 수납액 비율도 93.3%, 175.7%, 269.0%로 증가하고 있음.

[2023~2025년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B/A)	예산액 대비 수납액(C/A)
2023	45,681	82,218	42,625	180.0	93.3
2024	56,293	146,599	98,906	260.4	175.7
2025	54,424	224,108	146,422	411.8	269.0

자료: 성평등가족부

이에 대해 성평등가족부는 2023~2025년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액은 최근 3개년의 평균 수납액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2023년 이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정산 규모가 증가하면서 예산액 대비 수납액의 괴리가 확대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최근 3년간 예산액·계획액 대비 수납액이 모두 증가하고 있어, 과년도 수납 실적만으로는 해당 수입의 발생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성평등가족부는 기타경상이전수입 세입추계 시 과년도 수납액 평균에만 의존하기보다, 국고보조사업 규모와 정산 예정액 등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세입추계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일반회계】

〈세 출〉

2. 성별영향평가 운영: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관리 및 특정 성별영향평가 환류체계 강화 필요

가. 개 요

‘성별영향평가 운영’ 사업은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 및 특정성별영향평가 운영 등을 통해 정책 및 예산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5억 2,900만원 중 34억 5,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8%)되고, 7,700만원이 불용되었음.[2)]

[2025년도 성별영향평가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성인지정책 분석평가 운영	3,940	3,940	-	△11	3,940	3,839	-	101	3,821
성별영향평가 운영	3,529	3,529	-	-	3,529	3,452	-	77	3,580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첫째, 성별영향평가 운영 사업은 개선계획 수립 이후 실제 이행완료로 이어지는 비율이 50%대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성평등가족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취지를 고려하여 정책개선과제의 이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성별영향평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및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중앙행정기

2) 일반회계-성인지정책 분석평가 운영(1231-321)(성평등정책실)

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계획·사업 등 주요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임.[3)4)]

성별영향평가는 각 기관이 법령·계획·사업 등 대상정책에 대해 성별에 따른 영향과 개선 필요성을 분석한 평가서를 작성하고, 성평등가족부 또는 해당 기관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개선의견이 도출되는 방식으로 운영됨. 개선의견이 제시되면 해당 정책 소관기관이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성평등가족부는 개선계획 및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는 2022년 2만 7,109건, 2023년 2만 7,843건, 2024년 2만 6,468건으로 매년 2만 6천건 이상임. 이 중 개선계획 수립과제는 2022년 8,192건, 2023년 7,024건, 2024년 6,986건이며, 개선계획 대비 이행률은 2022년 49.7%, 2023년 53.9%, 2024년 57.4%로 50%대 수준임.

[최근 3년간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정책개선 현황]

(단위: 건, %)

구분	대상과제	개선계획 수립과제(A)	개선계획 이행완료과제(B)	개선계획 대비 이행률(B/A)
2022년	27,109	8,192	4,074	49.7
2023년	27,843	7,024	3,789	53.9
2024년	26,468	6,986	4,009	57.4

주 1) 대상과제: 성별영향평가 대상인 ‘법령의 제·개정안, 3년 이상 주기의 법정 계획, 중앙 및 지방의 주요 사업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통해 제작하는 홍보물’ 중 성별영향평가(GIA)시스템에 관리번호로 등록된 모든 과제
2) 개선계획 수립과제: 성별영향평가검토의견 통보 결과, 자체개선안 동의 과제와 개선의견을 수용한 과제
3) 개선과제(=이행완료과제): 개선계획 수립과제 중에서 개선이 이루어진 과제를 의미
자료: 성평등가족부

3)「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성별영향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별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4)「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성별영향평가의 성과는 평가 실시 건수나 개선계획 수립 건수뿐만 아니라, 개선계획이 실제 정책개선으로 이행되었는지를 중심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2024년 기관유형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현황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개선 이행률은 83.7%인 반면, 광역자치단체 55.2%, 기초자치단체 56.9%, 시・도교육청 59.0%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음.

[2024년 기관유형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현황]

(단위: 건, %)

구분	추진과제[5]	개선계획 수립과제 (A)	개선과제 (B)	개선계획 대비 이행률 (B/A)
전체	19,314	6,986	4,009	57.4
중앙행정기관	1,813	178	149	83.7
광역자치단체	2,080	1,087	600	55.2
기초자치단체	14,991	5,565	3,168	56.9
시·도교육청	430	156	92	59.0

주) 추진과제: 대상과제에서 기타과제(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 통보 및 법령이나 정책이 중단된 과제)를 제외한 과제
자료: 성평등가족부

이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는 2024년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성별영향평가 추진과제 수가 중앙행정기관의 약 10배 수준으로 많아, 다수의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개선계획 수립과제 대비 이행완료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평가과제 수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개선이행률이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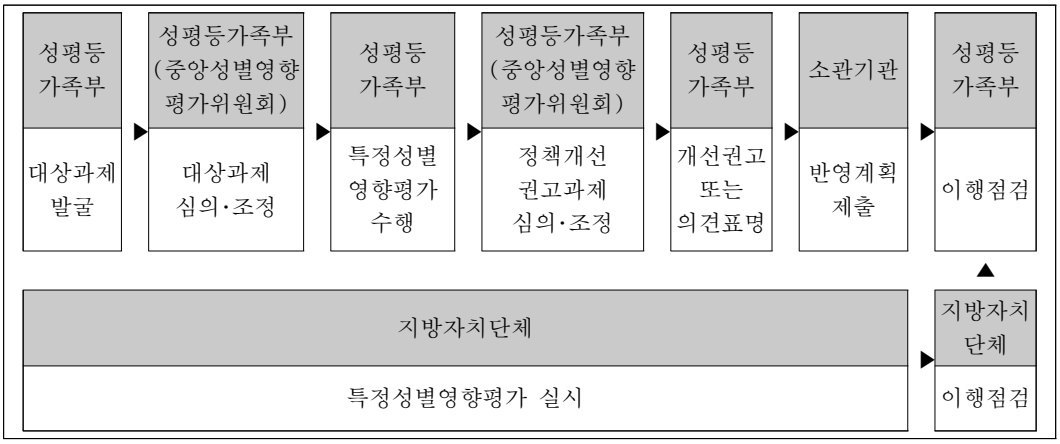
오히려 개선계획 수립과제 중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비중이 높은 만큼 성평등가족부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성평등전담부서와의 연계・협력, 교육・컨설팅 및 사후 이행점검을 체계화하는 등 개선의견이 실제 정책개선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이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5) 추진과제: 대상과제에서 기타과제(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 통보 및 법령이나 정책이 중단된 과제)를 제외한 과제

둘째,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이후 이행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이행 중인 과제가 반복적으로 남아 있으므로, 성평등가족부는 관계기관에 개선권고 과제의 신속한 이행완료를 촉구하고, 지연 사유와 이행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가 실제 정책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이나 공공기관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 등을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에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제도임.[6)]

[특정성별영향평가 운영 절차]



자료: 2024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6)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법령
2.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 과제 이행 현황을 보면, 2019년 권고과제 2건, 2020년 권고과제 13건, 2021년 권고과제 10건, 2022년 권고과제 13건 등이 이행기한이 초과한 이후에도 여전히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 과제 이행 현황]

(단위: 건)

대상연도 (개선권고 연도)	개선권고 과제 수	이행완료 과제 수	이행 중 과제 수		기타
			이행기한 도래	이행기한 미도래	
2019년 (2020년 권고)	81	67	2	-	12
2020년 (2021년 권고)	104	84	13	-	7
2021년 (2022년 권고)	73	51	10	-	12
2022년 (2023년 권고)	57	41	13	-	3
2023년 (2024년 권고)	47	11	-	36	-
2024년 (2025년 권고)	33	-	-	-	-

주 1) 기타는 사업 추진체계 변경 등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을 포함
2) 2024년(2025년 권고) 이행 현황은 2026년 8월 확정
자료: 성평등가족부

이에 대해 성평등가족부는 각 부처·기관의 법령·예산 등 대내외적 정책 여건으로 인해 개선권고가 실제 이행 완료까지 이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임.

그런데 개선권고 이후 관계기관의 법령·지침 개정, 사업 추진체계 변경 및 예산 반영 등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겠으나, 이행기한이 도래한 이후에도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하여는 성평등가족부가 이행계획·이행기한 설정의 적정성·관계기관 협의 및 후속조치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동 평가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성평등가족부는 이행기한 도래 후 미완료 과제에 대해서는 지연 사유와 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과제 이행을 촉진함으로써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가 실제 정책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이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일반회계】

〈세 출〉

3. 생리용품 지원 사업: 신청률 중심 성과관리 보완 및 실제 이용 성과 제고 필요

가. 개 요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의 9~24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60억 4,6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7)]

[2025년도 생리용품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16,425	16,425	-	△44	16,425	16,425	-	-	16,575
생리용품 지원	16,046	16,046	-	-	16,046	16,046	-	-	16,046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금액은 1인당 월 1만 4,000원(연 16만 8,000원)으로, 신청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구매처에서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신규 신청자의 경우 신청월부터 연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되는 구조임.[8)]

7) 일반회계-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2231-312)(청소년가족정책실)

8) 2026년부터 바우처 신청 시기와 상관없이 연간 지원금(바우처)을 전액 지원

나. 검토의견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2025년 신청률이 91.0%로 양호하나, 지원대상 대비 실제 이용률은 75.6%, 실집행률은 76.4%에 그쳐 실제 바우처 이용과 결제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성평등가족부는 신청률 중심의 성과관리에서 실제 이용실적 중심의 성과관리 목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160억 4,6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으나, 사업수행기관의 실집행액은 122억 6,7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76.4% 수준에 머물렀음. 아울러 최근 4년간 실집행률은 2022년 64.2%, 2023년 79.7%, 2024년 77.8%, 2025년 76.4% 등으로 70%대 수준에서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2022~2025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A)	교부액	실집행액 (B)	집행잔액	실집행률 (B/A)	신청률 (성과지표)
2022	12,232	12,232	7,848	4,384	64.2	71.2
2023	13,188	12,488	10,514	1,974	79.7	80.1
2024	14,448	14,448	11,247	3,201	77.8	87.4
2025	16,046	16,046	12,267	3,779	76.4	91.0

주) 2025년 실집행 현황은 정산 중 자료
자료: 성평등가족부

성과지표인 신청률은 2022년 71.2%에서 2025년 91.0%로 상승하였고, 지원대상 대비 실제 이용률도 같은 기간 58.9%에서 75.6%로 개선되었으나 2025년에도 지원대상자의 약 4분의 1은 실제 바우처 이용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신청 후 미사용자도 3만 6,074명으로 나타났음.

[2022~2025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률 및 이용률 현황]

(단위: 명, %)

구분	지원대상 (A)	신청자 수 (B)	신청률 (B/A)	이용인원 (C)	지원대상 대비 이용률(C/A)	미신청자 (A-B)	신청 후 미사용자(B-C)
2022	243,006	173,027	71.2	143,032	58.9	69,979	29,995
2023	237,818	190,603	80.1	162,811	68.5	47,215	27,792
2024	233,358	204,002	87.4	170,767	73.2	29,356	33,235
2025	234,015	212,979	91.0	176,905	75.6	21,036	36,074

주) 지원대상 대비 이용률, 미신청자, 신청 후 미사용자는 성평등가족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산출
자료: 성평등가족부

미사용 인원은 2021년 1만 2,269명에서 2025년 3만 6,074명으로 증가하였고, 미사용 인원비율도 같은 기간 11.0%에서 16.9%로 상승하였음. 잔액 소멸규모 역시 2021년 10억 2,100만원에서 2025년 35억 7,100만원으로 증가하여, 신청 이후 실제 이용 차이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21~2025년 생리용품 바우처 생성액 대비 실제 결제 현황]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신청인원 (A)	바우처 생성액 (B)	실제 결제액 (=실집행액) (C)	이용인원 (D)	미사용 인원 (E=A-D)	미사용 인원비율 (F=E/A)	잔액 소멸규모 (G=B-C)
2021	111,624	6,736	5,715	99,355	12,269	11.0	1,021
2022	173,027	9,770	7,848	143,032	29,995	17.3	1,922
2023	190,603	13,256	10,514	162,811	27,792	14.6	2,742
2024	204,002	14,040	11,247	170,767	33,235	16.3	2,793
2025	212,979	15,838	12,267	176,905	36,074	16.9	3,571

자료: 성평등가족부

이에 대해 성평등가족부는 신규 신청자의 경우 신청월부터 연말까지 해당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신청시기에 따라 연간 지원금 전액을 지원받지 못한 측면이 있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구매처 이용에 불편이 있는 경우 등으로 인해 실집행률과 이용률이 낮게 나타난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다만 이러한 사유는 바우처 신청 이후 카드 발급, 이용 불편 등 실제 사용단계의 여건이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도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이용 편의성과 사후관리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따라서 성평등가족부는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성과관리 목표를 신청률 중심으로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률과 미사용 규모 등 이용성과 중심으로 보완하고, 신청 이후 실제 사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원인을 점검하여 바우처 이용률과 실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4.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사업: 미디어 과의존 치료·치유서비스 연계 강화 필요

가. 개 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사업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등 디지털 미디어 피해 청소년에 대한 치유·회복을 지원하고,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및 유해환경 감시·개선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83억 2,800만원 중 78억 3,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4.1%)되고, 4억 9,300만원이 불용되었음.[9)]

[2025년도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8,328	8,328	-	-	8,328	7,835	-	493	9,164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3,056	3,056	-	-	3,056	3,011	-	45	3,571
디지털미디어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2,683	2,683	-	-	2,683	2,513	-	170	2,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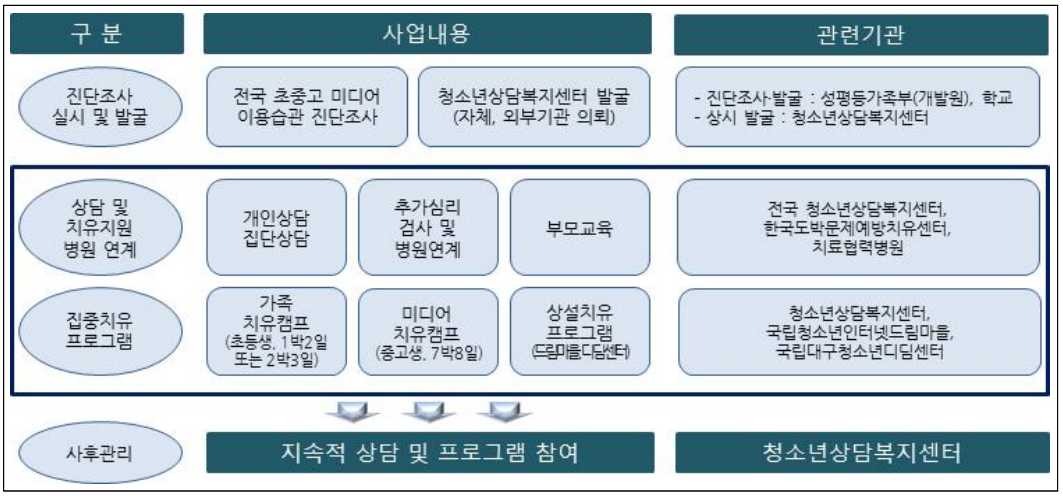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내역사업인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에게 기숙형 치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의 프로그램 운영비와 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0억 5,600만원 중 30억 1,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5%)되고, 4,500만원이 불용되었음.

또 다른 내역사업인 **‘디지털미디어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은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상담, 치료비 지원,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 및 가족치유캠프 운영 등을 통해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의 치유·회복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6억 8,300만원 중 25억 1,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3.7%)되고, 1억 7,000만원이 불용되었음.

9) 일반회계-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2233-332)(청소년가족정책실)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치유·회복 지원 사업내용]



나. 검토의견

미디어 과의존 대응 상담실적은 2023년 18만 740건에서 2025년 21만 7,609건으로 증가한 반면, 치료 지원 및 인터넷 치유캠프 실적은 이에 상응하여 증가하지 않고 있으므로, 성평등가족부는 상담 이후 치료·치유서비스 연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21만 3,243명으로, 조사참여 청소년 123만 4,587명의 17.3% 수준임. 과의존 위험군은 2023년 23만 634명에서 2024년 22만 1,029명, 2025년 21만 3,243명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연간 20만명 이상 규모로 나타나고 있음.[10)]

10)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구분	조사내용	방식
초1	스마트폰 이용습관	보호자 관찰자진단
초4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자가진단
중1/고1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사이버 도박문제	자가진단

[2024~2025년도 학년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현황]

(단위: 명, %)

구분	2024			2025		
	조사참여 청소년 (A)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B)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 (B/A)	조사참여 청소년 (A)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B)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 (B/A)
초 4	388,399	58,081	14.9	386,896	57,229	14.8
중 1	441,897	89,812	20.3	451,695	85,487	18.9
고 1	419,021	73,136	17.4	395,996	70,527	17.8
합계	1,249,317	221,029	17.7	1,234,587	213,243	17.3

자료: 성평등가족부

상담실적은 2023년 18만 740건에서 2025년 21만 7,609건으로 증가하였으나 치료 지원은 같은 기간 793명에서 553명으로 감소하였고, 인터넷 치유캠프 참여인원도 151명에서 88명으로 감소하였음. 가족치유캠프와 드림마을 치유캠프 지원 실적은 2024년보다 증가하였으나, 전체 과의존 위험군 규모와 상담실적 증가를 고려할 때 상담 이후 연계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최근 3년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및 치료·치유서비스 지원 실적]

(단위: 명, 건, 가족)

구분	과의존 위험군	상담	치료 지원	인터넷 치유캠프	가족 치유캠프	드림마을 치유캠프
2023	230,634	180,740	793	151	311	469
2024	221,029	187,624	570	80	196	479
2025	213,243	217,609	553	88	231	501

자료: 성평등가족부

이에 대해 성평등가족부는 치료 지원 및 치유캠프 모두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사업으로, 치료비 지원 규모와 캠프 운영 횟수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 상담실적 증가가 곧바로 치료·치유서비스 실적 확대로 연결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된다는 사정만으로 상담 이후 심화서비스 연계 실적이 감소한 점을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려움. 상담실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치료 지원과 인터넷 치유캠프 실적은 감소하고 있으므로, 성평등가족부는 상담 이후 심화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의 판정 기준, 연계 절차 및 미연계 사유를 점검하여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이후 상담·치료 지원·치유캠프 및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입소로 이어지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상담 이후 심화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적정하게 연계되고 있는지도 점검하여 실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적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5. 아이돌봄 지원 사업: 아이돌보미 공급·연계관리 및 영아종일제 집행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출장, 야근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양육공백에 대응하기 위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시간제 돌봄과 36개월 이하 영아에 대한 영아종일제 돌봄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4,750억 2,800만원 중 4,749억 7,500만원이 집행(집행률 100.0%)되고, 5,300만원이 불용되었음.[11)]

[2025년도 아이돌봄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아이돌봄 지원	475,028	475,028	-	△281 281	475,028	474,975	-	53	597,779
서비스지원	467,987	467,987	-	△281	467,706	467,706	-	-	590,828
아이돌보미관리	61,318	61,318	-	-	61,318	61,318	-	-	64,349
돌봄수당	384,637	384,637	-	△281	384,356	384,356	-	-	502,366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내내역사업인 **‘아이돌보미관리’**는 아이돌보미 보수교육·활동관리·배상보험·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 등 아이돌보미 인력의 확보·유지와 서비스 품질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613억 1,800만원 전액(집행률 100%)이 집행되었음.

또 다른 내내역사업인 **‘돌봄수당’**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에 대해 소득유형 및 서비스 유형에 따라 이용요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시간제 돌봄과 영아종일제 돌봄 등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포함하며, 2025년도 예산현액 3,843억 5,6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

11) 일반회계-아이돌봄 지원(2334-341)(청소년가족정책실)

[아이돌봄 지원 사업 개요]

ㅇ (목적)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파견 및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양육부담 경감
ㅇ (사업내용) 시간제 돌봄(12세 이하), 영아종일제 돌봄(36개월 이하)
- (시간제) 취학 전·후 구분 지원, 연간 960시간 지원
- (종일제) 36개월 이하 자녀 대상 월 최대 200시간(연간 2,400시간) 지원
ㅇ (정부지원) 이용가정의 소득유형(가형~마형)에 따라 차등 지원

(단위: 원)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 취학전		취학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354(85%)	1,826(15%)	9,136(75%)	3,044(25%)	본인부담금의 10%할인
나형	120% 이하	7,308(60%)	4,872(40%)	4,872(40%)	7,308(60%)	
다형	150% 이하	3,654(30%)	8,526(70%)	2,436(20%)	9,744(80%)	
라형	200% 이하	1,828(15%)	10,352(85%)	1,218(10%)	10,962(90%)	
마형	200% 초과	-	12,180(100%)	-	12,180(100%)	

* ㉮형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 가정에는 5% 추가 지원
** 0~1세 자녀가 있는 청소년 부모·청소년 한부모 가정(중위소득 200%이하)은 이용요금의 90% 지원
*** 휴일 및 야간(22시~익일 06시) 이용요금의 50% 가산

자료: 성평등가족부

나. 검토의견

첫째,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신청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대기가구와 평균 대기일수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아이돌보미 확보·유지 및 서비스 연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가구는 18만 3,794가구로 전년보다 4만 4,286가구 증가하였고, 매칭가구도 15만 9,804가구로 전년보다 4만 1,678가구 증가하면서 연계율이 2023년 70.2%에서 2025년 86.9%로 개선되었음

[최근 3년간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및 대기 현황]

(단위: 가구, %, 일)

구분	연계 현황			대기 현황	
	신청가구 (A)	매칭가구 (B)	연계율 (B/A)	대기가구 수	대기일수
2023년	122,729	86,100	70.2	13,031	33.0
2024년	139,508	118,126	84.7	9,519	32.8
2025년	183,794	159,804	86.9	11,645	39.4

주) 대기가구 수는 해당 연도말 기준 대기 상태에 있는 가구의 수
자료: 성평등가족부

그러나 2025년 대기가구 수는 1만 1,645가구로 전년 대비 2,126가구 증가하였고, 평균 대기일수도 39.4일로 전년 대비 6.6일 증가하였음. 연계율이 개선되었음에도 대기가구와 대기일수가 증가한 것은 아이돌봄서비스 수요 증가에 비해 실제 서비스 제공 여건이 충분히 확충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줌.

이에 대해 성평등가족부는 양성교육기관 확대, 단축교육과정 신설 및 돌보미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아이돌보미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돌봄서비스 수요 대비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대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임.

아이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신청가구와 아이돌보미 간 실제 매칭이 이루어져야 집행 성과로 이어지는 사업이므로, 신청가구 증가뿐만 아니라 지역별 대기 현황과 아이돌보미 공급 여건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실제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는 3만 1,718명으로 예산편성 기준인원 3만 6,000명보다 4,282명 부족하였음. 이에 따라 충원율은 88.1%로 나타났음.

[최근 3년간 아이돌보미 수 목표 대비 충원 및 양성교육 이수 현황]

(단위: 명, %)

구 분	예산상 아이돌보미 목표 인원수 (A)	실제 아이돌보미 인원수 (B)	전년 대비 아이돌보미 증감	목표 대비 편차 (B-A)	충원율 (B/A)	양성교육 이수자
2023	29,000	28,071	1,396	△929	96.8	3,946
2024	35,000	29,635	1,564	△5,365	84.7	8,901
2025	36,000	31,718	2,083	△4,282	88.1	12,736

주) 2025년은 예산편성 인원 기준
자료: 성평등가족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연도별 양성교육 이수자는 2023년 3,946명에서 2025년 1만 2,736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실제 활동 아이돌보미는 같은 기간 2만 8,071명에서 3만 1,718명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음. 이는 양성교육 확대가 실제 활동인력 확충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교육 이수 이후 실제 활동 전환 여부와 활동 지속 여부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성평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이수 실적을 단순 교육실적으로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 이수자가 실제 활동 아이돌보미로 전환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교육 이수 후 미활동 사유와 중도 이탈 사유를 분석하여 실제 활동인력 확충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고, 지역별 대기가구와 대기일수를 고려하여 아이돌보미 확보·유지 및 서비스 연계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돌봄수당 중 영아종일제 실집행률이 49.0%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영아종일제 지원대상 영아의 시간제 서비스 선택 가능성, 부모급여·양육수당 등 다른 양육지원 제도와의 관계 등 실제 이용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영아종일제 수요 추계와 집행관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아이돌봄서비스 중 영아종일제는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장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중 하나의 종류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음.

2025년 돌봄수당 사업의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실집행률은 87.7%이나, 영아종일제는 예산현액 153억 9,600만원 중 75억 4,000만원만 실집행되어, 실집행률이 49.0%에 그쳤음.

[2025년도 돌봄수당 사업 서비스 유형별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돌봄수당	384,356	337,123	87.7
영아종일제	15,396	7,540	49.0
시간제 등	366,035	311,623	85.1

자료: 성평등가족부

이와 같은 실집행 저조에 성평등가족부는 영아종일제 지원대상인 영아도 시간제 서비스 지원대상에 포함되므로, 이용가구가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영아종일제 수요가 감소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영아종일제 및 관련 사업 현황]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영아종일제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	부모급여	양육수당
○(대상) - 3개월~36개월 이하 ○(지원) - 월 80시간~200시간 이내 (연 2,400시간 이내)	○(대상) - 3개월 ~ 12세 이하 ○(지원) - 연 960시간 이내	○ (대상) - 만 0세 ~ 2세 미만 ○ (지원) - 만 0세: 월 100만원 - 만 1세: 월 50만원	○(대상) - 24개월 ~ 86개월 ○(지원) - 월 10만원

주 1) 영아종일제·시간제 서비스는 시간당 12,180원 사용료 중 일부를 소득 유형별 차등 지원
2) 양육수당 중 농어촌 양육수당 및 장애인 양육수당은 월령별 지원금액을 달리함
자료: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그러나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 간에 선택적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영아종일제 실집행률 저조의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나, 영아종일제 지원 시 부모급여·양

육수당 등 다른 양육지원 제도와 중복지원이 제한되므로 실제 이용수요를 분석할 때 관련 제도와의 관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성평등가족부는 영아종일제 실집행 부진 원인을 시간제 서비스로의 대체 이용 가능성, 부모급여·양육수당 등 다른 양육지원 제도와의 관계 및 실제 이용가구 추이 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6.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사업: 사업출연금 실집행 및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관리 강화 필요 등

가. 개 요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사업은 한부모가족 양육자가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관련 법률상담, 소송, 모니터링, 양육비 선지급 및 회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87억 3,0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12)]

[2025년도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28,730	28,730	-	-	28,730	28,730	-	-	46,128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출연사업 중 양육비이행지원금(선지급) 제도는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현재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 대하여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사업임. 2025년 6월까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로 운영되었으나, 2025년 7월부터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양육비 이행지원금(선지급)제도로 전환되었음.[13)]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사업 및 양육비 선지급제 사업 비교]

구 분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2025년 6월 종료)	양육비 이행지원금(선지급) (2025년 7월 개시)
지원대상	중위소득 75% 이하, 질병・장애・주거환경 위태 등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기간	최대 1년(9개월+3개월)	18세까지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자료: 성평등가족부

12) 일반회계-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2335-352)(청소년가족정책실)

1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선지급 신청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 폐지되어 지급대상이 더욱 확대될 예정임(2026.10.29.시행)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사업 2025회계연도 예산 세부내역]

○ 기관운영출연금 77억 6,400만원
- 인건비 55억 100만원 + 운영비 22억 6,300만원
○ 사업출연금 209억 6,600만원
-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 778명×2.1백만원=16억 100만원
- 양육비이행지원금(선지급)0.2백만×18,000명×신청률 75%×6개월=160억 2,000만원
- 양육비이행종합정보서비스 제공 및 운영 12억 4,300만원
- 법률지원서비스 18억 200만원
- 양육비이행촉진서비스 1억 2,000만원

자료: 성평등가족부

나. 검토의견

첫째,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사업은 실집행률이 저조한 가운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과 양육비이행지원금(선지급) 집행률이 각각 47.5%, 47.7%에 불과하므로, 선지급제 시행 초기의 실적과 월별 집행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출연금의 수요 추계와 집행관리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287억 3,000만원 전액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집행되었으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실집행액은 194억 1,9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67.6%임.

특히 기관운영출연금은 77억 6,400만원 전액이 실집행된 반면, 사업출연금은 209억 6,600만원 중 116억 5,500만원만 실집행되어 실집행률이 55.6%에 그쳤음.

[2025년도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실집행액	실집행잔액	실집행률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28,730	19,419	9,311	67.6
기관운영출연금(350-01)	7,764	7,764	-	100.0
사업출연금(350-02)	20,966	11,655	9,311	55.6

자료: 성평등가족부

사업출연금의 실집행률이 낮게 나타난 것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과 양육비이행지원금(선지급)의 집행이 저조한 데 기인하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16억 100만원 중 7억 6,1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47.5%였고, 양육비이행지원금(선지급)은

162억원 중 77억 3,0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47.7%에 그쳤음.

[2025년도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업출연금 내역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잔액(A-B)	집행률(B/A)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1,601	761	840	47.5
양육비이행지원금(선지급)	16,200	7,730	8,470	47.7
법률지원서비스 등 기타 사업	3,165	3,164	1	100.0
합계	20,966	11,655	9,311	55.6

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은 2025년 6월 종료, 양육비이행지원금 선지급 사업은 2025년 7월 시행
자료: 성평등가족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양육비이행지원금(선지급)은 2025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첫 달 신청가구 수가 3,529가구였으나, 이후 월별 신청가구 수는 400~800가구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2025년 12월 기준 지원가구 수는 4,709가구, 지원자녀 수는 7,473명임.

[2025년 7월 이후 양육비이행지원금(선지급) 신청 및 지원 현황]

(단위: 가구, 명, 백만원)

구분	2025.7.	2025.8.	2025.9.	2025.10.	2025.11.	2025.12.	2025년 합계
신청 가구수	3,529	860	715	444	426	495	6,469
지원 가구수	188	630	1,421	2,289	3,583	4,709	-
지원 자녀수	313	1,028	2,275	3,671	5,703	7,473	-
지원 금액	62	346	960	1,609	2,472	2,281	7,730
구분	2026.1.	2026.2.	2026.3.	2026.4	2026.5.	2026.6.	2026년 합계
신청 가구수	405	335	490	445	581	643	2,889
지원 가구수	4,793	5,105	5,358	5,630	5,837	6,134	-
지원 자녀수	7,588	8,074	8,477	8,877	9,184	9,663	-
지원 금액	1,626	1,790	1,806	1,866	1,911	2,034	11,033

자료: 성평등가족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2025년 7월 처음 시행된 제도로서, 2024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 시행 초기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측면이 있으며, 선지급 요건 확인과 심사 절차가 필요하여 지원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임.

다만 2025년 양육비이행지원금(선지급) 집행률이 47.7%에 그친 만큼, 제도 시행 첫 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태조사 기반 수요 추계가 실제 실적과 어느 정도 부합하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제도 시행 첫 달 이후 신청가구 수가 감소하고, 사업출연금 집행잔액의 대부분이 선지급 관련 사업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선지급제 운영 과정에서 실제 지원실적과 월별 집행 추이를 반영한 수요 추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따라서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초기 실적과 월별 집행 추이를 토대로 실제 수요를 재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출연금 편성 기준과 집행관리 방식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둘째,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에 따라 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보다 지원 대상·기간이 확대되어 청구금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청구·회수·강제징수 등 단계별 회수관리 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14)]

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구상권 행사 및 환수 현황을 보면, 누적 청구금액은 2019년 2억 7,400만원에서 2025년 30억 5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누적 환수금액은 2025년 기준 5억 9,400만원으로, 누적 회수율은 19.8%에 그치고 있음.

[연도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구상권 행사 및 환수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지원금액	215	269	246	1,560	1,547	1,546	691
청구금액 당해	105	122	239	552	772	482	564
청구금액 누적(A)	274	396	635	1,187	1,959	2,441	3,005
환수금액 당해	1	17	39	92	150	150	143
환수금액 누적(B)	3	20	59	151	301	451	594
소멸금액	-	6	4	30	37	49	37
누적 회수율(B/A)	1.09	5.05	9.29	12.72	15.36	18.48	19.77

자료: 성평등가족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누적 회수율이 낮은 상황에서 양육비 선지급제로 전환되면 회수대상과 회수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선지급 제도 시행과 회수체계 구축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특히 양육비 선지급금은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우선 지급되는 재정지원이지만, 제도상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것을 전제로 함. 따라서 지급 실적뿐만 아니라 선지급한 양육비를 조속히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금에 대해 회수결정액, 실제 회수액 및 체납액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지·독촉, 강제징수를 위한 정보 조사 및 압류 등

14) 선지급금 회수 절차 : 회수통지(납부기한 30일) → 독촉(납부기한 30일) → 강제징수

제도적 수단이 실제 회수성과로 이어지는지 점검하여 실제 회수율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셋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재무상태표상 양육비구상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 설정률을 100%로 책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대손충당금 설정 기준과 실제 회수관리 체계를 점검하여 양육비구상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재무제표에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양육비이행관리원의 2025회계연도 재무상태표를 보면, 양육비구상채권은 2024년 말 20억 8,000만원에서 2025년 말 103억 1,7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양육비구상채권에 대해서는 2024년과 2025년 모두 채권액 전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어 재무상태표상 순장부가액은 0원으로 나타남.

[양육비이행관리원 재무상태표상 주요 채권 및 대손충당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채권액 (A)	2024년 대손충당금 (B)	2024년 설정률 (B/A)	2024년 장부가액	2025년 채권액 (C)	2025년 대손충당금 (D)	2025년 설정률 (D/C)	2025년 장부가액
양육비 구상채권	2,080	2,080	100.0	-	10,317	10,317	100.0	-
미수금	34	28	82.4	6	32	32	99.4	0

자료: 양육비이행관리원 2025회계연도 재무상태표를 바탕으로 재작성

대손충당금은 미래 회수가 불확실한 금액에 대해 추정하여 설정하는 것으로, 불납결손과 달리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 미수채권에 대해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대손추산액 산정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양육비구상채권 전액을 일률적으로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 기준이 적정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15)]

이에 대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및 양육비 선지급 관련 채권은 회수금이 발생하더라도 전액 국고로 귀속되어 기관 고유자산으로 축적되지 않고, 회수 시기와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관 자산의 안정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해 전액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다만 회수금이 국고로 귀속되고 회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양육비구상채권 전액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기준이 실제 회수가능성과 회수실적

15)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대여금 및 미수채권의 평가) ① 대여금 및 미수채권은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평가한다.

을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는 점검할 필요가 있음.

특히 대손충당금을 100%로 설정하여 재무제표상 순장부가액이 0원으로 표시되는 경우, 회수가능성 평가와 실제 회수관리 실적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회수율과 미회수 사유 등을 바탕으로 대손충당금 설정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구상채권의 실제 회수율, 채무자의 소득·재산 및 미회수 사유 등을 분석하여 대손충당금 설정 기준을 점검하고,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재무제표에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 출〉

7. 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 직업교육훈련 취업성과 및 새일여성인턴 고용유지 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등에게 구직상담, 직업교육훈련, 새일여성인턴, 취·창업 연계 및 경력단절 예방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852억 9,200만원 중 852억 4,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4,400만원이 불용되었음.[16)17)]

[2025년도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	87,713	87,713	-	-	87,713	87,439	21	253	100,203
새일센터 지정·운영	85,292	85,292	-	-	85,292	85,248	-	44	98,345
직업교육훈련	27,943	27,943	-	-	27,943	27,930	-	13	25,586
새일여성인턴	28,619	28,619	-	-	28,619	28,619	-	-	28,619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내내역사업인 **‘직업교육훈련’** 사업은 새일센터를 통하여 구인 수요가 높은 취업 직종을 활용한 훈련과정을 운영하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지원하는

1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1234-311)(성평등정책실)

17) 새일센터의 주요 사업으로는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직업교육훈련·새일여성인턴 사업·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창업 지원 및 경력이음 사례관리서비스 등이 있으며, 전국에 159개소가 운영 중임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소수	25	11	5	9	5	3	5	1	29	10	6	11	9	9	9	9	3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79억 4,300만원 중 279억 3,0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1,300만원이 불용되었음.

내내역사업인 **‘새일여성인턴’** 사업은 경력단절여성 등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경험(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턴채용 지원금(기업) 및 고용유지 장려금(기업, 개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86억 1,9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

[직업교육훈련 사업 및 새일여성인턴 사업 예산 세부내역]

○ 직업교육훈련 279억 4,300만원 - 직업교육훈련 218억 4,300만원 = 761과정×28.7백만×100% - 직업교육훈련 참여수당 56억원 = 14,000명×0.1백만×4회×100% - 온라인 교육·상담 5억원 ○ 새일여성인턴 286억 1,900만원 = 7,777명 ×4.6백만원 ×80%

자료: 성평등가족부

나. 검토의견

첫째, 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의 직업교육훈련은 고부가가치 직종 과정 등이 확대되고 있으나 유관취업률은 50% 내외에 머물고 있으므로, 성평등가족부는 훈련과정 확대가 실제 관련 분야 취업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음.

직업교육훈련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반과정·전문기술과정·기업맞춤형과정 및 고부가가치직종 과정 등으로 운영되고 있음.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과정 및 내용]

구 분	내 용
고부가가치	고학력 경력보유여성 등이 양질의 일자리에 진출할 수 있게 지원하는 AI, 바이오 분야 등 직종 과정 ※ 예) AI기반 UX/UI 콘텐츠 디자인,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기획 등
일반	사무관리, 서비스, 재무·회계 및 교육분야 등의 교육과정 ※ 예) 회계 및 엑셀실무, 사회복지실무과정, 단체급식조리사 과정 등
전문기술	IT, 건설, 기계, 제조 등 전문적인 기술, 지식 등이 필요한 훈련과정 ※ 예) 온라인마케터, 영상편집제작자, SW미래인재양성과정 등
기업 맞춤형	직종·산업별 협회와 연계, 현장맞춤형 교육 실시 후 우선 채용하는 과정 ※ 예) 법무행정사무원, 세무·전산회계사무원, 복지프로그램기획자 양성 등

자료: 성평등가족부

최근 3년간 과정 운영 현황을 보면 전체 과정 수는 2023년 715개, 2024년 733개, 2025년 724개이고, 고부가가치직종 과정은 2023년 74개, 2024년 79개, 2025년 93개로 점차 확대되고 있음.

[2023~2025년 직업교육훈련 과정 운영 및 취업성과 현황]

(단위: 개, %)

구 분	2023			2024			2025		
	과정수	취업률	유관 취업률	과정수	취업률	유관 취업률	과정수	취업률	유관 취업률
일반과정	419	71.3	45.7	431	68.0	44.3	409	-	-
전문기술과정	71	70.1	44.7	83	71.7	50.9	83	-	-
기업맞춤형과정	151	77.0	55.3	140	79.7	59.5	139	-	-
고부가가치직종	74	77.6	61.7	79	70.0	53.2	93	-	-
합 계	715	73.0	49.1	733	72.7	50.0	724	-	-

주) 2025년 취업률 및 유관취업률은 2026년 7월 이후 산출 예정
자료: 성평등가족부

2023년과 2024년의 직업교육훈련 취업률은 각각 73.0%, 72.7%였으나, 유관취업률은 각각 49.1%, 50.0%에 그쳤음. 특히 고부가가치직종 과정은 취업률은 2023년 77.6%에서 2024년 70.0%로, 유관취업률은 2023년 61.7%에서 2024년 53.2%로 낮아졌음.

이에 대해 성평등가족부는 경력보유여성의 경우 본인의 적성이나 직업 선호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직업교육훈련 이후 훈련 직종과 다른 직종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경력개발상담 등을 통해 희망 일자리로 연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현재 유관취업률은 직종 기준으로 통계를 관리하고 있어 훈련 직종과 직접 일치하지 않더라도 유관 산업으로 볼 수 있는 취업성과가 통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임.

직업교육훈련은 훈련과 취업 간 연계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사업이므로, 성평등가족부는 유관취업률 산정 기준의 한계를 보완하여 훈련 직종뿐만 아니라 유관 산업 취업 여부, 취업처의 고용형태 및 임금수준 등을 함께 관리하고, 훈련 이후 타 직종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사유와 경력개발상담 연계 결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성평등가족부는 고부가가치직종 직업교육훈련 과정 확대가 해당 분야 취업 성과로 연결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훈련 이후 타 직종으로 취업한 경우 그 사유와 경력개발상담 연계 결과를 분석하여 직업교육훈련 과정 설계와 사후관리 체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둘째, 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의 새일여성인턴은 인턴 종료 후 취업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6개월 및 12개월 고용유지율과는 차이가 크므로, 2025년 신설된 12개월 고용유지장려금이 고용유지율 제고로 이어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새일여성인턴 사업은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경력단절여성등을 대상으로 5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4대보험 적용 사업장)과 연계하여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의 취업 및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사업임.[18)]

2025년 새일여성인턴 지원금은 1인당 최대 460만원 한도에서 인턴채용지원금과 고용유지장려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음. 인턴 연계 기업에는 3개월간 월 80만원의 인턴채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6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 80만원, 개인 60만원을 지급하며, 12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에 8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음.

[2025년 새일여성인턴 지원금 지급구조]

(단위: 만원)

구분	인턴채용지원금	6개월 고용유지장려금	12개월 고용유지장려금	합계
기업	240	80	80	400
개인	-	60	-	60
합계	240	140	80	460

주1) 2025년 기업에 대한 12개월 고용유지장려금 신설
2) 인턴채용지원금 240만원(=80만원 × 3개월)
자료: 성평등가족부

최근 3년간 새일여성인턴의 취업률은 2023년 97.0%, 2024년 96.9%, 2025년 96.5%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6개월 고용유지율은 78.1%인 반면 12개월 고용유지율은 60.5%로 17.6%p 낮게 나타났고, 2023년에도 6개월 고용유지율 75.6%와 12개월 고용유지율 57.7% 간 격차가 17.9%p로 나타났음.

18)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 · 임신 · 출산 ·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023~2025년 새일여성인턴 연계·취업 및 고용유지 현황]

(단위: 명, %)

연도	계획	연계	종료	연계 중	중도탈락	취업	취업률	6개월 고용유지율	12개월 고용유지율
2023	7,777	9,253	7,202	1,438	613	6,984	97.0	75.6	57.7
2024	7,777	9,825	7,823	1,363	639	7,581	96.9	78.1	60.5
2025	7,777	10,866	8,670	1,545	651	8,363	96.5	-	-

주) 2025년 6개월 고용유지율은 2026년 10월, 12개월 고용유지율은 2027년 4월 산출 예정
자료: 성평등가족부

고용유지율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하락하는 경향이 있으나, 취업률과 6개월·12개월 고용유지율 간 차이가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12개월 고용유지장려금이 고용유지율 제고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새일여성인턴의 고용유지장려금과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Ⅱ유형 사업은 일정 기간 재직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구조이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Ⅱ유형은 18개월 및 24개월 재직 시점에 개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지원 시점이 보다 장기적으로 설계되어 있음.[19)]

따라서 성평등가족부는 새일여성인턴의 12개월 고용유지장려금이 장기 고용유지율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장려금 지급 이후 고용유지 여부와 중도이탈 사유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19) 새일여성인턴 및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Ⅱ유형 지원방식 비교

구분	새일여성인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Ⅱ유형(2025년 신설)
지원대상	인턴 연계 기업 및 인턴 참여자	빈일자리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취업 청년
기업지원	최대 400만원 (인턴채용지원금 월 80만원×3개월, 6·12개월 고용유지 시 각 80만원)	최대 720만원 (신규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인당 월 최대 60만원×12개월)
개인지원	60만원 (6개월 재직 시)	최대 480만원 (18·24개월 재직 시 각 240만원)

【양성평등기금】

〈지　출〉

8.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사업: 부정수급 환수율 제고 및 수급 자격 변동 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및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의 건강한 자녀 양육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5,527억 9,0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음.[20)]

[2025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552,833	552,833	-	552,833	552,825	-	8	572,246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552,790	552,790	-	552,790	552,790	-	-	572,203
아동양육비	531,587	531,587	-	531,587	531,587	-	-	542,487
추가아동양육비	19,416	19,416	-	19,416	19,416	-	-	27,732

주 1)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방식으로 추진(국고보조율: 서울 50%, 그 외 80%)

내내역사업인 **‘아동양육비’** 사업은 한부모가족의 건강한 자녀 양육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소득(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이하 자녀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5,310억 5,87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

또 다른 내내역사업인 **‘추가아동양육비’** 사업은 ①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모·부의 5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월 5만원, ② 25~34세 이하 저소득 청년 한부모의 18

20) 양성평등기금-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2331-431)(청소년가족정책실)

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월 5~10만원을 지원(서울 50%, 지방 80%)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194억 1,6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

나. 검토의견

아동양육비 부정수급 환수결정금액이 증가하는 반면 환수 비율은 하락하고 있으므로, 성평등가족부는 부정수급 환수결정분에 대한 징수율 제고와 수급자격 변동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성평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아동양육비와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양육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자로부터 비용을 환수할 수 있음.[21]

아동양육비는 매월 지급되는 현금성 급여로서, 소득·재산 변동, 혼인관계 및 가구원 구성 변화, 자녀 연령 및 재학 여부 등 수급자격 변동에 따라 부정수급이 발생할 수 있음.

그런데 아동양육비 부정수급 환수결정금액은 2021년 5억 6,500만원에서 2025년 9억 6,0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환수 금액은 같은 기간 4억 300만원에서 3억 6,400만원으로 감소하였음. 이에 따라 환수결정금액 대비 환수 비율은 2021년 71.3%에서 2025년 37.9%로 하락하였음.

---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아동양육비
③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2. 3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제25조의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복지 급여를 지급한 지원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복지 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2021~2025년 아동양육비 부정수급 환수결정 및 환수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환수결정 사유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부정수급 환수결정 건수	계	968	775	667	864	817
	소득재산 증가	676	480	369	397	411
	인적 변동	104	164	196	266	221
	기타	188	131	102	201	185
부정수급 환수결정 금액(A)		565	439	531	776	960
환수 금액(국고+지방비)(B)		403	327	336	396	364
비율(B/A)		71.3	74.4	63.3	51.0	37.9

주 1) '소득재산 증가'는 근로·사업소득 증가, 신규재산 취득 등으로 인한 소득인정액 초과된 경우임
2) '인적 변동'은 혼인관계 변동, 가구원수 변동 등의 사유임
3) '기타'는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환수결정 및 담당공무원이 부정수급 유형을 분류하지 않은 것을 포함
4) 당해연도 부정수급 건에 대해 2026.4.30.기준으로 환수된 현황

자료: 성평등가족부

부정수급 환수결정 건수를 환수결정 사유별로 살펴보면, 소득·재산 증가에 따른 환수결정 건수는 2021년 676건에서 2023년 369건으로 감소하였다가 2025년 411건으로 증가하였고, 인적 변동에 따른 환수결정 건수는 2021년 104건에서 2024년 266건으로 증가하였다가 2025년 221건으로 감소하였음.

성평등가족부는 지자체에 접수된 부정수급 건을 분기별로 조사하고 소득·인적사항 변동 시 신고의무를 안내하고 있으나, 환수결정금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환수 비율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현행 안내·조사 방식이 부정수급 예방과 조기 환수로 충분히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9.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다문화가구 자녀 연령 변화에 따른 서비스 구조 점검 필요

가. 개 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가족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지역의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통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1,458억 7,700만원 중 1,453억 9,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7%)되고, 4억 8,300만원이 불용되었음.[22)]

[2025년도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145,197	145,197	680	145,877	145,394	-	483	151,379
가족센터 운영	92,928	92,928	-	92,928	92,800	-	128	96,176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33,252	33,252	-	33,252	33,007	-	245	34,069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내역사업인 **‘가족센터 운영’**은 지역 가족센터를 통해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돌봄, 가족문화 및 다양한 가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929억 2,800만원 중 928억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1억 2,800만원이 불용되었음.

또 다른 내역사업인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자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문교육서비스, 자녀 언어발달 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이중언어 교육지원 및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332억 5,200만원 중 330억 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5%)되고, 2억 4,500만원이 불용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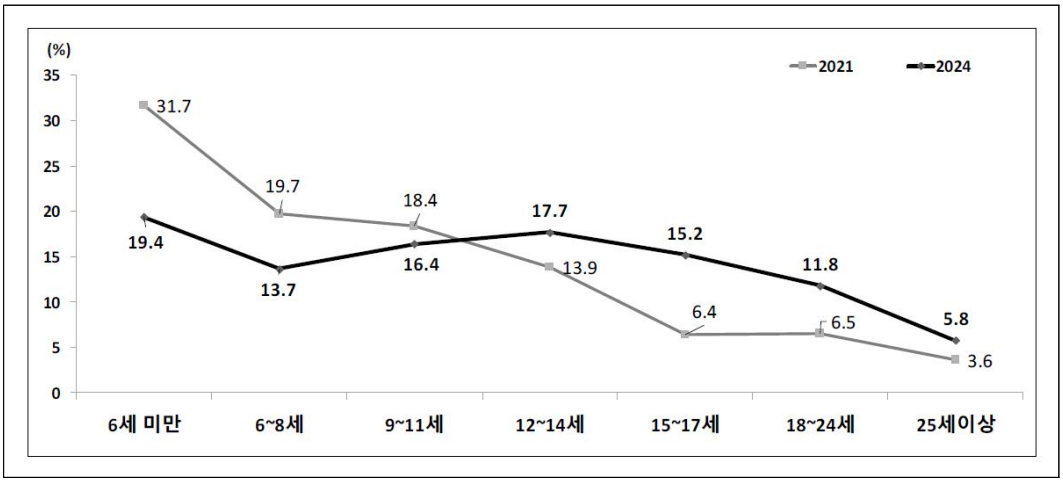
22) 양성평등기금-건강가족 및 다문화가족 지원(2356-432)(청소년가족정책실)

나. 검토의견

다문화가구 자녀의 평균연령 상승과 학령기·청소년기 비중 증가에 따라 학습·진로·심리정서 지원 수요가 확인되고 있으므로, 성평등가족부는 연령대별 서비스 이용 현황과 미이용 사유를 분석하여 현행 지원체계가 수요 변화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구 자녀의 평균연령은 2021년 9.34세에서 2024년 12.13세로 상승하였음. 6세 미만 자녀 비중은 같은 기간 31.7%에서 19.4%로 감소한 반면, 12세 이상 자녀 비중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음.

[2021년 및 2024년 다문화가구 자녀 연령 분포 변화]



주) 25세 이상 비동거 자녀 제외
자료: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연령대별 변화를 보면 12~14세 자녀 비중은 2021년 13.9%에서 2024년 17.7%로, 15~17세 자녀 비중은 6.4%에서 15.2%로 증가하였음. 18~24세 자녀 비중도 같은 기간 6.5%에서 11.8%로 증가하였음.

[2021년 및 2024년 다문화가구 자녀 연령 분포]

(단위: %, 세)

구 분	6세 미만	6~8세	9~11세	12~14세	15~17세	18~24세	25세 이상	평균연령
2021년	31.7	19.7	18.4	13.9	6.4	6.5	3.6	9.34
2024년	19.4	13.7	16.4	17.7	15.2	11.8	5.8	12.13
증감	△12.3	△6.0	△2.0	3.8	8.8	5.3	2.2	2.79

주) 25세 이상 비동거 자녀 제외
자료: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재작성

현재 다문화가구 자녀 관련 지원은 주로 가족센터 운영과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을 통해 추진되고 있음.

가족센터 운영에는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기초학습지원, 학령기 진로설계지원 및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에는 방문교육서비스, 자녀 언어발달 지원 및 이중언어 교육지원 등 자녀 성장 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다문화가구 자녀 관련 주요 지원사업 현황]

구분	주요 내용	관련 지원대상
가족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설계지원, 기초학습지원, 교육활동비 지원	학령기・청소년기 자녀 등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방문교육서비스, 자녀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 교육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및 결혼이민자 등

자료: 성평등가족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문화가구 자녀의 평균연령 상승과 12세 이상 자녀 비중 증가는 지원 수요가 영유아기 언어・돌봄 지원 중심에서 학령기・청소년기 학습, 진로 및 취업준비 지원 등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도 9~24세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원서비스 필요성은 학습지원,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 외국 출신 부모의 언어교육, 외국 출신 부모의 출신국 문화 이해 교육, 심리・정서 상담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원서비스 필요성]

(단위: 점, 명)

구분	세부구분	외국에서 태어난부모님 나라의 언어 교육	외국에서 태어난부모님 나라의 문화 이해 교육	학습지원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	심리・정서 상담	한국어 교육	한국 사회 적응 교육
전체	2024	2.54	2.53	2.95	2.82	2.53	2.16	2.14
연령	9~11세	2.65	2.66	3.14	2.68	2.58	2.26	2.22
	12~14세	2.60	2.59	3.09	2.88	2.61	2.21	2.18
	15~17세	2.46	2.44	3.00	2.98	2.51	2.05	2.05
	18세 이상	2.40	2.37	2.42	2.74	2.36	2.10	2.10

자료: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성평등가족부는 다문화가구 자녀의 연령대별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수요를 분석하고, 가족센터 운영과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이 학령기・청소년기 자녀 수요 변

화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구 자녀 성장단계에 맞춰 지원체계를 보완하여 연령별 수요를 충족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기　타】

10.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가. 개　요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성평등가족부에 대해 시정요구 59건(중복 1건 포함)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시정 5건·주의 5건·제도개선 50건이었음.

[2025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5	5	50	1	59
합계	-	-	5	5	50	1	59

성평등가족부는 시정요구사항 59건에 대해 44건을 조치완료(조치율 74.6%)하고 15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5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59	44	74.6	15
합계	59	44	74.6	15